

IN

Y

P

I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김경준

공동연구원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민희(평택대학교·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부 교수)
- ▶ 연구보조원 : 조제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발 간 사 ■ ■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매년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시계열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0,484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정부부처의 행정통계 및 다른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활용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201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관한 구조분석」 등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인권영역 별로 3~4개 과제씩 총 2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공동연구원과 집필진으로 참여하신 많은 현장전문가와 학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담당하신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개선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구성한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별 인권지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 조사함으로써 시계열자료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하고 있다.

2014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인권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9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22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3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0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6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0,484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와 함께 정부부처의 행정통계 및 다른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활용하였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과 2017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 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권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정책과제 등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분석 등을 종합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인권영역별로 3~4개 과제씩 총 2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각 정책과제별로 정책제안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절차, 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인권이슈, 권고사항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개선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2013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에 따라 구성한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별로 인권지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 조사함으로써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0,484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와 함께 정부부처의 행정통계 및 다른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활용하였음.
- 이밖에 2017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 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권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정책과제 등을 발굴하고자 하였음.
-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201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관한 구조분석」 등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실태를 분석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201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하였으며,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과 개선방향을 분석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관한 구조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인권데이터의 사회적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음.

## 2.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수정·보완
-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조사 및 통합 비교·분석
-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 국내·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상황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 제시

## 3. 연구결과

-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지표 수정·보완을 위하여 인권영역별 전문가 분과회의 및 자문회의,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해외 아동청소년관련 인권지표 검토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6개의 대분류, 24개의 중분류, 52개 소분류, 148개 지표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각 지표항목별로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행정통계 및 2차 자료를 분석하여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도출하였음.
-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를 다양한 방법(트렌드 및 이벤트 분석, 관련 저널 분석, 전문가의견조사 등) 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동·청소년 학대,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교육 및 문화권, 취약아동,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등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남.
- 해외 주요 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분석한 결과, 노르웨이의 경우 유엔아동 권리협약이 국내법에 통합되어 있고, 비법률적 수단으로 ombudsman을 통한 아동관련 고충

처리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다양한 아동인권관련 민간기구들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외에 지자체 수준에서 조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례제정 지역이 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이행 권고사항을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화 및 정상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 배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아동권리 전문위원회 설치, 아동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아동·청소년 관련 법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명시, 저소득 아동의 의료서비스 전담 기관 지정,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전담 거점 기관 선정, 현행 경쟁중심의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재검토,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시설 공간 확충, 소년전문법원설립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음.

-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0,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인권지표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등 2개 중분류에 각 5개의 소분류, 총 12개의 지표항목을 살펴보았음. 현재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에 관련 법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실정이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14년 2월 다시 개최되었으나 그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음.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 역시 그 행정력과 운영이 미비함.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0.3%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유엔(UN)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인권 협약 및 기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각각 40.1%, 43.0%, 27.7%로 낮았음.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은 35.6%이며, 59.7%가 학교 정규교과시간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인권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임. 학업성적에 의한 차별 피해 경험률(30.6%)과 가해 경험률(28.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 성차별,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에서는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차별·고민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 6개 중분류의 29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과 관련해서 '교사나 교장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20.4%,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 30.8%,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30.7%,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34.4%로, 2013년에 비해서 자율권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학급회의는 56.1%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유형 중에서 일반/특목/자율고가 55.8%로 운영 정도가 가장 낮았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9.3%인 반면,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62.4%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용모검사는 57.9%, 복장검사는 53.3%, 소지품검사는 23.1%의 학생들이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하였으며,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은 2013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차별 경험률은 부모님(보호자)의 신체적 별 경험은 25.7%, 학교선생님의 신체적 별 경험은 23.7%,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모욕적인 말 경험은 30.4%, 학교선생님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은 22%로 나타남.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피해는 2011년 36.4%에서 2013년 22.1%, 2014년 17.7%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인터넷 상에서의 협박 피해 경험도 2011년 6.5%에서 2013년 3.4%, 2014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인터넷 상에서의 성희롱 경험도 2011년에는 4.9%에서 2013년 4.5%, 2014년 2.9%로 감소하였으며,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유포 경험은 2011년에 8.2%에서 2013년에 4.2%, 2014년에는 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등의 4개 중분류에 총 22개의 지표항목을 살펴보았음. 아동·청소년의 1일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은 32.2%였으나,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83.5%로 나타났음. 2013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13,076건이었으며(10,857건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정서학대가 37.6%, 신체학대 30.9%, 방임이 27.8%, 성학대가 3.7%로 나타났음. 전년도에 비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약간 증가하였으며, 만성적인 학대와 중복학대, 재학대 경험률도 높았음. 1년간 1회 이상의 유형별 방임경험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방임이 67.3%로 가장



높았고, 비위생적인 의복과 침구 사용(16.8%), 결식에 대한 무관심(9.3%), 질병 시 방치(8.1%), 결식에 무관심(2.0%) 순으로 나타남. 모든 유형의 방임에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학령기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대부분 대도시에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방과후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특히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급식과 같은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모든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고, 지원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국내입양을 강조하는 국가시책에 따라 국내입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해외입양은 감소하고 있었음. 요보호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대안양육형태인 시설보호 역시 감소하고 있고, 가정위탁이 증가하고 있음.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이 대부분으로 일반가정위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가출청소년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여자청소년의 가출 신고 건이 남자청소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영역과 관련해서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전문적인 사례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종사자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신고의무자의 확대와 미신고시 벌금부과와 같은 제도변화에 따라 신고건수가 급증하였고, 후속조치로 사례조사 및 판정, 서비스 제공과 예방사업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종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등 5개 중분류에 총 33개의 지표항목을 살펴보았음. 2013년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86,633명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무직률의 경우에도 최근 40~5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장애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고 사망에 대한 원인으로 10대와 20대의 경우에는 자살(각각 10만 명당 5.1명, 19.5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4명 정도가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2003년의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1,000명 당 5.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9.0명으로 약 3.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13년 현재 학교보건교사 배치율은 64.9%로 1개 학교에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4명 정도가 흡연예방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6명 정도가 음주예방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84.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약 20%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약 27%는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8분이었고, 수면부족의 주요 이유는 학원·과외, 야간학습으로 나타남. 비만율은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특히 높았음. 3명 중 2명의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보인 반면, 3명 중 1명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67.2%가, 미래(진로)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과반수 정도의 아동·청소년이 응답하였고, 3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것으로 나타남. 아동의 빈곤율을 OECD국가와 비교하면, 비교대상 국가 41개국 중 12번째로 낮은 빈곤율을 보였으나 아동가족복지예산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취약계층 아동 수급자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급자 중 특히 10~19세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이 높았음.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는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시설 등 3개 중분류에 총 20개의 지표항목을 살펴보았음. 취학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우수한 상황으로 조사되었고, 중·고교의 진학률은 거의 100%에 달하고 고등교육 진학비율은 70.7%(일반계고 84.9%)로 나타났음.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초·중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학교 자퇴충동은 전체 학생들의 27.7%였으나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은 41.5%로 나타남. 약 300개 대안학교에 전체학생의 대략 0.23%에 해당되는 14,935명이 재학 중임.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냐고 물었을 때에 역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9.1%이고,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의 4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음. 학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인성교육은 현재 43개의 시범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정도임. 청소년 시설의 경우에 58.2%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으며, 청소년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은 39.7%로 2011년보다 13.3%가 증가하였으며,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74.6%에 달하고 있음.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1시간 미만이 24.1%이며, 40%만이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불만족 이유로는 시간부족이 43.7%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이 33.4%로 나타남. 청소년시설 이용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87.7%로 비교적 높았으며,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가정에서의 지지는 64.2%로 나타났고, 학교에서의 지지는 72.8%로 나타났음.

-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사범 운영,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의 4개 중분류에 총 32개의 지표항목을 살펴보았음. 2014년 6월 현재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는 282명이며, 이 중에서 난민 지위 인정자 77명, 인도적 체류자 58명, 불인정자 67명, 철회자 19명으로 10명 중 3명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철회되었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13.8%로 10명 중 1명 이상이 주로 친구들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고 있음. 2012년 현재, 의료보호시설, 소년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3,211명,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은 170명이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3,211명 중 51.7%가 1개월 이내에 수용되어 있음. 최근 몇 년간 소년원에 단기(6개월 이내) 및 장기적(2년 이내)으로 수용된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1개월 미만 수용된 소년들은 증가하는 추세임. 2012년도에는 2,908명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8,084명으로 약 3배 정도 확대되었음. 2012년도 현재 소년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47,621명으로 전체보호관찰인원 108,495명의 43.9%에 해당하며, 지난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소년범죄자 107,490명의 5.4%인 5,812명으로 201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음.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청소년은 전체 기소유예자 348,146명의 1.4%인 4,976명으로 2009년의 0.8%(3,807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2010년에 8.26시간에서 2012년에 8.48시간으로 증가하였는데,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서 전체근로자들과 거의 비슷한 시간을 근로하고 있었으며, 1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은 7,006원으로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49.8%에 불과함.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이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추세임. 상당수의 청소년 고용사업장들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2013년 현재 10,651명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31,323명)의 34.0%이며, 2010년 18,384명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 정책제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분석 등을 종합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인권영역별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각 정책과제별로 정책제언 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절차, 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등을 포함하였음.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에 관한 법 제·개정, 아동·청소년 인권기구 및 조직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 「시민적 자유와 권리」: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자치권활동 및 종교의 자유 보장, 학교 밖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청소년참여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및 사후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입양 활성화, 요보호아동의 가정환경 양육을 위한 일반가정 위탁제도 확대, 가출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및 관련 법 제정 노력
-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확대, 청소년자살 예방 국가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체계 구축, 장애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학교인턴제 운영 및 학교배치 의무화
-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중학생 직업준비 학교체제 도입,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수 권리 회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수 권리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 「특별보호조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부당처우 대응 프로그램 개발, 성매수·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소년사법 아동·청소년의 인권친화적 절차 도입 및 소년전문법원 설립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추진체계 .....	6
3. 연구내용 .....	8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수정·보완 .....	8
2)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조사 및 통합 비교·분석 .....	8
3)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	9
4) 국내·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상황 분석 .....	9
5)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 제시 .....	10
4. 연구방법 .....	11
1) 문헌자료조사 .....	11
2) 설문조사 .....	12
3) 전문가 의견조사 .....	16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점검팀 구성·운영 .....	17
5) 전문가 자문회의, 인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	17
II.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	19
1.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의 .....	21
1) 인간과 인권 .....	21
2) 사회와 인권 .....	23
3) 역사와 인권 .....	24
4) 아동·청소년의 인권 .....	27
2.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분석 .....	33
1) 트렌드(Trend) 분석 .....	33
2) 이벤트(Event) 분석 .....	35

3) 저널 분석 .....	37
4)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 의견 분석 .....	42
5)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종합 .....	45
3. 주요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수준 .....	46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법적 제도화 .....	46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제도화 사례: 노르웨이, 영국, 일본 .....	51
4.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 .....	82
1)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	82
2) 시민권과 자유 .....	116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131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137
5)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	147
6) 특별보호조치 .....	153
<b>III.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인권정책 분석 .....</b>	<b>183</b>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185
1) 해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185
2)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203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 .....	218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 .....	218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	220
<b>IV.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분석 .....</b>	<b>227</b>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229
1) 인권일반 .....	229
2) 일반원칙 .....	261
3) 소결 .....	283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284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284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307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316
4) 사생활의 보호 .....	318
5) 정보접근권 .....	324
6)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332
7) 소결 .....	345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34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348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	374
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386
4)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390
5) 소결 .....	395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	400
1) 장애 .....	400
2) 생존 및 발달 .....	402
3) 보건서비스 .....	410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	423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463
6) 소결 .....	474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479
1) 교육에의 권리 .....	479
2) 교육의 목표 .....	498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506
4) 소결 .....	526

6. 특별보호조치 .....	528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528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	540
3) 경제적 착취 .....	549
4) 성적 착취 .....	560
5) 소결 .....	571
<b>V. 요약 및 정책제언 .....</b>	<b>577</b>
1. 요약 .....	579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579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580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582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584
5)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	587
6) 특별보호조치 .....	589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	591
과제 I -1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에 관한 법 제·개정 .....	594
과제 I -2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 .....	598
과제 I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	601
과제 II -1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자치권 활동 및 종교의 자유 보장 .....	604
과제 II -2 학교 밖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강화 .....	607
과제 II -3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610
과제 III -1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 인력 확충 .....	613
과제 III -2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및 사후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입양활성화 ...	617
과제 III -3 요보호아동의 가정환경양육을 위한 가정위탁제도 확대 .....	620
과제 III -4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	624



과제 IV-1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발달 지원·확대 .....	627
과제 IV-2 청소년 자살 예방 국가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체계 구축 .....	631
과제 IV-3 장애청소년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학교인턴제 운영 및 학교배치 의무화 .....	634
과제 V-1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중학생 직업준비 학교체제 도입 .....	637
과제 V-2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유 권리 회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	641
과제 V-3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유 권리 지원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	644
과제 VI-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647
과제 VI-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부당처우 대응 프로그램 개발 .....	650
과제 VI-3 성매수·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	653
과제 VI-4 소년사법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친화적 절차 도입 및 소년전문법원 설립 .....	656

참 고 문 헌 .....	661
---------------	-----

부    록 .....	691
1.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 아동청소년의 주요 인권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 지표 .....	693
2. 설문지 .....	696

# 표 목 차

〈표 I-4-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12
〈표 I-4-2〉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 항목 .....	13
〈표 I-4-3〉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수 .....	16
〈표 II-2-1〉 아동인권이벤트 동향분석(2004-2014) .....	36
〈표 II-2-2〉 국내 저널 아동인권 동향분석(2004-2014) .....	37
〈표 II-2-3〉 해외 저널 동향 분석(2004-2014년) .....	40
〈표 II-2-4〉 현재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	43
〈표 II-2-5〉 현재 해외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	43
〈표 II-2-6〉 향후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	44
〈표 II-2-7〉 향후 해외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	45
〈표 II-3-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이행 분석틀 .....	48
〈표 II-3-2〉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 비교 .....	60
〈표 II-3-3〉 「Right to Action」 정책 목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	66
〈표 II-4-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연도별 추진 현황 .....	88
〈표 II-4-2〉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의 변화 .....	96
〈표 II-4-3〉 연차별 국민총수입(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	102
〈표 II-4-4〉 2013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순지출 기준, 백만불) .....	102
〈표 II-4-5〉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147
〈표 II-4-6〉 난민통계 종합(2013. 5월 기준) .....	153
〈표 II-4-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2007-2012) .....	163
〈표 II-4-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2007-2012) .....	168
〈표 III-1-1〉 FRA: 지표 집단별 각 지표 핵심영역의 범위 .....	187
〈표 III-1-2〉 EU FRA: 가족환경 및 대안적 돌봄(일부 지표 제시) .....	189
〈표 III-1-3〉 EU FRA: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	190
〈표 III-1-4〉 EU FRA: 적절한 생활수준 .....	192

〈표 III-1-5〉 EU FRA: 교육, 시민권, 문화적 활동 .....	193
〈표 III-1-6〉 ‘일반논평 제7호’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 .....	196
〈표 III-1-7〉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의 구조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 .....	198
〈표 III-1-8〉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지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의 세부 지표 내용(예시) .....	199
〈표 III-1-9〉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세트 1: ‘일반논평 제7호의 확산’ 관련 의무이행자 ....	201
〈표 III-1-10〉 주요 인권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지표 요약 .....	211
〈표 III-1-11〉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213
〈표 III-2-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의 가장 취약한 대상 .....	219
〈표 III-2-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	220
〈표 III-2-3〉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의 주요 정책과제 .....	221
〈표 III-2-4〉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주요 정책과제 .....	222
〈표 III-2-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주요 정책과제 .....	223
〈표 III-2-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의 주요 정책과제 .....	224
〈표 III-2-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주요 정책과제 .....	225
〈표 III-2-8〉 특별보호조치의 주요 정책과제 .....	226
〈표 IV-1-1〉 2012~2014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인력 및 담당업무 .....	232
〈표 IV-1-2〉 2011~2014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	234
〈표 IV-1-3〉 2013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예산 세부내역 .....	235
〈표 IV-1-4〉 2010~2013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사업 평가 .....	235
〈표 IV-1-5〉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13~2014) .....	237
〈표 IV-1-6〉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 .....	238
〈표 IV-1-7〉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	240
〈표 IV-1-8〉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	241
〈표 IV-1-9〉 인권의 존중 정도 .....	242
〈표 IV-1-10〉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_2) .....	243

〈표 IV-1-11〉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	246
〈표 IV-1-12〉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_5) .....	248
〈표 IV-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1)_2) .....	250
〈표 IV-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3)_4) .....	253
〈표 IV-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5)_6) .....	255
〈표 IV-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256
〈표 IV-1-17〉 인권교육 경험여부 .....	257
〈표 IV-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 .....	259
〈표 IV-1-19〉 인권교육 도움 정도 .....	260
〈표 IV-1-20〉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정도 .....	262
〈표 IV-1-21〉 차별해 본 경험_1)_2) .....	264
〈표 IV-1-22〉 차별해 본 경험_3)_4) .....	265
〈표 IV-1-23〉 차별 가해 경험_5)_6) .....	267
〈표 IV-1-24〉 차별 가해 경험_7)_8) .....	268
〈표 IV-1-25〉 차별해 본 경험_9)_10) .....	270
〈표 IV-1-26〉 다양한 이유에 따라 차별받은 정도 .....	272
〈표 IV-1-27〉 차별받은 경험_1)_2) .....	272
〈표 IV-1-28〉 차별받은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	274
〈표 IV-1-29〉 차별받은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	275
〈표 IV-1-30〉 차별받은 경험_5)_6) .....	276
〈표 IV-1-31〉 차별받은 경험_7)_8) .....	278
〈표 IV-1-32〉 차별받은 경험_9)_10) .....	279
〈표 IV-1-33〉 청소년영향평가제 정책실행 로드맵 .....	280
〈표 IV-1-34〉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	282
〈표 IV-2-1〉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1)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285

〈표 IV-2-2〉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 .....	286
〈표 IV-2-3〉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신다 .....	287
〈표 IV-2-4〉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4)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288
〈표 IV-2-5〉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289
〈표 IV-2-6〉 학생회 활동 .....	290
〈표 IV-2-7〉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 .....	292
〈표 IV-2-8〉 학급회의 운영여부 .....	292
〈표 IV-2-9〉 학급회의 참여정도 .....	293
〈표 IV-2-10〉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295
〈표 IV-2-11〉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	296
〈표 IV-2-1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	297
〈표 IV-2-13〉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298
〈표 IV-2-14〉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3) ...	299
〈표 IV-2-15〉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3) ...	299
〈표 IV-2-16〉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4) .....	300
〈표 IV-2-17〉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 사업 현황 .....	301
〈표 IV-2-1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	302
〈표 IV-2-19〉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	304
〈표 IV-2-20〉 투표연령에 대한 의견 .....	305
〈표 IV-2-2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	306
〈표 IV-2-22〉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	307

〈표 IV-2-23〉 양심적 병역 거부자 비율 .....	308
〈표 IV-2-24〉 연도별 병역 거부자 발생현황 .....	308
〈표 IV-2-25〉 최근 10년간(2004~2013.6.30.) 병역거부자 처리 현황 .....	308
〈표 IV-2-26〉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 .....	309
〈표 IV-2-27〉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310
〈표 IV-2-28〉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311
〈표 IV-2-29〉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312
〈표 IV-2-30〉 ‘종교재단 학교 여부’와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	313
〈표 IV-2-31〉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	314
〈표 IV-2-32〉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	315
〈표 IV-2-33〉 결사·집회 경험률 .....	317
〈표 IV-2-34〉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	318
〈표 IV-2-35〉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 :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	319
〈표 IV-2-36〉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	320
〈표 IV-2-37〉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	321
〈표 IV-2-38〉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 개인의 시험성적 공개 .....	322
〈표 IV-2-39〉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324
〈표 IV-2-40〉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	325
〈표 IV-2-41〉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	326
〈표 IV-2-42〉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	326
〈표 IV-2-43〉 학생-성인 독서율 .....	327
〈표 IV-2-44〉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	328
〈표 IV-2-45〉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	329
〈표 IV-2-46〉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329

〈표 IV-2-47〉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330
〈표 IV-2-48〉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 청소년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시 상담기관	331
〈표 IV-2-49〉 체벌 경험 여부 : 부모, 학교 교사로부터의 신체적 벌	333
〈표 IV-2-50〉 정서적 학대 경험 여부 : 부모, 학교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335
〈표 IV-2-51〉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336
〈표 IV-2-52〉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 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337
〈표 IV-2-5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 따돌림, 돈이나 물건 빼앗김	338
〈표 IV-2-5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 협박,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	339
〈표 IV-2-5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 강제적인 심부름	340
〈표 IV-2-56〉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341
〈표 IV-2-57〉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욕설이나 모욕, 협박, 성희롱, 사생활, 따돌림	342
〈표 IV-3-1〉 부모님과 나는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국가별)	350
〈표 IV-3-2〉 부모님과 나는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	350
〈표 IV-3-3〉 부모님의 자녀 이해 정도	351
〈표 IV-3-4〉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352
〈표 IV-3-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 성별, 연령별 구분	352
〈표 IV-3-6〉 아동학대 발생빈도	353
〈표 IV-3-7〉 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354
〈표 IV-3-8〉 재학대사례 : 성별, 연령별,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 구분	355
〈표 IV-3-9〉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357

〈표 IV-3-10〉 상관분석: 방임 경험 유형 간 상관관계 .....	360
〈표 IV-3-11〉 어린이집 연도 및 설립주체별 설치·운영 현황 .....	364
〈표 IV-3-1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2013년) .....	365
〈표 IV-3-13〉 어린이집 1개소 및 교직원 1인당 아동수 .....	366
〈표 IV-3-14〉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366
〈표 IV-3-15〉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2013년) .....	366
〈표 IV-3-16〉 초등돌봄교실 .....	367
〈표 IV-3-17〉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 .....	368
〈표 IV-3-1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369
〈표 IV-3-19〉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	370
〈표 IV-3-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 .....	370
〈표 IV-3-21〉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374
〈표 IV-3-22〉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376
〈표 IV-3-23〉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	377
〈표 IV-3-24〉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모형 .....	377
〈표 IV-3-25〉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	379
〈표 IV-3-26〉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380
〈표 IV-3-27〉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	381
〈표 IV-3-28〉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	382
〈표 IV-3-29〉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	383
〈표 IV-3-30〉 가출한 주된 이유 .....	384
〈표 IV-3-31〉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	385
〈표 IV-3-32〉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387
〈표 IV-3-33〉 2013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	388
〈표 IV-3-34〉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2013년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388
〈표 IV-3-35〉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389



〈표 IV-3-36〉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	390
〈표 IV-3-37〉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야 되는 사항 .....	391
〈표 IV-3-38〉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결과보고 내용 .....	392
〈표 IV-3-39〉 보호양육시설 예산 .....	393
〈표 IV-3-40〉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	394
〈표 IV-3-41〉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	394
〈표 IV-4-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400
〈표 IV-4-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401
〈표 IV-4-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고등학교 과정) .....	402
〈표 IV-4-4〉 0세의 기대여명 .....	403
〈표 IV-4-5〉 연도별 영아사망률 .....	403
〈표 IV-4-6〉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404
〈표 IV-4-7〉 사고 사망률 .....	405
〈표 IV-4-8〉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406
〈표 IV-4-9〉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407
〈표 IV-4-10〉 학교급식 안전도 .....	409
〈표 IV-4-11〉 보건교사 배치현황(2013. 04. 01. 기준) .....	411
〈표 IV-4-12〉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411
〈표 IV-4-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	412
〈표 IV-4-14〉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413
〈표 IV-4-15〉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414
〈표 IV-4-16〉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	415
〈표 IV-4-17〉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	416
〈표 IV-4-18〉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 미치료를 .....	417
〈표 IV-4-19〉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를 .....	418
〈표 IV-4-20〉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	418

〈표 IV-4-21〉 현재 흡연을 추이 .....	419
〈표 IV-4-22〉 현재 음주율 추이 .....	420
〈표 IV-4-23〉 평생 약물 경험률 .....	421
〈표 IV-4-24〉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422
〈표 IV-4-25〉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422
〈표 IV-4-26〉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424
〈표 IV-4-27〉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	425
〈표 IV-4-28〉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	426
〈표 IV-4-29〉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	427
〈표 IV-4-30〉 아침식사 하지 않는 이유 .....	429
〈표 IV-4-31〉 아침식사정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431
〈표 IV-4-32〉 상관분석: 아침식사, 건강을 위한 운동,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	432
〈표 IV-4-33〉 수면시간 .....	433
〈표 IV-4-34〉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434
〈표 IV-4-35〉 수면부족여부에 따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434
〈표 IV-4-36〉 수면부족 이유(1순위) .....	435
〈표 IV-4-37〉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을 .....	437
〈표 IV-4-38〉 자아존중감 .....	439
〈표 IV-4-39〉 우울증 정도 .....	443
〈표 IV-4-40〉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의 하위척도 신뢰도 .....	445
〈표 IV-4-41〉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	446
〈표 IV-4-42〉 스트레스 인지율 .....	447
〈표 IV-4-43〉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	449
〈표 IV-4-44〉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배경변인별 차이 .....	450
〈표 IV-4-45〉 스트레스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감 차이 .....	451
〈표 IV-4-46〉 현재 행복 정도 .....	452

〈표 IV-4-47〉 행복하지 않은 이유 .....	454
〈표 IV-4-48〉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	456
〈표 IV-4-49〉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	457
〈표 IV-4-50〉 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차이 .....	459
〈표 IV-4-51〉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 .....	459
〈표 IV-4-52〉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460
〈표 IV-4-53〉 아동빈곤율 .....	463
〈표 IV-4-5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467
〈표 IV-4-55〉 한부모가구 비율 .....	468
〈표 IV-4-56〉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468
〈표 IV-4-57〉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471
〈표 IV-4-58〉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	472
〈표 IV-4-5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473
〈표 IV-5-1〉 각급 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	480
〈표 IV-5-2〉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2000, 2009~2013) .....	481
〈표 IV-5-3〉 OECD와 한국의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483
〈표 IV-5-4〉 교원 1인당 학생 수(2000, 2009~2013) .....	485
〈표 IV-5-5〉 연도별(2000, 2006~2011)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	487
〈표 IV-5-6〉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00, 2009~2013) .....	488
〈표 IV-5-7〉 자퇴 총동여부 .....	490
〈표 IV-5-8〉 자퇴 총동이유(1순위) .....	491
〈표 IV-5-9〉 자퇴 총동이유(1순위)_기타 .....	492
〈표 IV-5-10〉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	493
〈표 IV-5-11〉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현황 .....	494
〈표 IV-5-12〉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학생 현황 .....	496

〈표 IV-5-13〉 각종학교로서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497
〈표 IV-5-14〉 학교에 대한 생각_1)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499
〈표 IV-5-15〉 학교에 대한 생각_2)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500
〈표 IV-5-16〉 학교에 대한 생각_3)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501
〈표 IV-5-17〉 학교에 대한 생각_4)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502
〈표 IV-5-18〉 각 학교급 별 교육목표에 포함된 인성교육 내용	503
〈표 IV-5-19〉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수	504
〈표 IV-5-20〉 인성교육 관련 연수 경험 및 도움 정도(담임교사)	505
〈표 IV-5-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507
〈표 IV-5-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507
〈표 IV-5-23〉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2.12.31 기준)	508
〈표 IV-5-24〉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2.12.31 기준)	509
〈표 IV-5-25〉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1) 공공도서관	511
〈표 IV-5-26〉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2) 청소년시설	512
〈표 IV-5-2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3) 체육시설	513
〈표 IV-5-2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4) 문화 예술 공간	514
〈표 IV-5-29〉 청소년의 주말이나 휴일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515
〈표 IV-5-30〉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516
〈표 IV-5-31〉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	517
〈표 IV-5-32〉 동아리 활동여부	518
〈표 IV-5-33〉 동아리활동 여부 : 연도별 추이	519
〈표 IV-5-34〉 평일 여가시간	520
〈표 IV-5-35〉 정규 수업시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시간	521
〈표 IV-5-36〉 여가활동 만족도	522
〈표 IV-5-37〉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523
〈표 IV-5-3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가정	524

〈표 IV-5-39〉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시수준_1) 학교 .....	525
〈표 IV-6-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	529
〈표 IV-6-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530
〈표 IV-6-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530
〈표 IV-6-4〉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 .....	531
〈표 IV-6-5〉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	532
〈표 IV-6-6〉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533
〈표 IV-6-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	534
〈표 IV-6-8〉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13.4) .....	534
〈표 IV-6-9〉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13.4) .....	535
〈표 IV-6-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	535
〈표 IV-6-11〉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3. 4) .....	536
〈표 IV-6-12〉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참가 인원수(2014. 3월 기준) .....	538
〈표 IV-6-13〉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	538
〈표 IV-6-14〉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 수 .....	539
〈표 IV-6-15〉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	540
〈표 IV-6-1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	541
〈표 IV-6-17〉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542
〈표 IV-6-18〉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국청 운영 누적 현황(2013.1.1.~12.15.기준) ...	543
〈표 IV-6-19〉 소년원의 교육체계 .....	544
〈표 IV-6-20〉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545
〈표 IV-6-21〉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546
〈표 IV-6-22〉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547
〈표 IV-6-23〉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547
〈표 IV-6-2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548
〈표 IV-6-2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549

〈표 IV-6-26〉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550
〈표 IV-6-27〉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553
〈표 IV-6-28〉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556
〈표 IV-6-29〉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	558
〈표 IV-6-30〉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	559
〈표 IV-6-31〉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	559
〈표 IV-6-32〉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 수 .....	560
〈표 IV-6-33〉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	561
〈표 IV-6-34〉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	561
〈표 IV-6-35〉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562
〈표 IV-6-36〉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563
〈표 IV-6-37〉 성적인 피해 시 도움요청 .....	565
〈표 IV-6-38〉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	566
〈표 IV-6-39〉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	567
〈표 IV-6-4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568
〈표 IV-6-4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	568
〈표 IV-6-4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569
〈표 IV-6-43〉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570
〈표 IV-6-4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	571
〈표 V-2-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	592

# 그 림 목 차

【그림 I-2-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연차별 추진계획 .....	7
【그림 II-2-1】 아동 인권 이슈 트렌드(구글 검색 트렌드) .....	34
【그림 II-2-2】 아동 인권 이슈 트렌드(네이버 검색 트렌드) .....	35
【그림 II-2-3】 아동인권이벤트 동향분석(2004~2014) .....	36
【그림 II-2-4】 국내 저널 아동인권 동향분석(2004~2014) .....	38
【그림 II-2-5】 해외 저널 동향 분석(2004~2014년) .....	41
【그림 II-3-1】 6가지 운영단계(Six Steps to Due Regard) .....	70
【그림 III-1-1】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관계 .....	200
【그림 III-2-1】 주요 인권지표: 인권일반, 시민적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204
【그림 III-2-2】 주요 인권지표: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	206
【그림 III-2-3】 주요 인권지표: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	207
【그림 III-2-4】 국제비교 가능 지표: 인권일반, 시민권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208
【그림 III-2-5】 국제비교 가능 지표항목: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	209
【그림 III-2-6】 국제비교 가능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	210
【그림 IV-1-1】 청소년정책 변천과정 .....	231
【그림 IV-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13~2014) .....	237
【그림 IV-1-3】 최근 1년 동안의 차별받은 경험: 학업성적, 나이, 성별, 외모·신체조건 .....	271
【그림 IV-2-1】 가정에서 의사결정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 .....	284
【그림 IV-2-2】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2013~2014) .....	294
【그림 IV-2-3】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2013~2014) .....	296
【그림 IV-2-4】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3개년 추이(중학생) .....	303
【그림 IV-2-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3개년 추이(고등학생) .....	303

【그림 IV-2-6】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	314
【그림 IV-2-7】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경험 3개년 추이(중학생) .....	320
【그림 IV-2-8】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경험 3개년 추이(고등학생) .....	321
【그림 IV-2-9】 전자책 독서율 변화 추이(성인·학생) .....	327
【그림 IV-2-10】 종이책+전자책 종합 독서율 변화 추이(성인·학생) .....	328
【그림 IV-2-11】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	336
【그림 IV-3-1】 부모와의 대화시간 .....	349
【그림 IV-3-2】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	356
【그림 IV-3-3】 최근 1년간 방임 경험률(%) 3개년 추이(초등학생) .....	361
【그림 IV-3-4】 최근 1년간 방임 경험률(%) 3개년 추이(중학생) .....	361
【그림 IV-3-5】 최근 1년간 방임 경험률(%) 3개년 추이(고등학생) .....	362
【그림 IV-3-6】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	363
【그림 IV-3-7】 방과후학교 연도별 만족도(교급별) .....	371
【그림 IV-3-8】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	372
【그림 IV-3-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	373
【그림 IV-3-10】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외입양아동 수 .....	375
【그림 IV-3-11】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380
【그림 IV-3-12】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383
【그림 IV-3-13】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재신고 건수 .....	386
【그림 IV-4-1】 안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	408
【그림 IV-4-2】 운동실천율(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425
【그림 IV-4-3】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428
【그림 IV-4-4】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	430
【그림 IV-4-5】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	430
【그림 IV-4-6】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고등학생) .....	431



【그림 IV-4-7】 비만율 추이(2008년~2012년) .....	436
【그림 IV-4-8】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	438
【그림 IV-4-9】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	439
【그림 IV-4-10】 우울정도 항목별 비교 .....	442
【그림 IV-4-11】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	447
【그림 IV-4-12】 현재 행복 정도(%) (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453
【그림 IV-4-13】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와 이유(중·고등학생) .....	455
【그림 IV-4-14】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	456
【그림 IV-4-15】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	458
【그림 IV-4-16】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초등학생) .....	461
【그림 IV-4-17】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중학생) .....	462
【그림 IV-4-18】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3개년 추이 : 고등학생) .....	462
【그림 IV-4-19】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0년, 중위소득 50%) .....	464
【그림 IV-4-20】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05, 2009) .....	466
【그림 IV-4-21】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	469
【그림 IV-4-22】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지원예산 .....	470
【그림 IV-5-1】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추이 .....	482
【그림 IV-5-2】 한국의 연도별(2000, 2009~2013) 학급당 학생 수 추이 .....	486
【그림 IV-6-1】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이(2009~2013) .....	533
【그림 IV-6-2】 월평균 근로시간(2008~2012) .....	551
【그림 IV-6-3】 하루 평균 근로시간 .....	551
【그림 IV-6-4】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2007~2012) .....	552

【그림 IV-6-5】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1~2012) .....	554
【그림 IV-6-6】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1 / 2012) .....	555
【그림 IV-6-7】 아르바이트 부담 처우 경험률 .....	556
【그림 IV-6-8】 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 (4개년 추이 :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564

# 제 I 장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sup>1)</sup>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1991년 11월 20일 이후라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6조; 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2009: 159).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일반원칙,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가정환경의 보호, 기초보건 및 아동복지의 보장, 교육·여가·문화활동의 보장,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18세미만의 아동 권리의 보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에서 각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3조 1항), 각국에서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와 권리의 향유에 대한 진전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44조 1항)(United Nations, 1989).

우리나라에서는 이 협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에 걸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바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1994년에 제1차 국가보고서, 2000년에 제2차 국가보고서, 2008년에 제3, 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1996년에 1차 권고문을, 2003년에 2차 권고문을, 그리고 2011년에 3차 권고문을 각각 한국정부에 전달하였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1)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그동안 우리정부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권고 이행 현황과 아동·청소년정책의 변화된 내용,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선택의정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등을 반영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등은 2차 권고 이후에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차 권고에 따라 2017년 6월 19일까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차 권고문은 향후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체계 구축, 협약 이행을 위한 OECD 수준에 걸맞는 수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원의 할당, 빈곤아동 등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와 다각적인 연구의 수행, 협약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확대,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체벌, 학대 및 방임의 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교육의 강화, 아동·청소년권리의 반영을 위한 참여 확대,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변칙적인 노동관행 금지와 아동 성착취에 대한 기소율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관한 기초 데이터의 생산은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71-47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에 대한 데이터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 2006년부터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왔다. 2006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인프라의 5개 영역과 152개 지표(정량 77개, 정성 75개)로 구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파악한 바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제40201호)로 지정되었으며,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홀수년도(2009년, 2011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짝수년도(2010년, 2012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의 2개 영역씩 조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그동안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2개 영역씩 격년으로 조사하는 것이 인권지표로서의 정체성 부족, 중요 인권지표의 누락, 인권실태의 통합적 파악 제한, 이론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기존의 4개 인권 영역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틀에 맞추어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영역을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 130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격년 조사에서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김영지, 김정준, 김지혜, 이민희, 2013: 4).

2013년도에 구축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인권 영역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보고서 작성체계와 유사하게 일치시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구성하였다. 또한 인권영역을 2개 영역씩 격년으로 조사하던 것을 한해에 통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가 130개나 되는 방대한 규모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간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고 분류에 적합한 지표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국가승인통계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분석과 체계적인 대안 발굴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개선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개선은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이슈는 시기별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3년도에 구축한 지표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 새로운 추세의 반영 등을 통해 지표를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반복횡단조사를 통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였다. 또한 기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적인 인권지표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의 국제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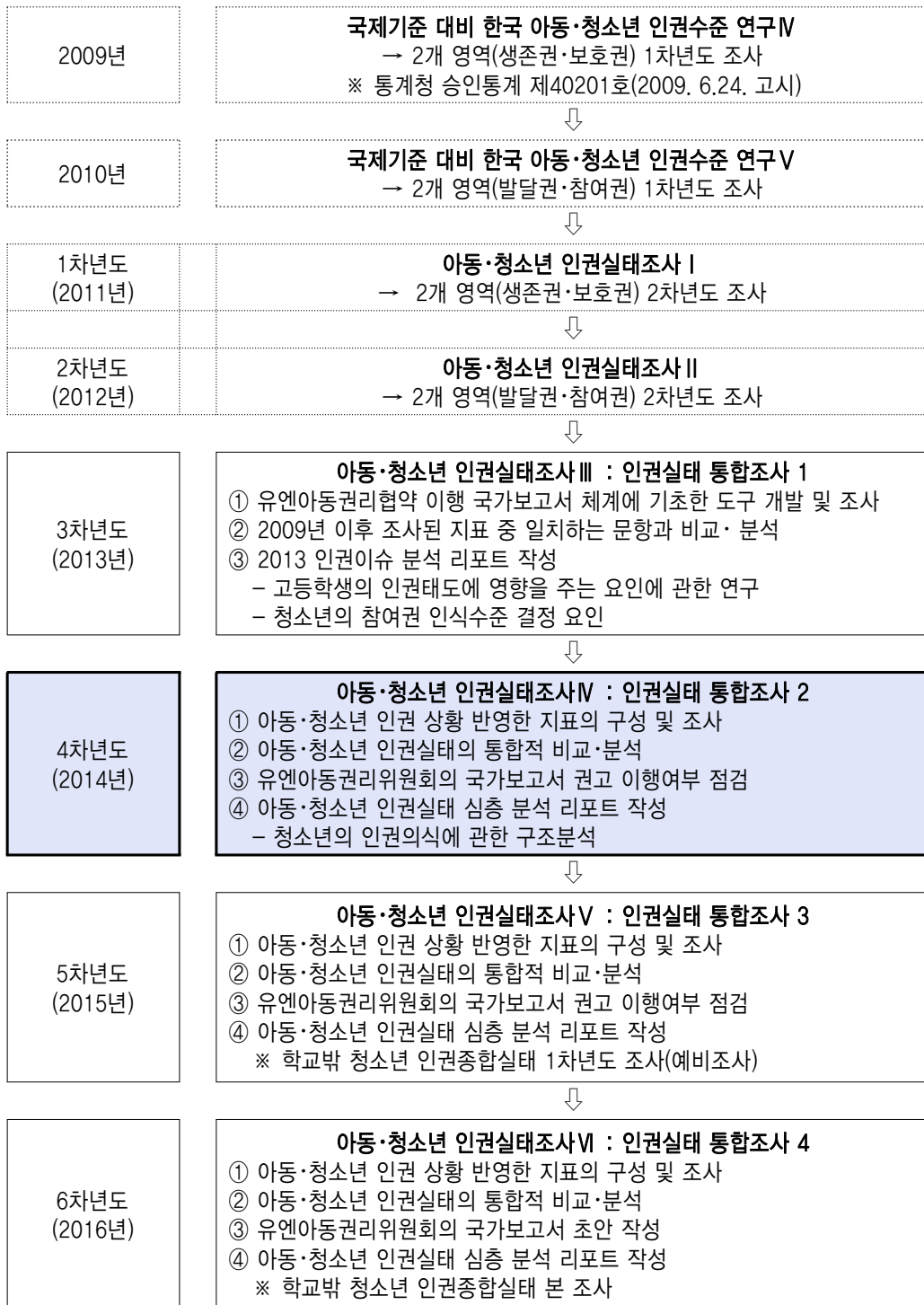
및 우리정부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수준과 국가보고서를 분석하여 권고 내용에 따른 법·제도, 프로그램, 시설·기구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2. 연구추진체계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2009년 이후부터 연구가 종료되는 2016년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위한 인권정책 수립과 2017년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까지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조사해 왔으나 2013년에 처음으로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통합조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지표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매년 실시할 것이다. 이밖에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별로 이행사항을 연차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그림 1-2-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연차별 추진계획

### 3. 연구내용

####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수정·보완

2013년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기초하여 개발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가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 130개 지표로 다소 산만하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6개 영역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지표항목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갖도록 지표를 수정하였다. 또한 세부지표는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지표와 유럽연합기본권기구(FRA: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주요 핵심지표와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새로운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반영한 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최종적으로 인권영역별 전문가 분과회의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타당화 작업을 통하여 확정하였다.

#### 2)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조사 및 통합 비교·분석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승인통계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생산하여야 한다. 본 조사를 통해 취합된 데이터는 아동·청소년의 개인 및 배경변인별 특성(예, 성별, 학교유형, 거주하는 지역규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등)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성격이 매년 실시되는 횡단조사이긴 하지만, 주요 인권지표를 중심으로 과거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3)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그동안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진행되고 있었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인지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인권이슈 분석은 특정 전문가의 견해나 일부 문헌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트렌드 분석, 이벤트 분석, 저널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트렌드 분석은 구글과 네이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sup>2)</sup>. 아동·청소년 이슈 분석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의 국내·외 동향, 그리고 과거, 현재 및 미래 이슈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4) 국내·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상황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 4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외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노력과 우리나라에서의 이행 정도를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첫째, 주요국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원칙의 법적 제도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아동인권모니터링 기구, 아동을 위한 국가계획, 아동 관련 종합적인 데이터수집, 아동참여, 아동영향평가, 아동 관련 정부사업 예산, 취약계층 아동, 아동 권리 문화 확산 등에 대해 주요 국가들의 노력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2) 빅데이터에 대해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대용량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1)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국민건강 주의예보 시범서비스 구축 등)에서도 시범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송태민, 2013a). 빅데이터 분석 사례로 최근 청소년자살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분석(인터넷 뉴스, 블로그, 카페, 게시판, SNS 등에서 ‘청소년 자살’관련 검색내용 및 데이터 활용과 청소년자살실태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연계하여 분석)을 통한 청소년 자살 예측모형 연구(송태민, 2013b)가 시도된 바 있다.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실천과 관련하여 그동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3차에 걸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과거의 권고사항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그 이행 여부와 이행이 되지 않은 원인 등이 정확히 분석되고 있지 못하다. 향후 2017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가 보다 충실한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전달한 국가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 이후 한국 정부에서의 이행여부, 이행하지 못한 이유 등을 분석하여 향후 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5)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 제시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방안의 제시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분석, 전문가의견 조사·분석,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 및 프로그램 분석,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발굴 및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첫째,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주요 이슈와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정책과제 제시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에 기초해서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별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6개 영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현황 및 필요성, 정책 내용, 추진절차, 소요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자료조사

국내·외 아동·청소년의 인권 동향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뉴스, 이벤트 자료와 국내·외 저널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뉴스는 구글과 네이버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이벤트 자료는 국제아동인권네트워크(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 CRIN)에 수록되어 있는 유럽과 각 지역 및 국가별로 개최된 포럼, 컨퍼런스, 캠페인, 페스티벌, 행사 등을 활용하였다. 국내·외 저널은 한국학술정보(KISS)와 누리미디어(DBpia)에 수록된 논문과 Academic Search Premier(ASP)와 사회학 및 사회복지관련 DB인 SocINDEX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수준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을 살펴보고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주요 국가의 국가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외출장을 통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아동인권 전문연구소인 북아일랜드 퀸즈대학의 아동인권연구센터(Centre for Children's Rights), 그리고 영국의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와 아동인권연합(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으로부터 연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집필에 활용하였다. 또한 국제아동인권네트워크(CRIN)에서 각국의 변호사들을 통하여 작성된 해당 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제화관련 리포트 역시 참조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지표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2013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지표와 UN아동권리위원회, EU 등 국제기구의 아동권리지표,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3·4차 국가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인권 영역별로 행정통계와 타 기관의 실태조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에 대한 조사, 관련 뉴스 검색,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의 분석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 2) 설문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제40201호)로 지정되어 매년 공표되고 있다. 그동안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홀수년도(2009년, 2011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짝수년도(2010년, 2012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의 2개 영역씩 조사하였다. 2013년도부터는 기존의 4개 인권 영역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틀에 맞추어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조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전환하여 격년 조사에서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2014년도에도 이와 같은 틀을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표 | -4-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전체(N)	비율(%)
전체		10,484	100.0
성별	남자	5,477	52.2
	여자	5,007	47.8
학교유형	초등학교	2,975	28.4
	중학교	3,662	34.9
	일반/특목/자율고	3,166	30.2
	특성화고	681	6.5
지역규모	대도시	4,443	42.4
	중소도시	4,724	45.1
	읍면지역	1,317	12.6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771	93.2
	한부모가정	563	5.4
	조손가정	41	0.4
	기타	109	1.0
학업성적	상	3,232	30.8
	중	4,417	42.1
	하	2,751	26.2
	무응답	83	0.8
경제적 수준	상	4,702	44.9
	중	4,053	38.7
	하	1,655	15.8
	무응답	75	0.7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되었다. 전국적으로 조사원을 선발하여 권역별(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로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원은 사전에 조사협조 공문과 안내문 발송 및 전화로 협조 요청을 하였다. 이후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설문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표본 추출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전문기관에 의해 개발된 온라인 실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진이 수시로 표본 추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사진행상황(원표본 컨택 상황, 표본대체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실사진행과 관련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표본수는 2013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추출된 9,50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최종 조사·완료된 표본수는 10,484명이었다(상세한 표본설계 내용은 별권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보고서 I 장 2절에 수록하였음).

조사내용은 인권영역을 인권 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따른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각 영역을 대표할만한 대표적인 행정통계나 조사데이터가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관련 조사항목은 본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학교상황과 대상자의 응답 가능여부, 인권침해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조사도구를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의 2개의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표 I-4-2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 항목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협약, 기관 인지도	30(1~3)	39(1~3)
		인권의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38(1~5)	41(1~5)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32(1~5)	42(1~7)
		인권교육 경험	14	15
		인권교육 받은 기관	14-1	15-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14-2	15-2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일반원칙	차별 가해 경험	33(1~10)	43(1~10)
		차별 피해 경험	34(1~10)	44(1~10)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15(1~4)	16(1~4)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28
		학급회의 운영 여부	27	30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27-1	30-1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29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26(1)	31(1)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	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	35
		참여권 보장 수준	28	36
		참여 장애 이유	29	37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35(2~4)	38(2~4)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32, 32-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35(1)	38(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34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34-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27(1~3)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31(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6(2)	31(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6(3)	31(4)
	정보접근권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6(4)	31(5)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31	40(1~3)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체벌 경험률	18(1,3)	19(1,3)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18(2,4)	19(2,4)
		폭력피해 경험	19(1~7)	20(1~7)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20(1~5)	21(1~5)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부모의 지도와 책임	방임유형 및 정도	16(1~5)	17(1~5)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7	18
		가출 이유	17-1	18-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	18-2, 18-3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을 (교통사고, 범죄, 먹거리, 학교급식)	4 37(1~3)	4 47(1~3)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6	6
		운동 실천율	5	5
		아침식사 결식률	3	3
		아침식사 결식이유	3-1	3-1
		수면시간	1	1
		수면부족여부	2	2
		수면부족 이유	2-1	2-1
		우울증 지수	9(1~7)	10(1~7)
		스트레스 인지율	7(1~6)	7(1~6)
		행복도	10	11
		행복하지 않은 이유	10-1	11-1
		자살에 대한 생각	-	8
		자살 생각 이유	-	8-1
		고민거리대화상대	8	9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포기 생각여부	12	13
		학업포기 생각 이유	12-1	13-1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13(1~4)	14(1~4)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21	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23	24
		동아리활동 참가율	24	25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22	23
		하루평균학습시간	11	12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21-1	22-1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25	26
6.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45 45-1(1~9)
	성적 착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6	46
		성적 피해시 도움제공자	36-1	46-1

### 3)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중 주요 핵심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 지표의 선정, 그리고 인권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계, 현장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등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계전문가는 아동학과, 청소년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교수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으로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현장전문가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센터나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또한 정책담당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법무부에서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표 I-4-3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수

전문가유형	1차 조사 참여자수	2차 조사 참여자 수
학계전문가	13명	13명
현장전문가	9명	8명
정책전문가	6명	6명
계	28명	27명

전문가 의견조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1차는 9월 28일~10월 6일 사이에, 그리고 2차는 10월 13일~10월 17일 사이에 조사되었다. 조사는 먼저 전화로 본 조사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전문가에 대하여 e-mail을 통하여 의견조사지를 발송하고 일정기간 후에 작성한 의견조사지를 e-mail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30명 중 28명이 참여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27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내용은 1차 조사에서는 현재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향후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아동·청소년 인권이 취약한 대상,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 인권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 등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와 중요 정도를 조사하였다. 동의 정도와 중요 정도는 5점 척도(매우 동의한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하다~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사용했는데, 평균값이 높을수록 동의 정도와 중요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점검팀 구성·운영

우리나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자, 인권단체 전문가, 교육청 학생인권 전문가 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는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여 인권 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의 6개 영역별로 현재까지의 이행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5) 전문가 자문회의, 인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연구 목적, 내용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 및 수행 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인권지표체계의 검토 및 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자문, 정책 제언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별로 각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과 인권지표에 대한 검토 및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 현안과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논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학자, 정부관계자, 인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제 II 장

#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1.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의
2.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분석
3. 주요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수준
4.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



## 제 II 장

##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1.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의<sup>3)</sup>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모든 논의는 철학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고란 사고의 대상에 대하여 그의 본질과 근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하여 철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아동·청소년 인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의 존재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본질과 근원을 생각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인권의 개념 정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개념의 정의는 실천 현장에 적용되는 내용의 방향과 실체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철학적 사고는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은 ‘아동’ 및 ‘청소년’이란 존재와 ‘인권’이라는 두 개념에 대하여 다시 다양한 철학적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어느 한 시점에서의 철학적 사고는 그 대상의 역사성에 대한 사고를 필수적으로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든 존재 대상은 그것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위해 인간과 인권, 사회와 인권, 역사와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기초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하여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1) 인간과 인권

인권을 풀어쓰면 인간의 권리이다. 이 문장을 볼 때에 인권이란 말 자체에 이미 권리는 인간에게 속해 있는 인간의 속성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17,8세기에 비롯되었던 천부인권설도 인간에게

3) 이 부분은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가 집필하였다.

인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자연적인 것임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인권이 하나의 속성으로 부여되어 있고 이는 당위적이며, 불가침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가 인간이외의 개나 고양이와 같은 짐승이나 다른 존재에게도 부여되었는지는 또 다른 철학적, 종교적 논의가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인간의 권리 중 가장 본연적인 권리는 무엇보다 생존할 권리와 자유로울 권리라 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인간도 유한한 생명체로 그의 존재의 최초의 가치는 생존하는 것이다. 인간은 죽으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인권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을 가진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그의 능동적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창조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에는 무엇보다 자유로움이 전제가 된다. 인간의 자연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났다. 인간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소멸하기까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의 참다운 의미는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마감할 수 있는 극단적인 자유조차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만일 한 인간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자유로울 권리를 주체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으로 타인이나 사회적 지배기제들로부터 조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생존권이 인간 존재의 유무를 묻고, 자유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인간의 권리와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물음은 인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양과 질에 관한 물음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의 욕구가 충족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까지의 권리로서 이를 복지권 또는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봉철, 1992: 104~106). 그러나 인간 개인마다 삶의 양적 만족에 대한 기대치가 각기 다르고, 삶의 양이 삶의 질을 정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복지권이나 행복추구권에서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인권 차원에서 인간 욕구 충족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는 인간의 생존권과 자유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존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인간과 인권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인간 개체에게 주어진 권리는 인간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생존권과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유권,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내용으로서의 복지권으로 압축하여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 자유권, 복지권은 무엇보다 인간 개체 모두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들이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으로부터 침해받게 되면 이를 인권 침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2) 사회와 인권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과 자유권 및 복지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는 그 무엇보다 평등권이다.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 루소(J.J. Rousseau; 1712~1778)를 비롯한 자연권사상가들이 천부인권설을 천명했을 때 그들이 가장 강조한 권리는 실제로 평등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의 평등권의 발현은 시대적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고대와 중세를 살았던 인간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인간의 평등권이 생존권과 자유권 및 복지권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 평등하지 못하고 상호 지배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이로 인해 그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고, 자유로울 권리도 박탈되거나 억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욕구도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의 평등권은 인간 개체가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비교됨으로서 평등을 논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의 평등권은 인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평등하다는 명제는 인간 개체에게 스스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홀로 존재한다면 평등의 상대가 없어 평등권은 논해질 수 없다.

앞에서 언급된 인간과 인권의 논의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인간 본성과 관련된 생존권, 자유권, 개인적 복지권도 실제로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sup>4)</sup>처럼 인간이 홀로 존재하여 산다면 인식할 필요도, 인식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인권을 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때에 성립된다.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4) 영국의 작가 대니얼 디포우(Daniel Defoe; 1659?~1731)가 1719년에 발표한 <요크의 선원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이라는 가상의 자전적 소설 속에서 무인도에 표착하여 홀로 살게 되는 주인공의 이름이다.

생존의 권리가 발동하게 되고, 사회 속에서 내가 행사하는 자유가 속박당한다면 자유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의·식·주와 같은 최소한의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면 나의 개인적 복지권은 그 무엇인가로부터 침해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인권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논의될 수뿐이 없는 것이다.

### 3) 역사와 인권

인권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역사성의 의미는 권리장전이나 프랑스대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 여기서는 인간 혹은 인권과 같은 한 개념이 역사의 변천 속에서 각 시대마다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였고, 이러한 의미와 가치들이 수렴되어서 현재의 시점에 어떠한 그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뜻한다. 이렇게 한 대상에 대한 역사성을 고찰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상대성을 벗어나서 대상의 본질에 수렴되어 가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변증법적 인식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인권에 관한 역사성에 관한 논의도 인간의 권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고 그러한 해석학적 의미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그의 본질에 수렴해 갈 수 있는 가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와 인권 관계의 관점에서 인간의 권리를 논의해 보자.<sup>5)</sup>

원래 인권에 관하여는 인본주의를 거쳐 계몽주의에 와서 자연권 사상가들에 의해 표명되었지만 인권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권리는 사회, 경제, 국가, 종교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자연적 권리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고대에서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지금의 이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인권은 역사적인 산물이고, 인류 성장의 산물이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대상이고, 또한 변화 가능한 대상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인권의 본질은 그의 역사성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의 산물인 인권은 그 어느 곳 보다 유럽에서 그의 이상을 추구하며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2).

고대는 일반적으로 서구 인본사상의 요람이라 칭해진다. 인간을 국가와 사회의 긴장 속에 있는 자율적 개체로서 발견한 것은 그리이스 철학의 유산이다. 이미 당시의 모든 정치적 질서의

5) 아래에서 고찰된 유럽의 인권사에 대한 서술은 주로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발행된 학술지를 참조로 하였다.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1991). Menschenrechte,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210. München: Bruckmann, pp. 2-6.

기준들은 인간의 본연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권리인 자연권으로부터 인정되었다. 이러한 자연권과 함께 당시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실정권(positive rights)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고대에서는 실정권과 자연권을 동일시함으로써 당시의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게 되었고, 비로소 스토아(Stoa) 철학에 와서야 그리이스·로마의 인간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자연에 기초하여 가르쳐지기는 했으나 이들도 노예제도를 바꾸지는 못하였다. 중세의 기독교 초기에는 이러한 스토아 철학이 계승되었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신은 인간을 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에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인간은 신,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세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자유권과 평등권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봉건제도에 와서 지배그룹들은 그들의 신하들과 농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들의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영주들과 귀족들은 그들의 피지배계급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허용하였으나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당시의 불평등한 사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따라서 중세에서도 고대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생존권과 복지권이 유지되면서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연권보다는 실정권이 지배적으로 적용되었던 역사의 연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암흑기라 불렸던 중세에서는 성경에 있는 기독교의 교리가 세상에 잘못 적용되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과 소유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2~3).

15세기 이래로 예술과 학문으로부터의 자유가 교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서 인본주의의 물결이 서서히 유럽사회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Renaissance)를 통해 고대 그리스의 교육적 유산이 부활하여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상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인간은 더 높은 인간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기대는 소수의 지식인들과 종교개혁자들에게만 적용되었고 그 동안 교황과 결탁했던 왕권세력에게는 근대국가의 탄생으로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3). 비로소 17, 18세기의 계몽철학 시대에 와서야 자연권과 인권에 대한 진보적 사상이 대두되었다. 칸트(I. Kant; 1724~1804)가 말한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계몽의 이성은 로크(J. Locke; 1632~1704)와 루소를 필두로 당시의 지배세력들이 주도하던 종교적, 정치적 지배계약에 대응해서 공동체적 사회계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3). 계몽사상가들은 국가주권에서 국민주권을 주창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과 자유와 재산을 강제로 소유하려한다면 국민은 국가의 지배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성명하였다. 그리고 계몽사상의 실천은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대혁명에서 그의 정점을 이루었고, 마침내 그해 8월 26일 “인권과 시민권 선언”을 통해 세상에 천명되었다. 당시 17개 조항으로 발표된 이 선언의 제1조에서는 “인간은 출생으로부터 그의 권리에 있어 자유로우며 평등하다. 사회적 차이는 오직 공익에 기초하여야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5).

계몽주의 시대의 인권에 대한 유산은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개념정의를 확고히 했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서 인간의 권리는 어느 한 공간이나 시간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무엇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것이라고 공포된 것이다. 즉, 인간의 권리는 실정법이 입법자에게 종속되거나 그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과 같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종속되거나 제한받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인 인권은 인간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도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세상에 천명된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인권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이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라는 이성적 계몽과 함께 최초로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과 복지가 요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 시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인간의 권리로서 요구되는 행복추구권과 복지권이 당시에 태동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개인적인 자유 특히, 의사표명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불신을 일깨웠고,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을 계몽하면서 시민적 기본권리들을 보호하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3).

인류 역사상 인권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계몽주의 시대가 가능했던 이유는 계몽사상가들의 이성적 노력들이 토대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보다 실제로 당시 새로운 경제계급으로 부상된 중산층 시민계급의 세력형성이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당시에 농노 등의 하층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이들의 자유는 실제로는 시민계급의 경제적 이익이 고려된 것이었다. 시민혁명으로부터 이어지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고 자본가들이 상층계급으로 위치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을 심하게 수탈하여 인권은 새로운 사회적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노동시간, 최소 임금,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노동, 실업 등 인간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되었다. 말하자면 중세에는 국가가 종교와 결탁하여 왕족과 귀족들이 인권을 지배하고 수탈했다면, 계몽시대 이후 회복된 인권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시민계급의 자본가들이

국가와 결탁하여 대다수 노동자들의 인권을 다시 수탈하는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수탈의 귀결은 사회주의의 대두와 러시아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와 성찰을 통해 1945년 10월 24일 UN(United Nations)이 창립되었고, 1948년 12월 10일에 이곳으로부터 “인권의 일반적 선언”이 있게 되었다(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1: 6).

#### 4) 아동·청소년의 인권

위에서 고찰한 인간과 인권, 사회와 인권, 인권의 역사성은 모든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 논의였다. 아동과 청소년도 인간의 범주에 속하는 존재이기에 위에 서술한 인권의 논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과 청소년이 다른 인간들과 모든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조건 형성이 동등할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무엇보다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성되지 않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만큼 안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이들은 성인에 비하여 취약한 존재이어서 성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제대로 성장하여 성인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성인들의 권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들에게는 발달권, 보호권과 같은 권리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논해졌던 인간의 생존권, 자유권, 복지권, 평등권과 사회적 권리와 같은 인간의 일반적 권리들은 각 개별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상호 연계되어 서로를 제한하기도 하고 상호 조건이나 전제가 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앞서 서술된 인간의 일반적 권리들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에게 중요한 발달권, 보호권을 포함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1)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생존권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이라 할 수 있다. 생존권이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가장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동이고 다음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은 신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연령대에 속하는 존재이기에 영양, 질병, 안전,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1위에 있고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대학입학을 위한 지나친 교육경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생존권이 교육제도로부터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지진, 폭우,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과 달리 전쟁, 환경파괴와 같이 인간의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생명의 위협과 같은 것이라 교육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2) 아동·청소년의 자유권

자유권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존재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만일 인간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지고 자유권만 박탈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자유권이 박탈된 인간은 ‘나’라는 자신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지나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존재이어서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영아들도 자신이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자아와 타아를 구분하게 되고, 자신의 행위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이때부터 영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울 권리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이들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자신의 생존권이나 발달권 및 보호권을 위협할 수 있기에 성인들로부터 제한적 자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 주어지는 자유권은 원초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죽을 자유와 자유권을 포기할 자유까지도 주어지지만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한에는 무한한 자유를 얻기는 어렵고 실정법에 의거한 자유만을 누릴 수 있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유권을 논하자면 자유권은 원래 자연권에 속하지만 실질적인 자유의 실현은 실정법에 의거하게 된다. 즉, 실정법은 인간의 자유권을 실현의 현장에서 지켜주기 위하여 입법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도 입법이 되기 때문에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유권은 실정법에 의하거나 또는 부모나 양육자, 교육자들의 오랜 행동양식과

가치판단에 의해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의 궁극적 목적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지만 때로는 아동·청소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지나친 외부의 제한으로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자유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보다 그것이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에 최우선하는 조처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아동·청소년의 복지권

아동·청소년의 복지권은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앞서 서술한 개인의 일반적 권리로서의 복지권에서는 생존의 문제를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의·식·주와 같은 최소량의 복지에 관하여 논해졌다. 이러한 차원의 복지는 아동에게 있어서는 때로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게 되고, 발달권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 이 권리의 적용 외연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복지권을 인간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을 때에 이 권리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모든 조사 통계조사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신체적인 비만과 운동부족, 정서적인 불안 및 불균형, 심리적인 우울증, 공격성, 중독증세 등의 각종 조사에서 부정적 결과가 증가일로에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청소년들은 불행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복지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 청소년들의 복지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역시 교육제도이다. 2014년에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업중단, 중퇴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정적 결과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정조차도 청소년의 복지권을 지켜주는 사회화기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능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학벌사회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인데, 학벌사회가 타파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사회가 인간의 권리보다 자본의 논리와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들로부터 박탈당하고 있다는 철학적 성찰이 결여되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소수 학벌 엘리트 집단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대다수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탈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한국 아동·청소년의 복지권은 개인적 권리를 벗어나 사회적 권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고 복지권의 행사를 위해 사회 전반적인 대 각성운동이 일어나 필요가 있다.

#### (4) 아동·청소년의 평등권

인간의 평등권에 관한 문제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 모두가 염원했던 자유권이 프랑스대혁명을 통해서 쟁취된 이래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간의 권리 중 하나이다. 고대의 노예제도와 중세의 봉건 농노제도로부터 자유의 권리를 쟁취한 인간은 이제 평등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혁명적 과업의 완수를 통하여 인간은 비록 개인이 타인과 같이 동등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상대적인 박탈감과 경제사회적 부자유를 가지게 됨으로서 권리에 대한 가치의 중심이 자유에서 점차 평등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또한 평등에 대한 요구도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그 수위를 높여가기에 이르렀다(이봉철, 1992: 124~125).

아동·청소년의 평등권은 평등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사될 수 있기에 주로 학교나 학급 내 또래 간에서 요구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아동·청소년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평등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있어서 평등권의 행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데, 이는 평등권 행사의 자체에 의미도 있지만, 평등권 행사를 통해서 장차 사회 속에서 자신의 평등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내용을 배우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평등권에는 본질적으로 기회균등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똑 같은 조건에서 자신에게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평등권이 침해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평등권의 침해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교육에서는 ‘기회균등과 능력주의’라는 교육이데올로기가 오래전부터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많은 교육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교육의 재생산 기능이 밝혀지고, 교육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공교육이란 이름아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받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교육만으로는 평등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기회의 균등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교육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한 길은 오직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도입이 정답이라 할 수 있다. 평등은 획일이 아니라 자율을 전제로 하는데 대학이 평준화되면 모든 아동·청소년들은 획일적인 수학능력시험의 경쟁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 그리고 능력에 맞는 진학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전 국민 모두가 한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깊은 인권적 성찰이 있어야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고,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청소년의 평등권이 비로소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 (5) 아동·청소년의 보호권 및 발달권

아동·청소년의 보호권 및 발달권은 인간에 있어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권리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보호의 대상이며, 또한 이들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와 성인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권과 발달권은 큰 의미를 가진다.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보호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의 존재는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성인들로부터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그들은 학대와 노동착취, 차별의 대상이었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리의 대상으로도 전혀 인식되지 않았다. 18세기를 살았던 루소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최초로 주창한 학자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프랑스대혁명을 완수하고 민주주의가 제도로 역사 속에 위치하게 되었지만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서 아동·청소년은 인권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공교육의 제도의 도입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공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지의 사실이다.

아동·청소년의 보호권과 발달권은 지금껏 위에서 논의했던 생존권, 복지권, 자유권, 평등권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생존권과 복지권은 이들의 보호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생존권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수준이 따라 주고 있지만, 정보사회에 들어와 각종 유해환경과 저출산 고령화 및 맞벌이 시대로부터의 가정해체, 심한 교육 스트레스,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이들에게 자살, 사망, 사고,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권과 발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달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중요한데 한국은 이미

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이 지나쳐서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이 침해받고 있다. 한국은 UN의 아동권리협약 회원국으로서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과다한 학업시간으로 인해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향수할 권리를 침해당해 그들의 발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또한 한국의 교육제도를 혁신해야만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부의 성찰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6)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로서의 참여권

참여권은 인간의 권리 중에서 가장 늦게 요구되고 있는 권리이다. 실제로 참여권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자연권인 자유권, 평등권이 쟁취되는 과정에서 그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인간의 권리이다. 따라서 인간의 참여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 인간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동등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고대와 중세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민주시민사회의 형성과 함께 참여권은 인간의 중요한 권리로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대표적 권리 중 하나이다.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참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집회와 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참여하여 표명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이러한 참여권의 보장이 중요한 것은 이들의 다른 중요한 권리인 생존권,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보호권, 발달권 등이 침해를 받았을 때에 함께 집회와 결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사결정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가정이나 학교, 근로 현장 등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으면 즉각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장차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의미있는 권리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은 미래 한국의 민주시민사회에 초석을 놓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분석<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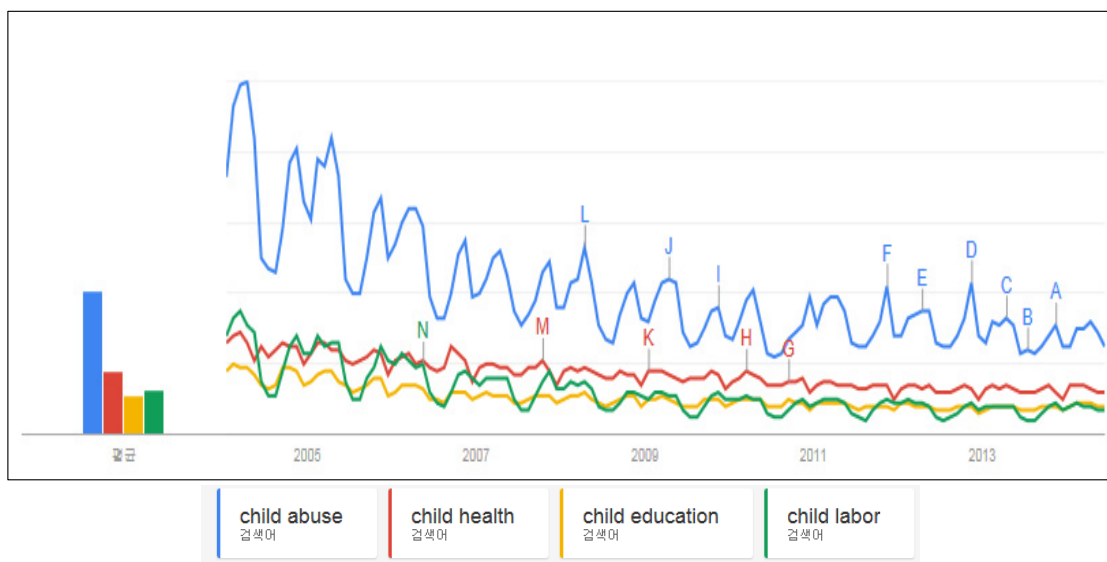
최근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외 뉴스, 이벤트, 국내·외 학술 저널, 아동·청소년 인권전문가 의견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트렌드(Trend) 분석

최근 아동 인권 관련 이슈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글과 네이버 트렌드 분석<sup>7)</sup>을 실시하였다. 먼저 200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뉴스 제목을 분석하는 트렌드 분석에서 child abuse, child health, child labor, child education 등의 아동 인권과 관련한 검색어를 입력하였다. 다양한 검색어 중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높은 관심도(40)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 보건(17), 아동 노동(12), 아동 교육(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경우에 2004년 4월에 최고의 관심도(100)를 보인 이후에 관심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이슈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보건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관심도가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최근 꾸준한 관심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동 노동은 2006년까지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보였지만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아동 교육도 과거에 비해서 감소추세를 보였고, 아동 학대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이 부분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7) 기간별 검색량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검색횟수를 주간으로 합산해서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하고 상대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구글에서는 2004년부터,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2007년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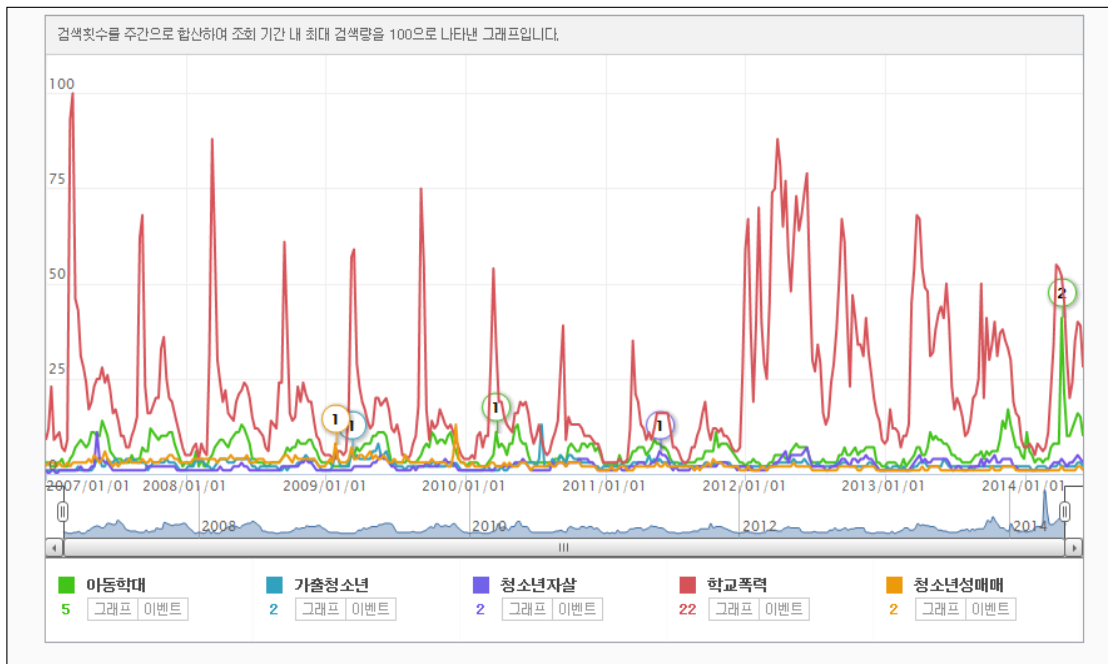


\* 출처: 구글 검색트렌드, <http://www.google.co.kr/trends/>

【그림 II-2-1】 아동 인권 이슈 트렌드(구글 검색 트렌드)

또한 국내에서의 아동 인권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아동 인권 관련 이슈 중에서 학교폭력, 아동학대, 청소년자살, 청소년성매매, 가출청소년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2007년 1월에서 2014년 6월까지 지난 8년간 국내 아동인권 관련 이슈에 관한 관심도를 검색하였다<sup>8)</sup>.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는 2012년 이후에 보다 확대되고 있었다.

8) 네이버 트렌드, <http://trend.naver.com>



\* 출처: 네이버 검색트렌드(<http://trend.naver.com>)

【그림 II-2-2】 아동 인권 이슈 트렌드(네이버 검색 트렌드)

## 2) 이벤트(Event) 분석<sup>9)</sup>

국제아동인권네트워크(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 CRIN)<sup>10)</sup>에 수록되어 있는 2004년 1월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유엔과 각 지역 및 국가별로 개최된 아동 인권 관련 이벤트 2,031건을 통하여 아동 인권 이슈를 분석하였다<sup>11)</sup>. 아동 인권 이슈는 성적 착취와 학대 관련 이벤트가 19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 및 문화 관련 이벤트(192건) 취약한 상황의 아동(181건), 건강과 복지(180건), 사법(173건), 폭력(139건), 시민적 권리와 자유(76건), 무력분쟁(65건),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61건), 경제적 착취(5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이벤트 분석은 국제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개최된 아동 인권과 관련한 포럼, 컨퍼런스, 심포지엄, 캠페인, 페스티벌, 캠프, 행사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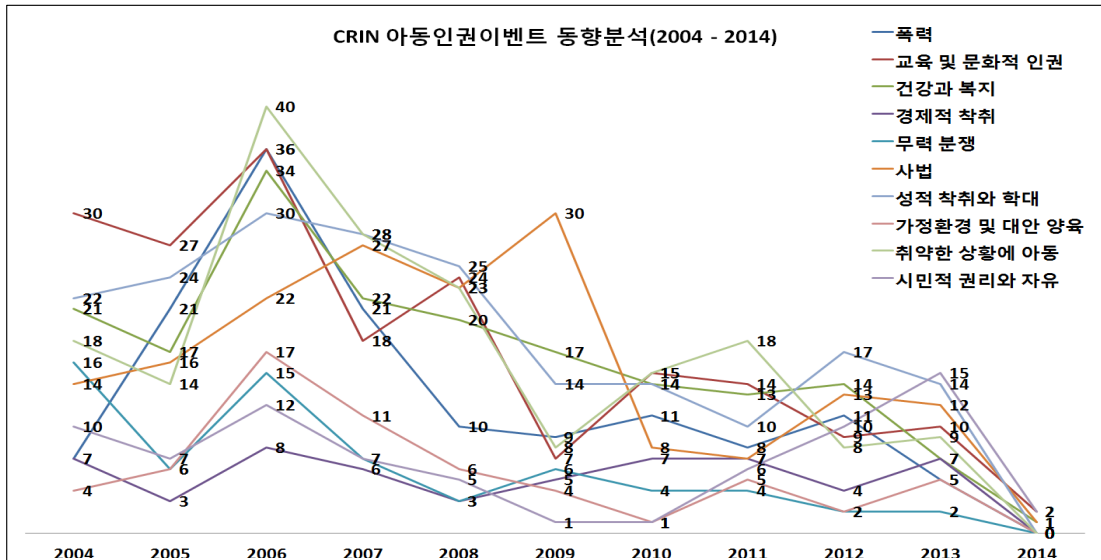
10) 국제아동인권네트워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서 국제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아동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정책토론과 캠페인, 법률적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국제아동인권네트워크(CRIN), <http://www.crin.org/en/home/about/>)

11) 국제아동인권네트워크(CRIN), <http://www.crin.org/>

표 II-2-1 아동인권이벤트 동향분석(2004-2014)

(단위: 건)

년도	폭력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건강과 복지	경제적 착취	무력 분쟁	사법	성적 착취와 학대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취약한 상황 아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기타	총계
2004	7	30	21	7	16	14	22	4	18	10	135	284
2005	21	27	17	3	6	16	24	6	14	7	106	247
2006	36	36	34	8	15	22	30	17	40	12	153	403
2007	21	18	22	6	7	27	28	11	28	7	75	250
2008	10	24	20	3	3	23	25	6	23	5	59	201
2009	9	7	17	5	6	30	14	4	8	1	51	152
2010	11	15	14	7	4	8	14	1	15	1	46	136
2011	8	14	13	7	4	7	10	5	18	6	30	122
2012	11	9	14	4	2	13	17	2	8	10	29	119
2013	5	10	7	7	2	12	14	5	9	15	21	107
2014	0	2	1	0	0	1	0	0	0	2	4	10
총계	139	192	180	57	65	173	198	61	181	76	709	2,031



\* 출처: 국제아동인권네트워크(CRIN) 웹사이트, <http://www.crin.org/>

\* CRIN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도와 이슈별로 재구성한 것임.

【그림 II-2-3】 아동인권이벤트 동향분석(2004~2014)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아동 관련 이벤트는 2006년(403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07건, 2014년 3월 현재에는 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 이슈별로는 과거에는 교육 및 문화, 건강과 복지, 성적 착취와 학대, 취약아동 등이 주요 이슈였으나, 최근에는 성적 착취와 학대, 시민적 권리와 자유, 사법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교육 및 문화, 건강과 복지, 취약 아동 등의 이슈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적 착취와 학대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되고 있다.

### 3) 저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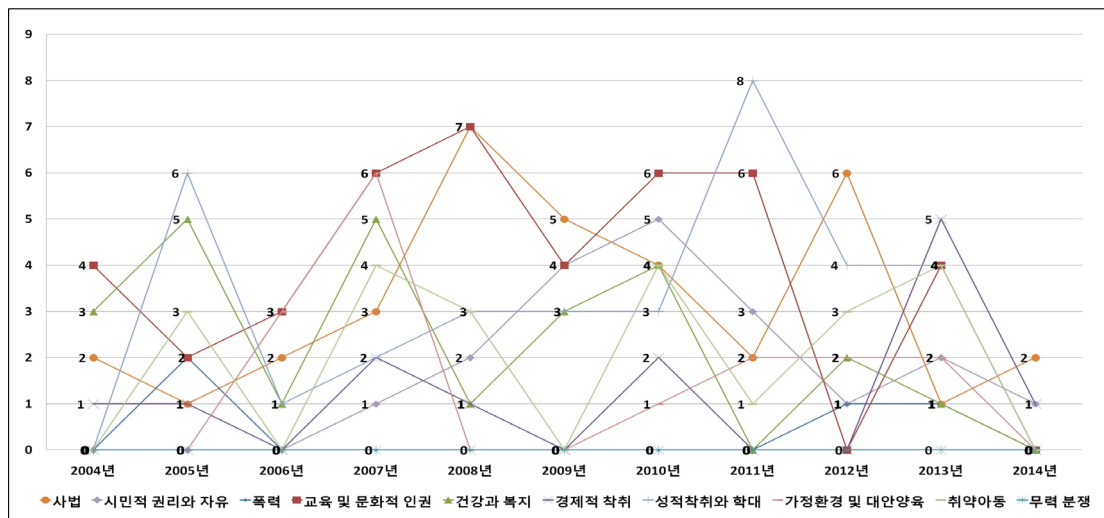
저널분석은 국내·외 대표적인 학술저널 D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술저널을 분석하였다. 국내 저널은 국내에서 1,200여개의 학회, 협회, 연구기관, 출판사 등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논문들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서지정보와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학술정보(KISS)와 누리미디어(DBpia)에 수록되어 있는 아동 인권 관련 주제의 논문을 검색하여 지난 10년간 아동 인권 관련 이슈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학술 DB 사이트에 검색 키워드인 아동인권과 청소년인권을 입력하여 2004년 1월부터 2014년 7월 14일 현재까지 수록되어 있는 302건의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표 II-2-2 국내 저널 아동인권 동향분석(2004-2014) (단위 : 편수(%))

년도	폭력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건강과 복지	경제적 착취	무력 분쟁	사법	성적 착취와 학대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취약 아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기타	총계
2004	0 (0.0)	4 (26.7)	3 (20.0)	1 (6.7)	0 (0.0)	2 (13.3)	0 (0.0)	0 (0.0)	0 (0.0)	0 (0.0)	5 (33.3)	15 (100.0)
2005	2 (7.7)	2 (7.7)	5 (19.2)	1 (3.8)	0 (0.0)	1 (3.8)	6 (23.1)	0 (0.0)	3 (11.5)	0 (0.0)	6 (23.1)	26 (100.0)
2006	0 (0.0)	3 (17.6)	1 (5.9)	0 (0.0)	0 (0.0)	2 (11.8)	1 (5.9)	3 (17.6)	0 (0.0)	0 (0.0)	7 (41.2)	17 (100.0)
2007	0 (0.0)	6 (14.6)	5 (12.2)	2 (4.9)	0 (0.0)	3 (7.3)	2 (4.9)	6 (14.6)	4 (9.8)	1 (2.4)	12 (29.3)	41 (100.0)

년도	폭력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건강과 복지	경제적 착취	무력 분쟁	사법	성적 착취와 학대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취약 아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기타	총계
2008	0 (0.0)	7 (19.4)	1 (2.8)	1 (2.8)	0 (0.0)	7 (19.4)	3 (8.3)	0 (0.0)	3 (8.3)	2 (5.6)	12 (33.3)	36 (100.0)
2009	0 (0.0)	4 (14.8)	3 (11.1)	0 (0.0)	0 (0.0)	5 (18.5)	3 (11.1)	0 (0.0)	0 (0.0)	4 (14.8)	8 (29.6)	27 (100.0)
2010	0 (0.0)	6 (16.2)	4 (10.8)	2 (5.4)	0 (0.0)	4 (10.8)	3 (8.1)	1 (2.7)	4 (10.8)	5 (13.5)	8 (21.6)	37 (100.0)
2011	0 (0.0)	6 (18.8)	0 (0.0)	0 (0.0)	0 (0.0)	2 (6.3)	8 (25.0)	2 (6.3)	1 (3.1)	3 (9.4)	10 (31.3)	32 (100.0)
2012	1 (3.6)	0 (0.0)	2 (7.1)	0 (0.0)	0 (0.0)	6 (21.4)	4 (14.3)	2 (7.1)	3 (10.7)	1 (3.6)	9 (32.1)	28 (100.0)
2013	1 (2.9)	4 (11.8)	1 (2.9)	5 (14.7)	0 (0.0)	1 (2.9)	4 (11.8)	2 (5.9)	4 (11.8)	2 (5.9)	10 (29.4)	34 (100.0)
2014	0 (0.0)	0 (0.0)	0 (0.0)	1 (11.1)	0 (0.0)	2 (22.2)	0 (0.0)	0 (0.0)	0 (0.0)	1 (11.1)	5 (55.5)	9 (100.0)
총계	4 (1.3)	42 (13.9)	25 (8.3)	13 (4.3)	0 (0.0)	35 (11.6)	34 (11.3)	16 (5.3)	22 (7.3)	19 (6.3)	92 (30.5)	302 (100.0)

\* 출처: DBpia 웹사이트. <http://www.dbpia.co.kr/>  
KISS 웹사이트. <http://search.koreanstudies.net/>



\* 출처: DBpia 웹사이트. <http://www.dbpia.co.kr/>  
KISS 웹사이트. <http://search.koreanstudies.net/>

【그림 II-2-4】 국내 저널 아동인권 동향분석(2004~2014)



검색에 사용된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한 논문은 이벤트 분석의 틀에 맞춰서 폭력,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건강과 복지, 경제적 착취, 무력분쟁, 사법, 성적 착취와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취약아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기타로 분류하였다. 폭력 관련 논문에는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에 관한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관련 논문에는 인권교육, 이주 아동 및 장애 아동의 교육권 등을 다루고 있다. 건강과 복지 관련 논문에는 학교 급식문제, 복지시설, 건강에 유해한 환경, 장애아동 등이 있고, 경제적 착취 관련 논문에는 아동 노예의 해외사례 분석,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법 관련 논문에는 각종 인권 관련 현행 법률의 문제, 인권관련 판례 분석 등이 있고, 성 착취와 학대 관련 논문에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체벌, 성폭력, 가정에서의 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포함되어 있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논문에는 방임 아동, 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보육정책의 문제점,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인권상황 등이 있고, 취약 아동 관련 논문에는 해외 빈곤아동의 인권 분석, 북한 이탈주민 아동의 인권, 빈곤 아동의 인권,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 등이 있으며,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논문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참여권, 자기결정권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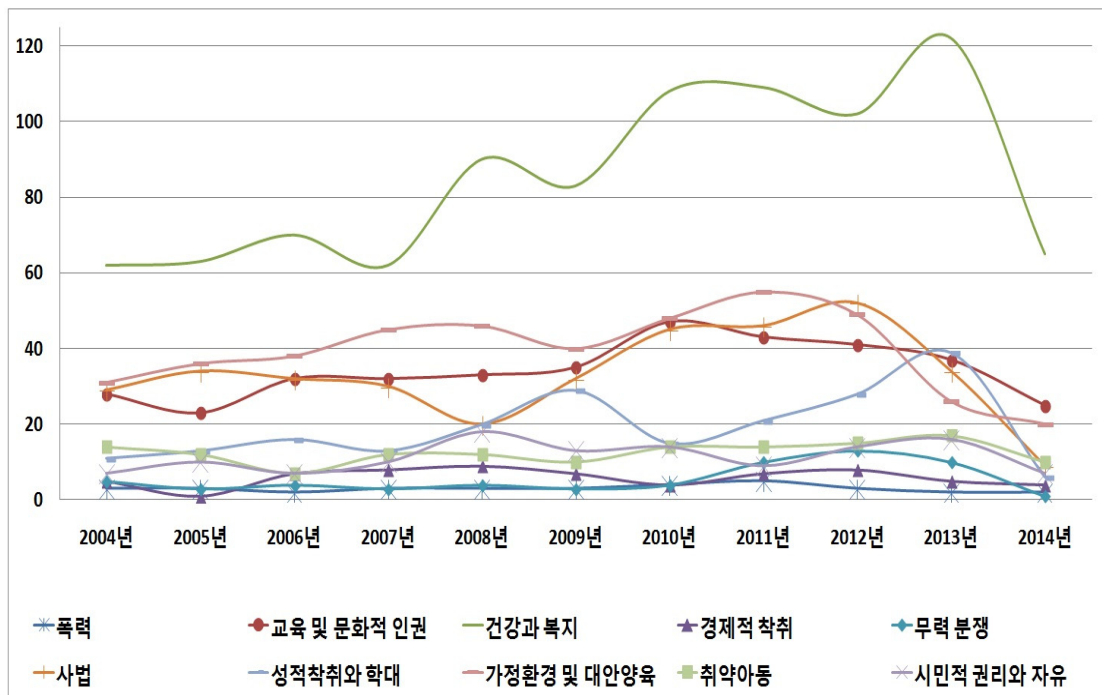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수록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논문은 302편이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분야는 교육 및 문화적 인권(13.9%)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법(11.6%), 성적착취와 학대(11.3%), 건강과 복지(8.3%), 취약아동(7.3%), 시민적 권리와 자유(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착취 관련 논문(14.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 및 문화적 인권(11.8%)과 성적착취와 학대(11.8%), 취약아동(11.8%),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5.9%)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5.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경제적 착취 관련 논문과 취약아동 관련 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국외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다학문 DB인 Academic Search Premier(ASP)와 사회학 및 사회복지관련 DB인 SocINDEX에 수록되어 있는 아동 인권 관련 주제의 논문을 검색하여 지난 10년간 아동 인권 관련 이슈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EBSCO HOST 사이트에 검색 키워드 child rights를 입력하여 2004년 1월부터 2014년 7월 8일 현재까지 수록되어 있는 4,101건의 학술 논문을 분석하였다.

표 II-2-3 해외 저널 동향 분석(2004-2014년)

년도	폭력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건강과 복지	경제적 착취	무력 분쟁	사법	성적 착취와 학대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취약 아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기타	총계
2004년	3 (1.0%)	28 (8.9%)	62 (19.7%)	5 (1.6%)	5 (1.6%)	2 (9.2%)	11 (3.5%)	31 (9.8%)	14 (4.4%)	7 (2.2%)	120 (38.1%)	315 (100.0%)
2005년	3 (1.0%)	23 (7.4%)	63 (20.3%)	1 (0.3%)	3 (1.0%)	34 (10.9%)	13 (4.2%)	36 (11.6%)	12 (3.9%)	10 (3.2%)	113 (36.3%)	311 (100.0%)
2006년	2 (0.6%)	32 (9.5%)	70 (20.7%)	7 (2.1%)	4 (1.2%)	32 (9.5%)	16 (4.7%)	38 (11.2%)	7 (2.1%)	7 (2.1%)	123 (36.4%)	338 (100.0%)
2007년	3 (0.9%)	32 (9.5%)	62 (18.3%)	8 (2.4%)	3 (0.9%)	30 (8.9%)	13 (3.8%)	45 (13.3%)	12 (3.6%)	10 (3.0%)	120 (35.5%)	338 (100.0%)
2008년	3 (0.8%)	33 (8.5%)	90 (23.3%)	9 (2.3%)	4 (1.0%)	20 (5.2%)	20 (5.2%)	46 (11.9%)	12 (3.1%)	18 (4.7%)	132 (34.1%)	387 (100.0%)
2009년	3 (0.8%)	35 (9.1%)	83 (21.7%)	7 (1.8%)	3 (0.8%)	32 (8.4%)	29 (7.6%)	40 (10.4%)	10 (2.6%)	13 (3.4%)	128 (33.4%)	383 (100.0%)
2010년	4 (0.9%)	47 (11.1%)	108 (25.4%)	4 (0.9%)	4 (0.9%)	45 (10.6%)	15 (3.5%)	48 (11.3%)	14 (3.3%)	14 (3.3%)	122 (28.7%)	425 (100.0%)
2011년	5 (1.1%)	43 (9.5%)	109 (24.0%)	7 (1.5%)	10 (2.2%)	46 (10.1%)	21 (4.6%)	55 (12.1%)	14 (3.1%)	9 (2.0%)	136 (29.9%)	455 (100.0%)
2012년	3 (0.6%)	41 (8.5%)	102 (21.2%)	8 (1.7%)	13 (2.7%)	52 (10.8%)	28 (5.8%)	49 (10.2%)	15 (3.1%)	14 (2.9%)	156 (32.4%)	481 (100.0%)
2013년	2 (0.5%)	37 (8.5%)	122 (27.9%)	5 (1.1%)	10 (2.3%)	34 (7.8%)	39 (8.9%)	26 (5.9%)	17 (3.9%)	16 (3.7%)	129 (29.5%)	437 (100.0%)
2014년	2 (0.9%)	25 (10.8%)	65 (28.1%)	4 (1.7%)	1 (0.4%)	9 (3.9%)	6 (2.6%)	20 (8.7%)	10 (4.3%)	7 (3.0%)	82 (35.5%)	231 (100.0%)
총계	33 (0.8%)	376 (9.2%)	936 (22.8%)	65 (1.6%)	60 (1.5%)	363 (8.9%)	211 (5.1%)	434 (10.6%)	137 (3.3%)	125 (3.0%)	1,361 (33.2%)	4,101 (100.0%)

\* 출처: EBSCO HOST 웹사이트, <http://www.ebscohost.com/>



\* 출처: EBSCO HOST, <http://www.ebscohost.com/>

【그림 II-2-5】 해외 저널 동향 분석(2004~2014년)

검색에 사용된 아동인권과 관련한 논문은 폭력,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건강과 복지, 경제적 착취, 무력분쟁, 사법, 성적 착취와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취약아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기타로 분류하였다. 폭력 관련 논문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성적 폭력에 관한 인권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관련 논문에는 교육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인권에 관한 교육, 교육의 평등, 성차별 및 문화적 차이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건강과 복지 관련 논문에는 음식 안전, 비만, 운동시간 보장, 음주흡연 및 약물중독, 장애아동, 공중보건 등이 있고, 경제적 착취 관련 논문에는 노동력 착취, 아동·청소년의 임금 및 건강 문제 등이 있으며, 무력분쟁 관련 논문에는 국가 간 또는 국내 무력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 아동·청소년 군인에 대한 논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법 관련 논문에는 각종 인권 관련 법률 제정과 현행 법률의 문제 등이 있고, 성 착취와 학대 관련 논문에는 학교 내 괴롭힘, 학교 및 가정에서의 체벌, 가정에서의 학대, 인신매매, 아동 포로노그라피 및 성적 착취 등 포함되어 있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논문에는 양육에 대한 아동의 자기결정권, 부모의 양육태도,

성소수자 부부의 입양, 이혼 및 별거중인 가정의 아동·청소년 문제, 위탁양육의 문제, 정신질환 가정의 자녀들의 인권 문제 등이 있다. 취약 아동 관련 논문은 빈곤국가의 아동·청소년, 거리에 나온 아동·청소년, 원주민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아동·청소년, 이주민 자녀, 재난 및 자연재해 국가의 아동·청소년 등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논문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택,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사결정의 자유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록된 아동 인권 관련 논문 4,101편 중에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분야는 건강과 복지(22.8%)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10.6%), 교육 및 문화적 인권(9.2%), 사법(8.9%), 성적 착취와 학대(5.1%), 취약 아동(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아동인권 관련 논문 중에서 건강과 복지 관련 논문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에 건강과 복지 관련 논문은 아동인권 관련 논문 315편 중 19.7%인 62편이었으나 꾸준히 확대되어 2013년에는 27.9%인 122편이었으며, 2014년에도 28.1%(65편)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강과 복지 관련 논문 다음으로 성적 착취와 학대 관련 논문(39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 및 문화적 인권(37편), 사법(34편), 가정 환경 및 대안양육(26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관련 논문과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관련 논문은 감소해 왔으나 성적 착취와 학대 관련 논문은 증가하고 있었다.

#### 4)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 의견 분석

아동·청소년의 국내·외 인권 이슈의 현재 상황과 향후 변화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를 국내 이슈와 국제 이슈로 나누어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국내 이슈와 국제 이슈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이슈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방임 및 학대(4.56)가 가장 큰 이슈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4.52), 아동·청소년 안전과 보호(4.41),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4.22), 빈곤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4.19),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4.19) 등의 순으로 이슈가 된다고 보고 있다.

표 II-2-4 현재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주요 이슈	평균	표준편차
아동·청소년 방임 및 학대	4.56	0.64
아동·청소년 (성)폭력	4.52	0.58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보호	4.41	0.64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4.22	0.70
빈곤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4.19	0.74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4.19	0.79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4.15	0.7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4.11	0.85
학생인권	4.04	0.77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의 전문적, 독립적 이행 방안	4.00	0.83
입시제도	3.85	1.06
아동·청소년 체벌	3.81	0.74
지방으로 이양된 요보호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문제	3.67	1.11

하지만 국제적인 아동·청소년 이슈의 경우에는 분쟁지역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4.67)를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하는데 동의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성)폭력으로부터의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4.48), 아동·청소년 노동 착취(4.37),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4.26),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권(4.19), 아동·청소년 학대 등의 순으로 주요 이슈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2-5 현재 국외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주요 이슈	평균	표준편차
분쟁지역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4.67	0.55
(성)폭력으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4.48	0.58
아동·청소년 노동 착취	4.37	0.74
난민 아동·청소년의 인권	4.26	0.66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권	4.19	0.68
아동·청소년 학대	4.15	0.60
제3선택 의정서 비준	3.96	0.90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3.89	0.85
기업의 아동인권 보호	3.67	0.78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 이슈의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4.48)이 가장 큰 이슈라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4.44),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4.31), 학생인권(4.23), 스마트폰 중독(4.23),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4.22), 가출청소년 보호(4.15) 등의 순으로 주요 이슈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6 향후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주요 이슈	평균	표준편차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4.48	0.70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4.44	0.75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4.31	0.74
학생인권	4.23	0.65
스마트폰 중독	4.23	0.74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	4.22	0.80
가출청소년보호	4.15	0.53
인권교육	4.07	0.78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4.04	0.76
부모의 이혼 시 보호받을 권리	4.00	0.63
부모 양육권, 교사 교육권, 아동·청소년 인권의 충돌	3.93	0.87

국제 이슈의 경우에는 분쟁지역 아동·청소년의 인권(4.67)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4.52), 아동·청소년 노동 착취(4.48), 빈곤 아동·청소년의 인권(4.37),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4.19),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4.19), 아동·청소년 생존·발달권(4.15),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4.07) 등으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표 II-2-7 향후 국외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이슈

주요 이슈	평균	표준편차
분쟁지역 아동·청소년 인권	4.67	0.48
아동·청소년 성적착취	4.52	0.58
아동·청소년 노동착취	4.48	0.64
빈곤 아동·청소년의 인권	4.37	0.74
아동·청소년 폭력피해	4.19	0.62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	4.19	0.74
아동·청소년 생존·발달권	4.15	0.53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4.07	0.87
성 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인권	3.93	0.78
인터넷 및 SNS 중독	3.93	0.96
아동·청소년 권리와 미디어	3.78	0.93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인권	3.63	0.74
국가 간 인권에 대한 인식차이	3.59	0.80

전문가에 의한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의 경우에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방임 및 학대, 성폭력, 안전 및 보호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지만, 향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정신건강,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등으로 이슈가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이슈의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지역 아동·청소년의 인권,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 노동 착취 등의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5)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종합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 이벤트 분석, 저널 분석, 전문가 의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트렌드 분석 결과는 구글은 아동학대가, 그리고 네이버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지만, 공통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벤트 분석 결과는 성적 착취와 학대 관련 이벤트가 가장 많았으며, 과거에는 교육

및 문화, 건강과 복지, 성적 착취와 학대, 취약아동 등이 주요 이슈였으나, 최근에는 성적 착취와 학대, 시민적 권리와 자유, 사법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성적 착취와 학대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되고 있다.

저널 분석에서는 국내 저널의 경우에 그동안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착취 관련 논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 및 문화적 인권, 성적착취와 학대, 취약아동,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저널의 경우에는 건강과 복지 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최근에는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관련 논문과 교육 및 문화적 인권 관련 논문은 감소한 반면, 성적 착취와 학대 관련 논문은 증가하고 있었다. 전문가에 의한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은 국내 아동·청소년 이슈의 경우에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방임 및 학대, 성폭력, 안전 및 보호 등이 주요 이슈였지만, 향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정신건강 등으로 이슈가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 이슈의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지역 아동·청소년의 인권,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 노동 착취 등의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상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가 다양하게 나타나, 한가지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슈는 아동·청소년 학대,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등이라 할 수 있다.

### 3. 주요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수준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법적 제도화<sup>12)</sup>

##### (1) 주요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구체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데 있어 해외 주요 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12) 이 부분은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도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물론 아동권리와 관련한 성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제도적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관련 내용이 법이나 제도에 얼마나 반영되었느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될 수 있다.

북아일랜드 퀸즈 대학(Queen's University)의 연구팀이 영국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수행한 유럽 12개 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이행과 제도화에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Lundy, Kilkelly, Byrne, & Kang, 2012), 성공적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아동인권 현실화에 주요 요인이 되며, 동 협약의 법과 정책에의 적용여부 및 그 정도를 모니터링으로써 각 국가의 아동인권과 실태를 위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원칙의 법적 제도화, 연방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동 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진, 아동인권모니터링 기구, 아동을 위한 국가계획, 아동관련 종합적인 데이터수집, 아동참여 실태,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정부사업 예산, 취약계층 아동, 아동권리문화 확산 등을 기준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뉴질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스페인,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12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과 적극적인 실천 노력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내용분석 기준으로 사법권 전반에 채택된 법안(legislative measures)의 유형과 특징을 확인하고, 입법을 가능하게 한 요인과 어렵게 한 것들, 그리고 아동권리 이행과 관련한 영향들을 확인하였다(Lundy, et al., 2012).

이 중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 원칙의 국내 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비교대상 국가 대부분에서 점차적으로 국내법에 포함시키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정부와 사회에서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undy, et al., 2012). 특히 유엔권리협약 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경우에 대부분 아동보호, 대안양육과 가족법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아일랜드에서는 청소년사법제도, 노르웨이에서는 이민 관련법 영역에 나타나 있다(Lundy, et al., 2012). 런디(Lundy)교수의 아동인권 연구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대체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서명·비준하게 되지만, 실제 법과 정책, 실천부분에서는 교육, 보건, 사회적 돌봄과 같은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되어, 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동 협약 이행의 중요도가 달라지기도 하며, 또한 동 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법의 차이로 아동인권을 위한 책무성 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II-3-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이행 분석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이행 분석틀(Analytical Frame)	
1. 국가적 맥락	- 각 국가의 법률제도는 어떠한가?
2. 법률개정(legal reform)은 어떤 것이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개정의 성격은 무엇인가? (시정할 이슈를 포함해서)</li> <li>- 법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위한 맥락/핵심 동인은 무엇이었나?</li> <li>- (아동권리)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도입되었나? (훈련, 인식증진, 이행집단, 자원동원 등)</li> <li>- 어떤 평가 장치를 구축하였는가? (모니터링 집단, 연구, 검토, 지표개발 등)</li> <li>- 법 개정 과정에서 아동과 이해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li> </ul>
3.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과 정책에서 추적 가능한 변화가 있었는가?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관련 사건)</li> <li>- 이에 기인하는 (아동인권상황)개선을 보여주는 아동데이터가 있는가?</li> <li>-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수용성이 증가된 증거가 있는가?</li> <li>- 어떤 장애나 방해물이 있는가?</li> <li>-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li> <li>- 이외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li> <li>- 아동과 다른 이해관계자가 그 이행과정에 관여하였는가?</li> </ul>

\* 출처: Lundy, L., Kilkelly, U., Byrne, B., & Kang, J.(2012).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a study of legal implementation in 12 countries. UK unicef, p. 113.

각 국가별로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나 옴부즈퍼슨(Ombudsperson)제도가 있는데, 영국의 4개(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동위원회는 그 자원의 활용과 권한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투자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의 옴부즈퍼슨식 접근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있어 아동이 직접적으로 불만이나 이의제기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Lundy, Kilkelly & Byrne, 2013). 아동분야에 대한 지출 예산의 경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아동복지법안 이행과 관련한 소요비용과 예산 분석에 관련 연구자들과 정부가 함께 협업하고 있다(Lundy, et al., 2012).

아동의 참여(Children's participation)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벨기에의 경우 국내법과 정책에 그 원칙이 이행되고 있으며, 아동의 참여는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보호, 대안양육, 그리고 가족법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Lundy, et al., 2013).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정책과 실천에서,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아동의 초기 발달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업하며, 아동의 관점에 명백히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Ireland, 2005).

아동영향평가(Child impact assessment)와 관련하여 입법검토절차에 소개되는 좋은 사례로서, 스웨덴의 경우 국가적인 아동권리전략의 일부로써 수년 동안 아동영향평가제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벨기에의 플레미시(Flemish) 지역은 25세 미만의 청년들의 이익(interest)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초안에 대한 평가절차(JOKER)를 도입하였다(Lundy, et al., 2013). 대부분의 취약집단 아동(가족과 분리된 아동, 망명요청아동, 원주민 아동 등)의 경우 또래들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일부국가에서 가족과 분리된 아동과 망명요청 아동의 경우 다른 아동과 동일한 방식의 권리주체자(rights holders)로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국내평등보호(domestic equality protections)(법)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Lundy, et al., 2012).

런디교수 연구팀에 따르면(2012), 권리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노르웨이, 벨기에, 독일은 권리를 존중하는 일반적인 문화를, 그리고 스페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갈등과 재건 측면에서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아동권리 문화 구축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동인으로, 강한 비정부조직(NGO)과 자원봉사 영역, 정부와 관공서에서의 핵심아동권리 옹호자와 지원자,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연간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협약준수를 위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유엔에서의 심사, 그리고 개선 및 시정사항에 대한 권고와 이행 등)가 제시되었다(Lundy, et al., 2012).

##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제도화 노력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 제도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그 사례는 다양한데, 한편으로는 헌법과 동일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 아래에 속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법률과 동일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UNICEF, 2007). 유니세프의 이노센티 연구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확인된 52개국의 3분의 2정도에서 국내법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다른 3분의 1은 헌법질서(constitutional order)에 결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7). 모든 사람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같은 수준으로 아동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동에게 적용가능한 권리가 진정으로 실현되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동 협약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검증되어야 한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7).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를 포함한 몇몇의 유럽 국가는 현재 아동권리를 위한 헌법적 보호를 이룰 수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비교적 포괄적인 헌법조문을 가진 국가들의 경우 효과적인 법집행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Tobin, 2005).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이 법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는 실천현장에서의 아동인권 실현과정의 효과성에 열쇠가 된다(Kilkelly & O'Mahony, 2007).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을 때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법 하에서 의무를 가질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동 협약의 이행은 정부당국이 사법권 내의 모든 아동들을 위해 동 협약의 권리가 확실히 실현되도록 행동을 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무는 제4조항에서 시작되는데, 정부가 현재 동 협약에 인정된 권리이행을 위해 적절한 사법적, 행정적, 그리고 다른 조치들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으로 조치해야 한다(Lundy, et al., 20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또한 이양된 권한(지방정부)의 경우도 사법권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분권이나 권한이양으로 지역차이에 따른 아동의 권리향유에 차별이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각 국가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정부당국이 동 협약의 이행 의무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비정부기구와 다른 이해관계조직 및 단체의 반박·대체 보고서를 통해 추가정보를 얻게 된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

유엔아동권리협약원칙이 국내법이나 정책에 통합되었는지 여부는 아동권리가 그 사회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안이나 헌법수준에서의 국내법에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Lundy, et al., 2012). 이러한 과정은 정부와 시민사회에서의 아동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게 되며, 각 국가마다 아동을 권리주체자로 더 잘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된다(Lundy, et al., 201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 체제의 통합은 아동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 협약 원칙의 국내법과 정책에의 이행을 위한 연쇄효과로 생각될 수 있다(Lundy, et al., 2012).

##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제도화 사례: 노르웨이, 영국, 일본<sup>13)</sup>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수준 검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로서<sup>14)</sup>,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에 통합되어 있는 노르웨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5)</sup> 또한 국내법에 완전히 결합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영국사례를 포함하였으며, 우리의 인근국가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지자체 수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아동인권상황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으로의 완전 전환 : 노르웨이 사례

노르웨이의 경우 아동인권이 직접적으로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인권법(Human Rights Act)을 통해 헌법수준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Lundy, et al., 2012). 또한 국내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충돌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우수사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003년에 국내법에 완전히 통합되었으며, 관련 기구로써 1981년 3월 6일의 Act 5항 아동을 위한 옴브즈만과 아동, 평등과 사회통합부처(Minister for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가 있다(Lundy, et al., 2012).

### 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으로의 통합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헌법제로의 통합

13) 노르웨이 사례는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영국사례는 박선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일본사례는 김형욱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 교육청)이 집필하였다.

14)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가 법률에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아직 일부 조항(21조(a)항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특히 참작하여 입양을 주무당국의 소관으로 확실히 하는 것, 40조 2항(b)의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아동에 대한 결정에서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사법기관에 의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등)을 유보하고 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유보를 철회하도록 권고하였다(CRIN, 2014a).

15) 노르웨이는 관련문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 통합에 스페인, 벨기에 등과 함께 앞선 국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CRIN, 2014b, Lundy, et al., 2012), 실제 유럽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 Dr. Lundy, 그리고 민간 기구로서 영국과 유럽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아동청소년인권정보의 허브(hub)역할을 하고 있는 CRIN(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의 Director, Yates와의 면접과정에서도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 인권, 그리고 동 협약의 이행수준에 있어서 유럽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9년에 노르웨이의 국회 상임이사회는(Presidium of the Storting) 인권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제안하기 위해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Lundy, et al., 2013). 이 인권위원회는 2011년 “헌법에서의 인권의 보호는 노르웨이 국가에 의해 보장된 국제적인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인권을 다루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헌법개정안 제안서에 가족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단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과 교육에 대한 조항을 만들었다(Lundy, et al., 2012). 또한 아동의 의견이 경청되어야 할 권리, 근본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가질 권리, 아동 개인의 완전성(personal integrity)의 보호를 제안하였다(Lundy, et al., 2012).<sup>16)</sup>

#### 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령에의 통합

1999년 5월 21일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시민과 정치적 권리 협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유럽인권협약(ECHR,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이 노르웨이 법에 통합되었다(Lundy, et al., 2012). 초기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었으나 2000년의 NGO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3년에 포함되었으며, 국가의 다른 법과 충돌 시 우선 적용하게 되었다(CRIN, 2014a).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국내법의 영향력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맥락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주요 수단인 것을 의미한다. NGO에게는 정부·의회와 토론의 틀을 만들고, 법률가에게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설득력 있는 소송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Lundy, Kilkelly & Byrne, 2013).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률에의 결합은 노르웨이에서의 아동권리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으며, 또 노르웨이 법의 발전과 적용에 연쇄반응 효과를 갖게 되었다(Lundy, et al., 2012).

16)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동은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우려가 되는 질문들에 대해 들어줘야 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연령과 발달에 맞추어 그들의 견해를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위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근본적인 고려가 되어야 한다. 아동은 개인의 진실성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정부당국은 아동에게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안정성 제공을 확실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우선적으로 아동의 가정 내에서)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인권위원회, 2011, Lundy, et al., 2012에서 재인용).

### 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법률로의 전환

노르웨이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동 협약을 부모의 책임, 아버지역할·부성(paternalty), 아동에 대한 접근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수정된 ‘아동법 2005’(Children’s Act 2005)를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있다(Lundy, et al., 2012).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제12조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을 유아교육, 부모의 책임과 이민을 포함한 일련의 관련 영역내의 법제에 통합시켰다(CRIN, 2014a). 예를 들면,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제3조에서는 유치원에서의 매일의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기적으로 유치원의 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아동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한 아동들의 견해를 갖도록 하였다(Lundy, et al., 2012). 노르웨이의 경우 특히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아동의 견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7세 아동은 가족상황에 대한 결정전에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갖으며, 12세 아동의 의견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중요하게 고려된다(Lundy, et al., 2013).

‘아동법 2005’는 제33조항이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을 인정하는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원칙을 통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부모나 이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12세 이상 아동은 그 이후로도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에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Lundy, et al., 2012). 이외에도 아동은 공공행정법, 민사판례법, 아동복지법, 입양법에서의 수정안에서 아동 스스로에게 우려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Norway, 2009a). 또한 계획 및 건축법(2008년 수정) 수정 시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모든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는 학생의회 및 학교환경위원회와 관련된 교육법(Education Act)에 근거하고 있다(Norway, 2009a).

2007년에 노르웨이 정부는 ‘Søvig Report’에서 노르웨이의 법률이 관련된 분야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 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더 가까이 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였다(Lundy, et al., 2012).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 아동보호, 복지, 그리고 부모의 책임·격리 영역’이 각 분야별 법에 통합되어져서 이러한 영역의 법적절차에 더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영역에서 아동의 견해를 청취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Lundy, et al., 201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조와 제12조는 이민법과 같은 민감한 영역을 포함하여 노르웨이의 각 영역별 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2003년 동 협약에 통합되는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CRIN, 2014a).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 원칙들은 노르웨이 법에 잘 나타나 있지만 동 협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Lundy, et al., 2012).

## ②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비법률적 수단

노르웨이의 가장 최근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분기별 장관회의, 청소년대표와 아동·평등·사회통합장관 간의 대담, 그리고 아동권리에 관한 정보와 역량개발활동을 포함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의 조화와 모니터링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Norway, 2009). 그러나 노르웨이의 전문가들은 아동권리의 집행과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아동과 관련된 고충처리기제(complaints mechanisms)의 부재를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CRIN, 2014a). 이들은 아동인권의 위반사항을 항의하기 위해 아동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 옴부즈만은 아동으로부터 불만사항을 직접 접수할 수 없으며, 비록 지역수준에서 이용 가능한 처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쉽게 접근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Lundy, et al., 20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아동으로부터 직접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고충을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노르웨이의 전문가들은 법 집행에 있어서 아동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판례의 질적이고 양적인 면에서 법원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Lundy, et al., 201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노르웨이 정부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강화시키도록 요청하였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아동관련 전문직의 대학교과과정을 구성하고, 모든 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비록 아동권리에 전문화된 변호사와 판사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좋은 진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Lundy, et al., 2012). 초·중등학교의 종교와 윤리교육, 그리고 사회과학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되었으며, 또 전문가집단을 위한 동 협약에 대한 훈련은 유치원교사, 일반교사,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를 위한 기본적인 틀(framework)을 통하여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다(Lundy, et al.,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고, 정부의 정책문건, 보고서, 그리고 사법판결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을 지속적으로 참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Lundy, et al., 2012). 노르웨이의 13세~18세 아동·청소년 중 총 1,274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에서 노르웨이의 약 56%의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봤다고 응답하였고, 지역에 따라 43%에서 67%까지 차이를 보였다(Sandbaek & Einarsson, 2008). 조사대상 중 약 84%의 아동들은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였고,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71%의 아동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50%에서 88.2%의 차이가 있음)(Sandbaek & Einarsson, 2008).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노르웨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상당히 좋은 법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시 아동의 거주선택과 관련된 고등법원결정에 대한 한 노르웨이 연구(Skjørten & Barlinghaug 2007)는 12세 및 그 이상 연령의 아동의 우려하는 바가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7세~11세 아동의 절반은 재판결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였다(Lundy, et al.,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노르웨이의 국내 법률로 통합되면서 아동의 양육권과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의 의견이 더 자주 청취되었음을 보여준다(Lundy, et al., 2012).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노르웨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동들의 중요한 권리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사법제도에 있는 아동의 권리(성인과 구분되어 구금되지 않는 것), 망명과정에 있는 아동(분리된 아동과 부모와는 달리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Lundy, et al., 2012).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 및 장애로 인한 차별에 주목하고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법과 행정 및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김연우, 2011).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따라 이행수준이 다르지 않도록 지역별, 그리고 도시, 농촌 간 이행 수준 차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국가전반에서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0).

결과적으로, 노르웨이의 사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하면서 법제화 및 개별법 수정안을 통해 국내법에 통합, 전환시키는 등 선제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아동권리를 헌법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실천현장, 특히 아동보호와 가족분야에서 아동에 대한 개입에

명확한 영향을 주고 있다(Lundy, et al., 2012). 또한 지방자치수준의 의사결정에서의 아동의 관여,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항의 아동의 이민관련 의사결정과정에도 큰 진전을 보였으며, 법률가를 위한 훈련을 통해 소송과정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활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Lundy, et al., 2012). 하지만, 청소년사법제도와 망명절차에서 등 사회의 소외된 곳의 아동들에 대한 개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어느 정도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접근이(child-rights approach) 국내법과 실천현장에 통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Lundy, et al., 2012).

### ③ 시사점 및 제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과 관련한 법적 제도화에 대한 노르웨이 사례는 우리사회에서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동 협약의 통합,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이를 통한 아동의 권리보호 및 실현을 위한 의무의행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제고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연령별 의사결정 참여와 이들의 의견 청취 사례와 같이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권리실현을 위한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관련 기관의 의무이행자들이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아동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노르웨이의 국내 법률에 통합되면서 아동의 양육권과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의 의견이 더 자주 수렴되었다(Lundy, et al., 2012). 이를 위해서 아동 관련 재판 및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의사표현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환경을 구비하고,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가수준에서 비준되지만, 실제 실행은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노르웨이 역시 지방정부는 사법권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지가 있어야 하며, 지방분권이나 지역차이에 따른 아동의 권리실현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동의 권리실현과 복지와 관련하여 지역별, 도시·농촌 간 이행수준에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국가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요청된다.

셋째, 아동의 권리실현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고충처리기제(complaints mechanisms)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도 아동권리의 집행과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수단이 부족하고, 특히 아동과 관련된 고충처리기제의 부재를 우려하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옴부즈만을 통해 아동으로부터 직접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충을 처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에 아동청소년 인권팀이 구성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인권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고충과 불만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아동의 인권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을 권리주체자로서 개인청원권을 강화하는 제3선택의정서 기준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청소년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법률가를 위한 아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및 아동 인권에 기반한 접근과 관련한 훈련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활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교사, 상담가, 의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관련 법률가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로서의 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특히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직의 대학교과과정이나 커리큘럼에의 인권교육의 포함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노르웨이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률 통합에서 특히 취약집단 아동(가족과 분리된 아동, 망명요청아동, 원주민 아동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매우 강조되었다. 우리사회 역시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북한이탈 가정, 그리고 난민 등 무국적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내용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 통합을 위한 노력 : 영국 사례

### ①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도화 노력

#### 가.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영국의 민간 아동인권기구들의 연합체 성격인 아동인권연합(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이하 CRAE)은 최근 영국 내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보고하고 있다(CRAE, 2013). 아동인권연합(CRAE)은 2003년부터 영국의 잉글랜드(England)지역의 아동 인권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는데, 특히 2013년에 발간된 최근 보고서는 영국

내 인권현황에 대GO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기구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어 영국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권리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두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영국 내에서 아동의 구금 시 행해지는 신체적 제재, 비교적 낮은 형사 처분 책임 연령, 최근 체벌의 합법성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 되는 것들을 지적하며 아동의 보편적인 인권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권고하였다(CRAE, 2013).

2013년 영국은 국제연합인권이사회(UN's Human Rights Council)에 가입하기 위하여 영국이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인권 시스템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인권 수호를 위한 열정적이고 헌신되며, 효과적인 인권 옹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CRAE, 2013).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 아동인권연합(CRAE)과 같은 민간기구의 영국 인권현황에 대한 비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부의 인권증진 방안과 현실은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비판과 인권 옹호에 대한 국내적 관심으로 2014년부터는 아동의 권리를 주요 정책 의제로 배치하였고,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영국 내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아동인권연합(CRAE)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CRAE, 201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진전 상황 보고는 향후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과 정책 수립의 방향에 지침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아동인권연합(CRAE)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권(건강, 음식, 놀이)에 대한 심각한 침해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위헌 입법 심사(judicial review)에 대한 법적 지원 예산마저 삭감되어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원에 많은 제한이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심각한 아동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CRAE, 2013).

인권침해의 소지와 함께 같은 영국에서조차 아동과 청소년이 삶을 즐길 수 있는 권리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매우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원조 격으로 알려진 영국에서조차 영유아 사망률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HM Government, 2013). 예를 들면 아버지의 직업군에 따라 영유아 사망률이 두 배나 차이가 났는데,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의 영유아 사망률이 두 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생존권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인권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CRAE, 2013).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권 침해 사례도 심각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규제에 관한 처벌 기준이 10살로 하향 조정되었고, 14살부터는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잉글랜드 기준). 또 이들이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있거나, 혹은 가족 중에 그런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다(Stationery Office, 2008) 이는 주거권의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한해 동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 발사하는 테이저(Taser) 건이 무려 323회나 발사되었는데 이는 2009년에 135회 발사된 것에 비해 거의 3배나 많은 수치로, 테이저 건의 남용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유형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CRAE, 2013).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제침체는 여러 면에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에게 다양한 인권침해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연이은 복지수당의 감소와 세금인상, 임금 동결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영국의 가정들은 이전보다 자녀양육과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다(CRAE, 2013).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대와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이들의 열악한 상황은 보고되어도 쉽게 간과되어 사법체제 안에서도 온전하게 보호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경제침체와 다양한 이유로 보호시설의 위탁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장기적인 양육 프로그램과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19세의 34%는 흔히 말하는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ed, and Training; NEET)으로, 교육이나 고용 및 어떤 종류의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위기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다. 보호시설에 위탁된 18세의 86%는 형제자매와 같이 지내고 싶어 하지만 이중 63% 정도만이 본인의 형제자매와 같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각 다른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있어, 가족 간의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CRAE, 2013).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영국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위상과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거리를 주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부모의 범죄여부도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양쪽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명이 교도소에 있을 경우, 일반적인 아동청소년보다

3배 가량 정신적 문제를 가질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4%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와 관련하여 정서적, 정신적 지원을 원한다고 밝혔다(CRAE, 2013).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범죄경력 여부도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인권, 즉 생존권, 건강권, 보호권, 참여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해 청소년 개인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연방별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 비교

다음의 <표 II-3-2>은 영국의 4개 연방별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이는 각 연방의 아동 인권 이사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연방별로 작성된 것이어서, 각 연방의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개별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4개의 연방이 한 개의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는 다르게 각 연방의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각 연방의 교육제도와 현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인권과 관련한 정책, 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경우 독립된 의회와 화폐를 가지고 있어 다른 연방과는 더 큰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과 독자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에도 반영된다(Stationery Office, 2008).

표 II-3-2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 비교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UNCRC 입법화	x	o	x	△
아동청소년 현황	-0세~19세 아동이 전체 인구의 20% 차지 (1240만 명) -이중 5분의 1은 다문화 배경을 가짐.	-18세 미만의 아동인구는 294만 명으로,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50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함. -2007년까지 웨스트민스터(잉글랜드)에 의해 북아일랜드의 사법체계가 운영되어 왔음. -전체 인구의 60%가 평균임금 이하의 수입을 가짐.	-18세 미만의 아동인구가 백만을 조금 넘는 수준 -독립된 의회와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로마법을 기초로 함.
장점	-「Every Child Matters」와	-UNCRC가 웨일즈의	-현재 UNCRC가 입법	-다른 연방에 비해 국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p>「Children's Plan」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p> <p>-아동청소년대상의 만족도 조사에서, 행복도, 안전, 성취도, 참여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p>	<p>회에 의해 채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짐.</p> <p>-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으며 학교 상담 시스템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음.</p> <p>-7세, 11세, 14세 대상의 전국 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음.</p>	<p>화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p>	<p>가적 정체성이 높음.</p> <p>-잉글랜드와는 달리 16세 미만의 아동의 형사 처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p> <p>-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불평등 정도가 여러 연방 중에 가장 낮음.</p> <p>-UNCRC가 입법화되진 않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UNCRC의 내용과 정신을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음.</p>
단점	<p>-UNCRC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p> <p>-유럽 전체와 비교할 때, 아동청소년의 형사 처분 연령이 낮아, 수감 중인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높음.</p> <p>-이민자, 난민 청소년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와 지원 부족</p> <p>-29%의 아동이 빈곤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됨.</p> <p>-지난 30년 동안 아동의 정신건강지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음.</p> <p>-유럽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의 비만, 음주, 성비행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p>	<p>-아동·청소년정책의 수립에 비해 정책의 실시율이 낮음.</p> <p>-아동 빈곤율이 다른 연방에 비해 높음.</p> <p>-UNCRC가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에 의하면 8%의 아동·청소년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p> <p>-장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p>	<p>-2020년까지 빈곤 퇴치 운동을 계획할 정도로 아동·청소년의 빈곤 문제가 여러 연방 중 가장 심각함</p> <p>-다른 연방에 비해 비교적 늦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인종차별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p>	<p>-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범죄율은 낮으나 16세 이후 범죄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p> <p>-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p> <p>-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p> <p>-영유아 사망률이 서유럽 전체에서 최고로 높음.</p> <p>-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여러 연방 중에서 가장 좋지 않다고 보고됨.</p>

\* 출처: 11Million, NICCY, SCCYP, Children's Commissioner for Wales(2008), UK Children's Commissioners' Report to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p. 5~8에서 집필자가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 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지위

영국의 사법체계에서는 비준된 국제법이 자동으로 국내법에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국제 법으로 비준한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영국에서 인권법(Human Rights Acts)을 중심으로 조금씩 그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영국 내 관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영국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2010년에는 심지어 영국 교육부장관은 정부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Save the Children UK, 2011).

현재 영국 내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웨일즈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국내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8년에 영국 내 아동인권관련 단체들이 연합체(Rights of the Child UK, 이하 ROCK)를 구성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옹호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Why incorporate? Making rights a reality for every child」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촉구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Save the Children UK,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영국 내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의 판결에서 주요 판단기준으로는 활용되고 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대법원에서의 최종판결 시 지침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아동 체벌 금지, 아동의 계산기 사용 허용, 영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둔 이민자 여성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사례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판결기준이 되고 있다(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9).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이나 아동을 대리하는 누군가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 규칙(Civil Procedure Rules)에 의해 아동과 대리인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는 않는다(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9). 결론적으로는 아동이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대리인이 지방정부의 옴부즈맨을 통하여 교육, 사회복지, 주거 등의 이슈를 포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해서 옴부즈맨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적 체계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United Kingdom)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유럽인권헌장(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이 영국 법에 적용된다. 인권침해상황에서 아동·청소년과 대리인은 우선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민사소송규칙을 따르게 된다(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9).



## 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은 동 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아동과 성인에게 알려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한 조치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전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Stationery Office, 2008). 이런 관점에서 영국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9).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직까지 웨일즈를 제외하고 영국 국내법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노력이나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영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상당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2년 「범죄자의 법률지원, 구형, 처벌에 관한 법률」(The 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LASPO Act)의 제정을 통하여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지만, 2013년 영국 정부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현실적으로는 범법행위를 저지FMS 청소년이 법률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영국 내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즉 지방 정부의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도 역시 웨일즈를 제외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은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였지만 2013년 부서 내 조직 개편 시에 아동인권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차원이 아닌 부서(Children's Rights and Safeguarding) 차원으로 격하시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월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특별한 노력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영국에서의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중앙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비준된 내용의 이행에 책임이 있다. 2009년 6월에 영국 내 4개의 연방정부(England, Wales Northern Ireland, Scotland)의 아동 인권 담당 부서의 장관이 모여 이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고, 이후에도 관련 공무원들과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와 효과적인 이행방법에 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실행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예산 운용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행정적인 지원이나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당국은 2020년까지 아동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실행계획(Government to hit its child poverty target by 2020)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계획서가 아동의 생존권이나 보호권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직접적인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빈곤 타파와 불평등의 감소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간접적으로 영국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 및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과 평가를 위한 법이나 정책, 예산분배에 대한 계획, 평가 등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변화내용 : 잉글랜드 사례

가. 아동가족법안(Children and Family Bill)

「아동가족법안」은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을 개정하며 입법 발의된 법안으로 아직까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일단 의회를 통과하면 아동 인권위원을 의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영국 내, 잉글랜드 연방에서 인권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법안의 제안과 정책 마련을 포함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함께 이를 위한 정책과 법안의 발의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 교육부의 역할 중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권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인권 교육이 있으며, 이는 영국 내 모든 중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DfES, 2013). 다만 시민교육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의무교육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강화와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또 시민교육의 실시뿐만 아니라 각 급 학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정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학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

2003년에 노동당 정부에 의해 소개된 「Every Child Matters」는 이미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Every Child Matters」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이전 보수당 정부와 구별되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대한 철학적 근거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인권의 이념이다. 별도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법이 영국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Every Child Matters」같은 아동·청소년대상의 복지지원 종합대책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DfES, 2003). 가령, 5가지 정책 목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축약한 것이며, 5가지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으로 해석될 수 있다.

- stay safe : 안전에 관한 권리 및 보호
- be healthy : 건강지원 및 생존권 보호
- enjoy and achieve : 학습 및 발달권 보호
- enjoy economic well-being : 경제적 웰빙(well-being)에 대한 보호
-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 참여권 확대와 보장

### ③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 웨일즈 사례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4개의 영연방 중에서 웨일즈가 가장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도화와 입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웨일즈가 아동·청소년 인권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 조직과 시민단체와의 강한 유대관계와 협력체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독립하여 웨일즈가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할 때부터 웨일즈의 시민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고, 웨일즈 의회가 이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하면서 웨일즈 의회와 시민단체의 협력관계는 시작되었다(Welsh Assembly Government, 2009).

2002년에 처음으로 웨일즈 정부에 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과 청소년정책을 구성하는 기본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웨일즈 정부가 입안하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는 같은 해 「Right to Action」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여러 조항들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등, 영연방 국가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Welsh Assembly Government, 2009).

다음의 표는 「Right to Action」정책의 목표와, 세부 목표별로 해당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나타내고 있다(Children’s Rights in Wales. 2014).

표 II-3-3 「Right to Action」 정책 목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책목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을 최우선으로	제3조 : 아동을 최우선으로 제29조 : 교육의 목적 제36조 :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	제23조 : 장애아 보호 제28조 : 교육 제29조 : 교육의 목적 제32조 : 아동 노동 금지
학대와, 착취,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제6조 : 생존과 발달 제18-20조 : 부모의 책임,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 제24조 : 영양과 보건 제26-29조 : 사회보장제도, 적절한 생활수준의 제공,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목적 이해 제32-35조 : 아동 노동 보호,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성 착취로부터의 보호, 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의 보호 제37조 : 아동 범죄자 보호 제40조 : 공정한 재판과 대우
놀이, 여가, 스포츠, 문화 활동에의 기회 제공	제15조 : 집회결사의 자유 제20조 :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보호 제29조 : 교육의 기회 제공(교육의 목적) 제31조 : 여가와 놀이에 대한 권리
아동의 의견 존중과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보장	제2조 : 아동 차별 금지 제7조 :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제8조 : 아동의 신분을 회복할 권리

정책목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17조 : 아동의 의견 존중, 표현의 자유 허용,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사생활 보호, 유용한 정보접근권 보장 제20조 :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아동 보호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웰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가정과 지역사회 제공	제19조 :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20조 :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아동 보호 제25조 : 시설아동 실태 조사 제27조 :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제32-35조 : 아동의 노동착취 금지, 해로운 약물로부터의 보호, 성착취로부터의 보호, 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의 보호 제37조 : 아동 범죄자 보호 제40조 : 공정한 재판과 대우
빈곤으로 인한 소외 예방	제6조 :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 제26조 : 사회보장제도 제공 제27조 :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제28조 : 교육권 보장

\* 출처: Children's Rights in Wales, <http://www.childrensrightswales.org.uk/policy-law-reform.aspx>의 내용을 집필자가 표로 요약·구성함.

위의 표에서 제시된 7가지 정책 목표는 다음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기본 내용이자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Children's Rights in Wales, 2014).

-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Maternity Services (NSF): 아동청소년, 임산부를 위한 국가 서비스 정책
- The All Wales Youth Offending Strategy : 청소년 사법제도 및 청소년교정 정책
- Sexual health and well-being strategy : 건강한 성과 웰빙 정책
- A Fair Future : 빈곤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

이상의 정책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계획된 정책들로, 웨일즈 정부에 의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기도 한다. 또, 11세에서 25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지원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도 위의 7가지 중요 정책 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 나. 아동권리를 위한 국가 실행계획(Getting it rights)의 수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각종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핵심의제에 반영한 것 외에 웨일즈 정부는 2009년에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부가 어떻게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계획서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대비하여 5년을 주기로 작성되며, 2009년에 수립되어 2014년의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 실행계획의 가장 중요한 점은 웨일즈 정부가 선택한 다음의 16가지의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16가지 항목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4가지의 권리들과 관련하여 웨일즈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의 권리들을 중심으로 선택되었다(Welsh Assembly Government, 2009: 4).

-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 타파
-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의 현실화
-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개
-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강화
-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
-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웰빙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보장
- 장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서비스 개선과 지원 확대 및 차별 철폐
- 아동과 청소년의 체벌 금지 강화
- 인종차별로 인한 아동·청소년 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
- 난민과 망명자의 신분에서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아동과 청소년의 불평등, 차별 철폐
-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 웨일즈 정부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예산지원 확대
- 웨일즈 청소년 사법 체계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강화

#### 다. 웨일즈 정부 운영에 관한 법(Government of Wales Act 2006) 제정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의 토대 구축

2006년에 웨일즈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이 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직접적으로 국내법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앞서 소개한 정책들의 수립과 보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이 법으로 인해 2011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이 제정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Wales) 제정  
이 법안은 2011년에 제정된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영국 내 최초의 법이다. 이 법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의무사항과, 아동권리계획(Children's Rights Scheme) 소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소개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용, 법적 효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사항을 이행하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Stationery Office, 2011).

이 법안으로 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정책과 법이 수정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며,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이 법에서 제시된 내용에 상응하도록 모든 법과 정책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와 소개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법의 소개는 곧,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소개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아동권리계획(Children's Rights Scheme)이라는 것이 새롭게 소개되는데(Stationery Office, 2011), 이는 한국의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특화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마. 아동권리 계획(Children's Rights Scheme)

아동권리계획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웨일즈 정부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14년까지의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법안과 정책의 제정,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실행을 위한 웨일즈 정부의 의무이행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계획의 실행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의무 결성(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포함),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슈퍼비전과 교육 및 훈련의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tationery Office, 2012).

특히 이 아동권리계획에는 실행을 위한 6가지 운영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 출처: Stationery Office(2012), Children's Right Scheme, Welsh Assembly Government, p. 9.  
 \* 주 : 1) 어떤 일인가? 2) 어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권리가 그 일을 현실화시키고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되는가?  
 3) 권리존중과 더 큰 효과 주기 4) 웨일즈의 각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5) 각료의 결정 6) 기록관리

【그림 II-3-1】 6가지 운영단계(Six Steps to Due Regard)

첫 번째 실행 단계는 담당자가 관련 정책이나 법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혹은 수정해야 할 일이 없는 지를 점검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평가기준을 통하여 실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인권의 보호측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단계이고, 네 번째는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이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을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점점부터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여 추후 평가나 개선 방안의 수립에서 사용하게 한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한 기타 노력

학교에서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들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에 관한 노력이 훨씬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총리실 산하의 시민단체 기구는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구 설립, 정책 마련 및 법률 정비에 관한 요구를 포함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어서 학교나 교육부보다도 훨씬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학교밖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HM Government, 2013). 청소년단체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2013년 교육과정 개편 시에 인권교육에 관한 교육 필요성과 인권상황이 일부 논의되기도 하였다(DfE, 2013). 결론적으로 1995년에서 2002년 동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반영되고 실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의 개편이나 정책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안에서의 인권 및 시민교육의 실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2013).

또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하는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를 설치하여 영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등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기구로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결과중심의 전략적 규제, 기본적 인권과 평등의 실천, 권위 있는 지성과 혁신 창출, 신뢰할만한 협력관계 구축 등)

## ⑤ 시사점 및 제언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영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기대되었으나, 영국 내의 사회적 인식은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이 열악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영국의 사회복지 수준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교적 형사 처분 책임 연령이 낮고, 금지된 체벌에 대해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을 예로 들어가며 영국 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이 열악하다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 공공주택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강제 퇴소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거주지가 제공되는 것도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한국은 저소득층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거주지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위기 상황에 대해서 영국정부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영국의 전통과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이 소외되고 있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기본권과 같은 절대적인 인권보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권 향상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분위기 전체가 약자를 배려하고 사람이 먼저 중히 여겨지는 상황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인권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인권수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분위기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국가 시스템의 구축이다. 영국 웨일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제정된 아동·청소년인권법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고, 인권 수호에 대한 기준이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어쩌면 지구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역이나 국가가 처한 사회적 맥락에 맞게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청소년은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단순히 보편적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으로만 인권 수호가 논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높은 영국에서도 적극적인 인권 수호에 대한 반성과 논의가 있는 것은 자국 내 인권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간혹 정치 진영 논리의 뜨거운 감자가 될 때가 있는데, 약자의 인권은 절대로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며, 국가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수호에 관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독립된 인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권 의식에 대한 사회적 환기와, 인권 관련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그러한 시스템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인권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개념이므로 청소년의 인권을 논의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청소년복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사례 고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아동·청소년 인권현황에 대한 근거가 청소년복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인권 수호 및 증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원리,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청소년복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호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바로 영국의 「Every Child Matters」(모든 아동이 중요하다)라는 종합 복지지원정책의 실행에서도 알 수 있다(DfES, 2003). 「Every Child Matters」 정책은 직접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수호나 증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이 정책의 핵심 사안들은 모두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권 수호의 기준은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인권과 복지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복지의 최종 목적이 인권수호라는 관점이 공유되어야 한다.

넷째, 보편적 인권 외에도 상대적인 인권, 즉, 아동·청소년이 처한 상황별 인권 수호와 증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각기 다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국사회도 이러한 다른 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와 인권 수호가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소외나 배제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집중적인 인권보호와 복지 지원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권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전문가의 양성과 청소년 인권관련 단체의 연합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의 경우, 인권관련 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난 10여 년간 아동과 청소년인권 수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한국에는 청소년시설 인프라(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는 전국에 753개소가 있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3). 또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수도 2014년 9월 기준으로 71개나 있다(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14). 이러한 시설과 단체는 모두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수호와 복지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시설과 단체들이 연대하여 청소년인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수련시설협회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의 협의체가 이미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인권수호에 관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기관운영의 각자의 목적과 사정이 있겠지만,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설과 단체에게 부여된 책임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들이 연합하여 공동의 목적과 선을 위한 연대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 (3)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수준과 지자체의 조례화 노력 : 일본 사례

####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 통합

일본은 1994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협약이행에 관한 권고를 받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4회기 기간 중 2010년 5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일본정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2010년 6월 11일 협약이행에 대한 최종권고가 채택되었다.

일본 헌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인권협약은 공포와 함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인권협약의 취지와 규정을 근거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자국의 인권실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협약 비준 이후, 기존 법률로서도 협약을 이행하는데 충분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민간단체 중심으로 「(가칭)아동권리기본법」 제정 운동이 확산되어 나갔다(子どもの権利条約総合研究所,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매춘·포르노금지법」(児童売春・ポルノグラフィー禁止法, 1999년 제정), 「아동학대방지법」(児童虐待防止法, 2000년 제정, 2004년·2008년 개정),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개정 1997년, 2004년, 2008년) 등은 협약의 취지와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정책추진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 대책 행동계획’(2009년)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채택된 ‘자살에 관한 종합대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결의’(2005년)가 성과를 인정받았다. 반면에 엄벌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2007년·2008년에 개정된 「소년법」(少年法), 2006년에 전면 개정된 「교육기본법」(教育基本法) 등은 협약의 취지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은 일본 법률 중에서 처음으로 ‘아동의 권리 관련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근거하여’(제1조)가 목적 규정으로 담겨져 있으며, 협약의 일반원칙(차별금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의 권리 확보, 아동의 의견존중)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제2조)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상황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의 권고 내용 속에서

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2차 최종권고(2004년)에서는 ‘입법의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함과 동시에 협약의 원칙 및 규정, 그 안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방식에 따라 전면적 일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제3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안(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에서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완전히 포괄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전면 보장하지 않고 있고, 포괄적인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기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하여(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2), ‘아동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채택을 고려하고, 또한 국내법을 협약의 원칙 및 규정에 완전히 조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3).

현재 일본에서의 「아동권리기본법」(子どもの権利基本法) 제정 움직임은 정체되어 있다.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 학계, 전문가 그룹, 민간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안이 일부 정치인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하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인권구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협약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1,700여개가 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숫자에 비하면 아직은 소수이나, 꾸준히 조례제정 지역이 늘고 있다. 조례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영역을 모두 포괄할 목적으로 제정된 종합조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제도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개별조례,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념과 원칙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荒牧重人, 喜多明人, 半田勝久, 2012).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가와사끼시다. 가와사끼시는 2000년에 「가와사끼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례」(川崎市子どもの権利に関する条例)를 제정하여, 그 안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이념, 가정·학교·시설·지역사회 등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다양한 공간에서의 권리보장,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와 지원, 행동계획 수립, 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각각의 조항은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종합조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며, 지금까지 약 27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荒牧重人, 喜多明人, 半田勝久, 2012).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개별적인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개별조례에는 아동의 의견존중·참여 지원을 위한 조례, 아동·청소년상담·구제에 관한 조례, 학대방지 조례, 안전 확보 등 개별 아동·청소년정책 및 제도를 지원하는 조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강조하고 이념과 원칙 등을 정한 조례도 있다.

## ②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차, 2차 최종권고에서의 우려 및 권고가 여러 영역에 있어서 이행되지 않고 필요한 조치가 검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일본정부에 유감을 표시하고, 3차 최종권고안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노력을 강조하였다.

### 가. 차별금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제정을 권고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6). 특히 위원회는 1, 2차 권고와 마찬가지로 3차 권고에서도 미혼모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다. 현재 미혼모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중학교 졸업까지 1인당 월정액 16,000엔의 아동수당, 또한 2011년도부터는 3세까지의 아동·청소년에게는 20,000엔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유아기의 아동권리 실현, 미혼모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현재까지도 보육시설 입소대기 아동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며, 이 중에서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 청소년의 학습과 생활 등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부족하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혼인가능연령에 대한 남녀 차별(남 18세, 여 16세), 적자차별, 고교무상교육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子どもの権利条約NGOレポート連絡会議, 2011).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금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특히 학대나 체벌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에 근거하여 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아동학대방지법」(児童虐待防止法)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폭력적 지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가정 및 시설 등 대안양육 현장에서의 체벌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民法) 및 「아동학대방지법」(児童虐待防止法)이 적절한 훈육 행사를 인정하고 있고, 체벌의 허용가능성에 대하여 불명확하게 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첫째, 가정 및 대안양육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벌 및 모든 형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근절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것, 둘째, 모든 영역에서 체벌 금지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것, 셋째, 체벌 등을 대체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 및 지침에 대하여 가족, 교직원,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캠페인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노력, 긍정적 훈육 프로그램 마련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률에 따른 조치만을 설명하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당시 심의과정에서 밝혔다(子どもの権利条約NGOレポート連絡会議, 2011).

#### 다. 아동·청소년 빈곤 문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차 최종권고에서는 이전과 달리 일본정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아동·청소년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및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빈곤을 감소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검토한 후 예산을 배분할 것, 빈곤으로 인한 권리침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 아동·청소년복지 및 교육에 대한 예산지출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3~4, 12). 일본 정부는 2010년 1월에 저출산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을 수립하고, 아동·청소년 빈곤문제 해결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후 동년 7월에는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문제 방지, 실태조사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일본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子どもの権利条約NGOレポート連絡会議, 2011).

#### 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의 일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특히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 중에 보호자

및 교직원과의 관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각 지역의 「발달장애지원센터」에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관련한 상담건수가 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ADHD의 치료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료전문가 대상 연수가 실시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들 치료나 조사연구가 주로 약물치료적 접근에 따른 생리적 장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12). 이에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및 심리적 웰빙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학제적 접근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ADHD의 진단 추이를 정부가 감시함과 동시에, 이 분야에 있어서 조사연구가 제약산업과는 독립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12). 민간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일본정부에 관련조사 및 연구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 마. 교육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의 학교제도가 학업성취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을 인정하지만, 학교 및 대학진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하였다. 이러한 과도하고 경쟁적인 학교환경, 사회적 환경이 취학 연령층 아동·청소년의 괴롭힘(이지메), 정신장애, 탈학교, 중도탈락, 자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13). 따라서 위원회는 경쟁적 환경으로 인한 악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학교제도 및 대학교육 제도를 재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13).

아동·청소년의 교육관련 문제 특히, 탈학교 문제는 당시 일본정부 보고서 심사에서 다양한 교육제도 방안 마련이 강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칭)대안교육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을 정규교육으로 인정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子どもの権利条約NGOレポート連絡会議, 2011).

#### 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기업

이 밖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영역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번 최종권고에 등장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민간영역이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 및 발달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영향으로부터 지역사회,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대한 국내 기준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새롭게 권고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5).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권리보장을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 권리에 기반을 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개별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③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한 기타 노력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약의 정신과 취지에 맞는 법률 제·개정, 효과적인 정책조정 및 협약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홍보 및 교육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권리 확산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 및 지방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많은 효과를 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전 두 차례에 걸친 홍보와 교육관련 권고와 유사한 내용으로 일본정부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모든 사람(교직원, 재판관, 변호사, 법집행관, 미디어 종사자, 공무원 및 모든 정부조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가 없음을 우려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3). 2009년 민주당 정권은 국가 차원의 인권옹호 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에 국회에 「인권옹호법」(人權擁護法)을 제출하였지만, 정권 교체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제정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례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옴부즈퍼슨 제도」를 두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의 인권옴부즈퍼슨제도가 권한, 독립성, 예산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荒牧重人, 喜多明人, 森田明美, 2013).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독립된 국내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의견 제2호」<sup>17)</sup>에 의거한 독립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일본정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명확한 권한 및 충분한 인적지원, 예산지원 등을 실천함과 동시에, 민간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계를 해나갈 것을 권고하였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3). 이는 일본정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부 내 심의기구가 효과적인 협약이행에 기여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의 사법부도 지금까지 국제인권협약을 재판규범으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재판부가 국제인권조약,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재판에 있어 직접 적용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서, 특히 교육관련 재판에 있어서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적용된 예는 없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발전도 없었다는 엄격한 평가도 있다(喜多明人, 森田明美, 広沢明, 荒牧重人, 2009). 따라서 동 협약을 사법부의 판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문의 구체성·명확성과 함께 사안의 성질, 관련 국내법의 상황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정부의 협약이행 상황,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 내용을 토대로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첫째,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아동권리기본법」(子どもの権利基本法)을 제정하고 및 국내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 둘째, 아동·청소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정·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재정비할 것, 셋째,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협약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국가행동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아동·청소년을 파트너로서 협력하면서 수립하고 이행할 것, 넷째,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감시하는 체제, 아동·청소년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독립적인 구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할 자원 배분, 예산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될 것,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할 것, 일곱째, 아동·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

17)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2002). General comment No. 2: 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홍보, 연수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할 것, 여덟째, 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회·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그룹,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것이 필요하다(子どもの権利条約NGOレポート連絡会議, 2011).

#### ④ 시사점 및 제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토대로 협약 비준국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칭)아동·청소년권리기본법 제정, 인권교육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정책의 총괄 부처 또는 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교육, 복지, 소년사법, 청소년 분야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영역과 정책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 지자체의 일반행정 영역, 교육행정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 제정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인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자체의 역할을 조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는 일본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안정적인 제도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모니터링 결과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한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정부의 동 협약 이행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동 협약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홍보 및 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 여섯째,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과 성과가 지자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에 있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

#### 4.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sup>18)</sup>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sup>19)</sup>

###### (1) 입법

###### ① 이행 현황

사법판결에 협약의 모든 조항이 적절히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행은 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6조에 의하여 국제적인 규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협약이 재판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와는 구별되기는 하나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효과를 도출할 경우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 또는 보장자료로 협약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재판에서 협약이 인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조인섭, 2013).

###### 가.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 현황

아동·청소년 관련법의 제·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협약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및 특별보호조치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관련법의 제·개정이 가져온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법제처, 2014).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문제가 크게 대두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아동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범주를 학교 밖으로 확대 및 폭력에서 배제되기 쉬운

18)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9)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의 (1) 입법부터 (9) 아동권리와 재계까지는 이호균 행복포럼 고문(한국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전 센터장)이, (10) 비차별부터 (13) 아동견해의 존중까지는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조항 보완 및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을 통하여 참여의 권리를 법적으로 강화하였다.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영역에서는 2011년 8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됨과 더불어서 2012년 2월 「민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양 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제가 도입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협약 제21조 (a)의 조항이 자동 철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4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이로 인한 「아동복지법」 개정 또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사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절차가 도입되며, 피해아동의 보호, 가해부모의 교정을 위한 상담, 수강, 치료 명령제도의 도입은 아동보호체계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부모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되고,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통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많은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의 특별한 변화는 2008년 3월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서비스와 함께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평가하기 위하여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사회에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학교보건법」 개정에 의하여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을 포함시켰고,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학교장의 사전 안전대책 확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었다. 유해업소와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무상보육의 도입과 보육 및 유아교육과의 통합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잦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가출, 자퇴, 퇴학 등으로 정규학교과정을 이탈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방송통신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안’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입법 발의되었다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학교에서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학입학 전형 시에도 고교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을 벗어난 출제나 평가가 금지되는 등 선행교육 금지로 인한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특별보호조치 영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3세미만 여자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여성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것도 큰 변화이다. 아동대상 성범죄로 인한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고, 아동자신이 성인이 되어 판단할 능력이 생길 때 고소가 가능하도록 공소시효를 배제한 것이다. 2012년 2월 제정된 「난민법」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난민 관련법이다. 2013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에는 난민인정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지원을 하고, 난민아동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산하에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3년 1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2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아동분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8개 분야 42개 과제를 입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sup>20)</sup> 자문위원회 논의 시 이미 발의되어 있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공포되었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입법과제들이 향후 입법으로 채택되어 아동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나.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가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광주와 서울, 2013년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구성은 대동소이하며, 특히 학생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들에 대한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 제4장 제39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제를, 서울은 제3장 제38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제를, 광주는 제7장 제40조에서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를

20)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2013.9). 여성·아동미래비전(아동분야 8대 과제는 거버넌스, 아동의 건강권 보장, 보육 정책의 내실화, 교육받을 권리 보장, 아동폭력 예방, 근로 청소년 보호,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아동·청소년의 통합규율이다.). p. 5.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전라북도는 제3장 제43조에서 인권옹호관제가 포함되어 있다.<sup>21)</sup>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 2월 ‘강원학교인권조례’ 최종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sup>22)</sup>

한편, 서울시는 2012년 12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령기 이전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괄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는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종교와 외모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원 등에서 체벌을 포함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인권위원회와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의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인권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해 구제와 인권교육을 실행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 기구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중 ‘어린이·청소년 인권 전담 보호관’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sup>23)</sup>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성북구가 2011년 12월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sup>24)</sup> 성북구는 전국에서는 13번째,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13년 11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아동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5월 9일 열린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다. 성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이해하고 발달, 생존, 보호,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종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이 조례 제정에 이어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시범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sup>25)</sup>

21) 경기도학생인권의 광장. <http://shr.goe.go.kr>, 서울시 인권교육센터. <http://www.st-rights.or.kr>,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http://human.gen.go.kr/main/main.php>, 전라북도 교육청. [www.jbe.go.kr/program/publicboard](http://www.jbe.go.kr/program/publicboard)

22) 강원학교인권조례. <http://human.gwe.go.kr>.

23) 서울시 인권교육센터. <http://www.st-rights.or.kr>

24) 아시아경제(2012.1.3.). 성북구, 제1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0310043741080>.

25) 헤럴드경제(2014.5.13.). 성북구, 지자체 최초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 다. 청소년 낙태관련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의 낙태관련 조항 제269조 및 제270조에서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부녀 및 시술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가지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낙태죄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낙태죄는 총 426건으로 연간 평균 약 40여 건이 입건되었는데, 연간 평균 기소율은 16.2%에 지나지 않고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구약식 또는 불구속 구공판과 같이 경미한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기소 사유를 살펴보면 기소유예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혐의 없음 처분의 순서로 처리되었다. 10년간 입건된 426건 중 기소유예로 처리된 건은 189건으로 약 44.3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형법에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된 사례는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의사와 조산사 등이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문가들의 낙태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고 과잉처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조산사 송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sup>26)</sup>

강간이나 준강간 등에 의하여 임신을 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의 한계로써 우성학적, 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간의 임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될 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간 및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고민하는 중에 수술가능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강간 및 준강간에 의한 임신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성폭행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상담기관들은 성폭력, 임신, 인공유산의 어려움,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온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낙태를 비범죄화 하고 인공유산을 합법화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26) 뉴스1(2012.8.3.). 현재, 의사 등 업무상 동의낙태죄 합헌.



## ② 개선 방향

2011년 9월 이후 정부차원의 아동 관련 법 개정의 변화를 살펴보면, 너무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적시에 아동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의원입법 또는 민간이나 정부의 부탁에 의해 의원입법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인한 너무 잦은 법 개정은 아동권리 실천 현장에서 업무를 이행할 때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 제정 이후 2년~4년 혹은 정해진 어느 일정기간 동안 시행해 본 이후에 여러 문제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절차를 부칙에 명시하는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해당 법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현황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사항들이 어떻게 수정, 보완될 것인가를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일종의 법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또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내 및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하나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의한 아동권리 침해 현황에 대한 최종 보고는 지자체 장에게,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 보고는 교육감에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조항 및 제38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조항에 대해서 2014년 1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오히려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퇴보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2007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 학생인권 보장이 포함되었으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조례차원 보다는 학생인권법이라는 상위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sup>27)</sup>

금년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적인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기에 향후 각 지자체 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상위법이 제정되고, 그 법을 근거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내와 학교 밖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한국일보(2014.1.24), “교육법이 상위…체벌 받겠다는 각서 써라”인권조례 무시 일쑤, 8면.

## (2) 기구 및 조정

### ① 이행 현황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총리실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및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등 총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아동관련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및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사전 준비 및 안건 채택 등의 활동을 한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아동권리, 아동안전, 빈곤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로 나뉘어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에 대한 정부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기타 안건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활동하였다. 아동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점검하는 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4-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연도별 추진 현황

일시	추진 내용	일시	추진 내용
2004.11.15	제1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6.03.1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2004.12.15	제1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06.40.21	제4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5.04.27	제2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6.07.20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권리분과 회의 개최
2005.05.03	국무회의 아동정책 추진상황 보고	2006.11.24	제5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5.11.24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과장직회의	2006.12.13	제3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서면회의)
		2007.10.05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2005.12.02	제3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7.11.16	제6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2005.12.14	제2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07.11.30	제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일시	추진 내용	일시	추진 내용
2005.12.28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위원회의 간담회 개최	2013.07.19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촉 및 오찬회
		2014.02.25	제7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2014.02.28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2), 2012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109를 재구성

\* 주: 저자는 2004년부터 아동정책실무위원으로 활동하여 회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아동·청소년 정책담당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의 제정비 과정에서, 그리고 다시 2010년 3월 아동·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일시 정지되었다. 종합적인 아동정책의 수립, 관계 부처의 의견 조정 및 정책 이행의 감독과 평가를 목적으로 설치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4년 12월 15일 1차 회의가 열렸고, 2007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제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MB정부 기간에는 그 기능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재개하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위원장)를 포함하여 정부위원 10명(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및 여가부 장관)과 아동권리, 아동복지 관련한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재정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약 5년 8개월만인 2013년 7월 19일에 위촉식을 겸하여 국무총리와의 오찬형태로 다시 개최되었다. 2014년 2월 28일에는 제5차 아동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었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종합대책의 심의 및 확정, 금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sup>28)</sup>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계 부처 의견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실무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17명과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재구성되었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2014년 2월 25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들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청소년 관계기관 협의회가 있고, 이 협의회는 2012년 12월 20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검토한 바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마무리됨에 따라 청소년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28) 국무조정실 아동보호정책과 보도자료(2014.2.28),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한다.

수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된 것이다.<sup>29)</sup>

## ② 개선 방향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연도별 1회 정도의 회의에 그치고 있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여러 자문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그 실적이 저조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아동정책조정기구가 복구는 되었으나 충분한 권한과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기구로 강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강화되려면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최소한 연1회 정기회를 포함한 분기별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3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및 불량식품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정부부처들의 해당 업무 조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내에 아동보호정책과가 신설되었다. 이 아동보호정책과가 전담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설화 및 정상화 되면, 이 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하는 10개 부처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 관련한 정책의 조정 및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의 부처별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에서의 아동권리 상황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결정사항 등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의 모니터링 및 지역차원의 정책의 조정과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국가행동계획

### ① 이행 현황

이제까지 추진된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아동·청소년

29) 여성가족부. <http://enews.mogel.go.kr/view/board/bbs/view.jsp>.

5개년 기본계획'이 있다. 2002년 5월에 확정 발표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은 5개 분야(어린이 권리 증진, 어린이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어린이 안전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어린이 교육·육성) 47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그동안의 아동 관련 정책이 생존과 보호 위주로서 추진목표 및 비전 제시 미흡,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의 부족과 부처 간 협조체계의 결여로 종합적인 대책이 어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수립되었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은 참여정부가 2003년 5월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한 뒤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되었다.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은 2004년 7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빈곤아동·대책의 기틀로 채택되면서 추진되었다. 2008년에 수립된 '아동·청소년 5개년 기본계획'은 기존의 아동·청소년 정책이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체계적 지원체계의 부재와 각 부처 간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영역과의 연계 등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7개 영역(권리보장 및 참여증진, 안전 및 보호강화, 건강증진, 역량개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60가지 정책과제가 설정되었으나(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아동·청소년 부처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제7조)과 이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8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2012년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연구를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3).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년~2016년)은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2012년 3월 수립되었으며,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에서 국제적인 권고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20개의 쟁점을 선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2).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2012년 12월에 발표된 바 있으며, 15대 중점과제 및 75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10월에 개최된 유엔 아동특별총회는 '아동에게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이란 명칭의 결과문서를 채택하였고, 각 유엔 회원국은 2003년까지 WFFC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유엔의 결과문서에서 제시하는 4대 영역(보건, 교육, 학대·착취 및 폭력 근절, HIV/AIDS 퇴치) 21개 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2006년도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5대 목표 189개 지표로 이루어진 국가행동계획 초안<sup>30)</sup>이 작성되었으나(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유엔에 제출되지는 못하였고, 2007년 7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이행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청회를 한 바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9).

## ② 개선 방향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법령에서 규정하면 마땅히 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배정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금년 하반기에 발표하게 될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그동안 발표된 계획보다 진일보된 아동정책 종합계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부처별로 국가행동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정책 종합계획은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종합계획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이 측정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4) 독립모니터링

### ① 이행 현황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를 검토하고 독립 모니터링에 대해 상기와 같은 최종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적 운영 및 법적인 근거마련이 단시일 내에 불가능하므로 보건복지부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간(2006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운영되던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을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2012년 3월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로 변경하였다.

30) ‘중장기 아동정책과 국가행동계획’이란 정부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황옥경과 이호균이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였다. 유엔 아동특별총회에서 채택한 결과문서의 4대 영역 중 HIV/AIDS 퇴치는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아서 아동·청소년 정책을 포괄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건강한 삶의 보장’, ‘교육과 학습기회’,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제’의 5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3·4차 민간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굿네이버스는 옴부즈퍼슨 운영 방안의 개선을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및 아동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옴부즈퍼슨 추천 및 협조를 받아 제3기 옴부즈퍼슨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였고, 옴부즈키즈 또한 개별 아동 대표에서 동아리 형태로 변경하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옴부즈퍼슨은 전국 7개 지역 8개의 조직(서울 2개, 경기, 강원, 충남, 부산·울산·경남, 대구, 광주·전남 각 1개씩)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조직하여 지역별 Key-person을 두어 지역모임 실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옴부즈퍼슨은 8개 조직 내에 협약의 6개 클러스터(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별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하고 해당 클러스터별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발굴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법무부, 2013).

옴부즈키즈는 저소득층가정 아동, 아동총회대표 아동, 학급대표 아동, 지역사회 참여 아동 등 특성화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견 및 보고, 교내외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실태조사 실시 등의 활동을 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한편, 유엔인권이사회가 2012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 대한 제2차 정례검토를 할 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민간보고서에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독립적, 지속적 및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인력 자원이 부족하며, 민간위탁 형식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도 있다(법무부, 2012).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검토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2013년 2월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의장 산하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자료로 제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 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의하면, ‘향후 모니터링센터가 독립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근거를 명문화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sup>31)</sup>, 이는 아마도 다음의 내용에 근거하였으리라 판단된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의 아동인권증진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위탁받아 운영한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5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31)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2013.2.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계획(2012).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제3차 자문회의 자료 부록 I, p. 99.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하였고, 이 포럼의 최종 목표는 아동기본법 초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 중에서 복지를 제외한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아동기본법 초안에 포함되었다(국제아동인권센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국보건인력개발원, 2013). 그러나 아직까지 법안 발의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3월 조직과 인력을 21% 축소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9년 11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우려하면서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도 있었으나(국가인권위원회, 2008) 시정되지 못하였기에 아동권리 침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 ② 개선 방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두 가지 차원의 권고를 한 배경을 2002년 유엔에서 발표한 유엔아동권리 협약 일반논평 2호, ‘아동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일반논평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당사국 내에 유엔총회가 1993년에 채택한 파리원칙에 근거한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아동권리 독립 전문가, 옴부즈맨 또는 아동권리 커미셔너를 두고서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인권기구 내에 아동권리를 책임지는 커미셔너, 또는 별도의 부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0).

우선 첫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에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개정작업을 하거나 2013년에 초안 작업을 한 아동기본법을 발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를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기본법(안) 등의 법률 내에 명문화하게 되면 어느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법률 범위에 들어있어 여전히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 수 있다.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서 활동하려면 유럽과 같은 아동옴부즈맨 법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 내에 명문화는 하되 대통령 직속,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직 또는 의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아동권리 전문위원회를 두고 아동권리 업무를 특화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재정적,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

아동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는 정부기구와 차별화된 독립적인 기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제조약의 이행 감시 및 조정,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여야 한다. 국제조약의 이행 감시 및 조정업무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별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업무는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권고대로 아동권리 전문위원회 또는 아동관련 독자적인 부서를 조속히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조직이 부산, 대구, 광주의 3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동 자신이 직접 구제요청을 하기에는 문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접근성 차원에서는 지자체별로 옴부즈 기구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약 20개소 지자체별로 아동옴부즈맨 제도를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권리 구제제도를 설치하고 있다(日本東洋大學校社會開發研究センター, 2014). 우리나라는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의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중에서 아동인권 담당을 두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주로 학교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에 대응하고 있어서 학령기 이전아동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배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단기적, 중장기적인 방향 및 중앙과 지자체 차원의 접근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5) 자원의 할당

### ① 이행 현황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보낸 권고문에 의하면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보건 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OECD 사회지출 데이터(Social Expenditure Data)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OECD 국가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평균은 23%인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0.8%로서 OECD 국가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한 것이다.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육지출이 보육외 지출의 2배 이상으로, 이는 선진국 대부분은 보육외 지출이 보육지출을 상회하는 것과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1%에 불과하고, 노인은 21%, 장애인 0.6%인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 아동가족복지를 위해 지출된 것이다. OECD가 파악하는 사회복지 지출 예산 중 하나로서 정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급여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출인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2012년도 OECD 평균은 21.7%이며, 한국은 9.3%로서 OECD 34개국 중 33위이며 사회복지지출 자체가 OECD 평균의 1/3수준에 지나지 않는다(이주연, 김미숙, 2013).

우리나라의 2008년~2011년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추가보고서(보건복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p.401)를 통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4년까지의 예산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4-2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의 변화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세출예산(A)	309.1조	325.4조	342.0조	357.7조
전년대비 증가(%)	-	5.3%	5.1%	4.6%
유아 및 초중등교육(1)	35조4,847억 원	38조5,549억 원	41조2,286억 원	41조1,370억 원
아동복지서비스(2)	2,296억 원	3,160억 원	3,144억 원	2,860억 원
보육(3)	2조8,759억 원	3조3,847억 원	4조5,431억 원	5조7,156억 원
청소년(4)	1,497억 원	1,485억 원	1,525억 원	2,303억 원
총계(기금포함)(B)	38조7,399억 원	42조4,041억 원	46조2,386억 원	47조3,689억 원
전년도 대비 증감률	-	9.5%	9.0%	2.4%
전체세출대비(A:B %)	2.5%	3.0%	3.5%	3.3%
아동·청소년인구(5)	10,538	10,276	10,019	9,772
1인당 지출비용	3,3백만 원	3,8백만 원	4,1백만 원	4,2백만 원

\* 출처: (1) 교육부 보도자료(2014. 1. 13). '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 원 확정' 별첨자료(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p. 4-6.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260>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아동복지+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  
 (3) 기획재정부(2011) 나라살림 예산. p. 135.  
 기획재정부(2012) 나라살림 예산. pp. 127-128.  
 기획재정부(2013) 나라살림 예산. pp. 134-135.  
 기획재정부(2014) 나라살림 예산. pp. 132-133.  
 (4)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 백서. p. 448.  
 여성가족부(201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p. 19(지출). p. 103(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sup>32)</sup>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  
 (5)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0세-18세 미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

32) 청소년 예산에 아동청소년성보호 예산 2011 39억, 2012 39억, 2013 52억 및 2014 53억,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포함.

이 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2011년도 38조7,399억 원에서 2014년도 47조3,689억 원으로 2011년 대비 무려 22.3%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 예산증가를 살펴보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는 9.5%, 2013년도는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매년 1조 가까운 예산이 증가된 보육분야는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아동양육 수당 지급 등에 의한 증가이다. 0세-2세까지, 그리고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던 보육료를 2012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을 국가책임으로 하여 영유아 115만 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2009년도 아동가족복지 지출예산이 OECD 국가의 최하위권을 점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2005년도 아동관련예산의 지방이양에 기인한 것을 들 수 있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우열이 있고, 아동예산의 차등이 심하여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져야하는 것은 협약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에 배치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예산만이라도 중앙정부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안건이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기되었으나 예산을 맡고 있는 부처는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 ② 개선 방향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의 배정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그에 근거한 연도별 측정 가능한 추진목표가 설정되고, 추진목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또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목표와 예산집행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예산 및 정책수립에 환류되어야 한다.

2004년 복지관련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전할 때 2009년까지 운영한 후 국고보고사업으로의 환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결정이 미루어졌고,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2014년에 다시 환원여부를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가 정착되어 가고는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이 예산과 관련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동관련 예산만큼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의 아동·청소년 욕구를 파악하고 직접 챙기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의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법과 자치적인 활동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아동복지

예산만큼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 보건 및 휴먼서비스부 아동국(children's bureau)은 의무적 지정교부금(mandatory formula grants)과 자유재량 교부금(discretionary grants)의 두 가지 형태로 아동복지 예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의무적 지정교부금(mandatory formula grants)은 반드시 정해진 곳에 예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동가족서비스 비용, 가정위탁 유지비용, 입양지원, 후견인 제도 및 위탁아동 자립지원 예산,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프로그램 예산 등은 의무적 지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다.<sup>33)</sup> 우리나라도 아동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협약 제4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아동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아동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는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의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가 공식화된 조직으로서 분기별 시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예산문제에 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특별회의'나 보건복지부의 '아동총회'는 1년 단위로 인터넷을 통하여 참가자를 모집 및 선정하고 이슈중심으로 토론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로서 예산문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북구가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예산서'를 발표한 바 있다.<sup>34)</sup> '아동영향평가 조례'는 '아동영향평가의 실시'와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조직에 아동·청소년을 참여시켜 아동친화예산을 직접 검토하게 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6) 자료수집

① 이행 현황

우리나라의 자료수집 체계는 각 정부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교육통계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3년 단위로 청소년종합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 건강·참여·가정생활 등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에 아동·청소년백서를 발간하였다.

33)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s Delivery: Factsheet 2012, [www.childwelfare.gov/pubs/impacts/step3.cfm](http://www.childwelfare.gov/pubs/impacts/step3.cfm).  
 34) 아시아경제(2014.5.1.), 성북구, 전국 최초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0114264285305>.

2011년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13년에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에는 일반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빈곤아동 실태조사도 포함되어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초1, 초4 및 중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을, 2010년과 2012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을 지표화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4개의 영역을 통합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지침들에 따라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9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7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7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7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5개)’, ‘특별보호조치(15개)’ 등 6개 대분류 영역에 총 130개 지표항목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김영지 외, 2013).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4년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을 조사한 바 있다. 제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1천608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충족 정도와 근로, 고용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주거, 식생활, 의료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다차원박탈 집단’이 전체의 10.8%에 해당하였다.<sup>35)</sup>

## ② 개선 방향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하라고 권고하였다. 협약체계를 아우르는 일원화된 자료수집체계는 없지만 분야별, 각 부처별로 자료는 생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기본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일원화된 통계자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부처별, 기관별로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관련한 법에서 규정하는 연령이 중첩되거나 차이가 나므로 실태조사 결과 또한 중첩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35) 연합뉴스(2014.4.29). “소득 기준 아동빈곤율, 실제 빈곤 정도 반영못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8/0200000000AKR20140428166300017.HTML?input=1179m>.

## (7)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 ① 이행 현황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7년 개정 고시된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에 국어, 도덕, 사회 등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단원이 개설되었고, 35개의 범교과적 학습주제의 하나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었다. 경기, 서울, 광주, 전북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초·중등학교 및 교원연수기관에 인권교육이 도입되었다.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아동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6.8%가 협약이나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생 71.8%와 중학생 78.0%가 자신들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초등학교생 46.0%, 중학생 53.0%이었다. 교사는 89.9%가 '인권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교원임용 후 인권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41.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5년도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10%이내였던 것에 비하면 인권교육 경험이 대폭 증가하였다(김철홍, 2013).

교육부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육될 수 있도록 범교과 학습주제에 다양한 인권관련 주제(양성평등, 장애인 이해, 인권, 아동·청소년 보호 등)를 선정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sup>36)</sup> 고는 하나 그다지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권리교육 또는 인권교육 실시 현황으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2009년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국아동권리학회와 함께 아동권리교육 교재 총 4종류(일반공통, 아동용, 보육교사용,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실무자용)를 개발하였고, 이 교재들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

법무부는 소년보호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훈련 강의 시에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36)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2013.2.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계획(2012).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제3차 자문회의 자료 부록 I, p. 7.

2012년 연간 6회에 걸쳐 180명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권리교육을 2011년 1,800여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3,4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sup>37)</sup>

## ② 개선 방향

각 부처별로 아동·청소년과 함께 또는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실무자, 그리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은 다행이다. 그러나 업무분야에 따라 아직 교육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아동·청소년 자신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양성 및 직무연수 과정에 아동권리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아동기본법(안) 또는 청소년기본법, 교육기본법 등에 관련 법 조항을 넣어서 교육을 제도화 하여야 정기적인 교육 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동권리교육을 제도화하면 교육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 자신, 아동·청소년과 함께 또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들은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나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관계자 대상으로도 아동권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협약의 대중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8) 국제협력

### ① 이행 현황

#### 가.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 실적

OECD에서는 공식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금인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민총수입(GNI) 대비 0.7%를 지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1년~2000년에 집행한 공적개발원조(ODA)

37) 상동.

지출은 국민총수입(GNI) 대비 0.02%에서 0.04%에 지나지 않았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그러나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하여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원조방식도 개발원조위원회(DAC)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기로 하였다.<sup>38)</sup>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2010년에 계획한 우리나라의 연도별 공적개발원조(ODA) 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4-3 연차별 국민총수입(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연도별	'09실적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GNI(%)	0.10	0.11	0.13	0.15	0.18	0.21	0.25

\* 출처: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10. 25).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p.13. [www.odakorea.go.kr](http://www.odakorea.go.kr).

이러한 목표설정 하에 최근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에서 작성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4-4 2013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순지출 기준, 백만불)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률(%)	비중(%)
ODA(A+B)	1,325	1,597	1,744	9.2	100.0
양자간 ODA (A) 무상원조(KOICA 등) 유상원조(EDCF)	990	1,183	1,299	9.8	74.5
	575	715	800	11.9	(61.6)
	415	468	499	6.5	(38.4)
다자간 ODA(B)	335	414	445	7.4	25.5
* ODA/GNI(%)	0.12	0.14	0.13	△0.01%p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3.4.9.), 2013년 한국원조, 1.5억불 증가한 17.4억불. [www.most.go.kr/news/news01.jsp?boardType](http://www.most.go.kr/news/news01.jsp?boardType).

위 도표에서 보듯이 2012년 15.9억 불, 2013년도는 17.4억 불로 2012년 대비 1.5억 불(9.2%)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총수입(GNI) 대비는 0.14%에서 0.13%로 0.01% 감소하였다. 이는 국민계정

38)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09.10.26.), “OECD, 한국 DAC 가입 결정 환영”. (파이낸셜 뉴스 '09.10.26, 한국경제 '09.10.26, 중앙일보 '09.10.26 언론보도 내용 종합). [www.agendat.net.co.kr](http://www.agendat.net.co.kr).



계편으로 국민총수입(GNI)이 전년대비 15.9% 비율로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원국에 물자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외교부 산하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및 수출입은행을 통한 유상원조(EDCF))와 세계은행이나 유엔기구에 출연 또는 출자하는 다자원조 형태로 집행된다. 특히 2013년도 총 공적개발원조(ODA) 중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 간 비율은 약 75:25이며,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 간 비율은 약 62:38 수준이다.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총수입(GNI) 대비 0.7%에 해당하나 최근 국제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하여 2013년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출실적을 보면 0.7%를 달성한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순이며, 0.13%를 달성한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23위를 점하였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은 약 0.30%였다. 금액 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이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6위를 점하고 있다.<sup>39)</sup>

2014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2조 2,666억 원으로 국민총수입(GNI) 대비 0.16%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40)</sup>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년 1월 17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지난 해 보다 11% 늘어서 국민총수입(GNI) 대비 0.16% 규모이나, 당초 계획인 0.21% 달성에는 실패하였고, 내년도에 0.25%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무상원조의 비율이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인 85%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높은 유상원조의 비율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sup>41)</sup>

#### 나. 민간차원의 해외원조 실적

민간차원의 해외원조 실적을 한국NPO공동회의가 2012년 4월에서 12월까지 국내 241개 개발복지 민간비영리단체(NPO)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조사 자료에서 살펴보았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민간비영리단체(NPO)들의 2011년도 전체 사업 및 운영에 투입된 비용은 약 1조 6,600억 원으로 그 중에서 해외사업이 약 4,900억 원으로 전체 비중에서 29.5%를 차지하였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의 무상원조 집행 창구인 KOICA에서 2011년도에 집행한 공적개발원조(ODA) 4,518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에 북한지원 사업비까지 합한 규모는 총 5,208억 원으로서, 이는

39) OECD, [www.oecd.org/dac/stats/data.htm](http://www.oecd.org/dac/stats/data.htm).

40)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2014.4.10.), ODA 정책간담회 자료, p. 4, [www.odakorea.go.kr](http://www.odakorea.go.kr).

41) 조선닷컴(2014.1.17), 입법조사처 “한국 ODA규모 늘리고 무상원조 비율 확대해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1388.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1388.html).

정부 공적개발원조의 무상원조 대비 115%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월드비전·한국NPO 공동회의, 2012). 이 조사결과는 6.25전쟁 이후 수많은 외국 NGO들이 한국을 지원하였었고, 이제는 한국에서 민간차원의 해외원조 실적이 정부의 활동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 다.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 우선순위

한국 개발복지 민간비영리단체(NPO)들이 집행한 해외사업 분석 내용을 보면, 1:1 아동결연사업이 32.5%(약 1,6334억 원)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이 지역개발사업 21.4%(약 1,075억 원), 보건의료사업 15.1%(약 757억 원), 해외긴급구조사업 13.8%(694억 원), 교육사업 6.2%(311억 원) 순이다. 한국 민간비영리단체(NPO)들은 해외아동 796,089명의 아동과 1:1결연을 통하여 아동 생계비, 교육비, 영양급식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사업들도 많은 부분 아동이 수혜자이다(월드비전·한국NPO공동회의, 2012). 한국의 민간비영리단체(NPO)들이 국내에서는 지구촌빈곤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굿네이버스의 경우 해외사업수행 시 각 사업과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평가 시 각 목표에 관련된 사업성과를 파악하고 있다.

#### ② 개선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국민총수입(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를 0.25%까지 집행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만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무상원조를 국제수준으로 상향할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26개 중점국가로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고, 민간영역은 유엔의 인간개발지수가 하위인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목표달성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목표달성을 결산해야 할 시점인 2015년이 내년으로 다가왔고, 유엔에서는 이미 Post-2015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Post-2015의 논의에 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적극 참여하고, 아동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목표설정에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 (9) 아동권리와 재계

### ① 이행 현황

#### 가. 효과적인 기업 사회적 책임 모델의 도입 촉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11월에 기업의 윤리적 경영에 지침이 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으로서 ISO 26000을 제정하고 발표하였다. ISO 26000의 7개 기본원칙은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 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규 준수’, ‘국제 행동 규범’ 및 ‘인권’이다. 기업이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핵심 분야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및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이다. 2013년 현재 세계적으로 1만개가 넘는 단체가 ISO 26000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sup>42)</sup> 이는 인증제도가 아니라 권고지침이지만 자체적인 진단과 사회책임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기업의 인권친화적인 이미지 제고에 의한 지속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되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 8월 30일 ISO 26000의 한국표준 버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KS A ISO 26000)’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sup>43)</sup>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R·이하 사회적 책임경영) 조항이 신설되었다. 중소기업 진흥에 사회적 책임경영이 필요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을 법으로 공표한 것이다. 실행조치으로 올해 4월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출범하였고, 중소기업청은 5년마다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sup>44)</sup>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하여 법이 제정되었고, 지원센터가 출범한 것이나, 중소기업청이 사회적 책임경영 인식 제고 및 교육을 위해 포럼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성과지표 등을 개발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11년부터 ISO 26000을 도입하기 시작한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중순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대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와 다양성 정보 공개 지침)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유럽 기업들은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 및 뇌물방지, 이사회와 다양성에 대한 정책과 위험 결과에 대한 정보를

42) 상동.

43) 중앙일보(2013.8.22), ‘따로따로 사회공헌기준, ISO26000’, [artcl.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01764](http://artcl.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01764).

44) 한겨레 뉴스(2014.6.26), 지원 법률 제정으로 물고 트고 지원센터 닷 올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44257.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44257.html).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정책이 없으면 공식 설명 또는 해명을 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은 ‘지속가능보고서’(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는 곳이 80여 개소에 지나지 않아서 향후 유럽시장 진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sup>45)</sup>

유엔차원에서는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가 창설되었고, 2006년 11월 이후 신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중점추진 아젠다가 되었다. 글로벌 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글로벌 콤팩트의 10대 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의 수 천여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콤팩트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이며, 그 첫째가 ‘세계 경영관행에 10대 원칙을 일반화하는 것’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같은 유엔 아젠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은 263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sup>46)</sup>

국제사회는 이렇듯 인권존중에 기반을 둔 기업의 윤리경영을 요청하고 있음에 반하여 한국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영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결과, 현지의 법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 현지 중앙 혹은 주 정부와의 로비 내지 MOU를 과신하면서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의 협의 회피,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답습, 안전한 노동 환경이나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미완, 고충처리 절차 등 내부적인 의사전달 통로의 부재, 인권 리스크 및 재무 리스크에 대한 예측 없는 무리한 투자 내지 현지 정부에 로비 자금 공여, 저개발 국가인 현지 출신의 노동자들 내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 부패한 현지 사법 시스템과 한국에서의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인 구제절차 사용의 어려움, 주재국에 나가있는 해외공관이나 KOTRA 등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감독 부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 나. 아동노동 금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교역과 관련하여 아동노동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예가 우즈베키스탄

45) 한겨레 뉴스(2014.6.16.). EU, 기업 사회책임 이행공시 의무화 했는데... 대응책 없는 대기업...유럽진출 ‘빨간불’.

<http://www.hani.co.kr/arti/economy>

4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목화수출이 2010년~2011년 국가수출량의 11.3%를 차지하며, 세계 5번째 목화수출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및 농가에 목화 수확량을 강제적으로 할당함에 따라 9월에서 11월 목화수확기에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11세 이상의 아동, 그리고 교사들이 강제노동으로 동원되어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다. 아동 1인당 평균 10~50kg의 목화를 수확해야 하며, 임금은 식비, 교통비, 도구비 명목으로 수탈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우즈베크에 1,439백만 달러어치의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편직물을 수출하는 대신 22백만 달러어치의 천연섬유사, 면직물 및 기타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개소의 방적공장 및 조폐공사와의 합작에 의한 글로벌콤스코대우를 통하여 섬유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지폐, 수표, 상품권 등 은행권 보안용지 및 정밀화학 제품, 신소재 섬유의 주원료인 면펄프의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목표로 우즈베크 진출을 꾀한 것이다.<sup>47)</sup>

2012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한국조폐공사는 우즈베크 진출 시 아동노동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대우인터내셔널에서도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주한 우즈베크 대사관 및 주 우즈베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후 주한 우즈베크 대사관은 ‘2012년 3월 26일에 아동노동 착취 및 근절을 위한 조치(내각결의 82호)’를 발표하였고, 2012년 8월에는 목화 수확 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총리령을 내렸으며, 검찰청에서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한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시민정치포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2012). 우즈베크 정부가 실제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특히 한국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다. 기업의 아동권리 존중 확산

2010년 7월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및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해석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과 ‘기업과 인권이행지침’ 같은 기준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2013년 한겨레경제연구소는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활성화 기업(UNGC 활동보호서인 COP를

47) 시민정치포럼, 진보정의당 박원석의원,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2012). “아동노동에 눈감은 MB의 자원외교 -우즈베크 목화농장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pp. 12-14.

발간한 기업)등 총 124개(대기업 92개, 중소기업 13개 및 공기업 19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경영 우수기업을 심사하여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 2013).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입각한 경영현황을 심사해서 시상을 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심사평을 살펴보면, 국내기업 경영활동의 아동권리 반영현황에서 존중과 지원 활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권리 존중이라는 인식 없이 이뤄지는 지원활동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이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활동에서 존중하며, 아동의 권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기업에 내재화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뻗어 나가야 한다(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 2013).

## ② 개선 방향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경영이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육과 지원정책이 도입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영국은 2013년 9월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침해를 감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진출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KOTRA와 외교부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의무화 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근래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투자와 더불어서 ISO 26000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의 일환으로 해외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해외투자와 해외봉사 활동의 영역을 새천년개발목표에 맞추기도 하고, 기업의 자체 사업에 부합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실시하므로 홍보효과 및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도 한다. 국내기업이 국내에서의 활동이나 해외활동 시 아동권리에 입각한 경영원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시상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서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외교적인 채널을 통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즈베크의 아동노동을 지탄하고 구매를 금지하고자 전개하는 코튼 캠페인(cotton campaign)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조폐공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도 가입한 공기업으로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시에는 현지 국가 및 파트너 기관의 성장과정, 윤리적·도덕적인 검토를 우선하여야 하고, 특히 아동노동과 관련한 국제적인 협약을 비준 및 준수하는지 여부를 미리 사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및 협약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는 유엔의 권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미 FTA, 한-페루 FTA 등 대부분의 FTA 협정 시 FTA 노동장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노동권 중 하나인 아동노동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sup>48)</sup> 하니 다행스런 일이나 향후 인권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0) 비차별

### ① 차별금지법

#### 가. 이행 현황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 국회 및 민간단체차원의 노력을 수차례 진행해 왔다. 2007년 10월 2일에는 법무부에서 성별, 장애, 인종 등을 두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 대상 가운데 성적지향, 즉 동성애자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으로 폐기되었다<sup>49)50)</sup>. 또한 2010년에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sup>51)</sup> 10여 차례 모임을 가져 각종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사례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관련 법률 및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연구·검토해 왔다<sup>52)</sup>. 하지만 차별금지에

48)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2013.2.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계획(2012),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제3차 자문회의 자료 부록 I, p. 106.

49) 법률신문(2010.4.15.),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Accs/ArticlePrint.aspx?serial=52052>

50) 여성신문(2013.8.16.) ‘포괄적 차별금지법’, 9월 재입법 추진, <http://womennews.co.kr/news/59907>

51) 특별분과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5개 관계부처 공무원(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52) 법률신문(2010.4.15.),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Accs/ArticlePrint.aspx?serial=52052>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을 중단했다.

이 밖에도 2008년 이후에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08. 1. 18), 박은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기본법안(2011. 9.15), 권영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1. 12. 2), 김재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2. 11.6), 김한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3. 2. 12),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2013. 2. 20)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입법이 철회되었다. 그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 각 단체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나. 개선 방향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인권위원회 등에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sup>53)</sup> 한국 정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있다. 하지만 성적 지향 등의 문제에 관한 일부 단체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법 제정에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상반되는 단체들의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② 청소년미혼모 지원

### 가. 이행 현황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이며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 촉진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양육비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15만원이고,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54만원 이내이며, 정규 고교과정 이수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4).

최근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에 1,013가구에 844백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11년에는 1,620가구에 1,812백만 원, 그리고 2012에는 1,831가구에 1,873백만 원이 지급되어 매년 지원 가구수와 지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액을 살펴보면,

53) 여성신문(2013.8.16.), ‘포괄적 차별금지법’, 9월 재입법 추진, <http://womennews.co.kr/news/59907>



2010년에 12,080백만 원에서 2011년에는 6,380백만 원, 2012년에는 2,425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지원 가구수와 지원액이 2010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검정고시 학습비는 2010년에 76가구에 27백만 원 지원되던 것이 2011년에는 99가구에 1,09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146가구에 82백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자산형성지원의 경우에는 2010년에 550가구에 173백만 원 지원에서 2011년에는 196가구에 87백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217가구에 157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아동의료비의 경우에는 2010년에 708가구에 85백만 원 지원에서 2011년에는 430가구에 336백만 원으로 가구수는 감소한데 비해 지원액이 4배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아동의료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외, 2013).

#### 나. 개선 방향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정책 대상의 명확한 파악에서부터 법·제도적 개선과 지원 규모의 확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 정책 예산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파악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에 비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가구 수가 현저히 낮아 상당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정책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으로 월 12만 원이 지급되며, 입양아동에게는 양육수당으로 월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친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친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이외에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전산후의 건강관리 등으로 정규 수업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원격학교에 20일 이상 출석을 의무하고 있는 규정의 개선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기숙형 대안학교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운영, 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김지연 외, 2013).

## (11)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 ① 이행 현황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자살사망률과 함께 청소년 자살사망률<sup>54)</sup>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센터 운영, 연구, 홍보,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사업,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예방정책 연구 개발,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예방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이버상담 및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예산으로 2011년에 2,48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3,330백만 원, 2013년에는 4,330백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 문자 상담 운영,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예산으로 2011년에 15,40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16,651백만 원, 2013년에는 19,762백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비중이 가장 큰데, 그중에서 자살사업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자살예방관리, 학생정서·행동 특성 검사, 학생정신건강 정책 중점연구소 운영, Wee프로젝트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예산으로 2011년에 37,66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22,151백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다시 32,772백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 중에서 Wee프로젝트 사업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정서·행동 특성 검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ee센터 사업 중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현, 2013).

54) 10~24세 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1990년에 5.9명에서 2010년에 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김기현, 2013: 21).

## ② 개선 방향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관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에서의 부처간의 연계 부족과 지역에서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부재로 자살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교통사고 등과 관련한 예산과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기현, 2013). 이에 향후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정부부처간 연계 및 지역 허브조직 구축과 예산의 확대 등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 (1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① 이행 현황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가 1991년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법규를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때 이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 또는 보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국내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경우는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민법 제781조),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민법 제837조), 면접교섭의 제한(민법 제837조의 2), 입양(민법 제867조) 등이 있지만 민법규정에 의한 것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한 경우는 없다(조인섭, 2013).

아동복지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본받아 기본이념(제2조)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소년 처우의 기본원칙으로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제5조),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며(제8조의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시 보호소년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제14조의 3)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정책 영역에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법에서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업·업소나 아동·청소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에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②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민법규정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으나 “단순히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원칙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인섭, 2013: 51). 또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아동·청소년 관련 법에서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명시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 영역에서 청소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수행과 프로그램 운영시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3) 아동견해의 존중

### ① 이행 현황

아동·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하기 위해서 국내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법 중에서 아동견해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민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들 수 있다 민법 제869조에서는 “입양에 있어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 2에서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13세 이상일 때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인섭, 2013: 50).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 견해의 존중과 참여 절차, 청소년정책에서의 청소년 의견 반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서는 “청소년들이 외부의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의 2에서는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는 “법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하여”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 청구 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에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서는 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 청구 시 해당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과 학생 징계 시,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징계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청취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청취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한민국의동총회 등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로 2013년 6월 30일 현재 전국에 총 189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위원회별로 10~30명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4,080명의 청소년이 활동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3). 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지역사회 내 정책제안 활동, 각종 워크숍 및 캠페인 개최, 지역 청소년행사 주관 또는 참여 등이 있다(청소년참여포탈, 2014).

## ② 개선 방향

국내 여러 법에서 아동·청소년의 견해를 존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 법률에 머물고 있어 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차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규칙 제·개정시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형식적인 청취과정의 운영,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 등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의 내실화,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

## 2) 시민권과 자유<sup>55)</sup>

###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 ① 이행 현황

대한민국은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내국인이 출산한 자녀를 입양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른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두 부부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출산한 아이를 신고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출생신고의 법적 근거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제정) 제20조 및 제44조에 의한다. 가족관계 등록의 목적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대법원장이 관장하여, 등록사무의 처리는 시·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

55) 이 부분은 서여정 과장(Save the Children)이 집필하였다.

법에 따라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 또는 모(부득이한 경우 동거 가족, 분만에 간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가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사, 조산사 또는 분만에 간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생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출생아의 90퍼센트 이상이 병원에서 출생하고 있으나,<sup>56)</sup> 병원은 출생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태어난 아동의 출생에 관한 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고, 부모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출산을 담당한 병원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기는 하지만, 해당 정보는 관할 지자체와 공유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부모의 신고에 의거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하여 불법입양<sup>57)</sup>하거나, 학대, 방임하게 되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sup>58)</sup> 또한 아동이 출생 당시 사망해있거나, 출생 후 바로 사망하게 될 경우, 부모가 직접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인구통계학적인 문제와 보건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재인용; 박정한 외 9인, 2008).

둘째, 개정 「입양특례법」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위한 준비단계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정되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가 갖추어져야 한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는데, 친생부모가 확인되는 경우는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이 친자로 등재되므로 친생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친자와 친부모로 기재된다. 다만,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고, 그 경우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에 해당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 문제는 입양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의 정보가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에 남아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 친생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된다.

셋째, 2012년을 기점으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혼외자녀가 한

56) 출생장소 중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대구, 울산이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97.6%), 전북(97.7%) 등은 상대적으로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10727&ected=>

57) 2014년 7월 60만원에 아기 매매한 사건도 출생한지 7개월 동안 출생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다가, 불법입양한 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일요신문(2014.7.7.). ‘60만원에 아기 매매한 20대 아버지; 출생신고도 안 된 아기를 물건처럼...’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4005](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4005)

58) 학대 아동 중 상당수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아동학대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한국일보(2014.6.30) 아동학대 신고 출동.... 수퍼주인 “집 못 알려준다” <http://www.hankookilbo.com/v/ee99b8b068bb487da1cb5f8e2bd2c755>

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미혼모의 경우 병원의 출산증명서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자신의 혈육임을 입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sup>59)</sup>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로 처리한다. 그리고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김철효 외 4인, 2013: 39).

현재 아동의 출생을 신고(등록)할 수 없었던 난민지위 신청과정에 있거나 미등록 가정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는 출생신고서는 보관만 될 뿐, 출생등록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신고를 하였지만 등록이 안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등록에 대한 증명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자녀의 출생에 대해 특종신고를 할 경우 해당기관은 출생신고의 “수리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는 출생신고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출생사실 증명이나 신분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식문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김철효 외 4인, 2013: 39-40).

그러나 이마저도 외국인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통보의무” 때문이다. “통보의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의미한다.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예외규정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면제되지만, 강제퇴거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인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김철효 외 4인, 2013: 40).

## ② 개선 방향

### 가. 국내 아동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방향

59) 시사인(2013.4.5), “엄마는?” 미혼모보다 외로운 미혼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04>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대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신고 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sup>60)</sup>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병원의 출생기록이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개정 법안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이 제안되었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2013)의 보고서에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분만의료기관장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모의 거주지 출생등록기관장(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전송함으로써 출생신고가 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sup>61)</sup> 그리고 미혼모 등 출생등록을 비밀에 부쳐야 하는 경우를 위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단, 병원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정보가 공유된다고 할 때, 병원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나.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개선 방향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종신고편철’ 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를 만들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규정을 두도록 하거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를 두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국인 아동을 위한 출생신고의 개선으로 출생을 신고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 아동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또한 개선될 수 있다. 즉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외에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내국인 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출생증명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개선안이 될 수 있다.

60) 정익중(2014)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제도개선책을 발표하고 정부 대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료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과제로 출생등록 의무화를 포함하였다. p. 12.

61) 본 개선방향은 국회의원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여성·아동 미래비전: 여성·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의 내용(p137)에서 발췌한 것이다.

##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① 이행 현황

2010년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또는 교육여건의 차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예외 없이 일정 학군을 단위로 학생을 강제 배정하는 평준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송기춘 외, 2012). 즉 특정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배정될 경우, 해당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도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인 경우가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1,442명을 조사하여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주로 종립학교에서 나타나며, 개신교계의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종교 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에 입학할 때 종교적 교육에 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학식과 졸업식, 체육대회 등 대부분의 행사에서 학교의 공식방침으로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조회나 종례의 경우에도 교사의 재량에 의해 종교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교과목의 대체교과가 개설된 경우는 적었으며, 개설되더라도 학교에서 수강하기를 바라지 않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 수강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송기춘, 오동석, 허진민, 배병태, 김남수, 2012).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적인 의미 또는 선교활동 차원의 종교교육은 인정되는 것으로 되지만,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교활동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송기춘, 오동석, 허진민, 2012).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지침(교육부 제2013-7호)<sup>62)</sup>을 통해, 특정 종교 과목 개설 시 반드시 철학, 교육학 등 대체 과목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63)</sup>

62) 교육부 제2013-7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

63) 2009년 개정 교육과정(학교급별 공통사항)에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

그러나 많은 종교사학에서는 이 지침을 무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김광혁, 배경내, 2013).

## ② 개선 방향

중·고등학교에서의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한 인권위(송기춘 외, 2012)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둘째, 학생의 종교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종교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대체과목을 필수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대체교과 선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대체 교과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를 선택했을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셋째, 종교의식 등에 대한 참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입학 후 일정 기간 내 전학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입학 시 특정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학 후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하는 등에 대한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차별의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 ① 이행 현황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2010년 한국을 방한한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도 한국 학생에 대한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개선에 대해 반복하여 권고 받은 적이 있다.<sup>64)</sup>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의 참여, 표현의 자유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2013년, 교육부 제2013-7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참고).

64) Universal Periodic Review Second Cycle – Republic of Korea.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14.aspx>

### 가.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의 숫자는 매우 적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 학생 9,063명 중 70.8%(6,412명)의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에 대한 교육부의 홍보가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다(김영지, 김정준, 김지혜, 이민희, 2013).

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유로 몇몇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확대를 지향하는 반면,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생들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014년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를 320교(2013년 94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기획과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의에서 상시로 소통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이 만들고,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늘리고, 학생대표와 학교장의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sup>65)</sup> 또한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학생대표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6)</sup>

### 나. 학생의 자치권과 참여

전국적으로 학생의 자치권과 참여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전국 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학생 자치활동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회나 동아리, 언론 활동에 대한 자유는 절반에 가까운

65) 학생자치활동 학교 320개교 확대. 경기일보. 2014년 4월 19일자.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590>

연합뉴스(2014.4.8.).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320개교로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50493>

66) 황석연의 미래교육연구소, <http://blog.naver.com/skyn11?Redirect=Log&logNo=80155304867>

학생들이 자유롭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 대표 기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68.8%가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회는 학생들의 교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응답하여, 학생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학급회의나 대의원회 등은 고학년 또는 고등학교로 갈수록 열리지 않아 입시에 종속된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학칙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2013).

#### 다.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및 집회 참석의 자유

2010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지역별로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그 주요 내용으로 두발·복장 규제 제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권리가 보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60% 이상이 자신의 견해가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60.5%는 결사·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대한변호사협회, 2013: 129에서 재인용).

2013년 많은 시민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사건<sup>67)</sup>에서 일선고등학교에서 대자보를 강제철거 하거나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이 학교 내에 대자보를 게시했지만 학교 측은 대자보를 철거하고, 해당 학생의 징계를 위한 대위위원회를 소집하였다.<sup>68)</sup> 또한 인천의 3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이 학교 담벼락과 인근 버스정류장에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강제로 철거해 논란이 되었다.<sup>69)</sup> 또한 대자보 철거에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이 직접 관여한 의혹도 불거졌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가에 확산되었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청에 공문을 내린 것까지 확인이 되었다(김광혁, 배경내, 2013).

65) 2013년 코레일 노조의 파업을 보고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주현우가 후문에 붙인 대자보에서 유래한 구호이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B%85%95%EB%93%A4\\_%ED%95%98%EC%8B%AD%EB%8B%88%EA%B9%8C](http://ko.wikipedia.org/wiki/%EC%95%88%EB%85%95%EB%93%A4_%ED%95%98%EC%8B%AD%EB%8B%88%EA%B9%8C)

68) 한국경제(2013.12.27.),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철거에 항의… 학교 측 “교칙 위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270092g>

69) 시사 인천(2013.12.24), ‘안녕들하십니까’와의 전쟁, 학교 밖 대자보까지 강제철거 - 교육부, 대자보 확산 막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침 내려, <http://www.bp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304>

또한 인권옹호자 실태보고에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아침 등교시간에 교문에서 두발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거나 반식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혀졌다. 종교사학인 한 중학교에서는 급식시간에 줄을 서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클렌징 티슈로 닦아보는 방식으로 비비크림까지 단속, 한 중학교에서는 두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체벌과 벌점 부과,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줄여 입었다는 이유로 교복을 압수하고 학생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쉬는 시간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머리끈의 종류와 색깔 규제, 여학생이 머리를 짧게 깎아도 벌점을 부과하고, 양말색깔도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 제한하는 사례도 발표되었다(김광혁, 배경내, 2013).

## ② 개선 방향

경기도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는 학급회의와 학년회 등 학생회의에서 규칙을 만들고 학생이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자치활동의 기초가 되는 학급회의,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학교장 간담회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70)</sup>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및 집회의 자유 등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조례에서 조차 논란의 여지<sup>71)</sup>가 있지만, 최소한 교지와 같은 학내 언론과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등의 활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집회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열어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70) 경기일보(2014.4.8.). ‘학생자치활동 학교 320개교 확대’,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590>

71) 연합뉴스(2011.4.22.). ‘집회자유, 학생인권조례 초안서 쟁점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027068>

#### (4) 체벌

##### ① 이행 현황

2014년 8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이 금지된 국가는 41개 국가이다. 체벌이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금지된 스웨덴에서부터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는 이미 모든 환경에서의 신체적 또는 모욕감을 주는 체벌을 금지하였다.<sup>72)</sup>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교에서의 신체적 체벌을 금지한 것 외에는 어떠한 진전도 일어나지 않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은 모든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신체적 또는 물리적인 체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체벌로 간주하여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사회의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뿐만 아니라, 1,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한국의 체벌 상황을 지적하며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체벌은 여전히 가정, 학교 및 모든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 가. 가정 내에서의 체벌 실태

2014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이 가정 내에서 신체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도 포함되었다(남인순, 2014). 의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보고서를 따르면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별 학대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중 90% 이상이 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 내 동거인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한 신체적 처벌이 훈육의 방법으로 용인되는 문화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대현, 2014).”라고 언급한다. 즉 심각한 수준의 체벌은 곧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신체적 처벌은 학대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서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는 개정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정 내 체벌과 관련된 법률은 현재 사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72)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2014), States with Full Abolition,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frame.html>

민법에서는 아동의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아동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73)</sup>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 폭력 실태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3)’의 학대 피해아동의 특징을 보면, 이를 추측할 수 있다. 전체 피해아동 14,794명 중 3%인 479명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었다. 4세 이하 아동 중 장애아 비율이 0.26%(2010년 기준)<sup>74)</sup>이라고 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주의산만, 과잉행동, 폭력행동, 신체발달 지연 등과 같이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문제, 발달·신체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나타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장애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부모에 의해 아동의 장애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도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 나. 학교에서의 체벌 실태

학교에서의 신체적인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여전히 단채기합, 오리걸음 등과 같은 훈육차원의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체벌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학생인권 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볼 수 있다. 해당 조사는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관리자나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2.3%, 물리적 체벌에 대해서는 47%로 절반을 넘는 학생들이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체벌과 언어폭력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한 것이다. 또 체벌이 “자주 있다”는 응답과 “가끔 있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도 전체의 23.2%로 약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종종 체벌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2013).

신체적 체벌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조사대상 2,921명 중

73)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8조, 916조」.

74) 한겨레(2013.12.2.), ‘아빠도 할머니도 양육포기... 홀로 우는 장애아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696.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696.html)



941명의 학생이 욕설을 들었던 경험을 했고, 402명의 학생이 신체적 특성이나 외모를 놀리는 것, 374명의 학생이 위협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2013: 9).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에서의 체벌도 여전하다.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해 과잉 체벌한 사건이 최근에도 일어났을 뿐 아니라<sup>75)</sup>, 국립특수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는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지난 2013년 엄중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받았다.<sup>76)</sup> 이 외에도 특수학교 및 일반 통합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체벌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② 개선 방향

모든 환경에서 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제안된 신체적 체벌의 금지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체벌, 훈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기합, 토끼뽀뽀기 등과 같은 형태의 간접 체벌 등도 금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과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부모역할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훈육 방법을 담은 부모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정익중, 2011; 정익중, 2014: 재인용). 또한 아동의 체벌이 심각한 수준의 학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재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 내 체벌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신체적 체벌뿐만 아니라 간접체벌 등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2013).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이 체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학생들이 체벌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학폭위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을 다룰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75) YTN 뉴스(2014.7.16.),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 과잉체벌 논란', [http://www.ytn.co.kr/\\_ln/0115\\_201407162331291677](http://www.ytn.co.kr/_ln/0115_201407162331291677)

76) 비마이너(2013.2.1.), '인권위, 장애학생 체벌한 특수학교에 엄중 주의 권고',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846>

##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 ① 이행 현황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는 다음과 같은 진전이 있었다. 2012년 8월 5일 이후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5조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에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2013년 재·개정이 이루어졌다<sup>77)</sup>.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보호,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 그리고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설된 2000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련된 예산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기 전인 2005년까지 38개소가 증설되었으나, 2006년에서 2013년까지 12개소가 증설되어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지원 및 예방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장화정, 2014).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 앞서 지적된 권고와 관련된 이행 외에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변화로는 2013년 12월 31일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2014년 1월 28일 제정, 9월 29일 시행)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sup>78)</sup> 그러나 문제는 특례법에 근거하여 책정된 2014년 예산은 0원이었고, 2014년 예산심의에서 아동보호예산으로 436억을 증액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정익중, 2014: 4). 2015년 예산 책정과정에

77) 그러나 여전히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누가 입증하는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완이 없이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78) 뉴스와이어(2014.5.11.).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http://anews.icross.co.kr/anews/popread.php?idx=847148&cateid>

특례법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특례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위한 경력조회 결과 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교육권 및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한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준 신설 및 직원 배치 확대 등이다.<sup>79)</sup>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법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를 제대로 예방하고, 학대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서울 가정법원에 신설되었다.<sup>80)</sup> 2013년 구성된 국회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에서도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하여 아동전담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국회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아동전담판사제 또는 아동전담재판부는 학대 또는 방임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경우 피해아동을 강제적으로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서 친권 및 양육권을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와 더불어 보호자의 양육태도와 성행을 교정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보호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재판부의 신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국회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 ② 개선 방향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철저한 진상 조사가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어떤 주체 하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허점과 실수, 미흡한 대응, 제도적 맹점들이 누적되고 서로 맞물려 한 아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작동하는 체계의 세부사항을 찾아내어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상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수행은 전 부처의 법령, 제도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79)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14.7.1.),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589>

80) 문화일보(2014.7.7.),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서울가정법원에 신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701071027031002>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동 업무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차원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원 또한 아동관련단체, 아동복지전문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정익중, 2014).

아동학대의 근절 대책은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다.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주요요인 중 하나가 부적절한 양육방법이라는 것에 주목할 때,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적 형태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정익중, 2014; 이은주, 2014).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모든 사회적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 2014년 6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이 금지된 국가는 39개<sup>81)</sup> 국가이다. 체벌이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금지된 스웨덴에서부터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는 이미 모든 환경에서 신체적 또는 모욕감을 주는 체벌을 금지하였다. 체벌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고,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환경에서 체벌의 금지가 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지름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개를 포함하여 5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원 1명 당 사례건수는 58건이다. 적정한 상담 건수에 대비하여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두 배 이상의 기관을 설립하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조치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등에 있어서도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된 아동보호서비스의 국가 사무 환수, 출생등록 의무화, 아동학대 사건의 DB화 및 사망사건 발견 강화, 학대피해 아동 보호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 및 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를 위한 예산확충, 인프라 구축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5월 51개 아동 단체<sup>82)</sup>는 아동보호와 학대예방 업무 국가사무 환수 및 국고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최소 15명으로 상담원 증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10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것,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 여건 마련 및 치료인력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법률 조력인파 전담 경찰관 배치 등이 2014년 안에 시행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81)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38개 국가 리스트는 다음 링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progress/prohib\\_states.html](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progress/prohib_states.html)

82)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주요 아동단체를 포함한 51개 아동 단체가 5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sup>83)</sup>

#### (1) 가정환경상실아동

##### ① 이행 현황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 제15조는 아동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해 상담과 지도를 해야 한다. 상담과 지도 이전에 유기아동이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할 때는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 된다.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진 후 만 2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에 우선 배치되거나 그룹홈 또는 시설에 보호되거나 영구적인 가정보호 형태인 입양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안양육 체계는 잘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이 대안양육 체계로 배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총회 결의안의 원칙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일부 시·군·구에는 아동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조례<sup>84)</sup>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sup>85)</sup>, 아동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동위원의 활동에 대한 점검이나 통계, 현황 파악을 한 적이 없다<sup>86)</sup>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발생 시 친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상담 및 지도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위원에게 제대로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아동복지법 제 13조에 규정된 아동전담공무원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2014년 4월 수립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요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진전을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 약 1만 6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여, 여전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sup>87)</sup>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배치 심의와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제12조는 아동복지

83) 이 부분은 서여정 과장(Save the Children)이 집필하였다.

84) KBS 뉴스(2014.4.11.). ‘당정, 복지사각-아동학대 논의...“복지 전달 공무원 늘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3771&ref=A](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3771&ref=A)

85) 전북중앙신문(2014.4.15.). ‘도내 ‘아동위원’ 없어.... 아동학대 무방비 - 올해 1분기만 318건 신고 도내 시군 아동위원없어’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141>

86) 메디컬투데이(2013.6.19.). ‘늘어나는 아동성범죄, 예방·사후 관리위한 아동위원은 무용지물?’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5636>

87) 한국일보(2014.4.10.).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공무원 1만6천명 증원 필요’  
<http://biz.hankooki.com/lpage/economy/201404/d20140410102547135860.htm>

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 전국의 지자체에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다.<sup>88)</sup> 또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부진 하다는 의견도 있다.

요보호 아동을 대안양육 배치 결정에 있어서도 유엔 총회 결의안의 원칙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아동은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일시보호 또는 일시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과 동시에,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배치 결정을 하는 동안 아동이 일시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시보호 기능을 하는 보호시설은 장기양육시설이고, 일시보호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그대로 양육시설로 배치된다. 또한 일시위탁은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아동이 배치되기 전에 상담·지도의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기반하여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으로 배치되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은 복지부의 아동분야사업안내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배치의 기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sup>89)</sup> 여전히 가정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상당수 시설로 배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를 발표하는데, 다음 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요보호아동 배치 현황 표이다. 매년 50% 이상의 아동이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배치되고 있다(변미희, 정혜선, 2011).

대안양육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하여 아동들이 신고를 하거나, 진정을 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부재하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진정이 접수된 양육시설 사례의 경우<sup>90)</sup>도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진정접수 또는 경찰

88) 경인일보(2014.4.11.). ‘아동학대 잇따르는데... 지자체, 관련조례 ‘무관심’ 보호위한 ‘아동복지심의위; 설치’ 정부지침 불구, 도내 31곳 중 5곳만 제정.... 1년 넘게 미온적 태도,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45346>  
서울신문(2014.4.15.). “아동학대’ 뒷집 진 지자체... 관련 범죄 더 키운다 - 아동복지법상 심의위 설치해야 대부분 조례·심의위 구성 안 해... 지자체 “역할이 너무 포괄적””,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5029008>  
연합뉴스(2014.4.9.). ‘지자체들, 아동학대 관련 조례에 무관심’ 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 하라는 지침을 내린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한 곳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53892>,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5029008>.  
89) 가정위탁의 경우, 복지부의 탈시설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 안전행정부 분권교부세를 결정하는 기준에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조항이 포함되어, 가정보호를 우선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90) 뉴시스(2013.5.2.). 인권위, ‘독방 감금·학대’한 ‘막장’ 아동양육시설 원장 고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23424>  
중앙일보(2014.4.17.). 아이들 폭행·학대 당하는데.

조사 등의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이 거주하는 대안양육 서비스와 관련한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대 등의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상담, 진료 및 회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대안양육 시스템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여 보호 배치되고, 보호 배치된 아동이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대안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안양육 지침’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아동위원회와 아동전담공무원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부족한 아동전담공무원 또한 아동복지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에 대한 아동위원회와 전담공무원의 평가에 기반하여 요보호아동의 배치 결정을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 또한 구체화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침 및 조례 마련 권고 등을 통하여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심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위원회와 아동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아동과 보호자의 상황을 평가하는 사정도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되기 위하여 친가정이 필요한 경제·사회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배치 결정을 위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아동들은 연령, 성별, 가정의 상황, 아동의 신체·정서·발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보호배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보호자 및 아동의 의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지점들을 점검할 수 있는 보호·배치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그에 기반한 보호·배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이 아닌 보호체계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정기적인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 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국외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요보호아동을 보호조치 한 후 3~6개월 단위로 보호아동에 대한 개별처우 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친가정 복귀 또는 보호조치 연장 결정, 다른 보호조치로의 배치 등을 고려하는 등 개별 아동의 이익 최상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sup>91)</sup>

## (2) 입양

### ① 이행 현황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첫째 아동의 친가정 보호를 위해서 친생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숙려제’의 도입, 둘째 입양 결정은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셋째 양부모의 자격 심사 강화, 넷째 입양아동에게 친양자 지위 부여, 다섯째 국내 입양 뒤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입양특례법과 관련하여 하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모에 관한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게 되므로, 자신에 관한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친생모들이 영아를 (베이비박스<sup>92)</sup>)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관련 논란에 대해 김상용(2013)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동 유기 사례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제7조에서 “이 법에 의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입양신고를 말하는 것이고, 입양신고는 당연히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개정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입양 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91) 국회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2013), p. 227에서 재구성.

92) 한국일보(2013.9.26.), ‘이들에 한명꼴 버려지는 아기...입양특례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421717>

KBS 뉴스(2013.5.11.), ‘입양특례법이 입양 걸림돌?...논란’.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57256&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입양특례법베이비박스&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0&office\\_input=0&start=11&refresh\\_start=0](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57256&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입양특례법베이비박스&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0&office_input=0&start=11&refresh_start=0)

국민일보(2013.12.27.), ‘[사설] 정부가 외면할 때 300명 아기 받아준 베이비박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84080&cp=vn>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개정 「입양특례법」과 개정 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구별되는 큰 차이점은 입양신고제가 입양허가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김상용, 2013).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출생한 아동을 신고하여 친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를 기록하고 난 뒤, 그 아동이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더 이상 기록은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아동이 입양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파양이 되는 경우 친생모의 가족관계에 그대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친생모의 정보가 외부로 공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게 된다(김상용, 2013).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 하나 지적된 내용으로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견해를 반영할 것과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입양특례법」 제4조 입양의 원칙에서는 입양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의 원칙은 “아동의 안녕(well-being)이라는 단어로 광범위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녕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circumstances), 즉 연령, 아동의 성장 정도, 부모의 존재 유무, 아동의 환경과 경험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한다(UNICEF, 2012: 20).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아동의 입양 결정이 개별 아동의 연령, 부모의 존재 유무 등 모든 가능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내용이 법 4조에서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입양 절차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는 지침 등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입양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제도 개선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이행의 문제와 더불어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헤이그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친가정 우선 보호의 원칙에 대한 것이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친생부모와 입양이 될 아동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담을 하는 주체가 입양단체라는 점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상담 및 지도의 주체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이 된다. 즉 공적인 체계를 통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진다. 입양아동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양단체의 상담을 받고 입양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요보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는 공적인 주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② 개선 방향

입양 문제는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와는 별개로, 개별적인 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도 요보호 아동들의 보호체계 중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적인 체계 안에서 해당 아동의 친가정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이후에 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양아동 또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한 보호대상 아동에 포함되므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의 과정(사정 및 평가)을 거치도록 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배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가정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헤이그 협약에 서명은 했지만 비준은 요원할 것이다.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입양특례법」만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지원법」 등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모든 법이 실제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기반하여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뒤 협약 비준을 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박스 논란으로 시작된 출생신고제도의 문제는 출생신고제도만이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문제다.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고민하다가 출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홀로 하는 출산”의 경우 영아유기 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임신했을 때부터 익명으로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의료적 정보와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상담 등 폭넓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임신한 여성이 원하는 경우 임신기간 중에 익명으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친생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출생신고를 의무화하여 아동의 출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임의규정 개선, 「학교보건법」의 실효성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 조치 마련,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입양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자녀 양육 지원 강화·양육

비 지급 이행 강화·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지역사회 서비스 접근권 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이 요청된다(김지연 외, 2013).

#### 4) 장애, 기초보전 및 복지<sup>93)</sup>

##### (1) 장애아동

###### ① 이행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주요한 법 또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8월 제정된 장애아동지원법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배치, 중앙과 지방의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매 3년마다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행동발달을 돕기 위해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높은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강민희, 2011). 셋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경감 및 이를 통한 가정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가족돌봄 문화정착 및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다(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그 제정배경 및 취지에서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동법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 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결국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항목에 장애아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5개 장애유형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 6개 장애유형에 한정하고 있어 다른 장애유형의 아동은 바우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93) 이 부분은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이석구 소장(장애인인권포럼)이 집필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혼재되어 있다. 기본 방향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분명하게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통합교육으로 천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반 학교 내 통합교육을 위한 자원과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이 부족하여 통합교육에서의 학습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수학교의 경우도 시청각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경우 수화가 가능한 교사가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2010년 150개교, 2011년 155개교, 2012년 156개교, 2013년 162개교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지원예산이 2조 2,457억 원(2013년)인데 반해 통합교육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시범학교 42곳에 3,585억 원(2013년) 그치고 있다(교육부, 2013).

## ② 개선 방향

첫째, 장애아동·청소년의 명확한 법적, 정책적 지위의 확보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이나 서비스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으로 고려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김미옥, 2011). 이로 인해 장애아동·청소년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그 시기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은 아동으로서의 보편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라는 특수욕구를 가진 주체로서 법적·정책적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임과 동시에 아동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미숙 외, 2012).

둘째, 특수교육 예산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때, 특수교육 예산이 매년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절대 교육비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속적인 예산지원의 확대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우지연, 2011). 더불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추어 학생수 대비 교사수를 조사하여 이후 충원 필요인원에 대한 목표와 충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 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은 현재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 양육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일부 장애인복지관 및 민간재활관련기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서비스 수행기관 및 서비스제공자들의 질적 수준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강민희 외, 2011). 따라서 서비스 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격기준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보수교육 기회의 확대 및 체계적인 수퍼비전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김미숙 외, 2012).

넷째,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다 확장되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성장기부터 자연스럽게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하는 것은 성인기의 사회통합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김미숙 외, 2012). 그러나 여전히 정부 정책은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분리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교육 현장도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만 통합된 형식적 통합교육에 머물고 있다. 시청각 장애아동은 통합교육을 위한 합리적 편의제공(수화통역, 대필, 점자도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은 분리된 학급에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단순히 주간에 아동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처럼 되어 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개별화 맞춤교육에 따른 교육 목표와 교재, 교구 등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장애아동의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내용이 언어치료, 물리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서비스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애아동이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성인장애인과 멘토와 멘티 연결프로그램,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 캠프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문화, 레저, 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개별 장애아동의 특성(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등)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부담되지 않는 적절한 가격의 다양한 학습지원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 ① 이행 현황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병원 및 치과)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15세 이후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동 단위 거주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치료율이 7.5%였으나 읍면단위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치료율이 9.7%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치료율을 보였다. 즉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치과 미치료율에서는 지역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미치료율은 소득 하위층 아동·청소년 또는 중하위층 아동·청소년이 상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은 미치료율을 보였다. 특히 중하위층의 경우, 하위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미치료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반면, 차상위 계층이나 그 이상의 저소득층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② 개선 방향

첫째, 저소득 아동의 의료서비스 전담 기관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별로 의료서비스의 이용 실태는 소득 수준별로 다소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소득 하위계층과 중하위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상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의료서비스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하위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수급 자격에서도 배제되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므로 이 계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저소득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와 점점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저소득 아동·청소년 돌봄기관에서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여부 등을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전담 거점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의료시설 인프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미이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의료서비스 미이용률이 도시지역 아동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의료시설(아동·청소년 전문 의원)의 확충이 요구된다. 동시에 기존의 의료 관련 기관이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 내 의료 기관 중 일부를 아동청소년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3) 정신건강

#### ① 이행 현황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12-14세의 경우, 6.7%, 15-18세의 경우,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성인 20-30대(20대 9.3%, 30대 10.8%) 보다는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특히 여성 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15-18세 여성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19.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읍면단위 즉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청소년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 청소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우울증상 경험을 보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절대적·상대적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16.2%로 70대를 제외한 성인 평균 자살생각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자살생각률이 성인 17.2%에 비해 22.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15-18세 시기에 여성 청소년의 경우, 12-14세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생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청소년 자살생각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상위층 일수록 자살생각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 청소년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자살생각률을 보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실제 자살 시도율은 자살생각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자살 시도율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였다.

아동·청소년들의 실제 자살 사망률 및 그 중단적인 추이를 보면 1990년과 2000년의 10년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2000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접어들면서 특히 20대 남자와 25-29세 여자의 경우 최근에 올수록 더욱 가파른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김미숙 외, 2012).

## ② 개선 방향

첫째, 청소년 우울감소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육 중심의 일상생활에 비해 부족한 여가 및 휴식 시간 등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수준을 낮추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우울 감소 지원 프로그램은 성별, 연령, 지역, 소득 수준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검사 및 사례 발견-지역 전문 기관으로의 배치-개입’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총괄 관리 하는 역할 부여가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은 절대적인 수준도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먼저, 자살 생각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전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별, 연령대, 그리고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여자 아동·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소년 자살예방 진단 검사 확대 및 지원 범위의 재정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자살위험 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법에 자살 관련 예방 및 사후관리 지원 조항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살 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함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 (4) 정신보건

##### ① 이행 현황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상급 학년에 이르면 남학생의 경우 40% 이상이 흡연 경험이 있고 70% 정도가 음주 경험이 있었다. 현재 흡연자는 남자 고등학생의 23%, 여자 고등학생의 8%에 이르며, 현재 음주자는 전체 고등학생의 30% 정도로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흡연, 음주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었다. 또한 성관계 경험률은 남자가 6.7%, 여자가 2.9%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상급 학년이 되면 10%를 상회하였다. 흡연경험률의 경우 남자의 경우 동일 연령층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고 여자의 경우 미국의 반 정도 수준이었다. 현재흡연율은 남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연령에서는 우리나라가 높았으나 고등학교 3학년 연령에서는 미국이 더 높았다. 여학생은 미국이 많이 높았다. 음주경험률은 우리나라가 대체로 미국보다 낮았으며 현재음주율은 미국에 비해 1/2~1/3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외에 성관계 경험률은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낮았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성교육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료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방법이나 도움 정도 역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청소년의 발달 시기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의 경우, 학교 내 성교육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이혜정, 2013).

##### ② 개선 방향

첫째, 청소년 중심의 음주 흡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정책이 전체 국가정책 안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극소수의 제한된 정책과 사업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청소년기의 증가하는 음주율과 흡연율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음주예방정책이 정착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세계보건기구 등의 가이드라인 실행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 WHO에서 제시한 가장 효과적인 음주예방 정책으로는 가격상승, 알코올 가용성 제한, 음주운전 및 청소년 음주 단속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및 음주 판매 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음주 접근성 감소, 교육홍보, 이차적 위험 감소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류에 대한 접근성 감소 정책의 강화로는 주류제조업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광고 및 판촉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주류접근성 통제, 알코올 사용연령, 가격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알코올의존부모 및 가족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홍보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기관, 사업장, 청소년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음주예방교육활동이 촉진되어야 한다. 부모, 교사, 또래, 청소년지도자 등은 학습지도, 생활기술훈련, 위기관리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차적 위험감소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음주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청소년이나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종업원을 교육시키고, 주류소매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건 및 사회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넷째, 성교육 내용의 다양화, 현실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은 참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주로 신체발달과 성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었으며, 사회적 환경과 양성평등, 결혼과 건강한 가정 등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성에 대한 교육 교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학습 교구재가 답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이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져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성교육 내용 및 교재 개발,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한 교육을 통하여 성교육 내용을 보다 다양화,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곽예림 외, 2010).

##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 ① 이행 현황

우리나라 아동가족복지 지출 수준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34개 OECD국가 중 32위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 또는 이들을 위한 가족 복지 예산 지출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OECD국가들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정부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아동빈곤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이주연, 김미숙, 2013).

2011년 기준 한국내의 인구집단별 복지지출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 원 가량으로 노인(약 85만 원), 영·유아(약 83만 원)는 물론 장애인(약 27만 원)과도 큰 격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얼마나 정책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미래사회의 인적 자원인 아동세대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잘 알 수 있다(김미숙 외, 2012).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18살 이하 빈곤 아동이 전체 아동의 14%이며, 전국적으로 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2007년 13.8%였던 빈곤아동 비율이 2년 만에 더 높아져 2009년에 14.5%로 늘어난 것으로 출산율 저하로 아동인구가 줄어들어도 빈곤 아동은 더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빈곤아동 비율이 이처럼 높아진 데에는 경기 침체와 함께 겹친 부모의 가출이나 이혼의 증가 등 가족의 해체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빈곤아동 지원법을 마련해 급식과 방과 후 학교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빈곤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는 여전하다(KBS 9시뉴스, 2012.7.10). 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7명 중 1명은 빈곤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빈곤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빈곤은 단지 물질적 결핍만이 아니라 가족해체, 정서적 빈곤, 문화적 기회 및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달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빈곤은 다른 세대의 빈곤에 비해 특히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모든 아동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사회 발전에 관건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문화 바우처,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 후 학교 등 여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빈곤의 해결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김미숙 외, 2012).

## ② 개선 방향

첫째, 아동복지 예산 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아동복지지출은 대부분 보육분야에 지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육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초등 이상 연령대의 아동이 복지 지원대상에서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등 이상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주연, 김미숙, 2013).

둘째, 빈곤 아동 사각지대의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보육 외 아동복지지출은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요보호아동 보호와 저소득층 중심의 방과후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아동복지대상의 발굴 및 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이주연, 김미숙, 2013).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전문기관들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아동청소년광역지원센터(가칭)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되어 '조사-사정-배치-개입-실행-평가' 전반적 관정을 관리하고, 각 전문 기관의 역할을 조율 및 조정하는 역할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빈곤아동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새터민가정 아동, 장애아동, 농어촌지역아동들이 빈곤, 가족의 결핍, 문화적 소외, 교육기회의 제한 등 많은 발달적 위협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부모교육, 문화 및 교육기회의 확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복지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질적, 비물질적 서비스의 제공이 단기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발달단계적 욕구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미숙 외, 2012).

## 5)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sup>94)</sup>

### (1) 교육

#### ① 이행 현황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sup>95)</sup> 하지만 동법이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월에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그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교육 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는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도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sup>96)</sup>

표 II-4-5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sup>1)</sup>				사교육 참여율(% , %p)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4.0	24.0	23.6	-1.7	73.6	71.7	69.4	-2.3
초등학교	24.5	24.1	21.9	-9.1	86.8	84.6	80.9	-3.7
중학교	25.5	26.2	27.6	5.3	72.2	71.0	70.6	-0.4
고등학교	21.8	21.8	22.4	2.8	52.8	51.6	50.7	-0.9
일반고	26.5	25.9	26.5	2.3	61.1	58.7	57.6	-1.1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청소년백서, p. 275

\* 주: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94) 이 부분은 김형욱 옹호관(경기도 교육청)이 집필하였다.

9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6) 교육부 보도자료, 2013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발표, <http://www.mest.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2715&mode=view>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에 비해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 초등학생은 81.8%가, 중학생은 69.5%가, 고등학생은 49.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초등학생은 6.9시간, 중학생은 6.5시간, 고등학생은 3.8시간으로 이는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과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천원 증가하였으나, 실질 사교육비는 6천원 감소하였다. 일반교과의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사교육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학생이 미참여학생 보다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7)</sup>

현재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는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 참여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학교교육 기능 보완·확대하여 학생들이 진로·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기대함은 물론, 돌봄기능을 확대하고, 학교가 지역사회학교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sup>98)</sup>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기회뿐만이 아니라, 향후 직업에 있어서도 계층 간의 격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정부는 2014년부터 농어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교무상교육을 2017년에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은 주로 학교교육에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은 거의 대부분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제도권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등의 선택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배움의 기회를 제한받거나 박탈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유로 선택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 대안교육기관 확대

97) 교육부 보도자료, 2013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발표, <http://www.mest.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2715&mode=view>.

98)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2014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및 다양한 대안적 교육방법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관련 지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수업료 징수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② 개선 방향

과도한 경쟁위주의 교육체제, 사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자사고, 특목고 등 고교서열화를 초래하는 현행 경쟁중심의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준별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격차를 가속화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교 입학제도 개선, 대학서열화 완화에 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입제도의 간소화는 물론 대학서열화가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학력 경쟁이 비정상적인 공교육 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충 및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간 또는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넷째,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의 고교무상교육 실현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대안교육의 확산과 다양한 대안교육 방법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욕구에 충족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 (2) 여가 및 문화활동

### ① 이행 현황

아동·청소년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활동 등 각 영역에 맞는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여유를 갖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문화 및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학력경쟁으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제한되거나,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놀이 환경 또한 아동·청소년 친화적이라 할 수 없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 중 4명의 1명꼴로 여가활동에 불만족을 보이고 있다. 불만족의 가장 주요 원인은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이 있었다. 대학입학을 위한 학습시간이 아동청소년의 여가, 놀이 및 문화활동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공적시설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김영지 외, 2013: 354).

아동·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 소외지역이 있으며, 그 결과,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긍정적인 답을 한 학생들은 48.8%였고, 충분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은 41.2%였다. 아동·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 활동 시간은 1시간 미만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는 학생이 29.7%, 1-2시간은 30.8%, 2-3시간은 17.6%, 3-4시간은 8.5%, 4-5시간은 5.7%, 5시간 이상은 7.6%였다(김영지 외, 2013: 104).

2012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운영한 아동권리옴부즈키즈들이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놀 시간, 안전한 놀 공간 부족은 물론, 자신들에게 적합한 놀이 내용 지원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 ② 개선 방향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첫째,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시설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적인 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아동청소년 전용 공간으로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휴식 및 놀 시간을 권리로서 인식하고 보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휴식과 문화예술 활동 등의 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의 다양한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는 경쟁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아동청소년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발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에 적합한 놀이 문화컨텐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놀이 문화의 실태, 문화·스포츠 활동 등에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정보환경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을 해야 한다.



### (3) 학교폭력

#### ① 이행 현황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다. 그간 정부(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적 처우가 피해자의 피해를 확대하고, 가해자의 반성이나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2년 2월 6일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 3월 26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무관용주의’, ‘엄벌주의’에 따른 엄격한 조사와 조치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 당시 찬·반 논란이 있었다. 현재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된 조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조치 내용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해주거나, 또는 졸업 전 심의하여 삭제토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012년 개정 법률에서는 따돌림으로 인한 아동청소년피해의 심각성과 보호를 위해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규정을 추가하였다.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심리적 공격,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sup>99)</sup>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12.06)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조사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이전과 달리 다국어로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sup>100)</sup>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보다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언어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문자 등 SNS를 이용한 인신공격, 인터넷을 이용한 악성댓글, 블로그, 트위터,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인신공격 등이 사이버 따돌림에

9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0) 교육부 보도자료(2014.03.10).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885>

속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및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교육, 바른언어 사용 캠페인, 학생·학부모·교원의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활용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sup>101)</sup>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 출신 아동·청소년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며, 처리 절차 및 지원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외국 출신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이 겪는 차별경험이나 폭력경험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은 사전예방 및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은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4.4%에 달한 것으로 볼 때 현재 소수집단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육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김영지 외, 201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의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의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 및 제도 추진이 피해학생 보호와 예방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 ② 개선 방향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각 영역에서의 일상생활이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훈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인 폭력근절 캠페인 등 교육과 홍보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학교폭력 보호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신고 및 보호체계, 경찰의 개입, 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기관 등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을 안심하고

101) 교육부 보도자료(2013.11.29.), 2013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1534&mode=view>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각 영역을 초월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인권에 기반한 인권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다양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대·실시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으로 인해 활용시간에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된 자료가 학급에서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현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무관용, 엄벌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급별 공적 대안교육 시설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심리회복 및 지원, 가해학생의 선도와 건강한 공동체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폭력 대응 전담 교직원, 상담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보호조치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6) 특별보호조치<sup>102)</sup>

###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 ① 이행 현황

법무부의 2013년 5월까지 난민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총 5,485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고, 이중 329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173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2,550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		난민통계 종합(2013. 5월 기준)				(단위: 명)
신청	심사결정 종료(4,043)				심사 중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5,485	329	173	2,550	991	1,442	

\* 출처: 법무부(2013. 6. 18) 보도자료, 제목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별첨 5.

102) 이 부분은 박병식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와 윤상석 전 부소장(무지개센터)이 집필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난민 통계 중 별도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의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18세 미만 난민 신청자 누적 인원은 20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난민 인정을 받은 아동은 52명이고, 인도적 체류는 27명, 불인정은 57명이며, 철회는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외, 2013: 362).

난민은 아니더라도 현행 대한민국 제도상 국내에서 외국인 사이의 자녀가 출생했을 때 별도의 출생등록 방법은 없다. 현재 국적법에서 부모 모두가 무국적자이거나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기아(棄兒)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내 출생 등록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어 있다. 외국인의 경우 부모 국적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의 박해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자국 대사관을 통한 출생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김철효, 2013).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통합신청서와 함께 아동 본인의 여권이나 여권신청접수증, 출생증명서 등이 있다. 즉,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아동의 국적국 정부에 출생등록을 하고 국적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에서의 난민 아동청소년 무국적 현황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시설을 지원하며 의료지원과 교육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4년 법무부의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안내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월 지급액은 난민지원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는 382,200원이 지급되고, 난민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경우는 267,54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안내 자료는 난민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국문판과 영문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sup>103)</sup>

주거시설 지원의 경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난민지원센터의 우선

10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내 새소식 게시판 검색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0&strWrtNo=2716&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0&strWrtNo=2716&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해당 내용은 국문판 안내자료의 내용을 정리 기술한 것임.

이용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의료지원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경우 난민신청자 및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sup>104)</sup> 그러나 외국에서의 학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조치나 절차, 세부적인 적용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 법무부와 교육부 간의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와 함께 생후 3개월 유아 구금한 법무부에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단속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구금의 대안적 절차로 보호조치 없이 적정 기간(약 10일 내외) 기간 내에 자국으로 출국하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외국인보호소 구금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총 48명의 아동을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구금 거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5)</sup>

## ② 개선 방향

유니세프를 비롯한 국제 아동기구와 인권단체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장소 등 어떤 요소와 관계없이 국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 UNHCR, 국가인권위원회, 2013: 23). 특히,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엔(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주아동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이주아동의 국내 체류자격 부여, 국내 아동과

104)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105) 국가인권위원회(2010.2.8.). “미등록 아동 구금은 최후조치, 최소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동일한 수준의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익법인 ‘공감’을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민간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sup>106)</sup>

출생 증명과 관련해서는 한국 내 난민을 비롯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출생 등록 증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가족관계등록 제도상 ‘특종신고편철’ 내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당 증명서에는 최소한 출생등록 및 증명사항으로 출생자의 이름, 출생연월일, 출생지, 주소 및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국가 등이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출생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문구도 출생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아동의 국내출생에 관한 등록과 신고’와 같은 별도 조항과 관련 시행규칙과 서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김철효, 2013).

또한, 현재 난민신청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난민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난민심사 처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이의신청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어 난민위원회 심사자료 준비, 국가 정황조사, 심층면담 등을 위한 전담직원의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당사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 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아동인 경우에는 보호자없이 구금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등록 아동의 출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이주상황의 아동

### ① 이행 현황

한국 정부의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 정책은 201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적 근거에 의한 이주아동 교육정책이 아닌 주무부처 차원의 대책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106) 2014년 4월 3일, 공익법인 공감 및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인권포럼과 국회다정다감포럼 등과 함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슈가 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에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도 일부 포함되는 형태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정병호, 2011).

그러나 본격적으로 체류자격 여부,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것은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볼 수 있다. 2010년 8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하여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중학교 입학과 전학, 그리고 편입학에도 준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적으로 이주아동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관련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단서 조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sup>107)</sup> 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즉,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 편입학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반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sup>108)</sup>는 교사 등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 최종 결정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이주아동 교육정책은 ‘자녀에 대한 지원’과 ‘미등록 부모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권고한 바 있었다. 2011년 6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수용해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으로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공교육시스템 운영,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및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up>109)</sup>

10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8)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9) 국가인권위원회(2011.6.27.).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 수용 방침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법무부는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그 부모가 단속된 경우라도 아동의 해당학기 마무리 등을 위해 보호 일시해제 등의 제도를 적극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할 때 출입국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온 것이다.<sup>110)</sup>

또한, 교육부는 2013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해 다문화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sup>111)</sup> 이로써,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문화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다. 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주의 배경이 있는 청소년<sup>112)</sup>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때 이주와 관련된 것 외에 다른 단서 조항(체류자격, 국적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의거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무지개청소년센터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 ② 개선 방향

그간 한국 정부는 이주 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 등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 아동을 위한 공교육 접근성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단체가 수년간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는 그동안 이주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이주 인권가이드라인과 같이 기존 연구와 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에게 아이를 출생등록을 할

110) 국가인권위원회(2011.6.27.),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 수용 방침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111) 교육부(2013.10.22.)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1029&mode=view>

112) 이 법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에서 24세를 말한다.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위법한 상황을 합법화해 주는 결과’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출입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sup>113)</sup>

이 외에도 국가가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의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만 한정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취학 의무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이주 아동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제노포비아’와 같은 현상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무리한 법 제정은 오히려 국민들의 역감정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뉴스1, 2014.4.3.). 따라서 정부의 열린 자세와 함께 국회 등에서는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안 제정을 위해 각계의 입장을 고려해 수정 보완되더라도 다음의 핵심 사항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나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도 부합할 것이다. 첫 번째로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둘째는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 셋째는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 넷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 다섯째는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것, 여섯째는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 일곱째는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항이 출입국관리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조속히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우선 순위에 밀려 법 제정이 무산된 전례를 고려해 법안 제정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3) 노동 착취

#### ① 이행현황

청소년들은 주로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카운터·서빙, 배달, 전단지 돌리기 등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폭언 등 부당행위를 경험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113) 국회인권포럼, 국회다정다감포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2014),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pp. 100-106. 서울: 국회인권포럼, 국회다정다감포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에 노출되고 있다. 불경기로 아르바이트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것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고용을 하는 사업장이 많다(서울신문, 2014.7.8).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전체 830명의 6.5%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79.4%는 용돈을 벌기 위해, 5.4%는 진로 경험을 쌓기 위해, 5.1%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2.3%는 주위의 권유로라고 응답하여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청소년의 경우는 79.6%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5.5%,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6.0%로 분석되었고, 비진학청소년은 78.0%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14.3%, 진로경험을 쌓기 위해서가 1.1%로 나타나 진학청소년은 진로경험을 위해, 비진학청소년은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영식, 2011: 64).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sup>114)</sup>에 따르면 15~24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는 비율은 2007년과 2014년 3월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7년 19.4%, 2008년 22.2%, 2010년 24.9%, 2012년 26.2%, 2014년 26.3%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 겨울방학기간동안 청소년,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95건, 금품관련 위반 30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64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84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331건, 기타 876건 등 법위반 건수가 2,756건(789개소, 85.8%)에 달했다(고용노동부, 2013. 3. 12). 또한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조사 결과, 청소년이 일하는 919개 사업장 중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업체만 538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도 119개에 달하였다(아시아경제 2014. 7.20).

정부(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에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2012년 11월 발표하였다. 사업장 감독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신고체계 구축, 근로환경 자율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인프라 보장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세웠다.<sup>115)</sup>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청년알바실태조사팀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9명은 금전은 물론 육체적인 피해까지도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임금이나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부당해고와 폭력행위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며, PC방과 주점, 편의점의 순으로

114) 성재민,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2007, 2014년의 비교, 월간 노동리뷰 2014년 7월호.  
115) 고용노동부 등(2012.11).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참조.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법규를 아는 아르바이트생들은 6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6)</sup>

고용노동부는 2005년 11월 사고가 나자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2006. 5. 16.)을 발표하며 현장실습의 대상과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추진된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부의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은 2008년 4월 15일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위임되었다. 그에 따라 3학년 2학기 2/3 이수 전에도 파견이 가능하였고, 특히 취업이 강조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수시로 발생하는 취업요구에 따라 현장실습의 시기도 폭넓게 조정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고가 나자,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17.)을 발표하였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일주일에 이틀 휴무보장, 야간 및 휴일 실습 금지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없다(하인호, 2012).

## ② 개선 방향

첫째,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근로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권익과 관련 법률에 관하여 교육한다. 일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면 거의 교과과목 수업을 하지 않는 데다 방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교육을 시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 근로교육은 단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계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혹은 우편으로 지방고용사무소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지방노동사무소가 청소년 고용 계약 및 고용환경을 감독하게 하고, 근로감독관이 하더라도 사업장을 출입·조사하거나 해당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근로계약의 준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청년유니온」(youth community union)이 2010년 3월 13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창립되어, 2013년 4월 30일 정부로부터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립을 인정받았다(이투데이, 2013. 5. 1.). 이에 「청년 유니온」으로 하여금 청소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게 하는 청소년 노동 옴부즈맨으로 활용한다.

116) 뉴스 Y(2014.5.14). 임금체불에 폭력...무법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넷째, 피해 청년들은 어디에 쉽게 하소연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속앓이 끝에 74.4%가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4.5.14.). 이에 고용노동부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이 MOU를 체결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성희롱 및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한 법적 처리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폭력과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아래 센터)가 청소년 3033명(남 1752명, 여 12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장, 상사, 손님한테 맞은 적이 있다'(20%), '성희롱(성폭력) 당한 적이 있다'(1.2%)는 응답이 있다(오마이뉴스, 2014.3.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있어서의 부당노동 문제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가 관여해 왔으나, 폭행이나 성폭력(성희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배달 과정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륜차 사고 발생건수는 1만415건, 사망자수는 405명인데, 이 중 20대 미만 사고 발생건수는 3,098건에 사망자수는 53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고 발생건수가 높게 나타났다(아시아뉴스통신, 2014.7.14.). '빨리 빨리'가 만연한 배달의 경우에 일반 오토바이보다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있다. 이에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에서의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성적 착취

##### ① 이행현황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분석한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징역형 42.8%, 벌금형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60.1%), 집행유예(38.5%), 치료감호(0.4%), 벌금형(0.3%), 보호감호(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 범죄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52.0%), 징역형(31.8%), 벌금형(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윤덕경, 이미정, 장미혜, 주재선, 송효진, 김민정, 임연규, 2012: 31-32).

전체적으로 강간범죄자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징역형의 비율이 집행유예보다 더 높았으나, 징역형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징역형의 비중이 전년대비 3.2%p 증가하였다.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 모두 2011년까지는 징역형은 감소하고 집행유예는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에는 징역형이 증가하고 집행유예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양형을 강화한 때문이라고 보인다(윤덕경 외, 2012).

표 II-4-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2007-2012)

성범죄 최종선고형	성범죄의 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징역형	1,646 (60.1)	1,258 (31.8)	92 (29.3)	2,996 (42.8)
집행유예	1,054 (38.5)	2,055 (52.0)	206 (65.6)	3,315 (47.3)
치료감호	10 (0.4)	19 (0.5)	0 (0.0)	29 (0.4)
보호감호	6 (0.2)	1 (0.0)	0 (0.0)	7 (0.1)
벌금	9 (0.3)	593 (15.0)	14 (4.5)	616 (8.8)
기타	13 (0.5)	25 (0.6)	2 (0.6)	40 (0.6)
계	2,738 (100.0)	3,951 (100.0)	314 (100.0)	7,003 (100.0)

\* 출처: 윤덕경 외(201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7~2012), p. 32.

## ② 개선방향

첫째, 만남사이트 규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만남사이트 규제법」(정식 명칭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임)을 제정하여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인터넷 만남사이트를 이용해 청소년을 성매수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남사이트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만남사이트의 이용에 기인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기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이 법률은 「금지유인행위」라고 하여, 만남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나 교제를 요구하는 입력을 해서는 안 되며, 만남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청소년을 성교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청소년과의 성교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고, 또한 성교행위가 아니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청소년을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청소년과의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청소년은 만남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대책의 개선방향으로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피해 아동·청소년이 남자인 경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치료에서 대상자 자신의 심리를 중시하는 개별면접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전·수강중·수강후·유지관리 수강전·유지관리 수강후로 구분하여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 관리자의 양성과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화학적 거세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서는 약물치료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의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이나 인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약물치료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의 최대수용기간을 연구하여 이를 최대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sup>117)</sup> 또한 성충동약물치료의 경우 약물투여만 할 것이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며<sup>118)</sup>, 성범죄자라 할지라도 결혼의 자유와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치료를 하는 탄력적 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활한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부착자의 주소지 근처의 주택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기계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 기계경비업체의 대치요원(출동요원)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 직원의 업무를 보조케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계경비업체의 대치요원은 범죄발생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출동하여 범인과 대치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에, 피부착자가 저항하거나 난동을 부리더라도 그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117) 이희경, 화학적 거세에 대한 쟁점과 논의, 보호관찰 제12권 1호, 2012, p.179.  
 118) 이동명/박현정,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2집(2015), p.29; 임정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법정(2011년 2호), p.192.

## (5) 아동·청소년 음란물

### ① 이행현황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 결정 및 고시를 통해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방송·영상물·간행물·음반 등 매체분야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고발조치, 심의요청, 유해매체물 결정, 그리고 고시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여기에서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과 성폭력을 포함한 형태의 폭력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포함될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명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동법 제13조 1항), 포장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1항).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동법 제16조 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sup>119)</sup>에는 방송할 수 없다(동법 제18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동법 제41조 1항).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

11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①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해서는 아니 되는 방송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동법 제41조 1항),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42조).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동법 제42조의2), 일정한 범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2조의3).

## ② 개선방향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범람하는 것을 현행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만으로 규제하기란 곤란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입법대책과 법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참고가 되는 것이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2008년 6월에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업자의 필터링 의무이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이용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동법 제16조),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는 계약의 상대방이나 단말기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이용을 조건부로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동법 제17조), 필터링 소프트웨어 또는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을 쉽게 하는 조치를 한 후에 기기를 판매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둘째로, 청소년이 인터넷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시, 시책의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내각에 「인터넷 청소년 유해대책·환경정비추진회의」를 설치하고(동법 제8조), 총리를 회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9조).

셋째로, 국내외 인터넷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인터넷 상의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설치하였다. 연락회의는 인터넷의 위법·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청소년을 대폭 줄일 것을 목표로 「인터넷 위법·유해정보에 관한 집중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유해사이트를



선전하는 스팸메일의 규제, 정보윤리교육의 실시, 인터넷 핫라인 센터 설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6) 인신매매

### ① 이행현황

2013년 4월 5일 개정형법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조항을 대폭 개정하였다.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인신매매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의 일환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또한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현재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규정된 범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인신매매죄(제289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제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죄(제292조)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인신매매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이용한 행위라는 점에서 인신매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매매춘 관련 업소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여자 청소년이 외국의 유흥가로 팔려나가거나 동남아나 동구권의 여자 청소년들

이 국내로 들어와 매매춘을 하는 국제적 인신매매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자(제13조 2항),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한 자(이상 제14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 영업한 자(제15조)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다.

한편,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다.<sup>120)</sup>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분석한 여성가족부의 자료<sup>121)</sup>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29.3%이고, 집행유예가 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2007~2012)

최종선고형 \ 성범죄	성범죄의 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강요	
징역형	1,646 (60.1)	1,258 (31.8)	92 (29.3)	2,996 (42.8)
집행유예	1,054 (38.5)	2,055 (52.0)	206 (65.6)	3,315 (47.3)
치료감호	10 ( 0.4)	19 ( 0.5)	0 ( 0.0)	29 ( 0.4)
보호감호	6 ( 0.2)	1 ( 0.0)	0 ( 0.0)	7 ( 0.1)
벌금	9 ( 0.3)	593 (15.0)	14 ( 4.5)	616 ( 8.8)
기타	13 ( 0.5)	25 ( 0.6)	2 ( 0.6)	40 ( 0.6)
계	2,738 (100.0)	3,951(100.0)	314(100.0)	7,003(100.0)

\* 출처: 윤덕경 외(201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7~2012), p. 32.

1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121) 윤덕경 외(201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07~2012), pp. 31~32.

## ② 개선방향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인신매매 범죄는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범죄는 피해를 입는 아동·청소년의 심신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에 엄청난 이익을 남게 하고 사회불안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과 관련된 일이다.

국내에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신매매의 문제가 심각한 분야가 있다. 내국인들이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함으로써,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이 그 국가에서 인신매매되거나 유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내국인의 외국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단체 외국관광을 주선하고 있는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불법적인 인신매매를 알선하는 가이드와 여행사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국가와 공조한다. 둘째로, 관광·사업·출장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들을 계몽하기 위해 국제공항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불법성과 해당 국가에서 체포될 경우에 국내에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내용의 팸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계몽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단속활동으로서 우리 경찰관을 동남아의 관광지 등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내국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적극 단속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국내의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성매매의 희생이 된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자립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 (6)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 ① 이행현황

「아동권리협약」 제38조 제3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금지하고,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징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122)</sup>

122) 「아동권리협약」 제38조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연장자 순으로 징집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하며(제2조),<sup>123)</sup> 개인이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1항).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발적 입대를 허용할 경우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3항).<sup>124)</sup>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제3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은 18세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고(제8조),<sup>125)</sup>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1항).<sup>126)</sup> 그러나 육·해·공군 모집병의 경우에는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하여 합격시는 18세부터 입영도 가능하다(제20조 1항).<sup>127)</sup> 이처럼 우리 병역제도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개선방향

병역법에서의 연령 계산이 민법의 계산과 달리, 생일이 빠르고 늦음에 관계없이 현재년도에서 본인의 출생년도를 빼면 되도록 되어 있다.<sup>128)</sup> 예컨대, 2014년도의 경우 1996년생은 생일이 빠르고 늦음에 관계없이 1996년 1.1부터 12.31까지 출생자 전원이 18세가 된다. 결국, 아직

123)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24)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3조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 제3항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이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들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당사국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제38조 제3항의 연령보다 높여야 한다.
3. 18세 미만의 자에게 자국 군대의 자발적 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안전조치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 (a) 그러한 입대가 순수하게 자발적일 것;
  - (b) 그러한 입대가 당사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통보와 함께 이루어졌을 것;
  - (c) 그들이 이와 같은 병역에 관련된 의무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을 것;
  - (d) 그들이 병역근무를 수락하기 전에 연령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

125) 「병역법」 제8조(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126) 「병역법」 제11조(징병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27) 「병역법」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28) 「병역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생일을 맞이하지 않아 만 18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육·해·공군에 지원이 가능하고 입영도 가능한 것이다.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하며(제2조),<sup>129)</sup> 개인이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1항). 그런데 우리 「병역법」은 만 18세가 아니라 연 18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합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8) 소년사법 운영

### ① 소년전문법원

#### 가. 이행현황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sup>130)</sup>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법원조직법」도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3항).<sup>131)</sup>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소년에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7조).<sup>132)</sup> 결국 현재 소년사건만을 전담하는 소년전문법원이 없으며,<sup>133)</sup> 소년

129)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의 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30) 「소년법」 제3조(관할 및 기능)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131) 「법원조직법」 제37조(가정법원장)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132)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33)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의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형사사건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법원에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다.

### 나. 개선방향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3년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 및 전문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건의하였다.<sup>134)</sup> 그러나 법관의 인사가 1~2년만에 이루어지고 소년의 형사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사법시스템에서는, 소년사건 전문법관의 전문성 강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sup>135)</sup> 소년의 비행 행위를 일반 성인의 범죄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년 형사사건과 소년 보호사건을 구분하고 관할도 다르게 정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의 이원화 방식을 통일적·유기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sup>136)</sup>

## ② 보조인 제도의 확충

### 가. 이행현행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5조는 소년에게 모든 절차에서 법적 조언에 의해 대리 받을 권리, 혹은 무료 법률부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가 사법절차에

- 3. 특허법원
- 4. 지방법원
- 5. 가정법원
- 6. 행정법원

134)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3년 9월 25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소년 전문법관 및 전문조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원 확충 및 예산 확보 등의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뉴시스, 2013. 9. 25, “사법정책자문위, 가정법원 기능 확대 건의”. 또한 2004년 5월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로 출범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2005년 5월 제5차 전체회의에서 마련한 ‘가사소년제도 개혁 최종안’에도 소년법원을 설치해 소년사건을 법원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할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조직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담겨져 있었다. 법률신문, 2005. 12. 19, “2005년 법조계 결산: 법원”

135) 이승현, “한국 개정소년법상 소년의 권리보장”, 소년보호연구 제11호, 2008, p.11; 오영근,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 p.22; 원해욱, “국선보조인제도의 개선방안: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2007.9, p.79; 이규호, “소년형사범 처리의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2권 2호, 2012, p. 378 참조

136) 2012년 5월 21일 개최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에서 주재광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상당수의 소년 형사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되고 있다”며 “형사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년법 처리 절차와 관할의 이원화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구속 피고인은 미결 구금이 장기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이 소년형사부와 소년부를 오가며 좌절하거나, 구속 상태에서 범죄 문화에 노출되고 범죄의 재학습화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 판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된 소년법원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소년법원에 소년 형사사건부와 소년 보호사건부를 뒀 사건처리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신문, 2012. 5.24, “학교 폭력, 가해-피해자 ‘화해권고’... 62건 중 48건 성공 거둬”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37)</sup>

우리 소년법도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7조 1항),<sup>138)</sup> 2007년 개정 소년법은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직권 혹은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①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의2).<sup>139)</sup>

일반형사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거나 국선변호인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33조).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변호인제도를 부인하고 보조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검사의 공격과 피고인의 방어에 의해 진행되고 법원이 공평한 제3자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는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은 공격당사자인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수비당사자인 피고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소년법관은 공평한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소년을 보호하는 후견자로서 비행의 실체와 소년의 요보호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사건에서는 소년의 보호자로서의 변호인은 필요 없고, 소년의 보호자 내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 법관의 업무를 보조할 보조인이 필요하게 된다.

소년법은 과거 법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선보조인은 인정하는 대신에 국선보조인은

137)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5조(변호사·부모·보호자)

1. 소년은 모든 절차에서 법적 조연에 의해 대리 받을 권리, 혹은 무료 법률부조가 준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부모나 보호자는 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또한 권한 있는 기관은 소년의 이익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절차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년의 이익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를 절차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138) 「소년법」(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139) 「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소년법관이 소년조사관들의 보조를 받아 재판을 진행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 또는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무죄 혹은 유리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법관이나 조사관들이 소년들에게 유리한 활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년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적법절차의 준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2007년 12월 소년법을 개정하여 국선보조인을 인정하게 되었다.

#### 나. 개선방향

첫째, 전건 보조인 제도의 실현이다. 보조인의 역할을 특히 필요로 하는 것은 구속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이나 무겁게 처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의 소년 등이다. 이런 소년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 보조인이 될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촉구하며 소년 스스로가 선임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사건 전건에 보조인을 붙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sup>140)</sup>

둘째, 민간 보조인 제도의 활성화이다.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보조인을 법률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년이나 보호자가 보조인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적절한 처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년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성인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보조인이 소년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성인이 된다면, 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갱생에 보조인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민간 보조인이 심판 단계부터 접촉하는 장점은 결코 적지 않다.<sup>141)</sup> 소년이 구속된 단계부터 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소년이 심판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소년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민간 보조인은 소년의 사회복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소년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가정과 친구관계 등 주변환경을 해결함으로써 소년의 갱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40) 石井小夜子, “付添人活動のあり方”, 『新版 付添人活動のマニュアル』, 日本辯護士連合会, 2003, p. 5.

141) 일본 도쿄의 보조인 활동 NGO 단체인 「비행극복지원센터」는 1996년 「비행과 직면하는 부모의 모임」이 활동의 폭을 넓혀서 2002년에 법인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취업과 직업 상담, 학교와 진로 상담, 학습부진·공부방법의 지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大家菜々子, “少年事件における付添人の必要性と役割についての考察”, 明治学院大学 紀要, pp. 16~18.



### ③ 소년구치소의 설립과 소년교도소의 확충

#### 가. 이행현행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3조 4항은 소년은 성인과 분리하여 취급되며, 성인까지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구획을 달리하는 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다.<sup>142)</sup>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1조 1항 2호).<sup>143)</sup>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2항).<sup>144)</sup> 일반교도소 내의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잔형기가 6월 미만인 경우, 여죄가 있는 경우, 환자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에 한한다.

#### 나. 개선방향

첫째, 소년수형자의 경우에는 교도소와 소년교도소의 구분수용 및 성인과 소년의 분리수용이 준수되고 있으나, 문제는 소년형사피의자나 소년형사피고인을 수용하기 위한 독립된 소년구치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년피의자와 성인 피의자의 철저한 분리수용을 위해서는 소년형사피의자나 소년형사피고인을 수용하는 소년만을 위한 독립된 미결구금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45)</sup> 둘째, 소년교도소의 증설이다. 현재 소년교도소는 김천 1곳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이 소년수형자와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소년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유지시키며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지는 주거지와 근접한

142)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3조(심판을 위한 신병구속) ④ 심판을 받기 위해 신병이 구속된 소년은 성인과 분리하여 취급되며, 시설을 달리 하든가 혹은 성인까지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구획을 달리 하는 장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14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1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분리수용) 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145)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여 소년사건 처리절차에서 구속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집행하는 미결수용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해서 조사와 교육처우가 함께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다. 이규호, “소년형사범 처리의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2권 2호, 2012, p.384. 그러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소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구치소의 대체 시설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곳에 수용시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국의 거점마다 소규모의 소년교도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 ④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 가. 이행현황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처분의 지도원리로서 “신체의 자유의 박탈은 소년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수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행하거나 기타 중대한 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는 때가 아니고서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1항 C).<sup>146)</sup> 즉, 시설내 수용을 대체할 방법을 최대한 촉진하며, 현존하는 대체적 제대를 최대한 이용해야 하고, 공공안전에 유의하면서도 새로운 대체적 제재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선고유예, 조건부 판결, 위원회 명령 기타 처분을 거치더라도 가능한 한 사회내 처우로서 보호관찰이 많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sup>147)</sup>

소년법도 사회내 처우로 보호관찰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의 개정으로 보호관찰제도가 크게 변화되었다. 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되어 있던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제2·3호)으로 하고, 단기보호관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보호자교육, 외출제한명령 등을 도입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였다(법무연수원, 2013: 396).

한편, 범죄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선도별 기소유예처분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기소유예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소년은 미완성인격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회악에 쉽게 감염되는 한편, 개선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범행내용이 다소 무겁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엿보이는 소년에 대하여는 그를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보호에 맡기는

146)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7조(심판 및 처분의 지도원리) 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처분은 다음 지도원리에 의거하여야 한다.

(c) 신체의 자유의 박탈은 소년이 타인에 대한 폭력을 수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행하거나 기타 중대한 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는 때가 아니고서는 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147)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7조 1항 (C)는 소년 사건에서 공공안전을 지킬 다른 적절한 대응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수용의 회피를 지향하고 있는 제6회 유엔범죄방지회의 제4결의의 지도적 원리의 하나에 대응하는 것이다.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1978년 4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1981년 1월부터 전국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의 일부개정으로 법제화 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3).<sup>148)</sup>

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법원이 형사제재수단으로서 자유형에 비하여 비교적 혁신적이면서 재범방지 효과가 있고, 국가예산을 큰 폭으로 절감하면서도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벌금대체 사회봉사자 대한 집행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역형 종료 이후 부착대상자에 대한 전자 감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보호관찰 대상인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2008년도 184,813명, 2009년 218,049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도부터 다소 감소하였다. 2012년도 전체 실시사건은 2011년 대비 0.8%가 감소한 178,199명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처분별 분포는 집행유예자 47.2%(84,250명),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자 34.7%(61,850명), 선도위탁 4.2%(7,516명), 가석방자 3.6%(6,462명),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대상자 3.3%(5,954명), 벌금대체 사회봉사 2.4%(4,282명), 가정보호처분 1.5%(2,589명), 임시퇴원자 1.1%(2,009명), 가출소·가종료자 0.6%(1,156명), 성매매보호처분 0.6%(1,018명), 형기종료자 0.4%(708명), 선고유예자 0.02%(32명)의 순서이다(법무연수원, 2013).

2003년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은 6,122명을 기록한 이래 2009년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2,967명(58.2%), 2011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1,604명(54.1%) 이 각각 줄어들어 커다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2년도에는 5,812명으로 전년에 비해 4,449명(32.4%)이 다시 증가하였다(법무연수원, 2013).

#### 나. 개선방향

구금형은 범죄자를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국가의 관리 하에 두고 교정을 시킴으로써 사회안전에 기여한다는 보안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가두어둠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148) 「소년법」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다는 객관적 이익의 박탈이 처벌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옹보적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구금형은 많은 폐해도 지적되고 있다. 구금형의 폐해는 수형자의 내적 문제와 사회로부터의 외적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수형자의 내적 문제로는 사회 부적응의 초래, 인격의 타율화, 자존심의 저하, 범죄성의 진행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교도관과 동료 수형자와의 좁고 고정된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출소 후에 인간관계를 구축하기가 자연히 서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외적 문제로는 형사시설에서는 주변의 모두가 범죄자라는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 성향이 진전된다. 실형이 확정되는 직장을 잃으며, 이는 인간관계의 상실로 이어져 생활기반을 잃게 되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사회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배제하려고 하며, 이것이 다시 인간관계의 상실과 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 속에서 고립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내 처우를 강조한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 제17조 1항 (C)의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처분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소년원의 시스템이다. 소년원은 “소년원은 사법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비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특성화교육, 교과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처우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인격을 도약케 한다는 점에서 소년교도소와는 법적·이념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3:438)”고 설명되고 있지만, 과연 현행 소년원의 교정교육이 소년들의 재사회화를 원활하게 촉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으며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등 시설내 처우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sup>149)</sup> 더욱이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인 「8호 처분」은 체계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하기에는 기간이 짧은 반면에 구금에 따른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어 사회내 처우를 강조하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호관찰관의 인원 부족이다. 보호관찰관 1인당 124명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1인당 46명, 일본 43명, 영국 25명, 호주 17명을 담당한다. 올해 법무부 예산(2조6801억 원) 중 보호관찰 분야 예산은 1202억 원(4.5%)이다. ‘야간외출금지’ 확인을 자동음성 통화로 한다.<sup>150)</sup>

149) “10대 초범이 전과 20범을 포함한 15명의 범죄자와 한 방에서 집단생활”. 중앙일보 2014. 7. 15 기사 참조. 법무부가 2017년 까지 각각 100여 명의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는 소년원을 의정부와 창원 두 곳에 신설키로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14일 내놔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정교육과 보호관찰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라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8) 범죄피해자 보호

### ① 범죄피해자 보호

#### 가. 이행 현황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sup>151)</sup>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제6조),<sup>152)</su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조 1항).<sup>153)</sup>

한편, 각종 범죄별로 아동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등을 비롯한 10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sup>154)</sup>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의 지원(제29조 1항)과

150) 중앙일보 2014. 7. 8 기사 참조.

15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15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15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4)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취학지원(제29조 5항) 등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155)</sup>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의4 1항),<sup>156)</sup>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동반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의5 1항).<sup>157)</sup> 또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1항).<sup>158)</sup>

## 나. 개선방향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범죄피해자의 구조·보호·지원에는

- 
- 155)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15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15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직업훈련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158)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위기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이때가 바로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강간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취해야 할 치료와 증거확보, 피임조치, 주거제공, 피해자진술 등은 모두 경찰과 관련된 일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조사에서의 아동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매우 드물며, 성범죄로 인한 피해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나치게 유도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거나 구체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피상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성급히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조사는 결국 재조사로 이어지며, 재조사로 인한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은 더욱 악화되고 나아가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 가정의 평온함마저 저하시키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높다(김태경, 이영호, 2010). 아동은 미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동진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후에 그 이해를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기억과 언어능력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기법이 아동진술의 정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기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박종선, 2010).





## 제 Ⅲ 장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인권정책 분석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



## 제 III 장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인권정책 분석

###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sup>159)</sup>

#### 1) 해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1) 해외 아동인권지표 검토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아동인권 및 복지(well-being)와 관련한 지표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유엔과 유럽연합과 같은 기관에서 지표개발이 수행되기도 하며, 또는 개별국가나 기관, 연구자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인권지표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 130여개 지표로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지표와 관련 인권영역 및 분류와 맞지 않거나, 또는 인권이슈에 따라 시의성을 고려한 지표를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개별적인 지표항목 모두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수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 인권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많은 세부 지표항목들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핵심적인 인권상태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따라서 각 아동인권 영역별 주요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졌다.

일부에서는 수많은 이러한 아동·청소년인권 지표 중에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159) 이 부분은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sup>160)</sup> 비교 가능한 국제적인 아동인권 관련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공통된 인권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비교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핵심적이면서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인권지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인 아동청소년인권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절에서는 유럽연합 기본권기구(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EU FRA)의 ‘아동청소년인권지표’와 캐나다의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그룹(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 Group)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일반논평 제7호’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한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161)</sup>. 이러한 국제적인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접근방식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 특히 핵심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지표개발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 (2) 해외 아동인권지표체계 : 유럽연합(EU)의 아동·청소년인권지표 사례

유럽연합의 아동·청소년인권지표는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서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이 유럽연합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보고서는 기존의 아동복지지표(child well-being indicators)가 아닌 아동의 권리측면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비준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틀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아동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으로써 유럽연합의 중요한 가치들에 부합하며 지표를 적용하는데 접근성이 좋고 정책적 관심이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지표를 개발하였다(EU FRA, 2009). 이 보고서는 특히 유럽연합의 활동에 기반하여 유럽연합의 법과 정책이 어떻게 아동권리에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제적 기준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지표들

160) 수년 동안 본 인권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각 인권영역별 분과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바로 국제비교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아동청소년인권지표 중 국제비교가 가능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논의가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의 지표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해외의 아동인권지표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161)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child-wellbeing 지표와 아동 인권 지수(child rights index)등에 대한 기술은 제외하였다.

개발하였다(김영지 외, 2013).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의 보고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채택하고 있는 인권지표에 대한 구조·과정·성으로 측정하는 모델을 기초로 하여, 성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닌 과정과 절차, 그리고 정책의 영향도 반영하려고 하였다(김영지 외, 2013).

2013년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에서도 이 유럽연합 보고서에 대해 살펴 본 바 있으며, 주로 보고서의 개요와 배경, 개발 기준 및 개념적 틀, 개발 범위와 같은 보고서의 전반적인 개요와 지표개발 배경과 과정, 그리고 주요 지표 예시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루고 있지 않아서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및 핵심 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들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는 각 지표 영역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의 보고서에서는 4가지의 핵심영역에 따라 지표를 구성하였는데, ‘가족환경과 대안적 보호’,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적절한 생활수준’, ‘교육, 시민성 및 학교와 스포츠관련 활동의 참여’를 핵심지표 영역으로 해서 각각의 영역에 따라 <표 III-1-1>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II-1-1 FRA: 지표 집단별 각 지표 핵심영역의 범위**

핵심영역	지표 집단			
가족환경과 대안적 돌봄	가족정의(Family justice)	이주로 인해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권리와 복지	가족 재결합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아동 인신매매 - 희생자 확인 - 희생자 보호 - 가해자 처벌 - 예방	성적·경제적 착취 - 희생자 확인 - 희생자 보호 - 가해자 처벌 - 예방	아동에 대한 폭력 - 희생자 확인 - 희생자 보호 - 가해자 처벌 - 예방	
적절한 생활수준	아동 소득 빈곤	정부 대응의 영향	아동의 주관적 인식뿐만이 아닌 소득 빈곤 이외의 측면	
교육, 시민권과 문화적 활동	교육 접근 가능성	교육 적응 가능성	개인적 발달	시민권과 참여

\* 출처: EU FRA(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p. 16.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의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김영지 외, 2013).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에 따른 지표체계로써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장애 등과 관련된 지표는 크게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특히 ‘가족환경과 대안적 보호’ 영역과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에서는 그 지표가 매우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아동 인신매매와 성적·경제적 착취,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희생자에 대한 확인과 보호, 그리고 가해자 처벌과 예방까지 철저한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세부지표에서는 특히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인 유럽에서의 유럽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표가 연관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법과 정책의 특별한 영역에 대한 요약도 함께 제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 보고서의 연구팀은 현재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기초 하여 2012년부터 각 영역별 지표개발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각 핵심영역별 지표내용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지표에 대한 검토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의의가 있다.

#### 가. 가족 환경 및 대안적 돌봄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의 아동인권지표와 관련하여 ‘가족환경 및 대안적 돌봄’의 지표그룹(indicator group)은 ‘아동중심 가족 사법절차 유무’, ‘친권, 접근권 및 유지 절차의 강화’, ‘국경에서의 납치에 대한 아동 복지 모니터링 장치’, ‘이주절차에의 아동 참여’, ‘분리된 아동들이 취약성에 대응하는 이민절차의 적용’, ‘아동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가족 재결합 권고 법령의 유무’, ‘아동을 포함한 사건에서 가족 재결합 촉진 절차의 유무’, ‘가족 재결합 후 아동의 복지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유무’ 등 총 8가지의 지표그룹이 있으며 각각의 지표그룹에는 3~4가지의 세부적인 지표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EU FRA, 2009).

지표그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환경 및 대안적 돌봄’의 경우 유럽 내 이민과 망명과 같은 문제에서의 아동과 가족의 분리, 그리고 국제적인 친권분쟁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EU FRA, 2009). 특히 유럽국경에서의 아동납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문적 상담과 지원, 응급조치, 국가 간 협조관련 내용, 망명과정에서 부모와 분리된 아동들을 위한 법적 변호 및 검토 장치 존재 유무, 부모와 분리된 아동들의 이민 및 망명절차에 관한 내용, 가족과 떨어진 아동의 가족과의 재결합과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의 전문가 지원 및 제3국가 망명 수용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EU FRA, 2009), 아동과 관련한 유럽현실을 반영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망명과정에서의 부모와의 분리문제를 포함한 망명/난민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장의 직접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탈 주민 아동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논의에서는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와 좀 더 연관성을 보이는 ‘아동중심가족 사법절차 유무’와 ‘친권, 접근권 및 유지 절차의 강화’에 대한 지표내용만 살펴보았는데, 가족관련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과정의 법적 절차의 유무, 아동을 위한 변호 제공, 그리고 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이주/난민 아동의 경우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간편하고 신속한 법집행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EU FRA, 2009).

표 III-1-2 EU FRA: 가족환경 및 대안적 돌봄(일부 지표 제시)

지표 그룹	지표	지표유형
아동 중심 가족 사법 절차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연령과 능력에 맞추어 친권, 접근권, 유괴 등의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자문하는 법적 의무의 존재</li> <li>• 아동과의 개별적 자문을 위한 가족절차나 규정에서 아동을 위한 특별 변호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의 존재</li> <li>• 아동의 연령 및 능력에 맞추어 중재과정에 아동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권고 혹은 의무의 존재</li> </ul>	구조/과정
친권, 접근권 및 유지 절차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그 2007 지침에 따른) 간편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집행절차 유무</li> <li>• 법적 체계, 절차 및 언어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조언 및 정보 이용 가능성</li> <li>• 절차 불응 케이스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전문적인 법적 자문과 재정적 지원</li> </ul>	구조/성과

\* 주: 여기서는 유럽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망명, 이주/난민 가족과 그 아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 출처의 해당페이지 참조 요망.

\* 출처: EU FRA(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pp. 17~29. 일부 발췌·번역.

#### 나.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의 아동보호’의 지표 영역에서는 아동과 관련한 매우 심각한 이슈들에 대한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안전한 거주지가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인신매매(Child trafficking)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인신매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유럽 내에서의 국경지대, 또는 이주/난민상황에서의 아동인신매매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국외이송에 대한 문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보호체계, 가해자에

대한 기소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EU FRA, 2009). 이 부분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문제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III-13>에서는 이주/난민 아동과 관련한 인신매매 부분을 제외한 성적/경제적 아동 착취, 그리고 아동에 대한 폭력 등 우리사회에서 현재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한 지표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I-1-3 EU FRA: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지표 그룹		지표	지표 유형
성적/경제적 아동 착취	피해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적 아동 착취: 성적 착취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감시 기제의 존재(예, 청소년복지 정부부처의 체계적인 훈련 등)</li> <li>경제적 아동 착취: 경제적 착취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감시 기제의 존재(예, 청소년 복지 당국의 체계적인 훈련)</li> </ul>	과정
	피해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성매매: 매춘으로 착취된 아동과 함께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을 모색 하는 사회사업 지원 및 사회 복귀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li> <li>아동 학대 이미지: 아동 포르노/아동 학대 이미지에 대한 피해 아동 보호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의 존재(예, 미디어에 의한 개인 침해 행위로부터의 보호, 심리적 치료)</li> <li>아동 학대 이미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휴대폰 회사, 검색 엔진 및 기타 관련 조직이 아동 포르노/아동 학대 이미지를 포함하는 서비스와 웹사이트를 정부에 보고하고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의 존재(성행위를 목적으로 상대 아동을 구하는 채팅룸 포함)</li> <li>경제적 아동 착취: 일터에 있는 청소년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노동 감찰 방문의 수치(예, 노동 시간, 안전 및 건강관련 문제 등)</li> </ul>	구조/과정/성과
	가해자에 대한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적 아동 착취: 치외법권적 법률 하의 “성매매 여행” 관련 매춘 사례의 수 (해외에서 행해지는 아동 성 착취와 관련된 위법행위)</li> <li>아동 학대 이미지: 아동의 실제 이미지 혹은 성 착취적 표현을 통하여 아동의 포르노/아동 학대 이미지를 생산, 배포, 수령 및 소유하는 것을 형사상으로 기소하는 법적 규정의 존재</li> </ul>	구조/성과
	아동 착취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학대 이미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의무적인 부분으로써 ‘온라인상에 서의 안전’ 관련 정보와 인식개선(IT 훈련 수반)</li> </ul>	과정
	피해자에 대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력의 발생, 규모, 아동 폭력의 유형, 관련 서비스의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리서치를 위해 고안된 국가 예산</li> <li>아동 복지 당국에 보고된 전체 아동 보호 사례 중 방임으로 인하여 아동 복지 당국에 보고된 아동의 수</li> </ul>	구조/성과
	피해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의 존재(가정, 학교, 기타 보호 기관 포함)</li> </ul>	구조/성과



지표 그룹		지표	지표 유형
아동에 대한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의 정보와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예.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사의 서비스)</li> <li>• 폭력이나 착취를 당한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치료적 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규정의 존재</li> </ul>	
	가해자에 대한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폭력으로 경찰에 보고된 유죄선고의 수와 아동 폭력 사례(신체 및 성적 학대 포함)</li> <li>• 아동 피해자 및 폭력 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성(gender) 배려 법정 절차에 목적을 둔 법적 규정의 존재(지정된 면접실,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기 위한 비디오 진술 등)</li> </ul>	구조/과정/성과
	폭력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이행되는 긍정적 부모 교육 캠페인을 위한 공공 기금의 존재(비폭력 훈육을 다루며 유아 체벌, 아기 흔들기 등을 줄이기 위한)</li> <li>• 행방불명된 아동을 포함한 실종 아동에 대한 청소년 복지 당국, 경찰, 미디어의 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의 존재</li> <li>• 학교로 하여금 학생들 사이의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과 관련한 아동 보호 정책을 적용하도록 하고 집단따돌림 방지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는 법적 규정의 존재</li> </ul>	구조/절차

\* 출처: EU FRA(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pp. 30~37에서 일부 발췌·번역.

성적인 착취의 피해자 확인에 있어서, 이 보고서에서는 성 착취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으로서 가정 폭력 상황에 있는 경우, 또는 불법거주와 같이 거주 허가가 없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청소년복지관련 정부부처의 체계적인 훈련 등을 통한 감시 기제의 존재와 같은 부분을 지표로써 포함시키고 있다(EU FRA, 2009). 경제적 착취위험에 처해있는 경우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잘 묘사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 비즈니스나 사업에 있어 노동 때문에 아동의 교육권이 박탈되거나, 인신매매가 되는 경우 등 경제적인 논란과 연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 기제를 강조하고 있다(EU FRA, 2009).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동성매매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착취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사업 지원 및 사회복귀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지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절한 사회복귀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성착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아동인권 지표화하여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에 있어 폭력의 발생, 규모, 아동폭력의 유형과 관련서비스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 아동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매우 필수적이다(EU FRA, 2009). 이러한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효과적인 아동권리정

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특히 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로써 폭력이나 착취를 당한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역시 실질적인 아동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 다. 적절한 생활수준

‘적절한 생활수준’의 지표영역에서는 아동 소득 빈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개입의 영향, 소득 빈곤이 아닌 물질적 결핍(아동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지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 소득 빈곤이 경우 절대적인 물질적 결핍을 의미하는 절대 빈곤과 중위소득 40~60% 미만의 상대적 빈곤 모두 아동의 빈곤과 관련한 중요 지표이다.

표 III-1-4 EU FRA: 적절한 생활수준

지표 그룹	지표	지표유형
아동 소득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 아동 빈곤</li> <li>• 상대적 세대 빈곤(성인 빈곤인구와의 비교)</li> <li>• 빈곤 격차</li> <li>• 절대 빈곤</li> <li>• 빈곤의 지속</li> </ul>	성과
소득 빈곤에 대한 정부 개입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대한 상대적 공공 지출</li> <li>• 상대적 아동 빈곤에 대한 정부 개입의 영향</li> <li>• 아동 혜택 내용</li> </ul>	성과
소득 빈곤이 아닌 물질적 결핍: 아동의 주관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의 풍족함</li> <li>• 아동의 교육적 소유물</li> </ul>	성과

\* 출처: EU FRA(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pp. 38~43에서 일부 발췌·번역.

유럽연합 기본권(FRA)기구의 인권지표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특히 ‘빈곤의 지속’ 지표를 언급할 수 있다. 빈곤자체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특히 지속적인 빈곤이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인지적, 심리정서적 발달과 이후 학업성취와 행동적 문제 등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McLoyd, 1998).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이 일시적인 빈곤인지, 아니면 만성적인 빈곤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단순한 소득빈곤뿐 아니라 물질적 결핍과 관련하여 아동이 거주하는 주거상태와 또 학업을 위해 필요한 책상 및 컴퓨터와 같은 기자재까지 지표내용

에 포함시킨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빈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리고 그 영향과 실제 혜택내용 역시 지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라. 교육, 시민권 및 문화적 활동

‘교육, 시민권 및 문화적 활동’에 해당하는 지표 그룹은 ‘교육접근성’, ‘교육적응성’, ‘아동의 적극적 시민권 및 학교에서의 참여 및 관련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접근성에서는 특히 이주/난민 아동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와 가족체계 밖에서 보호받는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의 중등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성별,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가족 수입, 부모의 직업 및 교육수준), 이주배경, 출신민족, 장애유무 등에 따른 차이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EU FRA, 2009). 교육적응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출신 이주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재정적지원이나 언어와 관련한 보충수업 등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지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신체적, 정서 행동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민가정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경우와 같은 취약계층 아동의 특별한 지원에 대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EU FRA, 2009).

표 III -1-5 EU FRA: 교육, 시민권, 문화적 활동

지표 그룹	지표	지표유형
교육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된/이민 아동이 국민과 동등한 수준에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존재</li> <li>• 같은 연령대 그룹의 아동 중 가족 체계 밖에서 보호받는 아동</li> <li>• 같은 연령대 그룹의 아동 중 주류에 속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li> <li>• 같은 연령대 그룹의 아동 중 중등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15-19세의 청소년</li> </ul>	구조/ 성과
교육 적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 성별, 문화 및 언어 습득에 있어서 민감한 외국출신 아동을 위한 학교에서의 특별 지원 제공(예, 재정적 지원, 여행보조, 언어 보충 학습 등)</li> <li>• 같은 교육수준의 아이들 중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받는 장애 아동</li> <li>• 같은 교육수준의 아이들 중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받는 정서, 행동 또는 학습 장애 아동</li> <li>• 같은 교육수준의 아이들 중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받는 취약 아동(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이민 배경 등)</li> </ul>	과정/ 성과
아동의 적극적 시민권, 학교에서의 참여 및 관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다음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혹은 학생회에의 참여</li> <li>- 학급 대표 활동</li> <li>- 학생 회의에서의 적극적인 역할</li> <li>- 또래 중재자 역할</li> <li>- 학교 신문에 대한 협력</li> <li>- 또래 멘토 혹은 상담자로 활동</li> </ul> </li> </ul>	과정/ 성과

지표 그룹	지표	지표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사회 혹은 정치 활동에 참여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혹은 청소년 포럼에의 참여</li> <li>- 아동 혹은 청소년 협의회/조직에의 참여</li> <li>- 아동 혹은 청소년 의회에서 대표로서 활동</li> <li>-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여</li> <li>- 모금 지원 활동에의 참여(예, 서명 수집)</li> <li>- 항의시위에의 참여</li> <li>- 자원활동에의 참여</li> </ul> </li> </ul>	

\* 출처: EU FRA(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pp. 44~48에서 일부 발췌·번역.

아동의 적극적 시민권 및 학교에서의 참여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은 특히 아동이 학급 및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사회 및 정치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여하며 사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지표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3) 해외 아동인권지표체계 :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일반논평 제7호’ 지표)체계 사례

초기아동기 인권지표(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는 2005년도 유엔인권위원회의 ‘초기 아동기의 아동권리의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제 7호(General Comment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the early childhood)에 기반하여 개발된 지표로써 200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초기 아동기의 인권실현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지표이다. 이 지표 개발 프로젝트는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조기학습파트너십(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 국제아동센터(International Children’s Center, ICC)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초기아동기 권리지표 그룹’(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 Group)에 참여하였으며, 개발된 지표는 2008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다(Vaghri et al., 2010).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의 주요 개발진인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 대학의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에 따르면<sup>162)</sup> 2008년 기본 틀을 개발하였으며, 2009년에 이 지표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후 2010년, 2011년에는 탄자니아와 칠레에서 지표 적용과 관련한

162) 출처: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 <http://earlylearning.ubc.ca/child-rights/>

파일럿 스터디(pilot study)가 실시되었다. 이 파일럿 스터디 결과, ‘초기아동기 인권지표’는 초기 아동기의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영역간 자기보고를 위한 방법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각 국가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 이행과 보고를 위한 모니터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가 고안되었다. 향후에는 초기아동기 뿐 아니라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틀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sup>163)</sup>.

‘초기아동기 인권지표’는 아동기 초기의 경험의 질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정과 같은 아동의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의 초기 경험이 인간으로서의 발달을 형성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Vaghri et al., 2010). 모든 아동은 폭력과 방임, 착취로부터 벗어나 그들이 성장·발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보살핌을 받는 아동기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좋은 건강상태와 학습하고 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고 있다.<sup>164)</sup>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그림, 더 나은 정책 선택, 인권침해와 좋은 인권실천 확인,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조정을 위해 활용가능한 지표이다(Vaghri et al., 2010). 이러한 인권지표를 통해 국가의 현재 실태와 욕구를 분석할 수 있으며, 수많은 아동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이 지표체계는 권리기반접근(Right-based approach)을 통해 8세미만의 어린 아동도 권리의 주체자이며, 정부당국, 의사, 교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들은 이들의 권리실현과 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무이행자라는 기본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초기아동기 인권지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국가보고서 집필에 정부당국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한 지표로써, <표 III-1-6>은 ‘일반논평 제 7호’지표의 각각의 영역별 지표 세트와 이를 요약하는 주요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응을 고안하면서 정부는 국가보고서 작성방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 특히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의 유럽연합의 FRA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이 보고서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 동 협약의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초기 아동기 지표’가 ‘일반논평 제7호’에 따른 것이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163) 출처: 상동

16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28조, 제31조

표 III -1-6

‘일반논평 제7호’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

인권 영역	지표 세트 (Indicator Set)	주요 질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	일반논평 제7호의 확산	어린 아동과 관련한 권리기반(rights-based) 이해를 확산·촉진시키고, ‘확산’ 절차의 지식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귀하의 정부에 의해 취해진 방법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의제	모든 어린 아동, 특히 취약하거나 배제된 집단의 아동을 위한 권리실현과 관련한 긍정적인 아젠다(a Positive Agenda)를 가진 접근법의 영향을 개발·실행하고, 평가하며 보고하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할당되었는가?
	인권훈련	전문적인 조직, 교육기관, 부모교육 정도, 또 다른 조직이나 매체를 통한 양질의 인권훈련의 개발, 전달, 영향평가에 어떤 자원이 할당되었는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	귀하의 정부는 모든 어린 아동의 발달에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취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어떤 자원과 수단이 있는가?  어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한 양질의 다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자원과 수단이 있는가?
아동권리와 자유	출생등록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최적의 아동등록 수준을 권고하기 위해 고안된 무료의, 비차별적인, 접근 가능한 출생등록 시스템을 이행하고 분석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절차가 있는가?
	의사결정에의 참여	가정의 의사결정에 아동의 참여를 지원할 정보를 부모와 양육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있는가?
	어린 아동에 대한 폭력	어린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다른 양육자를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게하며, 영향을 받은 아동의 회복을 촉진하고, 폭력이나 학대의 확산과, 예방적 수단의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기록하는 수단이 있는가?
기초 건강과 복지	기초적인 물질적 욕구	어린 아동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평가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있는가? 아동의 욕구를 위해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일반적인 어린 아동과 배제되거나 취약한 집단의 아동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이러한 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모유수유와 보완적인 수유	부모,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지원하고, 유익한 모유수유 실천과 보완 수유의 적절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있는가?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	생애와 건강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확실히 하고 우선 책임을 가진 자들로서 부모와 양육자를 지지하는 공평하고 충분한 질적 수준이 담보된 보건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이 있는가?
	연령에 적합한 보건교육	어린 아동들이 연령에 적합한 보건교육에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건강관련 행동과 이로 인한 특별한 건강관련 성과에 미치는 예방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인권 영역	지표 세트 (Indicator Set)	주요 질문
교육, 여가와 문화적 활동	초기 아동기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제공	어린 아동의 교육적 권리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있는가? 그리고 물질적 지원과 서비스 전달에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있는가?
	취약아동을 위한 교육제공	초기 아동기에 양질의 교육적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특히 취약하거나 배제된 아동인구를 대상으로 어떤 수단이 있는가?
	아동의 권리실현을 지지하기 위한 권리와 역량 이해	형식, 비형식 교육환경에서 부모 및 양육자의 역할과 어린 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의 제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특히 첫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있어 부모 및 양육자의 역량을 지지할 수단과 자원이 있는가?
	놀이, 여가와 휴식 기회	적절한 놀이기회와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그러한 공간을 기획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또 배제된 인구에 대한 차별에 도전 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있는가?
특별보호조치	취약집단을 위한 포용적인 정책과 규정	어린 아동에 대한 차별의 근본적 원인을 조사하고 도전하기 위해, 그리고 취약 아동이 평등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있는가?

\* 주: 이 표의 출처인 '초기아동기 인권지표'를 위한 매뉴얼(Vaghri et al., 2010)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로서 시범적용을 위해 완성본이 아닌 draft로 웹상에 공개된 상태임.

\* 출처: 1) Vaghri et al., (2010),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에서  
전체적인 지표 세트만 정리하여 표로 구성함.  
2)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 (2012),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 . Research Brief/  
[http://earlylearning.ubc.ca/media/documents/international\\_research\\_brief\\_14nov2012.pdf](http://earlylearning.ubc.ca/media/documents/international_research_brief_14nov2012.pdf), 각 지표세트의 주요  
질문들을 발췌함.

각각의 지표세트는 또 구조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의 특성을 구분하여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이 본 지표체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의 인권지표에서 국가의 이행책무(commitment),  
노력(efforts), 결과(results)를 파악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과정·성과(structure-proce-  
ss-outcome)지표 체계를 제시하였는데(UN, 2012: 김영지 외, 2013에서 재인용: 32),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는 이를 지표성격에 맞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표 III-1-7>).

구조(Structure)지표는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인권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이러한 책무(commitment)를 이행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므로 해당 인권내용과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김영지 외, 2013). '초기아동기  
지표'에서 구조지표는 행동을 취하는 책무(commitment)를 가리키며, 헌법과 법률 조항, 유엔아동  
권리협약에 맞춰진 정책과 기관 등이 해당된다(Vaghri et al., 2010).

표 III-1-7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의 구조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

지표체계	내용
구조(Structure)	행동을 취할 책무(commitment) 헌법과 법률 조항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맞춰진 정책과 기관 어린 아동의 권리 실현
과정(Process)	행동이 취해지고,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 책무에 따르는 것 - 구체적인 활동(행동계획과 프로그램) - 어린 아동의 권리실현을 도울 수 있는 자원과 계획(intiatives)
성과(Outcome)	결과, 측정할 수 있는 변화 - 권리 환경 - 출생등록 아동 수의 증가와 같은 초기 아동기 발달 측정

\* 출처: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 웹사이트, <http://crc-indicators.earlylearning.ubc.ca/index.php/content/toolsforaction>

과정(Process)지표는 의무이행자(duty bearer)들이 권리주체자들의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국가 및 정부당국과 같은 의무이행자들의 정책과 구체적인 수단들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프로그램, 예산 배분, 규제적 개입 등을 포함한 인권실현을 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UN, 2012; 김영지 외, 2013에서 재인용: 32). '초기아동기 지표'에서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실현을 위한 일련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활동, 행동계획이나 프로그램, 무엇보다 어린 아동의 권리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계획들을 의미한다(Vaghri et al., 2010).

성과(Outcomes)지표는 개인적, 집단적 권리 실현 상태를 의미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포함한다(김영지 외, 2013).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변화나 결과를 말하며, 예를 들면 출생등록 아동수의 증가와 같은 아동발달과 관련한 측정 등이 해당된다(Vaghri et al., 2010).

'초기아동기 인권지표'는 모든 개별 지표별로 이 세 가지 지표체계에 따른 구체적인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앞선 유럽연합의 기본권(FRA) 기구 보고서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조-과정-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개별지표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어떤 내용들이 구조지표이며 과정 또는 성과지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표 III-1-8>와 같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 영역의 지표세트에 대한 내용과 구조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에 해당되는 개별 지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8>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논평 제7호'의 확산에 대한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지표로서 일반논평 제7호가 아동발달 및 아동권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졌는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다. 과정지표로는 '일반논평 제7호'에 대한 논의와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적, 재정적 할당을 통한 계획을 이행한 증거를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지표로서 실제로 '일반논평 제7호'의 확산 노력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어린 아동에게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의무이행자들의 인식수준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결과 및 변화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또 '인권훈련' 지표세트를 살펴보면, 구조지표로서 아동권리 및 일반논평 제7호와 관련하여 의무이행자들의 인권훈련을 위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과정지표로서 이들 의무이행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실제로 개선이 있었는지를 성과지표로서 검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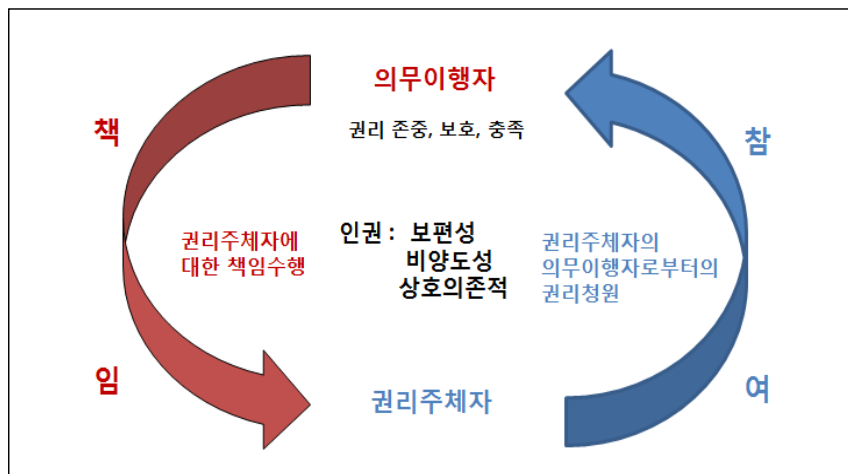
**표 III-1-8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지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의 세부 지표 내용(예시)**

지표 세트 (Indicator Set)	지표유형	개별 지표 예시
‘일반논평 제7호’의 확산	구조지표	일반논평 제7호는 아동발달과 아동권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과정지표	일반논평 제7호에 대한 논의와 확산을 위한 자원(재정적, 인적) 할당을 통해 계획을 이행한 증거가 있는가?
	성과지표	일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특히 어린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과 관련한 의무 이행자들 간에 인식수준이 증가하였는가?
긍정적인 의제	구조지표	초기 아동기에 대한 국가적 행동계획과 같은 긍정적인 의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적, 재정적 자원이 할당되어 있는가?
	과정지표	어린 아동의 특별히 취약한 집단과 관련하여 초기 아동기에서의 권리이행을 위한 긍정적인 의제나 국가행동계획을 개념화하고 연구·전달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은 활동의 증거가 있는가?
	성과지표	긍정적인 의제를 준비하는데 있어 확인된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분야 간 명시된 정책에 변화가 있는가?
인권훈련	구조지표	아동권리 및 일반논평 제7호와 관련한 다양한 의무이행자를 위한 인권훈련에 관한 명확한 정책이 있는가?
	과정지표	다양한 의무이행자들을 위해 개발·수행되고 있는 훈련과정이 있는가(훈련 프로그램 주제, 기획·시행되고 있는 훈련프로그램의 수, 각 프로그램의 참가자 수)?
	성과지표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실천과 다양한 영역에 어떤 개선이 있는가?

지표 세트 (Indicator Set)	지표유형	개별 지표 예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조지표	어린 아동의 삶과 관련된 적합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공식적인 국가통계를 위한 정책이 있는가?
	과정지표	어린 아동기에 아동권리 이행에 관한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질적, 양적 데이터를 취합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있는가?
	성과지표	데이터를 적절하게 개별화한 데이터취합과 분석체계가 있는가?

\* 출처: Vaghri et al., (2010).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 p. 30, 41, 51, 61에서 부분 발췌, 번역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의 또 다른 특징은 8세 이하의 어린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rights holders)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실현과 보호를 위한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Vaghri et al., 2010).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 아동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명확한 계획 틀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Theis, 2003),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관점으로부터 초기 아동기에 접근하는 개념적 틀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 출처: Theis, J (2003), Brief introduction to Rights-based programming. p. 1에서 발췌·번역

【그림 III -1-1】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관계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권리기반접근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의 하나는 모든 인간은 권리주체자(a right-holder)이며, 인권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이행자(a duty-bearer)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주체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누가 의무를 갖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이행자(duty-bearers)의 행동(action)과 책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Boesen, Martin, 2007; 김희진, 2014에서 재인용). 인권의 의무를 충족시킬 전반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그 책임은 국회, 행정부, 지방정부, 판사, 사법기관, 경찰, 교사와 같은 국가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이들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은 법적 의무이행자를 의미한다(Boesen & Martin, 2007: 11). 따라서, '지표세트 1'의 '일반논평 제7호의 확산' 대한 의무이행자를 살펴보면 <표 III-1-9>와 같다.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중 '일반논평 제7호의 확산'을 위한 의무이행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 정부 부처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정책적인 영향을 줄 경우 의무이행자로서의 책무성이 더 우위에 있게 된다(Vaghri et al., 20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과 관련해서는 먼저 인권관련 기구와 외교부가 의무이행자가 되며, 다음으로 아동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보건, 교육, 사회복지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주택 및 교통, 환경등도 의무이행자가 된다(Vaghri et al., 2010). 이외에 아동위원회나 ombudsman과 같은 아동을 포함한 인권을 위한 국가기구, 그리고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서비스, 마지막으로 부모와 양육자 등이 포함된다(Vaghri et al., 2010).

표 III-1-9 초기아동기 인권지표 세트 1: '일반논평 제7호의 확산' 관련 의무이행자

구분	인권지표 세트 1: '일반논평 제7호의 확산' 관련 의무이행자
의무이행자 (Duty Bear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지정된 조정 기구</li> <li>• 외교부(일반논평의 우선 대상자)</li> <li>• 보건, 교육, 사회복지, 헌법, 재정, 노동관련 정부부처(직접적인 정책영향에 따라)</li> <li>• 주택, 교통, 환경 등 부처(간접적인 정책영향에 따라)</li> <li>• 국가인권 및 기타 기구(예, 아동위원회, 옹호, ombudsman 등)</li> <li>•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공공 및 민간서비스, 시민사회), 부모와 부모를 대표하는 주 양육자, 부모를 대표하는 조직</li> </ul>

\* 출처: Vaghri et al., (2010).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 p. 30.

인권지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의무이행자들 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지표 세트 3'의 인권훈련의 경우 여기서의 의무이행자는 첫째, 어린 아동에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교육, 보건, 사법, 복지 등에서) 실천가를 훈련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 둘째, 정보제공과 확산을 포함한 아동과 가족을 지지하는데 책임이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 셋째, 시민사회와 어린 아동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영역의 서비스 제공자, 넷째, 관련서비

스의 실천가, 다섯째, 부모, 양육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대표하고 지지하는 전문가 집단 등이 해당된다(Vaghri et al., 2010).

#### (4) 요약 및 시사점

유럽연합의 아동·청소년인권지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개발된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동인권체계의 분류와 구체적인 지표항목과의 일치, 그리고 정교화된 개별 지표, 또 구조-과정-성과지표에 따른 과정과 성과를 모두 아우르는 체계적인 접근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지표 내용에 있어서도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의 보고서에서는 유럽 내의 망명/난민/이주 가족의 아동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지표,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적·경제적 착취에 대한 지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또한 그 접근법은 희생자의 확인 및 보호, 가해자 처벌,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을 위하여 아동의 절대적/상대적 빈곤, 빈곤격차 및 빈곤의 지속 등 빈곤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 아동을 위한 정부의 공공지출과 개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동의 교육 및 시민권과 문화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교육접근성, 장애 아동 또는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 학교와 사회,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 자원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아동인권지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도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중요한 인권지표로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 충족에 대한 내용과 교육에 대한 권리(특히, 취약아동을 위한 교육 제공)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들 아동인권지표들은 아동의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이러한 주요 내용들을 포함하되, 무엇보다 아동인권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뿐 아닌, 기본적인 구조와 전반적인 과정 및 절차를 재조명하고 있으며, 특히 초기 아동기 인권지표의 경우 아동권리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의 역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권리기반접근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과 권리실현을 위한 정부당국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또한 공공 및 민간영역 모두에서의 아동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종사자들의 인식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해외의 이러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관련 세부 인권지표들은 현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인권 관련 지표 중 핵심지표와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 개발 및 보완 작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 향후 더욱 체계적인 인권지표체계의 발달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 2)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1) 주요 인권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 지표 선정: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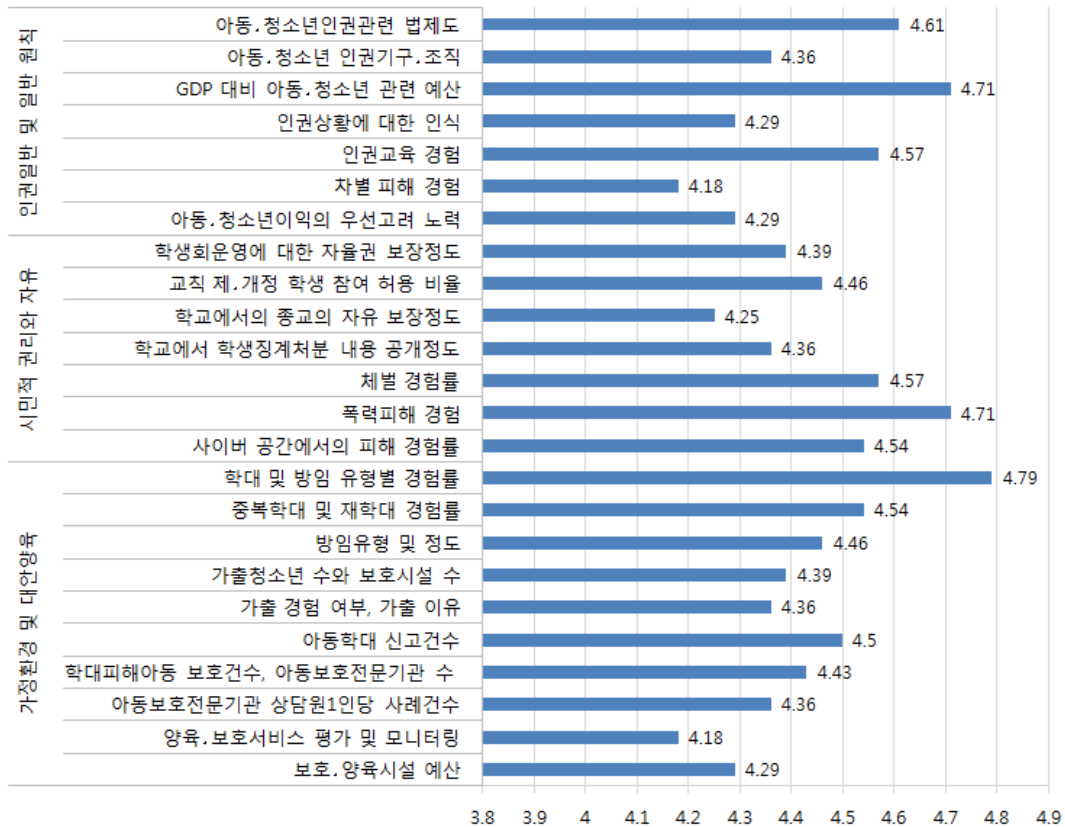
#### ① 주요 인권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 지표 선정 개요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영역별 인권지표가 상세하고, 또 하나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지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각 인권영역별 핵심적인 인권지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전문가로서 관련 연구 실적이 많은 학계전문가 13명, 아동권리 및 복지실천에서의 현장전문가 9명, 그리고 아동청소년권리와 관련한 정책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인권지표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여 주요 인권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상황을 외국의 아동청소년인권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보호를 하는데 있어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3년도에 수정·보완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기초로 하여 수회의 자문회의와 분과회의를 거쳐 기본적인 아동청소년인권지표 목록을 작성하여 각각의 지표항목에 중요도(1점~5점)와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도출된 중요지표와 국제가능지표를 살펴보면 【그림 III-2-1】~【그림 III-2-6】과 같다. 총 148개 지표항목에 대하여 중요도 측면에서 평균(4.11)보다 높게 나타난 지표는 인권지표 중분류 21개에서 72개 지표항목이었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이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을 정리한 결과, 19개 중분류의 57개로 나타났다.

## ② 주요 인권지표 조사 결과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III-2-1】에서 【그림 III-2-3】과 같다<sup>165)</sup>. 아동·청소년 인권영역 중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영역에서는 총 7개의 지표가 평균이상의 중요도를 보였는데,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지표항목은 ‘GDP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이었다.



\* 주 : 개별지표 항목 중 평균값이상인 지표항목만 제시/ 단위: 점(5점 만점 기준)

【그림 III-2-1】 주요 인권지표: 인권일반, 시민적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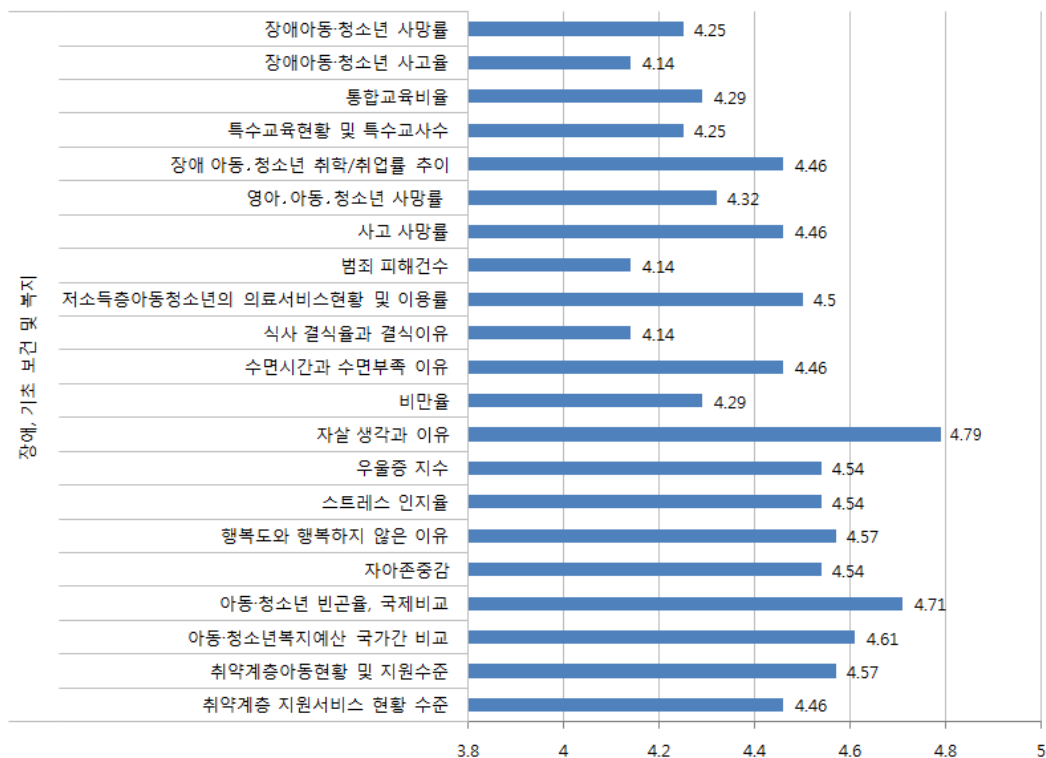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과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으로 나타났다.

165) 전체 지표들에 대한 중요도 평균값은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 역시 7개의 지표가 평균이상의 중요도를 보였으며, ‘폭력피해 경험’항목이 그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체벌 경험률’,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 정도’,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서는 9개의 지표항목이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그중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아동학대 신고건수’, ‘방임유형 및 정도’,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순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보호·양육시설 예산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22개의 지표항목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중요도 평균을 보인 지표 항목은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행복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취약계층 아동현황 및 지원수준’, ‘우울증 지수’, ‘스트레스 인지율’, ‘자아존중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심리적, 정신적 건강과 빈곤율,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제비교와 지원현황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다음으로 평균치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들은 장애(장애 아동청소년 취학/취업률 추이 등)와 생존 및 발달(사고 사망률,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범죄 피해 건수 등) 분류에 속한 항목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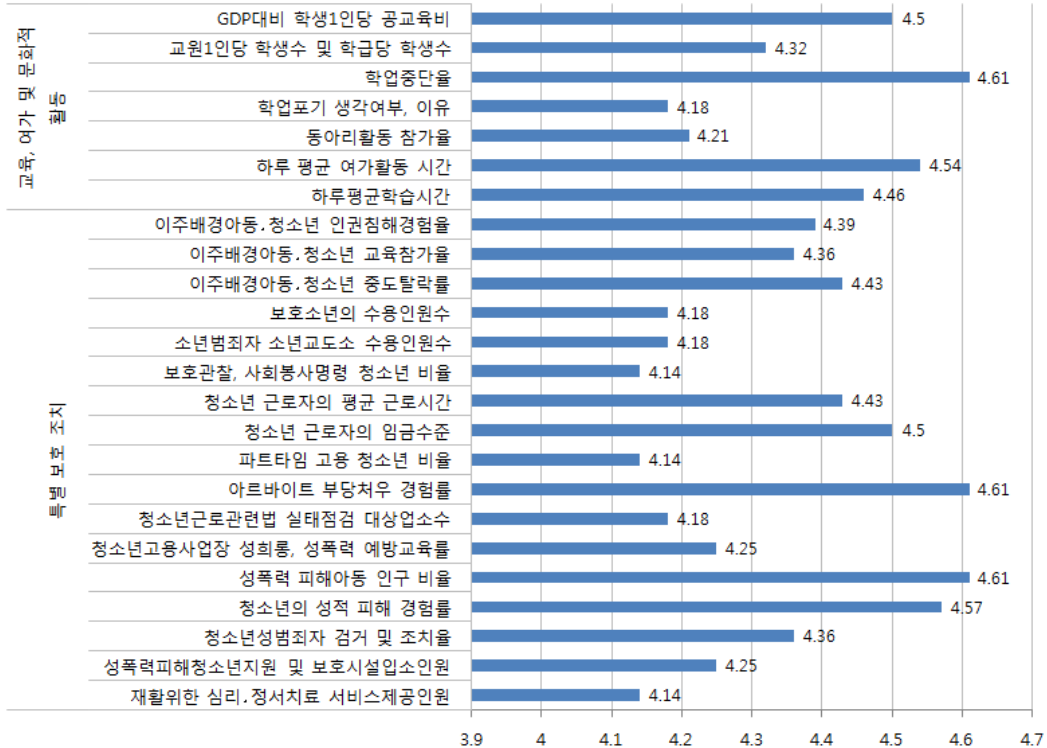
\* 주: 개별지표항목 중 평균값이상인 지표항목만 제시/ 단위: 점(5점 만점 기준)

【그림 Ⅲ-2-2】 주요 인권지표: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지표항목은 7가지로 '학업중단율'에 대한 중요도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하루평균 학습시간',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동아리활동 참가율', '학업포기 생각여부 및 이유'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과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 비율'이 동일한 평균값을 보이면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지표항목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 업소 수',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순으로 나타나, 주로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성적 착취문제에 대해 높은 중요도가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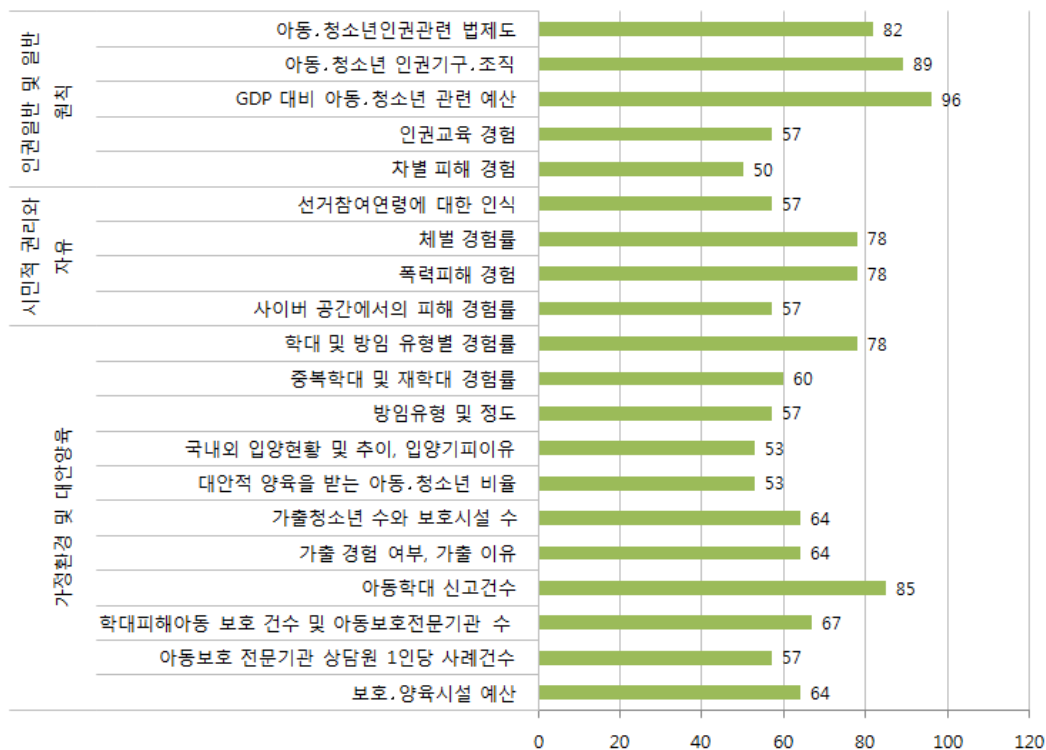
\*주: 개별지표항목 중 평균값이상인 지표항목만 제시/ 단위: 점(5점 만점 기준)

【그림 III -2-3】 주요 인권지표: 교육·여가·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 ③ 국제비교 가능 지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문가들에게 각 인권지표항목에 대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라고 생각할 경우 체크하게 하였고, 그 빈도에 따라 비율을 산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sup>166)</sup>.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총 5개의 지표항목이 과반 50%보다 넘게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비율은 보인 것은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전문가의 96%가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인권교육 경험’, ‘차별 피해 경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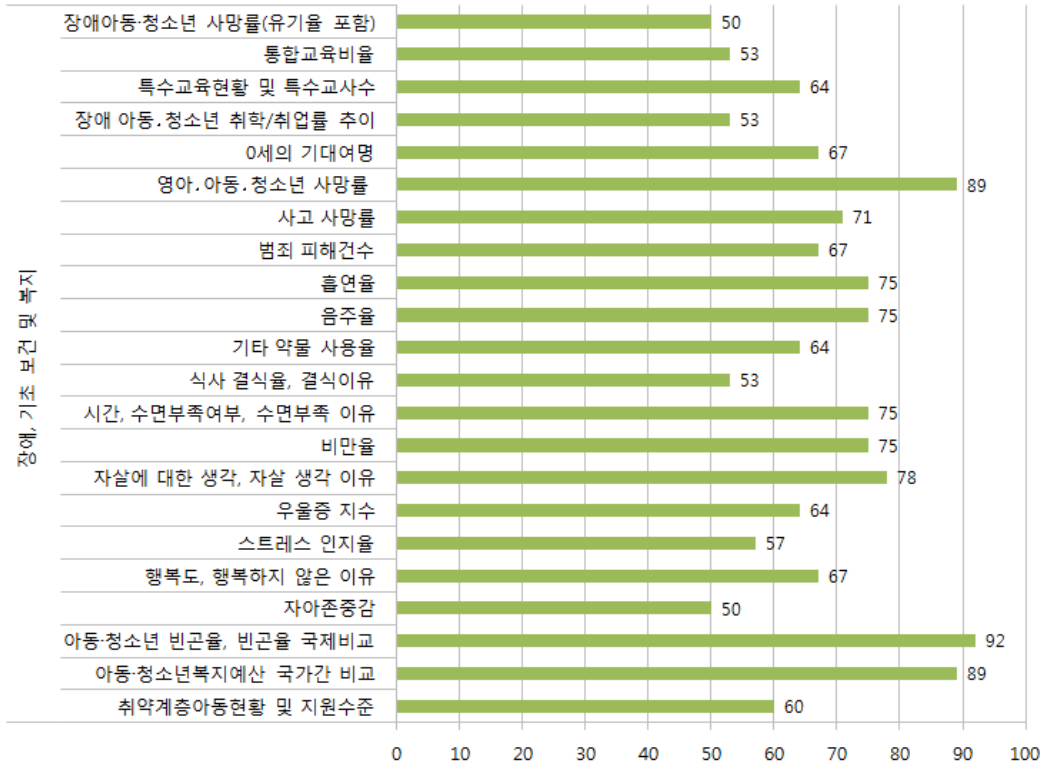
166) 각 지표들의 국제비교 가능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는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 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지표 항목만 제시/ 단위: %

【그림 Ⅲ-2-4】 국제비교 가능 지표: 인권일반, 시민권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국제비교 가능 지표로써 ‘체벌 경험률’과 ‘폭력피해 경험’이 각각 전문가 응답률 7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로 역시 전문가 57%가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응답하였다.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전문가 50% 이상이 12개를 지표를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아동학대 신고건수’ 건수가 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보호·양육시설 예산’, ‘가출 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가출 경험 여부와 이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방임유형 및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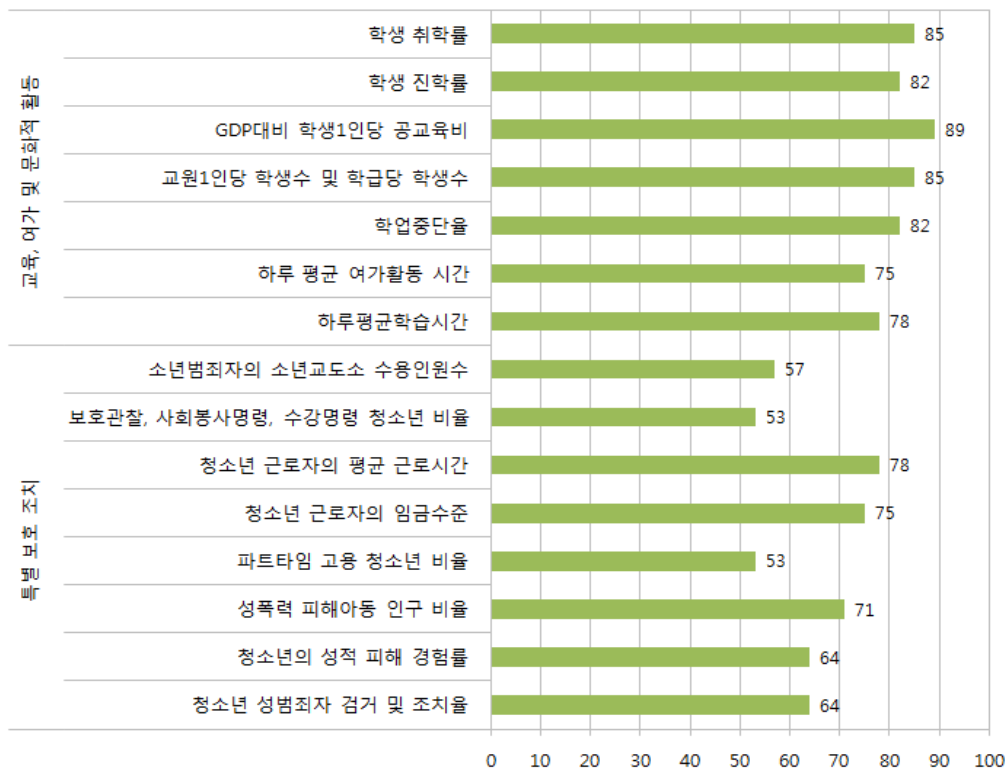


\* 주 : 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지표 항목만 제시/ 단위: %

【그림 Ⅲ-2-5】 국제비교 가능 지표항목: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영역의 경우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조사대상 전문가 92%가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빈곤율 국제비교’,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흡연율’, ‘음주율’, ‘수면시간 및 수면부족 이유’, ‘비만율’은 75%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우울증’, ‘스트레스’, ‘행복도’와 같은 정신건강관련 지표였고, ‘사고 사망률’ 및 ‘범죄 피해건수’,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지표 항목들이 뒤를 이었다.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영역에서는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9%가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지표항목은 ‘학생 취학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학생 진학을 학업중단율’, ‘하루평균 학습시간’,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 주 : 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지표 항목만 제시/ 단위: %

【그림 Ⅲ-2-6】 국제비교 가능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영역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 78%의 전문가가 국제비교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 비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순으로 전문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 ③ 주요 인권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지표 요약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조사된 주요 인권지표와 국제비교 가능지표를 정리하면 <표 Ⅲ-2-10>과 같다. 주요 인권지표의 경우 5점 만점 평균치를 기준으로 각 인권영역별로 4.5점을 넘는 높은 평균치를 보인 지표들로, 그리고 국제비교 가능지표들은 각 인권영역별로 조사대상 전문가의 70%가 국제비교가능 지표로 선정한 것들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정리된 주요 인권지표와 국제비교 가능지표들은 각 영역별로 그 지표 수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이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주요/국제 비교 가능 지표들은 앞서 기술한 유럽연합 기본권기구(FRA)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와 초기아동기 인권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는 폭력 및 학대, 빈곤율과 이를 위한 정부의 공공예산 지출과 개입, 교육권, 그리고 성적, 경제적 착취에 대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 주요 인권지표와 국제비교 가능지표들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비조사의 성격으로, 향후 보다 심화되고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관련 연구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III-1-10 주요 인권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지표 요약**

인권 영역	주요 인권지표	국제비교 가능지표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GDP대비 아동청소년관련 예산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인권교육 경험	GDP대비 아동청소년관련 예산 아동청소년 인권기구 조직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피해 경험 체벌 경험률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경험률	폭력피해 경험 체벌 경험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아동학대 신고건수	아동학대 신고건수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자살 생각과 이유 아동청소년 빈곤율, 국제비교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취약계층아동현황 및 지원수준 우울증 지수 스트레스 인지율	아동청소년 빈곤율, 국제비교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자살 생각과 이유 흡연음주율 수면시간 및 수면부족 비만율 사고사망률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학업중단율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취학률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 학생 진학률 학업 중단율 하루 평균 학습시간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인권 영역	주요 인권지표	국제비교 가능지표
특별보호조치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 비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청소년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 비율

## (2) 2014년 아동청소년인권지표 구성

2014년도 아동·청소년인권지표 체계는 2013년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을 기준으로 체계화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대분류, 중분류, 지표 및 지표항목 간의 연계성과 대표성을 갖도록 재분류하고 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위해서 인권지표 영역(대분류)별로 전문가들로 분과를 구성하여 회의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기존의 일부 지표와 구체적인 지표항목 및 조사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일부 지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특정 분야의 인권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미흡하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분과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인권지표체계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각 인권영역의 분류와 해당 지표의 일치율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리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2013년도에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항목’에서 2014년도에는 ‘대분류 - 중분류 - 지표 - 지표항목’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013년도에 6개 대분류, 30개 중분류, 52개 소분류, 145개 지표항목에서 2014년도에는 6개의 대분류, 24개의 중분류, 58개의 지표, 148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표 III-1-11>과 같다. 1차 안에 대해서는 해외의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그리고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한 주요 지표내용과 국제비교 가능지표들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최종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III-1-11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2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지도	1-1-2-1.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1-1-2-2. 인권의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1-1-2-3.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경험
			1-1-3-2. 인권교육 받은 기관*
			1-1-3-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 가해 경험*
			1-2-1-2. 차별 피해 경험*
		1-2-2. 아동의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급회의 운영 여부*
			2-1-2-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2-1-2-4.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5.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2-2-1-2.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
			2-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정도*
			2-4-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 정도*
			2-4-2-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2-6.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2-6-1. 체벌 경험률	2-6-1-1. 체벌 경험률*
		2-6-2. 정서적 학대 경험률	2-6-2-1.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2-6-3. 청소년폭력 경험률	2-6-3-1. 폭력피해 경험* 2-6-3-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3-1-1. 부모와의 관계	3-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3-1-1-2. 부모와의 관계의 질
		3-1-2.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1-2-1.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1-2-2.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3-1-2-3. 방임유형 및 정도*
		3-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3-1-2-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3-1-2-2. 보육시설 이용률 3-1-2-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3-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3-2-1. 입양률	3-2-1-1. 국내외 입양현황 및 추이, 입양기피이유 3-2-1-2.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3-2-2. 대안양육 비율	3-2-2-1. 요보호아동 현황 3-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3-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3-2-3-1.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3-2-3-2. 가출 경험 여부*, 가출 이유* 3-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만족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3-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3-1.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3-3-1-1. 아동학대 신고건수 3-3-1-2.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 기관 수 3-3-1-3.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3-3-1-4. 서비스 제공정도와 원가정복귀율
	3-4.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3-4-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3-4-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3-4-1-2. 보호·양육시설 예산 3-4-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4-1. 장애(제23조)	4-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4-1-1-1. 장애아동·청소년 사망률(유기율 포함) 4-1-1-2. 장애아동·청소년 사고율 4-1-1-3. 통합교육비율 4-1-1-4.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4-1-1-5.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취업률 추이
	4-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4-2-1. 사망률	4-2-1-1. 0세의 기대여명 4-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4-2-1-3. 사고 사망률
		4-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4-2-2-1. 범죄 피해건수 4-2-2-2.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
	4-3. 보건서비스 (제24조)	4-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4-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4-3-1-2.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4-3-1-3.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4-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4-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4-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4-3-3-1. 흡연율 4-3-3-2. 음주율 4-3-3-3. 기타 약물 사용율 4-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4-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4-4-1. 건강에 대한 인식	4-4-1-1.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4-4-2. 신체적 건강	4-4-2-1. 운동 실천율* 4-4-2-2. 아침식사 결식률*, 결식이유* 4-4-2-3. 수면시간*, 수면부족여부*, 수면부족 이유* 4-4-2-4. 비만율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4-3. 정신적 건강		4-4-3-1.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생각 이유*
			4-4-3-2. 우울증 지수*
			4-4-3-3. 스트레스 인지율*
			4-4-3-4. 행복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4-4-3-5. 자아존중감*
			4-4-3-6. 고민거리대화상대*
	4-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4-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4-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4-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4-5-2.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수준	4-5-2-1. 취약계층아동현황 및 지원수준 4-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5-2.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5-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5-1-1-1. 학생 취학률 5-1-1-2. 학생 진학률 5-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5-1-1-4.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5-1-2-1. 학업중단율 5-1-2-2. 학업포기 생각여부*, 이유*
		5-1-4. 대안교육 참여율	5-1-4-1. 대안학교수와 종류 5-1-4-2. 대안학교 학생 비율
	5-1. 교육의 목표 (제29조)	5-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5-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5-2-2. 학교 교육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5-2-2-1.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수 5-2-2-2. 인성교육 연수 참여 교원수
	5-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5-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5-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5-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5-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율	5-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5-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5-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5-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5-3-2-5. 하루평균학습시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5-3-3. 여가·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5-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5-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6. 특별 보호 조치	6-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6-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6-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6-1-1-2. 탈북 난민 아동수 6-1-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6-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6-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6-1-3-1.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및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 6-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6-1-3-3.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6-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6-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6-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6-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6-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6-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6-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6-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6-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6-3. 경제적 착취	6-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6-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6-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6-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6-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6-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6-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6-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
	6-4. 성적 착취	6-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6-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6-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6-4-2.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6-4-2-1.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 비율
			6-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6-4-2-3. 성적피해 시 도움제공자*
		6-4-3.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6-4-3-1.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6-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6-4-4. 성폭력 피해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6-4-4-1.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인원
			6-4-4-2.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6-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sup>167)</sup>

###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

#### (1) 아동·청소년 인권의 취약 대상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에서 인권이 가장 취약한 대상은 방임 또는 학대피해 아동·청소년(4.81) 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권이 취약한 대상은 장애 아동·청소년(4.59), 청소년 미혼모(4.37), 학업중단청소년(4.33), 가출청소년(4.30), 다문화 아동·청소년(4.22), 범죄피해 아동·청소년(4.19), 성소수자 아동·청소년(4.19), 무국적 및 난민 아동·청소년(4.15), 근로청소년(4.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67) 이 부분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표 III-2-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의 가장 취약한 대상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의 가장 취약한 대상	평균	표준편차
방임 또는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4.81	0.40
장애 아동·청소년	4.59	0.57
청소년 미혼모	4.37	0.74
학업중단 청소년	4.33	0.62
가출청소년	4.30	0.67
다문화 아동·청소년	4.22	0.80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4.19	0.68
성 소수자 아동·청소년	4.19	0.88
무국적 및 난민 아동·청소년	4.15	0.99
근로(아르바이트) 청소년	4.04	0.65
시설보호 아동	3.96	0.71
신생아(출생등록이 아닌 출생신고를 해야 국민으로 인정되는 문제)	3.63	0.93
중·고등학생	3.42	0.81
초등학생	3.23	0.82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은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문제 중에서 학대 및 방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통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인권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4.52)라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그 다음의 문제점으로는 학교 내 인권문제의 대처 미흡(4.44),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담당부처의 혼재(4.41),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부족(4.37), 아동·청소년 인권의식 및 교육 부족(4.33), 인권정책의 전달체계 미비(4.30), 부처간 인권정책 조정의 어려움(4.22), 청소년 참여권의 약화(4.11), 학교 밖 청소년정책의 부재(4.04), 전문적인 권리모니터링 주체의 부재(4.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의 가장 큰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인권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4.52	0.80
학교 내 인권문제 대처 미흡	4.44	0.64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담당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혼재	4.41	0.69
아동·청소년관련 예산 부족	4.37	0.79
아동·청소년 인권의식 및 교육 부족	4.33	0.73
인권정책의 전달체계 미비	4.30	0.91
부처 간 인권정책 조정의 어려움	4.22	0.70
청소년 참여권의 약화	4.11	0.85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부재	4.04	0.65
전문적인 권리모니터링 주체 부재	4.00	0.88
아동인권문제의 변화에 대응 미흡	3.93	0.83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자료 부족	3.78	0.75
국가행동계획(NAP)의 부재	3.78	0.97
아동·청소년 인권과 친권과의 충돌	3.74	0.81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은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이 아동·청소년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분하지 못하며, 또한 정부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서간의 혼재와 그로 인한 정책 조정의 문제, 관련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서 해결되어야 할 커다란 문제로 보고 있다.

##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본 연구에서 분류한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인권 영역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각 과제별 중요 정도를 살펴보았다.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은 대부분 제시된

정책과제가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특히,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증액(4.54)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그 다음으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4.52),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국내법 체계 적용(4.52),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4.44),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강화(4.4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 확립(4.33),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의 지역별 형평성 고려(4.19),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의 역할 정립(4.15)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2-3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의 주요 정책과제

현재 우리나라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정책과제의 중요정도	평균	표준편차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증액	4.54	0.71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4.52	0.64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국내법체계 적용	4.52	0.70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고려 노력	4.44	0.64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강화	4.41	0.75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 확립	4.33	0.78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의 지역별 형평성 고려	4.19	0.79
아동·청소년 인권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역할 정립	4.15	0.66

전문가들은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에서 제시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행에 필요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내법에 명시해야 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에 대한 소양을 갖춘 교사 양성 및 인권교육(4.63)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의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증진(4.52),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4.48), 학교의 참여권 보장(4.48), 사이버폭력 및 따돌림 대처(4.44),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의

참여(4.37),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4.30), 교사 및 부모의 체벌 및 학대 예방(4.30), 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4.30), 폭력피해자 구제제도 시행(4.19),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4.19)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4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주요 정책과제

현재 우리나라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정책과제의 중요정도	평균	표준편차
인권에 대한 소양을 갖춘 교사양성 및 인권교육	4.63	0.56
아동·청소년의 의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증진(학급회의 정기적인 개최,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생회 운영 자율권 보장 등)	4.52	0.64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4.48	0.64
학교의 참여권 보장	4.48	0.64
사이버 폭력 및 따돌림 대처	4.44	0.58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	4.37	0.49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4.30	0.61
교사 및 부모의 체벌 및 학대 예방	4.30	0.67
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4.30	0.87
폭력 피해자 구제제도 시행	4.19	0.62
학생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4.19	0.74
온라인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증진과 보호정책 기준 마련	4.07	0.62
사상의 자유 보장	3.89	0.64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3.74	0.71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인권 보장, 특히, 동아리,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각종 활동에서의 학생들의 참여권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요청되기 때문에 인권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주요 정책과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은 학대받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예산 확보(4.69)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복 학대의 예방 및 사후 조치(4.56),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치료적인 인프라 구축(4.52),



학대 및 방임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지원정책 강화 체계 구축(4.48), 대리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 선택권 제공 및 서비스 간 차별 철폐(4.3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확대(4.22), 대안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 개선(4.22),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부처간 정책 협력(4.15),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등 아동 학대 관련 법·제도 정비(4.15)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의 주요 정책과제**

현재 우리나라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정책과제의 중요정도	평균	표준편차
학대받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예산 확보	4.69	0.47
중복 학대의 예방 및 사후 조치	4.56	0.64
재학대 발생예방을 위한 치료적인 인프라 구축	4.52	0.64
학대 및 방임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지원정책 강화체계 구축	4.48	0.64
대리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선택권 제공 및 서비스 간 차별 철폐	4.30	0.6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확대	4.22	0.80
대안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 개선	4.22	0.80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부처간 정책협력	4.15	0.91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등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정비	4.15	0.9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대, 중복학대, 재학대 등 학대와 관련한 정책과제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학대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한 예산과 조직, 법·제도 정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의 주요 정책과제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확대(4.63)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살 예방 지원체계의 구축(4.52),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기구, 인력 등 마련(4.48), 장애청소년 취업 및 교육 지원(4.44), 아동·청소년 빈곤율 감소(4.41), 정신보건을 포함한 지역사회 보건인프라 구축(4.30),

신체적, 정신적 건강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이 가능한 학교 중심의 보건인프라 구축(4.22)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의 주요 정책과제

현재 우리나라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정책과제의 중요정도	평균	표준편차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확대	4.63	0.63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	4.52	0.75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기구, 인력 등 마련	4.48	0.85
장애청소년 취업 및 교육 지원	4.44	0.64
아동·청소년 빈곤율 감소	4.41	0.64
정신보건을 포함한 지역사회 보건인프라 구축	4.30	0.67
신체적, 정신적 건강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이 가능한 학교 중심의 보건인프라 구축	4.22	0.70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른 인권영역의 정책과제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산 확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자살과 장애청소년의 취업 문제, 그리고 아동·청소년 빈곤 감소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주요 정책과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은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의 대안교육 정책 마련(4.59)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 정책(4.52), 미등록 이주아동, 장애아동 등을 위한 학교교육 접근성 증진(4.5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확대(4.30), 각급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가·문화·예술활동 기반 구축(4.30), 예·체능 분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4.22)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주요 정책과제

현재 우리나라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정책과제의 중요정도	평균	표준편차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의 대안교육 정책 마련	4.59	0.50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 정책 확대	4.52	0.51
미등록 이주아동, 장애아동 등을 위한 학교교육 접근성 증진	4.52	0.70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확대	4.30	0.61
각급 학교 및 지역사회 다양한 여가·문화·예술활동 기반 구축	4.30	0.67
예·체능 분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실질적 참여 보장	4.22	0.85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수련시설 확충	3.96	0.85
학업중단을 감소	3.96	0.90

장애, 기초조건 및 복지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육정책으로는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정책과 미등록 이주아동, 장애아동 등의 학교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확충 등 여가·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과 아동·청소년 참여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확대 등의 과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6) 특별보호조치의 주요 정책과제

특별보호조치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들은 사법절차에서의 아동친화적 절차 도입(4.54)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4.54),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의 대안교육 정책 마련(4.59)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소년사법 아동의 회복적 치유 강화(4.50), 소년사법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 마련과 재범 예방(4.42), 근로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 대응정책 개발(4.40),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지원체계 강화(4.27),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4.23), 특별보호 대상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양성 및 관리(4.19),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과 구제(4.15)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8 특별보호조치의 주요 정책과제

현재 우리나라 특별보호조치 정책과제의 중요정도	평균	표준편차
사법절차에서의 아동 친화적 절차 도입	4.54	0.65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및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4.54	0.65
소년사법 아동의 회복적 치유 강화	4.50	0.71
소년사법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 마련과 재범 예방	4.42	0.64
근로 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 대응정책 개발	4.40	0.50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지원체계 강화	4.27	0.60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4.23	0.59
특별보호 대상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양성 및 관리	4.19	0.69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과 구제	4.19	0.69
특별보호청소년에 대한 지정과 지원 시행	4.15	0.78
소년법원 설립	4.04	0.77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기구, 인력,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책	4.00	1.13
특별보호 대상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예방 가이드 개발	3.88	0.82

특별보호조치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소년사법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근로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년사법 아동의 경우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 사법 절차에서의 아동친화적 절차의 도입과 회복적 치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며, 근로청소년의 인권침해 예방 및 부당처우의 대응을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제 IV 장

#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 특별보호조치



## 제 IV 장

#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분석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sup>168)</sup>

#### 1) 인권일반

##### (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 ① 아동·청소년관련 법·제도 발전<sup>169)</sup>

아동·청소년관련 법·제도의 발전은 국가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관련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차원 차원에서는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2002), 어린이 안전종합대책(2003),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2004),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 청소년정책기본계획(1993~현재) 등이 있어 왔다(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2012: 88).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10~2014), 경기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09~2013), 서울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등이 있다(김미숙 외, 2012: 99-100). 인권 관련한 조례로는 경기도(2010), 서울시(2012), 광주시(2012), 전라북도(2013) 등이 있으나, 학생인권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한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년)」이 수립된 이후, 1993년부터 5년마다 제1차에서 제5차에 이르는 범정부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어 왔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그간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168) 이 부분은 김윤나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집필하였다.

169)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2장 4절의 국가행동계획과 일반이행조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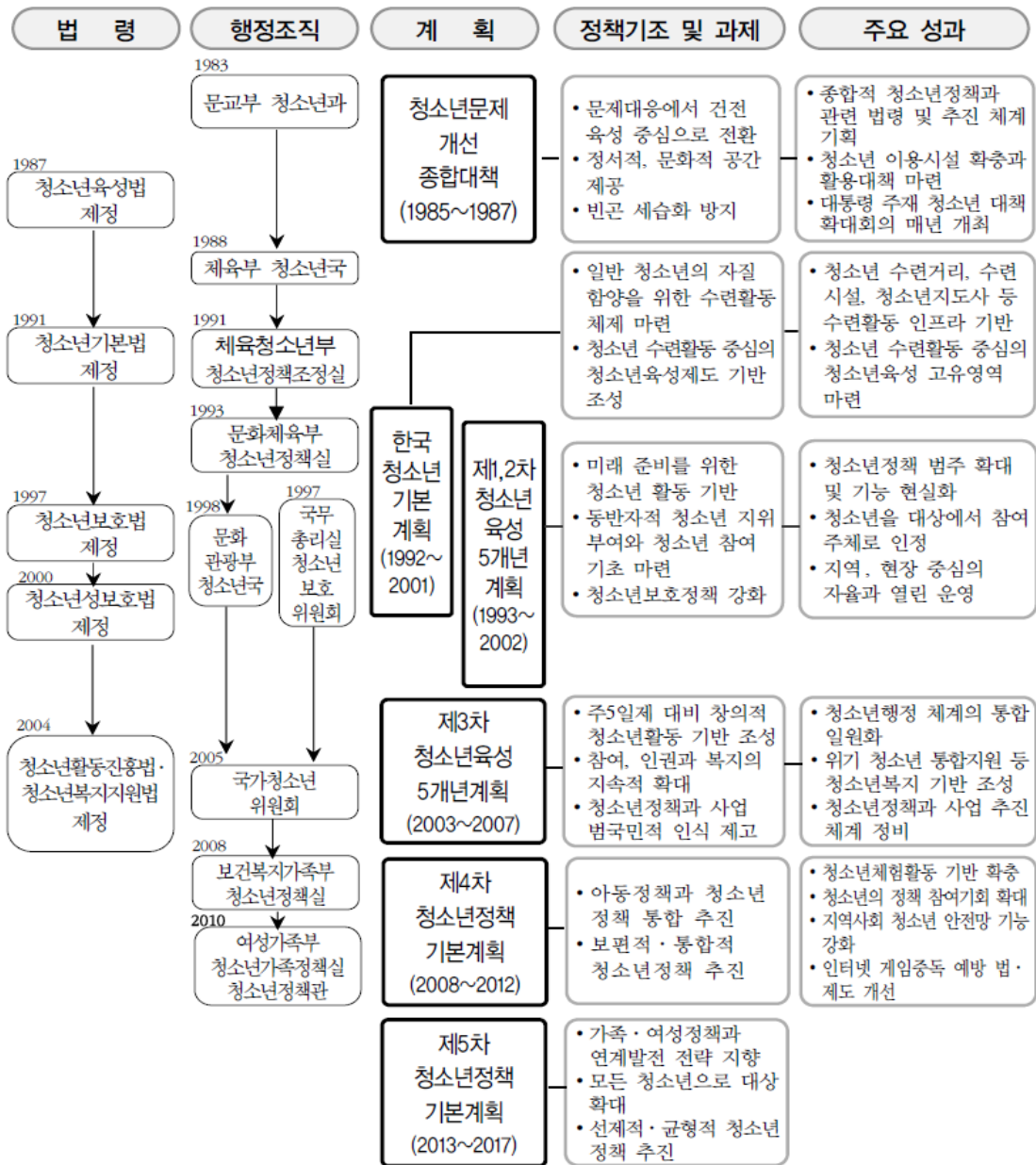
위한 기반 확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정책참여의 기회 확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치료지원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여성가족부, 2013: 42).

이중에서는 특히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는 청소년현장의 개정(1998년 10월)과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수립(1998~2002)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정책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상과 정책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인간적 권리 유보에서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권리를 증진시키고, 성인 주도의 소수 문제 청소년 선도·보호 위주에서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참여와 다수 건강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이를 통해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서 피동적 존재에서, 정책 주체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청소년정책 방향 또한 전환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발에서 청소년에 의한 정책 개발, 중앙 및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지역·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규모 획일적이고 닫힌 운영에서 소규모 다양화된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 체제로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청소년의 자율 참여와 권리 증진」을 바탕으로 하되, 한 단계 도약하여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청소년과 어른의 파트너십」을 지향하였다(한국청소년개발원, 문화관광부, 2002: 18-20).

현재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5대 영역(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영역으로써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여 청소년 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2-3).





\* 출처: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 원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그림 IV-1-1】 청소년정책 변천과정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률로써 ‘아동’,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법률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②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청소년희망센터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희망센터는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전담기구로써 청소년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및 청소년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2011년 5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설치되었다. 청소년권리 관련 모니터링, 교육, 실태 조사 및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청소년의 권리 침해 예방 및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UN아동권리협약 관련 기획과제 발굴, 실태조사 및 토론회 실시, 청소년권리 모니터링 추진단 구축,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권리교육, 청소년권리 관련 캠페인 및 홍보 등이다. 2012년도 예산은 185,291,270원(집행액 179,478,930원)이었으며, 2013년 예산은 185,000,000원, 2014년 예산은 200,000,000원이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실 청소년희망센터 요청자료, 2014. 8. 21).

표 IV-1-1 2012~2014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인력 및 담당업무

직급	담당업무	
	2012년	2014년
센터장(겸직)	-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총괄·조정	좌동
실장	- 세부 실행 사업계획 수립 - 기획과제 발굴 및 실태조사 - 토론회 기획 및 진행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 홍보 사업 기획 및 추진	좌동
팀장	- 기획과제 발굴 및 실태조사 - 토론회 기획 및 진행 - 모니터링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권리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홍보사업 실무, 실적관리 등	좌동
담당	- 지도자 대상 청소년권리교육 세부 추진 및 기관 연계 - 홍보 및 실적관리 등	- 모니터링 추진단 지원 실무 - 실적 및 예산관리 등 행정업무 -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지원 업무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2012년 청소년 희망센터 사업결과 보고, p. 3(재인용), 청소년희망센터 웹 사이트 [http://hope.kyci.or.kr/sub01\\_1.asp?menuCategory=1](http://hope.kyci.or.kr/sub01_1.asp?menuCategory=1)

2012년도에 추진한 청소년희망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권리 실태 및 욕구조사와 토론회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 권리 교육(권역별 순회교육,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 전문가 양성 워크숍 등), 청소년권리모니터링단(청소년희망목소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의제 발굴과 모니터링, 청소년권리 체험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청소년 권리침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가이드북 제작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4).

2013년 사업은 청소년 권리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해 청소년 권리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청소년 권리 기획과제 발굴 및 토론회, 청소년 권리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교육·홍보(청소년권리체험교실,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청소년권리체험교실, 권리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유관기관 연계강화(CYS-Net, 사이버상담 연계, 민간자원 및 공공기관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청소년희망센터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권리 관련 학계, 기관·단체, 실무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과제에 대한 정기적 논의, 운영 계획 검토 등 정기적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70)</sup>.

청소년희망센터 사업은 첫째,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권리관련 전문적 사업 추진체계 활성화, 둘째, 부모와 연계하는 가족지원체계, 교사와 연계하는 학교지원체계, 청소년관련 단체, 기관 및 시설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활성화, 셋째, 청소년들이 권리상황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모니터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황으로는 UN아동권리협약 관련 청소년 권리 기획과제 관련 토론회, 전국 청소년권리모니터링단(청소년희망목소리단) 모집 및 구성(총 100명),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 취약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권리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권리체험교실 프로그램 심화매뉴얼 개발, 청소년 권리체험교실 운영 강사 양성,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제공 등이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실 청소년희망센터 요청자료, 2014. 8. 21).

### ③ GDP 대비 아동·청소년관련 예산

GDP 대비 아동·청소년관련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GDP 1,332,7조 원에 비해

170) 청소년희망센터 웹사이트 [http://hope.kyci.or.kr/sub01\\_1.asp?menuCategory=1](http://hope.kyci.or.kr/sub01_1.asp?menuCategory=1)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38조7,399억 원으로 GDP 대비 0.2%에 그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2 2011~2014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단위 :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아 및 초중등교육 <sup>1)</sup>	35조4,847억 원	38조5,549억 원	41조2,286억 원	41조1,370억 원
아동복지서비스 <sup>2)</sup>	2,296억 원	3,160억 원	3,144억 원	2,860억 원
보육 <sup>3)</sup>	2조8,759억 원	3조3,847억 원	4조5,431억 원	5조7,156억 원
청소년 <sup>4)</sup>	1,497억 원	1,485억 원	1,525억 원	2,303억 원
총계(기금포함)	38조7,399억 원	42조4,041억 원	46조2,386억 원	47조3,689억 원
GDP <sup>5)</sup>	1,332.7조 원	1,377.5조 원	1,428.3조 원	—
GDP 대비	0.2%	0.3%	0.3%	—

\* 출처: 1) 교육부 보도자료(2014. 1. 13). '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 원 확정' 별첨자료(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 pp.4~6,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260>

2) 보건복지부 2011년~2014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아동복지+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

3)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2011년 예산(p.135), 2012년 예산(pp.127~128), 2013년 예산(pp.134~135), 2014년 예산(pp.132~133).

4) 여성가족부(2013. 12). 2013 청소년 백서. p.448 및 201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p.19(지출), p.103(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sup>171)</sup>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

5)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국내총생산, 2014년 8월 12일자 검색

이중에서 청소년인권증진 지원을 위해 2011년 2억 2천만 원을 배정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2억으로 예산이 감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권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체계 운영과 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및 교육 등을 통한 권리 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소년권리교육 등 지원센터(희망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190백만 원 요구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19, 103).

171) 청소년 예산에 아동청소년성보호 예산 2011 39억, 2012 39억, 2013 52억 및 2014 53억,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포함.

표 IV-1-3 2013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청소년 인권증진지원	2011					2012			2013
	예산액	예산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잔액	집행액	예산
-기능별 분류(합계)	220	220	217	-	3	200	200	135	200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120	120	120	-	-	190	190	130	190
청소년지도자대상 권리교육	50	50	50	-	-	-	-	-	-
인권증진 지원 홍보사업	30	30	30	-	-	-	-	-	-
운영비, 여비 등	20	20	17	-	3	10	10	5	10
-비목별 분류(합계)	220	220	217	-	3	200	200	135	200
일반수용비(210-01)	15	15	14	-	1	5	5	-	5
위탁사업비(210-15)	-	-	-	-	-	190	190	130	190
국내여비(220-01)	2	2	-	-	2	2	2	2	2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민간경상보조(320-01)	200	200	200	-	-	-	-	-	-

\* 출처: 여성가족부 (2014). 201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p. 19, p. 103.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

2010~2013년도 성과계획서 상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IV-1-4 2010~2013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사업 평가

성과지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소년권리교육 교재개발	목표	교재 개발 여부					교재개발 여부	교재개발 결과물
	실적	개발 완료		-	-			
	달성도	100		-	-			
중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운영 단계	목표		센터 설치 운영				- 계획수립(30%) - 대상자 선정 (50%) - 센터 시설 마련 (70%) - 센터 개소 및 운영 (100%)	단계별 관련 근거 공문 혹은 결과보고서
	실적		설치 운영	-	-			
	달성도		100	-	-			

성과지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소년지도자 대상 권리교육 이수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80	82	2012년 목표인 80점의 약 3% 적극적 상향조정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1.6				
	달성도			102				
청소년지도자 대상 권리교육 이수자수 (단위: 명)	목표		-	2,700	3,000	2012년 교육목표치 (2,700명)의 약 10% 적극적 상향조정	교육 이수 인원수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3,411				
	달성도			126.3				

\* 출처: 여성가족부 (2014),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요약), pp.139-144.

향후에는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을 통한 청소년 권리상황 모니터링, 청소년 권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으로 청소년의 권리 증진 도모, 청소년 권리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대상 권리교육 확대, 청소년 권리의식 증진 홍보 등을 통한 청소년 권리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139-144).

## (2) 인권에 대한 인지도

### ① 인권 협약, 기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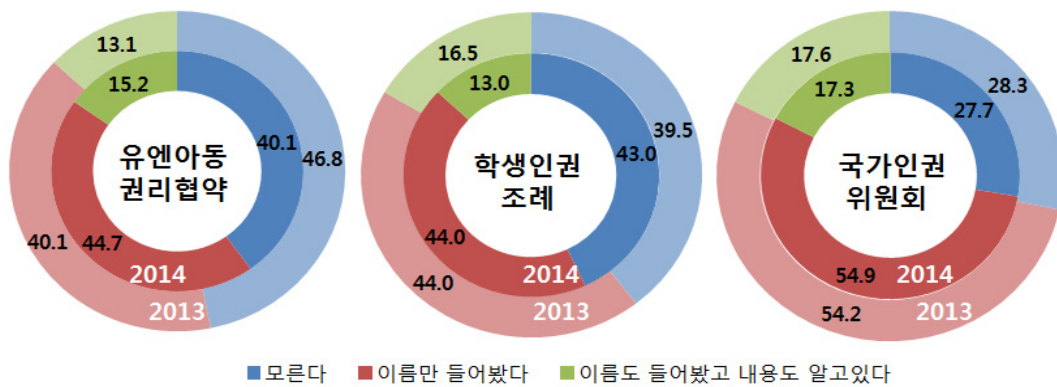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0.1%, 43.0%, 27.7%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인지도가 가장 낮으며, 그 다음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순이었다.

2013년에 비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르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생인권조례를 모르는 비율은 2013년 39.5%에서 2014년 43.0%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의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16.5%에서 2014년 13.0%로 감소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홍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IV-1-5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13~2014)

(단위: %)

내 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1) 유엔아동권리협약	46.8	40.1	40.1	44.7	13.1	15.2
2) 학생인권조례	39.5	43.0	44.0	44.0	16.5	13.0
3) 국가인권위원회	28.3	27.7	54.2	54.9	17.6	17.3



【그림 IV-1-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13~2014)/ 단위(%)

전체적으로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권협약·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사회가 보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의 인권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단 15.2%만이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름만 들어봤다’ 44.7% ‘모른다’ 40.1%,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협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약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아동·청소년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 협약 관련 교육과 홍보 필요성 정도가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모른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42%, 여학생은 38%로 남학생이 더 많이 모르고 있었으며,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41.8%, 여학생은 47.7%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더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는 응답에는 남학생이 16.1%, 여학생이 14.2%로 남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모른다’는 응답에 읍면지역(42.3%), 중소도시(40.0%), 대도시(39.5%) 순으로 나타났고,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는 응답에는 읍면지역(13.2%), 중소도시(14.2%), 대도시(17%) 순으로 나타나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더 홍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V-1-6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chi^2$
전체		40.1	44.7	15.2	100.0(10,449)	-
성별	남자	42.0	41.8	16.1	100.0(5,450)	36.646***
	여자	38.0	47.7	14.2	100.0(5,0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44.8	40.9	14.3	100.0(2,969)	40.932***
	중학교	37.6	46.9	15.6	100.0(3,640)	
	일반/특목/자율고	38.8	45.3	15.8	100.0(3,160)	
	특성화고	39.1	46.2	14.7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39.5	43.5	17.0	100.0(4,425)	20.709***
	중소도시	40.0	45.8	14.2	100.0(4,715)	
	읍면지역	42.3	44.5	13.2	100.0(1,3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9.6	44.8	15.6	100.0(9,744)	27.649***
	한부모가정	45.9	43.2	10.8	100.0(561)	
	조손가정	41.6	54.4	4.0	100.0(41)	
	기타	54.8	37.6	7.6	100.0(103)	
학업 성적	상	34.6	44.9	20.5	100.0(3,227)	121.730***
	중	41.7	45.0	13.3	100.0(4,403)	
	하	43.7	44.0	12.3	100.0(2,741)	
경제적 수준	상	37.9	43.9	18.3	100.0(4,687)	61.807***
	중	41.4	45.8	12.8	100.0(4,046)	
	하	42.9	44.2	12.8	100.0(1,649)	

\*\*\* p<.001



가족유형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모른다’는 응답을 기타 가족유형(54.8%), 한부모가정(45.9%), 조손가정(41.6%), 양부모가정(39.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는 응답에는 양부모가정(15.6%), 한부모가정(10.8%), 기타 가족유형(7.6%), 조손가정(4.0%) 순으로 나타나 부모 혹은 보호자를 통한 아동권리협약 교육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적에 따른 아동권리협약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상’ 20.5%, ‘중’ 13.3%, ‘하’ 12.3%로 나타나 성적이 높을수록 협약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 18.3%로 가장 많이 협약에 들어본 경험이 많았고, 중과 하 수준은 12.8%로 협약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에는 ‘상’ 37.9%, ‘중’ 41.4%, ‘하’ 42.9%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 나.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광주, 전북, 서울 등에서 제정,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모른다’ 43.0%, ‘이름만 들어봤다’ 44.0%,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13.0%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40.0%)이 남학생(45.8%)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53.9%), 특성화고등학생(49.7%), 중학생(45.0%), 일반계고등학생(29.0%) 순으로 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 및 저학년 대상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47.2%), 대도시(44.0%), 중소도시(40.9%)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기타(63.0%), 조손가정(57.9%), 한부모가정(49.2%), 양부모가정(42.4%) 순으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상 39.4%, 중 43.8%, 하 45.7%), 경제적 수준은 ‘하’(43.3%), ‘중’(44.1%), ‘상’(41.8%) 순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chi^2$
전체		43.0	44.0	13.0	100.0(10,449)	—
성별	남자	45.8	41.6	12.6	100.0(5,449)	36.668***
	여자	40.0	46.7	13.4	100.0(5,0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53.9	38.3	7.8	100.0(2,968)	551.976***
	중학교	45.0	44.8	10.2	100.0(3,640)	
	일반/특목/자율고	29.0	49.4	21.6	100.0(3,160)	
	특성화고	49.7	39.9	10.5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44.0	43.5	12.4	100.0(4,424)	24.141***
	중소도시	40.9	45.0	14.1	100.0(4,714)	
	읍면지역	47.2	42.1	10.8	100.0(1,3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4	44.3	13.3	100.0(9,745)	35.019***
	한부모가정	49.2	41.2	9.6	100.0(560)	
	조손가정	57.9	36.4	5.7	100.0(41)	
	기타	63.0	31.2	5.8	100.0(103)	
학업 성적	상	39.4	43.8	16.8	100.0(3,227)	70.939***
	중	43.8	44.3	11.9	100.0(4,405)	
	하	45.7	44.0	10.3	100.0(2,739)	
경제적 수준	상	41.8	43.3	14.9	100.0(4,687)	29.702***
	중	44.1	44.8	11.1	100.0(4,045)	
	하	43.3	44.3	12.5	100.0(1,649)	

\*\*\* p&lt;.001

## 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모른다’ 27.7%, ‘이름만 들어봤다’ 54.9%,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17.3%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72.3%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아동인권협약 및 학생인권조례처럼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친화적 홍보 및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분야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인권전담기구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V-1-8 인권 관련 협약 및 가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chi^2$
전체		27.7	54.9	17.3	100.0(10,444)	—
성별	남자	30.0	53.1	16.8	100.0(5,447)	30.075***
	여자	25.2	56.9	17.9	100.0(4,99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2	52.2	14.6	100.0(2,967)	181.161***
	중학교	22.9	55.0	22.1	100.0(3,638)	
	일반/특목/자율고	26.2	57.6	16.2	100.0(3,160)	
	특성화고	36.6	53.9	9.5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27.8	53.5	18.7	100.0(4,421)	17.448**
	중소도시	27.5	55.6	17.0	100.0(4,713)	
	읍면지역	28.2	57.7	14.1	100.0(1,3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2	55.2	17.6	100.0(9,740)	30.532***
	한부모가정	32.7	54.0	13.3	100.0(560)	
	조손가정	48.8	45.7	5.5	100.0(41)	
	기타	39.5	43.4	17.1	100.0(103)	
학업 성적	상	23.6	53.6	22.8	100.0(3,226)	144.393***
	중	27.0	56.9	16.1	100.0(4,402)	
	하	33.3	53.6	13.0	100.0(2,738)	
경제적 수준	상	26.1	54.0	19.9	100.0(4,684)	42.323***
	중	28.8	56.0	15.2	100.0(4,043)	
	하	29.5	55.2	15.3	100.0(1,649)	

\*\* p&lt;.01 \*\*\* p&lt;.00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는 모든 변인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30.0%)이 여학생(25.2%)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등학생(36.6%), 초등학생(33.2%), 중학생(22.9%), 일반계고등학생(26.2%)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8.2%), 대도시(27.8%), 중소도시(27.5%) 순으로 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 아동·청소년(48.8%), 기타(39.5%), 한부모가정(32.7%), 양부모가정(27.2%) 순으로, 학업성적(상 23.6%, 중 27.0%, 하 33.3%)과 경제적 수준(상 26.1%, 중 28.8%, 하 29.5%)이 낮을수록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모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인권의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를 알아본 결과, 우리나라 전체로부터의 인권존중 정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아동·청소년 인권이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차원에서 더욱더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V-1-9 인권의 존중 정도

내 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1.4	5.7	46.7	46.2
2) 학교	3.2	12.6	62.6	21.5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2.6	11.1	64.8	21.5
4) 우리나라 전체	7.4	21.8	54.2	16.6
5) 사이버공간	7.1	16.7	57.9	18.3

자신에 대한 인권 존중 정도를 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한다(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한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가 2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공간 23.8%, 학교가 15.8%, 내가 살고 있는 지역 13.7%, 가정 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와 사이버 공간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4%와 7.1%로 그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의 경우 10명 중 약 1.6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또한 10명 중 약 1.4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에서는 다른 범주보다 그 비율이 낮았지만 100명 중 약 7명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각 범주별로 자신의 인권존중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가정의 경우 성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은 역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1.8%, 여자는 1.0%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편'인 경우가 남자가 5.4%, 여자가 5.9%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은 남자가 7.2%, 여자가 6.9%로 남자의 응답비율이 여자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표 IV-1-10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_2)

(단위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chi^2$
1) 가정	전체	1.4	5.7	46.7	46.2	100.0(10,452)	-
	성별	남자	1.8	5.4	46.9	100.0(5,452)	15.741**
		여자	1.0	5.9	46.4	100.0(5,0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	4.7	40.1	100.0(2,971)	115.531***
		중학교	1.4	5.9	49.1	100.0(3,642)	
		일반/특목/자율고	1.4	5.8	48.5	100.0(3,160)	
		특성화고	2.1	7.7	54.2	100.0(6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	5.4	46.2	100.0(9,750)	64.245***
		한부모가정	2.4	7.9	53.7	100.0(560)	
		조손가정	6.5	17.3	42.3	100.0(41)	
		기타	2.7	10.8	55.6	100.0(101)	
	학업 성적	상	1.1	3.7	37.2	100.0(3,230)	347.464***
		중	1.1	5.2	49.3	100.0(4,405)	
		하	2.3	8.6	53.6	100.0(2,741)	
	경제적 수준	상	1.1	3.7	38.6	100.0(4,690)	420.877***
		중	1.4	5.9	52.8	100.0(4,047)	
		하	2.2	10.2	54.3	100.0(1,650)	
2) 학교	전체	3.2	12.6	62.6	21.5	100.0(10,449)	
	성별	남자	4.1	12.8	60.6	100.0(5,451)	40.089***
		여자	2.3	12.4	64.8	100.0(4,999)	
	학교 유형	초등학교	1.9	8.5	57.0	100.0(2,971)	478.741***
		중학교	2.9	11.5	64.8	100.0(3,639)	
		일반/특목/자율고	4.0	16.4	65.4	100.0(3,160)	
		특성화고	7.6	19.4	62.9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3.3	12.0	61.4	100.0(4,424)	25.014***
		중소도시	3.2	13.1	62.9	100.0(4,715)	
		읍면지역	3.3	13.2	66.2	100.0(1,3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	12.5	62.4	100.0(9,747)	19.927*
		한부모가정	3.9	14.5	66.4	100.0(560)	
		조손가정	6.8	18.3	55.4	100.0(41)	
		기타	3.3	15.0	63.9	100.0(101)	
	학업 성적	상	2.5	9.3	55.9	100.0(3,230)	505.523***
		중	2.2	11.6	67.2	100.0(4,404)	
		하	5.9	18.2	63.4	100.0(2,739)	
	경제적 수준	상	2.8	10.8	57.9	100.0(4,689)	313.180***
		중	3.0	12.5	67.0	100.0(4,045)	
		하	5.2	18.0	65.1	100.0(1,650)	

\* p&lt;.05 \*\* p&lt;.01 \*\*\* p&lt;.001

학교 유형의 경우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는 특성화고가 21%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특목/자율고 모두 14%의 비율을 보였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인 경우는 특성화고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5.9%, 일반/특목/자율고 5.8%, 초등학교 4.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7.3%, 일반/특목/자율고 7.2%, 초등학교 6.1% 순이었다.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 조손가정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27%, 한부모가정 24%, 양부모 가정 13%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조손가정이 17.3%로 다른 범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10.8%, 한부모 가정 7.9%, 양부모 가정 5.4% 순이었다. 가족 유형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로 응답한 비율은 조손가정 23.8%, 기타 13.5%, 한부모가정 10.3%, 양부모가정 6.7%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 살펴보면 성적이 나쁠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성적이 '하'인 경우 '존중받지 못한다'('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10.9%로 가장 높았으며 성적이 '중'인 경우는 6.3%, 성적이 '상'일 경우는 4.8%의 비율을 보였다. 경제적 수준 또한 낮을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12.4%, '중'인 경우 7.3%, 높은 경우 4.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교에서의 인권존중 정도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성별로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자 4.1%, 여자 2.3%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자 12.8%, 여자 12.4%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았다.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와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를 합한 비율은 남자 16.9%, 여자 14.7%의 비율을 보여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1.9%였지만, 중학교 2.9%, 일반/특목/자율고 4%, 특성화고 7.6%로 상승했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도 초등학교 8.5%, 중학교 11.5%, 일반/특목/자율고 16.4%, 특성화고 19.4%로 증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족유형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손가정 6.8%, 한부모가정 3.9%, 기타 3.3%, 양부모가정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는 조손가정 18.3%, 기타 15%, 한부모가정 14.5%, 양부모가정 12.5%로 양부모가정에 비해 양부모가정이 아닌 범주가 학교에서 더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를 질문한 결과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각 항목별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가 남자 3.1%, 여자 2.1%로, 남자가 여자보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으로 응답했으며,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11.2%, 여자 11.1%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았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은 남자 14.3%, 여자 13.2%였다.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특성화고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3.3%, 중학교 2.2%, 일반/특목/자율고 2% 순으로 나타났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도 특성화고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11.8%, 중학교 10.8%, 일반/특목/자율고 10.4% 순으로 나타났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은 특성화고가 1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15.1%, 중학교 13%, 일반/특목/자율고 12.4% 순이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 정도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읍면지역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2.6%, 대도시 2.5%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은 중소도시 11.4%, 대도시 11.1%, 읍면지역 10.2%로 나타났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은 중소도시가 14%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13.6%, 읍면지역 13.1% 순이었다.

가족유형에서도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조손가정 7.2%, 한부모가정 4.1%, 양부모가정 2.4% 순으로 나타났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도 기타가 1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17.3%, 한부모가정 13%, 양부모가정 10.9% 순이었다. 전체 존중받지 못하는 비율은 기타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24.5%, 한부모가정 17.1%, 양부모가정 13.3%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낮을수록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는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3.9%, ‘중’이 2.1%, 높은 경우 2%였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편’은 성적이 ‘하’일 경우 15.4%, ‘중’ 10.1%, ‘상’일 경우 8.9%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은 성적이 낮은 경우 19.3%, ‘중’ 12.2%, 높은 경우 10.9%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 또한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는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 3.9%, ‘상’과 ‘중’인 경우 각각 2.3%였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편’은 ‘하’가 16.2%, ‘중’이 11.3%, ‘상’이 9.1%였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20.1%, ‘중’ 13.6%, 높은 경우 11.4%였다.

표 IV-1-11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단위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chi^2$
전체		2.6	11.1	64.8	21.5	100.0(10,433)	—
성별	남자	3.1	11.2	62.0	23.7	100.0(5,448)	48.895***
	여자	2.1	11.1	67.7	19.1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	11.8	53.5	31.4	100.0(2,964)	353.799***
	중학교	2.2	10.8	65.6	21.4	100.0(3,640)	
	일반/특목/자율고	2.0	10.4	73.2	14.4	100.0(3,159)	
	특성화고	3.9	13.2	70.6	12.3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2.5	11.1	62.8	23.6	100.0(4,421)	25.219***
	중소도시	2.6	11.4	65.6	20.4	100.0(4,712)	
	읍면지역	2.9	10.2	68.4	18.5	100.0(1,3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	10.9	64.7	22.0	100.0(9,740)	44.436***
	한부모가정	4.1	13.0	67.6	15.3	100.0(560)	
	조손가정	7.2	17.3	54.5	21.0	100.0(41)	
	기타	7.9	19.2	59.1	13.8	100.0(101)	
학업 성적	상	2.0	8.9	59.7	29.5	100.0(3,228)	270.906***
	중	2.1	10.1	67.7	20.1	100.0(4,401)	
	하	3.9	15.4	66.2	14.5	100.0(2,738)	
경제적 수준	상	2.3	9.1	60.2	28.4	100.0(4,685)	303.140***
	중	2.3	11.3	68.6	17.8	100.0(4,043)	
	하	3.9	16.2	68.4	11.5	100.0(1,649)	

\*\*\* p&lt;.001

우리나라 전체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는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가 9%로 여자(5.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인 비율은 여자가 22%로 남자 21.6%보다 약간 더 높았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은 남자가 30.6%로 여자 27.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특성화고가 1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8.7%, 일반/특목/자율고 7%, 중학교 5.9%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은 특성화고가 2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 25.3%, 초등학교 20.4%, 중학교 19%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전체 응답 비율은 특성화고 37.9%, 일반/특목/자율고 32.3%, 초등학교 29.1%, 중학교 24.9%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읍면지역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대도시 7.5%, 중소도시 7.1%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은 중소도시 23.3%, 읍면지역 21%, 대도시 20.4%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의 전체 비율은 중소도시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읍면지역 28.8%, 대도시 27.9% 순이었다.

가족유형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타'가 1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12%, 한부모가정 10.4%, 양부모가정 7.1%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은 한부모가정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21.7%, 조손가정 20.7%, 기타 16.8%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은 한부모가정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32.8%, 조손가정 32.7%, 양부모가정 28.8%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성적이 내려갈수록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성적이 '하'인 경우 10%, '상' 6.5%, '중' 6.2%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는 응답은 성적 '하' 26.8%, '중' 21.4%, '상' 18.2%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은 성적이 낮은 경우 36.8%, 중간인 경우 27.6%, 높은 경우 24.7%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 또한 낮을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는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 11.1%, '상' 6.7%, '중' 6.5%였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비율은 '하' 30.1%, '중' 21.7%, '상' 19%의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은 '하' 41.2%, '중' 28.2%, '상' 25.7%의 비율을 보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존중 정도는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가 남자는 9.3%, 여자는 4.7%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도 남자 18.6%, 여자 14.6%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의 전체 비율은 남자 27.9%, 여자 19.3%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성화고가 1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 8.4%, 초등학교 7.1%, 중학교 5%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았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는 일반/특목/자율고가 20.6%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19.8%, 중학교 15.3%, 초등학교 13.5%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체 비율은 특성화고가 3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 29%, 초등학교 20.6%, 중학교 20.3% 순이었다.

지역규모에서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는 중소도시가 7.2%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지역 7.1%, 대도시 6.9%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지역 17%, 대도시 15.9%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전체 비율은 중소도시 24.6%, 읍면지역 24.1%, 대도시 22.8% 순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적이 낮은 응답자에게서 9.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 6.6%, '중' 5.9%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은 성적 '하'가 19%로 가장 높았으며, '중' 16.4%, '상' 15.2% 순이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의 전체 비율은 성적인 낮은 경우 29.4%, 중간 정도인 경우 22.3%, 높은 경우 21.8% 순이었다.

표 IV-1-12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_5)      (단위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chi^2$
4) 우리 나라 전체	전체	7.4	21.8	54.2	16.6	100.0(10,442)	—
	성별	남자	9.0	21.6	51.3	100.0(5,446)	77.413***
		여자	5.6	22.0	57.5	100.0(4,997)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	20.4	44.9	100.0(2,965)	456.108***
		중학교	5.9	19.0	57.6	100.0(3,640)	
		일반/특목/자율고	7.0	25.3	58.8	100.0(3,160)	
		특성화고	11.3	26.6	55.8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7.5	20.4	53.1	100.0(4,420)	40.283***
		중소도시	7.1	23.3	54.5	100.0(4,712)	
		읍면지역	7.8	21.0	57.1	100.0(1,3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1	21.7	54.2	100.0(9,740)	31.511***
		한부모가정	10.4	23.5	54.5	100.0(560)	
		조손가정	12.0	20.7	55.2	100.0(41)	
		기타	16.0	16.8	53.9	100.0(101)	
	학업 성적	상	6.5	18.2	51.5	100.0(3,226)	263.301***
		중	6.2	21.4	57.4	100.0(4,403)	
		하	10.0	26.8	52.4	100.0(2,739)	
	경제 적 수준	상	6.7	19.0	51.7	100.0(4,687)	336.760***
		중	6.5	21.7	58.4	100.0(4,042)	
		하	11.1	30.1	51.1	100.0(1,647)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chi^2$
5) 사이버 공간	전체	7.1	16.7	57.9	18.3	100.0(10,437)	—
	성별	남자	9.3	18.6	52.4	100.0(5,446)	178.502***
		여자	4.7	14.6	64.0	100.0(4,991)	
	학교 유형	초등학교	7.1	13.5	50.6	100.0(2,958)	472.252***
		중학교	5.0	15.3	60.9	100.0(3,640)	
		일반/특목/자율고	8.4	20.6	60.8	100.0(3,160)	
		특성화고	11.4	19.8	60.9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6.9	15.9	56.5	100.0(4,418)	36.703***
		중소도시	7.2	17.4	58.3	100.0(4,709)	
		읍면지역	7.1	17.0	61.5	100.0(1,311)	
	학업 성적	상	6.6	15.2	52.9	100.0(3,223)	202.598***
		중	5.9	16.4	61.5	100.0(4,400)	
		하	9.4	19.0	58.3	100.0(2,739)	
	경제 적 수준	상	6.1	14.7	55.3	100.0(4,682)	229.192***
		중	7.1	16.9	61.0	100.0(4,041)	
		하	9.5	21.8	58.1	100.0(1,647)	

\* p<.05 \*\* p<.01 \*\*\* p<.001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경제적 수준 ‘하’가 9.5%, ‘중’ 7.1%, ‘상’ 6.1%였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 21.8%, ‘중’ 16.9%, ‘상’ 14.7% 순이었다.

### ③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중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를 질문한 결과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 변인별로 청소년의 주체성에 부정적인 응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그런 편이다’가 남자의 경우 27.7%로 여자 24.5%보다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도 남자가 5.3%로 여자 2.6%보다 높았다. ‘그렇다’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남자 33%, 여자 27.1%였다.

학교 유형은 ‘그런 편’으로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재학생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4.7%, 특성화고 24.3%, 일반/특목/자율고 22.9% 순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가 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7%, 특성화고 25%, 일반/특목/자율고 21% 순이었다. ‘그렇다’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초등학교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7.4%, 특성화고 26.8%, 일반/특목/자율고 25%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그런 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읍면지역이 27.2%, 대도시 26.3%, 중소도시 25.8% 순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대도시 4.3%, 중소도시 4%, 읍면지역 3.1% 순이었다. ‘그렇다’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대도시 30.6%, 읍면지역 30.3%, 중소도시 29.8%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면, ‘그런 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성적이 ‘중’ 27.5%, ‘하’ 26.5%, ‘상’ 24.1% 순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비율은 성적 ‘중’ 4.2%, ‘상’ 4%, ‘하’ 3.6% 순이었다. ‘그렇다’고 응답한 전체 비율은 성적이 ‘중’인 경우 31.7%, ‘하’ 30.1%, ‘상’ 28.1%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경제적 수준이 ‘상’인 경우 32.2%, ‘중’ 30%, ‘하’ 25.2%로 나타났다.

‘청소년도 사회문제가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의 경우는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사회 및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성별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가 남자 6.3%, 여자 2.6%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은 편’도 남자 15.1%, 여자 9%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그렇지 않다’의 전체 비율은 남자 21.4%, 여자 11.6%였다.

표 IV-1-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1\_2)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7.3	42.5	26.2	4.0	100.0(10,447)	85.798***
	성별	남자	27.6	39.4	27.7	100.0(5449)	
		여자	26.9	46.0	24.5	100.0(4,997)	
	학교 유형	초등학교	26.3	33.7	32.0	100.0(2,965)	311.886***
		중학교	28.7	43.9	24.7	100.0(3,64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일반/특목/자율고	26.7	48.3	22.9	2.1	100.0(3,160)	
		특성화고	26.3	46.9	24.3	2.5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27.4	42.0	26.3	4.3	100.0(4,422)	13.155*
		중소도시	27.9	42.3	25.8	4.0	100.0(4,712)	
		읍면지역	24.2	45.5	27.2	3.1	100.0(1,312)	
	학업 성적	상	30.4	41.6	24.1	4.0	100.0(3,230)	38.573***
		중	24.4	43.9	27.5	4.2	100.0(4,400)	
		하	28.2	41.6	26.5	3.6	100.0(2,741)	
	경제적 수준	상	27.8	40.1	27.0	5.2	100.0(4,687)	62.031***
		중	25.8	44.3	26.9	3.1	100.0(4,045)	
		하	29.4	45.4	22.4	2.8	100.0(1,649)	
2) 청소년도 사회문제가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전체		4.5	12.2	57.4	25.9	100.0(10,435)	-
	성별	남자	6.3	15.1	54.1	24.6	100.0(5,445)	186.429***
		여자	2.6	9.0	61.1	27.3	100.0(4,991)	
	학교 유형	초등학교	5.9	13.8	48.0	32.3	100.0(2,956)	236.646***
		중학교	4.8	13.2	60.3	21.6	100.0(3,641)	
		일반/특목/자율고	2.9	8.6	61.9	26.6	100.0(3,160)	
		특성화고	4.5	15.7	62.1	17.7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4.7	12.6	55.4	27.2	100.0(4,417)	20.359**
		중소도시	4.5	12.1	58.0	25.4	100.0(4,707)	
		읍면지역	3.9	10.6	62.2	23.3	100.0(1,31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4	11.8	57.7	26.1	100.0(9,735)	31.539***
		한부모가정	5.8	16.4	56.1	21.7	100.0(558)	
		조손가정	9.6	22.0	36.4	32.0	100.0(41)	
		기타	8.9	16.2	51.6	23.3	100.0(101)	
	학업 성적	상	3.3	9.4	51.8	35.5	100.0(3,226)	255.441***
		중	4.6	12.9	59.4	23.1	100.0(4,397)	
		하	5.8	14.2	60.9	19.1	100.0(2,737)	
	경제적 수준	상	5.1	11.3	54.3	29.4	100.0(4,680)	78.195***
		중	4.2	13.5	60.3	22.0	100.0(4,042)	
		하	3.7	11.2	59.3	25.8	100.0(1,647)	

\* p<.05 \*\* p<.01 \*\*\* p<.001

학교 유형에 따른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초등학교가 5.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4.8%, 특성화고 4.5%, 일반/특목/자율고 2.9% 순이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비율은 특성화고가 1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13.8%, 중학교 13.2%, 일반/특목/자율고 8.6% 순이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특성화고가 20.2%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19.7%, 중학교 18%, 일반/특목/자율고 11.5% 순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대도시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4.5%, 읍면지역 3.9% 순이었다. ‘그렇지 않은 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 12.6%, 중소도시 12.1%, 읍면지역 10.6% 순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대도시 17.3%, 중소도시 16.6%, 읍면지역 14.5% 순이었다. 가족 유형별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조손가정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는 8.9%, 한부모가정 5.8%, 양부모가정 4.4% 순이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조손가정 22%, 한부모가정 16.4%, 기타 16.2%, 양부모가정 11.8% 순이었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조손가정 31.6%, 기타 25.1%, 한부모가정 22.2%, 양부모가정 16.2% 순이었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높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적 ‘하’가 5.8%, ‘중’이 4.6%, ‘상’이 3.3%였다. ‘그렇지 않다’는 성적 ‘하’가 14.2%, ‘중’이 12.9%, ‘상’이 9.4%였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성적이 낮은 경우 20%, ‘중’ 17.5%, 높은 경우 12.7%였다. 경제적 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경제적 수준이 ‘상’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중’ 4.2%, ‘하’가 3.7%였다. ‘그렇지 않은 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경제적 수준이 ‘중’ 13.5%, ‘상’ 11.3%, ‘하’가 11.2%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경제적 수준 ‘중’이 17.7%, ‘상’이 16.4%, ‘하’가 14.9% 순이었다.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23.1%(전혀 그렇지 않다 5.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2%)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세부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는 26%가, 여자는 19.9%가 그렇지 않은 것(‘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으로 응답했다. 학교 유형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특성화고 28.6%, 일반/특목/자율고 23%, 중학교 22.1% 순이었다. 학업성적에 따른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성적 ‘하’가 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적 ‘상’이 21.8%, ‘중’이 20.8%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의견 대변 조직이나 모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경제적 수준이 ‘하’ 27.8%, ‘중’ 22.1%, ‘상’ 21.5% 순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조사항목에는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6.6%,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3.4%였다.

표 IV-1-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3)\_4) (단위 :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체		5.9	17.2	61.3	15.6	100.0(7,479)	—
	성별	남자	8.2	17.8	58.2	15.8	100.0(3,905)	89.561***
		여자	3.3	16.6	64.7	15.3	100.0(3,574)	
	학교 유형	중학교	6.1	16.0	61.3	16.6	100.0(3,640)	26.836***
		일반/특목/자율고	5.4	17.6	61.5	15.5	100.0(3,159)	
		특성화고	6.5	22.1	60.5	10.8	100.0(679)	
	학업 성적	상	5.2	16.6	56.7	21.5	100.0(1,975)	109.771***
		중	4.9	15.9	65.1	14.1	100.0(3,030)	
		하	7.7	19.3	60.7	12.2	100.0(2,404)	
	경제적 수준	상	5.7	15.8	59.8	18.6	100.0(2,855)	55.286***
		중	5.4	16.7	64.4	13.5	100.0(3,080)	
		하	7.1	20.7	58.4	13.8	100.0(1,483)	
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전체		2.5	4.1	43.9	49.5	100.0(10,431)	—
	성별	남자	3.6	5.8	45.2	45.4	100.0(5,440)	176.426***
		여자	1.3	2.3	42.5	53.9	100.0(4,99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	4.1	35.0	57.9	100.0(2,954)	183.106***
		중학교	3.1	4.6	47.6	44.6	100.0(3,640)	
		일반/특목/자율고	1.2	3.3	46.6	48.9	100.0(3,160)	
		특성화고	3.1	5.0	50.3	41.6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	3.9	43.8	49.9	100.0(9,730)	62.198***
		한부모가정	2.9	5.4	48.0	43.7	100.0(559)	
		조손가정	7.3	13.7	36.5	42.6	100.0(41)	
		기타	7.5	13.4	34.7	44.4	100.0(101)	
	학업 성적	상	1.7	2.5	34.5	61.3	100.0(3,223)	310.125***
		중	2.4	3.9	47.8	45.9	100.0(4,393)	
		하	3.8	6.2	48.7	41.4	100.0(2,740)	
	경제적 수준	상	2.7	3.5	39.9	53.9	100.0(4,677)	80.081***
		중	2.4	4.4	48.3	44.8	100.0(4,042)	
		하	2.2	4.7	44.8	48.3	100.0(1,647)	

\* p<.05 \*\* p<.01 \*\*\* p<.001

성별의 경우 남자는 94%, 여자는 36%가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편이다’)으로 응답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약 2.7배 정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특성화고 8.1%, 중학교 7.7%, 초등학교 7.1%, 일반/특목/자율고 4.5% 순으로 특성화고가 이 영역에서 특히 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손가족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도 20.9%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은 각각 8.3%와 6.3%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조손가족’과 ‘기타’ 유형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 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낮을수록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 인식 정도가 높았는데,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성적 ‘하’ 10%, ‘중’ 6.3%, ‘상’ 4.2%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정적인 응답은 경제적 수준이 ‘하’ 6.9%, ‘중’ 6.8%, ‘상’ 6.2%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 중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95%가 ‘그렇다’로 응답했지만,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도 약 5%나 되었다.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에 대한 생각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성별, 학교 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이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7.7%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응답하여 여자의 2%보다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특성화고가 6.3%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6.2%, 일반/특목/자율고가 3.2%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기타’가 20.4%로 가장 높았으며, ‘조손가정’ 18%, ‘한부모가정’ 5.1%, ‘양부모가정’ 4.7%로 양부모 및 한부모 이외의 가족형태에서 가정형편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하’가 5.9%, ‘상’과 ‘중’이 각각 4.4%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으로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높은 ‘상’이 5.6%, ‘중’과 ‘하’가 4.4%의 비율을 보였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3.5%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대답했지만,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도 6.5%의 비율을 보였다. 남녀의 평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이었다. 각 변인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의 9.2%가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부정적(‘그렇지 않다’)로 대답했으며, 여자의 3.5%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학교 유형에서는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이 특성화고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 7.2%, 중학교 6.3%, 초등학교 5.7%로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유형별로는 기타 가정이 19.4%로 가장 높았으며, 조손가정 9.4%, 한부모가정 9%, 양부모가정 6.3% 순으로 나타나 양부모가정 이외의 가족형태에서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각각 ‘하’인 경우 남녀평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하’인 경우 8.9%, ‘중’과 ‘상’은 각각 5.6%였으며,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가 8.4%, ‘중’과 ‘상’이 각각 6.1%였다.

표 IV-1-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5)\_6)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전체		2.1	2.8	34.6	60.4	100.0(7,481)	—
	성별	남자	3.4	4.3	36.9	55.4	100.0(3,906)	164.701***
		여자	0.8	1.2	32.1	65.9	100.0(3,574)	
	학교 유형	중학교	2.9	3.3	36.3	57.5	100.0(3,643)	56.589***
		일반/특목/자율고	1.1	2.1	32.5	64.2	100.0(3,160)	
		특성화고	2.7	3.6	34.9	58.8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1	2.6	34.6	60.7	100.0(6,916)	66.911***
		한부모가정	2.2	2.9	35.4	59.5	100.0(446)	
		조손가정	3.8	14.2	39.1	42.8	100.0(27)	
		기타	7.3	13.1	30.8	48.8	100.0(92)	
	학업 성적	상	1.5	2.9	28.0	67.6	100.0(1,974)	69.336***
		중	2.0	2.4	36.8	58.9	100.0(3,033)	
		하	2.8	3.1	37.3	56.8	100.0(2,405)	
	경제적 수준	상	2.4	3.2	32.2	62.3	100.0(2,856)	49.787***
		중	2.0	2.4	38.9	56.7	100.0(3,082)	
		하	1.8	2.6	30.3	65.3	100.0(1,482)	
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전체		2.7	3.8	34.5	59.0	100.0(10,432)	—
	성별	남자	4.0	5.2	37.7	53.0	100.0(5,443)	237.195***
		여자	1.2	2.3	30.9	65.5	100.0(4,99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	2.6	27.3	66.9	100.0(2,954)	138.720***
		중학교	2.7	3.6	36.5	57.1	100.0(3,641)	
		일반/특목/자율고	2.2	5.0	37.9	54.9	100.0(3,160)	
		특성화고	2.9	4.8	38.6	53.7	100.0(67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	3.7	34.3	59.4	100.0(9,732)	43.719***
		한부모가정	4.2	4.8	37.3	53.7	100.0(558)	
		조손가정	2.4	7.0	32.0	58.6	100.0(41)	
		기타	6.7	12.7	33.7	47.0	100.0(101)	
	학업 성적	상	2.2	3.4	25.5	68.9	100.0(3,227)	226.272***
		중	2.4	3.2	38.0	56.4	100.0(4,392)	
		하	3.8	5.1	39.3	51.8	100.0(2,737)	
	경제적 수준	상	2.8	3.3	30.4	63.4	100.0(4,681)	102.875***
		중	2.5	3.6	39.5	54.4	100.0(4,039)	
		하	2.7	5.7	33.4	58.2	100.0(1,646)	

\*\*\* p<.001

표 IV-1-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8	6.3	40.9	49.0	100.0(10,420)	—
성별	남자	5.1	7.0	41.9	46.0	100.0(5,433)	83.434***
	여자	2.4	5.5	39.8	52.3	100.0(4,988)	
학교 유형	초등학교	4.3	7.0	36.4	52.4	100.0(2,946)	74.371***
	중학교	3.9	5.2	42.8	48.1	100.0(3,640)	
	일반/특목/자율고	2.9	6.1	42.1	48.9	100.0(3,156)	
	특성학교	5.0	10.1	44.7	40.2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4.3	6.3	39.6	49.8	100.0(4,409)	13.348*
	중소도시	3.5	6.5	41.3	48.6	100.0(4,702)	
	읍면지역	3.1	5.5	43.8	47.7	100.0(1,3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7	6.1	40.8	49.3	100.0(9,719)	17.346*
	한부모가정	4.3	7.4	42.0	46.3	100.0(559)	
	조손가정	4.2	11.5	45.2	39.1	100.0(41)	
	기타	6.7	12.7	36.9	43.8	100.0(101)	
학업 성적	상	3.0	5.0	34.1	57.9	100.0(3,221)	171.334***
	중	3.4	6.5	43.6	46.5	100.0(4,387)	
	하	5.3	7.4	44.5	42.8	100.0(2,738)	
경제적 수준	상	3.6	5.7	38.3	52.4	100.0(4,673)	53.219***
	중	3.9	6.7	44.6	44.9	100.0(4,034)	
	하	4.0	6.9	39.0	50.1	100.0(1,647)	

\* p<.05 \*\*\* p<.001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조사항목에 대해 전체의 89.9%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10.1%에 해당됐다. 평등한 교육 기회에 대해서도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 가족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각 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남자가 121%, 여자 7.9%로 남자가 여자보다 타민족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응답에 대해서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1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11.3%, 중학교 9.1%, 일반/특목/자율고 9% 순이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0.6%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10%, 읍면지역 8.6% 순이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 기타가 19.4%로 평등한 교육기회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조손가정 15.7%, 한부모가정 11.7%, 양부모가정 9.8% 순으로 양부모가정 이외의 가정 형태, 특히 기타와 조손가정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그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학업성적의 경우 성적 ‘하’는 12.7%, ‘중’은 9.9%, ‘상’은 8%였으며, 경제적 수준은 ‘하’ 10.9%, ‘중’ 10.6%, ‘상’ 9.3% 순이었다.

### (3) 인권교육

#### ① 인권교육 경험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인권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13년 45.6%, 2014년 35.6%로 2013년에 비해 2014년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인권교육 경험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IV-1-17 인권교육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 받은 적 없음	전체(N)	$\chi^2$
전체	2013	18.6	15.7	10.4	2.3	7.4	45.6	100.0(9,298)	-
	2014	15.4	17.6	14.1	4.3	13.0	35.6	100.0(10,467)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 받은 적 없음	전체(N)	$\chi^2$
학교 유형	초등학교	12.4	16.1	16.2	6.8	22.0	26.3	100.0(2,969)	621.295***
	중학교	15.5	18.9	15.9	4.3	11.5	33.9	100.0(3,656)	
	일반/특목/자율고	17.4	17.5	10.1	2.5	7.2	45.3	100.0(3,162)	
	특성화고	19.5	18.3	13.1	1.8	7.8	39.5	100.0(680)	
지역 규모	대도시	14.6	17.6	13.8	4.3	13.6	36.2	100.0(4,437)	19.008*
	중소도시	16.3	17.5	14.4	4.4	13.1	34.3	100.0(4,717)	
	읍면지역	15.3	18.4	13.9	4.1	10.3	38.0	100.0(1,314)	

\* p<.05 \*\* p<.01 \*\*\* p<.001

주: 학교유형, 지역규모별 통계수치는 2014년 조사결과임.

‘1회’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013년에는 전체의 18.6%였지만 2014년에는 15.4%로 감소하였고, ‘5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2013년 7.4%에서 2014년 13.0%로 증가하여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2014년 조사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학교유형과 지역규모였다. 학교유형에서는 ‘교육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특목/자율고가 4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 39.5%, 중학교 33.9%, 초등학교 26.3% 순이었다. 일반/특목/자율고는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에 몰입하는 경향으로 인해 특성화고에 비해 인권교육에 소홀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규모에서는 교육받은 적이 없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대도시 36.2%, 중소도시 34.3% 순이었다.

## ② 인권교육 받은 기관

인권교육을 경험한 장소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학교 정규교과시간’으로 응답했으며,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35.6%,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17.3%, ‘기타’ 4.6% 순이었고,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0.3%에 해당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학교 정규교과시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60% 정도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비율(24.7%)이 높았으며,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학교 정규 교과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반/특목/자율고는 ‘학교 정규교과시간’(50.1%)의

비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중(47.2%)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학교 정규교과시간’이 60%가 넘어 대도시의 56.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유형의 경우 조손가정은 ‘학교 정규교과시간’의 비중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학교 밖 인권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비중과 ‘기타’가 학업성적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는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기타’의 비중이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8 인권교육 경험 장소 (단위 : %(명))

구분		학교 정규 교과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모름	전체(N)
전체		59.7	35.6	17.3	4.6	0.3	100.0(6,529)
성별	남자	59.6	34.2	16.7	3.6	0.3	100.0(3,333)
	여자	59.8	37.1	17.9	5.6	0.3	100.0(3,196)
학교 유형	초등학교	57.0	34.7	24.7	8.5	0.2	100.0(2,130)
	중학교	68.4	28.8	15.0	3.1	0.2	100.0(2,329)
	일반/특목/자율고	50.1	47.2	12.1	2.5	0.3	100.0(1,670)
	특성화고	63.4	32.0	12.5	0.8	1.3	100.0(400)
지역 규모	대도시	56.6	37.4	17.7	5.4	0.3	100.0(2,743)
	중소도시	61.4	34.1	17.7	4.3	0.3	100.0(3,002)
	읍면지역	64.1	35.2	14.3	2.8	0.4	100.0(78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9.7	35.6	17.4	4.6	0.3	100.0(6,101)
	한부모가정	60.6	35.8	14.6	3.6	0.7	100.0(342)
	조손가정	40.7	38.1	28.5	2.9	0.0	100.0(26)
	기타	65.7	32.9	16.0	5.0	0.0	100.0(59)
학업 성적	상	59.6	37.6	17.5	6.1	0.4	100.0(2,172)
	중	60.3	34.6	17.8	3.8	0.2	100.0(2,708)
	하	58.7	34.8	15.9	3.7	0.4	100.0(1,603)
경제적 수준	상	58.7	35.7	19.1	5.6	0.2	100.0(3,048)
	중	61.1	35.2	16.3	4.0	0.3	100.0(2,451)
	하	59.1	36.6	14.2	2.9	0.6	100.0(994)

### ③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 전체의 71.8%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28.2%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 가족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차이로는 남자의 경우 '도움이 되는 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70.2%, 여자는 73.5%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 유형은 일반/특목/자율고의 경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6.4%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 61.6%, 중학교 69.8%, 초등학교 88.1%로 나타나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실제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지역규모 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72% 사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족 유형은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가 조손가정의 경우 83.1%로 가장 높았으며, 양부모가정 72.3%, 한부모가정 65.6%, 기타 53.9%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부모 가정과 기타 가정유형에 대한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업성적은 도움 정도가 성적이 높은 '상'과 '중'은 각각 74.4%, 74.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하'인 경우 64.1%로 10%p 낮은 수준이었으며, 경제적 수준 또한 '상'과 '중'은 각각 75.5%, 72.1%였지만 '하'인 경우 60.5%로 10%p 이상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인권교육의 도움 또한 낮게 나타났다.

표 IV-1-19 인권교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도움이 된다	전체(N)	$\chi^2$
전체		6.9	21.3	58.2	13.6	100.0(6,441)	-
성별	남자	8.5	21.3	56.9	13.3	100.0(3,294)	27.082***
	여자	5.2	21.3	59.5	14.0	100.0(3,147)	
학교 유형	초등학교	2.3	9.6	55.5	32.6	100.0(2,099)	1217.725***
	중학교	6.8	23.4	64.4	5.4	100.0(2,301)	
	일반/특목/자율고	12.6	31.0	52.9	3.5	100.0(1,648)	
	특성화고	7.9	30.5	58.6	3.0	100.0(393)	
지역 규모	대도시	6.9	21.6	56.6	15.0	100.0(2,690)	17.980**
	중소도시	7.0	21.0	58.5	13.5	100.0(2,975)	
	읍면지역	6.7	21.4	62.5	9.4	100.0(775)	

구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도움이 된다	전체(N)	$\chi^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9	20.8	58.5	13.8	100.0(6,016)	26.456**
	한부모가정	5.6	28.8	55.8	9.8	100.0(337)	
	조손가정	6.0	10.9	62.7	20.4	100.0(27)	
	기타	12.8	33.3	43.9	10.0	100.0(61)	
학업 성적	상	6.3	19.2	53.9	20.5	100.0(2,152)	197.919***
	중	6.2	19.2	62.3	12.2	100.0(2,666)	
	하	8.7	27.2	57.6	6.5	100.0(1,575)	
경제적 수준	상	5.5	18.9	57.5	18.0	100.0(3,010)	163.961***
	중	6.7	21.2	61.1	11.0	100.0(2,412)	
	하	11.4	28.1	53.9	6.6	100.0(981)	

\*\* p<.01 \*\*\* p<.001

## 2) 일반원칙

### (1) 차별경험률

#### ① 차별해 본 경험

차별해 본 경험률이 가장 높은 조사항목은 ‘성적에 대한 차별’로 28.5%의 가해 경험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 ‘나이에 대한 차별(27.7%)’과 ‘성차별(26.9%)’,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25.1%)’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에 대한 차별(7.4%)’과 ‘지역에 대한 차별(6.2%)’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형편, 종교, 부모님의 부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가해 경험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1번 이상으로 차별한 경험이 높은 3% 이상인 비율은 ‘공부에 대한 차별(3.5%)’과 ‘외모에 대한 차별(3%)’이었으며, 2%가 넘는 차별 경험률은 나이, 성에 대한 차별이었다.

표 IV-1-20 다양한 이유에 따른 차별 정도

내 용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73.1	18.8	5.7	1.5	0.9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71.5	17.0	7.9	2.3	1.2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72.3	18.1	7.0	1.7	1.0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5.5	3.0	0.9	0.4	0.2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93.8	3.8	1.5	0.4	0.5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74.9	16.2	5.9	1.8	1.2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6.0	2.4	1.0	0.3	0.2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7.2	1.6	0.8	0.2	0.2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2.6	5.2	1.5	0.4	0.3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97.5	1.6	0.7	0.1	0.2

차별을 해 본 항목 중 성차별의 경우 성별, 학교 유형,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차별에 대해 여자(28%)가 남자(25.8%)보다 차별해 본 경험이 높았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심각한 차별 비율은 남자(3.2%)가 여자(1.6%)보다 2배 높았다. 학교 유형에서는 특성화고가 36.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9.9%, 일반/특목/자율고 27.1%, 초등학교 20.6% 순이었다. 1주일에 1번의 차별 비율도 특성화고(4.8%)가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2.9%), 중학교(2.2%), 일반/특목/자율고(1.8%)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차별해 본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하 31.6%, 중 26.9%, 상 25.1%), 1주일에 1번 이상의 심각한 차별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3.2%로 가장 높았다.

공부에 대한 차별은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비율이 29.3%로 여자 27.6%에 비해 높았으며 1주일에 1번의 심각한 차별도 남자(3.9%)가 여자(3%)보다 높았다.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특성화고 학생의 차별 경험 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특목/자율고(34.5%)와 중학교(31.8%)도 높은 수준이었다(초등학교 15.5%). 1주일에 1번 이상의 차별 경험도 특성화고



가 6.3%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4.2%, 일반/특목/자율고 3.7%로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 대한 개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초등학교 1.7%). 가족유형 중에서는 조손가정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37.7%, 한부모가정 35.3%, 양부모가정 27.9%로 양부모가정 이외의 가족형태에서 차별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주일에 1번 이상의 심각한 차별 경험 비율 또한 양부모가정(3.3%) 외의 가족유형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한부모가정 5.4%, 조손가정 4.8%, 기타 6.7%). 학업성적(하 38.2%, 중 27%, 상 21.9%)과 경제적 수준(하 35.8%, 중 29.7%, 상 24.6%)이 낮을수록 차별을 한 경험이 높았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차별경험 역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차별해 본 경험은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29.6%)가 남자(25.9%)보다 차별경험이 높았지만 1주일에 1회 이상의 심각한 차별은 남자(2.9%)가 여자(2.4%)보다 높았다. 학교유형은 특성화고(40.6%)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특목/자율고와 중학교도 30% 이상의 차별 경험을 보였고 초등학교의 경우 20% 미만이었다. 가족유형은 기타가 36.6%로 가장 높았으며, 양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은 27% 대의 비율을 보였으며 한부모가정은 32.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주일에 1번 이상의 차별 경험은 조손가정(9.1%)과 기타 가정(7.8%)이 다른 유형(양부모가정 2.5%, 한부모가정 4%)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업성적(하 32.6%, 중 25.9%, 상 25.7%)과 경제적 수준(하 35.1%, 중 28%, 상 24.7%) 또한 낮을수록 차별한 경험이 높았으며, 특히 하의 경우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심각한 가해 경험 또한 확연히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학업성적: 하 4.2%, 상 2.3%, 중 1.9%, 경제적 수준: 하 4.7%, 상 2.5%, 중 1.9%).

표 IV-1-21 차별해 본 경험\_1)\_2)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전체	73.1	18.8	5.7	1.5	0.9	100.0(10,448)	-
	성별	남자	74.2	16.6	6.1	1.8	100.0(5,453)	69.773***
		여자	72.0	21.2	5.3	1.2	100.0(4,9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79.4	13.7	4.1	1.9	100.0(2,967)	150.390***
		중학교	70.1	20.7	7.0	1.3	100.0(3,643)	
		일반/특목/자율고	72.9	20.0	5.3	1.1	100.0(3,161)	
		특성화고	63.1	24.9	7.1	3.5	100.0(677)	
	경제적 수준	상	74.9	17.2	5.5	1.6	100.0(4,688)	39.591***
		중	73.1	19.2	5.7	1.1	100.0(4,045)	
		하	68.4	22.0	6.4	2.4	100.0(1,649)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전체	71.5	17.0	7.9	2.3	1.2	100.0(10,445)	-
	성별	남자	70.7	16.6	8.7	2.4	100.0(5,450)	23.212***
		여자	72.4	17.6	7.0	2.1	100.0(4,996)	
	학교 유형	초등학교	84.5	10.3	3.4	1.1	100.0(2,965)	389.873***
		중학교	68.2	18.8	8.8	2.9	100.0(3,643)	
		일반/특목/자율고	65.5	19.9	10.8	2.3	100.0(3,159)	
		특성화고	60.4	23.7	9.6	3.8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2.1	16.8	7.8	2.2	100.0(9,747)	31.191**
		한부모가정	64.7	21.1	8.8	3.4	100.0(557)	
		조손가정	58.8	23.0	13.4	2.5	100.0(41)	
		기타	62.3	16.3	14.7	3.9	100.0(101)	
	학업 성적	상	78.1	14.6	5.2	1.4	100.0(3,228)	277.599***
		중	73.0	17.0	7.4	1.8	100.0(4,403)	
		하	61.8	19.8	11.6	4.1	100.0(2,739)	
	경제적 수준	상	75.4	14.9	6.8	1.9	100.0(4,686)	93.889***
		중	70.3	17.9	8.5	2.1	100.0(4,045)	
		하	64.2	21.0	9.1	3.7	100.0(1,648)	

\*\* p&lt;.01 \*\*\* p&lt;.001

표 IV-1-22 차별해 본 경험\_3)\_4)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체	72.3	18.1	7.0	1.7	1.0	100.0(10,444)	—
	성별	남자	74.1	15.7	7.4	1.9	100.0(5,449)	47.299***
		여자	70.4	20.7	6.5	1.5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83.4	11.5	3.4	0.9	100.0(2,965)	298.640***
		중학교	69.5	19.3	8.2	2.0	100.0(3,641)	
		일반/특목/자율고	68.0	21.5	8.0	1.7	100.0(3,161)	
		특성화고	59.4	25.1	10.5	3.6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2.7	17.9	6.9	1.6	100.0(9,742)	36.571***
		한부모가정	67.6	21.4	6.9	2.6	100.0(559)	
		조손가정	72.1	10.7	8.1	4.5	100.0(41)	
		기타	63.4	18.8	10.0	4.0	100.0(101)	
	학업 성적	상	74.3	17.6	5.8	1.5	100.0(3,228)	69.724***
		중	74.1	17.1	6.9	1.2	100.0(4,397)	
		하	67.4	20.3	8.2	2.6	100.0(2,743)	
	경제 적 수준	상	75.3	16.2	6.1	1.8	100.0(4,688)	98.693***
		중	72.0	19.1	7.0	1.1	100.0(4,041)	
		하	64.9	21.2	9.2	2.7	100.0(1,649)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95.5	3.0	0.9	0.4	0.2	100.0(10,446)	—
	성별	남자	94.4	3.4	1.2	0.6	100.0(5,452)	43.165***
		여자	96.6	2.6	0.6	0.1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1	1.4	0.3	0.1	100.0(2,965)	128.811***
		중학교	95.3	2.7	1.3	0.4	100.0(3,642)	
		일반/특목/자율고	94.6	3.7	1.0	0.4	100.0(3,161)	
		특성화고	89.2	7.6	1.8	1.1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8	2.8	0.8	0.3	100.0(9,746)	—
		한부모가정	92.5	4.6	2.3	0.6	100.0(558)	
		조손가정	89.6	6.6	2.1	1.7	100.0(41)	
		기타	84.4	7.1	4.8	2.0	100.0(101)	
	학업 성적	상	96.0	2.5	0.8	0.4	100.0(3,228)	22.189**
		중	96.0	2.9	0.9	0.2	100.0(4,401)	
		하	94.2	3.7	1.1	0.6	100.0(2,742)	
	경제 적 수준	상	96.6	2.1	0.7	0.3	100.0(4,688)	111.336***
		중	96.2	2.5	0.9	0.2	100.0(4,043)	
		하	90.8	6.4	1.5	0.8	100.0(1,649)	

\* p&lt;.05 \*\* p&lt;.01 \*\*\* p&lt;.001

주: 일부 빈도/비율이 0건 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을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5.6%)가 여자(3.4%)보다 가해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심각한 차별 경험도 남자(1%)가 여자(0.2%)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별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특성화고의 경우는 10.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1주일에 1번 이상의 심각한 차별 경험 또한 특성화고가 1.4%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양부모 이외의 가정에서 높은 차별 경험 비율을 보였는데 특히 기타(15.6%)와 조손가정(10.4%)이 다른 유형(양부모 가정 4.2%, 한부모 가정 7.5%)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1주일에 1번 이상 의 차별 경험 또한 기타(3.7%)와 조손가정(1.7%)의 비율이 다른 가정에서의 비율(한부모가정 0.6%, 양부모 가정 0.5%)보다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 또한 ‘하’인 경우(학업성적 하 5.8%, 경제적 수준 9.2%)가 ‘중’(학업성적 중 4%, 경제적 수준 중 3.8%)과 ‘상’(학업성적 상 4%, 경제적 수준 상 3.4%)보다 차별을 한 경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지역에 따른 차별 경험을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서는 남자(7.2%)가 여자(5.2%)보다 더 높은 차별 비율을 보였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심각한 차별도 남자(1.3%)가 여자(0.3%)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특성화고는 14.3%로 다른 유형(초등학교 1.5%, 중학교 6.5%, 일반/특목/자율고 8.7%)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주일에 1번 이상의 차별 경험도 특성화고(2.4%)가 다른 유형(초등학교 0.2%, 중학교 0.9%, 일반/특목/자율고 1.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기타가정이 16.3%로 다른 가정 유형(조손가정 10.1%, 한부모가정 8.7%, 양부모가정 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조손가정 (3.8%)과 기타(4%)의 경우 1주일에 1번 이상 차별한 경험이 양부모가정(0.9%), 한부모가정(1.1%) 보다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하’인 경우 차별 가해 경험이 각각 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모 및 신체적 조건에 대한 차별 경험은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26.3%)가 여자(23.9%)보다 경험이 높았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심각한 차별도 남자(3.8%)가 여자(2.1%)보다 높았다.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차별 가해 경험 비율이 올라갔는데 특히 특성화고(34.5%)는 다른 유형(초등학교 17.1%, 중학교 27.6%, 일반/특목 /자율고 27.8%)보다 높았다. 또한 외모에 대한 차별 경험은 초등학교의 비율도 다른 차별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기타 가정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이 29.1%, 양부모가정 24.8%, 조손가정 23.7% 순이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학업성적: 하 29.2%, 중 22.8%, 상 24.7%, 경제적 수준: 하 31.1%, 중 24.6%, 상 23.2%).

표 IV-1-23 차별 가해 경험\_5)\_6)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 에 1-2회 정도	1주일 에 3회 이상	전체(N)	$\chi^2$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전체	93.8	3.8	1.5	0.4	0.5	100.0(10,446)	-
	성별	남자	92.8	3.7	2.0	0.5	100.0(5,452)	54.857***
		여자	94.8	3.9	1.0	0.2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5	1.1	0.2	0.1	100.0(2,966)	235.016***
		중학교	93.5	4.0	1.6	0.5	100.0(3,642)	
		일반/특목/자율고	91.3	5.2	2.2	0.5	100.0(3,161)	
		특성화고	85.7	8.5	3.5	0.8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94.2	3.1	1.9	0.3	100.0(4,422)	27.349**
		중소도시	93.8	4.0	1.2	0.5	100.0(4,714)	
		읍면지역	92.3	5.4	1.6	0.4	100.0(1,3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0	3.7	1.4	0.4	100.0(9,745)	-
		한부모가정	91.3	5.2	2.3	0.8	100.0(559)	
		조손가정	89.9	4.3	2.0	2.1	100.0(41)	
		기타	83.7	7.4	4.9	0.0	100.0(101)	
	학업 성적	상	95.4	2.9	1.0	0.4	100.0(3,227)	62.038***
		중	94.4	3.7	1.4	0.3	100.0(4,401)	
		하	91.0	5.2	2.4	0.5	100.0(2,743)	
	경제적 수준	상	94.9	3.0	1.3	0.4	100.0(4,688)	37.784***
		중	93.7	3.8	1.7	0.3	100.0(4,043)	
		하	91.0	6.0	1.7	0.5	100.0(1,649)	
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전체	74.9	16.2	5.9	1.8	1.2	100.0(10,445)	-
	성별	남자	73.7	15.6	6.9	2.3	100.0(5,451)	45.875***
		여자	76.1	16.9	4.8	1.2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82.9	11.3	3.6	1.2	100.0(2,966)	165.561***
		중학교	72.4	17.0	7.1	2.1	100.0(3,642)	
		일반/특목/자율고	72.2	18.7	6.1	1.8	100.0(3,159)	
		특성화고	65.5	21.6	8.2	2.8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5.2	16.2	5.8	1.7	100.0(9,744)	35.046***
		한부모가정	70.9	16.8	7.0	3.8	100.0(559)	
		조손가정	76.3	11.1	6.2	1.7	100.0(41)	
		기타	67.3	16.9	7.4	3.0	100.0(101)	
	학업 성적	상	75.4	16.4	5.6	1.6	100.0(3,227)	62.452***
		중	77.2	15.3	5.3	1.4	100.0(4,400)	
		하	70.8	17.5	6.9	2.7	100.0(2,743)	
	경제적 수준	상	76.8	14.9	5.6	1.6	100.0(4,689)	55.565***
		중	75.4	16.6	5.4	1.6	100.0(4,043)	
		하	68.9	18.7	7.4	2.9	100.0(1,647)	

\*\*\* p&lt;.001

주: 일부 빈도/비율이 0건 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에 대해서는, 남자(4.9%)가 여자(3.1%)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차별도 남자(0.8%)가 여자(0.3%)보다 높았다. 다른 차별 경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특성화고는 6.2%로 다른 유형(초등학교 1.8%, 중학교 4.4%, 일반/특목/자율고 5.2%)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기타가 12.7%로 다른 유형(조손가정 8.1%, 한부모가정 5%, 양부모가정 3.9%)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 훨씬 더 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이 안계시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남자(3.9%)가 여자(1.7%)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심각한 차별도 남자(0.7%)가 여자(0.1%)보다 높았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차별 경험률이 높았는데, 특히 특성화고(4.5%)는 일반/특목/자율고(2.6%)보다 높았다. 가족유형 별로는 기타가 11.6%로 다른 유형(조손가정 8.1%, 한부모가정 6.9%, 양부모가정 2.5%)보다 높았다. 양부모가정 이외의 가족형태에서 차별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하(3.9%), 상(2.6%), 중(2.2%) 순으로 차별한 비율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은 하(4.9%), 중(2.5%), 상(2.3%) 순으로 차별한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표 IV-1-24 차별 가해 경험\_7)\_8)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	96.0	2.4	1.0	0.3	0.2	100.0(10,442)	—
	성별	남자	95.1	2.5	1.6	0.4	100.0(5,449)	48.957***
		여자	96.9	2.4	0.4	0.2	100.0(4,993)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2	1.2	0.3	0.1	100.0(2,962)	65.139***
		중학교	95.6	2.5	1.2	0.5	100.0(3,641)	
		일반/특목/자율고	94.8	3.3	1.3	0.4	100.0(3,161)	
		특성화고	93.8	3.7	1.9	0.4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95.9	2.2	1.2	0.5	100.0(4,419)	18.888*
		중소도시	96.0	2.5	1.1	0.1	100.0(4,712)	
		읍면지역	96.1	3.0	0.5	0.3	100.0(1,3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1	2.4	1.0	0.3	100.0(9,741)	—
		한부모가정	95.0	2.3	1.5	0.8	100.0(558)	
		조손가정	91.9	4.3	1.7	2.1	100.0(41)	
		기타	87.3	6.2	3.3	1.3	100.0(101)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학업 성적	상	96.2	2.3	0.9	0.4	0.2	100.0(3,225)	21.234**
		중	96.6	2.2	0.9	0.2	0.1	100.0(4,398)	
		하	94.9	3.0	1.2	0.4	0.4	100.0(2,743)	
	경제적 수준	상	96.6	1.9	1.0	0.3	0.2	100.0(4,684)	50.064***
		중	96.3	2.2	1.1	0.2	0.1	100.0(4,042)	
		하	93.6	4.4	0.8	0.6	0.5	100.0(1,649)	
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전체		97.2	1.6	0.8	0.2	0.2	100.0(10,445)	-
	성별	남자	96.1	2.1	1.1	0.3	0.4	100.0(5,451)	-
		여자	98.3	1.2	0.4	0.0	0.1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5	1.1	0.2	0.1	0.1	100.0(2,965)	48.381***
		중학교	96.3	2.1	1.2	0.3	0.2	100.0(3,641)	
		일반/특목/자율고	97.4	1.4	0.8	0.1	0.3	100.0(3,161)	
		특성화고	95.5	3.0	1.0	0.2	0.3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5	1.4	0.7	0.1	0.2	100.0(9,745)	-
		한부모가정	93.1	4.0	2.2	0.2	0.4	100.0(558)	
		조손가정	91.9	6.0	0.0	2.1	0.0	100.0(41)	
		기타	88.4	7.4	1.9	0.0	2.3	100.0(101)	
	학업 성적	상	97.4	1.5	0.8	0.1	0.2	100.0(3,228)	24.891**
		중	97.8	1.4	0.6	0.1	0.1	100.0(4,400)	
		하	96.1	2.2	1.1	0.3	0.4	100.0(2,742)	
	경제적 수준	상	97.7	1.3	0.7	0.1	0.2	100.0(4,687)	35.241***
		중	97.5	1.5	0.7	0.1	0.1	100.0(4,043)	
		하	95.1	3.0	1.3	0.2	0.4	100.0(1,649)	

\* p<.05 \*\* p<.01 \*\*\* p<.001

주: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장애가 있다는 이유에 따른 차별 경험은 남자(7.9%)가 여자(6.8%)보다 높았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심각한 차별 비율도 남자(0.9%)가 여자(0.5%)보다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9.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8.5%), 일반/특목/자율고(7.4%)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기타(13.5%)와 조손가정(10.3%)이 다른 유형(한부모가정 8.6%, 양부모가정 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주일에 1번 이상의 차별 경험도 2% 이상(조손 가정 2.1%, 기타 2.3%)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면, 예외적으로 성적이 높은 '상'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 6.8%, '중' 6.6%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차별 경험 비율은 높아졌으며(하 9.9%, 중 7.2%, 상 6.5%), 1주일에 한번 이상의 차별 경험은 하(1.2%)가 상(0.6%)과 중(0.5%)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경험은 남자(3.4%)가 여자(1.6%)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학교유형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특성화고 4.9%, 일반/특목/자율고 2.7%, 중학교 3%, 초등학교 1.1%). 가족유형은 양부모가정(2.3%)과 한부모가정(4.9%)에 비해 조손가정(10%)과 기타(95%)가 차별해 본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1주일에 1번 이상 차별 경험도 조손가정(21%)과 기타(2%)가 양부모가정(0.3%)과 한부모가정(0.2%)보다 훨씬 더 높았다. 학업성적은 하가 3%로 중 2%과 상 2.7%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4.4%, 중 2.3%, 상2%) 차별 경험이 높았다.

표 IV-1-25 차별해 본 경험\_9)\_10)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92.6	5.2	1.5	0.4	0.3	100.0(10,445)	-
	성별	남자	92.1	5.2	1.9	0.5	100.0(5,451)	15.813**
		여자	93.2	5.2	1.1	0.4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2	3.4	0.9	0.4	100.0(2,965)	59.900***
		중학교	90.8	6.5	2.0	0.5	100.0(3,641)	
		일반/특목/자율고	92.6	4.9	1.8	0.4	100.0(3,161)	
		특성화고	91.5	7.3	0.9	0.2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8	5.2	1.5	0.4	100.0(9,745)	-
		한부모가정	91.4	4.8	2.3	1.2	100.0(558)	
		조손가정	89.7	6.2	2.1	2.1	100.0(41)	
		기타	86.5	7.7	3.5	1.3	100.0(101)	
	학업 성적	상	91.2	6.3	1.6	0.6	100.0(3,228)	20.349**
		중	93.4	4.7	1.4	0.3	100.0(4,400)	
		하	93.2	4.4	1.6	0.4	100.0(2,742)	
	경제적 수준	상	93.5	4.7	1.3	0.3	100.0(4,687)	28.139***
		중	92.8	5.1	1.6	0.3	100.0(4,043)	
		하	90.1	6.7	1.9	0.9	100.0(1,649)	
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전체	97.5	1.6	0.7	0.1	0.2	100.0(10,445)	-
	성별	남자	96.6	2.0	1.0	0.2	100.0(5,451)	-
		여자	98.4	1.2	0.3	0.0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9	0.8	0.2	0.0	100.0(2,965)	-
		중학교	97.0	1.8	1.0	0.1	100.0(3,641)	
		일반/특목/자율고	97.3	1.6	0.7	0.1	100.0(3,161)	
		특성화고	95.1	3.7	0.9	0.0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7	1.5	0.6	0.1	100.0(9,745)	-
		한부모가정	95.9	2.2	1.7	0.2	100.0(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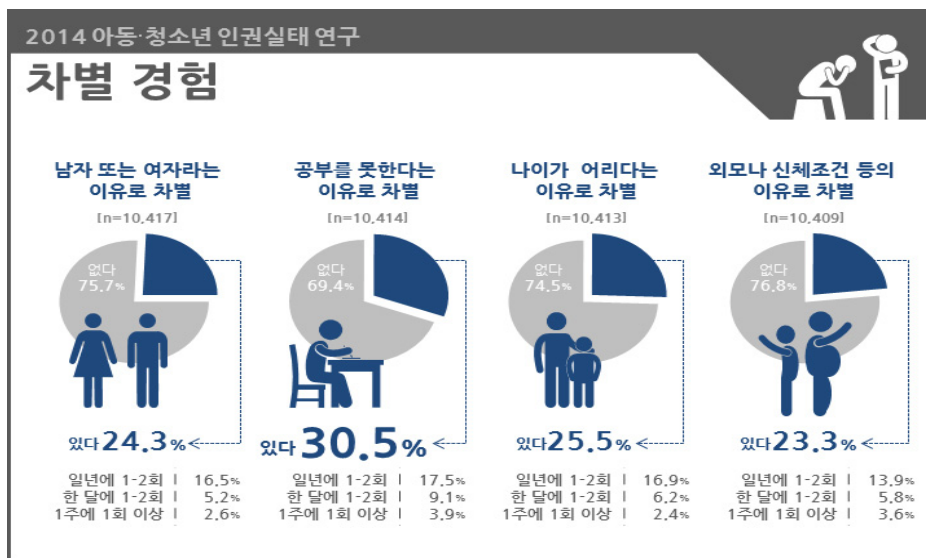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조손가정	90.0	7.9	0.0	2.1	0.0	100.0(41)	
		기타	90.5	4.7	2.9	1.0	1.0	100.0(101)	
	학업 성적	상	97.3	1.7	0.6	0.1	0.2	100.0(3,228)	-
		중	98.0	1.4	0.5	0.1	0.0	100.0(4,400)	
		하	97.0	1.7	0.9	0.2	0.3	100.0(2,742)	
	경제적 수준	상	98.0	1.2	0.4	0.1	0.2	100.0(4,687)	38.876***
		중	97.7	1.4	0.8	0.1	0.1	100.0(4,043)	
		하	95.6	3.1	1.0	0.1	0.2	100.0(1,649)	

\* p<.05 \*\* p<.01 \*\*\* p<.001

주: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 ② 차별받은 경험

최근 1년 동안 차별을 받은 경험은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장애와 다문화가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그중 차별받은 경험률이 높은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받은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 IV-1-3】과 같다. 이외의 차별 경험은 지역(5.4%), 종교(3.4%), 가족유형(2.2%), 장애(1.8%), 다문화 가정(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최근 1년 동안의 차별받은 경험: 학업성적, 나이, 성별, 외모·신체조건

표 IV-1-26 다양한 이유에 따라 차별받은 정도

(단위 : %)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성차별	75.7	16.5	5.2	1.5	1.1	24.3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69.5	17.5	9.1	2.3	1.6	30.5
연령차별	74.5	16.9	6.2	1.5	0.9	25.5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96.2	2.5	0.9	0.2	0.2	3.8
지역차별	94.6	3.4	1.3	0.3	0.4	5.4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76.7	13.9	5.8	2.1	1.5	23.3
종교차별	96.6	2.1	1.0	0.2	0.2	3.4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97.8	1.4	0.6	0.1	0.1	2.2
장애에 따른 차별	98.2	0.9	0.6	0.2	0.1	1.8
다문화가정 차별	98.4	0.8	0.6	0.1	0.1	1.6

표 IV-1-27 차별받은 경험\_1)\_2)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전체	75.7	16.5	5.2	1.5	1.1	100.0(10,417)	-
	성별	남자	80.2	11.5	5.1	1.6	100.0(5,444)	235.044***
		여자	70.7	22.0	5.4	1.4	100.0(4,973)	
	학교 유형	초등학교	81.5	11.8	4.0	1.7	100.0(2,944)	137.072***
		중학교	74.8	16.9	5.5	1.5	100.0(3,639)	
		일반/특목/자율고	73.3	19.3	5.6	1.1	100.0(3,157)	
		특성화고	66.3	21.0	7.3	2.8	100.0(677)	
	경제적 수준	상	77.2	14.7	5.2	1.8	100.0(4,678)	46.911***
		중	76.0	17.1	4.9	1.0	100.0(4,024)	
		하	70.6	19.8	6.2	2.2	100.0(1,647)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전체	69.5	17.5	9.1	2.3	1.6	100.0(10,414)	-
	성별	남자	73.8	13.7	8.6	2.2	100.0(5,444)	132.370***
		여자	64.6	21.7	9.7	2.5	100.0(4,970)	
	학교 유형	초등학교	86.3	8.5	3.2	1.1	100.0(2,943)	729.298***
		중학교	69.7	16.6	9.3	2.7	100.0(3,638)	
		일반/특목/자율고	56.0	25.3	13.5	2.9	100.0(3,157)	
		특성화고	56.5	25.1	13.9	2.5	100.0(677)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9.8	17.4	9.0	2.2	1.5	100.0(9,712)	-
		한부모가정	63.7	18.7	11.5	2.9	3.2	100.0(559)	
		조손가정	62.1	26.3	9.1	2.5	0.0	100.0(41)	
		기타	63.1	19.0	8.6	5.1	4.3	100.0(102)	
	학업 성적	상	83.9	9.7	4.4	1.3	0.6	100.0(3,210)	763.180***
		중	69.7	18.7	8.7	1.7	1.2	100.0(4,392)	
		하	52.1	24.6	15.4	4.4	3.5	100.0(2,736)	
	경제적 수준	상	75.8	13.3	7.6	2.0	1.3	100.0(4,676)	272.492***
		중	67.9	19.3	9.4	1.9	1.4	100.0(4,023)	
		하	55.2	24.8	12.7	4.2	3.2	100.0(1,647)	

\* p<.05 \*\* p<.01 \*\*\* p<.001

주: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성차별’을 받은 경험은 성별, 학교유형,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29.3%)가 남자(19.8%)보다 약 10%정도 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특목/자율고 26.7%, 중학교 25.2%, 초등학교 18.5%로 성차별을 받은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1주일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도 특목고가 5.4%로 나탄, 초등학교와 중학교(각각 2.7%), 일반/특목/자율고(1.7%)보다 훨씬 더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29.4%, 중 24%, 상 22.8%) 차별받은 경험이 높았으며 1주일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3.5%), ‘상’(3%), ‘중’(1.9%)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여자(35.4%)가 남자(27.2%)보다 높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았는데, 일반/특목/자율고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43.5%), 중학교(30.3%), 초등학교(13.7%)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36.3%), 조손가정(37.9%), 기타(36.9%)가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양부모가정은 30.2%로 가장 낮았다. 1주일에 1번 이상 심각하게 차별을 받은 경험은 기타(9.4%)와 한부모가정(6.1%)이 다른 유형(양부모가정 3.7%, 조손가정 2.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차별받은 경험이 높았다. 학업성적의 경우 성적 ‘하’는 47.9%, ‘중’은 30.3%, ‘상’은 16.1%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가 44.8%, ‘중’ 32.1%, ‘상’ 24.2% 순이었다. 1주일에 1번 이상의 차별받은 경험도 학업성적이 낮은 ‘하’(7.9%)가 ‘중’(2.9%)과 ‘상’(1.9%)보다 훨씬 더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도 수준이 낮은 ‘하’(7.4%)가 ‘중’과 ‘상’(각각 3.3%)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1-28 차별받은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74.5	16.9	6.2	1.5	0.9	100.0(10,413)	—
성별	남자	79.6	12.1	5.9	1.4	1.0	100.0(5,444)	198.228***
	여자	68.9	22.1	6.6	1.5	0.9	100.0(4,969)	
학교 유형	초등학교	84.4	10.5	3.5	0.9	0.6	100.0(2,944)	277.198***
	중학교	73.7	17.0	6.2	1.9	1.1	100.0(3,638)	
	일반/특목/자율고	68.6	21.4	7.9	1.3	0.9	100.0(3,155)	
	특성화고	63.0	22.8	10.5	2.4	1.4	100.0(676)	
지역 규모	대도시	74.6	15.8	6.8	1.7	1.1	100.0(4,411)	20.142*
	중소도시	74.4	17.3	6.1	1.4	0.8	100.0(4,690)	
	읍면지역	74.4	18.8	4.8	0.9	1.0	100.0(1,31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4.7	16.8	6.2	1.4	0.8	100.0(9,711)	56.171***
	한부모가정	71.4	18.5	5.8	2.2	2.1	100.0(559)	
	조손가정	71.9	13.1	4.1	4.6	6.3	100.0(41)	
	기타	68.3	12.8	13.3	1.9	3.6	100.0(102)	
학업 성적	상	75.2	16.1	6.4	1.5	0.8	100.0(3,210)	28.781***
	중	76.0	16.6	5.4	1.2	0.8	100.0(4,392)	
	하	71.4	18.2	7.2	1.9	1.3	100.0(2,734)	
경제적 수준	상	77.2	14.5	6.0	1.6	0.7	100.0(4,676)	105.450***
	중	74.6	18.2	5.5	1.0	0.7	100.0(4,023)	
	하	66.8	20.4	8.5	2.4	1.9	100.0(1,647)	

\* p&lt;0.05, \*\* p&lt;0.01, \*\*\* p&lt;0.001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은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자가 31.1%, 남자가 20.4%로 여자가 남자보다 10%p 이상 높았으며, 학교유형은 특성화고 37%, 일반/특목/자율고 31.4%, 중학교 26.3%, 초등학교 15.6%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 모두 25% 대로 유사했으며, 가족유형 중에서는 조손가정이 31.7%로 가장 높았고 한부모가정(28.6%), 조손가정(28.1%), 양부모가정(25.3%)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성적이 낮은 경우 28.6%로 '상'(24.8%)과 '중'(24%)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33.2%, 중 25.4%, 상 22.8%) 차별받은 경험이 높았다.

표 IV-1-29 차별받은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6.2	2.5	0.9	0.2	0.2	100.0(10,409)	-
성별	남자	95.7	2.6	1.1	0.3	0.3	100.0(5,439)	12.641*
	여자	96.7	2.3	0.7	0.1	0.1	100.0(4,970)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6	0.9	0.3	0.1	0.2	100.0(2,943)	175.278***
	중학교	96.6	1.9	0.9	0.3	0.2	100.0(3,634)	
	일반/특목/자율고	94.9	3.3	1.4	0.2	0.2	100.0(3,156)	
	특성화고	89.5	8.1	1.4	0.7	0.3	100.0(6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6	2.2	0.8	0.2	0.2	100.0(9,710)	100.384***
	한부모가정	90.4	6.9	1.8	0.4	0.6	100.0(557)	
	조손가정	91.9	4.3	2.1	1.7	0.0	100.0(41)	
	기타	88.1	5.6	3.7	1.7	1.0	100.0(102)	
학업 성적	상	97.2	1.7	0.7	0.3	0.1	100.0(3,209)	62.870***
	중	96.9	2.1	0.8	0.1	0.1	100.0(4,388)	
	하	94.0	3.8	1.3	0.4	0.5	100.0(2,736)	
경제적 수준	상	98.0	1.2	0.5	0.2	0.1	100.0(4,674)	291.689***
	중	97.1	1.8	0.8	0.2	0.2	100.0(4,021)	
	하	89.1	7.5	2.3	0.5	0.7	100.0(1,646)	

\* p&lt;.05 \*\* p&lt;.01 \*\*\* p&lt;.001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남자가(4.3%) 여자(3.3%)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10.5%)가 일반/특목/자율고(5.1%), 중학교(3.4%), 초등학교(1.4%)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기타가 11.9%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정 9.6%, 조손가정 8.1%, 양부모가정 3.4%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하'는 6%, '중' 3.1%, '상' 2.8%로 성적 '하'가 '중'과 '상'보다 훨씬 더 높았다. 경제적 수준 또한 '하'가 10.9%로 '중'(2.9%)과 '상'(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표 IV-1-30 차별받은 경험\_5)\_6)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이상	전체(N)	$\chi^2$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전체	94.6	3.4	1.3	0.3	0.4	100.0(10,409)	-
	성별	남자	94.4	2.9	1.8	0.4	100.0(5,441)	36.077***
		여자	94.8	3.9	0.9	0.2	100.0(4,969)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5	1.1	0.2	0.1	100.0(2,943)	191.757***
		중학교	95.0	3.1	1.3	0.2	100.0(3,637)	
		일반/특목/자율고	91.6	5.4	2.0	0.5	100.0(3,153)	
		특성화고	89.3	5.5	3.6	0.6	100.0(677)	
	지역 규모	대도시	95.4	2.8	1.1	0.3	100.0(4,409)	20.026*
		중소도시	94.4	3.6	1.4	0.2	100.0(4,688)	
		읍면지역	92.8	4.4	1.7	0.7	100.0(1,31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7	3.4	1.3	0.3	100.0(9,708)	-
		한부모가정	94.3	2.6	2.0	0.8	100.0(559)	
		조손가정	92.0	2.1	2.1	3.9	100.0(41)	
		기타	86.1	7.6	3.7	1.0	100.0(102)	
	학업 성적	상	95.4	2.6	1.3	0.3	100.0(3,211)	57.143***
		중	95.3	3.2	1.4	0.1	100.0(4,391)	
		하	92.8	4.5	1.2	0.7	100.0(2,732)	
	경제적 수준	상	95.7	2.7	1.1	0.2	100.0(4,674)	32.177***
		중	94.4	3.6	1.4	0.3	100.0(4,021)	
		하	92.4	4.5	1.9	0.7	100.0(1,647)	
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전체	76.7	13.9	5.8	2.1	1.5	100.0(10,405)	-
	성별	남자	79.0	11.4	5.7	2.2	100.0(5,436)	66.338***
		여자	74.3	16.7	5.9	1.9	100.0(4,969)	
	학교 유형	초등학교	82.7	10.2	3.8	1.9	100.0(2,942)	121.195***
		중학교	75.5	14.1	6.7	2.0	100.0(3,633)	
		일반/특목/자율고	74.4	15.8	6.4	1.8	100.0(3,155)	
		특성화고	68.1	19.7	6.6	4.1	100.0(676)	
	지역 규모	대도시	76.9	13.2	6.2	2.4	100.0(4,407)	21.645**
		중소도시	76.2	14.5	5.9	1.7	100.0(4,685)	
		읍면지역	78.4	14.0	4.0	2.1	100.0(1,31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7.0	13.9	5.7	2.0	100.0(9,703)	-
		한부모가정	73.7	14.1	7.1	2.7	100.0(559)	
		조손가정	80.4	11.0	1.7	6.8	100.0(41)	
		기타	65.6	17.3	11.5	2.7	100.0(102)	
	학업 성적	상	78.5	12.8	5.2	2.2	100.0(3,207)	68.438***
		중	78.6	13.6	5.1	1.6	100.0(4,387)	
		하	72.1	15.5	7.4	2.6	100.0(2,734)	
	경제적 수준	상	79.2	12.4	5.4	1.9	100.0(4,670)	130.777***
		중	77.8	14.4	5.0	1.5	100.0(4,021)	
		하	67.6	17.0	8.5	4.0	100.0(1,647)	

\* p&lt;.05 \*\* p&lt;.01 \*\*\* p&lt;.001

주: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은 남자(5.6%)가 여자(5.2%)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특성화고가 10.7%로 일반/특목/자율고(8.4%), 중학교(5%), 초등학교(1.5%)보다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7.2%로 중소도시(5.6%), 대도시(4.6%)보다 피해 경험이 높았으며, 가족유형 중에서는 기타가 13.9%로 조손가정(8%), 한부모가정(5.7%), 양부모가정(5.3%)보다 높았다. 학업 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 차별받은 경험이 높았는데 학업성적 ‘하’가 7.2%(중 4.7%, 상 4.6%),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가 7.6%(중 5.6%, 상 4.3%)의 비율을 보였다.

외모나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은 여자(25.7%)가 남자(21%)보다 높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경험이 높았는데 특성화고(31.9%), 일반/특목/자율고(25.6%), 중학교(24.5%), 초등학교(17.3%)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23.8%), 대도시(23.1%), 읍면지역(21.6%) 순이었으며, 가족유형 중에서는 기타가 34.4%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정(26.3%), 양부모가정(23%), 조손가정(19.6%)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하’인 경우 27.9%, ‘상’ 21.5%, ‘중’ 21.4% 순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가장 낮은 ‘하’ 32.4%, ‘중’ 22.2%, ‘상’ 20.8%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차별받은 경험률이 높았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남자가 3.8%, 여자가 3%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성화고 6.5%, 일반/특목/자율고 4.2%, 중학교 3.4%, 초등학교 1.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기타가 14.1%로 조손가정 5.9%, 한부모가정 4.6%, 양부모 가정 3.2%보다 월등히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가 5.2%로 ‘중’과 ‘상’(각각 3%)보다 높았다.

부모님이 안계신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남자(2.9%)가 여자(1.2%)보다 높았으며, 특성화고(5.1%)가 다른 유형(일반/특목/자율고 2.1%, 중학교 2.6%, 초등학교 1.2%)보다 높았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기타가 14.9%로 한부모가정(8%), 조손가정(4.2%), 양부모가정(1.8%)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차별받은 경험이 높았다(경제적 수준: 하 4.7% 중 1.6%, 상 1.8%, 학업성적: 하 3.4%, 중 1.8%, 상 1.6%).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남자(3%)가 여자(0.6%)보다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았는데 특성화고 4.2%, 일반/특목/자율고 2.1%, 중학교 2%, 초등학교 0.7% 순이었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기타가 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족 5.9%, 한부모가정 2.6%, 양부모가정 1.7% 순이었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하’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상’ 1.6%, ‘중’ 1.5% 순이었다.

표 IV-1-31 차별받은 경험\_7)\_8)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	96.6	2.1	1.0	0.2	0.2	100.0(10,402)	-
	성별	남자	96.2	2.0	1.4	0.2	100.0(5,437)	27.605***
		여자	97.0	2.3	0.5	0.2	100.0(4,96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1	1.3	0.4	0.1	100.0(2,943)	55.075***
		중학교	96.6	1.9	1.1	0.3	100.0(3,632)	
		일반/특목/자율고	95.8	2.8	1.1	0.2	100.0(3,150)	
		특성화고	93.5	3.7	2.1	0.4	100.0(6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8	2.0	0.9	0.2	100.0(9,700)	-
		한부모가정	95.4	2.6	1.3	0.3	100.0(560)	
		조손가정	94.1	3.8	0.0	2.1	100.0(41)	
		기타	85.9	7.8	5.2	0.0	100.0(101)	
	경제적 수준	상	97.0	1.8	0.9	0.2	100.0(4,671)	28.677***
		중	97.0	2.0	0.8	0.1	100.0(4,019)	
		하	94.8	3.0	1.4	0.4	100.0(1,644)	
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전체	97.8	1.4	0.6	0.1	0.1	100.0(10,412)	-
	성별	남자	97.1	1.6	0.8	0.2	100.0(5,441)	-
		여자	98.5	1.1	0.3	0.0	100.0(4,971)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8	0.9	0.2	0.0	100.0(2,944)	-
		중학교	97.4	1.5	0.8	0.1	100.0(3,635)	
		일반/특목/자율고	97.9	1.3	0.6	0.2	100.0(3,157)	
		특성화고	94.9	3.4	1.4	0.0	100.0(6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2	1.1	0.5	0.1	100.0(9,710)	-
		한부모가정	92.0	5.2	2.0	0.3	100.0(559)	
		조손가정	95.8	2.1	2.1	0.0	100.0(41)	
		기타	85.1	8.1	3.5	2.3	100.0(102)	
	학업 성적	상	98.2	1.1	0.5	0.1	100.0(3,210)	29.498***
		중	98.4	1.1	0.5	0.0	100.0(4,390)	
		하	96.6	2.0	0.9	0.2	100.0(2,736)	
	경제적 수준	상	98.4	1.0	0.4	0.1	100.0(4,676)	64.326***
		중	98.2	1.1	0.5	0.0	100.0(4,021)	
		하	95.3	2.9	1.2	0.3	100.0(1,647)	

\*\*\* p&lt;.001

주: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은 남자(24%)가 여자(0.8%)보다 3배 정도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3.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9%, 일반/특목/자율고 1.7%, 초등학교 0.8% 순이었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기타가 10.1%로 조손가정 5.9%, 한부모가정 2.4%, 양부모가정 1.5%보다 월등히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어려운 '하'가 2.7%로 가장 높았으며 '중' 1.5%, '상' 1.2% 순이었다.

표 IV-1-32 차별받은 경험\_9)\_10)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98.2	0.9	0.6	0.2	0.1	100.0(10,410)
	성별	남자	97.0	1.5	1.0	0.3	100.0(5,440)
		여자	99.4	0.3	0.2	0.0	100.0(4,970)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3	0.4	0.1	0.1	100.0(2,943)
		중학교	98.0	0.9	0.6	0.3	100.0(3,634)
		일반/특목/자율고	97.9	1.0	0.9	0.1	100.0(3,157)
		특성화고	95.8	2.9	0.9	0.4	100.0(6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3	0.9	0.6	0.1	100.0(9,708)
		한부모가정	97.4	1.2	0.6	0.7	100.0(559)
		조손가정	94.1	3.8	0.0	2.1	100.0(41)
		기타	90.8	3.4	2.8	1.0	100.0(102)
	학업 성적	상	98.4	0.6	0.7	0.1	100.0(3,209)
		중	98.5	0.8	0.5	0.1	100.0(4,389)
		하	97.5	1.3	0.6	0.3	100.0(2,736)
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전체	98.4	0.8	0.6	0.1	0.1	100.0(10,411)
	성별	남자	97.6	1.1	1.1	0.2	100.0(5,441)
		여자	99.2	0.5	0.1	0.1	100.0(4,970)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2	0.5	0.2	0.1	100.0(2,945)
		중학교	98.1	0.9	0.6	0.2	100.0(3,633)
		일반/특목/자율고	98.3	0.8	0.8	0.0	100.0(3,157)
		특성화고	96.6	1.6	1.5	0.2	100.0(6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5	0.8	0.5	0.1	100.0(9,708)
		한부모가정	97.6	0.9	1.1	0.1	100.0(560)
		조손가정	94.1	4.2	1.7	0.0	100.0(41)
		기타	89.9	2.3	5.8	1.0	100.0(102)
	경제적 수준	상	98.7	0.6	0.4	0.2	100.0(4,676)
		중	98.5	0.7	0.6	0.1	100.0(4,020)
		하	97.3	1.6	0.9	0.1	100.0(1,647)

##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아동의 권리란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요구로써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환경에 무엇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일(이익)인지를 판단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는 ‘아동이 관여하는 모든 활동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협약 제12조에서 명시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이 존중되기 위해 어른들의 듣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가장 좋은 일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의견존중이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 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지표로 청소년영향평가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영향평가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둘째, 청소년(또는 아동·청소년)영향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셋째, 청소년영향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하며 청소년반영, 청소년지원, 청소년환경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 지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평가, 사전평가를 위주로 시행한다. 다섯째, 양적, 질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평가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필수화 하는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여섯째, 시범평가 사업이 필요하다 일곱째, 대상은 법, 계획, 사업으로 하되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책적 영향력이 큰 사업으로 한다. 여덟째,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 및 실시를 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등의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2014년에는 2013년 연구보고를 바탕으로 현재 청소년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지표가 개발 중에 있다(윤철경, 김윤나, 2014).

표 IV-1-33 청소년영향평가제 정책실행 로드맵

정책과제		2014	2015-2016	소요예산	주관기관	관련대상
청소년 영향 평가제 도입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제정	○		비예산	여가부	국회
	청소년영향평가 예산체계 확립	○	○	비예산	여가부	-
	청소년영향평가 평가지표 개발	○		5천만원	NYPI	-
	청소년영향평가 시범운영	○		연1억 원	NYPI	-
	중앙정부부처 전문가 평가	○		1억 원	NYPI	-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평가		○	1억 원	NYPI	-

정책과제		2014	2015-2016	소요예산	주관기관	관련대상
청소년 영향 평가제 확대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	비예산	여가부	국회
	법령평가		○	2억 원	NYPI	-
	계획평가		○	2억 원	NYPI	-
	사업평가		○	2억 원	NYPI	-
	분석지침 연구 및 정립		○	5천만원	NYPI	-
	홍보 방안 수립 및 진행	○	○	5천만원	여가부, NYPI	-
	관련 통계 생산		○	1억 원	NYPI	통계청

\* 출처: 윤철경, 김윤나 (2014).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p. 67.

또한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학생, 비학생간 차별없이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3: 83). 2004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여성가족부, 2013: 83). 청소년증 발급 희망 청소년이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유)와 함께 사진 1매(반명함판)를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14일이다. 2008년에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해 주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재발급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청소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신청기관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편의를 증대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표 IV-1-34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3 (시범)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63	40,908	43,875
서울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69	9,969	10,644
부산	-	381	672	971	1,724	2,198	2,492	2,401	2,866	2,952
대구	-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72	2,298	2,235
인천	-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2,650	2,940
광주	-	282	61	110	318	416	509	576	811	1,034
대전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5	884	1,042
울산	-	86	105	220	640	844	897	952	1,060	1,197
세종	-	-	-	-	-	-	-	-	-	36
경기	-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7	11,023	11,347
강원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1,071	1,180
충북	-	648	995	350	479	614	845	913	1,131	1,220
충남	-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1,204	1,264
전북	-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1,436	1,524
전남	-	244	175	141	390	499	616	625	821	910
경북	-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1,447	1,682
경남	-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2,014	2,356
제주	-	47	427	136	165	218	274	271	323	312

\* 주: 한국조폐공사 개인정보보호에 의거 성별 표시 불가.

\* 출처: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p.85.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궁·능 : 50%, 박물관 : 면제~50% 내외, 미술관 : 30~50% 내외, 공원 : 면제~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 500~1,000원 등(상기 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여성가족부, 2013: 84).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기획재정부 협조),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교육부 협조)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3: 83-85).

### 3) 소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등 2개 중분류에 각 5개의 소분류, 13개의 지표항목을 살펴보았다.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에 관한 법조항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실정이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14년 2월 다시 개최되었으나 그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법적 근거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류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교육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인권에 관한 인프라의 확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 역시 그 행정력과 운영의 확대가 미비한 실정이며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0.3%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인권 협약 및 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각각 40.1%, 43.0%, 27.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5.6%로 여전히 인권교육 경험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장소로는 전체의 59.7%가 학교 정규교과시간으로 응답했으며,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35.6%,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17.3%, 기타 4.6% 순으로 나타나 학교 정규교과시간 이외의 인권교육 경험의 필요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 전체의 71.8%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28.2%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권교육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차별을 했거나 받은 경험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학업성적에 대한 차별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참여 및 권리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의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표준안 및 학생인권조례 표준안이 제공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을 보다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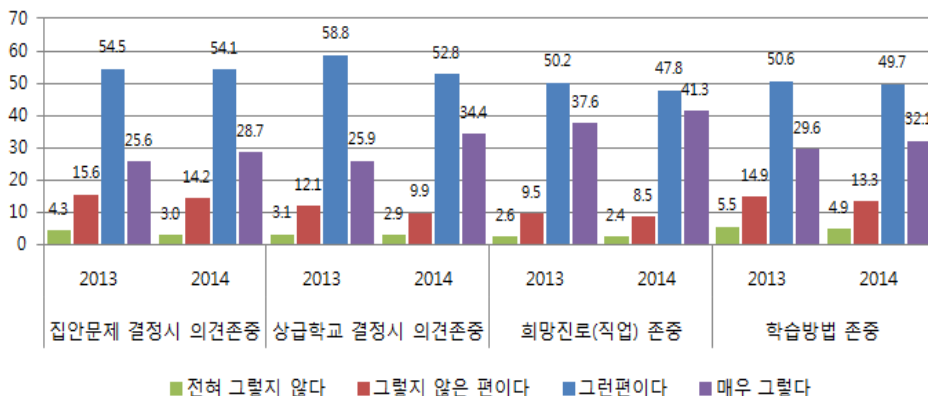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sup>172)</sup>

###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집안의 중요한 문제, 상급학교 진학, 미래의 진로, 학원 선택 등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주는지를 살펴본 결과, 집안의 중요한 문제 대해서는 82.8%가, 상급학교 진학 결정에 대해서는 87.2%가, 장래진로에 대해서는 89.1%가,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는 81.8%가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응답하였다. 2013년에는 각각 80.1%, 84.7%, 80.2%로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의사표현의 존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3년에는 19.9%, 2014년에는 17.2%로 약간 감소하였다. 진학할 상급학교 결정에 대한 의견 존중 정도는 ‘그렇지 않다’가 2014년 12.8%로 2013년 15.3%에 비해 감소하였다. 장래희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2013년 12.2%, 2014년 10.9%로 감소하였다. 공부시간이나 방법 결정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2013년 19.8%에서 2014년 18.2%로 약간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에 있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013년보다 2014년이 약간 더 감소하였다.



【그림 IV-2-1】 가정에서 의사결정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 단위(%)

172) 이 부분은 김윤나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집필하였다.

집안의 중요 문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 자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지에 대한 질문한 결과,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18.1%)가 여자(16.1%)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는 21.9%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특목/자율고(18.7%), 중학교(17.6%), 초등학교(13.8%)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17.3%)가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17.1%), 읍면지역(16.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 중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손가정이 38.6%로 한부모가족(22.7%), 기타(18.9%), 양부모가정(16.7%)보다 월등히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학업성적: 하 24%, 중 15.6%, 상 13.3%, 경제적 수준: 하 27.7%, 중 18%, 상 12.5%).

표 IV-2-1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1)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0	14.2	54.1	28.7	100.0(10,288)	—
성별	남자	3.7	14.4	53.9	28.1	100.0(5,361)	19.025***
	여자	2.2	13.9	54.4	29.4	100.0(4,9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	10.6	43.1	43.2	100.0(2,888)	460.455***
	중학교	2.6	15.0	56.8	25.6	100.0(3,598)	
	일반/특목/자율고	3.2	15.5	59.2	22.1	100.0(3,133)	
	특성화고	3.0	18.9	63.8	14.4	100.0(669)	
지역 규모	대도시	3.6	13.5	52.9	30.1	100.0(4,353)	18.688**
	중소도시	2.6	14.7	54.8	27.9	100.0(4,643)	
	읍면지역	2.4	14.5	55.8	27.2	100.0(1,2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	13.9	54.0	29.2	100.0(9,592)	52.692***
	한부모가정	5.6	17.1	55.8	21.5	100.0(555)	
	조손가정	1.7	36.9	33.7	27.7	100.0(41)	
	기타	6.0	12.9	60.3	20.8	100.0(101)	
학업 성적	상	2.8	10.5	49.1	37.6	100.0(3,170)	298.795***
	중	2.5	13.1	56.3	28.1	100.0(4,329)	
	하	3.9	20.1	56.4	19.6	100.0(2,712)	
경제적 수준	상	2.2	10.3	49.6	37.9	100.0(4,610)	450.623***
	중	3.1	14.9	59.0	23.0	100.0(3,978)	
	하	4.7	23.0	54.9	17.4	100.0(1,632)	

\*\* p<.01 \*\*\* p<.001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부모님(보호자)가 청소년이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해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13.8%)가 여자(11.8%)보다 높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는데 일반/특목/자율고(14.1%), 특성화고(13.6%), 중학교(13%), 초등학교(11.2%) 순이었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조손가정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정 15.3%, 양부모가정 12.7%, 기타 9.3%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성적이 낮은 '하'가 17.2%, '중' 12.3%, '상' 9.8% 순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하' 17.3%, '중' 13.9%, '상' 10.5%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표 IV-2-2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9	9.9	52.8	34.4	100.0(10,268)	—
성별	남자	3.4	10.4	54.1	32.1	100.0(5,349)	33.605***
	여자	2.3	9.5	51.3	36.9	100.0(4,920)	
학교 유형	초등학교	3.4	7.8	43.9	44.9	100.0(2,869)	225.077***
	중학교	2.6	10.4	56.1	31.0	100.0(3,600)	
	일반/특목/자율고	3.0	11.1	55.0	30.8	100.0(3,131)	
	특성화고	2.1	11.5	62.1	24.3	100.0(66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	9.9	52.4	34.9	100.0(9,572)	—
	한부모가정	5.5	9.8	57.3	27.4	100.0(555)	
	조손가정	0.0	23.5	43.5	33.0	100.0(41)	
	기타	2.0	7.3	61.9	28.7	100.0(101)	
학업 성적	상	2.3	7.5	44.6	45.6	100.0(3,161)	319.487***
	중	2.3	10.0	55.4	32.2	100.0(4,322)	
	하	4.3	12.9	57.9	24.9	100.0(2,708)	
경제적 수준	상	2.6	7.9	47.3	42.2	100.0(4,598)	251.823***
	중	2.8	11.1	57.4	28.7	100.0(3,969)	
	하	4.0	13.3	56.7	26.1	100.0(1,633)	

\*\*\* p<.001

주: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원하는 진로를 부모님이 존중해주는 정도는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은 남자가 11.2%, 여자가 10.6%로 남자가 더 높았으며, 학교유형로는 특성화고(13.9%), 중학교(11.6%), 일반/특목/자율고(11.4%), 초등학교(8.7%) 순이었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한부모가정 1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손가정(13.4%), 기타(10.8%), 양부모가정(10.6%) 순이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학업성적은 ‘하’ 16.1%, ‘중’ 9.9%, ‘상’ 7.8% 순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하’ 15.5%, ‘중’ 11.1%, ‘상’이 9%였다.

**표 IV-2-3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3)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4	8.5	47.8	41.3	100.0(10,279)	-
성별	남자	2.5	8.7	49.9	38.9	100.0(5,355)	27.891***
	여자	2.4	8.2	45.5	44.0	100.0(4,9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2.6	6.1	34.9	56.4	100.0(2,883)	427.006***
	중학교	2.4	9.2	51.2	37.2	100.0(3,600)	
	일반/특목/자율고	2.3	9.1	53.0	35.6	100.0(3,129)	
	특성화고	1.7	12.2	60.9	25.2	100.0(6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3	8.3	47.5	41.9	100.0(9,584)	-
	한부모가정	3.8	11.5	51.1	33.5	100.0(553)	
	조손가정	0.0	13.4	47.4	39.1	100.0(41)	
	기타	2.9	7.9	55.5	33.6	100.0(101)	
학업 성적	상	1.8	6.0	40.2	52.0	100.0(3,167)	311.220***
	중	2.0	7.9	50.1	40.0	100.0(4,326)	
	하	3.7	12.4	52.7	31.3	100.0(2,708)	
경제적 수준	상	2.0	7.0	41.3	49.7	100.0(4,607)	269.878***
	중	2.5	8.6	52.7	36.2	100.0(3,972)	
	하	3.3	12.2	53.8	30.7	100.0(1,631)	

\* p<.05 \*\* p<.01 \*\*\* p<.001

주: 일부 빈도/비율이 0건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았음.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의견 존중의 정도는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20.1%)가 여자(16.2%)보다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20.4%)가 중학교(19.2%), 특성화고(18.2%), 일반/특목/자율고(15.1%)보다 높았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조손가정(30.3%)에서 가장 높았으며, 기타(22.6%), 한부모가정(21.2%), 양부모가정(17.9%) 순이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높았는데, 학업성적은 '하' 22.6%, '중' 17.4%, '상' 15.5% 순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하' 22.6%, '중' 18.9%, '상' 16.1% 순이었다.

**표 IV-2-4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_4)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4.9	13.3	49.7	32.1	100.0(10,273)	-
성별	남자	5.8	14.3	50.2	29.7	100.0(5,352)	47.622***
	여자	3.9	12.3	49.1	34.7	100.0(4,920)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	13.4	36.9	42.7	100.0(2,878)	365.856***
	중학교	5.1	14.1	52.5	28.3	100.0(3,598)	
	일반/특목/자율고	3.1	12.0	55.3	29.6	100.0(3,129)	
	특성화고	3.0	15.2	63.2	18.6	100.0(668)	
지역 규모	대도시	5.1	12.9	48.7	33.3	100.0(4,347)	12.864*
	중소도시	4.9	14.0	49.7	31.4	100.0(4,634)	
	읍면지역	4.1	12.2	53.0	30.6	100.0(1,29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7	13.2	49.6	32.5	100.0(9,579)	25.756**
	한부모가정	7.3	13.9	50.8	27.9	100.0(552)	
	조손가정	8.9	21.4	41.9	27.8	100.0(41)	
	기타	2.8	19.8	56.2	21.3	100.0(101)	
학업 성적	상	4.5	11.0	42.8	41.8	100.0(3,169)	261.185***
	중	3.9	13.5	51.9	30.8	100.0(4,321)	
	하	6.8	15.8	54.1	23.3	100.0(2,705)	
경제적 수준	상	4.6	11.5	45.2	38.8	100.0(4,605)	186.118***
	중	4.7	14.2	53.1	28.0	100.0(3,968)	
	하	6.3	16.3	53.7	23.7	100.0(1,631)	

\* p<.05 \*\* p<.01 \*\*\* p<.001

## (2) 학교에서의 참여정도

### ①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권 보장 정도는 학생회 독립성, 임원후보의 자격 제한, 학생회 활동 지원 현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4%,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경우는 30.8%,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 장소 등을 보장한다’는 경우는 30.7%,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준다’는 경우는 34.4%로 학생회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성 보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나 교장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아니다’(31.4%)의 비율이 ‘그렇다’(20.4%)의 비율보다 높았다.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33.4%로 나타났으며,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15.1%, ‘그렇다’가 30.7%로 ‘그렇다’가 더 높았으나 ‘잘 모르겠다’의 비율도 54.2%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의 의견을 교사와 교장이 존중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가 47.9%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2-5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내 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31.4	20.4	48.2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3.4	30.8	35.8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15.1	30.7	54.2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17.7	34.4	47.9

각 변인별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존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의 경우 성별, 학교유형,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아니다’의 비율은 남자 32.2%, 여자 30.6%로 남자가 더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36%)가 가장 높았고 일반/특목/자율고(34%), 중학교(28.3%)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성적인 낮은 ‘하’인 경우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상’ 30.9%, ‘중’ 29.6%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상, 중, 하 모두 ‘아니다’가 30%대였으며 ‘그렇다’는 비율은 ‘하’ 18.1%로 가장 낮았고 ‘중’ 19.3%, ‘상’ 22.6% 순이었다.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회 임원 후보에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든 청소년이 임원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보장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여자(34.6%)가 남자(27.3%)보다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37.2%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30.2%), 일반/특목/자율고(3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그렇다’의 비율이 대도시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지역(30.4%), 중소도시(29.3%)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의 경우 성적이 낮을수록 ‘그렇다’의 비율이 높았는데 학업성적은 ‘상’ 34.4%, ‘중’ 30.3%, ‘하’ 27%였으며, 경제적 수준은 ‘상’ 31.2%, ‘중’ 30.2%, ‘하’ 31.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IV-2-6 학생회 활동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chi^2$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전체		31.4	20.4	48.2	100.0(7,480)	—
	성별	남자	32.2	21.8	46.1	100.0(3,911)	17.018***
		여자	30.6	18.8	50.6	100.0(3,569)	
	학교 유형	중학교	28.3	21.4	50.2	100.0(3,643)	32.729***
		일반/특목/자율고	34.0	19.5	46.5	100.0(3,159)	
		특성화고	36.0	18.7	45.3	100.0(678)	
	학업 성적	상	30.9	19.8	49.2	100.0(1,972)	12.732*
		중	29.6	20.8	49.6	100.0(3,033)	
		하	33.9	20.1	46.0	100.0(2,404)	
	경제적 수준	상	31.5	22.6	45.8	100.0(2,857)	19.271**
		중	31.3	19.3	49.4	100.0(3,077)	
		하	31.1	18.1	50.8	100.0(1,48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체		33.4	30.8	35.8	100.0(7,476)	—
	성별	남자	35.7	27.3	37.0	100.0(3,908)	48.801***
		여자	30.8	34.6	34.6	100.0(3,569)	
	학교 유형	중학교	31.6	30.2	38.2	100.0(3,643)	39.454***
		일반/특목/자율고	36.5	30.1	33.4	100.0(3,156)	
		특성화고	28.4	37.2	34.4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32.0	32.5	35.6	100.0(3,120)	10.839*
		중소도시	33.9	29.3	36.8	100.0(3,255)	
		읍면지역	35.6	30.4	34.0	100.0(1,102)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chi^2$
	학업 성적	상	39.4	27.0	33.5	100.0(1,972)	56.950***
		중	32.6	30.3	37.1	100.0(3,029)	
		하	29.5	34.4	36.1	100.0(2,403)	
	경제적 수준	상	35.8	31.2	33.0	100.0(2,852)	21.169***
		중	32.7	30.0	37.3	100.0(3,077)	
		하	30.3	31.5	38.3	100.0(1,48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전체		15.1	30.7	54.2	100.0(7,479)	—
	성별	남자	17.2	31.2	51.6	100.0(3,911)	34.728***
		여자	12.8	30.3	57.0	100.0(3,568)	
	학업 성적	상	14.0	33.2	52.7	100.0(1,972)	27.370***
		중	13.8	31.5	54.7	100.0(3,032)	
		하	17.7	27.8	54.5	100.0(2,404)	
	경제적 수준	상	15.2	33.6	51.3	100.0(2,855)	23.977***
		중	14.7	30.1	55.2	100.0(3,077)	
		하	15.8	26.9	57.4	100.0(1,483)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	전체		17.7	34.4	47.9	100.0(7,475)	—
	성별	남자	19.5	34.7	45.8	100.0(3,910)	23.229***
		여자	15.7	34.1	50.2	100.0(3,565)	
	학교 유형	중학교	12.8	38.4	48.8	100.0(3,639)	130.561***
		일반/특목/자율고	22.5	30.6	46.9	100.0(3,157)	
		특성화고	21.6	30.6	47.8	100.0(678)	
	학업 성적	상	16.8	36.8	46.4	100.0(1,972)	39.599***
		중	15.6	35.6	48.8	100.0(3,030)	
		하	21.3	31.0	47.8	100.0(2,401)	
	경제적 수준	상	17.3	37.7	45.0	100.0(2,854)	37.918***
		중	17.1	34.2	48.6	100.0(3,075)	
		하	19.8	28.6	51.6	100.0(1,482)	

\* p<.05 \*\* p<.01 \*\*\* p<.00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의 질문에서는 성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17.2%)가 여자(12.8%)보다 ‘아니다’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렇다’도 남자(31.2%)가 여자(30.3%)보다 약간 높았다. 학업성적은 ‘아니다’ 비율이 성적 ‘하’(17.7%)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에서도 ‘아니다’의 비율이 ‘하’(15.8%)에서 가장 높았다. ‘그렇다’는 비율은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모두 높은 ‘상’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의 질문은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19.5%)가 여자(15.7%)보다 ‘아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렇다’는 응답 모두 34% 대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는 ‘아니다’의 경우 일반/특목/자율고(22.

5%)가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21.6%, 중학교 12.8%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낮은 수준인 ‘하’일 경우(학업성적 21.3%, 경제적 수준 19.8%) ‘아니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2-7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chi^2$
전체		17.7	34.4	47.9	100.0(7,475)	-
성별	남자	19.5	34.7	45.8	100.0(3,910)	23.229***
	여자	15.7	34.1	50.2	100.0(3,565)	
학교 유형	중학교	12.8	38.4	48.8	100.0(3,639)	130.561***
	일반/특목/자율고	22.5	30.6	46.9	100.0(3,157)	
	특성화고	21.6	30.6	47.8	100.0(678)	
학업 성적	상	16.8	36.8	46.4	100.0(1,972)	39.599***
	중	15.6	35.6	48.8	100.0(3,030)	
	하	21.3	31.0	47.8	100.0(2,401)	
경제적 수준	상	17.3	37.7	45.0	100.0(2,854)	37.918***
	중	17.1	34.2	48.6	100.0(3,075)	
	하	19.8	28.6	51.6	100.0(1,482)	

\*\*\*  $p < .001$

## ② 학급회의 운영 여부

학급회의 운영여부는 56.1%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3.9%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변인별 차이 검증은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유형은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일반/특목/자율고가 55.8%로 가장 높았다.

표 IV-2-8 학급회의 운영여부

(단위 : %(명))

구분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지 않는다	전체(N)	$\chi^2$
전체		56.1	43.9	100.0(1,0457)	-
학교 유형	초등학교	76.1	23.9	100.0(2,963)	712.863***
	중학교	50.4	49.6	100.0(3,656)	
	일반/특목/자율고	44.2	55.8	100.0(3,160)	
	특성화고	54.7	45.3	100.0(679)	

\*\*\*  $p < .001$

### ③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학급회의의 참여정도는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5.7%에 해당했으며,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성별,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은 남자(16.4%)가 여자(15.1%)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19.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18.4%), 일반/특목/자율고(16.6%), 초등학교(12.5%)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그렇지 않은 비율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16%대로 거의 비슷했으며, 대도시는 1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비율은 낮은 수준일수록 그렇지 않은 비율이 높았는데 학업성적은 '하' 23.8%, '중' 15.9%, '상' 9.8%, 경제적 수준은 '하' 20.5%, '중' 17.2%, '상' 13.3% 순이었다.

표 IV-2-9 학급회의의 참여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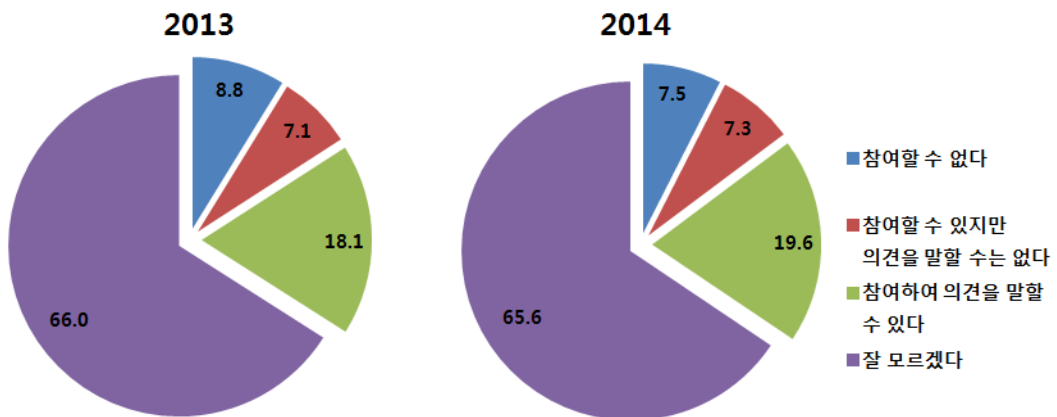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4.4	11.3	53.6	30.6	100.0(5,791)	-
성별	남자	5.5	10.9	53.2	30.4	100.0(3,043)	17.532**
	여자	3.3	11.8	54.1	30.8	100.0(2,749)	
학교 유형	초등학교	3.7	8.8	43.1	44.4	100.0(2,242)	343.063***
	중학교	5.2	13.2	58.3	23.4	100.0(1,810)	
	일반/특목/자율고	4.0	12.6	63.1	20.3	100.0(1,374)	
	특성화고	7.0	12.7	60.0	20.3	100.0(366)	
지역 규모	대도시	4.5	10.7	52.8	32.0	100.0(2,390)	16.603*
	중소도시	4.5	11.7	52.9	30.9	100.0(2,676)	
	읍면지역	4.1	12.0	59.2	24.7	100.0(725)	
학업 성적	상	2.6	7.2	48.3	41.9	100.0(1,913)	257.571***
	중	4.1	11.8	56.0	28.0	100.0(2,476)	
	하	7.6	16.2	56.5	19.7	100.0(1,368)	
경제적 수준	상	3.6	9.7	49.8	36.9	100.0(2,824)	115.790***
	중	5.2	12.0	56.7	26.1	100.0(2,149)	
	하	5.1	15.4	58.5	20.9	100.0(787)	

\* p<.05 \*\* p<.01 \*\*\* p<.001

#### ④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는 '참여할 수 없다'가 전체의 7.5%였으며, '참여할 수 있지만 회의 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7.3%, '참여하여 회의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19.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65.6%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는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할 수 없거나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성별의 경우 남자는 17.7%, 여자는 11.4%로 남자가 높았으며, 학교 유형은 일반/특목/자율고(15.1%)가 중학교(14.4%)와 특성화고(14.9%)보다 높았다. 가족유형 중 참여할 수 없거나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조손가정(25.3%)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25%), 한부모가정(13.8%), 양부모가정(14.6%) 순이었다. '참여할 수 없거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정도'에 대해서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 15.6%, '하' 15.3%, '중' 1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2】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2013~2014)/단위(%)



표 IV-2-10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 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전체(N)	$\chi^2$
전체		7.5	7.3	19.6	65.6	100.0(7,483)	—
성별	남자	9.6	8.1	17.7	64.5	100.0(3,912)	76.469***
	여자	5.1	6.3	21.8	66.8	100.0(3,572)	
학교 유형	중학교	8.2	6.2	17.7	67.9	100.0(3,644)	38.711***
	일반/특목/자율고	6.6	8.5	21.9	63.0	100.0(3,162)	
	특성화고	7.7	7.2	19.4	65.7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	7.3	19.6	65.8	100.0(6,917)	40.870***
	한부모가정	7.6	6.2	22.7	63.4	100.0(445)	
	조손가정	6.0	19.3	27.5	47.2	100.0(27)	
	기타	19.7	5.3	5.8	69.2	100.0(95)	
학업 성적	상	7.2	7.0	22.4	63.4	100.0(1,971)	30.218***
	중	6.6	7.1	20.4	65.9	100.0(3,032)	
	하	8.6	7.8	16.6	67.1	100.0(2,408)	
경제적 수준	상	7.9	7.7	21.1	63.3	100.0(2,855)	18.094**
	중	7.0	6.5	19.8	66.7	100.0(3,079)	
	하	7.2	8.1	17.1	67.6	100.0(1,485)	

\*\* p&lt;.01 \*\*\* p&lt;.001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를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중학생(13.4% → 16.2% → 17.7%)과 고등학생(16.6% → 19.9% → 일반/특목 자율고 21.9%, 단, 특성화고는 19.4%)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참여할 수 없거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경우’와 ‘잘 모르겠다’는 경우를 합한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는 다른 학교급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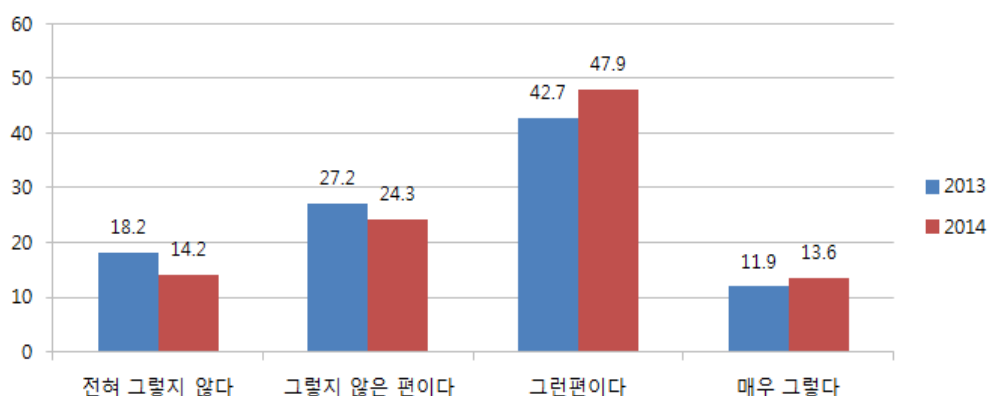
표 IV-2-11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단위 : %)

	연도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할 수 없다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중학생	2012년		6.9	5.6	13.4	74.1
	2013년		10.1	7.4	16.2	66.2
	2014년		8.2	6.2	17.7	67.9
고등 학생	2012년		6.7	6.4	16.6	70.3
	2013년		7.5	6.8	19.9	65.9
	2014년	일반/특목/자율고	6.6	8.5	21.9	63.0
		특성화고	7.7	7.2	19.4	65.7

## ⑤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38.5%가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으로 응답했다. 변인별 집단간 차이는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남자가 39.8%, 여자가 37%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유형은 초등학교(15.4%)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4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특성화고 54.7%, 일반/특목/자율고 54.2%, 중학교 40.9%). 지역 규모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대도시(40.2%), 읍면지역(39.9%), 중소도시(36.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3】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2013~2014)

표 IV-2-1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4.2	24.3	47.9	13.6	100.0(10,315)	-
성별	남자	16.7	23.1	46.2	13.9	100.0(5,361)	61.703***
	여자	11.5	25.5	49.7	13.2	100.0(4,955)	
학교 유형	초등학교	5.2	10.2	51.8	32.8	100.0(2,953)	1876.284***
	중학교	14.6	26.3	51.1	8.0	100.0(3,576)	
	일반/특목/자율고	20.1	34.1	42.0	3.8	100.0(3,120)	
	특성학교	24.8	29.9	41.2	4.1	100.0(666)	
지역 규모	대도시	14.8	25.4	45.3	14.5	100.0(4,348)	31.462***
	중소도시	13.8	22.8	50.0	13.5	100.0(4,668)	
	읍면지역	13.9	26.0	49.3	10.8	100.0(1,299)	

\*\*\* p<0.001

###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 ①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정도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의제수용률과 청소년참여 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현황,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대한민국아동 총회 운영 현황,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 사업 현황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13년 청소년 374명 및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하여 5~10월까지 여성가족부 및 17개 지역회의별 논의 활동을 거쳐 선정된 3개 영역, 7개 정책과제, 31개의 세부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제안된 정책과제들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8년간 제안된 328건의 정책과제를 모니터링한 결과 87.8%인 288건의 정책과제가 정부 청소년정책에 수용, 반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3: 82).

표 IV-2-13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 출처: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p. 82.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여 범정부적 청소년정책과제를 발굴, 추진, 점검하는 기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정부에서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수용한 비율은 2009년도를 제외하고는 80%에서 90% 사이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SNS 청소년특별회의 페이지([www.facebook.com/withyouth](http://www.facebook.com/withyouth))를 개설·운영하고 온라인 토론방(daum 카페) 개설 등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이자 중심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10~2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82).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189개(2013년 6월 30일 현재), 총 4,080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2013년 현재 운영예산으로 17개 시·도에는 매년 10백만 원(국비 5백만 원, 지방비 5백만 원), 시·군·구에는 3백 5십만원(국비 1백 75만원, 지방비 1백 7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79).

한편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400개 생활권 수련시설 중 305개의 시설에 전국 약 4,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8월중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운영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대표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2013부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발하여 그 결과와 성과를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운영예산은 운영위원회별 매년 2백 50만원(국비 1백 25만원, 지방비 1백 25만원)을 기준으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79).

**표 IV-2-14**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3) (단위 :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수	163	175	175	175	186	189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수	258	273	286	286	305	305

\* 출처: 여성가족부 (2012e).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p.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p. 156 재인용,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p. 79.

**표 IV-2-15**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3) (단위 : 개)

	계	여성 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참여위원회	189	1	6	3	3	10	2	2	6	1	32	19	5	16	15	23	24	20	1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	44	14	9	12	6	10	7		62	32	15	14	16	14	13	15	22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pp. 79-81.

또한 2007년부터 시작된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은 주로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제안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공모를 통해 청소년관련 기관을 지원하던 ‘참여공모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20개 내외 팀을 지원하던 규모를 확대하여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해 74개팀, 2012년에는 60개팀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65개 팀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동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3: 83).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들이 아동정책에 대한 토론 및 제안활동을 펼치는 참여기구로 청소년특별회의의 주 참여대상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면 아동총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주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11차례 개최되었으며, 차별·폭력·안전·건강 등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표 IV-2-16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4)

구분	주요내용
제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04. 7. 27 ~ 29(2박 3일)</li> <li>• 주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만들기</li> <li>• 참여인원: 112명</li> </ul>
제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05. 10. 20 ~ 22(2박 3일)</li> <li>• 주제: 아동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li> <li>• 참여인원: 480명(지역대회 개최)</li> </ul>
제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06. 9. 21 ~ 23(2박 3일)</li> <li>• 주제: 아동,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li> <li>• 참여인원: 500명(이주아동 참가, 지역대회 개최)</li> </ul>
제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07. 8. 14 ~ 16(2박 3일)</li> <li>• 주제: 아동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li> <li>• 참여인원: 560명(아동권리 수호천사 및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li> </ul>
제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08. 8. 18 ~ 20(2박 3일)</li> <li>• 주제: 우리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li> <li>• 참여인원: 총 610명(아동 580명, 지도자 30명)</li> </ul>
제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09. 11. 17 ~ 19(2박 3일)</li> <li>• 주제: 서로 존중해주는 세상을 위하여</li> <li>• 참여인원: 총 547명(아동 418명, 지도자 12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회: 410명</li> <li>– 본대회: 137명(지역대회 선발아동,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li> </ul> </li> </ul>
제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0. 8. 24 ~ 26(2박 3일)</li> <li>• 주제: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말하다</li> <li>• 참여인원: 총 1,335명(아동 1,040명, 지도자 29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회: 1,182명</li> <li>– 본대회: 153명(지역대회 선발아동, 이주새터민 의장단 등)</li> </ul> </li> </ul>
제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1. 8. 17 ~ 19(2박 3일)</li> <li>• 주제: 세상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li> <li>• 참여인원: 총 1,741명(아동 1,338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회: 1,583명(아동 1,216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7명)</li> <li>– 본대회: 15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명)</li> </ul> </li> </ul>
제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2. 8. 8 ~ 10(2박 3일)</li> <li>• 주제: 꿈, 행복을 향한 도전</li> <li>• 참여인원: 총 1,831명(아동 1,529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회: 1,663명(아동 1,307명, 지도자 및 실무자 356명)</li> <li>– 본대회: 16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46명)</li> </ul> </li> </ul>

구분	주요내용
제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3. 8. 7 ~ 9</li> <li>• 주 제 : 건강한 아동, 건강한 대한민국</li> <li>• 참여인원 : 총 1,174명(아동 897명, 지도자 및 실무자 27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회 1,046명(아동 799명, 지도자 및 실무자 247명)</li> <li>- 본 대 회 128명(아동 98명, 지도자 및 실무자 30명)</li> </ul> </li> </ul>
제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14. 8. 11 ~ 13</li> <li>• 주 제 : 대한민국 아동안전은 녹색불입니까?</li> <li>• 참여인원 : 총 810명(아동 555명, 지도자 및 실무자 25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회 676명(아동 456명, 지도자 및 실무자 220명)</li> <li>- 본 대 회 134명(아동 99명, 지도자 및 실무자 35명)</li> </ul> </li> </ul>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2~2014), 대한민국 아동총회(제 1회 ~ 제 10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사업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인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의 과학적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13년 장기 정책연구로 시작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연구’의 2년차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14년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은 16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울진군청소년수련관(경북 지역 대표운영기관)에서 모집 및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2014. 10. 20 현재).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은 각 지역의 시도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정책당사자인 청소년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함으로써 청소년의 의견반영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과 2014년의 예산 및 주요활동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2014).

표 IV-2-17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 사업 현황

년도	운영기간	참여 인원	주요활동	총 예산	지역별 교부금액 / 총 교부액
2013	2013.7~ 2013.12		주요현안청소년정책(지역이슈/자유학기제) 정책과제 제안서 제출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평가지표 검토 청소년정책모니터링 활동	173백만 원	지역별 8백만 원/ 총128,000,000원
2014	2014.4~ 2014.11 (지역별 활동은 10월종료)	217명 위촉 / 현재 204명	지역사회 청소년정책시행 모니터링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 모니터링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생활공감정책 제안	120백만 원	지역별 5백만 원/ 총85,000,000원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4. 10. 20),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사업 현황 사업담당자 질의응답자료.

## ②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을 2012년, 2013년, 2014년의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혀 모름’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통틀어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으며 참여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012년 2%, 2013년과 2014년은 1.8%와 1.6%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전혀 모르거나 참여한 경험이 없는 비율’은 2012년 98%, 2013년과 2014년이 98.2%와 98.4%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12년 2.3%, 2013년 2.4%, 2014년 일반/특목/자율고 2.3%와 특성화고 1.1%로 2012년까지는 증가추세였지만 2014년은 약간 감소세를 보였다. 특성화고의 경우 2014년 1.1%로 중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2-1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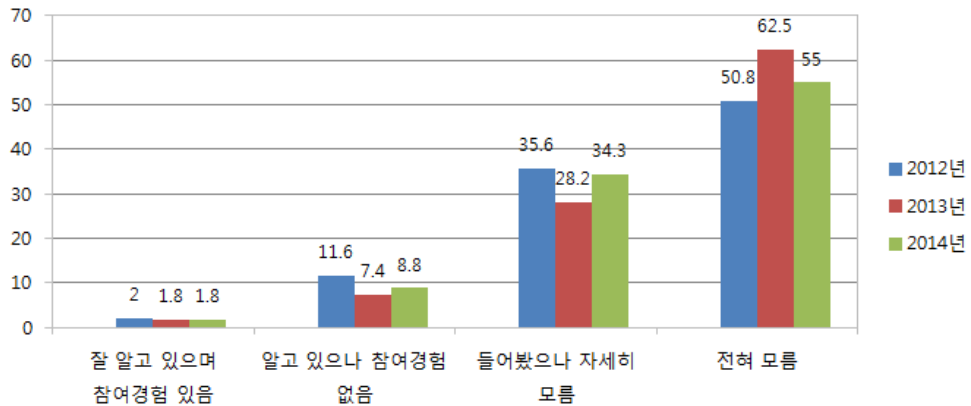
	연도	잘 알고 있으며 참여경험 있음	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음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
중학생	2012년	2.0	11.6	35.6	50.8
	2013년	1.8	7.4	28.2	62.5
	2014년	1.6	9.8	35.5	53.1
고등학생	2012년	2.3	11.7	34.5	51.4
	2013년	2.4	7.1	28.3	62.2
	2014년	일반/특목/자율고	2.3	34.0	55.8
		특성화고	1.1	29.7	61.3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62.4%, ‘이름을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8.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7.2%,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떤 기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9.3%로 나타난 반면,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도 62.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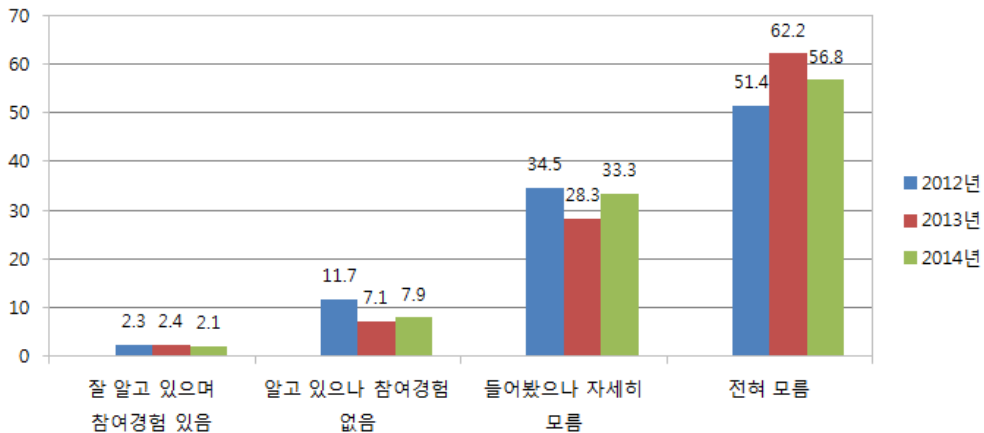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2.3%)이 여학생(1.9%)보다, 일반계고등학생(2.5%)이 특성화고등학생(2.1%)과 중학생(1.8%)보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2.5%), 중소도시(2.2%), 대도시(1.9%) 순으로, 학업성적(상 2.7%, 중 2.3%, 하 1.5%)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해본 경험의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20% → 18% → 16%), 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2.3% → 2.4% → 2.3%) 볼 수 있다.



【그림 IV-2-4】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3개년 추이(중학생)/단위(%)



【그림 IV-2-5】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 3개년 추이(고등학생)/단위(%)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 여부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의 비율이 55%로 과반수 이상이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34.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는 8.8%로 전체의 98.2%가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봤어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에 대해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변인의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하위 집단이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알고 있어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비율이 95% 이상이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표 IV-2-19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N)	$\chi^2$
전체		55.0	34.3	8.8	1.8	100.0(7,467)	-
성별	남자	58.6	31.2	8.7	1.6	100.0(3,901)	46.153***
	여자	51.1	37.8	9.0	2.1	100.0(3,566)	
학교 유형	중학교	53.1	35.5	9.8	1.6	100.0(3,644)	26.726***
	일반/특목/자율고	55.8	34.0	7.9	2.3	100.0(3,147)	
	특성화고	61.3	29.7	7.9	1.1	100.0(67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4.7	34.6	8.8	1.8	100.0(6,897)	17.098*
	한부모가정	56.7	33.5	8.3	1.5	100.0(448)	
	조손가정	48.3	25.2	19.8	6.6	100.0(27)	
	기타	67.4	21.4	9.6	1.5	100.0(95)	
학업 성적	상	53.7	33.4	10.3	2.6	100.0(1,961)	20.768**
	중	54.2	35.6	8.3	1.8	100.0(3,032)	
	하	56.8	33.7	8.2	1.3	100.0(2,399)	
경제적 수준	상	54.5	33.1	10.0	2.4	100.0(2,845)	18.413**
	중	55.0	35.7	7.9	1.5	100.0(3,073)	
	하	55.3	34.4	8.7	1.5	100.0(1,482)	

\* p<0.05, \*\* p<0.01, \*\*\* p<0.001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연령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25.7%로 나타났으며, 현행대로 만 19세 유지하는 5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만 19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6.6% 정도를 차지했다. 투표연령에 대해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만 19세보다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남자(26.1%)가 여자(25.2%)로 높았으며,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도 남자(9.2%)가 여자(3.7%)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투표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응답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높은 수준이 '상'이 '중'과 '하'보다 투표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보다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표 IV-2-20 투표연령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현재 만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N)	$\chi^2$
전체		25.7	53.0	6.6	14.7	100.0(7,499)	—
성별	남자	26.1	48.7	9.2	16.0	100.0(3,920)	123.579***
	여자	25.2	57.8	3.7	13.3	100.0(3,579)	
학교 유형	중학교	26.2	50.9	5.2	17.7	100.0(3,657)	105.111***
	일반/특목/자율고	25.3	56.6	7.4	10.6	100.0(3,161)	
	특성화고	24.6	47.5	10.2	17.7	100.0(680)	
학업 성적	상	26.5	56.3	7.8	9.4	100.0(1,974)	134.919***
	중	23.8	56.7	5.5	14.0	100.0(3,040)	
	하	27.5	45.7	7.0	19.8	100.0(2,411)	
경제적 수준	상	25.6	55.0	7.2	12.3	100.0(2,859)	37.197***
	중	24.5	52.9	5.9	16.8	100.0(3,087)	
	하	28.7	49.6	6.9	14.8	100.0(1,486)	

\*\*\* p<.00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수준에 대한 내용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전체의 41.3%에 해당됐다. 이 분야에 있어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규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그렇지 않다'의 경우 남자(42.6%)가 여자(40%)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은 고등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비율이 컸는데, 일반/특목/자율고는 61%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특성화고는 47%, 중학교 41.9%, 초등학교 17.2%의 수준을 보였다. 지역규모는 '그렇지 않은 비율'이 읍면지역(45.1%)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 41.7%, 중소도시 39.9% 순이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그렇지 않다'의 경우 낮은 수준인 '하'(학업성적 45.4%, 경제적 수준 53.2%)가 가장 높았다.

표 IV-2-2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5.7	25.6	38.4	20.3	100.0(10,355)	-
성별	남자	18.1	24.5	38.0	19.5	100.0(5,396)	51.912***
	여자	13.0	27.0	38.9	21.1	100.0(4,959)	
학교 유형	초등학교	4.3	12.9	48.1	34.6	100.0(2,854)	1371.089***
	중학교	14.8	27.1	42.0	16.1	100.0(3,658)	
	일반/특목/자율고	25.9	35.1	26.7	12.3	100.0(3,162)	
	특성화고	19.8	27.2	33.2	19.9	100.0(680)	
지역 규모	대도시	16.6	25.1	37.6	20.7	100.0(4,377)	21.434**
	중소도시	14.7	25.2	39.3	20.7	100.0(4,673)	
	읍면지역	16.1	29.0	37.8	17.1	100.0(1,305)	
학업 성적	상	16.0	25.1	34.5	24.4	100.0(3,182)	98.731***
	중	13.4	25.3	41.8	19.5	100.0(4,353)	
	하	18.6	26.8	37.7	16.9	100.0(2,737)	
경제적 수준	상	13.6	23.0	39.9	23.5	100.0(4,617)	158.247***
	중	15.3	26.1	40.0	18.6	100.0(4,018)	
	하	21.6	31.6	30.8	15.9	100.0(1,646)	

\* p&lt;.05 \*\* p&lt;.01 \*\*\* p&lt;.001

## ③ 참여의 장애이유

참여에 장애가 되는 이유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을 내기 어렵다’의 경우 32%,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이 15.2%,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는 경우’ 13.8%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장애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가족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간을 내기 어렵다’의 경우 특성화고→일반/특목/자율고→중학교→초등학생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아졌으며,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은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보다, 학업성적은 높은 경우가 ‘중’과 ‘하’보다, 경제적 수준은 낮은 ‘하’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표 IV-2-22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모님 (보호자) 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전체(N)	$\chi^2$
전체	32.0	15.2	2.5	2.2	34.2	13.8	100.0(10,432)	—
성별	남자	37.3	15.1	2.9	2.6	29.9	100.0(5,447)	200.971***
	여자	26.2	15.3	2.1	1.7	39.0	100.0(4,985)	
학교 유형	초등학교	40.5	16.0	4.8	0.8	22.9	100.0(2,933)	506.544***
	중학교	32.9	15.0	2.4	2.1	35.4	100.0(3,655)	
	일반/특목/자율고	25.9	14.2	0.7	3.2	40.8	100.0(3,164)	
	특성화고	19.0	18.2	0.9	4.1	46.4	100.0(6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3	15.1	2.5	2.1	34.2	100.0(9,724)	28.104*
	한부모가정	26.5	17.2	2.4	2.9	35.8	100.0(559)	
	조손가정	25.9	15.3	9.0	5.8	35.5	100.0(41)	
	기타	34.9	14.0	1.7	5.4	27.9	100.0(107)	
학업 성적	상	30.8	13.9	2.3	1.5	37.7	100.0(3,215)	52.966***
	중	33.9	15.2	2.5	2.2	32.0	100.0(4,392)	
	하	30.6	16.7	2.8	3.0	33.8	100.0(2,743)	
경제적 수준	상	36.0	14.5	2.5	2.0	31.3	100.0(4,671)	97.242***
	중	30.2	16.2	2.7	2.0	35.1	100.0(4,036)	
	하	25.2	15.2	2.1	3.2	40.1	100.0(1,652)	

\* p&lt;.05 \*\*\* p&lt;.001

##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최근 10년간 전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04년 755명에서 2013년 623명으로 매년 600~700명 총 6,090명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병역거부 사유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병역법령에 따라 징역 5,669명, 집행유예 26명, 재판계류 395명 등으로 형이 확정된 자가 93.5%인 5,695명에 달하고 있다.

표 IV-2-23 양심적 병역 거부자 비율

(단위 : 명)

발생 년도	합 계			현 역 대 상			사회복무대상		
	계	여호와의 증인	신념적 (기타)	계	여호와의 증인	신념적 (기타)	계	여호와의 증인	신념적 (기타)
2013년	623	615	8	593	585	8	30	30	0
2012년	598	597	1	564	563	1	34	34	0
2011년	633	627	6	595	590	5	38	37	1
2010년	721	715	6	685	679	6	36	36	0
2009년	728	723	5	677	673	4	51	50	1

\* 출처: 병무청 요청자료(2014.08.07).

표 IV-2-24 연도별 병역 거부자 발생현황

(단위 :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인원	755	828	781	571	375	728	721	633	598	100	6,090

\* 출처: 형혁규·김성봉(20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93호, p.2,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201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p.167 재인용.

\* 원자료 : 병무청 제출자료(2013.7).

표 IV-2-25 최근 10년간(2004~2013.6.30.) 병역거부자 처리 현황

구분	계	형 확정자			재판계류 등
		소계	징역	집행유예	
인원(명)	6,090	5,695	5,669	26	395
비중(%)	100	93.5	93.1	0.4	6.5

\* 출처: 형혁규, 김성봉(20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93호, p.2,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2013).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p.168 재인용.

\* 원자료: 병무청 제출자료(2013. 7).

## ②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조사 질문에 대해 전체 중 25.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상의 보장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의 경우 가정에서의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13.4%였으며 학교는 24.8%, 사회는 39.1%로,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IV-2-26 사상의 자유 보장수준

(단위 : %)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10.7	15.2	39.0	35.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4.3	9.1	48.0	38.6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5.9	18.9	50.5	24.8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11.0	28.1	41.7	19.2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해 각 변인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14.9%)가 여자(11.7%)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1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14.8%), 초등학교(13.5%), 일반/특목/자율고(10.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조손가정이 35.4%로 1/3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23.9%), 한부모가정(18.1%), 양부모가정(12.9%)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하 18.5%, 중 12.8%, 상 9.6%)과 경제적 수준(하 16.8%, 중 14.6%, 상 11%)은 그 수준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표 IV-2-27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4.3	9.1	48.0	38.6	100.0(10,436)	—
성별	남자	5.6	9.3	48.6	36.4	100.0(5,440)	65.460***
	여자	2.8	8.9	47.4	40.9	100.0(4,996)	
학교 유형	초등학교	5.4	8.1	39.4	47.1	100.0(2,956)	200.788***
	중학교	4.6	10.2	50.1	35.1	100.0(3,641)	
	일반/특목/자율고	2.6	8.3	52.2	36.9	100.0(3,160)	
	특성화고	5.1	11.6	54.9	28.4	100.0(6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	8.9	47.9	39.2	100.0(9,733)	69.215***
	한부모가정	6.1	12.0	51.4	30.6	100.0(559)	
	조손가정	8.6	26.8	30.9	33.7	100.0(41)	
	기타	14.5	9.4	46.1	30.1	100.0(103)	
학업 성적	상	2.8	6.8	41.0	49.4	100.0(3,223)	294.988***
	중	4.4	8.4	51.3	35.9	100.0(4,397)	
	하	5.5	13.0	51.3	30.2	100.0(2,740)	
경제적 수준	상	3.8	7.2	43.4	45.6	100.0(4,677)	192.114***
	중	4.1	10.5	52.4	33.0	100.0(4,042)	
	하	5.7	11.1	50.6	32.6	100.0(1,649)	

\*\*\* p<.001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해 각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25.5%)가 여자(23.8%)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가 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25.8%), 일반/특목/자율고(25.7%), 초등학교(20.7%)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대해 각 유형 모두 24%대의 비율을 보였으며 가족유형은 기타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28.1%), 한부모가정(25.3%), 양부모가정(24.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적(하 33.1%, 중 23.3%, 상 19.4%)과 경제적 수준(하 32.9%, 중 25.4%, 상 21.2%)은 낮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아졌다.



표 IV-2-28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5.9	18.9	50.5	24.8	100.0(10,428)	-
성별	남자	7.3	18.2	49.3	25.1	100.0(5,433)	45.483***
	여자	4.3	19.5	51.8	24.4	100.0(4,9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5.8	14.9	43.0	36.3	100.0(2,952)	329.835***
	중학교	6.1	19.7	52.8	21.4	100.0(3,639)	
	일반/특목/자율고	5.0	20.7	54.1	20.2	100.0(3,158)	
	특성화고	8.8	23.2	53.8	14.3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5.9	19.0	47.9	27.3	100.0(4,420)	41.863***
	중소도시	5.7	18.9	51.5	23.8	100.0(4,698)	
	읍면지역	6.3	18.2	55.7	19.7	100.0(1,3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7	18.9	50.4	25.0	100.0(9,729)	18.924*
	한부모가정	7.3	18.0	53.5	21.1	100.0(556)	
	조손가정	2.4	25.7	50.5	21.4	100.0(41)	
	기타	12.9	21.0	44.8	21.4	100.0(101)	
학업 성적	상	4.3	15.1	46.5	34.1	100.0(3,222)	321.672***
	중	5.4	17.9	54.3	22.4	100.0(4,393)	
	하	8.1	25.0	49.2	17.7	100.0(2,737)	
경제적 수준	상	5.4	15.8	48.2	30.6	100.0(4,675)	210.533***
	중	5.4	20.0	54.4	20.3	100.0(4,037)	
	하	8.1	24.8	47.4	19.6	100.0(1,649)	

\* p<.05 \*\*\* p<.001

청소년의 자유보장수준에서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의 질문 결과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성별은 가정, 학교에서와는 달리 여자(40.8%)가 남자(37.5%)보다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유형은 특성화고가 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44.2%), 중학교(40.3%), 초등학교(30.3%)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세 집단 모두 39% 대를 보였으며, 가족유형은 기타가 4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43.9%), 조손가정(41.7%), 양부모가정(38.7%) 순이었다. 학업 성적(하 45.5%, 중 38.2%, 상 34.8%)과 경제적 수준(하 50.8%, 중 40.1%, 상 34%)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표 IV-2-29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1.0	28.1	41.7	19.2	100.0(10,430)	—
성별	남자	12.5	25.0	42.3	20.2	100.0(5,435)	66.620***
	여자	9.4	31.4	40.9	18.2	100.0(4,9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	20.8	38.9	30.7	100.0(2,953)	403.318***
	중학교	11.3	29.0	43.2	16.5	100.0(3,640)	
	일반/특목/자율고	11.5	32.7	42.3	13.5	100.0(3,159)	
	특성화고	13.6	33.4	42.4	10.6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11.3	27.7	39.3	21.7	100.0(4,419)	49.953***
	중소도시	10.6	28.4	42.6	18.4	100.0(4,703)	
	읍면지역	11.4	28.3	46.3	14.0	100.0(1,3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0.9	27.8	41.8	19.5	100.0(9,731)	22.004**
	한부모가정	11.4	32.5	40.2	16.0	100.0(557)	
	조손가정	5.3	36.4	42.0	16.2	100.0(41)	
	기타	21.4	24.3	37.4	16.9	100.0(101)	
학업 성적	상	9.5	25.3	39.5	25.7	100.0(3,224)	176.043***
	중	10.3	27.9	44.0	17.8	100.0(4,393)	
	하	13.6	31.9	40.7	13.8	100.0(2,737)	
경제적 수준	상	9.6	24.4	41.7	24.2	100.0(4,675)	236.864***
	중	10.3	29.8	44.2	15.8	100.0(4,039)	
	하	16.3	34.5	35.6	13.6	100.0(1,649)	

\* p<.05 \*\* p<.01 \*\*\* p<.001

## (2) 종교 자유 보장 정도

### 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학교가 종교재단 소속인지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의 89.1%는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9%였다. 성별로는 여자(12.8%)가 남자(9.3%)학교가 종교재단 소속이라고 응답했으며, 학교유형으로는 일반/특목/자율고(14.8%), 특성화고(14.7%), 중학교(6.9%)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대도시(13.7%)가 종교재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11.3%), 읍면지역(1.9%) 순이었으며 학업성적은 '하'(12.0%), '중'(11.6%), '상'(8.8%) 순이었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도 '하'(12.7%), '중'(11.6%), '상'(8.8%) 순이었다.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응답으로만 분석한 결과,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40.6%(그런 편이다 27.4%, 매우 그렇다 13.2%), '그렇지 않다'는 59.4%(그렇지 않은 편이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39.6%)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종교학교가 학생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및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2013년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V-2-30 '종교재단 학교 여부'와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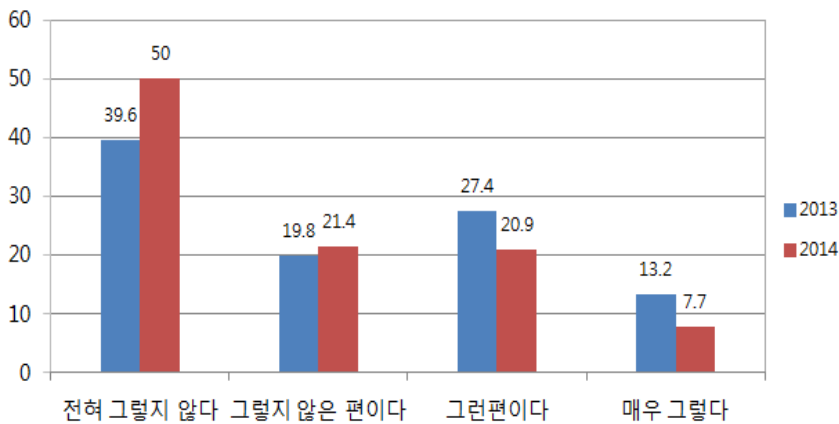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chi^2$
종교재단 학교 여부	전체	10.9	89.1	100.0(7,488)	-
	성별	남자	9.3	100.0(3,912)	23.127***
		여자	12.8	100.0(3,576)	
	학교 유형	중학교	6.9	100.0(3,651)	119.857***
		일반/특목/자율고	14.8	100.0(3,158)	
		특성화고	14.7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13.7	100.0(3,131)	117.307***
		중소도시	11.3	100.0(3,257)	
		읍면지역	1.9	100.0(1,101)	
	학업 성적	상	8.8	100.0(1,972)	12.916**
		중	11.6	100.0(3,040)	
		하	12.0	100.0(2,402)	
	경제적 수준	상	9.6	100.0(2,858)	10.942**
		중	11.4	100.0(3,081)	
		하	12.7	100.0(1,483)	

\*\* p<.01, \*\*\* p<.001

표 IV-2-31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전체		50.0	21.4	20.9	7.7	100.0(817)	—
	학교 유형	중학교	43.7	18.5	28.8	9.0	100.0(249)	25.921***
		일반/특목/자율고	52.6	24.6	16.7	6.0	100.0(468)	
		특성화고	53.1	13.5	20.8	12.6	100.0(100)	
	지역 규모	대도시	46.4	20.8	21.9	10.9	100.0(428)	36.708***
		중소도시	55.9	22.5	18.5	3.2	100.0(368)	
		읍면지역	19.1	14.8	42.4	23.7	100.0(21)	

\*\*\*  $p < .001$



【그림 IV-2-6】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단위(%)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를 질문한 결과 학교유형,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 전체의 71.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학교유형은 일반/특목/자율고가 7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66.6%), 중학교(62.2%)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7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67.2%), 읍면지역(33.9%) 순이었다.

## ②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26.6%)가 여자(25%)보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 유형으로는 초등학교(30.6%), 특성화고(29.2%), 중학교(26.3%), 일반/특목/자율고(2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중소도시(26.5%)가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25.5%), 읍면지역(24.2%)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기타가 39.1%로 가장 높았으며, 조손가정(38.3%), 한부모가정(26.9%), 양부모가정(25.5%)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성적 '중', '하'가 각각 26.7%를 차지했으며 성적이 높은 '상'은 23.9%였다. 경제적 수준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상', '하' 각각 25.7%이었으며 '중'은 26%였다.

표 IV-2-32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0.7	15.2	39.0	35.2	100.0(10,432)	—
성별	남자	12.8	13.8	37.7	35.7	100.0(5,434)	69.902***
	여자	8.3	16.7	40.4	34.7	100.0(4,99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5.3	15.3	31.8	37.6	100.0(2,956)	215.943***
	중학교	10.6	15.7	41.0	32.8	100.0(3,638)	
	일반/특목/자율고	5.9	14.2	42.6	37.3	100.0(3,160)	
	특성화고	13.3	15.9	43.0	27.8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10.9	14.6	37.7	36.7	100.0(4,424)	29.744***
	중소도시	10.9	15.6	38.6	35.0	100.0(4,703)	
	읍면지역	8.8	15.4	44.8	31.0	100.0(1,3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0.5	15.0	39.0	35.4	100.0(9,730)	32.865***
	한부모가정	9.7	17.2	40.0	33.1	100.0(558)	
	조손가정	20.8	17.5	26.0	35.7	100.0(41)	
	기타	25.7	13.4	34.0	26.8	100.0(103)	
학업 성적	상	9.7	14.2	33.6	42.5	100.0(3,219)	123.876***
	중	10.5	16.2	40.3	33.0	100.0(4,399)	
	하	11.9	14.8	43.1	30.2	100.0(2,736)	
경제적 수준	상	10.9	14.8	36.6	37.8	100.0(4,672)	37.475***
	중	10.7	15.3	41.8	32.3	100.0(4,042)	
	하	9.6	16.1	38.7	35.5	100.0(1,649)	

\*\*\* p<.001

###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1) 결사·집회 경험률

##### ① 결사·집회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 두 가지 형태의 사회참여활동 정도를 물어보았다.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혀 없다’ 65.4%, ‘거의 없다’ 18.2%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교유형,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전체의 83.6%가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 성별은 여자(84.1%)가 남자(83.3%)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학교 유형에서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특성화고가 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고(85.3%), 중학교(81.3%)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전혀 없다와 거의 없다’로 응답한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높았으며(하 85.4%, 중 83.8%, 상 81.2%), 경제적 수준은 ‘중’(85.8%), ‘하’(82.8%), ‘상’(81.7%) 순이었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경험률은 ‘전혀 없다’ 73.6%, ‘거의 없다’ 19.2%로 나타났다.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에 대해 전체 중 92.8%가 ‘전혀 없다’와 ‘거의 없다’로 응답했으며, 남자(94%)의 응답률이 여자(91.5%)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은 ‘전혀 없다’와 ‘거의 없다’로 응답한 비율은 특성화고(94.1%), 일반/특목/자율고(93.2%), 중학교(92.3%)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하 93.8%, 중 92.8% 상 91.7%)과 경제적 수준(하 94.3%, 중 93.7% 상 91.2%)은 낮은 수준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표 IV-2-33 결사·집회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chi^2$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전체		65.4	18.2	13.0	3.3	100.0(7,499)	—
	성별	남자	64.4	18.9	12.9	3.8	100.0(3,919)	8.396*
		여자	66.6	17.5	13.1	2.8	100.0(3,580)	
	학교 유형	중학교	60.7	20.6	14.8	4.0	100.0(3,658)	78.378***
		일반/특목/자율고	69.7	15.6	11.8	2.9	100.0(3,161)	
		특성화고	71.3	17.7	9.1	1.9	100.0(679)	
	학업 성적	상	63.1	18.1	14.6	4.2	100.0(1,974)	17.688**
		중	65.1	18.7	13.2	3.0	100.0(3,042)	
		하	67.6	17.8	11.5	3.1	100.0(2,410)	
	경제 적 수준	상	64.2	17.5	14.2	4.1	100.0(2,862)	26.151***
		중	66.6	19.2	11.8	2.3	100.0(3,084)	
		하	65.1	17.7	13.2	3.9	100.0(1,488)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전체		73.6	19.2	6.5	0.7	100.0(7,494)	—
	성별	남자	74.7	19.3	5.4	0.6	100.0(3,916)	18.698***
		여자	72.5	19.0	7.8	0.7	100.0(3,579)	
	학교 유형	중학교	70.7	21.6	6.9	0.8	100.0(3,655)	37.482***
		일반/특목/자율고	76.6	16.6	6.3	0.6	100.0(3,161)	
		특성화고	76.1	18.0	5.7	0.2	100.0(678)	
	학업 성적	상	72.9	18.8	7.4	0.9	100.0(1,972)	14.637*
		중	72.4	20.4	6.5	0.7	100.0(3,038)	
		하	75.9	17.9	5.7	0.5	100.0(2,412)	
	경제 적 수준	상	72.0	19.2	7.9	1.0	100.0(2,862)	26.0370***
		중	74.3	19.4	5.9	0.4	100.0(3,081)	
		하	75.5	18.8	5.0	0.7	100.0(1,486)	

\* p&lt;.05 \*\* p&lt;.01 \*\*\* p&lt;.001

## ②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사회문제와 관련된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에 대해 전체의 95%가 '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경고 및 훈계'는 2.1%, '교내상담 및 학부로 상담' 1%, '선도위원 개최 징계처분'은 0.4%, '기타'는 1.5%로 조사되었으며, '경고 및 훈계'는 남자(2.7%)가 여자(1.5%)보다 높았다.

표 IV-2-34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경고 및 훈계	교내 상담 및 학부로상담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기타	전체(N)
전체		95.0	2.1	1.0	0.4	1.5	100.0(1,373)
성별	남자	93.8	2.7	1.7	0.8	1.0	100.0(690)
	여자	96.2	1.5	0.4	0.0	2.0	100.0(683)

## 4) 사생활의 보호

###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학교에서의 용모검사는 성별, 학교 유형,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57.9%는 '일 년에 한번 이상 용모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일주일에 일회 이상'도 13.2%나 됐다. 성별로는 '일 년에 한번 이상 용모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이 여자(67.8%)가 남자(48.8%)보다 높았으며, '일주일에 일회 이상'도 여자(19.1%)가 남자(7.8%)보다 1.5배 정도 높았다. 학교 유형은 일년 경험률이 특성화고가 65.7%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특목/자율고(62.4%), 중학교(52.6%)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성화고는 일주일에 일회 이상도 21.3%로 다른 유형(중학교와 일반/특목/자율고 모두 12.4%)보다 높았다. 지역규모는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한 비율이 대도시(59.4%), 중소도시(57.1%), 읍면지역(56.2%) 순으로 나타났다.

복장검사 전체 응답자 중 53.3%가 복장검사를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도 12.5%였다. 배경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69.3%)가 남자(38.8%)보다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도 여자(18.9%)가 남자(6.6%)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학교 유형은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이 특성화고(57.3%), 일반/특목/자율고(54.5%), 중학교(5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는 읍면지역(55.6%), 중소도시(55.5%), 대도시(50.2%) 순이었다.



소지품검사는 학교유형,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23.1%는 일 년에 한번 이상 소지품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56.7%), 중학교(23.6%), 일반/특목/자율고(15.4%)순이었다. 특성화고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도 10.5%로 중학교(1.5%)와 일반/특목/자율고(1.1%)보다 훨씬 높았다. 지역규모는 일 년에 한번 이상 소지품검사를 당한 비율이 대도시(23.8%), 읍면지역(23.5%), 중소도시(22.4%) 순이었다.

표 IV-2-35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 :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1) 용모 검사	전체		42.1	21.7	23.0	4.8	8.4	100.0(7,490)	—
	성별	남자	51.2	19.6	21.5	2.8	5.0	100.0(3,915)	366.950***
		여자	32.2	24.1	24.6	7.0	12.1	100.0(3,575)	
	학교 유형	중학교	47.4	19.6	20.6	4.9	7.5	100.0(3,648)	125.371***
		일반/특목/자율고	37.6	24.5	25.4	4.2	8.2	100.0(3,163)	
		특성화고	34.3	20.2	24.2	7.4	13.9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40.6	21.5	25.0	4.7	8.2	100.0(3,130)	38.165***
		중소도시	42.9	20.6	23.2	4.9	8.3	100.0(3,258)	
		읍면지역	43.8	25.6	16.6	5.0	8.9	100.0(1,102)	
2) 복장 검사	전체		46.7	21.0	19.9	4.4	8.1	100.0(7,488)	—
	성별	남자	61.2	16.5	15.6	2.4	4.2	100.0(3,915)	751.170***
		여자	30.7	25.9	24.5	6.6	12.3	100.0(3,573)	
	학교 유형	중학교	48.4	20.6	19.7	4.3	7.0	100.0(3,648)	26.435**
		일반/특목/자율고	45.5	21.7	20.0	4.2	8.6	100.0(3,162)	
		특성화고	42.7	19.7	20.4	5.5	11.7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49.8	18.8	19.0	4.4	8.0	100.0(3,129)	53.676***
		중소도시	44.5	21.1	22.0	4.4	8.0	100.0(3,258)	
		읍면지역	44.4	26.7	15.9	4.3	8.7	100.0(1,102)	
3) 소지 품 검사	전체		76.9	14.1	6.9	1.3	0.9	100.0(7,489)	—
	학교 유형	중학교	76.4	14.8	7.2	0.8	0.7	100.0(3,647)	738.888***
		일반/특목/자율고	84.6	10.9	3.4	0.4	0.7	100.0(3,162)	
		특성화고	43.3	25.2	21.2	7.7	2.8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76.2	13.1	7.8	1.8	1.1	100.0(3,128)	34.719***
		중소도시	77.6	15.2	5.5	0.9	0.8	100.0(3,259)	
		읍면지역	76.5	13.9	8.2	0.8	0.6	100.0(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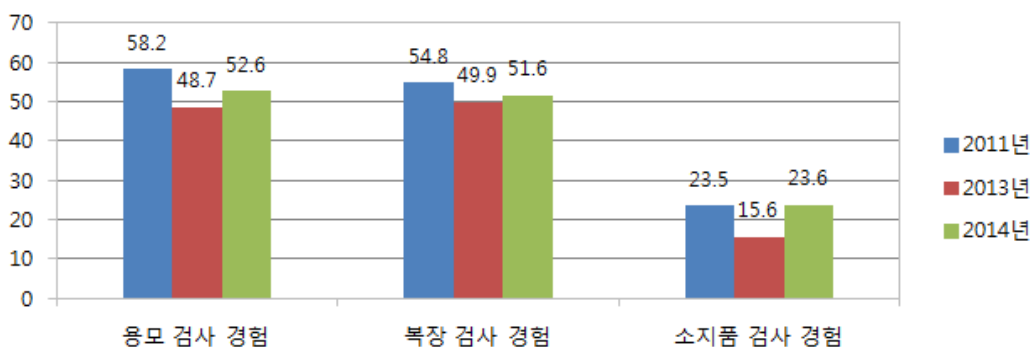
\*\*\* p<.001

2011년, 2013년, 2014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용모검사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특성화고는 제외)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복장검사는 두 집단 모두 2011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 다시 줄어들었다가 2014년에는 중학교는 약간 늘어났고 고등학생은 특성화고에서 약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소지품검사의 경우 중학생은 2011년에 약간 증가했다가 2013년(15.6%)에서 2014년(23.6%)에 8%가 증가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2013년까지 감소추세였다가 2014년에 일반/특목/자율고는 감소했지만 특성화고의 경우 56.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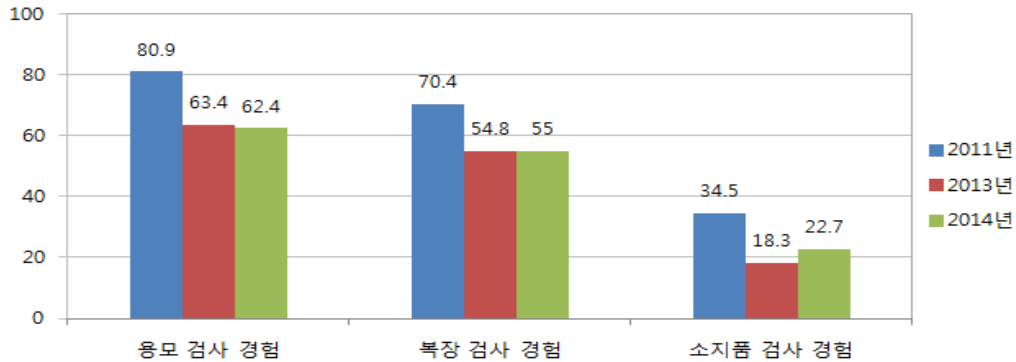
표 IV-2-36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단위 : %)

구분	연도	용모 검사 경험	복장 검사 경험	소지품 검사 경험
중학생	2011년	58.2	54.8	23.5
	2013년	48.7	49.9	15.6
	2014년	52.6	51.6	23.6
고등학생	2011년	80.9	70.4	34.5
	2013년	63.4	54.8	18.3
	2014년	일반/특목/자율고	54.5	15.4
		특성화고	57.3	56.7

\* 주 :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문항 동일 적용)



【그림 IV-2-7】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경험 3개년 추이(중학생)/단위(%)



【그림 IV-2-8】 응모, 복장, 소지품 검사경험 3개년 추이(고등학생)/단위(%)

## (2) 학생 정보 보호정도

### ①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16.5%의 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13.2%, 매우 그렇다 3.3%)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17.9%)가 여자(15.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가 35.5%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15.4%), 중학교(14.1%)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그렇다’는 비율이 읍면지역(17.7%), 대도시(17%), 중소도시(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은 ‘하’(18.5%), ‘중’(16.3%), ‘상’(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7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58.2	25.2	13.2	3.3	100.0(7,359)	—
성별	남자	57.1	25.0	14.1	3.8	100.0(3,828)	10.804*
	여자	59.4	25.4	12.3	2.8	100.0(3,531)	
학교 유형	중학교	62.4	23.5	11.3	2.8	100.0(3,573)	237.815***
	일반/특목/자율고	58.2	26.3	12.3	3.1	100.0(3,120)	
	특성화고	35.7	28.8	28.1	7.4	100.0(66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지역 규모	대도시	59.2	23.8	12.9	4.1	100.0(3,057)	18.817**
	중소도시	58.5	25.7	13.1	2.7	100.0(3,213)	
	읍면지역	54.7	27.6	14.7	3.0	100.0(1,089)	
경제적 수준	상	61.9	22.4	12.5	3.3	100.0(2,803)	30.504***
	중	56.6	27.1	13.2	3.1	100.0(3,027)	
	하	54.8	26.7	15.0	3.5	100.0(1,464)	

\* p<0.05, \*\* p<0.01, \*\*\* p<0.001

## ②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과 시험성적 공개정도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30.2%의 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22.9%, 매우 그렇다 7.3%)라고 응답하였다.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30.2%였으며 성별로는 남자(32.7%)가 여자(27.7%)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은 '그렇다'는 비율이 특성화고가 41.2%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특목/자율고(33%), 초등학교(28.8%), 중학교(27%)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그렇다'는 비율이 읍면지역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31.7%), 중소도시(2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8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 개인의 시험성적 공개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3)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전체		33.8	35.9	22.9	7.3	100.0(10,297)	—
	성별	남자	33.4	33.9	23.7	9.0	100.0(5,352)	58.695***
		여자	34.2	38.1	22.2	5.5	100.0(4,94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3.1	38.1	22.6	6.2	100.0(2,948)	153.007***
		중학교	39.6	33.3	20.6	6.4	100.0(3,567)	
		일반/특목/자율고	30.5	36.5	23.7	9.3	100.0(3,117)	
		특성화고	21.5	37.3	33.2	8.0	100.0(66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지역 규모	대도시	32.4	35.9	23.9	7.8	100.0(4,339)	19.579**
		중소도시	35.6	36.0	21.7	6.7	100.0(4,661)	
		읍면지역	32.0	35.6	24.3	8.1	100.0(1,297)	
4)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	전체		41.8	30.0	20.0	8.1	100.0(10,291)	-
	성별	남자	42.1	29.1	20.1	8.7	100.0(5,348)	8.696*
		여자	41.5	31.1	19.9	7.5	100.0(4,943)	
	학교 유형	초등학교	65.6	24.1	6.8	3.6	100.0(2,946)	1190.739***
		중학교	37.9	30.6	23.1	8.4	100.0(3,563)	
		일반/특목/자율고	28.0	34.8	26.2	11.0	100.0(3,117)	
		특성화고	22.8	31.0	33.4	12.8	100.0(665)	
	지역 규모	대도시	42.8	29.2	19.6	8.4	100.0(4,334)	18.161**
		중소도시	42.4	30.1	19.8	7.7	100.0(4,661)	
		읍면지역	36.8	32.4	22.3	8.5	100.0(1,296)	

\* p<.05 \*\* p<.01 \*\*\* p<.001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28.1%의 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20.0%, 매우 그렇다 8.1%)라고 응답하였다. 성별,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시험 성적 공개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중 28.1%였으며, 성별로는 남자(28.8%)가 여자(27.4%)보다 높았다.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37.2%), 중학교(31.5%), 초등학교(10.4%)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그렇다'는 비율이 읍면지역(30.8%), 대도시(28%), 중소도시(27.5%) 순으로 나타났다.

## 5) 정보접근권

### (1) 매체 접근율

#### ① 매체 이용률

매체이용률은 아동·청소년이 정보 습득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 SNS 이용률, 스마트폰 이용률, 독서율을 조사·분석하였다(김영지 외, 2013). 2013년도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10대, 20대 모두 대부분 하루에 1번 이상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 평균 이용시간이 10대가 14.1시간, 20대는 20.3시간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번이상 이용한 경우는 10대의 경우에 2013년에 95.8%로 2012년(97.6%)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대의 경우에는 2013년에 99.3%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9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시간)
2009	10대	96.7	3.3	—	—	10.8
	20대	91.3	8.7	—	—	18.6
2010	10대	97.3	2.7	—	0.0	12.4
	20대	96.8	3.2	—	—	19.4
2011	10대	97.8	2.2	0.1	0.0	13.2
	20대	98.5	1.5	—	0.0	20.4
2012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	10대	95.8	4.1	0.0(0.02)	—	14.1
	20대	99.3	0.7	0.0(0.03)	—	20.3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34-35.

2013년의 아동·청소년 SNS 이용률을 살펴보면, 프로필기반 서비스 이용률이 6~19세가 93.7%, 20대가 9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니홈피, 마이크로블로그, 블로그 등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에 블로그, 커뮤니티 등의 이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프로필 기반 서비스와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 사이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 이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영지 외, 2013).

표 IV-2-40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단위 : %)

		SNS 이용 <sup>1)</sup> 현황(복수응답)					
		블로그 <sup>2)</sup>	커뮤니티	미니홈피	프로필 기반 서비스 <sup>3)</sup>	마이크로블로그 <sup>4)</sup>	기타서비스 <sup>5)</sup>
2010	초등학생	70.4	73.9	55.9	—	2.6	—
	중학생	95.5	61.3	82.0	—	12.2	—
	고등학생	94.1	59.4	95.6	—	18.0	—
	대학생	87.1	80.4	92.4	—	21.6	—
2011	초등학생	70.7	74.5	61.5	13.9	3.8	—
	중학생	92.1	63.5	82.0	11.6	13.2	—
	고등학생	94.3	61.4	94.3	11.5	17.9	—
	대학생	91.1	81.4	91.7	18.9	21.9	—
2012	초등학생	69.0	72.0	61.2	16.5	5.3	—
	중학생	90.6	62.5	81.2	13.1	13.8	—
	고등학생	92.6	59.7	93.3	13.6	18.7	—
	대학생	89.0	80.0	89.9	22.0	23.0	—
	6-19세	86.3	63.3	82.1	13.8	14.5	—
2013	20대	88.5	83.6	84.5	24.9	19.7	—
	6-19세	20.4	—	25.6	93.7	23.7	6.5
	20대	27.0	—	28.6	95.1	33.7	9.5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5.2.), 2013 청소년 통계, p.29,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재인용 + 2013 data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 66.

\* 주 : 1) 최근 1년 이내 이용여부임.

2)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

3) 나이, 학력 등 개인정보 및 사진, 친구목록 등이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맥형성, 교류하는 서비스 (페이스북 등).

4) 한 두 문장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의 한 종류(트위터, 미투데이 등).

5) 2013년 조사부터 커뮤니티 대신으로 추가된 문항.

12~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3년 현재 97.87%로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이용 현황은 채팅, 메신저가 8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게임(46.7%), 음성·영상 통화(45.2%), 문자메시지(36.1%), 음악감상(35.9%), 검색(33.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채팅·메신저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게임도 상당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1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단위 : %)

	이용률	이용 현황								
		계	음성·영상 통화	문자메시지 (SMS, MMS)	무선 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채팅, 메신저	검색	게임	음악 감상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
2011	40.0	100.0	26.5	38.2	35.3	-	-	-	-	-
2012	80.7	100.0	29.3	36.7	34.0	-	-	-	-	-
2013	97.8	100.0	45.2	36.1	-	86.8	33.0	46.7	35.9	13.6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5.2.), 2013 청소년 통계. p.30,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2013), 2013년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 p.20, p.76.

12~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013년 현재 하루 평균 2.36시간으로 2011년(2.7시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을 시간별로 살펴보면, 3시간 이상 이용한 청소년은 3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3시간 미만(30.0%), 1-2시간 미만(28.8%), 1시간 미만(3.5%)의 순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2년에 비해서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2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일)평균 이용시간(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2011	2.7	100.0	16.0	24.3	18.0	41.7
2012	2.6	100.0	7.7	28.9	27.0	36.4
2013	2.36	100.0	3.5	28.8	30.0	37.7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5.2.), 2013 청소년 통계. p. 30, 한국인터넷진흥원·미래창조과학부(2013), 2013년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조사, p. 77.

한편, 청소년들의 일반독서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1권 이상 책을 읽은 비율인 독서율은 2012년에 96.0%로 나타났다. 청소년 독서율은 성인 독서율 71.4%에 비해 높고, 2010년 92.3%, 2011년 83.8%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2012년 청소년 독서율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99.4%, 중학생 76.0%, 고등학생 92.7%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으며, 중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2011년에 잠시 독서율이 낮아졌으나 2012년에 다시 모든 교급에서 독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독서율의 대폭 증가는 학교도서관의 상대적 활성화(계약직 사서교사 배치), 독서 동아리(학생·교사·학부모·사제동행) 지원 정책, (독서)논술 교육·입시 확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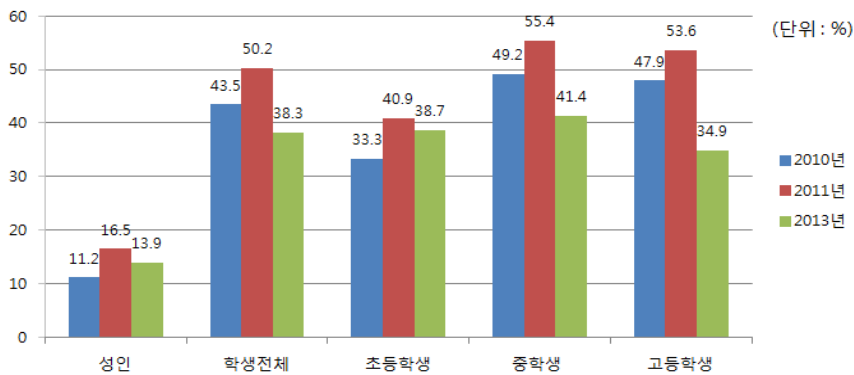
표 IV-2-43 학생-성인 독서율

(단위 : %)

구분 \ 년도		2010	2011	2012
학생	성인	65.4	66.8	71.4
	소 계	92.3	83.8	96.0
	초 등 학 생	97.6	93.8	99.4
	중 학 생	86.9	79.3	96.0
	고 등 학 생	89.8	79.1	92.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2, 2013). 국민독서실태 조사, p.32, 2013년 자료는 p. 52.

한편 지난 1년('12년 11월~'13년 10월) 동안 전자책(교과서, 참고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일반도서 기준)을 '한 권 이상 읽었다'는 성인의 비율은 13.9%로 지난 2011년(16.5%) 대비 전자책 독서인구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전체 연간 전자책 독서율 38.3%)의 경우 초등학생 38.7%, 중학생 41.4%, 고등학생 34.9%이며, 중학생의 전자책 독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중생의 경우 전자책 독서율이 48.0%로 2명 중 1명은 전자책을 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전자책 독서율은 2011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4.6%p, 18.7%p 감소하였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만화를 제외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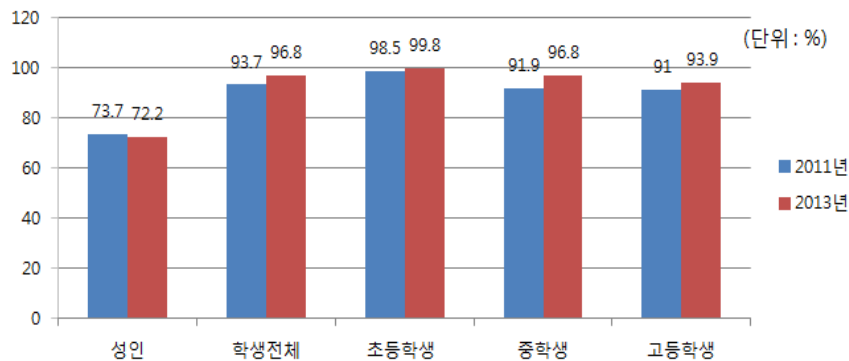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민독서실태 조사, p. 53

【그림 IV-2-9】 전자책 독서율 변화 추이(성인·학생)

지난 1년('12년 11월~'13년 10월) 동안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한 권 이상' 읽은 독서인구 비율은 성인 72.2%, 학생 96.8%로 종이책 독서율(성인 71.4%, 학생 96.0%)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전자책’ 종합 독서율은 지난 2011년(성인 73.7%, 학생 93.7%)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성인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학생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연간 종합 독서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민독서실태 조사, p. 55.

【그림 IV-2-10】 종이책+전자책 종합 독서율 변화 추이(성인·학생)

## ② 유해매체 이용률

2012년 중·고등학생이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유해매체는 ‘컴퓨터 성인물(45.5%)’, ‘성인용간행물(40.0%)’, ‘성인용 게임(3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컴퓨터 성인물’, ‘휴대폰 성인물’,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이용경험이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모든 유해매체에서 중학생보다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4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단위 : %)

분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물	휴대폰 성인물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이성만남 전화번호
2010	38.3	27.8	29.4	14.8	38.3	7.5	46.1	49.5	1.4
2011	41.1	32.0	25.3	14.8	37.3	12.3	41.2	47.4	1.5
2012	40.0	27.5	23.5	26.9	45.5	20.5	21.5	32.3	1.8
중 학 생	28.5	17.8	13.7	15.4	30.3	16.0	17.5	29.7	1.3
고등학생	51.1	36.9	33.1	38.1	60.3	24.9	25.4	34.9	2.3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통계, p. 35.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각년도.

2012년 중·고등학생이 지금까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업소는 ‘노래방(90.9%)’, ‘PC방(85.8%)’, ‘전자오락실(60.0%)’, ‘만화방(29.9%)’ 순이었다. 모든 업소별 이용경험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멀티방/룸카페 이용’ 경험률도 24.4%나 차지하였다. ‘비디오/DVD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소 이용 경험률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5 청소년(중·고등학생)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만화방	전 자 오락실	PC방	노래방	비디오/ DVD방	성인용 주 점	성인용 무도장	멀티방/ 룸카페
2010	32.1	51.6	83.3	84.7	13.5	14.4	1.9	-
2011	29.2	47.4	83.8	84.2	11.6	12.0	1.6	-
2012	29.9	60.0	85.8	90.9	12.3	13.8	1.9	24.4
중 학 생	24.4	53.8	81.5	89.1	12.5	8.9	1.0	16.5
고등학생	35.2	65.9	89.8	92.7	12.1	18.6	2.9	32.1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통계, p. 36.

\* 원자료: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각년도.

### ③ 아동·청소년 도서발행 비율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서는 지적 발달은 물론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매체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도서의 발행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김영지 외, 2013).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도서를 기준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집계하는 출판 통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아동·청소년도서는 전체 발행 도서 중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오고 있다. 2013년에 아동·청소년도서의 신간 발행 종수 점유율은 17.2%이며, 신간 발행 부수는 28.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3).

표 IV-2-46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구분	신간 발행 종수(종)					신간 발행 부수(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유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유율(%)
총계	40,291	44,036	39,767	43,146	100.0	106,309,626	109,550,227	86,906,643	86,513,472	100.0
아동	7,352	9,546	7,495	7,424	17.2	26,199,626	37,705,148	26,537,234	24,862,658	28.7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2011, 2012, 2013), 「출판통계」 재구성, p. 1.

지난 4년간 아동·청소년 도서의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전년에 비해서 신간발행 종수와 신간 발행 부수가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신간발행 종수와 신간 발행 부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정보제공 정도

### ①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9.2%(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9.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성별은 남자(22.7%)가 여자(15.4%)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가 2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23.8%), 중학교(20.4%), 초등학교(11.8%) 순이었다.

표 IV-2-47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7.6	11.6	54.0	26.8	100.0(10,277)	-
성별	남자	9.8	12.9	51.5	25.8	100.0(5,337)	107.970***
	여자	5.1	10.3	56.7	27.9	100.0(4,939)	
학교 유형	초등학교	5.5	6.3	42.2	46.0	100.0(2,936)	850.592***
	중학교	8.7	11.7	57.3	22.3	100.0(3,561)	
	일반/특목/자율고	7.9	15.9	59.9	16.4	100.0(3,115)	
	특성화고	8.9	15.0	60.8	15.3	100.0(664)	

\*\*\* p<.001

### ②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인권 자료, 권리 침해시 상담 구제받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75.8%로

나타났으며, 학교 유형에서는 특성화고가 84.9%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로 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졌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이 중소도시와 대도시보다 아니라는 비율이 높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중 82.9%가 ‘아니다’로 응답했으며, 학교유형으로는 특성화고가 88.9%로 가장 높았으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아니다’의 비율이 높았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교유형은 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고(84.4%)에서 ‘아니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74.6%), 중소도시(72.8%), 대도시(70.8%) 순으로 ‘아니다’의 비율이 높았다.

**표 IV-2-48**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 청소년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시 상담기관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chi^2$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있다	학교 유형	전체	75.8	24.2	100.0(10,430)
		초등학교	64.2	35.8	100.0(2,966)
		중학교	77.5	22.5	100.0(3,634)
		일반/특목/자율고	82.7	17.3	100.0(3,152)
		특성화고	84.9	15.1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73.9	26.1	100.0(4,418)
		중소도시	76.4	23.6	100.0(4,706)
		읍면지역	80.0	20.0	100.0(1,306)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학교 유형	전체	82.9	17.1	100.0(10,424)
		초등학교	76.9	23.1	100.0(2,964)
		중학교	83.8	16.2	100.0(3,632)
		일반/특목/자율고	86.3	13.7	100.0(3,150)
		특성화고	88.9	11.1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81.0	19.0	100.0(4,416)
		중소도시	84.0	16.0	100.0(4,702)
		읍면지역	85.7	14.3	100.0(1,306)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성별	전체	72.2	27.8	100.0(10,422)
		남자	73.8	26.2	100.0(5,432)
		여자	70.4	29.6	100.0(4,990)
	학교 유형	초등학교	58.7	41.3	100.0(2,963)
		중학교	78.2	21.8	100.0(3,632)
		일반/특목/자율고	75.3	24.7	100.0(3,150)
		특성화고	84.4	15.6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70.8	29.2	100.0(4,415)
		중소도시	72.8	27.2	100.0(4,702)
		읍면지역	74.6	25.4	100.0(1,306)

\* p<.05 \*\* p<.01 \*\*\* p<.001

## 6)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1) 체벌 경험률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을 당한 경험에 대해 성별, 학교유형, 지역규모,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25.7%는 ‘일 년에 한번 이상’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 달에 한번 이상’은 66%였다. 성별로는 남자(27.4%)가 여자(23.8%)보다 ‘일년에 한번 이상’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유형은 중학교가 3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29.8%), 일반/특목/자율고(17.7%), 특성화고(17.1%)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일회 이상’은 초등학교(27%)가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는 ‘일 년에 일회 이상’이 대도시(26.8%), 중소도시(25.7%), 읍면지역(21.8%) 순이었으며, 가족유형은 조손가정이 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25.8%), 한부모가정(24%), 기타(18.5%)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상’(27.2%), ‘중’(25.2%), ‘하’(25%) 순이었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당한 경험에 대해서도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지역규모,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경험은 전체 중 23.7%가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자(31.9%)가 여자(14.8%)보다,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29.6%), 중학교(29.1%), 일반/특목/자율고(25.8%), 초등학교(13.5%)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도 특성화고가 7.4%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5.6%, 일반/특목/자율고 3.9%, 초등학교 2.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27%), 대도시(24.3%), 중소도시(22.2%) 순으로 일년에 한번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유형은 조손가정이 36.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33.8%), 한부모가정(24.8%), 양부모가정(23.5%) 순이었다. 학업성적(하 27.9%, 중 22.5%, 상 21.4%)과 경제적 수준(하 27.1%, 중 22.9%, 상 23%)은 낮은 수준일수록 ‘일년에 한번 이상’ 신체적 벌을 당한 경험이 높았다.

표 IV-2-49 체벌 경험 여부 : 부모, 학교 교사로부터의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부모님(보호 자)로부터 신체적 벌	전체	74.3	19.1	5.0	1.1	0.5	100.0(10,456)	-
	성별	남자	72.6	20.0	5.5	1.2	100.0(5,459)	23.369***
		여자	76.2	18.1	4.4	0.9	100.0(4,997)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2	20.4	6.7	1.6	100.0(2,966)	251.424***
		중학교	69.1	23.0	6.1	1.2	100.0(3,649)	
		일반/특목/자율고	82.3	14.6	2.4	0.5	100.0(3,161)	
		특성화고	82.9	13.1	3.4	0.4	100.0(680)	
	지역 규모	대도시	73.2	19.3	5.6	1.2	100.0(4,425)	23.365**
		중소도시	74.3	19.7	4.5	1.1	100.0(4,716)	
		읍면지역	78.2	16.2	4.7	0.5	100.0(1,31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4.2	19.2	5.0	1.1	100.0(9,751)	-
		한부모가정	76.0	17.3	5.2	1.2	100.0(560)	
		조손가정	65.0	25.6	5.0	0.0	100.0(41)	
		기타	81.5	14.9	1.9	0.0	100.0(103)	
	학업 성적	상	72.8	19.9	5.4	1.2	100.0(3,226)	22.985**
		중	74.8	19.6	4.4	0.7	100.0(4,409)	
		하	75.0	17.6	5.6	1.4	100.0(2,742)	
학교선생님 으로부터 신체적 벌	전체	76.3	11.7	7.6	2.9	1.5	100.0(10,445)	-
	성별	남자	68.1	14.3	11.2	4.2	100.0(5,451)	465.481***
		여자	85.2	8.9	3.7	1.5	100.0(4,9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86.5	6.7	4.3	1.8	100.0(2,965)	272.833***
		중학교	70.9	14.4	9.0	3.4	100.0(3,644)	
		일반/특목/자율고	74.2	13.2	8.6	2.8	100.0(3,158)	
		특성화고	70.4	12.5	9.7	5.1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75.7	12.0	7.7	3.1	100.0(4,421)	22.249**
		중소도시	77.8	10.7	7.4	2.8	100.0(4,711)	
		읍면지역	73.0	14.4	8.0	2.6	100.0(1,31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6.5	11.8	7.5	2.9	100.0(9,742)	33.750**
		한부모가정	75.2	10.6	8.5	3.0	100.0(559)	
		조손가정	63.3	22.1	7.6	2.4	100.0(41)	
		기타	66.2	13.1	10.1	5.2	100.0(104)	
	학업 성적	상	78.6	10.6	6.9	2.8	100.0(3,224)	65.509***
		중	77.5	12.0	6.9	2.7	100.0(4,404)	
		하	72.1	12.7	9.5	3.2	100.0(2,738)	
	경제적 수준	상	77.0	11.4	7.4	2.9	100.0(4,692)	24.017**
		중	77.1	11.9	7.3	2.4	100.0(4,039)	
		하	72.9	12.2	8.8	3.9	100.0(1,644)	

\* p&lt;.05 \*\* p&lt;.01 \*\*\* p&lt;.001

## (2) 정서적 학대 경험을

학대 경험 중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어본 경험에 대해 학교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전체 응답자 중 30.4%는 일 년에 한번 이상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도 5.7%가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31.2%)가 여자(29.6%)가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유형은 중학교가 3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32.9%), 특성화고(32.1%), 초등학교(21.3%) 순이었다.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성적 '하' 34.9%로 가장 높았고, '중', '상'은 28.8%였다.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하 40.9%, 중 29.4%, 상 27.6%).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도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22%가 '일 년에 한번 이상'으로 응답했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도 4.8%였다. 성별로는 남자(26.2%)가 여자(17.5%)보다 '1년에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29.3%), 일반/특목/자율고(28.5%), 중학교(26.6%), 초등학교(7.9%)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25.2%), 대도시(22.3%), 중소도시(20.9%) 순이었으며, 가족유형은 기타가 30.6%로 가장 높았고, 조손가정(26.5%), 양부모가정(22%), 한부모가정(20.8%) 순이었다. 학업성적(하 27.6%, 중 20.5%, 상 19.3%)과 경제적 수준(하 28.1%, 중 21.7%, 상 20%)은 낮을수록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2-50 정서적 학대 경험 여부 : 부모, 학교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부모님 (보호자)로 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전체	69.6	16.3	8.3	3.4	2.3	100.0(10,451)	—
	성별	남자	68.8	15.8	9.0	3.6	100.0(5,453)	19.789**
		여자	70.4	16.9	7.7	3.3	100.0(4,998)	
	학교 유형	초등학교	78.7	11.4	5.5	2.3	100.0(2,960)	202.237***
		중학교	64.6	17.9	10.1	4.7	100.0(3,652)	
		일반/특목/자율고	67.1	19.4	8.5	3.1	100.0(3,158)	
	특성화고	특성화고	67.9	15.8	10.6	2.9	100.0(681)	48.299***
		상	71.2	15.2	8.0	3.2	100.0(3,224)	
		중	71.2	16.3	7.7	2.9	100.0(4,407)	
	경제적 수준	하	65.1	17.7	9.6	4.6	100.0(2,742)	127.773***
		상	72.4	15.3	7.7	2.7	100.0(4,691)	
		중	70.6	16.2	7.6	3.4	100.0(4,046)	
학교선생님 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전체	78.0	11.2	6.1	2.7	2.1	100.0(10,438)	—
	성별	남자	73.8	11.4	8.0	3.9	100.0(5,448)	189.780***
		여자	82.5	11.0	4.1	1.4	100.0(4,989)	
	학교 유형	초등학교	92.1	4.8	2.0	0.6	100.0(2,957)	495.472***
		중학교	73.4	12.7	7.7	3.4	100.0(3,646)	
		일반/특목/자율고	71.5	14.9	7.8	3.3	100.0(3,158)	
	특성화고	특성화고	70.7	14.5	7.4	4.5	100.0(677)	23.393**
		대도시	77.7	11.3	6.3	2.8	100.0(4,416)	
		중소도시	79.1	11.0	5.5	2.6	100.0(4,709)	
	읍면지역	읍면지역	74.8	11.8	7.6	2.4	100.0(1,313)	35.448***
		양부모가정	78.0	11.3	6.0	2.7	100.0(9,734)	
		한부모가정	79.2	8.0	8.1	1.6	100.0(558)	
	가족 유형	조손가정	73.5	9.6	2.0	9.0	100.0(41)	83.560***
		기타	69.4	16.0	6.2	3.0	100.0(104)	
	학업 성적	상	80.7	10.5	4.8	2.0	100.0(3,223)	
		중	79.5	10.7	5.6	2.6	100.0(4,400)	54.668***
		하	72.4	12.8	8.5	3.5	100.0(2,736)	
	경제적 수준	상	80.0	10.4	5.1	2.6	100.0(4,685)	54.668***
		중	78.3	11.1	6.1	2.4	100.0(4,041)	
		하	71.9	13.6	8.7	3.4	100.0(1,64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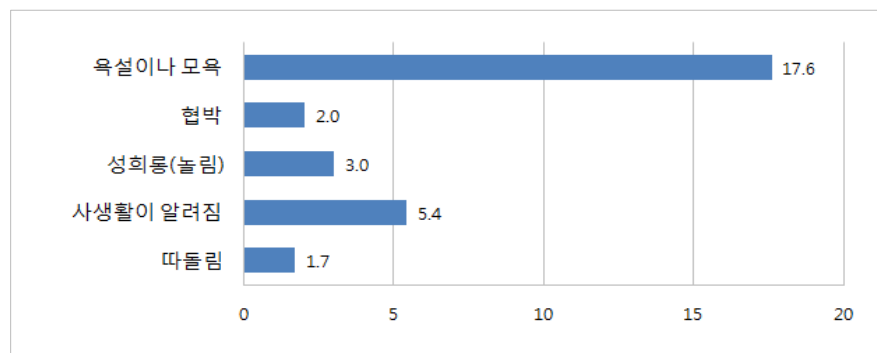
### (3) 청소년 폭력 경험률

#### ① 폭력피해 경험

학교에서 당한 폭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14.7%였으며 ‘1주일에 한번 이상’도 2.7%였다. 폭행이나 구타를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5.8%였으며 ‘1주일에 한번 이상’은 1.1%였다.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일 년에 한번 이상’이 5.1%,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0.9%였으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는 ‘일 년에 한번 이상’이 2.3%, ‘1주일에 한번 이상’은 0.3%였고, 협박을 당하는 경우는 ‘일 년에 한번 이상’은 2.5%,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0.5%,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은 ‘일 년에 한번 이상’이 2.7%, ‘1주일에 한번 이상’은 0.8%였다. 강제적인 심부름 경험은 ‘일 년에 한번 이상’이 2.1%, ‘1주일에 한번 이상’은 0.4%였다.

표 IV-2-51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내 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85.3	9.1	2.9	1.4	1.3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94.2	3.6	1.1	0.5	0.6
3) 따돌림을 당함	94.9	3.4	0.9	0.5	0.4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97.7	1.5	0.4	0.2	0.1
5) 협박을 당함	97.5	1.5	0.5	0.3	0.2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97.3	1.4	0.5	0.4	0.4
7) 강제적인 심부름	97.9	1.4	0.4	0.2	0.2



【그림 IV-2-II】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단위(%)

선후배, 친구들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에 대해 성별, 학교유형,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일 년에 한번 이상’ 당한 경험이 남자(14.7%)가 여자(11%)보다 높았으며, 초등학교가 1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15%, 특성화고 12.7%, 일반/특목/자율고 12.5% 순으로 낮은 교급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은 ‘하’(16.4%), ‘상’(14.5%), ‘중’(13.7%) 순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하’(17.2%), ‘상’(14.7%), ‘중’(13.6%) 순으로 피해 경험이 높았다. 폭행이나 구타의 경우 남자(8.7%)가 여자(2.7%)보다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이 3배 정도 높았으며,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13.7%), 특성화고(3.5%), 중학교(2.8%), 일반/특목/자율고(2.4%) 순으로 낮은 교급일수록 경험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수준은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이 ‘상’(6.3%), ‘하’(5.8%), ‘중’(5.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52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 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심한 욕설이나 모욕	전체	85.3	9.1	2.9	1.4	1.3	100.0(10,465)	-
	성별	남자	81.9	10.6	3.8	1.8	100.0(5,462)	116.644***
		여자	89.0	7.5	1.8	0.9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82.8	11.2	3.4	1.3	100.0(2,967)	47.580***
		중학교	85.0	9.3	3.2	1.3	100.0(3,656)	
		일반/특목/자율고	87.5	7.4	2.1	1.6	100.0(3,162)	
	학업 성적	특성화고	87.3	7.3	2.5	1.1	100.0(680)	24.277**
		상	85.5	9.3	2.6	1.2	100.0(3,227)	
		중	86.3	8.9	2.6	1.2	100.0(4,414)	
	경제적 수준	하	83.6	9.1	3.6	1.9	100.0(2,745)	30.903***
		상	85.3	9.6	2.6	1.3	100.0(4,696)	
		중	86.4	8.3	2.6	1.6	100.0(4,049)	
	하	82.8	9.6	4.3	1.2	2.1	100.0(1,650)	
폭행이나 구타	전체	94.2	3.6	1.1	0.5	0.6	100.0(10,467)	-
	성별	남자	91.3	5.4	1.7	0.8	100.0(5,464)	177.837***
		여자	97.3	1.6	0.5	0.3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86.3	8.7	2.6	1.2	100.0(2,969)	484.945***
		중학교	97.2	1.7	0.6	0.3	100.0(3,656)	
		일반/특목/자율고	97.6	1.3	0.6	0.2	100.0(3,161)	
	경제적 수준	특성화고	96.5	1.7	0.6	0.2	100.0(681)	15.630*
		상	93.7	4.0	1.3	0.4	100.0(4,697)	
		중	94.7	3.3	0.9	0.5	100.0(4,051)	
	하	94.2	3.1	1.3	1.0	0.5	100.0(1,650)	

\* p<.05 \*\* p<.01 \*\*\* p<.001

표 IV-2-53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 따돌림, 돈이나 물건 빼앗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따돌림	전체	94.9	3.4	0.9	0.5	0.4	100.0(10,466)
	성별	남자	95.4	2.6	1.0	0.6	100.0(5,463)
		여자	94.3	4.3	0.7	0.3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1.3	5.5	1.5	0.9	100.0(2,969)
		중학교	94.9	3.9	0.6	0.4	100.0(3,656)
		일반/특목/자율고	97.7	1.4	0.7	0.2	100.0(3,160)
		특성화고	97.1	1.8	0.6	0.0	100.0(6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9	3.4	0.8	0.5	100.0(9,759)
		한부모가정	94.1	3.1	2.3	0.2	100.0(562)
		조손가정	89.7	8.6	1.7	0.0	100.0(41)
		기타	94.8	2.6	1.0	0.9	100.0(104)
	경제적 수준	상	94.8	3.4	0.8	0.6	100.0(4,697)
		중	95.5	3.2	0.7	0.3	100.0(4,050)
		하	93.6	4.2	1.4	0.5	100.0(1,650)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전체	97.7	1.5	0.4	0.2	0.1	100.0(10,467)
	성별	남자	97.0	1.9	0.6	0.3	100.0(5,464)
		여자	98.4	1.2	0.3	0.2	100.0(5,004)
	지역 규모	대도시	97.8	1.5	0.3	0.3	100.0(4,431)
		중소도시	97.6	1.6	0.5	0.2	100.0(4,719)
		읍면지역	97.3	1.7	0.9	0.1	100.0(1,31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7	1.5	0.4	0.2	100.0(9,760)
		한부모가정	97.1	2.1	0.7	0.2	100.0(562)
		조손가정	98.3	0.0	0.0	1.7	100.0(41)
		기타	93.1	3.5	1.8	1.0	100.0(104)

일 년에 한번 이상 따돌림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여자(5.7%)가 남자(4.6%)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1%, 특성화고 2.9%, 일반/특목/자율고 2.3%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따돌림 경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가족 유형은 조손가정이 10.3%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5.9%, 기타 5.2%, 양부모가정 5.1%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하' 6.4%, '상' 5.2%, '중' 6.4% 순이었다.

일 년에 한번 이상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3%)가 여자(1.6%)보다 높았으며, 지역규모는 읍면지역(2.7%), 중소도시(2.4%), 대도시(2.2%)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기타(6.9%), 한부모가정(2.9%), 양부모가정(2.3%), 조손가정(1.7%) 순이었다.

선후배와 친구로부터 협박에 대해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자(3.3%)가 여자(1.

5%)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학교 유형으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2.3%, 특성화고 2.5%, 일반/특목/자율고는 1.4%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 경험이 높았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경험률은 특성화고가 1%, 초등학교가 0.9%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중학교와 일반/특목/자율고는 각각 0.3%, 0.2%를 차지했다. 가족유형은 조손가정이 4%로 가장 높았고, 양부모가정과 기타가 각각 2.5%, 한부모가정이 2.4%였다.

성희롱이나 추행에 대한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률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3.8%)가 여자(1.6%)보다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의 심각한 성희롱이나 추행 경험도 남자(1.3%)가 여자(0.2%)보다 높았다. 학교유형은 특성화고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3.1%), 중학교(2.9%), 초등학교(1.9%) 순이어서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학업성적은 '하'(3.3%), '상'(2.9%), '중'(2.2%) 순이었다.

**표 IV-2-54**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 협박,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협박	전체	97.5	1.5	0.5	0.3	0.2	100.0(10,466)	—
	성별	남자	96.7	2.0	0.6	0.4	100.0(5,464)	35.895***
		여자	98.5	1.0	0.4	0.1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96.1	2.2	0.8	0.5	100.0(2,968)	48.272***
		중학교	97.7	1.5	0.4	0.2	100.0(3,656)	
		일반/특목/자율고	98.6	0.8	0.3	0.1	100.0(3,161)	
		특성화고	97.5	1.2	0.4	0.4	100.0(6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5	1.5	0.4	0.3	100.0(9,759)	—
		한부모가정	97.6	1.1	1.0	0.3	100.0(562)	
		조손가정	96.0	2.3	0.0	0.0	100.0(41)	
		기타	97.5	0.9	0.0	0.0	100.0(104)	
성적인 희롱(농림)이나 추행	전체	97.3	1.4	0.5	0.4	0.4	100.0(10,465)	—
	성별	남자	96.2	1.6	0.8	0.7	100.0(5,462)	62.780***
		여자	98.4	1.2	0.2	0.1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1	1.1	0.2	0.4	100.0(2,967)	32.249**
		중학교	97.1	1.6	0.8	0.2	100.0(3,656)	
		일반/특목/자율고	96.9	1.5	0.5	0.7	100.0(3,161)	
		특성화고	96.5	1.6	0.8	0.3	100.0(681)	
	학업 성적	상	97.1	1.7	0.3	0.5	100.0(3,229)	26.311**
		중	97.8	1.2	0.4	0.3	100.0(4,413)	
		하	96.7	1.3	1.0	0.5	100.0(2,746)	

\* p<.05 \*\* p<.01 \*\*\* p<.001

강제적인 심부름에 대한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자(3%)가 여자(1.1%)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3.5%), 중학교(2.5%), 초등학교(1.8%), 일반/특목/자율고(1.6%)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읍면지역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2.1%, 대도시 1.8% 순이었다. 가족유형으로는 기타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2.5%), 양부모가정(2%), 조손가정(1.7%) 순이었다.

표 IV-2-5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여부 : 강제적인 심부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전체		97.9	1.4	0.4	0.2	0.2	100.0(10,465)
성별	남자	97.0	1.8	0.7	0.2	0.3	100.0(5,462)
	여자	98.9	0.9	0.1	0.1	0.0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2	1.2	0.2	0.2	0.2	100.0(2,967)
	중학교	97.5	1.5	0.6	0.2	0.2	100.0(3,656)
	일반/특목/자율고	98.4	1.1	0.4	0.1	0.0	100.0(3,161)
	특성화고	96.5	2.4	0.5	0.1	0.5	100.0(681)
지역 규모	대도시	98.2	1.1	0.4	0.1	0.2	100.0(4,429)
	중소도시	97.9	1.5	0.2	0.2	0.1	100.0(4,718)
	읍면지역	96.8	2.0	1.1	0.0	0.1	100.0(1,31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0	1.4	0.4	0.2	0.2	100.0(9,759)
	한부모가정	97.5	1.1	0.9	0.2	0.3	100.0(561)
	조손가정	98.3	0.0	1.7	0.0	0.0	100.0(41)
	기타	93.8	4.5	1.0	0.0	0.7	100.0(104)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김영지 외, 2013),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놀림)’,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따돌림)’,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소문)’,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협박)’,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갈취)’,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폭행)’,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성희롱)’의 7개 문항에 경험

유무로 코딩하여 분석해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전체 아동의 32.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차상위가구 아동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본 실태조사 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그 피해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56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계 (명)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체		67.8	32.2	78.5	21.5	100.0(5,487,900)
아동 성별	남자	66.6	33.4	75.4	24.6	100.0(2,885,431)
	여자	69.1	30.9	81.9	18.1	100.0(2,602,469)
연령	9-11세	61.4	38.6	77.8	22.2	100.0(1,546,503)
	12-17세	70.3	29.7	78.7	21.3	100.0(3,941,397)
소득수준1	빈곤	67.6	32.4	77.3	22.7	100.0(265,634)
	일반	67.8	32.2	78.5	21.5	100.0(5,222,267)
소득수준2	기초수급	69.1	30.9	75.0	25.0	100.0(193,077)
	차상위	63.5	36.5	83.3	16.7	100.0(72,556)
	일반	67.8	32.2	78.5	21.5	100.0(5,222,267)
거주지역	대도시	64.6	35.4	79.4	20.6	100.0(2,391,807)
	중소도시	69.8	30.2	77.0	23.0	100.0(2,759,123)
	농어촌	74.9	25.1	83.9	16.1	100.0(336,971)
가족유형	양부모	68.9	31.1	78.6	21.4	100.0(4,675,385)
	한부모·조손	60.9	39.1	76.5	23.5	100.0(759,865)

\* 출처: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 (2013).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pp. 361-362.

## ②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2014년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 협박, 성희롱(놀림),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 유출, 따돌림 등의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년에 한번 이상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한 비율은 17.7%로 나타났으며, 남자(21.6%)가 여자(13.4%)보다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도 남자(6.6%)가 여자(1.2%)보다 훨씬 높았다. 학교 유형에서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률은 중학교가 2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 17.8%, 일반/특목/자율고 16.3%, 초등학교 15.8% 순이었다. 가족유형은 기타가 2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20.2%), 양부모가정(17.5%), 조손가정(9.4%)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하'(20.1%), '중'(16.9%), '상'(16.5%)

순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하’(23.3%), ‘상’(16.9%), ‘중’(16.1%) 순이었다.

협박은 조사대상자의 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1년에 한번 이상’ 인터넷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률을 살펴보면, 남자(2.9%)가 여자(1%)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으로는 중학교가 2.3%로 가장 높았고, 일반/특목/자율고는 2.2%, 특성화고 2%, 초등학교 1.4% 순이었다. 가족유형은 기타가 5.7%로 가장 높았고 조손가정 4%, 한부모가정 2.4%, 양부모가정 1.9%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하’ 2.4%, ‘상’ 2%, ‘중’ 1.7% 순이었으며, 경제적 수준은 ‘하’ 2.9%, ‘상’ 1.9%, ‘중’ 1.7% 순이었다. ‘1년에 한번 이상’ 성희롱(놀림)을 경험한 비율은 2.9%였다. 남자(3.8%)가 여자(2%)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은 특성화고가 3.3%로 가장 높았고, 일반/특목/자율고 3.2%, 중학교 3.1%, 초등학교 2.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조손가정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3.7%, 기타 3.6%, 양부모가정 2.9%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상’, ‘중’ 2.6%였으며 ‘하’ 4.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지는 경우’를 ‘1년에 한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5.5%로, 남자(5.8%)가 여자(5.2%)보다 높았으며, 학교 유형으로는 특성화고가 6.6%로 가장 높았고 일반/특목/자율고 6.5%. 중학교 4.9%, 초등학교 4.8%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하가 7.7%, 상 5.9%, 중이 4.2%였다. 따돌림을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1.7%였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1.7%로 동일했으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 경험한 비율은 남자(0.5%)가 여자(0.2%)보다 높았다. 가족유형은 조손가정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3.6%, 기타 3.5%. 양부모가정 1.6%순으로 양부모가정 이외의 가족유형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표 IV-2-57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 : 욕설이나 모욕, 협박, 성희롱, 사생활, 따돌림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욕설이나 모욕	전체	82.3	9.9	3.8	2.1	1.8	100.0(10,461)	-
	성별							
	남자	78.4	10.1	5.0	3.4	3.2	100.0(5,460)	252.616***
	여자	86.6	9.7	2.5	0.8	0.4	100.0(5,001)	
	학교 유형							56.627***
	초등학교	84.2	9.7	2.9	1.9	1.3	100.0(2,969)	
	중학교	79.6	11.3	4.9	2.0	2.2	100.0(3,649)	
	일반/특목/자율고	83.7	8.5	3.3	2.7	1.8	100.0(3,163)	
	특성화고	82.2	9.6	4.3	1.3	2.6	100.0(679)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2.5	9.9	3.7	2.1	1.8	100.0(9,757)	-
		한부모가정	79.8	9.8	4.9	2.9	2.6	100.0(559)	
		조손가정	90.6	2.6	4.6	0.0	2.2	100.0(41)	
		기타	74.2	10.0	12.0	0.7	3.2	100.0(104)	
	학업 성적	상	83.5	9.3	3.6	1.9	1.7	100.0(3,227)	24.355**
		중	83.1	9.8	3.4	2.2	1.5	100.0(4,409)	
		하	79.9	10.6	4.6	2.4	2.5	100.0(2,746)	
	경제적 수준	상	83.1	9.9	3.5	2.2	1.4	100.0(4,692)	56.637***
		중	83.9	9.0	3.3	1.8	2.0	100.0(4,045)	
		하	76.7	11.9	5.8	3.0	2.6	100.0(1,653)	
협박	전체		98.0	1.1	0.4	0.2	0.3	100.0(10,460)	-
	성별	남자	97.1	1.4	0.5	0.4	0.6	100.0(5,460)	55.959***
		여자	99.0	0.7	0.2	0.1	0.0	100.0(5,0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6	0.9	0.4	0.1	0.1	100.0(2,968)	29.855**
		중학교	97.7	1.4	0.4	0.2	0.2	100.0(3,649)	
		일반/특목/자율고	97.8	0.9	0.3	0.4	0.6	100.0(3,163)	
		특성화고	98.0	1.1	0.4	0.2	0.3	100.0(6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1	1.0	0.4	0.2	0.3	100.0(9,756)	-
		한부모가정	97.6	1.7	0.4	0.2	0.1	100.0(559)	
		조손가정	96.0	4.0	0.0	0.0	0.0	100.0(41)	
		기타	94.3	3.0	0.7	0.0	2.0	100.0(104)	
	학업 성적	상	98.0	0.9	0.3	0.4	0.4	100.0(3,227)	18.035*
		중	98.3	1.0	0.4	0.1	0.1	100.0(4,409)	
		하	97.6	1.4	0.3	0.2	0.5	100.0(2,746)	
	경제적 수준	상	98.1	1.1	0.3	0.2	0.3	100.0(4,692)	18.006*
		중	98.3	0.8	0.4	0.2	0.3	100.0(4,045)	
		하	97.1	1.6	0.5	0.6	0.2	100.0(1,653)	
성희롱 (놀림)	전체		97.1	1.5	0.7	0.4	0.4	100.0(10,460)	-
	성별	남자	96.2	1.6	0.9	0.6	0.7	100.0(5,460)	-
		여자	98.0	1.4	0.4	0.2	0.0	100.0(5,0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7	1.5	0.4	0.2	0.2	100.0(2,968)	23.884*
		중학교	96.9	1.8	0.7	0.4	0.3	100.0(3,649)	
		일반/특목/자율고	96.8	1.2	0.9	0.5	0.6	100.0(3,163)	
		특성화고	96.7	1.2	1.2	0.4	0.5	100.0(679)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1	1.5	0.6	0.3	0.4	100.0(9,756)	-
		한부모가정	96.3	1.8	0.9	0.9	0.1	100.0(559)	
		조손가정	93.4	2.6	4.0	0.0	0.0	100.0(41)	
		기타	96.4	0.0	2.6	0.0	1.0	100.0(104)	
	경제적 수준	상	97.4	1.4	0.5	0.3	0.4	100.0(4,692)	24.539**
		중	97.4	1.4	0.7	0.3	0.3	100.0(4,045)	
		하	95.4	2.1	1.1	0.8	0.7	100.0(1,653)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짐	전체		94.5	4.0	1.0	0.2	0.2	100.0(10,459)	-
	성별	남자	94.2	4.1	1.1	0.3	0.3	100.0(5,459)	10.476*
		여자	94.8	4.0	0.9	0.1	0.1	100.0(5,000)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2	3.6	0.7	0.2	0.3	100.0(2,968)	31.623**
		중학교	95.1	3.4	1.2	0.2	0.1	100.0(3,649)	
		일반/특목/자율고	93.5	5.0	1.0	0.2	0.4	100.0(3,163)	
		특성화고	93.4	4.9	1.4	0.3	0.0	100.0(679)	
	경제적 수준	상	94.1	4.3	1.1	0.2	0.3	100.0(4,691)	41.385***
		중	95.8	3.2	0.7	0.1	0.2	100.0(4,044)	
		하	92.3	5.5	1.5	0.6	0.1	100.0(1,653)	
따돌림	전체		98.3	1.1	0.3	0.1	0.2	100.0(10,456)	-
	성별	남자	98.3	1.0	0.3	0.1	0.4	100.0(5,457)	11.359*
		여자	98.3	1.2	0.4	0.1	0.1	100.0(5,00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4	1.0	0.3	0.0	0.2	100.0(9,753)	-
		한부모가정	96.4	2.0	0.9	0.4	0.3	100.0(559)	
		조손가정	93.8	2.3	2.2	1.7	0.0	100.0(41)	
		기타	96.5	0.9	0.7	0.0	1.9	100.0(104)	

\* p<.05 \*\* p<.01 \*\*\* p<.001

2011년, 2013년, 2014년의 3개년 동안 인터넷에서의 초·중·고등학생 전체의 피해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sup>173)</sup>,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피해는 2011년에 36.4%, 2013년에는 22.1%, 2014년 1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협박 피해 경험도 2011년에는 6.5%, 2013년에는 3.4%, 2014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성희롱 경험도 2011년에는 4.9%, 그리고 2013년에는 4.5%, 2014년 2.9%로 지속적으로

173) 통계자료집(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의 <표 III-62-1>, <표 III-63-1>, <표 III-64-1> 참조

감소하였으며,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유포 경험도 2011년 8.2%, 2013년 4.2%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5.5%로 증가하였다.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경험을 학교급별로 2011년, 2013년, 2014년의 3개년을 비교해보면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 28.8%, 2013년에는 17.2%, 2014년 15.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에 41.4%, 2013년 24.3%, 2014년 20.4%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에 40.2%, 2013년 24.1%, 2014년 17.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모두 다른 유형의 피해에 비해서 여전히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 5.0%, 2013년 2.4%, 2014년 1.4%로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에 7.3%, 2013년 3.1%, 2014년 2.3%로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에 7.1%, 2013년 4.6%, 2014년 2.1%로 감소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성희롱(놀림)을 당한 경험도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 5.0%, 2013년 2.8%, 2014년 2.3%로 감소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에 6.1%, 2013년 4.2%, 2014년 3.1%로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에 8.7%, 2013년 6.2%, 2014년 3.3%로 감소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 사생활 유포를 당한 경험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2011년 4.5%, 2013년에는 6.6%, 2014년 4.8%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2011년에 4.5%, 2013년에도 3.3%, 2014년 4.9%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함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 5.7%, 2013년에는 3.7%, 2014년 6.7%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7) 소결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차별·고민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 6개 하위영역의 30개 지표를 살펴보았다. 학교에서의 의견표명 및 표현의 자유는 아직 그 보장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나 교장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20.4%), '아니다'(31.4%),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아니다' 응답률이 33.4%, 학급회의 운영은 43.9%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 특히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에 관한 질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가 다른 학교급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38.5%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여 여전히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 반영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을 2012년, 2013년, 2014년의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혀 모름’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통틀어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으며 참여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012년 2%, 2013년과 2014년은 1.8%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전혀 모르거나 참여한 경험이 없는 비율은 2012년 98%, 2013년과 2014년이 98.2%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12년 2.3%, 2013년 2.4%, 2014년 일반/특목/자율고 2.3%와 특성화고 1.1%로 2014년은 약간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성화고의 경우 2014년 1.1%로 중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62.4%, ‘이름을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8.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7.2%,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떤 기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9.3%로 나타난 반면,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도 62.4%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해 본 경험의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2.0% → 1.8% → 1.6%), 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2.3% → 2.4% → 2.3%) 볼 수 있다.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수준에 대한 내용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전체의 41.3%에 해당되었으며, 참여에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 34.2%로 가장 높아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응답으로만 분석한 결과,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40.6%(그런 편이다 27.4%, 매우 그렇다 13.2%), ‘그렇지 않다’는 59.4%(그렇지 않은 편이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39.6%)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및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2013년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결사·집회 경험률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혀 없다’ 65.4%, ‘거의 없다’ 18.2%로 나타났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경험률은 ‘전혀 없다’ 73.6%,

‘거의 없다’ 19.2%로 나타나 이러한 비율이 2013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이 다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모검사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7.9%는 일 년에 한번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복장검사는 전체 응답자 중 53.3%가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소지품검사는 전체 응답자의 23.1%가 일 년에 한번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러한 검사 정도가 2013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30.2%의 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22.9%, 매우 그렇다 7.3%)라고 응답하였으며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28.1%의 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20.0%, 매우 그렇다 8.1%)라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75.8%로 나타났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중 82.9%가 ‘아니다’로 응답했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당한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25.7%는 일 년에 한번 이상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경험은 전체 중 23.7%가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30.4%는 일 년에 한번 이상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22%가 일 년에 한번 이상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 2013년, 2014년의 3개년 동안 인터넷에서의 초·중·고등학생 전체의 피해경험의 비교를 통해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피해는 2011년에 36.4%, 2013년에는 22.1%, 2014년 17.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협박 피해 경험도 2011년에는 6.5%, 2013년에는 3.4%, 2014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성희롱 경험도 2011년에는 4.9%, 그리고 2013년에는 4.5%, 2014년 2.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유포 경험도 2011년 8.2%, 2013년 4.2%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5.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자치권 활동 및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노력이 보다 요구되어진다.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비롯하여 학생자치활동 지원 정책 제도화,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의 노력이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뿐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나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관계자 대상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연차별, 직급별 인권교육 필수화, 학업을 중단하거나 교정시설, 자립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밖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 학대 내용을 포함한 부모 및 교사, 일반인 대상의 대국민 홍보 강화도 향후 발전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청소년이 의견을 진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각 지역의 철도, 버스 등 공공 교통시설을 통한 홍보 방안, 아동 청소년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임방, 학원 등에서의 홍보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sup>174)</sup>

####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1) 부모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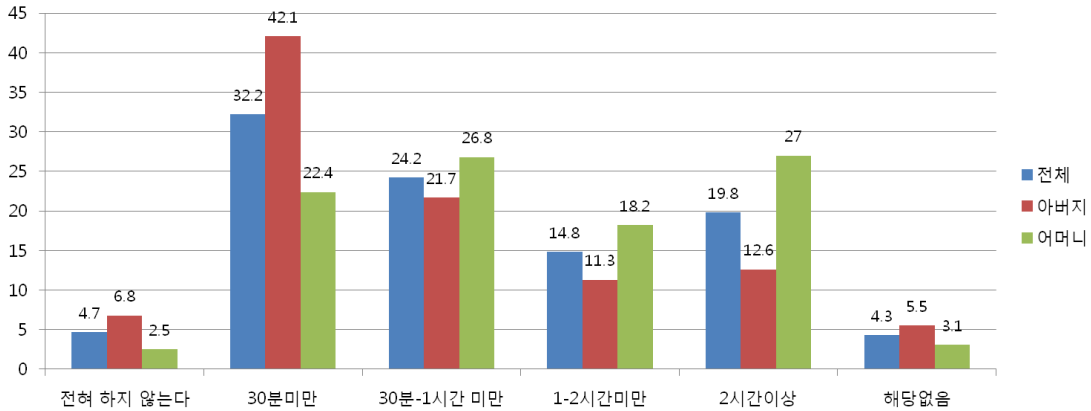
##### ① 부모와의 대화시간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그림 IV-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가족부(2012c)의 청소년대상(만 9세~24세) 조사결과에 따르면<sup>175)</sup>, 전체적으로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32.2%였고, 그 다음은 30분에서 1시간 미만으로 24.2%여서 청소년 응답자의 56.4%가 부모와의 1일 대화시간이 한 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74) 이 절은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175)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조사가 수행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서 올해 2014년 조사가 수행된다.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2014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012년에 발표된 조사결과를 재구성, 기술하였다.

(단위:%)



\* 출처: 김영지 외 (2013).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p. 215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함.

\* 원출처: 여성가족부 (2012c).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그림 IV-3-1】 부모와의 대화시간

또한, 대화시간은 부모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의 경우 30분 미만이 42.1%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21.7%로 전체 응답자의 63.8%가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한시간 미만이었으며, 한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23.9%에 불과했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18.2%,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27%여서 한시간 이상 어머니와 대화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5.2%로 나타나, 아버지와의 대화시간보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부모와의 관계의 질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더불어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3-1>, <표 IV-3-2>와 같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된 2012년의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83.5%(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로 대다수의 청소년이 부모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의 경우 다른 국가의 동일 대상의 청소년과도 비교하였는데,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은 각각 87.2%, 85.7%가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IV-3-1 부모님과 나는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국가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N)
한국	48.8	34.7	14.1	2.3	100.0(5,082)
중국	53.5	33.7	10.1	2.7	100.0(2,062)
일본	44.3	41.4	12.5	1.8	100.0(2,052)

\* 출처: 임희진, 김현철, 백혜정, 이계오(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124.

또한, 부모님과 나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은 92%가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85.4%, 고등학생이 약 76%정도여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표 IV-3-2 부모님과 나는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N)
교급	초등학교	67.9	24.1	6.8	100.0(1,202)
	중학교	50.	35.4	12.5	100.0(1,920)
	일반계고	36.3	40.3	20.6	100.0(1,509)
	특성화고	34.3	41.8	19.0	100.0(452)

\* 출처: 임희진 외(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125.

이외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청소년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임희진, 김현신, 강현철, 2012), 응답 청소년 중 83.1%가 긍정적인 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보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90%가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80%내외로 유사한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표 IV-3-3 부모님의 자녀 이해 정도

(단위: %(명))

구분		전체 (N)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chi^2$
계		100.0(9,058)	3.0(275)	13.9(1,256)	48.4(4,381)	34.7(3,147)	
성	남자	100.0(4,755)	3.6	12.7	47.4	36.3	27.363***
	여자	100.0(4,303)	2.5	15.1	49.4	33.0	
교급	초등학교	100.0(2,784)	2.0	8.0	39.7	50.3	499.036***
	중학교	100.0(3,108)	4.5	15.8	49.8	29.9	
	일반계고	100.0(2,433)	2.2	17.2	55.2	25.4	
	특성화고	100.0(732)	3.4	16.9	52.5	27.2	

\*\*\*p&lt;.001

\* 주: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임희진, 김현신, 강현철, 2012)의 조사데이터<sup>176)</sup> 분석결과

## (2)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 ①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장 최근 보고에 따르면(2013),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13,076건이었고, 이 중 83%에 달하는 10,857건이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이며, 중복신고는 43건(0.3%), 나머지 16.6%는 일반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대유형에 따른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 미분류 기준), 정서학대가 3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체학대 30.9%, 방임이 27.8%, 성학대가 3.7%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발생빈도를 이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 293건의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도 전년도에 비해 약간씩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성학대는 감소하였으며, 방임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176) 데이터 출처: <http://archive.nypi.re.kr/sub.asp?mcode=B050010&BID=B80>, 2014. 9. 2

표 IV-3-4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단위: 건(%))

유형	2013	2012
신체학대	3,160(30.9)	2,858(28.8)
정서학대	3,843(37.6)	3,785(38.0)
성학대	380(3.7)	446(4.5)
방임	2,848(27.8)	2,849(28.7)
계	10,231(100.0)	9,938(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89 관련 내용 재구성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95 관련 내용 재구성

학대유형에 따라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표 IV-3-5>), 전반적으로 남자아동보다 여자아동의 학대사례가 높긴 하지만, 특히 성학대에서 여자아동의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령별로 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모두 13~15세의 아동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방임의 경우는 10~12세의 아동에게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의 방임과 학대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세미만 아동의 경우 모든 학대유형별로 빈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예외적으로 방임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어린 아동의 경우에 출산 후 병원이나 시설에 유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표 IV-3-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 성별, 연령별 구분

(단위: 건,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구분	성	1,269(40.2)	1,443(37.5)	32(8.4)	1,211(42.5)	3,955(38.7)
	여	1,891(59.8)	2,400(62.5)	348(91.6)	1,637(57.5)	6,276(61.3)
연령	1세미만	38(1.2)	55(1.4)	0(0.0)	349(12.3)	442(4.3)
	1~3세	261(8.3)	371(9.7)	3(0.8)	378(13.3)	1,013(9.9)
	4~6세	426(13.5)	550(14.3)	22(5.8)	468(16.4)	1,466(14.3)
	7~9세	558(17.7)	657(17.1)	43(11.3)	529(18.6)	1,787(17.5)
	10~12세	706(22.3)	834(21.7)	98(25.8)	560(19.7)	2,198(21.5)
	13~15세	867(27.4)	982(25.6)	143(37.6)	422(14.8)	2,414(23.6)
	16~17세	304(9.6)	394(10.3)	71(18.7)	142(5.0)	911(8.9)
계		3,160(100.0)	3,843(100.0)	380(100.0)	2,848(100.0)	10,231(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90~91 표 재구성.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2013년에는 전체 발생건수 6,796건 중 2,629건으로 38.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3일에 한번이라는 응답도 15%가 넘었는데, 비록 2011년과 2012년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만성적인 학대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발달에 미치는 만성적인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표 IV-3-6 아동학대 발생빈도

(단위 : 건(%))

구분	거의 매일	2-3일에 한 번	일주일 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1개월 에 한 번	2-3개월 에 한 번	6개월 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일회성	계
2011	2,624 (43.4)	1,054 (17.7)	785 (13.2)	286 (4.9)	376 (5.4)	233 (3.9)	101 (1.7)	58 (0.9)	541 (8.9)	6,058 (100.0)
2012	2,614 (40.9)	1,054 (16.5)	796 (12.5)	389 (6.0)	438 (6.7)	283 (4.5)	125 (1.9)	66 (1.0)	638 (10.0)	6,403 (100.0)
2013	2,629 (38.7)	1,049 (15.4)	747 (11.0)	311 (4.6)	554 (8.2)	375 (5.5)	146 (2.1)	111 (1.6)	874 (12.9)	6,796 (100.0)

\* 출처: 통계청 (201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J03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J03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86.

## ②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중복학대사례를 분류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사례는 2,922건으로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이루어진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서학대와 방임 순이었고,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이 함께 중복되어 일어난 경우도 411건으로 높게 나타나 중복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3-7 중복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유형		건수(비율)
	신 체 학 대	753(11.1)
	정 서 학 대	1,101(16.2)
	성 학 대	242(3.6)
	방 임	1,778(26.2)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749(25.7)
	신체학대·성학대	21(0.3)
	신체학대·방임	153(2.3)
	정서학대·성학대	29(0.4)
	정서학대·방임	471(6.9)
	성학대·방임	6(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53(0.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411(6.0)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9(0.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20(0.3)
소계		2,922 (43.0)
계		6,796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88.

2013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 사례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 980건으로,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비율은 14.4%였다. 성별로는 남자아동이 303건으로 30.9%, 여자아동은 677건으로 69.1%로 나타나, 두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으며, 예년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연령별로는, 13~15세가 275건으로 28.1%, 10~12세가 236건으로 24.1%, 7~9세가 198건 20.2%로 16~17세(80건, 8.2%)를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재학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가 443건으로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방임 242건(24.7%), 정서학대 137건(14%), 신체학대 99건(10.1%), 성학대 59건(6%)로 나타나, 재학대의 경우 중복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그 심각성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표 IV-3-8 재학대상례 : 성별, 연령별, 유형별(중복학대 미분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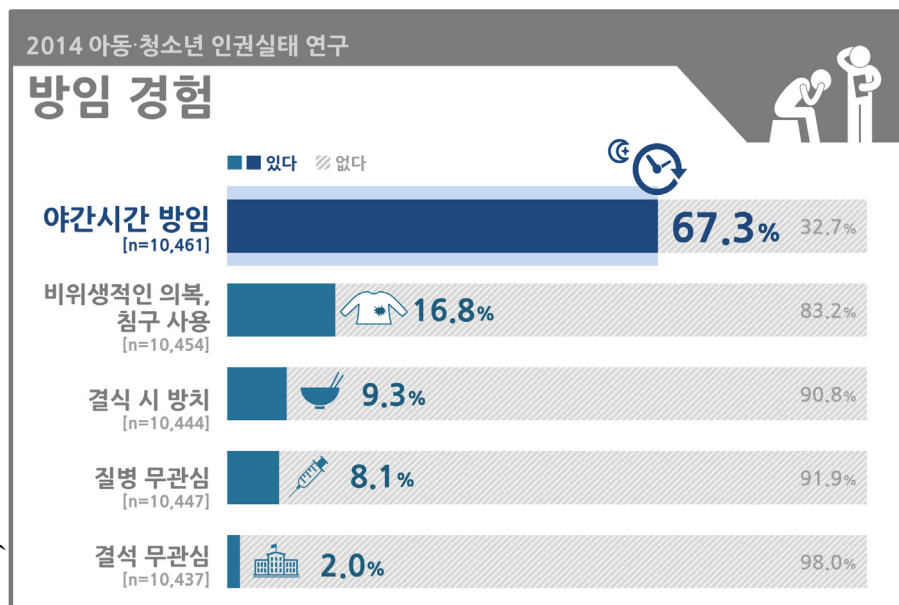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건수(비율)	계
성	남	303(30.9)	980(100.0)
	여	677(69.1)	
연령	1세미만	10(1.0)	980(100.0)
	1~3세	43(4.4)	
	4~6세	138(14.1)	
	7~9세	198(20.2)	
	10~12세	236(24.1)	
	13~15세	275(28.1)	
	16~17세	80(8.2)	
유형	신체학대	440(29.2)	1,506(100.0)
	정서학대	545(36.2)	
	성학대	81(5.4)	
	방임	440(29.2)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131-132, p.145 표 재구성.

## ③ 방임유형 및 정도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유형의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 <표 IV-3-9>와 같이 나타났다. 본 실태조사에서의 방임은, 밤늦게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집 보기,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질병·결식·학교결석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1년간 이러한 경험의 유무와 그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임유형에 따른 경험유무와 정도는 응답자의 교급과 가족 유형, 그리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유형별 모든 방임은 이러한 배경변인에 따라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2】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방임유형별 비율

전체적으로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I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시간 방임의 경험이 6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비위생적인 의복과 침구 사용(16.8%), 결식에 대한 무관심(9.3%), 질병 시 방치(8.1%), 결식에 무관심(2.0%)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최근 1년간 밤늦은 시간까지 홀로 집을 본 경험이 다른 방임유형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 응답자의 67.3%가 1년에 1번 이상 경험하였으며, 월 1회 이상 경험한 비율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1~2회의 야간 시간 방임경험은 38%, 월1~2회는 17.6%, 주1~2회는 6.9%, 주3회 이상은 4.9%였고, 한번도 밤늦게까지 혼자 집을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32.7%에 불과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교급이 올라갈수록 야간시간방임의 비율이 높았는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과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 월 1회 이상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23.2%인 것에 비해, 중학생은 32.4%, 일반/특목/자율고는 29.1%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40.4%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의 경우가 월 1회 이상이 28.5%인 것에 비해 한부모가정이 42.6%로 나타나 한부모가정에서 야간시간에 혼자 방임되는 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야간방임의 비율이 높았는데, 경제적으로 상위인 가정에서는 한 달에 1회 이상 경험했다는 비율이 26.2%였으나 경제적으로 하위인 가정에서는 39.3%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침구 사용에 대해서 연1~2회 경험은 11.3%, 월1~2회는 3.4%, 주1~2회와 주3회 이상은 동일하게 1.1%수준이었으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83.2%였다. 학교유형별로는 교급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았으며, 연 1회 이상 경험을 기준으로 양부모가정(16.4%)에서보다는 한부모가정(22.3%)과 조손가정(25.4%)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의복과 침구의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크게 높았는데 상위계층 가정에서는 14.5%인데 비해 하위계층 가정에서의 경험률은 23.5%로 훨씬 높았다.

응답자가 최근 1년 몸이 아플 경우 부모(보호자)가 별 조치 없이 그냥 내버려 둔 경험에 있는지에 대해 8%정도만 연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91.9%였다.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에게서 높은 경험률을 보였는데, 연1회 이상의 경험률이 초등학생은 5.8%인 것에 비해 중학생은 8.4%,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9%였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은 13.7%로, 초등학생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10.1%)과 기타 가정(14.6%)에서의 경험률이 양부모가정(7.9%)에서보다 훨씬 높았다. 또 가정의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역시 질병 시 방임의 비율이 높았는데, 경제적으로 상위인 가정(5.8%)에서보다 하위인 경우(14.2%)에 2배가 훨씬 넘게 나타났다.

표 IV-3-9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 회 정도	월1-2 회 정도	주1-2 회 정도	주3회 이상	전체(N)	$\chi^2$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봄	전체	32.7	38.0	17.6	6.9	4.9	100.0(10,461)	440.775***
	학교 유형	초등학교	46.5	30.2	12.6	6.1	100.0(2,968)	
		중학교	28.5	39.1	19.3	8.5	100.0(3,651)	
		일반/특목/자율고	27.0	43.9	18.9	5.3	100.0(3,161)	
		특성화고	21.6	38.0	23.9	8.2	100.0(6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1	38.3	17.5	6.5	100.0(9,754)	102.214***
		한부모가정	25.7	31.6	18.9	11.8	100.0(562)	
		조손가정	38.7	40.5	8.0	8.5	100.0(41)	
		기타	33.9	37.1	17.3	9.9	100.0(104)	
	경제적 수준	상	36.7	37.2	16.1	6.2	100.0(4,696)	157.335***
		중	31.8	39.3	17.6	6.7	100.0(4,048)	
		하	23.8	36.9	21.8	9.0	100.0(1,647)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 회 정도	월1-2 회 정도	주1-2 회 정도	주3회 이상	전체(N)	$\chi^2$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전체		83.2	11.3	3.4	1.1	1.1	100.0(10,454)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6	9.0	1.5	0.9	1.0	100.0(2,964)	95.968***
		중학교	82.5	11.8	3.7	0.8	1.2	100.0(3,649)	
		일반/특목/자율고	81.1	12.0	4.4	1.6	1.0	100.0(3,160)	
		특성화고	77.6	14.6	4.9	2.0	0.9	100.0(6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3.6	11.0	3.3	1.1	1.0	100.0(9,748)	42.256***
		한부모가정	77.7	14.4	4.9	2.5	0.5	100.0(562)	
		조손가정	74.6	12.9	4.5	2.5	5.5	100.0(41)	
		기타	74.5	15.0	5.8	1.0	3.8	100.0(104)	
	경제적 수준	상	85.6	9.9	2.8	1.0	0.8	100.0(4,691)	101.020***
		중	83.4	11.7	3.1	0.8	1.0	100.0(4,046)	
		하	76.4	13.7	5.8	2.4	1.6	100.0(1,647)	
아파도 그냥 내버려둠	전체		91.9	5.7	1.8	0.4	0.2	100.0(10,447)	
	학교 유형	초등학교	94.3	4.1	1.1	0.3	0.3	100.0(2,962)	69.317***
		중학교	91.6	5.8	1.8	0.6	0.2	100.0(3,647)	
		일반/특목/자율고	91.1	6.5	2.0	0.2	0.3	100.0(3,157)	
		특성화고	86.3	9.1	3.7	0.8	0.1	100.0(6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1	5.6	1.7	0.4	0.2	100.0(9,741)	-
		한부모가정	89.9	6.8	2.8	0.4	0.1	100.0(562)	
		조손가정	87.0	4.3	6.2	2.5	0.0	100.0(41)	
		기타	85.3	13.8	0.8	0.0	0.0	100.0(104)	
	경제적 수준	상	94.1	4.2	1.2	0.2	0.2	100.0(4,686)	119.209***
		중	91.8	5.8	1.7	0.4	0.2	100.0(4,043)	
		하	85.8	9.6	3.5	0.8	0.3	100.0(1,648)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음	전체		90.8	4.9	2.2	1.2	1.0	100.0(10,44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3.9	3.9	0.9	0.7	0.6	100.0(2,958)	133.539***
		중학교	91.0	5.4	1.9	1.0	0.8	100.0(3,645)	
		일반/특목/자율고	89.0	5.0	3.5	1.4	1.2	100.0(3,159)	
		특성화고	84.1	6.7	3.3	3.5	2.5	100.0(6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1.1	4.9	2.0	1.1	0.9	100.0(9,738)	-
		한부모가정	86.4	4.5	5.1	2.1	1.9	100.0(562)	
		조손가정	84.9	4.9	2.1	8.1	0.0	100.0(41)	
		기타	89.0	7.9	1.1	1.0	0.8	100.0(104)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 회 정도	월1-2 회 정도	주1-2 회 정도	주3회 이상	전체(N)	$\chi^2$
	경제적 수준	상	93.0	4.2	1.5	0.7	0.6	100.0(4,687)	127.778***
		중	90.9	4.9	2.2	1.2	0.9	100.0(4,040)	
		하	84.4	6.9	4.2	2.5	2.0	100.0(1,648)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음	전체		98.0	1.0	0.5	0.2	0.3	100.0(10,437)	75.590***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6	0.6	0.2	0.2	0.4	100.0(2,955)	
		중학교	98.5	0.6	0.5	0.2	0.2	100.0(3,642)	
		일반/특목/자율고	97.8	1.2	0.5	0.3	0.2	100.0(3,159)	
		특성화고	94.6	3.0	1.9	0.0	0.5	100.0(6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2	0.8	0.5	0.2	0.3	100.0(9,733)	-
		한부모가정	96.6	2.4	0.9	0.1	0.0	100.0(561)	
		조손가정	87.2	6.5	2.1	2.5	1.7	100.0(41)	
		기타	95.1	1.7	1.9	0.0	1.3	100.0(103)	
	경제적 수준	상	98.3	0.8	0.5	0.2	0.2	100.0(4,683)	19.823*
		중	98.3	0.7	0.6	0.2	0.2	100.0(4,039)	
		하	96.8	1.7	0.7	0.3	0.5	100.0(1,646)	

\*p<.05, \*\*\*p<.001

\* 주: 일부 빈도/비율이 0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음.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 부모(보호자)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9.3%의 응답자만이 연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90.8%는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부모(보호자)들은 자녀의 식사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초등학생(6.1%)보다는 특히 특성화고 학생(16%)에게서, 그리고 양부모가정(8.9%)보다는 한부모가정(13.6%)과 조손가정(15.1%)에서, 또 경제적 수준이 상위인 가정(7%)보다는 하위(15.6%)인 가정에서 결식 시 부모의 무관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결석한 경우 부모(보호자)의 무관심을 최근 1년간 1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2%에 불과했다. 배경변인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생(1.4%)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특성화고 재학생의 비율이 5.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정의 경우 1.8%였지만, 한부모가정에서는 3.4%, 그리고 조손가정에서는 12.8%로 매우 높았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위층(3.2%) 가정에서의 응답이 상위(1.7%)인 가정보다 2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방임경험에 대한 본 조사 결과, 밤늦게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집을 보는 야간시간방임 경험을 제외하면 다른 방임유형에 대한 경험률은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변인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야간시간방임, 위생적이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질병·결석·학교결석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관심 등에서 고학년일수록(특히 특성화고 재학의 경우), 또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위계층인 경우에 그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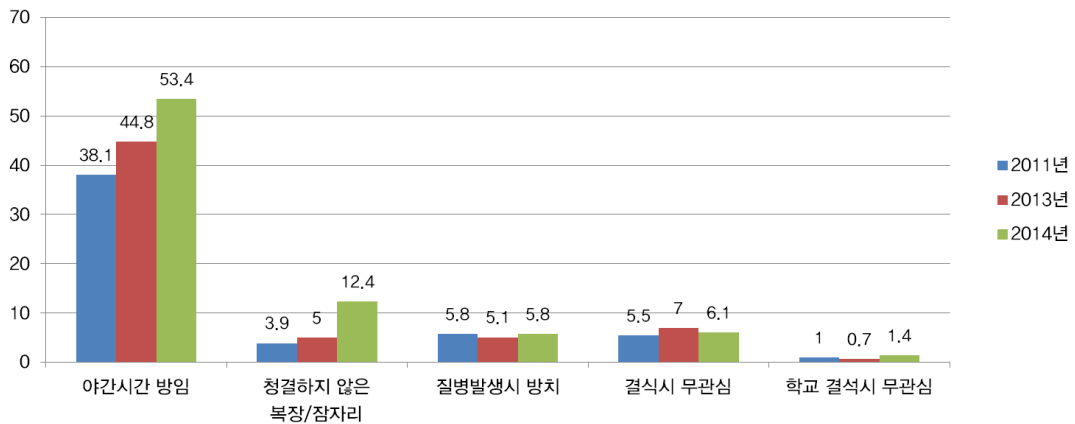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이 한가지의 방임만 경험하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방임을 함께 겪거나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 방임유형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IV-3-10>). 전반적으로 방임유형간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모든 유형의 방임들 간에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는 결석( $r=.475$ )이나 결석( $r=.351$ )에 대한 무관심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결석과 결석에 대한 무관심의 상관성이 높았고( $r=.333$ ), 위생적이지 않은 의류나 침구사용과 질병( $r=.264$ ) 및 결석( $r=.252$ )에 대한 무관심 순대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체로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방임 유형 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가지 유형에서의 방임은 또 다른 형태의 방임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3-10 상관분석: 방임 경험 유형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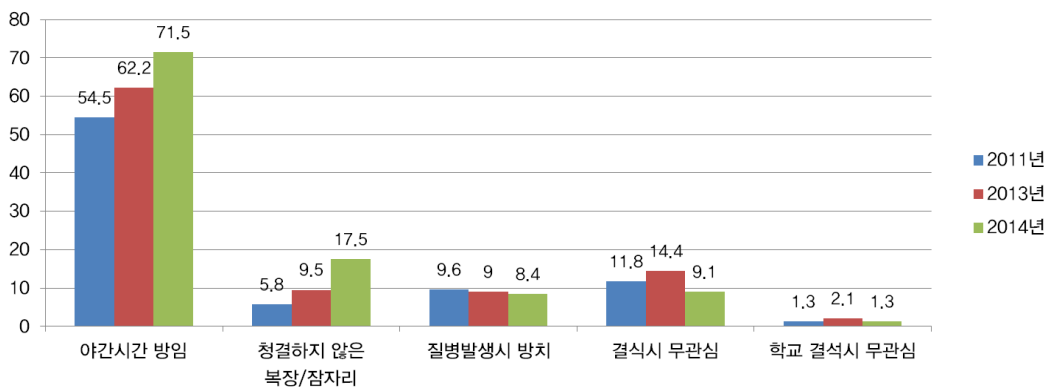
방임유형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봄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아파도 그냥 내버려둠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음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191**	—	—	—
아파도 그냥 내버려둠	.169**	.264**	—	—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음	.156**	.251**	.475**	—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음	.082**	.171**	.351**	.333**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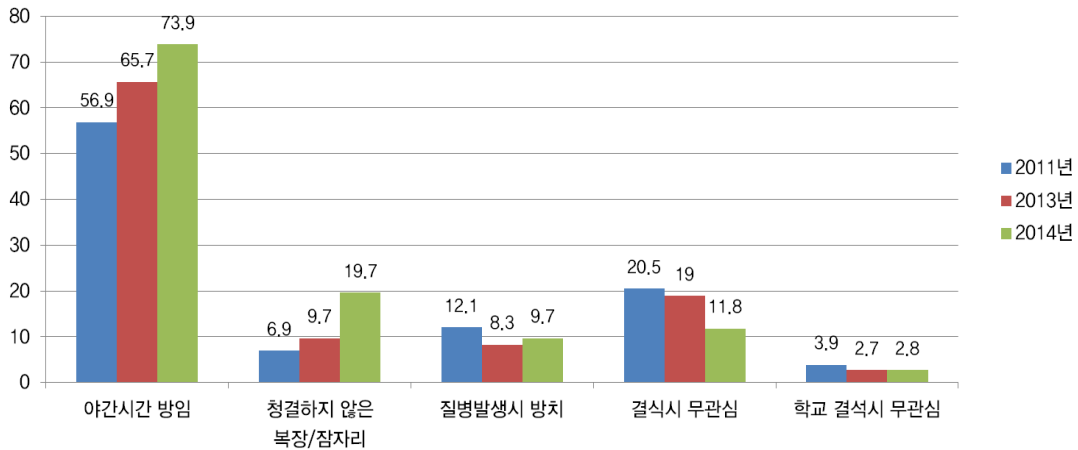
또한 최근 1년간 방임경험에 대한 3개년 비교결과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림 IV-3-3】, 【그림 IV-3-4】, 【그림 IV-3-5】와 같다. 야간시간 방임과 위생적이지 않은 의류 및 침구사용의 경우 전 연령에 걸쳐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방임은 2011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15.3%,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17%가 증가하였으며, 모든 교급별로 청결하지 않은 의류나 침구사용에 대해서는 2011년에 비해 약 2~3배 이상의 경험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질병 발생 시 방치나 결식 및 결석 시 무관심의 경우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질병발생 시 방임의 경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2013년에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식 시 무관심의 경우는 점점 그 경험률이 줄어들어 고등학생의 경우는 2011년의 20.5%에서 2014년 11.8%로 거의 절반 가까이로 감소하였다.



【그림 IV-3-3】 최근 1년간 방임 경험률(%) 3개년 추이(초등학생)



【그림 IV-3-4】 최근 1년간 방임 경험률(%) 3개년 추이(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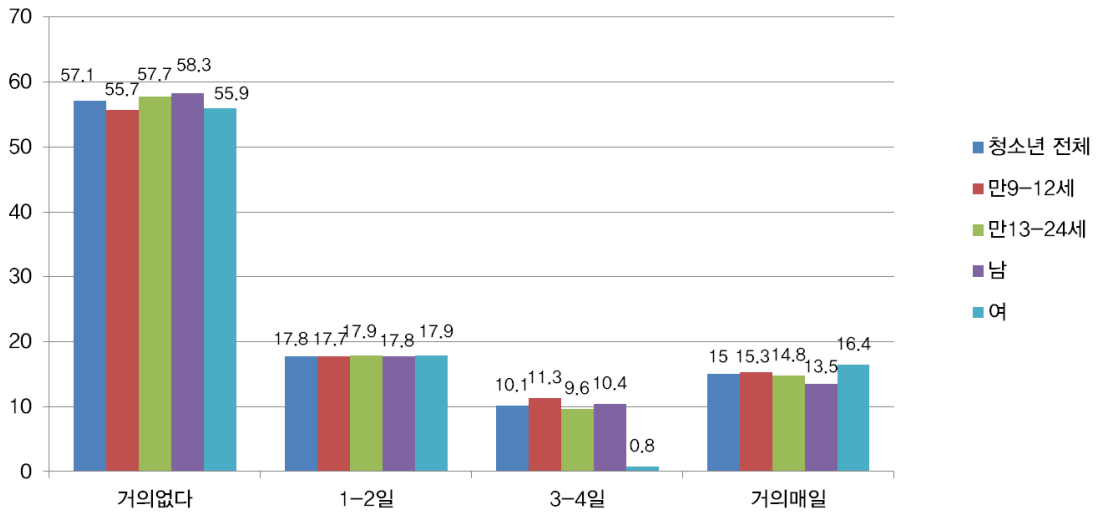
【그림 IV-3-5】 최근 1년간 방임 경험률(%) 3개년 추이(고등학생)

### (3) 보호, 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 ①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비율

방과후 집에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비율<sup>177)</sup>을 살펴보면 【그림 IV-3-6】과 같다. 평일 방과후 집안에 부모님(보호자)이 없이 자녀만 있는 아동을 조사한 결과로서, 57%의 아동은 보호자가 집에 부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거의 매일 부재중이라는 응답은 15%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연령대가 높은 경우 오히려 보호자 부재 비율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나만 9~12세 아동은 15.3%, 만 13~24세 아동·청소년은 14.8%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도 거의 매일 보호자가 부재한다는 응답이 남자의 경우는 13.5%, 여자는 16.4%로 나타나 여자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방과후 부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77)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조사가 수행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서 올해 2014년 조사가 수행된다.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2014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2012년에 발표된 조사결과를 재구성, 기술하였다.



\* 출처: 김영지 외(2013)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p. 215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함.

\* 원출처: 여성가족부(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 68.

【그림 IV-3-6】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 ②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그동안 예산과 보육인프라 확충 등에서 큰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모든 대상에게 확대하였다는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a).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인데 매년 어린이집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보육통계의 일반사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유형은 설립주체에 따라 나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에 의해,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결성한 조합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곳은 민간 어린이 집으로 분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c).

이러한 어린이집의 설립주체에 따른 연도별 설치·운영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개소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직장의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더 확충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3-11 어린이집 연도 및 설립주체별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연도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단위:개소)	2004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6,903
	2005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2013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43,770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단위:명)	2004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930,252
	2005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2006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2007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2008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200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20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2011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48,729
	2012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487,361
	2013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 출처: 보건복지부(2013c), 보육통계, p. 2.

2013년 가장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43,770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332개소(5.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439개소(3.3%), 법인·단체 등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은 868개소(2%), 민간 어린이집은 14,751개소(33.7%), 가정 어린이집은 23,632개소(54%),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129개소(0.3%), 직장어린이집은 619개소(1.4%)로 나타나, 전체 43,770개소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총 87.7%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c).

또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보면, 2013년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전체 1,487,980명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770,179명으로 전체 이용 아동의 5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그 다음으로 364,113명(24.5%),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54,465명(10.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08,834명(7.3%)순으로 많았다(보건복지부, 2013c).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어린이집 개소 수와 마찬가지로 역시 지난 10년간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확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설립주체 중에서도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부모협동,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재 이용 아동 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표 IV-3-12>). 전체적인 어린이집 정원은 1,782,459명이지만, 현원이 1,486,980이어서 실제 이용률은 83.4%에 그친다. 어린이집 설립주체별 이용률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90.8%여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가정 어린이집이 86%로 높았다. 전체 이용률이 83.4%에 불과한 이유와 특정 설치주체의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과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IV-3-1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2013년)** (단위 : 명,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정원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3,972	44,783	1,782,459
현원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이용률	90.8	77.9	82.3	82.1	86.0	81.2	77.0	83.4

\* 출처: 보건복지부(2013c), 보육통계, p. 15.

어린이집 개소 당 아동수와 보육직원 1인당 아동 수는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1개당 이용 아동 수의 경우 설립주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IV-3-1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가장 이용수가 많은 76명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단체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의 개소 당 이용아동수가 60명이 넘어 대체로 규모가 큰 시설이기 때문으로 확인되며,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15명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아동과 일대일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인 교사의 일인당 아동 수는 전체적으로 4.9명으로, 규모가 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이 5.8명이나 5.9명으로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수가 3.5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IV-3-13 어린이집 1개소 및 교직원 1인당 아동수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어린이집 1개당 아동수	66	76	60	52	15	25	56	34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	5.8	5.8	5.9	5.7	3.5	4.4	4.4	4.9

\* 출처: 보건복지부(2013c), 보육통계, p. 4.

어린이집 운영 및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사의 1인당 아동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IV-3-14>와 같다. 2007년에는 교사 1인당 아동수가 9.1명이었는데, 그 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2012년에는 5.2명, 2013년에는 4.9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교사 한명이 돌봐야 할 아동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출생 아동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IV-3-14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육아동 수	1,099,933	1,135,502	1,175,049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보육교사 수	120,963	139,060	150,477	166,937	180,247	284,237	301,719
교사 1인당 아동 수	9.1	8.2	7.8	7.7	7.5	5.2	4.9

\* 출처: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3c), 보육통계 p. 4 재구성.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대도시 15,852개소, 중소도시 19,649개소에 비해 농어촌은 8,269개소로 어린이집 수가 훨씬 적었으며, 설립주체별로 보면, 가장 이용률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비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농어촌에,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은 중소도시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립주체별로 지역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IV-3-15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2013년)

(단위 : 개소)

구분	계	설립주체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국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대도시	15,852	1,120	383	302	5,746	7,927	56	318
중소도시	19,649	643	286	204	5,785	12,481	52	198
농어촌	8,269	569	770	362	3,220	3,224	21	103

\* 출처: 보건복지부(2013c), 보육통계, p. 62.



### ③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되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로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사업내용과 특징,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주체와 지원 및 관리하는 정부부처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아동·청소년이 재학하는 학교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의 청소년생활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은 모두 좋다. 또한, 시설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맞벌이·저소득·한부모·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방과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을 방과후 시간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다양한 교육 및 문화 관련 특별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 급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방과후돌봄서비스 중에서 먼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현황 및 참여실태를 살펴보면 <표 IV-3-16>과 같다. 2009년도에는 전체의 71.2%인 4,147개였던 운영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88.5%인 5,177개 학교, 2011년에는 92.4%인 6,639개 학교에 달했고, 2013년에는 97.3%로 거의 100%에 육박하였으며, 7,395개 학교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한 하였다. 이러한 초등돌봄교실의 확대에 따라 참여 학생수도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77,155명이었던 이용학생 수는 2013년에는 거의 두배가 넘는 159,737명으로 나타났다.

표 IV-3-16 초등돌봄교실

구분	과년도 현황				2013
	2009	2010	2011	2012	
운영학교수(비율)	4,146(71.2)	5,177(88.5)	5,430(92.4)	5,652(96.0)	5,784(97.3)
운영교실 수	4,622	6,200	6,639	7,086	7,395
참여학생 수	77,155	104,496	124,013	159,248	159,737

\* 출처: 교육부(2013). 2013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p. 3.

표 IV-3-17 방과후학교<sup>1)</sup> 참여 실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sup>2)</sup>		계	
	참여율 <sup>3)</sup> (%)	비용 <sup>4)</sup> (만원)	참여율(%)	비용(만원)	참여율(%)	비용(만원)	참여율(%)	비용(만원)
2009	43.1	1.2	43.1	0.6	80.1	2.6	51.3	1.3
2010	45.0	1.3	50.0	0.7	84.6	2.8	55.6	1.4
2011	50.4	1.6	48.3	0.6	80.9	2.6	56.6	1.5
2012	52.6	1.5	49.4	0.4	77.1	2.2	57.6	1.3
2013	58.2	2.0	50.5	0.4	74.8	2.3	60.2	1.5

\*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2014.7.10.). 2014 청소년 통계. p. 18.

\* 원자료: 통계청(각 년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 주 :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일반고등학교

3)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 4)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를 보면(<표 IV-3-17>), 전체적인 참여율은 2013년 기준으로 60.2%로 2009년도의 51.3%의 과반수가 약간 넘는 정도에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이용 비용은 2009년도의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 정도로 증가되었다. 교급별로 참여율에 차이가 큰데,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이용률은 2008년 43.1%에서 2013년 58.2%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중학생은 2010년 이후로 과반을 전후로 큰 변화가 없으며, 고등학생은 2010년도에 84.6%의 참여율을 보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74.8%에 그쳤다. 비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도의 1만2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중·고등 학생의 경우 비용은 큰 변동이 없다. 방과후학교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대체로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 보호 및 교과를 포함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조손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사교육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급별 방과후 학교 참여 양상은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표 IV-3-18>),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의 비중이 32%, 특기적성이 68%인 것에 비해, 중학교는 교과내용이 65.2%, 특기적성이 34.8%로 교과의 비중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과내용이 84.5%, 특기적성이 15.5%에 불과해, 교급이 올라갈수록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이 교과중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교과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의 낮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교육시장에 더 의존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어 입시경쟁의 심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V-3-1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2013				2012	2011	2010	2009
		초	중	고	계				
교과	수(개)	80,291	87,876	155,721	323,888	367,025	355,158	338,891	161,348
	비율(%)	32.0	65.2	84.5	56.8	60.9	66.9	68.5	56.4
특기 적성	수(개)	170,901	46,926	28,606	246,433	235,605	175,492	156,074	124,581
	비율(%)	68.0	34.8	15.5	43.2	39.1	33.1	31.5	43.6
계	수(개)	251,192	134,802	184,327	570,321	602,630	530,650	494,965	285,929

\* 출처: 교육부(2013), 2013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p. 1.

#### 나.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관리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에게 방과후돌봄, 생활지원 및 보호,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과 놀이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서비스로서,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최일선의 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및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로 2004년 법제화되면서부터 전반적인 인프라와 이용 인원수에 있어 매우 크게 확장되었다. <표 IV-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895개에 불과했던 시설로 2013년 4천여 개가 넘어 4배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시설 이용 연인원수도 2004년 23,347명에서 2013년에는 거의 5배에 달하는 109,06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 증가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의 이용률 증가폭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학생의 경우 2004년도에는 2,880명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20,817명에 달하였고, 2004년에 555명에 불과했던 고등학생은 2013년에는 4,006명으로 크게 늘어나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3-19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센터 개소 수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3,714
초저학년	18,348	34,617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37,407	38,030	39,293
등고학년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42,324	42,396	41,025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20,817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4,006
탈학생	-	-	103	104	133	331	338	285	223	211
기타	-	22	99	317	196	-	-	-	-	-

\* 출처: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3년12월)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p.vi.

####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역시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학습지원과 체험활동, 급식 및 건강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방과후서비스의 하나이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주 대상은 초등4학년~중2학년생으로 2005년 46개소였던 시설은 2013년 200여개의 시설로 확대되어, 2013년 현재 8천여 명, 연인원 2,300,000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17년까지 500개소로 2만 명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다<sup>178)</sup>.

표 IV-3-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소	46	100	151	185	178	171	200	200	200
지원인원(명)	2,350	4,200	6,300	7,680	7,245	6,700	8,000	8,000	8,200
연인원(명)	282,000	1,260,000	1,890,000	2,165,760	2,064,825	1,905,000	2,300,000	2,300,000	2,300,00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sup>179)</sup>

원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139.

178)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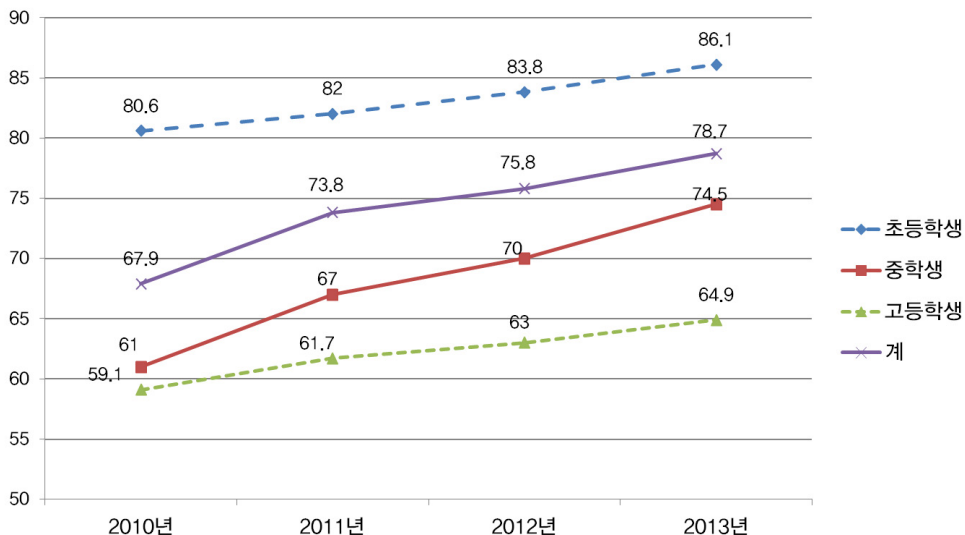
[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505](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505)

179) 상동.

#### 라. 방과후돌봄서비스 만족도

그동안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대분류인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이 미흡한 상황에서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다루어졌으나, 해당지표로는 방과후 전담시설의 현황과 이용 아동·청소년의 수만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검토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에 가정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 지표이다. 따라서 2014년에는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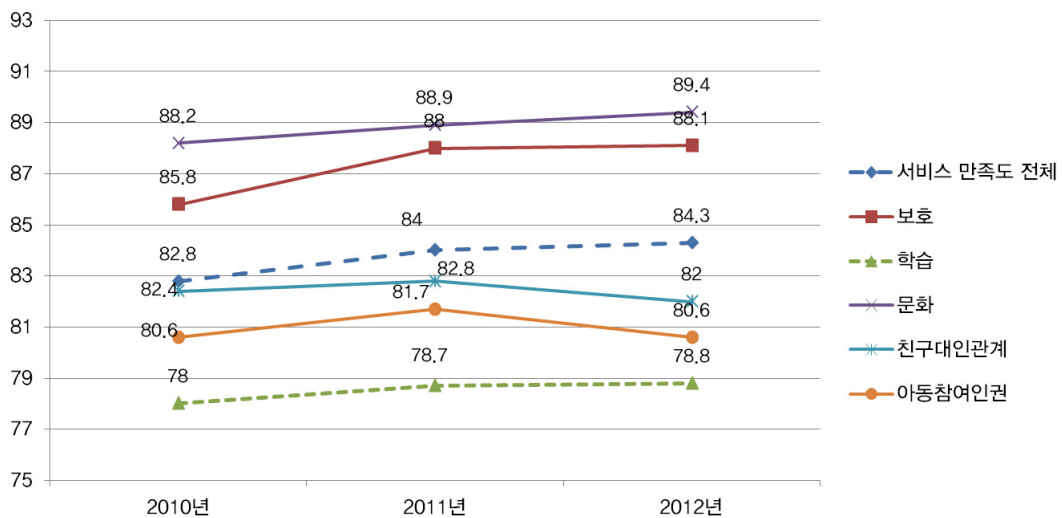
방과후서비스 중 먼저 교육부의 방과후 운영 통계에 따른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면, 【그림 IV-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교급별로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2010년 59.1%에서 2013년 78.7%로 만족도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만족도는 86%에 달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만족도는 이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만족도가 상승한 것을 볼 때,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의 증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출처: 교육부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방과후학교 운영통계/ 단위(%)

【그림 IV-3-7】 방과후학교 연도별 만족도(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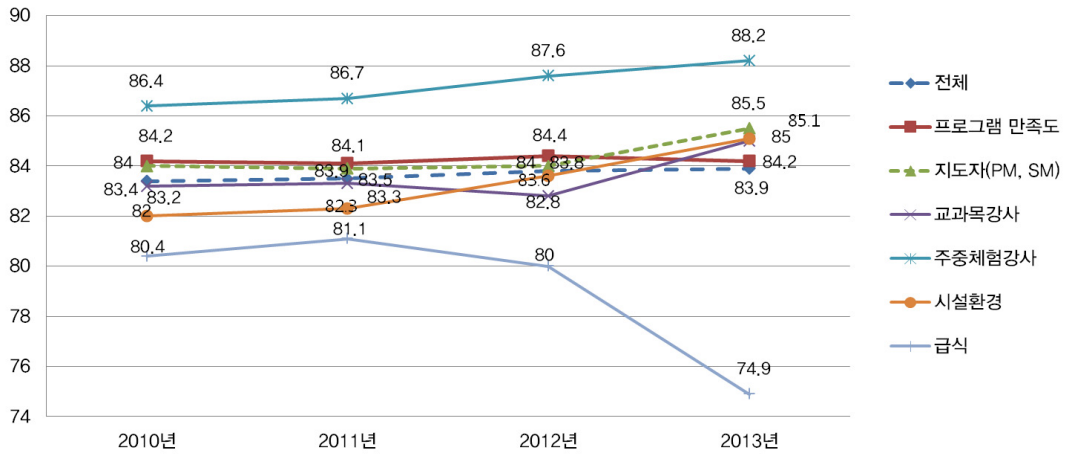
방과후 돌봄서비스로써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 아동의 연도별,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림 IV-3-8】과 같다.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2010년 82.8%, 2011년 84%, 2012년 84.3%로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 영역들도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습지원서비스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 및 특별활동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지원 및 보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참여인권에 대해서는 2012년에 미세하게 감소하였고, 또 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78%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 출처: 정익중 외(2012). 지역아동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p. 250./단위(%)

【그림 IV-3-8】 지역아동센터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연도별, 영역별 청소년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만족도는 2010년 83.4%에서 2013년 83.9%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 영역별로 2010년도의 경우 주중체험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지도자, 교과목강사, 시설환경, 급식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는데, 2013년에도 마찬가지로 주중체험강사, 지도자, 시설환경, 교과목, 프로그램, 급식 순이어서 강사 및 프로그램의 경우만 약간의 순서가 바뀔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80%가 넘는 만족도를 보였고, 급식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2013년의 경우에만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2010),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의 연구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정리하여 제시/ 단위(%)

【그림 IV-3-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프로그램별)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표 IV-3-9> 참조), 야간의 아동·청소년 방임 경험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동안 돌봄 및 보호, 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각 사업 및 서비스별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다르지만,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청소년 아카데미와 같은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오면서 더욱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 지역으로 인프라가 확대·구축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그러나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서비스의 경우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부모가족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혼자 또는 자녀끼리 방과후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사교육으로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 방임·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돌봄과 모니터링 없이, 그리고 학습 및 문화 활동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없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그 시간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 TV시청 등에 소비하게 되고 이에 따른 낮은 학업성취도와

심리·정서적 어려움도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질적인 면에서도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검토로써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용 아동·청소년의 만족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 및 서비스에서 영역별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질적 수준이 담보된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관적인 만족도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러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 (1) 입양률

#### ① 국내·외 입양 현황과 추이 및 입양기피이유

##### 가.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아동이 태어난 원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서비스는 아동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나라 입양에서 그동안 큰 영역을 차지했던 해외입양은 2007년 이후 아동인수 후 5개월간 국내입양만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가 정책화되면서, <표 IV-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입양의 비율이 국외입양보다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보건복지부, 2013a).

표 IV-3-21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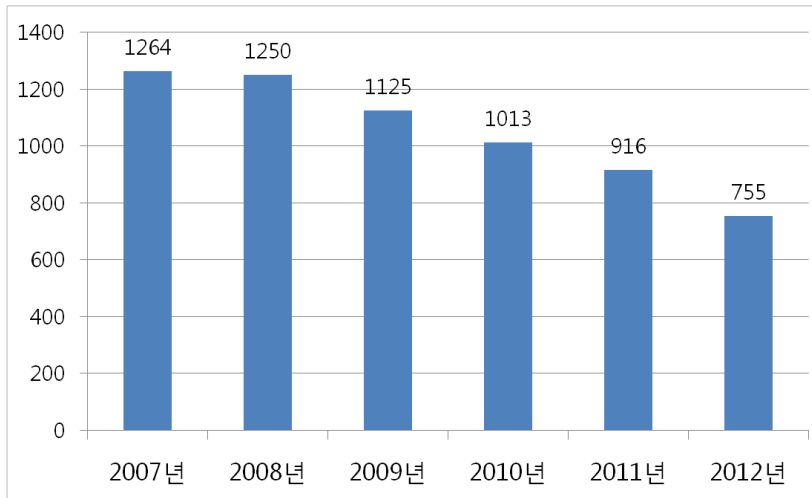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계	2005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계	242,449	224,75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국내	77,082 (31.8%)	67,607 (30.1%)	1,332 (41.2%)	1,388 (52.3%)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국외	165,367 (68.2%)	157,145 (69.9%)	1,899 (58.8%)	1,264 (47.7%)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p.29/ 원자료 : 보건복지부 2013 입양통계<sup>180)</sup>



이후 국내 입양은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 전체 62.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2년에는 약간 하락한 59.8%였으나 여전히 6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반비례하여 국외 입양인 수는 2007년 1,264명에서 2011년 91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755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2013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p.30 / 단위: 명

【그림 IV-3-10】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외입양아동 수

아동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요보호아동의 입양 절차와 관련된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입양숙려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미혼모가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등의 문제로 유기아동의 증가가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 2013년부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과 아동 매매 및 불법알선 입양 단속 등을 시행하고 미혼모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b).

#### 나. 입양기피이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입양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국내 입양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국내입양을 준비하다가 결국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수가 적지 않다. 2년주기로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회조사보고서에

18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80101&page=1](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80101&page=1)

따르면,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5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21.3%),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7.5%),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5.7%),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22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입양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에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2008	전체	62.1	20.1	5.8	8.0	3.0	1.0
2010	전체	57.9	22.7	5.6	7.5	4.6	1.7
2012	전체	56.8	21.3	5.7	7.5	4.6	1.7
	남	59.9	19.4	5.5	8.1	6.2	0.9
	여	53.7	23.2	5.8	8.3	7.0	1.9

\* 출처: 통계청(2012), 사회조사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19세 이상 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2008년도부터의 입양기피이유를 보면, 입양이 불필요하다거나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편견에 대한 응답률은 감소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약간 더 증가한 것을 볼 때,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②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그동안 비밀입양이 대부분이었던 국내 입양에서 사후조치는 크게 강조되지 못하였고, 그나마 공개 입양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후서비스가 이루어져 왔으나, 일회성의 행사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과 서비스의 접근성 미흡에 따른 소수의 인원참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안재진, 최운선, 김세원, 2013). 그러나 입양부모들의 대부분이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2010), 또 이제는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입양 사후서비스 체계를 살펴보면,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입양특례법 제25조·시행규칙 제26조), 입양아동 및 부모 교육(입양특례법 제34조), 입양아동·친생부모·입양부모 상담(입양

특례법 제25조·시행규칙 제26조), 입양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입양특례법 제25조·시행규칙 제26조)를 포함하고 있어(안재진, 최운선, 김세원, 2013), 포괄적인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표 IV-3-23>과 같다.

**표 IV-3-23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구분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내용
국내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사후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음.</li> <li>○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li> <li>○ 사후관리 내용으로써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 배치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li> </ul>
국외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지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li> </ul>

\* 출처: 보건복지부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pp. 45~46.

입양에 따른 사후조치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기반하여 최근 수행된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표 IV-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입양인(입양아동) 대상 서비스, 일반인 대상 서비스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시하였다(안재진, 최운선, 김세원, 2013). 체계적인 입양 사후조치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논의가 필요하며, 더불어 국외입양 사후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요구된다.

**표 IV-3-24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모형**

구분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모형 내용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 및 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입양관련정보, 자원목록, 법률 및 의료 등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입양부모 대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li> <li>○ 온라인 전문상담 서비스: 국내 입양가족 및 예비입양 가족 대상으로 입양관련 이슈 상담 서비스 제공</li> <li>○ 입양가족 멘토링 프로그램: 신규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기존 공개입양가족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li> </ul>

구분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모형 내용
	○ 지역별 입양가족 모임: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입양기관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입양가족 모임을 운영하여 참여도를 높임.
입양인(입양아동) 대상 서비스	○ 입양아동 발달 스크리닝: 입양아동의 발달단계별로 발달·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문제 발생 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함. ○ 친생가족 찾기 및 재회서비스: 친생가족을 찾고자 하는 입양인과 입양가족에게 관련 정보 및 중재서비스 제공
일반인 대상 서비스	○ 입양에 대한 편견 교육: 일반시민 및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교육 실시

\* 출처: 안재진, 최운선, 김세원(2013).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pp. 145~155 내용 발췌·정리.

## (2) 대안양육 비율

### ①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 가. 요보호아동 현황

대안양육은 자신이 출생한 원가정에서 보호 및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하며, 이들 요보호 아동에 대해 발생유형별로, 그리고 보호유형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3-25>와 <표 IV-3-26>과 같다. 발생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빈곤·실직·학대’는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모두 포함하며, ‘비행·가출’은 비행, 가출, 부랑에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이다<sup>181)</sup>.

<표 IV-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통계는 최근 들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0년 전인 2004년에는 전체 9,393명이었던 요보호아동은 2013년 기준 6천여 명으로 약 1/3이 감소하였다. 특히 미혼모로 분류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요보호 아동은 2008년 경제위기 시에 5,876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이후로, 2013년에는 3,668명으로 다시 감소추세이다. ‘비행·가출’의

181)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

경우 2004년 581명에서 이후 상승세를 보이긴 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는 51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아’의 경우에는 2004년 481명에서 2010년 191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285명으로 나타났다.

표 IV-3-25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9,393	9,420	9,034	8,861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빈곤·실직·학대	4,265	4,877	4,925	5,354	5,876	4,994	4,613	3,928	3,944	3,668
비행·가출	581	1,413	802	748	706	707	772	741	708	512
미혼모	4,004	2,638	3,022	2,417	2,349	3,070	2,084	2,515	1,989	1,534
기아	481	429	230	305	202	222	191	218	235	285
미아	62	63	55	37	151	35	210	81	50	21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

보호유형에 따른 요보호아동 현황을 보면, <표 IV-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에는 전체적인 보호대상 아동수가 9,393명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위기상태였던 2008년에는 10,53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유형 중 시설보호에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양육 받고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2008년에 4,964명으로 최고치를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 하락하여 2013년에는 3,257명으로 약 천오백 명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82)</sup>.

이외에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2,100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478명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감소폭이 커서 2013년에는 20명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숫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는 그동안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정책추진의 결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a). 그동안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미성년자만으로 가구가 구성되었었다는 점에서 아동인권과 복지영역에서 논란이 컸으나, 이제는 대부분 가정위탁형태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성인의 보호와 법적 후견인 없이 미성년 아동·청소년으로만 구성되는 세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182)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

표 IV-3-26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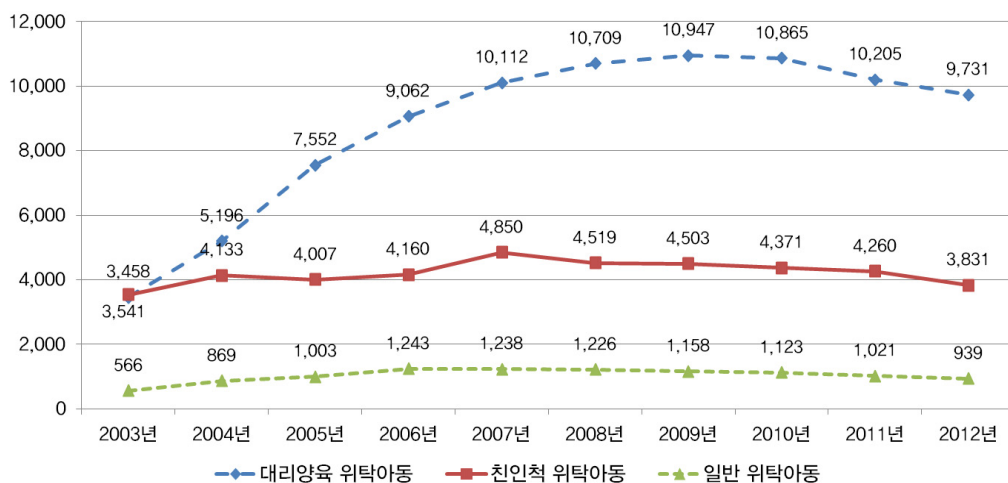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9,393	9,420	9,034	8,861	10,534	10,153	8,590	7,483	6,926	6,020
시설보호	4,782	4,818	4,366	3,245	4,964	4,767	4,842	3,752	3,748	3,257
가정위탁	2,212	2,322	3,101	3,378	2,838	2,734	2,124	2,350	2,289	2,265
입양	2,100	1,873	1,259	1,191	1,304	1,314	1,393	1,253	772	478
소년소녀가정	299	407	308	247	178	213	231	128	117	2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

## 나.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대안양육의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가정위탁의 경우 최근 통계를 보면, 조부모와 친인척이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이나 친인척위탁가정이 가정위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이에 비해 대략 6~7%에 불과한 일반위탁가정의 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대신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위탁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위탁가정으로의 가정위탁이 더욱 보편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 출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통계자료: 2012년 가정위탁 현황. http://www.fostercare.or.kr/. 단위: 명

【그림 IV-3-11】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 ①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가출청소년은 14~19세의 가출한 청소년을 지칭하며 그 이상 연령인 경우는 가출성인으로 본다(경찰청, 2013). 경찰청의 가장 최근 가출인 신고접수 현황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표 IV-3-27>와 같다. 전체적으로 가출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6만 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에는 72천명을 넘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2010년도에는 19,44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0,690명으로 증가하였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2010년 6,654명, 2011년 7,354명, 2012년 7,819명으로 계속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2010년 12,786명이었으나 2011년 13,080명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2010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12,87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가출 신고 건이 두 배 가까이로 많은데다가, 여자 가출청소년의 경우 성범죄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IV-3-27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가출청소년(14~19세)			성인가출인			가출인(전체)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2010	19,440	6,654	12,786	40,640	18,039	22,601	60,080	24,693	35,387
2011	20,434	7,354	13,080	44,594	21,087	23,507	65,028	28,441	36,587
2012	20,690	7,819	12,871	52,071	24,904	27,167	72,761	32,723	40,038

\* 출처: 경찰청(2013). 2013 경찰백서 p.82.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등이 포함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직영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134).

<표 IV-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쉼터는 2013년 기준 103개소로,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8년 76개소, 2009년 81개소, 2010~2011년 83개소, 2012년 92개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그리고 중장기쉼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단기쉼터가 가장 많은 개소수를 보이고 있다. 모든 유형의 쉼터가 매년 증가추세이며, 2013년 기준으로 일시쉼터 21개소, 단기쉼터 50개소, 중장기쉼터 32개소로 단기쉼터가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가출 후 상담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원가정에 대한 개입후 가출청소년을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족문제로 가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시일 내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자립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중장기쉼터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IV-3-28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일시쉼터(개소)	9	10	10	10	13	21
단기쉼터(개소)	42	47	49	48	49	50
중장기쉼터(개소)	25	24	24	25	30	32
계(개소)	76	81	83	83	92	103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134.

## ② 가출 경험 여부와 가출 이유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간의 가출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48%가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및 가족유형,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차이에서는 앞서 제시한 경찰청의 자료와는 달리, 여자청소년이 2.7%인데 비해 남자의 경우 6.8%로 나타나 더 높은 가출경험을 나타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생의 가출 경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초등학생 3.1%, 중학생 5.9%,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4.8%였으며, 특성화고 학생이 6.8%로 가장 높은 가출 경험을 보였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에서는 양부모가정(4.6%)에서보다 한부모가정(9.1%)과 조손가정(6.9%)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한부모가정에서의 가출경험이 높았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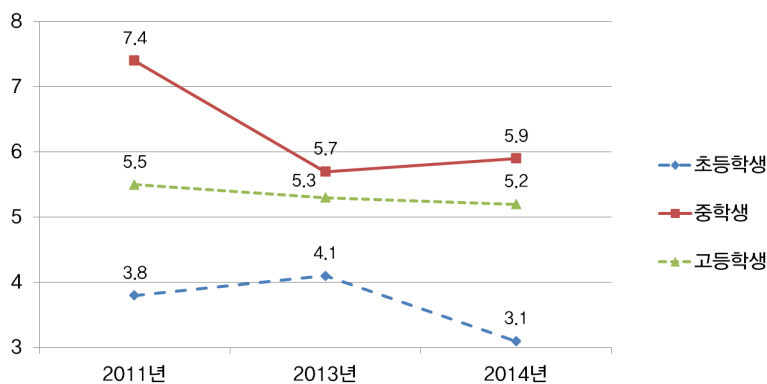
표 IV-3-29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chi^2$
전체		4.8	95.2	100.0(10,435)	-
성별	남자	6.8	93.2	100.0(5,441)	92.259***
	여자	2.7	97.3	100.0(4,98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	96.9	100.0(2,959)	32.955***
	중학교	5.9	94.1	100.0(3,643)	
	일반/특목/자율고	4.8	95.2	100.0(3,153)	
	특성화고	6.8	93.2	100.0(6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6	95.4	100.0(9,736)	24.695***
	한부모가정	9.1	90.9	100.0(556)	
	조손가정	6.9	93.1	100.0(38)	
	기타	4.8	95.2	100.0(105)	
학업 성적	상	3.4	96.6	100.0(3,218)	79.796***
	중	4.0	96.0	100.0(4,400)	
	하	8.0	92.0	100.0(2,736)	
경제적 수준	상	3.9	96.1	100.0(4,684)	28.236***
	중	5.0	95.0	100.0(4,039)	
	하	7.1	92.9	100.0(1,640)	

\*\*\*p&lt;.001

최근 1년간의 가출경험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추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그림 IV-3-12】와 같다. 초등학생의 최근 1년간의 가출경험은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비교적 크게 감소한데 이어, 2014년에 소폭 상승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감소폭이 좀 더 컸다.



【그림 IV-3-12】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하게 된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가 5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다음은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16.2%, 학업부담 12%, 학교문제 2.7%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문제 외에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가출 이유에 대해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13.8%)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27%),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14.6%)에 부모님과의 문제 다음의 가출이유로 ‘학업부담’ 꼽았다. 그리고 여자청소년(20.2%), 특성화고 재학생(46.3%), 한부모가정(20.9%),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19.6%)에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가출했다는 응답이 46.3%로, 부모와의 문제 36.6%보다 더 높게 나타나 친구와의 관계가 가출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출사유로는 형제자매와의 문제, 단순히 놀고 싶어서,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

표 IV-3-30 가출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부담 때문에	부모님 과의 문제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타	전체(N)
전체		12.0	57.4	2.7	0.2	16.2	11.6	100.0(491)
성별	남자	13.8	56.9	3.0	0.2	14.7	11.4	100.0(359)
	여자	6.8	58.7	2.0	0.0	20.2	12.3	100.0(1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12.6	66.2	4.2	1.0	4.6	11.3	100.0(85)
	중학교	11.4	57.7	2.0	0.0	15.5	13.4	100.0(213)
	일반/특목/자율고	13.8	58.1	3.2	0.0	14.7	10.2	100.0(148)
	특성화고	7.4	36.6	1.6	0.0	46.3	8.1	100.0(4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7	57.1	2.7	0.2	15.7	11.7	100.0(435)
	한부모가정	6.0	60.6	1.7	0.0	20.9	10.8	100.0(49)
	조손가정	27.0	73.0	0.0	0.0	0.0	0.0	100.0(3)
	기타	0.0	44.8	14.0	0.0	20.0	21.3	100.0(5)
학업 성적	상	14.6	62.2	2.1	0.0	13.3	7.8	100.0(106)
	중	12.3	59.2	3.9	0.0	14.1	10.4	100.0(167)
	하	10.6	53.8	1.4	0.4	19.6	14.2	100.0(214)

### ③ 가출시 서비스 이용

가출시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93.7%가 이용해본 경험이 없었으며, 불과 6.3%만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1>). 그중 청소년쉼터가 가장 이용률이 높은 2.3%, 청소년수련관 1.5%, 청소년전화 1388 1.2%, 청소년상담기관 0.8%순이었으며, 기타로 학교상담실이 있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가출후에 관련 기관 서비스를 더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전화 1388을 유사한 비율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경우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기관을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했고,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는 청소년쉼터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후 관련 기관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가출청소년의 이들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서비스의 적극적인 아웃리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규모에 따라 가출 이용 서비스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이 지역에서의 가출청소년 대상 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지역규모별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도시에서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 쉼터(3.7%)와 청소년수련관(3.1%)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중소도시에서는 청소년전화 1388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읍면지역에서는 청소년상담기관의 서비스 이용률이 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쉼터가 3.2%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와 같은 전문시설의 확대가 특히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IV-3-31 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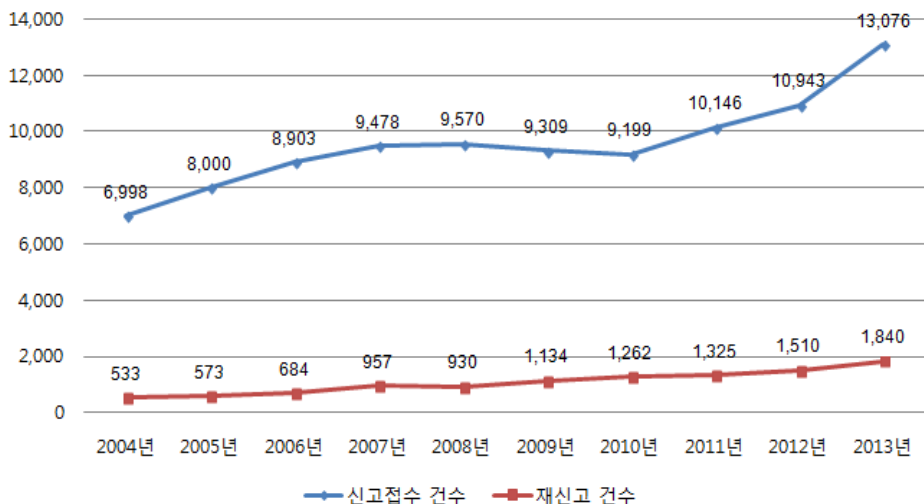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전체		93.7	2.3	0.8	1.5	1.2	0.5	100.0(397)
학교 유형	중학교	92.7	2.5	0.5	2.4	2.0	0.0	100.0(207)
	일반/특목/자율고	94.6	1.4	1.6	0.7	0.4	1.3	100.0(146)
	특성화고	95.6	4.4	0.0	0.0	0.0	0.0	100.0(44)
	대도시	91.9	3.7	0.9	3.1	0.5	0.0	100.0(170)
지역 규모	중소도시	96.0	0.6	0.0	0.4	1.9	1.1	100.0(171)
	읍면지역	92.4	3.2	3.4	0.0	1.1	0.0	100.0(56)

### 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1)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

##### ① 아동학대 신고건수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표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뿐 아니라 실제 ‘신고접수 건수’도 주요 지표 항목으로 새롭게 포함되었다. 신고건수의 증가가 단순히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의 증가와 인식개선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이와 관련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신고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그림 IV-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에는 6,998건이었던 신고접수는 2013년 13,07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재신고 건수는 2004년 533건에서 2013년 1,84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뿐 아니라 교원 및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들에 의한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신고접수의 주요 증가이유가 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76.

【그림 IV-3-13】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재신고 건수

## ②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이러한 신고건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학대피해 아동보호건수 역시 2004년에는 3,891건이었으나 2013년에는 6,79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보호건수의 증가 역시 실제 학대아동의 증가라기 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로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표 IV-3-32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	건수(건)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증가율(%)	33.2	19.1	12.3	7.3	-0.1	1.9	-0.5	7.1	5.7	6.1
아동보호 전문기관수	기관수(개소)	37	38	42	43	43	44	44	44	46	50
	증가수(개소)	18	1	4	1	-	1	-	-	2	4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81.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수는 2004년 37개소에서 2013년에는 50개소로 증가하였지만, 아직 각 지역별로 그 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지속적인 확대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민간위탁방식으로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개입에 민간인 종사자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아동학대) 사례건수

학대피해아동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회복하는데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표 IV-3-33>에 따르면, 2013년에 신고·접수된 13,071건에 대한 상담원 1인당 업무량은 34.9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현장조사는 총 21,319건으로 상담원 1인당 56.9건이었다. 특히 이러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학대피해 감소 및 가족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상담 및 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총 서비스제공 건수는 449,172건으로 상담원 1인당 약 1,198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그 업무 부담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업무가 추가되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도한 업무는 상담원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시킴으로써 결국 아동학대사태에 적절히 개입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가족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제공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향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3-33** 2013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건수 (단위 : 건, %)

업무량		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상담지원사업	신고접수	13,071	34.9
	현장조사	21,319	56.9
	서비스제공	449,172	1,197.8
교육·홍보·협력사업	교육사업	17,425	46.5
	홍보사업	1,794,960	4,786.6
	협력사업	1,441	3.8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70.

#### ④ 서비스 제공정도와 원가정 복귀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리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은 피해아동 대상은 311,599회, 학대행위자 대상은 63,863회, 부모 또는 가족은 58,869회로 이 서비스 횟수에는 2013년 이전 신고사례로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수도 모두 포함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모두에게 <표 IV-3-34>와 같이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등 학대피해아동의 회복 및 복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지원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표 IV-3-34**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2013년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구분	서비스 건수	서비스 내용
피해아동	311,599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 상담 ○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심리치료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자원연결
학대행위자	63,863	
부모 또는 가족	58,869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09.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사례수가 매우 많은 상태에서, 또 이러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보호기관을 포함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상담원을 포함한 전문 인력의 확대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개입은 아동에 대한 당장의 격리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예외로 하더라도 원가정을 보호하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후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 원가정 복귀 후 안전하게 생활하며, 또 부모역시 아동양육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표 IV-3-35>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받는 원가정보호의 비율이 높은데(2011년 63% ~ 2013년 66%), 그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본질적으로 가정정보존에 대한 가치를 기반에 두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격리보호는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재학대 위험이 높은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2011년 26.2%였다가 2012년 30.0%로 약간 증가하였고, 2013년 28.6%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격리보호 후 가정복귀율도 2011년 6.8%, 2012년 5.9%, 2013년 6.7%로 나타났는데, 격리보호가 약간 더 높았던 2012년의 경우 가정복귀율도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을 보호하고, 또 격리 후의 가정복귀는 아동의 성장에 가장 친화적인 가정에서의 생활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재학대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기능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중 사망의 경우, 2013년에는 22명으로 2011년의 13명, 2012년의 10명보다 두배 이상 많았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더 이상 발생·증가하지 않도록 초기 전문적인 개입이 더욱 중요하다.

**표 IV-3-35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단위 : 명(%))

연도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사망	타기관이뢰	가정복귀	계
2011	3,956(65.3)	1,585(26.2)	13(0.2)	91(1.5)	413(6.8)	6,058(100.0%)
2012	4,079(63.7)	1,937(30.3)	10(0.2)	0	377(5.9)	6,403(100.0%)
2013	4,376(64.4)	1,944(28.6)	22(0.3)	0	454(6.7%)	6,796(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1~2013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136(2011년), p. 110(2012년), p. 109(2013년) 내용 발췌·정리.

#### 4)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 ①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대안양육으로서의 아동생활시설 및 양육시설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평가과정 및 결과는 아동복지시설의 양육보호 조치 및 서비스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중 아동보호기관의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매년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해 일련의 사업 및 상담사례 검토, 조치과정 및 절차를 확인분석하고 있어 역시 적절한 보호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센터는 각각 해당 전산시스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에 보호 실적 및 사례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등록하여 DB화함으로써 체계화된 접근이 향후 더욱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표 IV-3-36>과 같으며, 이러한 영역별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표 IV-3-36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전체공통지표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 및 위생상태의 적절성, 안전관리
	재정 및 조직운영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사업비·후원금 비율 기관의 미션과 비전,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인적자원관리	직원 충원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직원의 이(퇴)직률, 직원 교육 활동비, 직원의 외부교육참여,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직원 업무 분담의 적절성, 직원인사평가, 직원교육 및 복지 등
	아동의 권리	아동의 비밀보장 및 고충처리
	지역사회관계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관리, 외부자원 개발, 실습교육,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홍보
생활공통지표	시설의 환경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권보장 노력
	지역사회관계	지역사회 연계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pp. 7~8 발췌·정리

[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po\\_item\\_cd=&po\\_no=2390](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po_item_cd=&po_no=2390)



사회복지시설의 전체공통지표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이 평가되며, 생활공통지표로써 시설의 환경, 아동의 권리보장 노력,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 등이 평가된다(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2013). 3년 주기의 평가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해당 시의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재검토하는데, 특히 가장 최근 이루어진 2013년의 평가지표의 경우 2010년도에 비해 인적자원관리영역과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지표들이 신규로 포함되거나 또는 강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4b)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a). 아동학대 현황파악을 위하여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통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관리가 가능하며(<표 IV-3-37> 참조), 또 이러한 현황을 최종적으로 접하게 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표 IV-3-37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야 되는 사항**

내용	제출주기	제출기일	제출내용	제출처
아동학대 통계보고	분기당 1회	매분기 익월 15일	분기별 아동학대 통계	시·도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전체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현황	월별 1회	익월 10일	아동학대 현장조사 결과 및 피해아동 사후관리 계획	학대사건 관할 시·군·구 및 피해아동의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아동학대 현장조사 동행요청	수시	수시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대한 동행요청	피해아동의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출처: 보건복지부(2014a),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p. 453.

표 IV-3-38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결과보고 내용

분류	내용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현장조사, 사례판정,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서비스 제공 현황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 상담원 업무량,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아동학대사례 관리기관
연도별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신고자 유형, 신고접수 경로 유형,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아동학대사례 유형,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학대 사례 현황, 사망아동 사례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관련 내용 발췌·정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매년 발간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파악된다. 아동학대의 접수·조사·판정 및 서비스 제공의 일련의 과정과 사업 후 체계적인 정리 및 보고를 위하여 매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가 발간되는데, <표 IV-3-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 개선방안 모색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년도 신고접수 현황, 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아동학대사례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 아동학대예방사업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며, 이전년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추이를 분석하기도 한다.

## ② 보호·양육시설 예산

아동보호 및 양육과 관련한 정부부처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정위탁지원을 제외하곤 매년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아동시설지원과 관련하여 특히 아동시설기능보강에 2013년 예산이 두 배 가량 증액되었다가 2014년에는 다시 예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IV-3-39 보호양육시설 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12년도 예산	'13년도 예산	'14년도 계획
아동시설 지원	아동시설기능보강	7,600	15,261	7,63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6,913	7,259	7,407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960	1,014	1,024
가정위탁지원		1,521	1,369	1,232
지역아동센터		78,700 (3,500개소, 월 395만원)	90,500 (3,742개소, 월 420만원)	97,900 (3,989개소, 월 433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3e),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35, 96.

보건복지부(2014b),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9, 114, 116.

이는 2013년도의 예산증액이 “노후아동시설의 개축, 개보수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설비 의무 구축”(보건복지부, 2013e: 34)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정위탁지원의 경우 예산이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부 사업(예,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등) 지원대상의 아동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13e).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해가 갈수록 관련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 금액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실제 월 운영비도 소폭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장 최근에 아동복지시설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3-40>과 같다. 이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75개 시설에 대한 아동복지시설의 전체 평균 점수는 90점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같은 시기에 평가된 장애인거주시설(87.9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79.1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보건복지부, 2014d). 아동복지시설의 영역별 평가점수를 보면, 이용자 권리와 시설환경이 95점을 넘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재정조직이 88.2점, 인적자원관리와 지역사회관계가 85점 정도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인적자원관리와 지역사회관계 영역의 경우 신규 또는 강화된 지표가 많았는데, 인적자원관리 영역은 15개

지표 중 10지표, 지역사회관계 영역은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신규 또는 강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4d).

표 IV-3-40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수	평균 점수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관리	지역사회관계
275	90.0	95.0	88.2	85.1	92.0	95.4	85.0

\* 출처: 보건복지부(2014d), 보도참고자료: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3년 주기 평가결과).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 재구성.

표 IV-3-41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

(단위: %(개소수))

연도	평균 점수	등급별 시설수					시설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점 미만	C등급 70점~80점 미만	D등급 60점~70점 미만	F등급 60점 미만	
2010	88.4	56.0(149)	31.2(83)	6.8(18)	4.89(13)	1.1(3)	100.0(266)
2013	90.0	64.0(176)	29.8(82)	4.0(11)	0.4(1)	1.8(5)	100.0(275)

\* 출처: 보건복지부(2014d), 보도참고자료: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3년 주기 평가결과).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 재구성.

2013년 아동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2010년도와 비교하면 먼저 전체 평균점수가 2010년 88.4점에서 2013년 90점으로 1.6점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표 IV-3-41>). 특히 90점 이상의 A등급의 시설이 2010년도에 56%에서 2014년에는 64%로 나타나 과반수를 훌쩍 넘는 시설들이 A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이외에도 2014년의 경우 B등급은 29.8%, C등급은 4%, D등급은 0.4%, F등급은 1.8%여서 C~F등급의 시설은 불과 6.2%인 1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먼저 평가대상시설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료를 제출하게 된다(보건복지백서, 2013).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학계전문가, 시설종사자, 공무원이 팀을 이루어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와 현장방문평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또는 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 시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를 종료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3a).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설운동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이유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권리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를 어떻게 시설운영에 반영하는지 등의 평가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보건복지부, 2013a). 현재 시설평가의 사후조치로는 포상, 인센티브 지급, 서비스 품질관리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났거나, 개선실적이 클 경우 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시설운영 및 종사자의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a). 이와는 반대로 낮은 평가결과(D, F등급)를 보인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운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시설을 방문함으로써 시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a).

## 5) 소결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부모의 지도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써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 또 맞벌이 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동양육 및 방과후돌봄에 필수적인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관계의 질, 학대 및 방임유형별 경험률,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방임유형 및 정도,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수, 보육시설 이용률, 방과후돌봄 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를 지표로 살펴보았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원가정에서의 생활 및 성장·발달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양육형태의 하나인 입양과 가정위탁보호와 같은 대안양육의 비율, 그리고 가출청소년의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입양현황 및 추이, 입양기피이유, 국내외 입양 사후조치, 요보호아동 현황,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가출 경험 여부 및 이유,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과 이에 대한 만족도 등을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에 대해서는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한 지표로써, 아동학대 신고건수,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서비스 제공정도와 원가정복귀율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에서는 양육·보호절차 및 서비스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보호·양육시설 예산, 아동복지 시설평가 절차 및 결과를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먼저 부모의 비도와 책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가정환경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1일에 한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과반수가 넘는 56.4%, 그리고 그 중에서도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은 32.2%로 나타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결코 많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83.5%였는데, 이 응답은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었고, 부모의 청소년 이해정도에 대해서는 83.1%의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써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대화가 더욱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학교 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과 부모의 이해도에 대해 점점 낮게 조사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13,076건이었고, 이 중 83%에 달하는 10,857건이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였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학대 37.6%, 신체학대 30.9%, 방임 27.8%, 성학대 3.7%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약간 증가하였다. 여자아동의 학대사례가 많았으며(특히 성학대), 학대 및 방임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사례가 많았다. 학대를 ‘거의 매일’ 경험한다는 응답이 전체 38.7%여서 만성적인 학대 비율이 높았으며, 또 다른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 경험률도 높았는데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학대의 경우 중복학대와 방임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특히 만성적인 학대, 중복학대, 재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과 또 이러한 심각한 사례접수가 더욱 급증하는 최근 경향을 볼 때,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사자들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접근가능성이 높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서비스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학대아동의 가정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드림스타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전문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1회이상의 유형별 방임경험에 대해, 야간시간 방임이 6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비위생적인 의복과 침구 사용(16.9%), 결식에 대한 무관심(9.3%), 질병 시 방치(8.1%), 결식에 대한 무관심(2.0%)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방임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특히 특성화고 재학의 경우), 또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위계층인 경우에 방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배경변인별 유의미한 차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간시간 방임과 위생적이지 않은 의류 및 침구사용의 경우 전 연령에 걸쳐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호자 부재 정도를 살펴본 결과, 43%의 응답자가 보호자의 부재를 응답했고, 거의 매일 부재중이라는 응답은 15%에 달해, 위의 야간시간 방임률의 증가와 동일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보육시설 수와 이용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민간이나 법인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설립주체별로 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선호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로 볼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은 특히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급식을 포함한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9년에는 4,147개 학교의 77,155학생이 참여하였으나, 2013년에는 6,639개 학교의 159,737명의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2009년 51.3%에서 2013년 60.2%로 증가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방과후학교가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조손가정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고등학생 이용률의 감소는 방과후학교보다 사교육 시장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어, 고등학생 대상의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기획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모든 유형중 가장 급격히 성장한 분야로써 2004년 제도권으로 포함되면서 당시 895개였던 센터는 현재 4천여 개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지원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46개소에서 2011년 200개소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더 이상 확대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방과후서비스의 질적수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간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오면서 더욱 많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서비스의 경우 2007년 국내 입양이 우선 추진되면서 2005년 이전까지 30%에 불과했던 국내입양이 2012년 59.8%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입양특례법 개정과 입양숙려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혼모의 신분 노출, 영아유기와 관련된 논란으로 이러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입양기피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여전히 입양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입양사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이 요청된다. 입양사후조치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면서 국내의 경우 체계적인 사후조치에 대해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착수단계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국외입양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출생 가정에서 성장하기 못하는 요보호 아동의 수는 2004년 9,393명에서 2013년 6,02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 이들을 위한 대안양육유형 중 시설보호 역시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양육환경으로써 시설이 아닌 가정의 형태로 더욱 이상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정위탁의 경우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 위탁이 대부분이며, 시설보호보다는 일반가정위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으로, 대리양육·친인척 위탁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위탁가정으로의 가정위탁이 더욱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

가출 및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가출청소년의 수는 점점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가출 신고 건이 두 배 이상 많았는데, 여자청소년들은 성범죄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가출청소년들의 일차적인 보호시설인 쉼터는 2008년 76개소에서 2013년 103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로 일시쉼터나 단기쉼터여서 장기적인 가출상태이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쉼터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가출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4.8%였으며, 여자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그리고 양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에서의 가출경험이 더 많았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가출이유는 보호자와의 문제로 나타나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에서 가족에 대한 개입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출시 이용해본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불과 6.3%만이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나 쉼터를 포함한 관련 시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및 아웃리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의 가출 관련 서비스 기관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실제 발생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신고건수는 6,998건에서 2013년 12,07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확대되었으나, 현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미신고시 벌금부과가 시행되면서 신고접수의 증폭과 이에 따른 사례판정 및 서비스 개입에 따른 종사자의 업무가 매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상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소진은 결국 아동학대사태에 적절히 개입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하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이 회복되는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또 아동인구수 등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의 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재 학대 위험을 고려한 격리보호는 2011년 26.2%에서 2012년 30.3%, 2013년 28.6%이며, 가정복귀율도 2012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학대피해아동이 격리 후에 다시 가정에 복귀하여 주 양육자와 생활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격리보호수준의 심각한 학대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안양육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을 위해 국가에서는 3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현황 및 절차, 조치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및 보고 절차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있다. 아동보호 및 양육과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별한 목적 사업이 있는 경우는 예산이 증액되었다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도 하며, 또 서비스 대상 아동의 감소로 예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개소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월 운영비 지원이 증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90점대의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관리나 재정 및 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평가 영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전 평가결과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평가를 위해서는 학계, 현장, 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지표를 개발·검토한 상태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이후 사후관리에 더욱 힘을 필요로 한다.

####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sup>183)</sup>

##### 1) 장애

######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

###### ①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배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3년도에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총 86,633명으로 이 중 29.5%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70.5%는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73.9%(45,181명)는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26.1%(15,930명)는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표 IV-4-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09	23,801(31.7)	39,380	12,006	51,386(68.3)	75,187(100.0)
2010	23,944(30.0)	42,021	13,746	55,767(70.0)	79,711(100.0)
2011	24,741(29.9)	43,183	14,741	57,924(70.1)	82,665(100.0)
2012	24,932(29.3)	44,433	15,647	60,080(70.7)	85,012(100.0)
2013	25,522(29.5)	45,181	15,930	61,111(70.5)	86,633(100.0)

\* 출처: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11.

183) 이 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다.

지난 5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배치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일반학교 배치학생 비율은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13년에 들어서는 전년에 비해 특수학교 배치율은 증가한데 비해 일반학교 배치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3년에는 그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2013년 들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 ②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2013년 현재 특수학교는 162개교이며, 특수학급은 9,343개이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총 86,633명이며, 이중 영아는 578명, 유치원생은 4,190명, 초등학생은 33,518명, 중학생은 22,241명, 고등학생은 22,466명, 전공과 학생은 3,640명이고,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수는 17,446명이다. 2012년에 비해 특수학교는 6개, 그리고 특수학급은 416개가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수는 1,621명, 그리고 교원수는 71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단위 : 교, 학급, 명)

연도	특수학교수	특수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09	150	6,924	288	3,303	34,035	17,946	17,553	2,062	75,187	13,997
2010	150	7,792	290	3,225	35,294	19,375	19,111	2,416	79,711	15,244
2011	155	8,415	356	3,367	35,124	20,508	20,439	2,871	82,665	15,934
2012(A)	156	8,927	403	3,675	34,458	21,535	21,649	3,292	85,012	16,727
2013(B)	162	9,343	578	4,190	33,518	22,241	22,466	3,640	86,633	17,446
B - A	6	416	175	515	-940	706	817	348	1,621	719

\* 출처: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10.

##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2013년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장애청소년들의 진학률 및 취학률을 살펴보면, 졸업자 2,536명 중에서 고등과정으로 진학한 학생은 1,104명으로 43.5%의 진학률을 보였으며, 취업한

학생은 343명으로 13.5%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지난 5년간 장애청소년의 진학률 및 취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진학률은 2009년에 50.5%로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12년에 29.5%까지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43.5%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률은 2009년에 19.3%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13.5%까지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중에서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2009년도에는 약 30% 정도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55.4%, 53.9%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4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들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과반수 가까이 되고 있어서 이들 청소년들의 진학 및 취업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4-3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고등학교 과정)

연도	졸업자(명)	진학률(진학자수) (%, (명))	취업률(취업자수) (%, (명))	무직률(무직자수) (%, (명))
2009	2,231	50.5(1,127)	19.3(430)	30.2(674)
2010	2,301	47.2(1,087)	16.6(383)	36.1(831)
2011	2,428	29.9(726)	14.7(357)	55.4(1,345)
2012	2,537	29.5(748)	15.8(402)	53.9(1,367)
2013	2,536	43.5(1,104)	13.5(343)	42.9(1,089)

\* 출처: 교육부(각년도), 교육통계연보, <http://kess.kedi.re.kr/index>

## 2) 생존 및 발달

### (1) 사망률

#### ①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기대여명이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특히 출생시 평균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하는데, 0세의 기대여명을 일컫는다”(이철수, 2013: 218). 2012년 기준으로 0세의 기대여명은 81.44세이고, 성별로는 남자가 77.95세, 여자는 84.65세로 여자가 6.7세 긴 것으로 나타났다. 0세의 기대여명은 남녀 모두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4-4 0세의 기대여명

(단위 : 세)

연도	남자	여자	전체
2005	75.14	81.89	78.63
2006	75.74	82.36	79.18
2007	76.13	82.73	79.56
2008	76.54	83.29	80.08
2009	76.99	83.77	80.55
2010	77.20	84.07	80.79
2011	77.65	84.45	81.20
2012	77.95	84.65	81.44

\* 출처: 통계청(각년도), 생명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

\* 주: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 수.

## ②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영아사망률은 당해년도 출생아 가운데 1년 이내에 사망한 출생아 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로 생존기간별로 출생 후 0~2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신생아 사망, 28~365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신생아 후기 사망, 신생아 사망과 신생아 후기 사망을 포함하여 출생 후 365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영아사망이라고 한다(김영지 외, 2013). 2012년 영아사망률은 29명이며, 신생아사망률은 1.7명, 신생아후기사망률은 1.2명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 명/1,000명 당)

	2008			2009			2010			2011			2012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사망률	2.0	1.8	2.0	1.8	1.7	1.7	2.1	1.5	1.8	2.0	1.5	1.7	1.9	1.5	1.7
신생아후기사망률	-	-	-	1.5	1.4	1.5	1.6	1.2	1.4	1.6	1.2	1.3	1.1	1.1	1.2
영아사망률	3.6	3.4	3.5	3.3	3.1	3.2	3.7	2.7	3.2	3.4	2.7	3.0	3.1	2.7	2.9

\* 출처: 통계청(각년도),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

\* 원자료: 통계청 영아모성사망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733호),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54호).

\* 주: 1) 영아사망률 :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 × 1,000.

2) 2008년 조사(2005~2006 영아모성사망조사)부터 2년주기 조사로 변경.

3) 2010년 조사(2007~2008 영아모성사망조사)부터 신생아후기 사망률은 산출하지 않음.

지난 5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과 신생아후기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신생아 사망률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영아사망률은 3.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9명, 신생아후기사망률의 경우에는 2009년에 1.5명에서 2012년에는 1.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신생아사망률은 2008년에 2.0명에서 2009년에 1.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 매년 1.7명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 0~24세 사망률을 살펴보면, 0세는 306.8명, 1~4세가 20.2명, 5~9세가 11.4명, 10~14세가 10.7명, 15~19세가 25.8명, 20~24세가 38.6명으로 0세 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24세, 15~19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0~24세의 사망률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12년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6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 당 사망자수)

연령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0세	1,580	345.5	1,415	325.7	1,506	345.0	1,435	318.9	1,405	306.8
1-4세	455	24.7	405	22.0	386	20.9	389	20.9	377	20.2
5-9세	386	13.4	384	14.0	277	10.8	239	10.0	268	11.4
10-14세	431	12.5	441	13.1	417	12.7	402	12.6	325	10.7
15-19세	1,004	29.9	1,073	31.2	1,034	29.4	1,003	28.3	905	25.8
20-24세	1,525	47.3	1,507	47.9	1,411	45.1	1,318	41.7	1,255	38.6

\*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OTITLE&list\\_id=MT\\_CTITLE\\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OTITLE&list_id=MT_CTITLE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

\* 주: 1) 사망률 :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 ③ 사고 사망률

사고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등의 사고로 사망하는 자의 비율을 말한다. 2012년의 연령별 사고사망률을 살펴보면, 0세가 16.8명, 1~9세가 5.4명, 10~19세가 11.0명, 20~29세가 31.6명으로 20대 사고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세, 1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고사망률을 살펴보면, 사고사망률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1~9세는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사고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 당)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0세	19.7	18.2	18.6	16.9	16.8
1~9세	7.5	6.7	5.5	4.8	5.4
10~19세	12.7	13.9	12.7	12.7	11.0
20~29세	39.4	41.0	39.0	36.8	31.6

\*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8559](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8559).

\* 주 : 1) 사망률 :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발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연령별 사고 사망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0세는 타살이 26명, 1~9세는 운수사고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10~19세와 20~29세의 경우에는 자살이 각각 5.1명, 19.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19세와 20~29세는 자살 이외에 운수사고도 각각 3.8명, 7.7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사고 사망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연령대의 주요 사고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의 경우는 10대는 2010년에 5.2명에서 2011년에는 5.5명으로 증가하다 2012년에는 5.1명으로 감소하여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에는 2010년에 24.4명에서 2011년에 24.3명, 2012년에는 19.5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연도별 사고 사망의 원인

(단위 : 명/10만 명 당)

구분		운수 사고	추락 사고	익사 사고	화재 사고	중독 사고	자살	타살
2010	0세	2.1	0.7	0.5	0.2	-	-	6.0
	1-9세	2.8	0.7	0.4	0.2	0.1	-	0.6
	10-19세	4.8	0.3	0.9	0.1	0.0	5.2	0.5
	20-29세	9.0	0.7	0.8	0.3	0.1	24.4	0.8
2011	0세	1.3	0.9	-	-	-	-	4.4
	1-9세	2.1	0.7	0.7	0.2	-	-	0.7
	10-19세	4.7	0.2	0.7	0.2	-	5.5	0.4
	20-29세	7.9	0.7	0.9	0.1	0.1	24.3	0.7
2012	0세	1.3	1.3	0.4	-	-	-	2.6
	1-9세	2.0	0.6	0.7	0.3	0.0	-	1.1
	10-19세	3.8	0.3	0.8	0.2	-	5.1	0.4
	20-29세	7.7	0.6	0.8	0.3	0.2	19.5	0.7

\*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8559](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08559).

\* 주 : 1) 사망률 :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발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 ① 범죄 피해율

범죄 피해율은 인구 1천 명당 피해건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2년도의 만 13세~20세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을 살펴보면, 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는 102,271건수로,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1,000명당 19명이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1,000명당 23.1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여자청소년은 1,000명당 14.4명이 피해를 입어 남자청소년의 피해가 여자청소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범죄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의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1,000명 당 5.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9.0명으로 약 3.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2011년에 비해서 범죄 피해의 증가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연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청소년전체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2003	17,892	2,751,257	6.5	10,858	2,520,331	4.3	28,750	5,271,588	5.5
2004	25,000	2,705,387	9.2	17,038	2,463,396	6.9	42,038	5,168,783	8.1
2005	26,733	2,703,107	9.9	17,116	2,447,997	7.0	43,849	5,151,104	8.5
2006	27,526	2,729,734	10.1	17,355	2,450,374	7.1	44,881	5,180,108	8.7
2007	34,487	2,758,794	12.5	20,280	2,461,537	8.2	54,767	5,220,331	10.5
2008	38,680	2,797,367	13.8	22,580	2,480,493	9.1	61,260	5,277,860	11.6
2009	44,797	2,831,004	15.8	24,895	2,501,424	10.0	69,692	5,332,428	13.1
2010	39,695	2,841,982	14.0	24,363	2,518,442	9.7	64,058	5,360,428	12.0
2011	37,034	2,882,185	12.8	22,786	2,565,557	8.9	59,820	5,447,742	11.0
2012	65,614	2,841,888	23.1	36,657	2,539,523	14.4	102,271	5,381,411	19.0

\* 출처: 통계청(각년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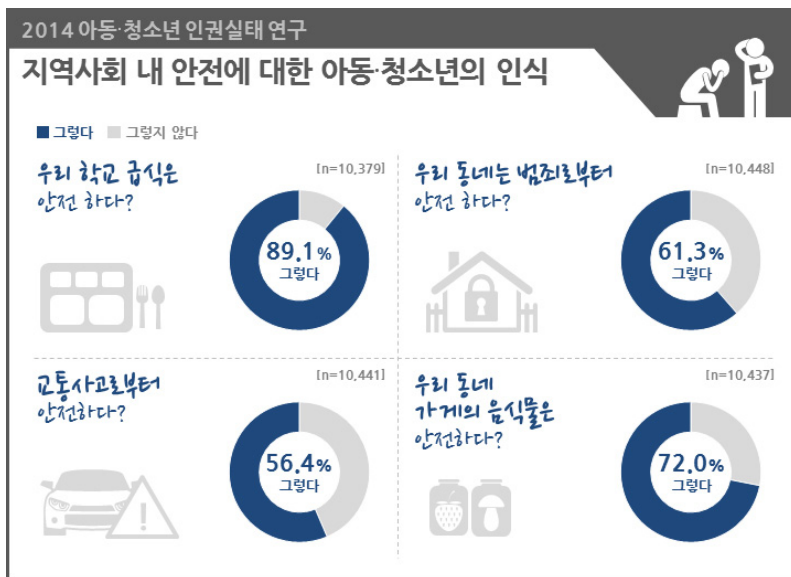
\* 원자료 :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 주: 1) 피해율 : 인구 1천명당 피해건수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용  
2) 청소년 : 만 13세에서 만 20세

## ② 안전에 대한 인식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범죄,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각각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89.1%(그런 편이다 64.2%, 매우 그렇다 24.9%)의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범죄에 대해서는 61.3%(그런 편이다 47.1%, 매우 그렇다 14.2%),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56.4%(그런 편이다 44.9%, 매우 그렇다 11.5%),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72.0%(그런 편이다 59.3%, 매우 그렇다 12.7%)의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명 중 1명의 아동·청소년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약 10명 중 3명은 지역사회의 음식물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약 10명 중 4명은 지역사회가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지역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의 위험이 아동·청소년들에게 크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IV-4-1】 안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학교급식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들(89.8%)이 남학생들(88.5%)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95.1%), 중학생(92.0%),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82.5%), 특성화고등학생(77.5%)의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9.5%), 대도시(89.2%), 읍면지역(87.4%)의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들(68.3%)이 여학생들(53.7%)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72.9%), 중학생(59.1%),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55.2%), 특성화고등학생(51.2%)의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62.3%), 대도시(60.9%), 읍면지역(59.1%)의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0

학교급식 안전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학교급식으로부터 안전	성별	남자	2.8	8.8	61.8	26.7	100.0(5,418)	42.289***
		여자	1.5	8.7	66.8	23.0	100.0(4,96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	3.7	52.1	43.0	100.0(2,955)	1101.209***
		중학교	1.1	6.9	68.0	24.0	100.0(3,621)	
		일반/특목/자율고	4.0	13.5	69.7	12.8	100.0(3,133)	
		특성화고	4.1	18.3	70.5	7.0	100.0(670)	
	지역 규모	대도시	2.1	8.7	61.9	27.3	100.0(4,407)	28.514***
		중소도시	2.2	8.3	66.1	23.4	100.0(4,673)	
		읍면지역	2.3	10.3	64.9	22.5	100.0(1,300)	
소계			2.2	8.7	64.2	24.9	100.0(10,379)	—
범죄로부터 안전	성별	남자	8.4	23.3	50.0	18.3	100.0(5,454)	321.761***
		여자	9.5	36.8	44.0	9.7	100.0(4,9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	20.8	47.1	25.8	100.0(2,969)	563.303***
		중학교	9.7	31.2	48.2	10.9	100.0(3,647)	
		일반/특목/자율고	9.9	34.9	47.0	8.2	100.0(3,155)	
		특성화고	11.8	37.0	42.4	8.8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9.7	29.4	46.0	14.9	100.0(4,421)	23.008**
		중소도시	8.2	29.5	47.8	14.5	100.0(4,714)	
		읍면지역	9.1	31.8	48.4	10.7	100.0(1,314)	
소계			8.9	29.7	47.1	14.2	100.0(10,448)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성별	남자	9.1	29.9	46.2	14.9	100.0(5,449)	179.073***
		여자	9.6	39.0	43.5	7.9	100.0(4,992)	
	학교 유형	초등학교	7.2	26.7	45.9	20.2	100.0(2,962)	371.268***
		중학교	10.1	36.3	44.3	9.3	100.0(3,647)	
		일반/특목/자율고	10.0	38.5	44.9	6.6	100.0(3,155)	
		특성화고	11.4	36.1	44.2	8.3	100.0(678)	
소계			9.3	34.2	44.9	11.5	100.0(10,441)	—
음식물로부터 안전	성별	남자	7.2	19.5	57.3	16.0	100.0(5,447)	149.993***
		여자	5.2	24.2	61.5	9.1	100.0(4,991)	
	학교 유형	초등학교	6.2	19.6	53.0	21.3	100.0(2,959)	290.470***
		중학교	6.7	22.2	60.4	10.7	100.0(3,647)	
		일반/특목/자율고	6.0	23.0	62.8	8.2	100.0(3,154)	
		특성화고	5.8	23.0	64.0	7.2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6.6	21.4	58.3	13.8	100.0(4,419)	16.615*
		중소도시	6.0	21.8	59.7	12.5	100.0(4,705)	
		읍면지역	6.2	22.9	61.0	9.8	100.0(1,313)	
소계			6.3	21.8	59.3	12.7	100.0(10,437)	—

\*p&lt;.5 \*\*p&lt;.01 \*\*\*p&lt;.001

지역사회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학교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들(61.1%)이 여학생들(51.4%)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66.1%), 중학생(53.6%), 특성화고등학생(52.5%),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51.5%)의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지역사회 음식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들(73.3%)이 여학생들(70.6%)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74.3%), 특성화고등학생(71.2%), 중학생(71.1%),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71.0%)의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72.2%), 대도시(72.1%), 읍면지역(70.8%)의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로는 지역사회 범죄, 교통사고, 음식물의 안전에 대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식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서 학교급식, 범죄,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학교나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학교급식, 범죄,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학교나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보건서비스

#### (1)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 ① 보건교사 배치 현황

전국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월 1일 현재 11,570개 학교에 7,504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64.9%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8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70.8%), 고등학교(67.1%), 중학교(5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11 보건교사 배치현황(2013. 04. 0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수	5,913	3,173	2,322	162	11,570
보건교사배치	4,185 (70.8)	1,622 (51.1)	1,557 (67.1)	140 (86.4)	7,504 (64.9)

\* 출처: 교육부(2014),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p. 5.

지난 5년간 보건교사의 배치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소 증감이 있었으나 2009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9년에 64.9%였으나 2010년에는 64.6%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다시 65.4%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65.5%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2009년 수준인 64.9%로 감소하였다.

표 IV-4-12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건교사 배치율	64.9	64.6	65.4	65.5	64.9

\* 출처: 교육부(2014),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p. 5.

2009년 이후 학교 보건교사 배치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1개 학교에 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학교보건교사의 배치율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최소한 1개 학교에 1명의 학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② 지역사회보건소 포함 신체·정신 건강 관련 시설 비율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시설, 병·의원, 특수병원, 치과, 한방병원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총 62,764개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시설이 5.5%,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등 병·의원이 50.2%, 결핵병원, 한센병원, 정신 병원 등 특수병원이 0.3%, 치과병원, 치과의원 등 치과 병·의원이 24.2%,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 병·의원이 20.1%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보건시설 및 병의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57,407개 시설에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62,764개 시설로 확대되어 9.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단위 : 개(%))

연도	보건시설			병·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계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종합 병원	요양 병원	일반 병원	의원	결핵	한센	정신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2008	253 (0.4)	1,288 (2.2)	1,907 (3.3)	313 (0.5)	690 (1.2)	1,064 (1.9)	26,581 (46.3)	3 (0.0)	1 (0.0)	118 (0.2)	184 (0.3)	13,618 (23.7)	139 (0.2)	11,248 (19.6)	57,407 (100.0)
2009	253 (0.4)	1,287 (2.2)	1,909 (3.2)	312 (0.5)	762 (1.3)	1,129 (1.9)	27,104 (45.9)	3 (0.0)	1 (0.0)	130 (0.2)	178 (0.3)	14,071 (23.9)	151 (0.3)	11,705 (19.8)	58,995 (100.0)
2010	253 (0.4)	1,294 (2.2)	1,912 (3.2)	312 (0.5)	849 (1.4)	1,154 (1.9)	27,334 (46.0)	3 (0.0)	1 (0.0)	143 (0.2)	188 (0.3)	14,074 (23.7)	159 (0.3)	11,804 (19.8)	59,480 (100.0)
2011	253 (0.4)	1,305 (2.1)	1,908 (3.1)	319 (0.5)	975 (1.6)	1,245 (2.0)	27,909 (45.2)	3 (0.0)	1 (0.0)	144 (0.2)	199 (0.3)	15,002 (24.3)	178 (0.3)	12,305 (19.9)	61,746 (100.0)
2012	254 (0.4)	1,315 (2.1)	1,895 (3.0)	323 (0.5)	1,087 (1.7)	1,327 (2.1)	28,762 (45.8)	3 (0.0)	1 (0.0)	156 (0.2)	202 (0.3)	14,800 (23.6)	199 (0.3)	12,440 (19.8)	62,764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통계연보(제59호), pp. 176-178.

### ③ 아동·청소년의 질병 유형 및 대처방안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에 대한 구분은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 지수 25이상을 비만,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면서 체질량지수 25미만을 과체중, 85백분위수 미만을 정상이라고 한다”(김영지 외, 2013: 280). 2012년 현재 2~18세 아동청소년의 9.6%가 비만이고 7.8%가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비만율은 0.1%p 감소하였으나 과체중은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세와 6~11세의 경우에 2011년에 비해 비만율이 감소하였으나 12~18세의 경우에는 14.1%로 1.0%p나 증가하였으며, 과체중의 경우에는 6~11세는 감소하였으나 2~5세와 12~18세는 전년(201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비만율과 과체중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IV-4-14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연도	연령	정상 <sup>1)</sup>	과체중 <sup>2)</sup>	비만 <sup>3)</sup>	전체(N)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2011	전체(2-18세)	82.6(1.1)	7.7(0.8)	9.7(0.9)	1,716
	2-5세	87.8(1.8)	9.4(1.7)	2.8(0.9)	424
	6-11세	80.5(1.8)	11.1(1.5)	8.4(1.4)	632
	12-18세	82.0(1.6)	4.9(1.1)	13.1(1.5)	660
2012	전체(2-18세)	82.7(1.3)	7.8(0.8)	9.6(1.0)	1,530
	2-5세	87.5(2.3)	10.7(2.2)	1.9(1.0)	349
	6-11세	82.7(1.9)	10.3(1.6)	7.1(1.3)	557
	12-18세	80.8(1.9)	5.1(1.0)	14.1(1.7)	624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p. 41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p. 619.

\* 주: 1) 정상 :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Kg/m<sup>2</sup>) 기준 85백분위수 미만

2) 과체중 :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면서 체질량지수 25미만

3) 비만 :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2012년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천식유병률은 1~11세가 5.0%, 12~18세가 3.5%로 전년 대비 1~11세 천식 유병률은 3.3%p 감소하였으나 12~18세 천식유병률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천식유병률은 1~11세가 6.4%, 12~18세가 3.3%로 전년 대비 남자 1~11세의 천식유병률은 2.5%p 감소하였으나, 남자 12~18세의 천식 유병률은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천식유병률은 1~11세가 3.5%, 12~18세가 3.7%로 전년 대비 여자 1~11세의 천식유병률은 4.1%p 감소하였으나, 여자 12~18세의 천식유병률은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 천식유병률이 6.2%, 중하가 3.8%, 중상이 3.1%, 상이 3.6%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천식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5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천식유병률 <sup>1)</sup>	1~11세	8.9(1.5)	606	7.6(1.4)	564	8.3(1.0)	1,170
		12~18세	3.9(1.2)	350	2.7(0.9)	306	3.3(0.7)	656
	소득수준 <sup>2)</sup>	하	6.9(1.9)	219	7.6(2.2)	213	7.2(1.5)	432
		중하	7.2(2.1)	245	5.6(1.9)	216	6.4(1.4)	461
		중상	5.2(1.7)	246	3.1(1.5)	213	4.2(1.2)	459
		상	5.5(1.8)	239	4.1(1.4)	218	4.9(1.1)	457
2012	천식유병률 <sup>1)</sup>	1~11세	6.4(1.2)	560	3.5(1.0)	441	5.0(0.8)	1,001
		12~18세	3.3(1.2)	331	3.7(1.3)	278	3.5(0.9)	609
	소득수준 <sup>2)</sup>	하	7.2(2.1)	218	5.2(1.9)	172	6.2(1.4)	390
		중하	4.6(1.4)	220	3.0(1.4)	178	3.8(1.0)	398
		중상	3.5(1.4)	222	2.7(1.1)	185	3.1(0.9)	407
		상	4.0(1.4)	226	3.1(1.7)	176	3.6(1.1)	402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p. 50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p. 686.

\* 주: 1) 천식 유병률: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2012년도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토피 피부염, 주의력 결핍장애, 요로감염, 폐렴 등 주요 질환별 아동·청소년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선천성 심장질환은 1~11세가 1.1%, 12~18세가 0.6%로 2011년에 비해 각각 0.3%p씩 증가하였으며, 아토피 피부염도 1~11세가 14.9%, 12~18세가 10.9%로 2011년에 비해 각각 2.2%p,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 결핍장애의 경우에는 1~11세가 0.5%로 2011년에 비해 0.2%p 감소하였으나, 12~18세는 1.0%로 0.5%p 증가하였다. 요로감염의 경우에는 1~11세가 2.0%, 12~18세가 0.9%로 2011년에 비해 각각 0.9%p, 0.1%p 감소하였으며, 폐렴의 경우에는 1~11세가 15.7%, 12~18세가 7.4%로 2011년에 비해 각각 3.7%,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로감염을 제외하고 선천성 심장질환, 아토피 피부염, 폐렴 등 주요 질환에서 아동·청소년의 유병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12~18세의 주의력 결핍장애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4-16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선천성심장질환 <sup>1)</sup>	1-11세	0.6(0.3)	606	1.0(0.5)	564	0.8(0.3)	1,170
		12-18세	0.0(-)	351	0.7(0.4)	306	0.3(0.2)	657
	아토피피부염 <sup>2)</sup>	1-11세	12.0(1.6)	606	13.4(1.8)	564	12.7(1.2)	1,170
		12-18세	7.0(1.4)	351	13.1(2.0)	306	9.8(1.3)	657
	주의력결핍장애 <sup>3)</sup>	1-11세	0.9(0.5)	606	0.4(0.3)	564	0.7(0.3)	1,170
		12-18세	0.7(0.4)	351	0.4(0.2)	306	0.5(0.2)	657
	요로감염 <sup>4)</sup>	1-11세	3.3(0.9)	606	2.4(0.7)	564	2.9(0.6)	1,170
		12-18세	1.6(0.8)	351	0.4(0.3)	306	1.0(0.5)	657
	폐렴 <sup>5)</sup>	1-11세	12.1(1.7)	606	11.8(2.0)	564	12.0(1.4)	1,170
		12-18세	4.2(1.2)	351	4.6(1.6)	306	4.4(1.0)	657
2012	선천성심장질환 <sup>1)</sup>	1-11세	1.3(0.8)	560	1.0(0.6)	441	1.1(0.5)	1001
		12-18세	0.0(-)	332	1.3(0.8)	278	0.6(0.4)	610
	아토피피부염 <sup>2)</sup>	1-11세	15.6(2.2)	560	14.1(2.0)	441	14.9(1.6)	1001
		12-18세	8.8(1.9)	332	13.3(2.5)	278	10.9(1.5)	610
	주의력결핍장애 <sup>3)</sup>	1-11세	0.6(0.4)	560	0.3(0.2)	441	0.5(0.2)	1001
		12-18세	1.4(0.7)	332	0.6(0.4)	278	1.0(0.4)	610
	요로감염 <sup>4)</sup>	1-11세	2.4(0.8)	560	1.6(0.6)	441	2.0(0.5)	1001
		12-18세	1.1(0.8)	332	0.7(0.5)	278	0.9(0.5)	610
	폐렴 <sup>5)</sup>	1-11세	16.2(2.2)	560	15.2(2.4)	441	15.7(1.8)	1001
		12-18세	7.9(2.0)	332	6.8(1.8)	278	7.4(1.4)	610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p. 5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p. 693.

\* 주: 1) 선천성심장질환 유병률 : 의사로부터 선천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을

2)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을

3) 주의력결핍장애 유병률 : 의사로부터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분을

4) 요로감염 유병률 : 의사로부터 요로감염 진단을 받은 분을

5) 폐렴 유병률 : 의사로부터 폐렴 진단을 받은 분을

##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연간 치과 미치료율, 2주간 약국이용률을 통해 살펴보았다.

2012년 현재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 49.7%로 2010년 45.2%에

비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세가 78.6%, 6~11세가 59.7%, 12~14세가 38.3%, 15~18세가 23.5%로 연령이 낮을수록 접종률이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는 하 48.0%, 중하 50.5%, 중상 51.1%, 상 48.4%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4-17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0	2,115	509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73.9 (2.2)	57.4 (2.6)	31.7 (3.1)	16.3 (2.5)	45.2 (1.9)	39.3 (3.3)	46.9 (3.2)	49.7 (3.5)	46.1 (3.4)
2011	N	537	631	307	349	1,824	431	461	459	456
	분율 (표준오차)	74.0 (2.7)	56.6 (2.9)	36.0 (3.8)	24.2 (2.7)	47.3 (2.0)	42.4 (3.9)	49.6 (3.6)	49.6 (3.8)	50.1 (3.9)
2012	N	446	550	315	294	1,605	289	298	403	402
	분율 (표준오차)	78.6 (2.9)	59.7 (2.7)	38.3 (4.0)	23.5 (3.0)	49.7 (1.9)	48.0 (3.5)	50.5 (3.8)	51.1 (3.6)	48.4 (3.7)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 2010 국민건강통계. p. 23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1 국민건강통계. p. 2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2 국민건강통계. p. 339.

\* 주: 1)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원 미치료율은 2012년에 7.8%로 2010년의 7.4%에 비해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세가 5.2%, 6~11세가 4.8%, 12~14세가 8.7%, 15~18세가 12.5%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미치료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중하인 경우가 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상(8.1%), 하(7.6%), 상(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18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2.7 (0.6)	5.8 (1.0)	10.1 (1.8)	11.1 (2.1)	7.4 (0.8)	9.1 (1.9)	7.0 (1.4)	5.7 (1.1)	7.2 (1.7)
2011	N	538	632	307	349	1,826	432	461	459	457
	분율 (표준오차)	6.1 (1.5)	4.8 (1.2)	7.3 (1.7)	10.6 (2.0)	7.2 (0.9)	9.4 (2.4)	6.6 (1.6)	4.8 (1.3)	7.9 (1.9)
2012	N	447	554	315	294	1,610	390	398	407	402
	분율 (표준오차)	5.2 (2.0)*	4.8 (1.1)	8.7 (2.0)	12.5 (2.0)	7.8 (0.9)	7.6 (1.6)	9.9 (2.3)	8.1 (1.8)	5.6 (1.6)*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 2010 국민건강통계. p. 25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1 국민건강통계. p. 23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2 국민건강통계. p. 342.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아동·청소년들이 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이용시간이 없음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벼운 증상(29.7%), 교통불편(5.6%), 경제적 문제(4.8%), 기다리기 싫어서(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한편, 연간 병의원 미치료 이유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하인 경우에 경제적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11.1%로 다른 계층(중하 2.8%, 중상 3.2%, 상 0.0%)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경제적 이유가 병원치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2012년에 18.8%로 2010년의 25.3%에 비해 6.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세가 10.6%, 6~11세가 12.6%, 12~14세가 18.2%, 15~18세가 30.4%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미치료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21.9%로 치과 미치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2주간 약국이용률은 2012년에 26.6%로 2010년의 24.8%에 비해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세가 48.3%, 6~11세가 22.6%, 12~14세가 15.9%, 15~18세가 20.4%로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약국이용률이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에 약국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9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69	359	2,112	510	514	531	523
	분율 (표준오차)	14.5 (1.7)	21.0 (2.4)	26.2 (2.8)	38.6 (3.5)	25.3 (1.5)	33.2 (2.9)	25.3 (3.2)	20.6 (2.2)	19.4 (2.2)
2011	N	538	632	308	347	1,825	433	459	459	457
	분율 (표준오차)	15.2 (2.0)	12.4 (1.8)	16.1 (2.4)	31.9 (2.6)	19.3 (1.1)	22.7 (2.1)	19.1 (2.6)	17.5 (2.3)	16.2 (2.3)
2012	N	447	554	314	294	1,609	389	399	406	402
	분율 (표준오차)	10.6 (1.8)	12.6 (1.8)	18.2 (2.6)	30.4 (2.9)	18.2 (1.3)	21.9 (2.5)	18.2 (2.4)	13.7 (2.7)	18.4 (3.2)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 2010 국민건강통계. p. 25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1 국민건강통계. p. 23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2 국민건강통계. p. 342.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표 IV-4-20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43.1 (2.8)	23.3 (2.0)	20.3 (2.7)	14.6 (2.2)	24.8 (1.5)	24.1 (2.5)	26.8 (2.8)	22.0 (2.2)	26.3 (2.6)
2011	N	537	631	308	349	1,825	433	459	459	457
	분율 (표준오차)	42.3 (3.6)	23.5 (1.9)	18.6 (2.8)	25.0 (2.9)	27.1 (1.5)	25.0 (2.6)	26.6 (2.9)	25.8 (2.9)	31.9 (2.5)
2012	N	447	554	315	295	1,611	390	399	407	402
	분율 (표준오차)	48.3 (3.8)	22.6 (2.7)	15.9 (2.5)	20.4 (2.9)	26.6 (1.4)	24.3 (2.9)	28.3 (2.8)	27.2 (2.9)	27.1 (3.0)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0). 2010 국민건강통계. p. 27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1 국민건강통계. p. 25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2 국민건강통계. p. 355.

\* 주: 1) 2주간 약국이용률: 최근 2주간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는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 (3)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제공률

#### ① 흡연율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3년 현재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9.7%이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5.5%, 고등학생이 13.8%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 2배 이상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1학년생이 2.3%, 중학교 2학년생이 5.5%, 중학교 3학년생이 8.6%, 고등학교 1학년생이 12.1%, 고등학교 2학년생이 14.3%, 고등학교 3학년생이 15.0%로 나타났다.

표 IV-4-21 현재 흡연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2013	9.7	5.5	13.8	2.3	5.5	8.6	12.1	14.3	15.0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 34-35.

\* 주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지난 5년간 흡연율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2009년에는 12.8%의 흡연율을 보였으나 2013년에 9.7%로 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중학생의 경우 2009년에 8.3%에서 2013년에 5.5%로 2.8%p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7.5%에서 2013년에 13.8%로 3.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10%에 가까운 중·고등학생들이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② 음주율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3년 현재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16.3%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8.3%, 고등학생이 23.8%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생이 5.4%, 중학교 2학년생이 7.8%, 중학교 3학년생이 11.7%, 고등학교 1학년생이 17.6%, 고등학교 2학년생이 26.5%, 고등학교 3학년생이 27.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때의 음주율 증가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시기와 더불어 입시와 관련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4-22 현재 음주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2013	16.3	8.3	23.8	5.4	7.8	11.7	17.6	26.5	27.3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 88-89.

\* 주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지난 5년간 음주율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 음주율이 2009년에 13.3%에서 2013년에는 8.3%로 5.0%p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은 2009년에 29.1%에서 2013년에 23.8%로 5.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③ 기타 약물 사용률

평생 약물 경험률은 평생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3년 현재 중·고등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0.5%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0.5%, 여학생이 0.4%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평생 약물 경험률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약물 경험률이 2009년에 0.7%였으나 2011년까지 변화가 없다가 2012년에는 0.6%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에 평생 약물 경험률이 2009년에 0.9%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0.5%까지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0.4%에서 2012년에 0.6%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에 다시 0.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3 평생 약물 경험률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남학생	0.9	0.9	0.8	0.6	0.5
여학생	0.4	0.5	0.5	0.6	0.4
전 체	0.7	0.7	0.7	0.6	0.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 356-357.

\* 주: 평생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 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④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은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과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을 분석하였다. 연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3년 현재 중·고등학생의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은 61.9%이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68.7%, 고등학생이 55.4%로 중학생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생이 7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생(68.8%), 중학교 1학년생(67.4%), 고등학교 1학년생(60.1%), 고등학교 2학년생(59.2%), 고등학교 3학년생(4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예방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에는 흡연예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013년에 47.1%로 2010년의 35.2%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흡연예방 교육 경험을 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흡연예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IV-4-24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6.2	64.8	47.6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54.1	62.6	45.7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1.4	68.3	54.8	67.5	68.9	68.5	59.8	59.2	45.3
2013	61.9	68.7	55.4	67.4	70.0	68.8	60.1	59.2	47.1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 78.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2013년 현재 중·고등학생의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38.0%이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9.2%, 고등학생이 27.2%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교육 경험률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생이 5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생(51.0%), 중학교 1학년생(45.5%), 고등학교 1학년생(45.5%), 고등학교 2학년생(28.9%), 고등학교 3학년생(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의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2010년에 36.3%에서 2011년에 35.2%, 2012년에 34.3%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다가 2013년 들어서 38.0%로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2010년에 46.6%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하여 2012년에 44.3%로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시 49.2%로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0년에 26.1%에서 2011년에 24.5%로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에 매년 증가하여 2013년에는 27.2%로 증가하였다.

표 IV-4-25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36.3	46.6	26.1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35.2	46.0	24.5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34.3	44.3	24.6	47.1	44.6	41.6	29.9	25.9	18.1
2013	38.0	49.2	27.2	51.0	51.3	45.5	33.4	28.9	19.4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 118.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이상의 결과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의 음주예방교육은 10명 중 3~4명 정도가 경험하고 있는데, 10명 중 6명 정도가 받고 있는 흡연예방교육에 비해 그 경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음주율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낮는데 비해 10명 중 5명 정도가 음주예방 교육 경험이 있는데 비해 오히려 음주율이 높은 고등학생은 10명 중 2~3명 정도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예방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 (1) 건강에 대한 인식

###### ① 주관적 건강평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5%는 스스로를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 63.7%, 매우 건강하다 20.8%)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하지 않다(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1.2%,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14.2%)는 응답은 15.4%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건강에 대한 평가는 성별, 학교 및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과 같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응답자의 85.1%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자응답자는 그보다 낮은 83.9%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91.6%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인식한 것에 비해, 중학생은 85.7%, 특성화고 78.9%, 일반/특목/자율고 77.8% 순으로 나타났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낮았다. 그리고 양부모가정(85%)이나 조손가정(88.4%)에 비해 한부모 가정(78.5%)의 응답자들은 스스로 건강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상위계층 가정의 응답자 88.4%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하위계층 가정에서는 72.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6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chi^2$
전체		1.2	14.2	63.7	20.8	100.0(10,454)	-
성별	남자	1.3	13.5	61.2	23.9	100.0(5,457)	67.553***
	여자	1.1	15.0	66.4	17.5	100.0(4,997)	
학교 유형	초등학교	0.7	7.7	58.1	33.5	100.0(2,948)	581.362***
	중학교	1.2	13.0	66.7	19.0	100.0(3,659)	
	일반/특목/자율고	1.7	20.5	64.9	12.9	100.0(3,166)	
	특성화고	1.1	19.9	66.5	12.4	100.0(6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	13.8	64.0	21.0	100.0(9,740)	-
	한부모가정	1.7	19.7	62.3	16.2	100.0(563)	
	조손가정	0.0	11.6	56.4	32.0	100.0(41)	
	기타	4.8	22.7	50.0	22.5	100.0(109)	
경제적 수준	상	1.1	10.4	61.3	27.1	100.0(4,682)	392.708***
	중	0.8	14.1	67.8	17.3	100.0(4,043)	
	하	2.2	25.0	60.8	12.0	100.0(1,654)	

\*\*\*p&lt;.001 / \* 주 : 일부 빈도/비율이 0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음.

## (2) 신체적 건강

### ① 운동실천율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표 IV-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19.3%의 적지 않은 비율의 아동·청소년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1~2회 정도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는 응답은 20.7%,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27.7%,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은 32.3%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 및 가족유형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남자응답자보다는 여자응답자들이(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12.9%, 26.2%),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 비율이 낮았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지만, 특히 특성화고 재학생은 22.3%만이 운동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의 30.4%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대학입시 준비로 인한 과도한 학업으로 운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실태를 간접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에 차이를 보였는데, 양부모가정의 응답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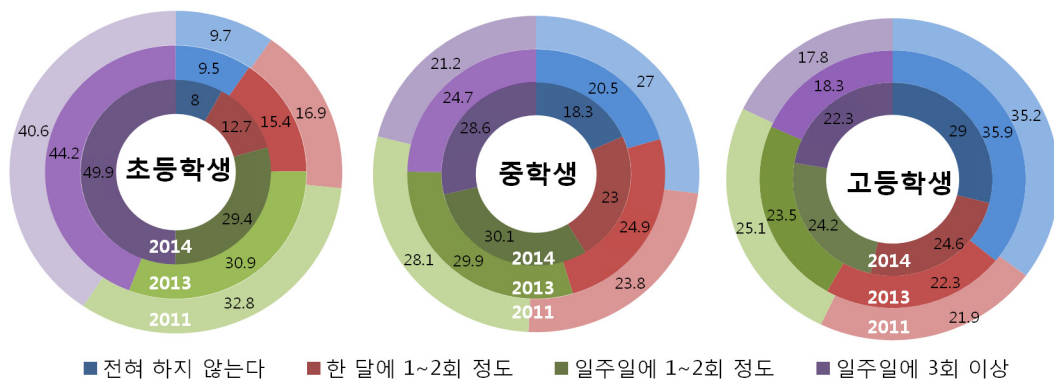
19%, 그리고 조손가정의 응답자 중 13.1%만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한부모가정의 응답자 중에서 23.2%, 기타가정에서는 23.5%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인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5.1%, 중간인 가정 21.1%, 그리고 하위층 가정 26.3%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27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당 1~2회 정도	일주일당 3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19.3	20.7	27.7	32.3	100.0(10,476)	—
성별	남자	12.9	15.9	28.6	42.6	100.0(5,472)	748.838***
	여자	26.2	25.9	26.8	21.0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8.0	12.7	29.4	49.9	100.0(2,968)	995.536***
	중학교	18.3	23.0	30.1	28.6	100.0(3,660)	
	일반/특목/자율고	30.4	23.3	23.8	22.4	100.0(3,166)	
	특성화고	22.3	30.3	25.7	21.6	100.0(6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0	20.5	27.9	32.6	100.0(9,763)	17.850*
	한부모가정	23.2	23.6	25.4	27.7	100.0(563)	
	조손가정	13.1	25.5	30.4	31.0	100.0(41)	
	기타	23.5	24.1	22.3	30.0	100.0(109)	
경제적 수준	상	15.1	18.7	29.2	37.0	100.0(4,699)	183.409***
	중	21.1	21.7	27.2	29.9	100.0(4,048)	
	하	26.3	23.6	25.1	25.0	100.0(1,655)	

\*p<.05 \*\*\*p<.001



【그림 IV-4-2】 운동실천율(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의 최근 3개년 추이를 교급별로 살펴보면 【그림 IV-4-2】와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2011년에는 9.7%였으나, 2013년에는 9.5%, 2014년에는 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는 비율은 2011년에는 40.6%, 2013년에는 44.2%, 2014년에는 49.9%여서 점점 운동을 하는 비율이 높아져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중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는 비율이 2011년에는 21.2%, 2013년에는 24.7%, 2014년에는 28.6%로 증가하였고, 고등학생 역시 2011년에는 17.8%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8.3%, 2014년에는 22.3%로 운동실천율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운동실천정도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IV-4-28>), 운동을 많이 할수록 스스로를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2%에 불과한 반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할 경우에는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7.1%여서 운동실천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IV-4-28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37.8	24.4	11.4	26.4	100.0(125)	1140.048***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35.0	27.4	20.7	16.9	100.0(1487)	
	건강한 편이다	19.1	22.4	30.8	27.7	100.0(6656)	
	매우 건강하다	8.2	10.7	23.9	57.1	100.0(2179)	

\*\*\*p<.001

## ② 아침식사 결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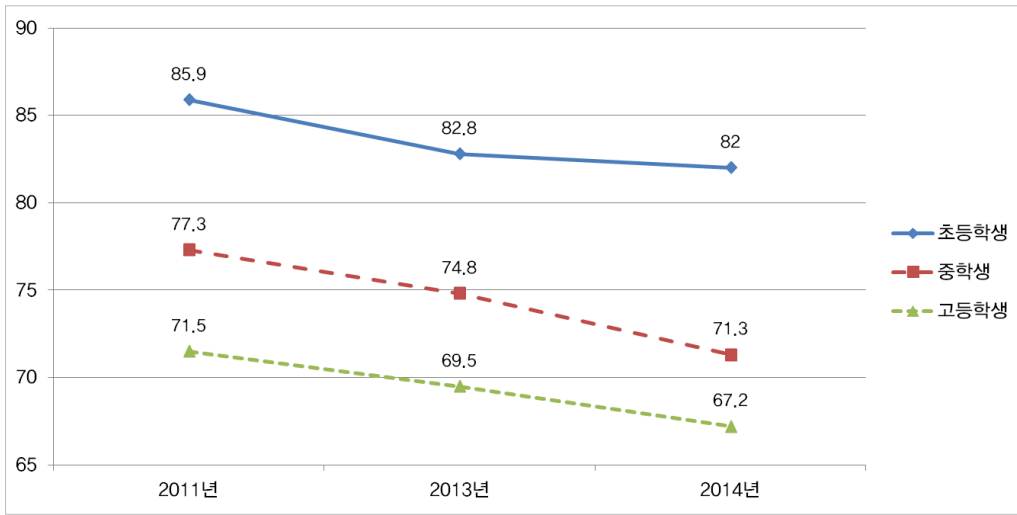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또 충실한 학교생활의 시작에 있어 아침식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아침식사 결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27.2%의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고(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18.8%,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8.4%), 72.8%의 응답자는 보통 또는 거의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유형, 가족유형,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응답자(24.8%, ‘거의’ 또는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보다는 여자응답자(29.8%)가, 학교 교급이 올라갈수록(초 18.1%, 중 28.7%, 일반/특목/자율 29.3%, 특성화고 49.7%), 또 양부모가정(26%)이나 조손(29.2%) 및 기타가정(27.8%)에서보다 한부모가정(47%)에서,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응답자들에게서 등교 전 아침식사를 거의 또는 보통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상 21.5%, 중 29%, 하 38.7%). 특히 전체적인 결식률이 27.2%에 것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들과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은 각각 49.7%, 47%로 절반에 가까운 매우 높은 결식률을 보여, 이들의 결식현황과 영양상태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IV-4-29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전체(N)	$\chi^2$
전체		18.8	8.4	15.4	57.4	100.0(10,351)	—
성별	남자	16.7	8.1	15.9	59.2	100.0(5,399)	35.393***
	여자	21.0	8.8	14.8	55.3	100.0(4,95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4	6.7	14.0	68.0	100.0(2,939)	381.678***
	중학교	19.2	9.5	15.2	56.1	100.0(3,624)	
	일반/특목/자율고	21.2	8.1	17.1	53.7	100.0(3,119)	
	특성화고	37.5	12.2	15.4	34.9	100.0(66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7	8.3	15.5	58.4	100.0(9,653)	139.524***
	한부모가정	36.7	10.3	13.2	39.8	100.0(557)	
	조손가정	24.4	4.8	21.8	49.0	100.0(39)	
	기타	18.8	9.0	13.7	58.5	100.0(102)	
경제적 수준	상	14.1	7.4	15.3	63.2	100.0(4,641)	219.013***
	중	20.1	8.9	15.9	55.1	100.0(4,007)	
	하	28.7	10.0	14.6	46.7	100.0(1,633)	

\*\*\*p<.001



\* 주: '보통 하는 편이다'와 '거의 매일하는 편이다'의 합계 / 단위(%)

【그림 IV-4-3】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지에 대한 3개년 조사결과를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그림 IV-43】과 같이 모든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아침식사 비율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은 2011년에는 85.9%가 아침식사를 보통 또는 거의 매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에는 82.8%, 2014년에는 82%로 감소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그 감소폭은 더 컸다. 중학생은 2011년에는 77.3%, 2013년에는 74.8%, 2014년에는 71.3%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2011년에는 71.5%, 2013년에는 69.5%, 2014년에는 67.2%로 나타나 아침식사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표 IV-4-30>), 전체의 31.7%가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와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인 23.3%, 23.2%로 나타났고,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8%, '식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는 5.6%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0.7%,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결식한다는 비율은 0.3%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타응답으로는 소화문제가거나, 귀찮음, 또는 습관이 안돼서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등교 전 결식이유를 학교 및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흥미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42.4%,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인 것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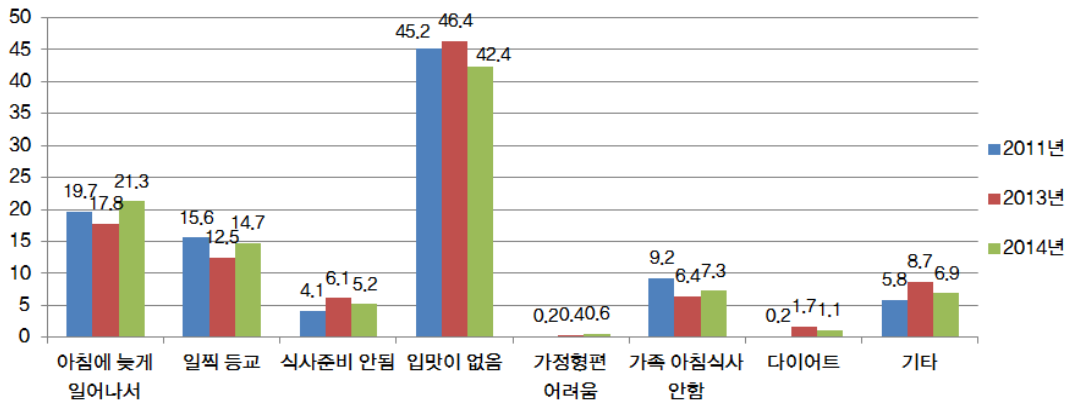
‘학교에 일찍 가서’라는 이유가 아침결식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특목/자율고 30.2%, 특성화고 30.9%).

표 IV-4-30 아침식사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	식사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되어서	다이 어트를 위해서	기타	전체(N)
전체		23.3	23.2	5.6	31.7	0.3	8.0	0.7	7.0	100.0(2,8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21.3	14.7	5.2	42.4	0.6	7.3	1.1	6.9	100.0(526)
	중학교	23.3	18.8	5.1	36.0	0.1	9.0	0.7	6.9	100.0(1,034)
	일반/특목/자율고	27.6	30.2	5.5	22.8	0.4	7.0	0.6	6.0	100.0(912)
	특성화고	15.2	30.9	8.0	25.9	0.0	9.1	0.4	10.5	100.0(3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1	23.2	5.0	32.0	0.2	7.7	0.7	7.0	100.0(2,501)
	한부모가정	14.5	23.2	11.6	30.4	1.0	11.1	1.3	7.0	100.0(261)
	조손가정	36.0	14.1	8.5	19.7	0.0	17.0	0.0	4.8	100.0(11)
	기타	32.3	24.4	0.0	27.6	0.0	3.1	0.0	12.6	100.0(28)
경제적 수준	상	24.1	19.2	4.1	37.6	0.1	6.6	0.7	7.3	100.0(994)
	중	23.0	24.5	5.8	31.4	0.2	8.2	0.6	6.3	100.0(1,158)
	하	22.2	27.0	7.7	23.5	0.7	10.2	1.0	7.6	100.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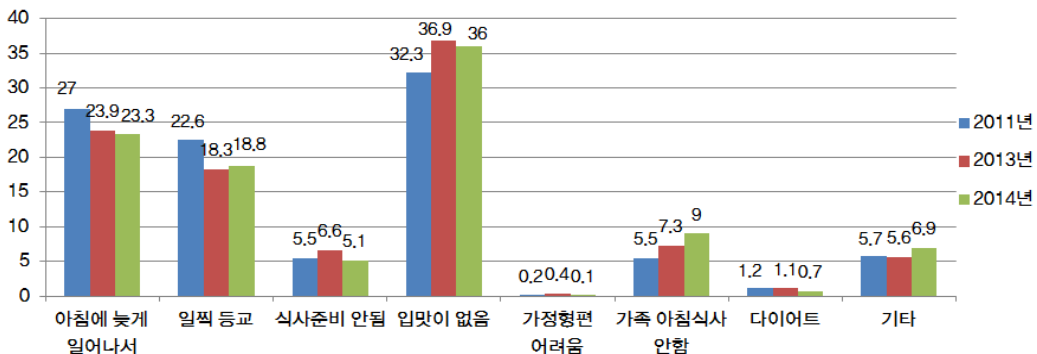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나(각각 32%, 30%), 조손가정과 기타가정의 경우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각각 36%, 32.3%로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식사가 준비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다른 가정유형에서보다(5%~8.5%) 상대적으로 높은 11.6%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정의 경우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의 이유가 17%로 다른 가정유형에서보다(3.1%~11.1%) 높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중간 또는 상위계층인 응답자의 경우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결식한다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정에서는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27%),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2.2%),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23.5%)가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등교전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교급별로 나누어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도별로 특별한 경향성을 보기 어려웠으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또는 일찍 등교하거나 가족이 아침식사를 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소폭 감소하다가 2014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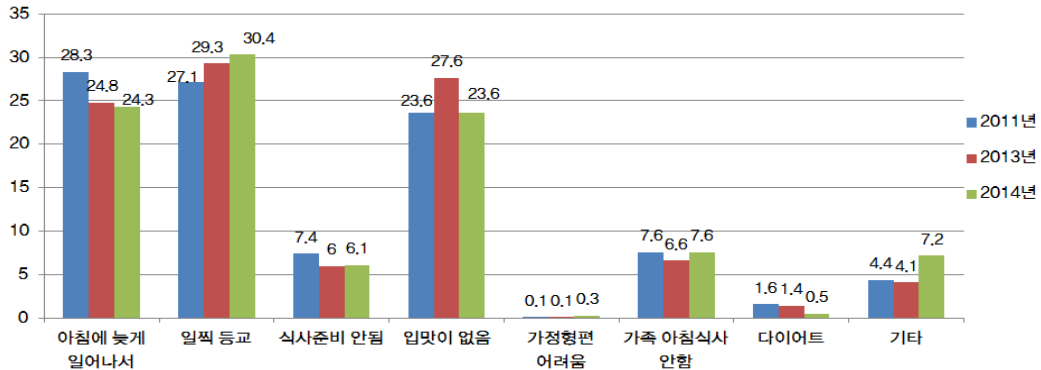
【그림 IV-4-4】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단위(%)

중학생의 경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안한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부터 감소한 것에 비해, 가족이 아침식사를 안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식을 한다는 이유에 대한 응답률이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등교 전 아침결식에 대해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라는 응답은 2011년 이후에 감소한 데 비해, 일찍 등교하기 때문에 결식한다는 응답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에는 27.1%, 2013년에는 29.3%, 2014년에는 30.4%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2013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2014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V-4-5】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단위:%





【그림 IV-4-6】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고등학생)/ 단위: %

등교 전 아침식사 정도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하는 경우 스스로를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운동실천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들은 아침식사와 운동실천 빈도가 높을수록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31 아침식사정도에 따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구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전체(N)	$\chi^2$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26.0	7.2	16.5	50.2	100.0(123)	141.119***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23.0	10.6	16.1	50.3	100.0(1468)	
	건강한 편이다	19.7	8.6	16.0	55.7	100.0(6584)	
	매우 건강하다	12.8	6.6	13.2	67.4	100.0(2146)	

\*\*\*p<.001

등교 전 아침식사와 건강을 위한 운동실천율,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IV-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침식사 빈도와 건강을 위한 운동 빈도( $r=.808$ ), 그리고 아침식사 빈도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904$ ).

표 IV-4-32 상관분석: 아침식사, 건강을 위한 운동,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아침식사 빈도	건강을 위한 운동 빈도
건강을 위한 운동 빈도	.808**	—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904**	.292**

\*\*p<.01

### ③ 수면시간

아동·청소년의 평균적인 수면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등교 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하였다. 본 조사의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기상시간은 아침 6시 54분이었으며, 평균취침시간은 밤 11시 48분이었다. 학교급별 기상시간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7시 15분, 중학생 7시 1분, 고등학생 6시 31분이었으며,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평균 취침시간을 보면 초등학생은 밤 10시 46분, 중학생은 밤 11시 42분, 고등학생은 밤 12시 42분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밤 12시 48분이었고, 특성화고 학생은 밤 12시 11분이어서,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취침시간이 30분 이상 더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평균 수면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8분이었는데, 남자는 7시 15분, 여자는 7시간이 평균적인 수면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학교 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초등학생은 8시간 29분, 중학생은 7시간 20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5시간 46분으로 수면시간이 가장 적었고, 특성화고 학생은 6시 24분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은 7시 08분,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6시 55분, 조손가정은 7시 36분, 기타가정은 7시 4분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이 가장 적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은 7시 22분, 중간인 경우는 7시 05분, 하위계층에서는 6시 35분이어서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일수록 수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3 수면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6시간 미만	6시간-7시간 미만	7시간-8시간 미만	8시간-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수면시간	전체(N)
전체		5.6	16.2	20.3	24.6	21.8	11.6	7시 08분	100.0(10454)
성별	남자	5.0	14.1	19.0	25.6	23.5	12.7	7시 15분	100.0(5461)
	여자	6.2	18.6	21.7	23.4	19.8	10.3	7시 00분	100.0(4993)
학교 유형	초등학교	0.3	0.7	3.8	17.2	43.6	34.4	8시 29분	100.0(2966)
	중학교	1.3	6.0	20.9	42.0	24.7	4.9	7시 20분	100.0(3549)
	일반/특목/자율고	15.0	42.0	31.4	10.1	1.4	0.1	5시 46분	100.0(3161)
	특성화고	7.9	19.0	37.0	30.1	5.0	0.9	6시 24분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5	16.2	20.1	24.4	22.0	11.8	7시 08분	100.0(9747)
	한부모가정	8.0	16.4	23.1	26.0	17.7	8.8	6시 55분	100.0(560)
	조손가정	0.0	13.7	17.1	23.1	28.3	17.8	7시 36분	100.0(41)
	기타	3.1	14.6	20.8	36.0	22.4	3.3	7시 04분	100.0(106)
경제적 수준	상	4.5	13.4	17.2	23.9	25.7	15.2	7시 22분	100.0(4689)
	중	5.3	16.7	21.2	26.0	20.6	10.2	7시 05분	100.0(4045)
	하	9.2	22.9	27.1	22.3	13.7	4.8	6시 35분	100.0(1648)

본 조사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5.8%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73%)과 한부모가정(61.3%),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위계층 가정(69%)에서 더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7.3%, 중학생은 53.9% 정도였으나,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73%, 특성화고 학생은 67.5%가 수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 3명 중 2명은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시로 특히 부담을 많이 갖는 학교유형의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학업으로 인한 수면부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 응답자의 61.3%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양부모가정에서의 55.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에 있는 응답자는 과반수인 50.3%, 중간인 경우는 56.8%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계층의 응답자는 69%로 응답에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일수록 수면부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표 IV-4-34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chi^2$
전체		55.8	44.2	100.0(10,439)	-
학교 유형	초등학교	37.3	62.7	100.0(2,969)	834.451***
	중학교	53.9	46.1	100.0(3,654)	
	일반/특목/자율고	73.0	27.0	100.0(3,142)	
	특성화고	67.5	32.5	100.0(6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5.5	44.5	100.0(9,732)	7.839*
	한부모가정	61.3	38.7	100.0(559)	
	조손가정	59.6	40.4	100.0(41)	
	기타	57.4	42.6	100.0(106)	
경제적 수준	상	50.3	49.7	100.0(4,687)	174.692***
	중	56.8	43.2	100.0(4,036)	
	하	69.0	31.0	100.0(1,645)	

\*p&lt;.05, \*\*\*p&lt;.001

수면 부족 여부에 따른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4-35>와 같다.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이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약 74%에 달했고,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를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7.2%여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를 건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5 수면부족여부에 따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chi^2$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72.5	27.5	100.0(124)	308.794***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71.3	28.7	100.0(1486)	
	건강한 편이다	56.3	43.7	100.0(6628)	
	매우 건강하다	42.8	57.2	100.0(2170)	

\*p&lt;.05, \*\*\*p&lt;.001

수면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아동·청소년들은 1순위로 '학원·과외'(22.1%)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수면 부족 이유는 야간자율학습(15%), 채팅 및 문자

메시지(14.7%), 가정학습(14.2%), 드라마·영화 시청 및 음악 청취(13.4%), 게임(10.9%), 기타(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36 수면부족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게임	채팅/ 문자 메시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 성인물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15.0	22.1	14.2	10.9	14.7	0.5	13.4	9.3	100.0(5,816)
성별	남자	17.0	21.9	12.3	15.3	9.8	0.8	13.0	9.9	100.0(2,889)
	여자	12.9	22.2	16.0	6.6	19.5	0.3	13.8	8.6	100.0(2,9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0.0	30.6	24.1	9.3	7.0	0.7	18.4	10.0	100.0(1,101)
	중학교	2.3	30.3	11.6	14.7	18.7	0.5	14.2	7.8	100.0(1,966)
	일반/특목/자율고	33.6	13.9	13.6	6.7	12.6	0.4	9.8	9.3	100.0(2,293)
	특성화고	11.8	7.2	4.5	19.9	26.3	0.8	15.8	13.7	100.0(45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1	22.5	14.6	10.5	14.5	0.5	13.1	9.2	100.0(5,390)
	한부모가정	12.6	16.4	9.4	15.5	16.9	0.5	17.4	11.4	100.0(343)
	조손가정	23.4	8.3	11.2	23.2	23.2	0.0	8.3	2.4	100.0(23)
	기타	16.4	25.6	7.6	19.7	10.4	1.4	15.6	3.2	100.0(60)
경제적 수준	상	13.4	25.6	16.6	10.0	11.3	0.7	13.0	9.3	100.0(2,354)
	중	14.2	22.0	13.8	11.0	16.9	0.3	13.4	8.4	100.0(2,286)
	하	20.0	14.5	10.0	12.5	17.2	0.5	14.1	11.1	100.0(1,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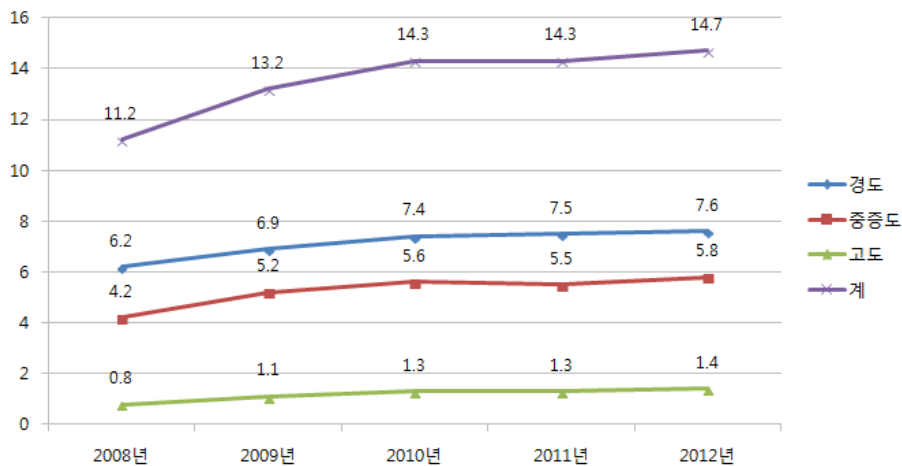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과 같은 배경변인별로도 학원·과외 때문에 수면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부분적으로 다른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학교유형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원과 과외(각각 30.6%, 30.3%)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33.4%), 특성화고 학생들은 채팅·문자 메시지(26.3%) 등을 수면부족이유로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정과 기타가정에서 학원·과외를 수면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22.5%), 한부모가정에서는 드라마·영화시청 및 음악청취가 17.4%로 가장 높았으며, 채팅·문자 메시지와 학원·과외가 유사한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수면부족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야간자율학습과 게임, 채팅·문자 메시지가 거의 동일한 비율(23.

2%~2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경제적으로 중간 및 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학원·과외를, 하위계층인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을 수면부족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렇게 수면부족 이유에 따라 배경변인의 각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 했지만, 대부분의 집단에서 학원·과외, 야간자율학습이 가장 높은 비율의 수면부족 이유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조사대상 응답자들은 대체로 수면부족 이유를 학업 때문인 것으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 ④ 비만을

아동·청소년의 신체건강과 관련하여 비만을 살펴보면 <표 IV-4-37>와 【그림 IV-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비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에는 11.2%였던 비만율(경도+중등도+고도비만)은 2009년 13.2%, 2010년도 14.3%, 2011년 14.3%, 2012년에는 1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V-4-7】 비만율 추이(2008년~2012년)/ 단위(%)

표 IV-4-37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을 (단위 : %)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08		88.8	6.2	4.2	0.8	11.2	
2009		86.8	6.9	5.2	1.1	13.2	
2010		85.8	7.4	5.6	1.3	14.3	
2011		85.7	7.5	5.5	1.3	14.3	
2012	전체		85.3	7.6	5.8	1.4	14.7
	초등학생	전체	85.8	7.7	5.6	1.0	14.2
		남학생	83.6	8.5	6.6	1.2	16.4
		여학생	88.3	6.7	4.3	0.7	11.7
	중학생	전체	85.4	7.6	5.8	1.3	14.6
		남학생	83.9	7.9	6.7	1.5	16.1
		여학생	87.1	7.2	4.7	1.0	12.9
	고등학생	전체	84.4	7.5	6.1	2.1	15.6
		남학생	83.7	7.4	6.7	2.2	16.3
		여학생	85.1	7.5	5.5	2.0	14.9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12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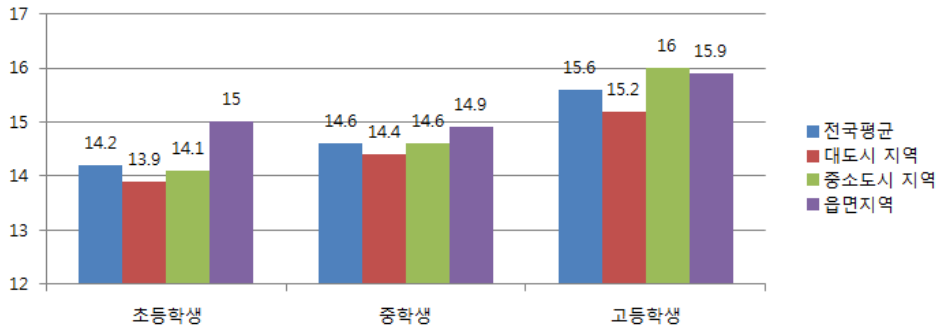
<http://www.moe.go.kr/web/110501/ko/board/view.do?bbsId=348&boardSeq=51593>

\* 주 : 1)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서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경도비만(20% 이상~30% 미만), 중등도 비만(30% 이상~50% 미만), 고도비만(50% 이상)으로 구분

2) 비만도(%) = (측정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 × 100

3)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이를 성별 및 교급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비만율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남자 초등학생의 비만율이 1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남자 고등학생 16.3%, 남자 중학생 16.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여자 고등학생이 14.9%로 가장 높았고, 여자 중학생이 12.9%, 여자 초등학생이 11.7%의 비만율을 보였다.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고도비만의 경우는 남녀 고등학생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건강을 위한 운동 실천율이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낮은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 비만율을 보면, 모든 교급별로 대도시 지역에서보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읍면지역에서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12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http://www.moe.go.kr/web/110501/ko/board/view.do?bbsId=348&boardSeq=51593>

\* 주 : 1) 비만도(%) = (측정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 × 100

2) 표준체중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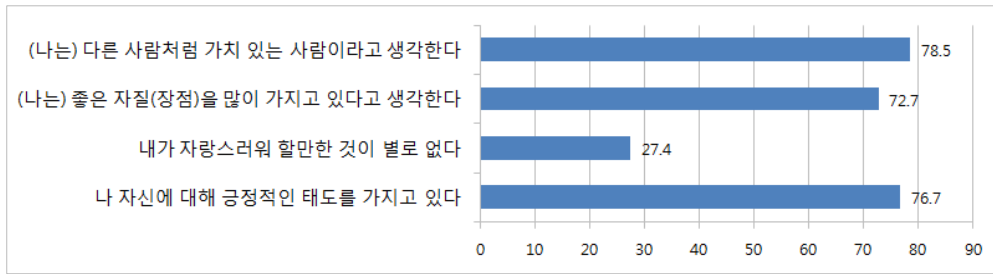
【그림 IV-4-8】 최근 5년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비만율(%)

### (3) 정신적 건강

#### ① 자아존중감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4-38>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학교 및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자아존중감의 4가지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만을 살펴보면 【그림 IV-4-9】와 같이, 자신에 대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편이다'와 '매우그렇다'의 합친 비율/ 단위:%

【그림 IV-4-9】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먼저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의 78.5%가 긍정적으로 응답(그런 편이다 50.7%, 매우 그렇다 27.8%) 하였다. 특히 스스로를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대상들의 긍정적인 응답을 각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유형 중에서는 특성화고 재학생(72.8%)이 다른 학생들보다(초 75.4%, 중 80.7%, 일반고 80.1%), 가정유형 중에서는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2%)이 다른 가정유형에서보다(양부모 79.1%, 한부모 71.3%, 기타 68.5%) 스스로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낮았다. 학업성적(상 87.8%, 중 78.8% 하 67.5%)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상 82.3%, 중 77.5%, 하 70.4%)에서는 각각 '하' 집단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표 IV-4-38 자아존중감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6.6	14.9	50.7	27.8	100.0(10,437)	—
	학교 유형	초등학교	13.4	11.2	39.2	36.2	100.0(2,963)	620.961***
		중학교	4.9	14.4	53.2	27.5	100.0(3,657)	
		일반/특목/자율고	2.9	17.0	57.5	22.6	100.0(3,161)	
		특성화고	3.8	23.3	56.2	16.6	100.0(6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5	14.4	50.8	28.3	100.0(9,752)	65.651***
		한부모가정	6.8	21.9	53.0	18.3	100.0(561)	
		조손가정	21.0	17.0	44.4	17.6	100.0(41)	
		기타	10.5	21.0	37.7	30.8	100.0(108)	
	학업 성적	상	5.3	7.0	45.6	42.2	100.0(3,225)	758.417***
		중	6.8	14.4	54.2	24.6	100.0(4,408)	
		하	7.8	24.8	51.5	16.0	100.0(2,74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경제적 수준	상	7.2	10.5	47.5	34.8	100.0(4,690)	342.262***
		중	6.4	16.0	54.2	23.3	100.0(4,045)	
		하	5.5	24.0	51.6	18.8	100.0(1,653)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5.0	22.3	50.2	22.5	100.0(10,437)	-
	학교 유형	초등학교	7.3	15.4	46.1	31.2	100.0(2,944)	337.301***
		중학교	4.7	23.2	50.8	21.3	100.0(3,656)	
		일반/특목/자율고	3.5	25.2	53.5	17.8	100.0(3,157)	
		특성화고	3.9	33.2	50.3	12.6	100.0(6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7	21.8	50.5	23.0	100.0(9,728)	80.176***
		한부모가정	7.7	31.0	47.3	14.0	100.0(561)	
		조손가정	16.1	20.1	45.5	18.3	100.0(41)	
		기타	14.4	20.9	44.3	20.4	100.0(107)	
	학업 성적	상	3.2	11.6	49.9	35.3	100.0(3,218)	836.766***
		중	4.2	22.4	54.1	19.4	100.0(4,397)	
		하	8.1	34.8	44.5	12.7	100.0(2,742)	
	경제적 수준	상	4.9	15.0	50.8	29.3	100.0(4,679)	453.941***
		중	4.3	25.7	52.3	17.7	100.0(4,036)	
		하	6.7	34.6	43.5	15.2	100.0(1,651)	
내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전체		33.1	39.6	24.3	3.1	100.0(10,438)	-
	학교 유형	초등학교	50.9	32.8	13.8	2.5	100.0(2,946)	760.488***
		중학교	31.4	41.8	23.8	3.0	100.0(3,654)	
		일반/특목/자율고	21.3	43.3	31.9	3.6	100.0(3,161)	
		특성화고	19.8	40.2	37.0	3.0	100.0(6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7	39.6	23.7	2.9	100.0(9,728)	46.533***
		한부모가정	23.4	39.5	32.4	4.7	100.0(560)	
		조손가정	30.5	39.3	26.4	3.9	100.0(41)	
		기타	28.2	34.3	30.8	6.7	100.0(108)	
	학업 성적	상	46.7	38.2	13.4	1.6	100.0(3,216)	790.049***
		중	31.5	42.1	24.0	2.4	100.0(4,399)	
		하	19.5	37.4	37.4	5.7	100.0(2,741)	
	경제적 수준	상	43.6	37.4	16.7	2.3	100.0(4,681)	685.169***
		중	27.7	43.1	26.7	2.6	100.0(4,031)	
		하	16.7	37.6	39.6	6.1	100.0(1,652)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체	4.3	18.9	51.2	25.5	100.0(10,448)	—
	학교 유형	초등학교	6.5	15.0	43.8	100.0(2,950)	346.438***
		중학교	4.0	18.1	51.9	100.0(3,657)	
		일반/특목/자율고	2.8	21.7	57.1	100.0(3,161)	
		특성화고	3.3	27.1	52.7	100.0(6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	18.2	51.8	100.0(9,740)	66.408***
		한부모가정	4.5	29.7	44.6	100.0(559)	
		조손가정	9.3	18.7	43.3	100.0(41)	
		기타	10.9	25.4	40.1	100.0(108)	
	학업 성적	상	3.3	11.1	49.1	100.0(3,221)	530.890***
		중	3.7	18.7	54.4	100.0(4,399)	
		하	6.2	28.3	48.9	100.0(2,746)	
	경제적 수준	상	4.3	13.7	49.7	100.0(4,683)	379.910***
		중	4.1	20.1	53.7	100.0(4,037)	
		하	4.8	30.5	50.1	100.0(1,655)	

\*\*p<.01, \*\*\*p<.001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 77.3%, 중학생 72.1%, 일반/특목/자율고생이 71.3%인데 비해 특성화고 재학생은 62.9%에 불과했으며,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61.3%)의 아동·청소년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양부모 73.5%, 조손 63.8%, 기타 64.7%). 학업성적(상 85.2%, 중 73.5%, 하 57.2%)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80.1%, 중 70%, 하 58.7%) 역시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항목의 경우에는 전체의 27.4%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72.7%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였다. 학교유형 중에서는 초등학생 16.3%, 중학생 26.8%,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35.5%인데 비해, 특성화고 재학생은 40%로 매우 높았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양부모가정이 26.6%인 것에 비해 한부모(37.1%)·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37.5%)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학업성적이 ‘상’인 아동·청소년은 15%, ‘중’은 26.4%에 불과했으나, ‘하’인 아동·청소년은 43.1%가, 그리고 경제적 수준 역시 ‘상’은 19%, ‘중’은 29.3%인데 비해, ‘하’인 아동·청소년은 45.7%로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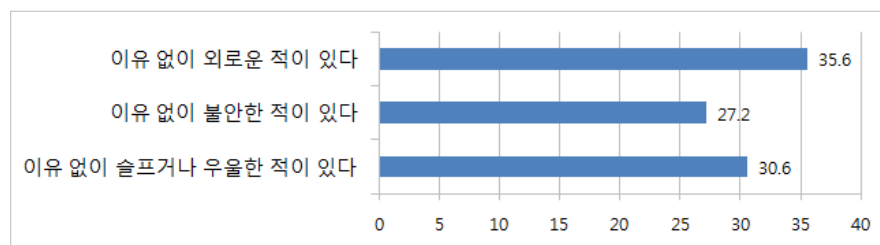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76.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다른 학교유형(초 78.4%, 중 77.9%, 일반고 75.5%)에서 보다는 특성화고 학생이(69.6%), 다른 가정유형(양부모 77.6%, 조손 72%, 한부모 65.9%)보다 기타가정(63.7%)에서, 또 낮은 학업성적(상 85.6%, 중 77.6%, 하 65.4%)과 경제적 수준(상 82.1%, 중 75.9%, 하 64.7%)의 배경변인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4가지 항목에서 조사대상자의 70%이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배경변인별로는 모든 학교유형 중에서는 특성화고 재학생이, 그리고 양부모가정보다 한부모·조손·기타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또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많이 보여 이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② 우울증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정도에 대한 조사는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학교유형 및 가족유형, 그리고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항목 중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항목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3명중 한명 이상이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그런편이다’와 ‘매우그렇다’의 합친 비율(%)

【그림 IV-4-10】 우울정도 항목별 비교

조사대상의 32.6%가 그렇다고 응답한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자(23.9%) 보다는 여자응답자(42%), 다른 학교유형보다는(초 17.3%, 중 30.9%, 일반/특목/자율고 45.7%)

특성화고 재학생(46.6%)이 더 이유없이 외로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유형별로는 조손가정 42.1%, 한부모가정 40.8%, 양부모가정 32%, 기타가정 31.8%순이었고,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상 26.4%, 중 32.5%, 하 50%)이 낮을수록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표 IV-4-39 우울증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전체		38.3	29.1	27.3	5.3	100.0(10,471)	—
	성별	남자	47.7	28.4	20.4	3.5	100.0(5,466)	531.045***
		여자	28.1	29.9	34.8	7.2	100.0(5,005)	
	학교 유형	초등학교	61.2	21.5	14.2	3.1	100.0(2,969)	1213.053***
		중학교	37.8	31.4	26.3	4.6	100.0(3,659)	
		일반/특목/자율고	21.3	33.0	38.0	7.7	100.0(3,163)	
		특성화고	21.0	32.3	39.7	6.9	100.0(68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8	29.2	27.0	5.0	100.0(9,760)	36.281***
		한부모가정	30.9	28.2	31.4	9.4	100.0(562)	
		조손가정	37.7	20.2	37.7	4.4	100.0(41)	
		기타	36.5	31.8	28.1	3.7	100.0(108)	
	경제적 수준	상	46.2	27.3	22.2	4.2	100.0(4,697)	450.827***
		중	36.5	31.0	28.0	4.5	100.0(4,047)	
		하	20.8	29.2	39.8	10.2	100.0(1,654)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전체		43.9	28.9	22.3	4.9	100.0(10,467)	—
	성별	남자	51.8	28.0	16.7	3.4	100.0(5,463)	374.544***
		여자	35.3	29.8	28.4	6.5	100.0(5,004)	
	학교 유형	초등학교	66.6	19.6	10.9	2.9	100.0(2,968)	1101.911***
		중학교	43.1	30.6	21.9	4.3	100.0(3,657)	
		일반/특목/자율고	27.1	34.2	31.5	7.2	100.0(3,164)	
		특성화고	27.8	35.5	31.4	5.4	100.0(6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4.6	28.7	21.9	4.8	100.0(9,757)	32.362***
		한부모가정	33.6	30.9	28.8	6.7	100.0(561)	
		조손가정	41.2	32.5	22.2	4.1	100.0(41)	
		기타	40.0	33.2	22.4	4.4	100.0(108)	
	경제적 수준	상	52.9	24.6	18.5	3.9	100.0(4,695)	443.286***
		중	41.0	32.0	22.8	4.2	100.0(4,046)	
		하	25.8	33.3	31.9	9.1	100.0(1,65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전체		42.7	26.6	25.0	5.6	100.0(10,467)	—
	성별	남자	53.4	27.3	16.1	3.3	100.0(5,464)	780.977***
		여자	31.1	25.9	34.8	8.1	100.0(5,003)	
	학교 유형	초등학교	66.3	18.2	12.1	3.4	100.0(2,967)	1200.626***
		중학교	41.8	28.8	24.4	5.0	100.0(3,658)	
		일반/특목/자율고	25.3	31.2	35.9	7.6	100.0(3,163)	
		특성화고	26.5	30.3	34.8	8.5	100.0(6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3.4	26.4	24.8	5.4	100.0(9,757)	37.633***
		한부모가정	32.3	29.1	29.4	9.3	100.0(561)	
		조손가정	39.3	30.9	24.0	5.8	100.0(41)	
		기타	41.2	30.2	24.5	4.1	100.0(108)	
	경제적 수준	상	50.9	24.4	20.5	4.2	100.0(4,695)	442.660***
		중	40.5	28.6	26.1	4.8	100.0(4,045)	
		하	25.4	27.9	35.3	11.4	100.0(1,653)	

\*p<.05, \*\*p<.01, \*\*\*p<.001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2%가 그런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는데, 역시 남자(20.1%)보다는 여자 아동·청소년의 응답이 더 높았고(34.9%), 학교유형별로 초등학생 13.8%, 중학생 26.2%,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38.7%, 특성화고 학생 36.8%로 나타났다. 가족유형 중에서는 다른 가족유형보다(양부모 26.7%, 한부모 35.5%, 조손 26.3%, 기타 26.8%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수준(상 22.4%, 중 27%, 하 41%)이 낮은 가정의 응답자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대상 30.6%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그런 편이다 25.0%, 매우 그렇다 5.6%),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 아동·청소년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42.9%). 초등학생은 15.5%, 중학생은 29.4%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과 상관없이 고등학생이 초·중등생보다 역시 훨씬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일반/특목/자율고 43.5%, 특성화고 43.3%).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38.7%),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30.2%), 조손가정(29.8%), 기타가정(28.6%)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상 24.7%), 중 30.9%, 하 46.7%)이 가장 낮은 경우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우울정도에서 여자응답자의 조사결과가 남자보다 훨씬 정도가 높았고,

초·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양부모가정에서보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의 각각의 하위척도의 신뢰도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Cronbach's  $\alpha$  값은 .790, 우울증의 Cronbach's  $\alpha$  는 .893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척도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표 IV-4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4-40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의 하위척도 신뢰도**

하위척도	하위척도별 내용	Cronbach's $\alpha$
자아존중감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90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울증	이유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893
	이유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인 배경변인별 특성을 보면,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 아동·청소년보다, 그리고 특성화고 재학생이 다른 학교유형 및 교급보다,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양부모가정에서보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증의 경우 더 높은 평균치를 보인 배경변인별 특성을 보면, 남자응답자보다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다른 유형의 학교재학생보다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이, 그리고 다른 가족유형에서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4-41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자아존중감			우울증		
		Mean	SD	t/F(Scheffé)	Mean	SD	t/F(Scheffé)
전체		2.98	.637	—	1.94	.845	—
성별	남	3.00	.638	4.400***	1.74	.777	-26.122***
	여	2.95	.634		2.16	.86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9	.661	70.188*** (ab, ac, ad, bc, bd, cd)	1.54	.742	449.449*** (ab, ac, ad, bc, bd)
	중학교	2.98	.631		1.93	.819	
	일반/특목/자율고	2.90	.607		2.26	.813	
	특성화고	2.80	.597		2.24	.81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9	.631	21.652*** (ef, eh)	1.92	.842	12.309*** (ef)
	한부모가정	2.79	.662		2.15	.889	
	조손가정	2.78	.664		1.98	.805	
	기타	2.81	.773		1.94	.825	
학업 성적	상	3.23	.592	543.872*** (ij, ik, jk)	1.84	.838	108.117*** (ij, ik, jk)
	중	2.96	.597		1.88	.820	
	하	2.71	.630		2.13	.862	
경제적 수준	상	3.12	.621	270.571*** (lm, ln, mn)	1.79	.819	257.968*** (lm, ln, mn)
	중	2.92	.608		1.95	.826	
	하	2.73	.642		2.32	.842	

\*\*\*p<.001

\* 주: 학교유형(a=초등학교, b=중학교, c=일반/특목/자율, d=특성화고), 가족유형(e=양부모가정, f=한부모가정, g=조손가정, h=기타), 학업성적(i=상, j=중, k=하), 경제적 수준(l=상, m=중, n=하)

### ③ 스트레스 인지율

가장 최근 조사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3)에 따르면 학교 교급이 올라갈수록 아동·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중1학생은 35.7%, 중2학생은 40.3%, 중3학생은 41.2%, 고1학생은 40.3%, 고2학생은 44.7%, 고3학생은 46.1%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5년 전인 2009년도와 비교하면 중1학생과 고2학생과 고3학생의 경우 각각 4.4%, 2%, 7.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2~중3학생과 고2학생의 경우는 각각 0.9%, 0.7%,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2 스트레스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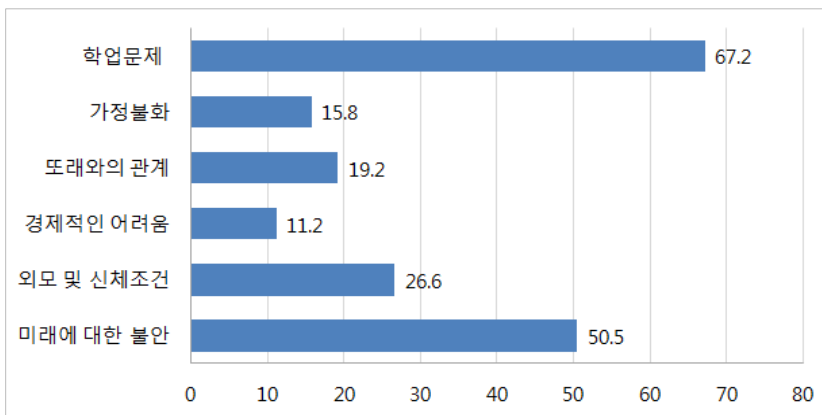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40.1	39.4	40.5	42.3	44.4	53.4
2010	39.9	40.7	41.7	42.8	44.8	53.2
2011	36.9	39.2	40.8	41.1	43.5	50.5
2012	37.0	38.8	40.7	43.7	44.2	46.3
2013	35.7	40.3	41.2	40.3	44.7	46.1

\*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 206-207.

\* 주: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본 연구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그림 IV-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2%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런편이다 42.8%, 매우 그렇다 24.4%), 본 조사의 스트레스 원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비율/ 단위:%

【그림 IV-4-11】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그 다음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50.5%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스트레스도 26.6%가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래와의 관계에는 응답자의 19.2%가, 가정불화는 15.8%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1.2%로 가장 낮았다.

스트레스원인에 따른 학교유형별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으로 나타난 학업문제의 경우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86.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특성/자율고 학생 다음으로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느낀 비율은 중학생(70.2%), 특성화고 재학생(66.5%), 초등학생(43.1%)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의 70%가 그리고 초등학생의 40%가 넘는 비율이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전체적인 응답은 15.8%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그 중 특성화고 재학생이 1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16.3%, 초등학생 15.8%, 중학생 14.8%순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9.2%의 응답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중학생이 2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특성화고 학생(20.2%), 일반/특목/자율고 학생(19.6%), 초등학생 17.3%순이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재학생이(24.8%) 다른 교급 학생들보다(초 5.9%, 중 8.7%, 일반/특목/자율 16.4%) 상대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해서는 전체 26.6%의 응답자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는데, 특성화고 재학생이 3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 34.8%, 중학생 26.5%, 초등학생 15.1%로 나타났다. 학업문제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인 미래(장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의 79.4%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입시와 관련한 부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특성화고 재학생 73.4%, 중학생 50.2%, 초등학생 1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43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학업 문제	전체	13.2	19.6	42.8	24.4	100.0(10,465)	1512.322***
	초등학교	26.4	30.5	30.7	12.4	100.0(2,967)	
	중학교	10.9	18.9	46.4	23.8	100.0(3,654)	
	일반/특목/자율고	3.7	9.7	49.2	37.4	100.0(3,163)	
	특성화고	12.3	21.2	47.1	19.4	100.0(681)	
가정 불화	전체	55.2	28.9	12.9	2.9	100.0(10,453)	112.297***
	초등학교	60.2	24.0	12.0	3.8	100.0(2,965)	
	중학교	56.3	28.9	12.7	2.1	100.0(3,646)	
	일반/특목/자율고	51.5	32.2	13.1	3.2	100.0(3,161)	
	특성화고	45.1	35.0	17.5	2.4	100.0(681)	
또래와의 관계	전체	46.8	33.9	15.8	3.4	100.0(10,453)	186.716***
	초등학교	56.2	26.5	13.6	3.7	100.0(2,961)	
	중학교	45.7	33.9	17.1	3.3	100.0(3,648)	
	일반/특목/자율고	40.9	39.4	16.3	3.3	100.0(3,162)	
	특성화고	39.5	40.3	16.9	3.3	100.0(681)	
경제 적인 어려움	전체	61.0	27.7	9.6	1.6	100.0(10,439)	739.600***
	초등학교	76.9	17.3	4.9	1.0	100.0(2,956)	
	중학교	62.9	28.5	7.5	1.2	100.0(3,644)	
	일반/특목/자율고	48.9	34.7	14.2	2.2	100.0(3,157)	
	특성화고	38.3	36.9	20.4	4.4	100.0(681)	
외모 및 신체 조건	전체	38.8	34.6	21.8	4.8	100.0(10,451)	996.583***
	초등학교	60.6	24.3	11.4	3.7	100.0(2,963)	
	중학교	36.1	37.3	22.0	4.5	100.0(3,648)	
	일반/특목/자율고	24.7	40.6	29.5	5.3	100.0(3,160)	
	특성화고	23.5	37.9	29.4	9.2	100.0(680)	
미래(진로) 에 대한 불안	전체	28.7	20.8	33.0	17.5	100.0(10,448)	3444.439***
	초등학교	62.4	22.7	11.2	3.6	100.0(2,961)	
	중학교	24.5	25.4	37.0	13.2	100.0(3,644)	
	일반/특목/자율고	6.5	14.1	46.5	32.9	100.0(3,162)	
	특성화고	8.0	18.6	44.1	29.3	100.0(681)	

\*\*\*p&lt;.001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평균값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IV-4-44>에서와 같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학업문제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 아동·청소년이, 학교유형 중에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불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학교유형보다 특성화고 재학생에게서, 그리고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아동·청소년이, 학교유형 중에서는 특성화고 재학생이, 가족유형 중에서는 기타가정에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서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대한 평균값이 높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교유형 중에서는 특성화고 재학생에게서, 그리고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 가정에게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과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경우에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보였다.

표 IV-4-44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의 배경변인별 차이

구분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 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성별	남	2.69	.992	1.64	.831	1.59	.771	1.50	.735	1.74	.832	2.28	1.073
	여	2.88	.913	1.63	.800	1.94	.874	1.54	.735	2.13	.908	2.51	1.071
	t	-10.092***		.248		-21.440***		-2.478*		-22.447***		-11.056***	
학교유형	초등학교	2.29	.991	1.59	.843	1.65	.850	1.30	.604	1.58	.831	1.56	.830
	중학교	2.83	.913	1.61	.787	1.78	.844	1.47	.684	1.95	.871	2.39	.995
	일반/특목/자율고	3.20	.760	1.68	.819	1.82	.820	1.70	.793	2.15	.854	3.06	.853
	특성화고	2.74	.911	1.77	.819	1.84	.820	1.91	.870	2.24	.916	2.95	.893
	F(Scheffé)	538.746*** (ab, ac, ad, bc, cd)		13.545*** (ac, ad, bc, bd)		25.719*** (ab, ac, ad)		234.602*** (ab, ac, ad, bc, bd, cd)		266.263*** (ab, ac, ad, bc, bd)		1500.547*** (ab, ac, ad, bc, bd, cd)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2.78	.961	1.62	.806	1.75	.834	1.50	.718	1.91	.886	2.38	1.079
	한부모가정	2.86	.936	1.90	.922	1.88	.893	1.87	.884	2.13	.994	2.63	1.033
	조손가정	2.65	.956	1.93	.911	1.90	.935	1.81	.756	2.02	.851	2.36	1.064
	기타	2.71	.959	1.80	.888	1.97	.973	1.70	.891	1.99	.876	2.40	1.121
	F(Scheffé)	1.740		24.302*** (ef)		7.340*** (ef)		51.611*** (ef, eh)		10.924*** (ef)		9.863*** (ef)	
학업성적	상	2.63	1.006	1.55	.781	1.71	.832	1.39	.663	1.81	.856	2.18	1.070
	중	2.79	.928	1.62	.804	1.72	.817	1.49	.699	1.88	.861	2.32	1.051
	하	2.96	.925	1.77	.858	1.87	.869	1.72	.823	2.14	.936	2.77	1.032
	F(Scheffé)	84.861*** (ij, ik, jk)		56.315*** (ij, ik, jk)		31.879*** (ik, jk)		168.177*** (ij, ik, jk)		118.946*** (ik, jk)		256.316*** (ij, ik, jk)	
경제적 수준	상	2.66	1.002	1.48	.751	1.67	.822	1.25	.516	1.76	.858	2.15	1.070
	중	2.80	.923	1.64	.791	1.76	.821	1.52	.652	1.94	.859	2.46	1.037
	하	3.09	.854	2.05	.900	1.99	.879	2.30	.879	2.34	.916	2.93	.974
	F(Scheffé)	122.610*** (lm, ln, mn)		318.699*** (lm, ln, mn)		93.509*** (lm, ln, mn)		1660.633*** (lm, ln, mn)		270.663*** (lm, ln, mn)		357.818*** (lm, ln, mn)	

\*p<.05, \*\*\*p<.001

\* 주: 학교유형(a=초등학교, b=중학교, c=일반/특목/자율, d=특성화고), 가족유형(e=양부모가정, f=한부모가정, g=조손가정, h=기타), 학업성적(i=상, j=중, k=하), 경제적 수준(l=상, m=중, n=하)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자보다 여자 아동·청소년, 학교유형중에서 특성화고 재학생,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게서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학교유형 중에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에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서도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을 나타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다시 정리하면, 여자아동·청소년이 남자아동·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었고(가정불화 원인 제외), 학교유형 중에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이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로 인한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가정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학교 유형보다 더 높았다. 조손가정은 가정불화에서 다른 가족유형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보였고,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른 가족유형에서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5     스트레스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감 차이**

스트레스유형과 여부		자아존중감			우울감		
		Mean	SD	t	Mean	SD	t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sup>1)</sup>	3.13	.610	17.757***	1.51	.697	-41.261***
	그렇다 <sup>2)</sup>	2.90	.610		2.15	.832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02	.627	15.876***	1.86	.818	-21.362***
	그렇다	2.75	.640		2.35	.866	
또래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03	.626	17.673***	1.80	.785	-35.715***
	그렇다	2.75	.633		2.53	.834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01	.628	16.648***	1.86	.823	-25.601***
	그렇다	2.69	.631		2.51	.808	
외모 및 신체조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08	.615	27.515***	1.75	.778	-40.346***
	그렇다	2.70	.614		2.46	.803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3.13	.636	24.581***	1.56	.712	-50.525***
	그렇다	2.83	.602		2.31	.801	

\*\*\*p<.001 \* 주: 1)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그렇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이러한 유형별 스트레스는 자존감과 우울감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의 평균차이를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집단에서 스트레스 유형과 관계없이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감 평균값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경우는 학업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스트레스가 없다고 한 집단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우울감이 가장 낮은 집단 역시 학업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었다.

#### ④ 행복도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행복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83.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배경변인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4-46 현재 행복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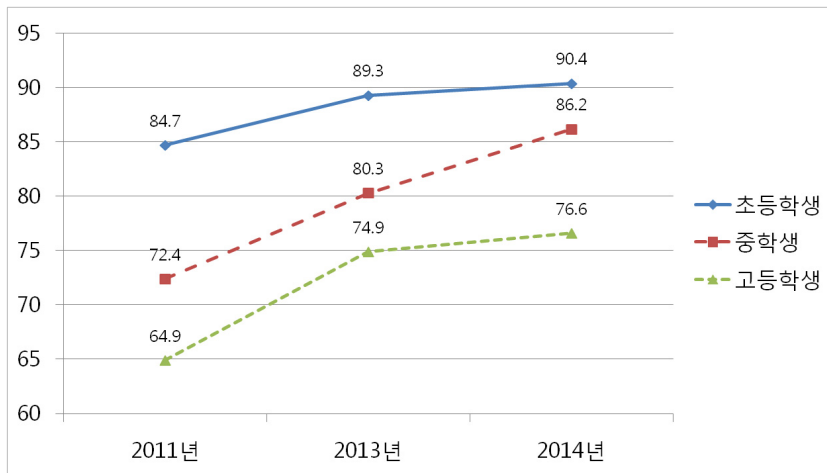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는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chi^2$
전체		1.4	14.8	59.3	24.5	100.0(10,386)	—
성별	남자	1.6	14.3	56.6	27.5	100.0(5,418)	59.114***
	여자	1.2	15.2	62.3	21.3	100.0(4,969)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	8.6	46.8	43.6	100.0(2,932)	1075.421***
	중학교	1.0	12.8	62.3	23.9	100.0(3,633)	
	일반/특목/자율고	2.1	21.1	65.9	10.9	100.0(3,144)	
	특성화고	2.0	22.4	66.9	8.7	100.0(6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	14.3	59.3	25.0	100.0(9,691)	55.926***
	한부모가정	2.2	21.9	60.9	15.0	100.0(555)	
	조손가정	4.0	7.4	59.2	29.5	100.0(39)	
	기타	3.3	19.8	48.6	28.3	100.0(101)	
학업 성적	상	1.2	9.0	57.7	32.1	100.0(3,207)	411.220***
	중	0.9	13.7	60.6	24.8	100.0(4,377)	
	하	2.5	23.0	59.5	15.0	100.0(2,725)	
경제적 수준	상	1.0	10.1	55.3	33.6	100.0(4,651)	692.241***
	중	1.3	14.2	64.5	20.0	100.0(4,027)	
	하	2.9	28.9	58.5	9.7	100.0(1,639)	

\*\*\*p<.001

성별로는 남자(84.1%)보다 여자 아동·청소년(83.6%)의 행복도가 낮았고, 학교유형 중에서는 초등학생이 90.4%, 중학생 86.2%,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 76.8%, 특성화고 재학생 75.6%로 나타나 특성화고 재학생의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84.3%인 것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는 75.9%, 조손가정에서는 88.7%, 기타가정에서는 76.9%여서,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각각 74.5%, 68.2%) 낮은 행복도를 나타냈다.

학교유형별 행복도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점차적으로 행복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행복하다는 응답이 2011년에는 84.7%, 2013년에는 89.3%였다가 2014년에는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도 행복도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2011년에는 72.4%였으나 2013년에는 80.3%, 2014년에는 86.2%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행복도는 2011년에는 64.9%, 2013년에는 74.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2014년에는 76.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그림 IV-4-12】 현재 행복 정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행복하지 않다(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표 IV-4-47>과 같이 나타났다. 역시 스트레스 원인에서의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나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는 응답이 20.6%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가 8.2%,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가 7.7%,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남자아동·청소년에게서, 그리고 학교유형 중에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에게서, 가족유형 중에서는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으로 높은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서 학업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불화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자청소년에게서, 그리고 학교유형 중에서는 초등학생, 가족유형 중에서는 한부모가정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도 가정불화의 행복하지 못한 원인으로 꼽는 비율이 높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자보다 여자 아동·청소년에게서, 학교유형 중에서는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과 특성화고 재학생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낮은 경우에 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보다는 남자 아동·청소년에게서, 학교유형 중에서는 특성화고 재학생에게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인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IV-4-47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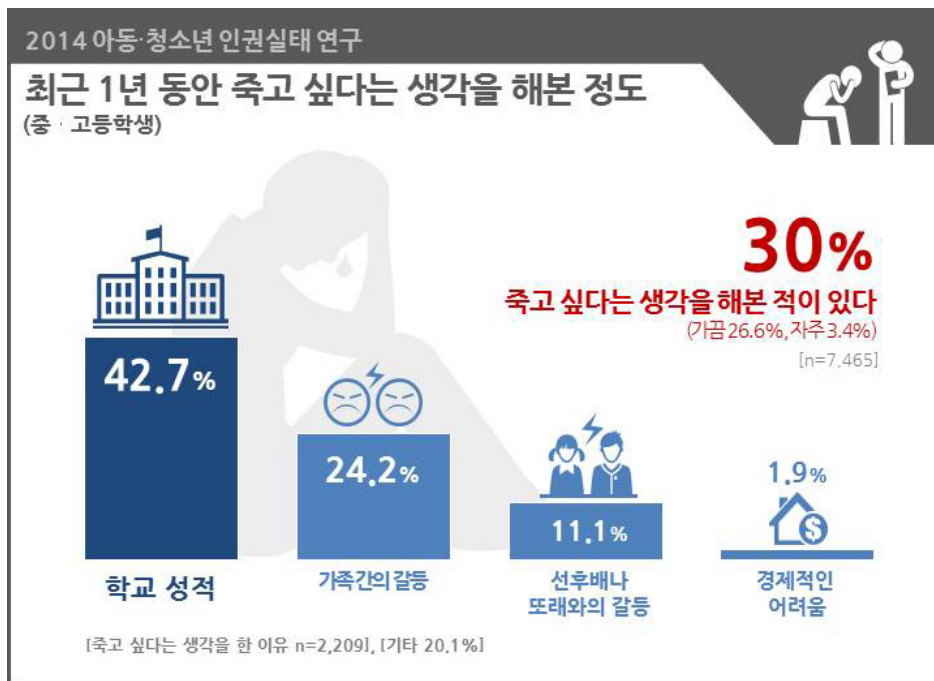
구분		학업 부담 때문에	가정이 화목 하지 않아서	친구 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전체(N)	$\chi^2$
전체		32.4	8.2	7.7	3.6	6.2	20.6	12.6	8.6	100.0(1,680)	—
성별	남자	37.9	8.9	3.5	4.2	4.2	19.5	14.5	7.4	100.0(865)	81.855***
	여자	26.5	7.5	12.1	3.1	8.5	21.8	10.7	9.9	100.0(81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2	12.5	18.1	3.6	7.8	3.9	13.2	10.7	100.0(281)	211.342***
	중학교	31.4	10.6	9.4	2.4	6.4	17.0	12.2	10.6	100.0(500)	
	일반/특목/자율고	37.9	5.6	2.2	3.2	4.8	27.8	12.6	5.9	100.0(730)	
	특성화고	15.1	5.4	8.4	9.6	9.0	28.3	13.3	10.8	100.0(16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5	7.3	7.7	3.2	5.6	21.0	13.0	8.6	100.0(1518)	—
	한부모가정	23.3	16.5	6.0	9.0	13.5	15.8	7.5	8.3	100.0(133)	
	조손가정	20.0	0.0	0.0	0.0	0.0	20.0	40.0	20.0	100.0(5)	
	기타	13.0	21.7	13.0	0.0	8.7	21.7	8.7	13.0	100.0(23)	
경제적 수준	상	38.8	6.2	8.1	1.7	6.6	16.2	12.9	9.5	100.0(518)	106.955***
	중	34.0	7.7	9.1	1.3	4.5	22.0	13.9	7.5	100.0(624)	
	하	24.1	10.3	5.0	8.6	7.7	23.8	11.3	9.2	100.0(18)	

\*\*\*p<.001/ \* 주 : 일부 빈도/비율이 0이거나 기대빈도가 5미만의 cell이 있는 경우 카이제곱값을 제시하지 않음.



## ⑤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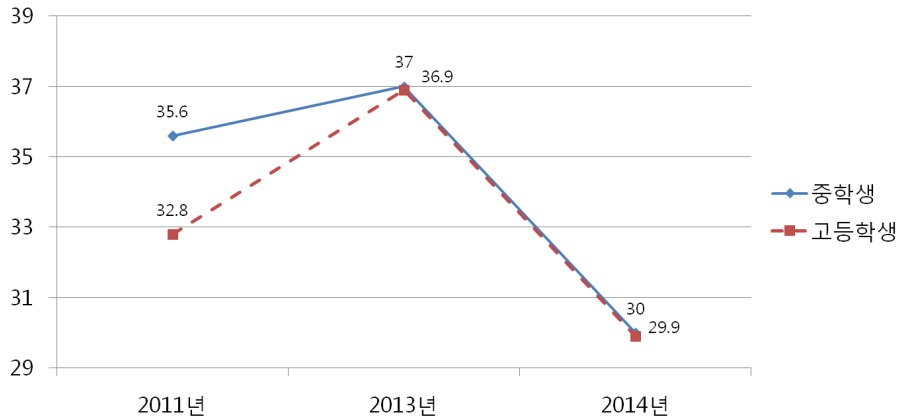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끔 생각한다 26.6%, 자주 생각한다 3.4%). 남자(23.9%) 보다는 여자청소년(36.7%)이 더 많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었고,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29.4%인 것에 비해, 한부모가정에서는 37.7%, 조손가정에서는 40.1%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학업성적이 '상'과 '중'인 경우에는 각각 26.4%, 27.7%였고, '하'인 아동·청소년은 35.8%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과 '중'인 경우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각각 26.3%와 27.8%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해, '하'인 경우에는 41.3%로 나타나 죽음에 대해 훨씬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3】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와 이유(중·고등학생)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중·고등학생 모두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30%수준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35.6%, 32.8%로 중학생의 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으나 2013과 2014년에는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 주: '가끔 있다+자주 있다'='있다' / 2011년 '자살'에서 2013년부터 '죽고 싶다는'으로 조사 문구 변경 / 단위: %

【그림 IV-4-14】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표 IV-4-48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단위: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chi^2$
전체		70.0	26.6	3.4	100.0(7,465)	—
성별	남자	76.1	21.3	2.6	100.0(3,898)	144.728***
	여자	63.4	32.4	4.3	100.0(3,5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0.6	26.1	3.3	100.0(6,902)	16.931*
	한부모가정	62.3	33.1	4.6	100.0(440)	
	조손가정	59.8	34.1	6.0	100.0(27)	
	기타	68.9	26.2	4.9	100.0(97)	
학업 성적	상	73.6	23.6	2.8	100.0(1,971)	66.563***
	중	72.4	25.1	2.6	100.0(3,023)	
	하	64.2	31.0	4.8	100.0(2,398)	
경제적 수준	상	73.7	23.4	2.9	100.0(2,855)	140.734***
	중	72.2	25.5	2.3	100.0(3,073)	
	하	58.6	34.8	6.5	100.0(1,472)	

\*p<.05 \*\*p<.01 \*\*\*p<.00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성적 때문이다 라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족 간의 갈등(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이유(20.1%),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11.1%), 경제적인 어려움(1.9%) 순이었다. 기타이유에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감, 모든 것이 힘들어서,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호기심, 심리적 또는 학업관련 스트레스 때문에 등의 응답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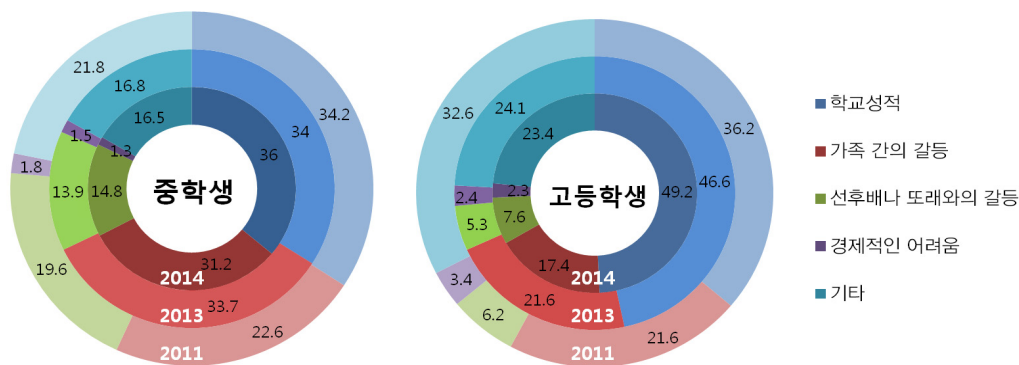
표 IV-4-49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교 성적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전체(N)
전체		42.7	24.2	11.1	1.9	20.1	100.0(2,209)
성별	남자	44.2	25.4	6.7	2.4	21.1	100.0(915)
	여자	41.7	23.3	14.3	1.5	19.2	100.0(1,294)
학교 유형	중학교	36.0	31.2	14.8	1.3	16.6	100.0(1,080)
	일반/특목/자율고	54.8	16.1	6.0	1.9	21.2	100.0(958)
	특성화고	17.3	24.5	16.4	5.0	36.7	100.0(1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4.9	22.0	11.0	1.7	20.3	100.0(2,006)
	한부모가정	22.1	44.8	9.6	3.1	20.4	100.0(163)
	조손가정	23.3	46.3	11.1	0.0	19.4	100.0(11)
	기타	14.5	46.6	29.1	3.5	6.3	100.0(29)
학업 성적	상	44.0	22.0	10.8	1.8	21.5	100.0(516)
	중	41.9	24.5	10.8	1.8	21.0	100.0(824)
	하	43.4	24.7	11.1	1.9	18.9	100.0(846)
경제적 수준	상	47.9	18.7	10.7	0.3	22.5	100.0(740)
	중	43.9	26.7	11.9	0.8	16.7	100.0(845)
	하	35.6	26.7	9.8	5.1	22.8	100.0(602)

배경변인별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각각의 이유에 대해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청소년의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남자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학교유형별로는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이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에게서 54.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성화고의 응답률인 17.3%의 3배가 넘는 비율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학교성적(17.3%)보다는 가족 간의 갈등(24.5%)을 더 많이 응답했다. 가족유형에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에 차이를 보였는데, 양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은 학교성적(44.9%)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으나, 이외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간의 갈등’을 각각 44.8%, 46.3%, 46.6%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족간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업성적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었는데, 학업성적이 높은 수준이건 낮은 수준이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 학업성적으로 인해 죽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이 47.9%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이보다 낮은 경우 중 43.9%, 하 35.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죽고 싶다는 이유에 대해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2011년의 34.2%에서 2014년에는 34%로 증가하였고, ‘가족 간의 갈등’은 2011년 22.6%이었다가, 2013년 33.7%로 상승하였으며, 2014년에는 31.2%로 소폭 감소하였다.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은 2011년 19.6%이었다가 2013년에는 13.9%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4.8%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성적’ 때문에 죽고 싶다는 비율은 2011년 36.2%, 2013년 46.6%, 2014년 49.2%로 큰 폭으로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가족 간의 갈등’은 2011년과 2013년에는 21.6%였다가 2014년에는 17.4%로 감소하였다.



\* 주: 1) 2011년 ‘친구와의 갈등’은 2013년부터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으로 조사 문구 변경  
2) 2011년 ‘가정불화’는 2013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조사 문구 변경 / 단위(%)

【그림 IV-4-15】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단위: %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스트레스 유형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죽고 싶다는 비관적인 생각과 실제 자살 시도 예방에 있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V-4-50 스트레스유형에 따른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차이**

스트레스 유형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sup>1)</sup>		t
	Mean	SD	Mean	SD	
학업문제	2.83	.879	3.31	.752	-21.188***
가정불화	1.51	.712	1.93	.871	-21.129***
또래와의 관계	1.65	.744	2.11	.890	-22.429***
경제적인 어려움	1.51	.697	1.80	.831	-15.036***
외모 및 신체조건	1.92	.826	2.36	.888	-19.590***
미래에 대한 불안	2.57	.975	3.05	.906	-18.889***

\*\*\*p<.001 / \* 주: 1) 가끔 생각한다+자주 생각한다

본 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관련한 지표들인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표 IV-4-51>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감( $r=-.331$ )과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r=-.287$ )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감과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가 더 높았다. 우울감은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와 상당한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r=.402$ ),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도 더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행복 정도는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r=-.359$ ) 행복도가 낮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결국 전반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제공은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그리고 우울감과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도 상호 연계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51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우울감,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정도**

	자아존중감	우울감	현재 행복 정도
우울감	-.331**	-	-
현재 행복 정도	.464**	-.454**	-
죽고 싶다는 생각 정도	-.287**	.402**	-.359**

\*\*p<.01

## ⑥ 고민거리 대화 상대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대화상대로 친구가 43.3%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어머니 32.7%였다.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8.5%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각각 5.3%와 5.6%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학교상담선생님이나 청소년상담관련 기관 종사자와 같은 전문인에 대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0%, 0.4%로 매우 낮게 나타나, 상담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표 IV-4-52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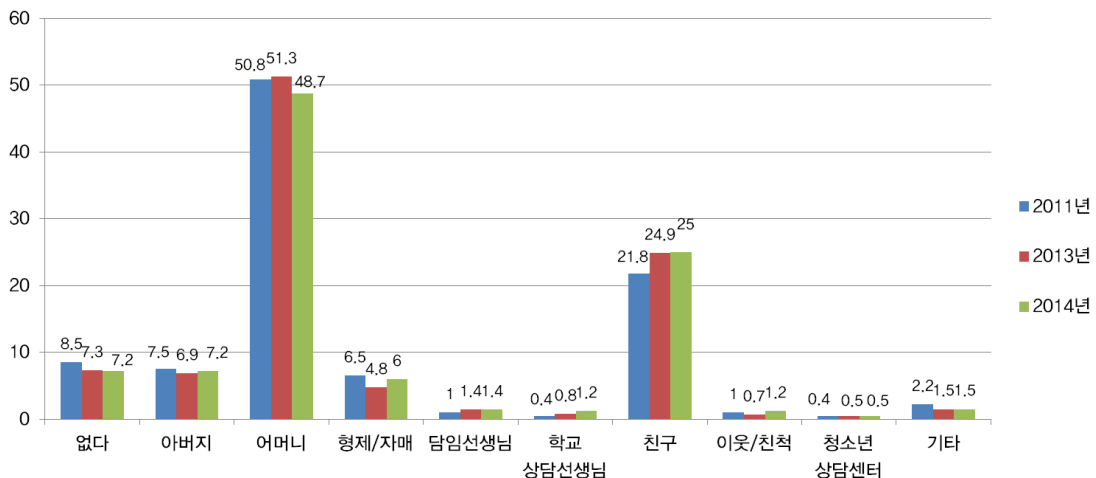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친구	이웃/ 친척	청소년 상담관련 기관 선생님	기타	전체(N)	$\chi^2$
전체		8.5	5.3	32.7	5.6	1.0	1.0	43.3	0.7	0.4	1.4	100.0(10,361)	—
학교 유형	초등학교	7.2	7.2	48.7	6.0	1.4	1.2	25.0	1.2	0.5	1.5	100.0(2,963)	853.219***
	중학교	8.7	4.7	27.6	5.3	1.0	1.2	48.5	0.8	0.4	1.7	100.0(3,602)	
	일반/특목/자율고	9.5	4.3	26.5	5.8	0.8	0.6	50.7	0.3	0.1	1.3	100.0(3,121)	
	특성화고	8.2	5.5	18.2	4.2	0.6	0.7	61.0	0.6	0.5	0.5	100.0(677)	
학업 성적	상	7.4	5.2	39.8	5.5	0.9	1.0	37.7	0.6	0.2	1.5	100.0(3,204)	283.515***
	중	7.8	5.8	33.6	5.9	1.2	0.9	42.1	0.8	0.5	1.4	100.0(4,377)	
	하	10.6	4.6	23.1	5.1	0.8	1.2	51.9	0.7	0.4	1.4	100.0(2,705)	
경제적 수준	상	6.3	5.9	38.8	5.5	1.2	0.9	38.5	0.8	0.3	1.6	100.0(4,647)	357.041***
	중	8.8	4.9	31.2	5.7	0.8	1.1	45.2	0.6	0.5	1.1	100.0(4,013)	
	하	13.6	4.6	19.2	5.5	1.0	0.9	52.3	0.7	0.4	1.7	100.0(1,630)	

\*\*\*p<.001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어머니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48.7%, 친구는 25%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중학생이 되면서 바뀌어 어머니는 27.6%, 친구는 48.5%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어머니가 26.5%, 친구가 50.7%였으나 특성화고 학생은 어머니가 18.2%, 친구가 61%로 친구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의 경우 대화상대가 어머니인 경우는 39.8%, 친구는 37.7%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 대화상대가 어머니라는 응답은 23.1%에 불과하였고, 친구라는 응답은 51.9%로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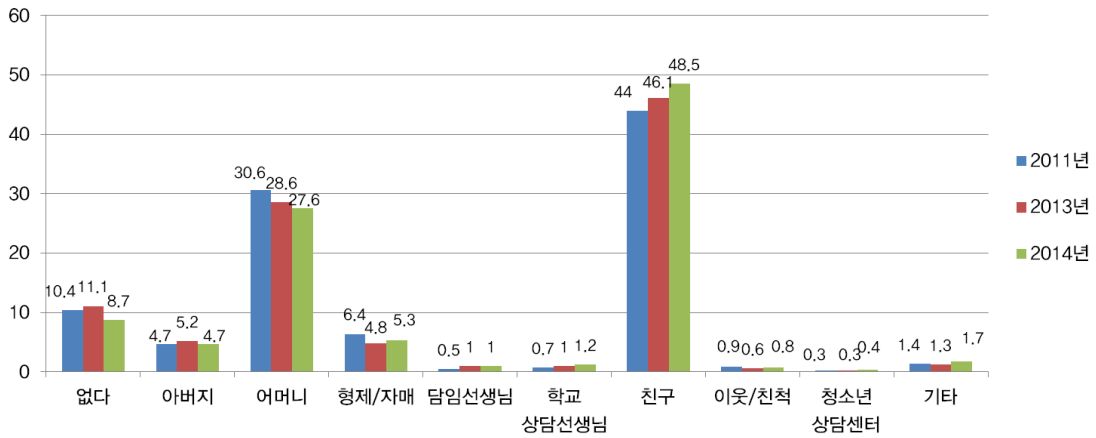
학생은 어머니를 대화상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 친구라는 응답은 38.5%였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의 경우 어머니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19.2%,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52.3%로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각각 10.6%, 13.6%로 나타나 다른 배경변인별 집단과 비교했을 때 '없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대상에 대해 학교유형별로 3개년 추이를 살펴보았다. 해가 갈수록 초등학생의 경우 어머니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친구를 응답한 비율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013년도에 비해 형제/자매, 학교상담교사, 이웃/친척 등을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우 미세한 수준이어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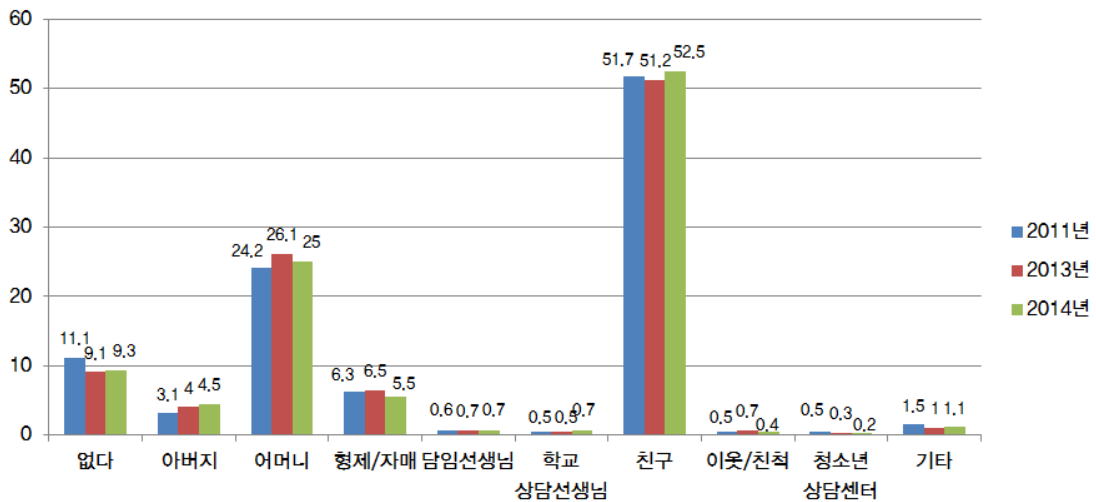
【그림 IV-4-16】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초등학생)/단위:%

중학생의 고민거리 대화상대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어머니를 대화상대로 꼽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과 비례하여 친구를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이 점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17】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중학생)/단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대화 상대를 어머니로 응답한 비율은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친구에 대한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근소한 차이 정도였다. 아버지를 대화상대로 꼽은 비율은 2011년 3%, 2013년 4%, 2014년 4.5%로 약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4-18】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고등학생)/단위(%)



##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 ① 아동·청소년 빈곤율

아동·청소년 빈곤율은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절대적 빈곤개념에서의 빈곤율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와 동일비율의 최저생계비 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OECD기준을 따라 가구 중위소득의 50%미만의 소득을 버는 가족의 아동비율 의미한다(임완섭, 노대명, 2013). <표 IV-4-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소득에 따른 우리나라 아동의 절대빈곤율은 2003년 6.7%에서 2008~2009년 경제위기로 8.2~8.3%로 올라갔다가 2012년 기준 6.1%로 감소하였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아동빈곤율의 경우 절대빈곤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시장소득 기준), 2003년 11.1%에서 2005년 13%, 2007년 12.9%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 10.5%로 다시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가족형태별 상대적 빈곤율에서 경상소득 기준 양부모가구는 3.9%이나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서는 46.6%로 과반에 가깝게 나타나,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표 IV-4-53 아동빈곤율

(단위 : %)

구분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중위50%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가구 제외	2003	6.7	5.6	6.6	11.1	10.4	10.3
	2004	7.0	5.5	6.6	12.4	11.0	11.3
	2005	8.3	5.9	7.9	13.0	11.7	11.9
	2006	8.1	5.9	7.1	12.4	11.1	11.1
	2007	8.2	5.9	7.1	12.9	11.5	11.5
	2008	8.2	5.6	7.1	12.1	10.8	10.8
	2009	8.3	4.9	7.3	12.4	10.2	10.9
	2010	7.5	4.8	6.6	11.3	9.3	10.1
	2011	7.1	4.3	6.5	11.1	9.7	10.3
	2012	6.1	4.4	5.9	10.5	9.4	10.2
1인가구 포함	2006	8.1	5.9	7.1	12.1	10.5	10.7
	2007	8.2	5.9	7.1	12.3	11.1	11.2
	2008	8.2	5.6	7.0	11.6	10.3	10.3
	2009	8.3	4.9	7.3	11.7	9.2	10.2

구분		절대아동빈곤율			상대아동빈곤율(중위50%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0	7.5	4.8	6.6	10.8	8.9	9.5
	2011	7.1	4.3	6.5	10.6	9.2	9.9
	2012	6.1	4.4	5.9	9.5	9.0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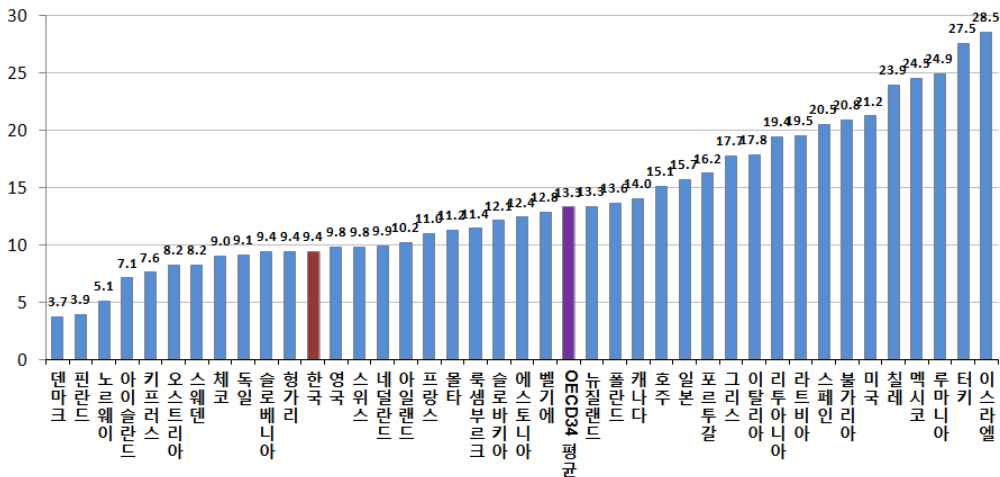
\* 출처: 임완섭, 노대명(2013).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1.

\* 주: 1) 전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농어가가구 제외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 가처분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담당금을 제외한 소득.

## ②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8세 이하 아동의 빈곤율은 9.4%로 비교국가 41개 국 중 12번째로 낮은 빈곤율을 보였으며 OECD 평균인 13.3%보다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절대빈곤율이 감소추세이고 또 상대빈곤율 역시 안정적인 추세여서,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국가가 아동(또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북유럽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낮고, 기본적인 아동의 복지를 가족의 책임으로 하는 북남미, 남유럽국가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이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ldPoverty\\_Jan2014.pdf](http://www.oecd.org/els/soc/CO2_2_ChildPoverty_Jan2014.pdf)

【그림 IV-4-19】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0년, 중위소득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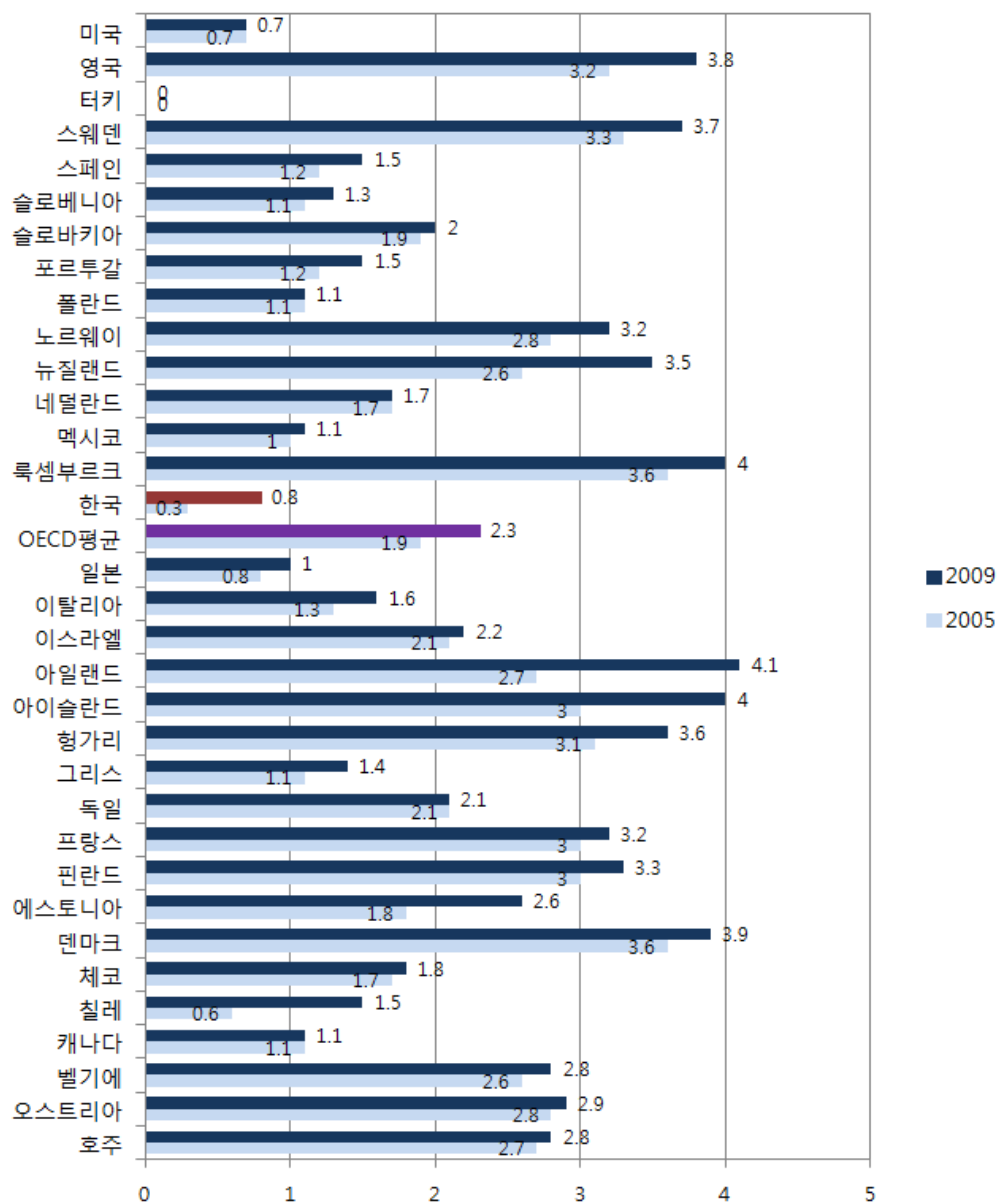
## (2)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중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sup>184)</sup> 수준을 비교하면, 【그림 IV-4-19】와 같다. 2009년도 한국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0.8%로 2005년도의 0.3%보다는 훨씬 증가하였으나, 매우 적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34개국 중 32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미국 0.7%, 터키 0%), OECD 평균인 2.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덴마크, 영국, 스웨덴 등으로 각각 4.1%, 4%, 4%, 3.9%, 3.8%, 3.7%로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최근자료인 2012년의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비교에서도 한국은 9.5%로 OECD 전체 34개국 중 33위 수준(34위는 멕시코 7.7%)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이주연, 김미숙, 2013), 아동가족복지지출이 그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OECD의 아동가족복지지출 항목은 현금급여와 현물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금급여에는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및 기타 현금급여가 포함되며, 현물서비스에는 보육가사서비스와 기타 현물지원이 해당된다(OECD 2012, 이주연, 김미숙, 2013: 9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0.8% 중 현금 급여와 현물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현금 급여는 매우 적은 0.04% 수준이었으며, 현물서비스가 그 중 대부분인 0.76%를 차지하고 있다.<sup>185)</sup> 이렇게 한국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또 현금 급여와 현물서비스의 비중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를 더욱 증가시키고 또 현금급여의 비중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김미숙, 정익중, 이주연, 하태정, 2012).

184) 여기서의 아동가족복지지출에는 현금급여와 현물서비스로 나뉘는데, 현금급여에는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및 기타 현금급여가 포함되며, 현물서비스에는 보육가사서비스와 기타 현물지원이 해당된다(OECD 2012, 이주연, 김미숙, 2013: 91에서 재인용).

185) OECD.StatExtracts,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관련 자료를 엑셀 파일로 export시 소수점 아래의 정확한 수치가 제시된다.



\* 출처: OECD, StatExtracts,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그림 IV-4-20】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05, 2009)

##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 ① 취약계층 아동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로서 인정되는<sup>186)</sup> 만 2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수를 살펴보면 <표 IV-4-54>와 같다. 전체 수급자 대비 0~24세 수급자 비율은 26.8%로 총 337,810명이었으며 2004년에 432,666명에서 약 십만 명가량 감소하였다.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급자 수인 337,810명을 기준으로 보면 0~4세가 6.2%인 20,871명, 5~9세가 11.2%인 37,804명, 10~14세가 24.1%인 81,506명, 15~19세가 40.3%인 136,087명, 20~24세가 18.2%인 61,542명 이었다.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급자 중 특히 15~19세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40%가 넘어 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0~14세 역시 24.1%로 나타나 학령기 아동·청소년기의 빈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단위 : 명)

연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수급자 전체
2004	432,666	30,641	82,724	127,251	141,729	50,321	1,337,714
2005	464,888	32,015	87,408	143,017	150,698	51,750	1,425,684
2006	471,503	30,757	85,431	147,672	158,400	49,243	1,449,832
2007	468,795	29,405	79,163	144,829	165,833	49,565	1,463,140
2008	457,122	27,073	70,251	138,023	169,986	51,789	1,444,010
2009	466,872	28,338	65,428	135,623	179,584	57,899	1,482,719
2010	445,080	27,106	56,051	124,724	176,277	60,922	1,458,198
2011	407,415	25,104	47,787	109,979	163,648	60,897	1,379,865
2012	364,650	22,412	41,804	93,517	146,939	59,978	1,300,499
2013	명	337,810	20,871	37,804	81,506	136,087	61,542
	%	100.0	6.2	11.2	24.1	40.3	18.2
							-

\* 출처: 보건복지부(2014c),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32, 발췌·정리.

\* 주: 수급자전체는 시설수급자(2013년도 92,309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명하고만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국가에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 측면이나 양육 및 돌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결핍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특히 <표 IV-4-55>에서

186)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보건복지부, 2014c)

보는 바와 같이 한부모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증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V-4-55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가구(A)	16,543	16,791	17,052	17,339	17,687	17,951
한부모가구	1,468	1,509	1,551	1,594	1,639	1,677
저소득 한부모가족	148	150	171	185	189	218
한부모가족(B)*	73	82	94	108	115	131
비율(B/A)	8.9	9.0	9.1	9.2	9.3	9.3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 주: 한부모가구 : 일반가구 중 한부모(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를 말함.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면(<표 IV-4-56> 참조), 역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그리고 조손가족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저소득 한부모 가족세대 217,547세대를 기준으로 비율을 살펴보면 모자가족이 75%, 부자가족이 2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손가족도 비율은 2.6%수준이지만 2011년에 잠시 감소추세였다가 2012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한부모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IV-4-56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109,039	294,648	88,179	238,341	20,860	56,307	-	-	-	-	-	-
2005	123,666	334,066	99,671	268,945	23,995	65,091	-	-	-	-	-	-
2006	140,188	374,094	112,347	299,430	27,841	74,664	-	-	-	-	-	-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	-	-	-	-	-
2008	152,853	400,646	118,116	312,718	30,534	82,456	-	-	-	-	2,203	5,472
2009	170,767	454,742	129,935	347,889	36,847	97,872	1,888	3,926	360	814	1,737	4,241
2010	184,749	480,999	138,071	361,066	40,759	106,738	2,392	5,033	379	839	3,148	7,323
2011	188,969	495,703	140,825	370,938	42,519	112,198	3,252	6,823	636	1,404	1,737	4,340
2012	217,547	578,663	163,171	438,365	46,839	124,611	1,782	3,696	208	422	5,547	11,569
비율	100.0	100.0	75.0	75.8	21.5	21.5	0.8	0.6	0.1	0.1	2.6	2.0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청소년백서 p. 126.

\* 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국가보훈법대상.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1), 「2011보건복지통계연보」 p.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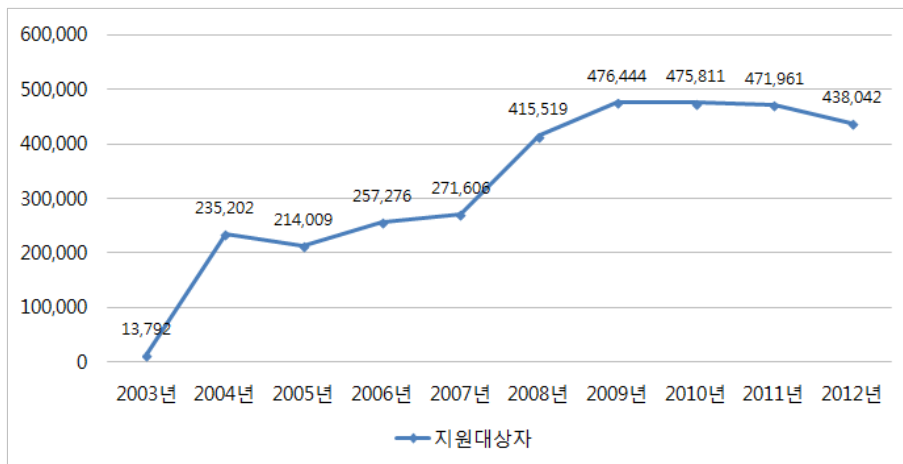
보건복지부(2012), 「2012보건복지통계연보」 제58호, p.307, 보건복지부(2013), 「2013보건복지통계연보」 제59호, p.309.

## 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지원 서비스 현황수준

### 가. 아동급식 지원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인 아동급식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발달계좌,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해 2000년도에 석식 제공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01년부터는 조식지원, 2004년부터는 방학 및 주말, 공휴일의 중식도 지원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sup>187)</sup> (보건복지부, 2013a).

2003년도 사업 시에는 13,792명에 불과했던 급식지원사업은 2004년 방학 및 주말 중식지원에 따라 235,202명으로 지원대상이 급증하였고, 2008년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급격한 지원대상 증가로 42만 명에 육박하였고, 2012년 기준 438,042명을 급식 지원하고 있다. 가정해체와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정의 기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더욱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식, 석식, 그리고 방학 및 주말·공휴일의 급식지원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매우 필수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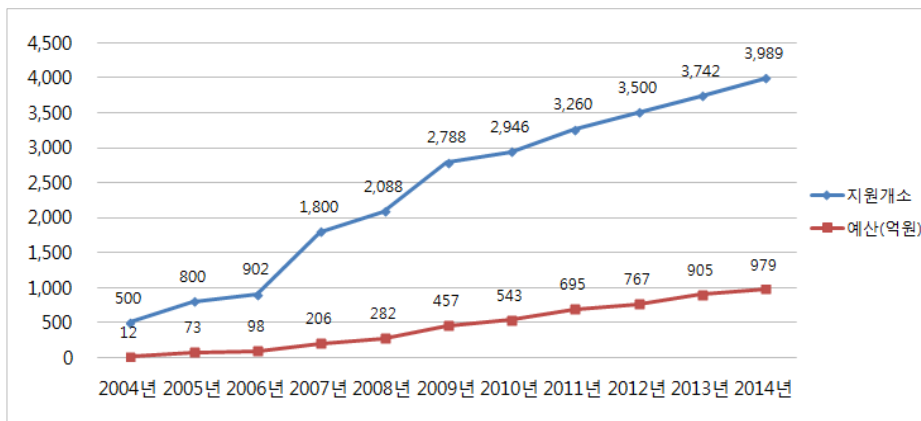
【그림 IV-4-21】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187) 2009~2010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국비지원 하였음(보건복지부, 2013a).

## 나. 지역아동센터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빈민가정의 아이들의 급식과 학습지원을 위해 공부방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공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제도화되었으며, 현재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일차적인 보호체계이자, 주요 방과후돌봄서비스로써 자리매김하였다(김희진, 이해연, 이용교, 황옥경, 2011).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이 방치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성장과 가정기능 강화를 위해, 일상생활지도, 급식, 학업지원, 문화 및 특기적성프로그램, 상담 및 심리정서적지지,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연계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아동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3a).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500개소를 시작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3,989개소로 약 4천 개소에 이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월 지원 단가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200만 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433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4). 이러한 지원액 인상과 지역아동센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예산도 2004년 12억 원, 2005년 73억 원이었던 지원예산은 2014년 979억 원으로 약 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 개소수의 증가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종사자 처우를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한 지원액이어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4).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p.5 내용을 그래프화 함.

【그림 IV-4-22】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지원예산



#### 다.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가족해체 및 빈곤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한 성장·발달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4e). 아동에게는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가정 모두에게 개입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아동양육에 적합한 안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13a).

특히 가정방문과 욕구조사 및 위기도 검사 등을 통해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을 사정한 후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의 자원연계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e). <표 IV-4-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에 2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2007년 3,769명에서 2012년 기준 65,724명이며, 가구수는 2007년 2,465가구에서 2012년 42,387가구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아동의 발달과 양육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어,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3).

**표 IV-4-57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실시	16	32	75	101	131	181	211	220(예정)
사업예산(억 원)	50	98	225	301	372	462	576	632
아동 수(명)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	—
가구 수(가구)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	—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146, 보건복지부(2014e), 201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p. 3~4, 보건복지부(2014b),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9.

#### 라.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2007년부터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의 일환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적립된 자금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이나 취업 및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4a).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등으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원 내에서 일대일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이이며, 적립금은 만 18세(만기) 이후 자립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4a).

디딤씨앗 통장 저축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 가입대상 43,143명 중 실제 가입자는 36,469명으로 84.5%의 가입률을 보였고, 2010과 2011년에는 가입률이 95%를 넘었으나, 2013년에는 가입대상 49,481명 중 43,397명이 가입해 87.7%의 가입률을 보였다. 적립금은 2009년 481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350억 원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이 매월 3만원씩 적립하고 국가가 3만원을 매칭, 적립할 경우, 0~18세까지 적립 시 만 18세 이후 1,93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3a). 이 금액이 최대수령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학자금이나 취업훈련비용, 그리고 거주비용까지 포함해서 지출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 특히 영유아가 아닌 아동·청소년기에 적립을 시작할 경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이후에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자립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적립금 증액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해 더욱 다각적인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가입대상 아동수가 4만~5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기초수급대상 아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대상의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IV-4-58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연도별	가입대상 (명)	가입자(명)	가입률(%)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43,143	36,469	84.5	28,184	258	223	481
2010	42,030	40,829	97.1	29,129	377	308	685
2011	45,088	42,985	95.3	31,826	510	409	919
2012	48,788	43,292	88.7	32,435	670	527	1,197
2013	49,481	43,397	87.7	34,594	759	591	1,350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150.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포함.

#### 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교육복지 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류방란, 김경애, 김성식, 이윤미, 정연순, 2013). 이 사업은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기준 전국의 143개 교육지원청의 초·중·고 1,801개교(초 906, 중 831, 고64)로 확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액도 2003년 238억 원에서 2012년 기준 1,42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또한 이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수는 2003년 4,758명에서 2013년 65,29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3년 사업학교의 우선지원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학습영역과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진로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이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진로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류방란 외, 2013).

**표 IV-4-5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구분	2003~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 지역	8지역 (서울6, 부산2)	15지역 (기존8, 신규7)	30지역 (기존15, 신규15)	60지역 (기존30, 신규30)	60지역 (기존60)	100지역 (기존60, 신규40)	100지역 (기존60, 신규40)	114개 교육지원청	143개 교육지원청	148개 교육지원청
대상 지역	-	광역시 이상	인구25만 이상	인구25만 이상	인구25만 이상	모든 市	모든 市	단위학교	단위학교	단위학교
학교수 <sup>1)</sup> (초·중·고)	45교 (초29, 중16)	82교 (초50, 중32)	163교 (초99, 중61,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322교 (초187, 중132, 고3)	538교 (초304, 중230, 고4)	534교 (초296, 중234, 고3)	1,356교 (초670, 중681, 고5)	1,801교 (초906, 중831, 고64)	1,833교 (초894, 중831, 고63)
학생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수)	40,707명 (4,758명)	75,189명 (9,765명)	153,175명 (16,719명)	326,826명 <sup>2)</sup> (35,110명)	304,464명 (27,904명)	490,081명 (40,275명)	452,467명 (35,725명)	1,086,434명 (71,853명)	1,302,250명 (72,881명)	1,247,836명 (65,291명)
지원액 (교부금) (대응투자)	238억 원 (238억 원) -	160억 원 (110억 원) (50억 원)	359억 원 (209억 원) (150억 원)	642억 원 (374억 원) (268억 원)	514억 원 (248억 원) (266억 원)	866억 원 (504억 원) (282억 원)	810억 원 (310억 원) (417억 원)	1,566억 원 (1,188억 원) (367억 원)	1,663억 원 (1,440억 원) (223억 원)	1,493억 원 (1,172억 원) (321억 원)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p.5, p.13, p.46,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p. 285.

\* 주: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 학생수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수 포함.

## 6) 소결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 빈곤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보건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해 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현황과 장애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비율,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수,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를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생존과 발달 영역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자살과 안전사고 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사망과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0세의 기대여명, 영아·아동·청소년사망률, 사고사망률, 범죄피해율, 사고 및 급식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을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보건서비스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현황,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약물 남용 실태와 예방 교육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교사 배치 현황, 지역사회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 관련 시설 비율,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흡연율, 음주율, 기타 약물 사용률, 약물예방 교육 경험률을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경제적 착취에서는 청소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위반과 저임금의 문제, 부당처우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고용사업장의 법 위반 실태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인권침해적인 청소년근로시간 수준,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를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실태와 건강 증진 노력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운동실천률, 아침식사 결식률, 수면시간 및 수면부족 여부, 비만율, 자살에 대한 생각, 우울증 지수, 스트레스 인지율, 행복도, 자아존중감, 고민거리 대화 상대 등을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빈곤 현황, 복지 예산의 수준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빈곤율,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취약계층 아동 현황 및 지원수준,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현황 수준 등을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먼저 장애 영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3년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86,63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들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 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하지만 장애청소년의 진학을 및 취업을 추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무직률의 경우에도 최근 40~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들 청소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 아르바이트 시 장애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2년의 연령별 사고사망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 당 20대 사고사망률(31.6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세(16.8명), 10대(11.0명), 1~9세(5.4명) 등이다. 사고 사망에 대한 원인으로 0세는 타살(2.6명), 1~9세는 운수사고(2.0명)가 가장 많고, 10대와 20대의 경우에는 자살(각각 5.1명, 19.5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청소년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자살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토대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4명 정도가 범죄로부터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10명 중 5명 정도가 교통사고로부터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율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3년의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1,000명당 5.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9.0명으로 약 3.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평소 지역사회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학교보건교사 배치율은 64.9%로 1개 학교에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학교 보건교사 배치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현재 12~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은 14.1%, 과체중 비율은 5.1%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비만율과 과체중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의 경우에는 요로감염을 제외하고 선천성 심장질환, 아토피 피부염,

폐렴 등 주요 질환에서 아동·청소년의 유병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12~18세의 주의력 결핍장애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학교에 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학교보건교사의 배치율은 현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상태와 안전사고율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비율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 학교보건교사를 최소한 1개 학교에 1명 이상씩 배치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9.7%, 현재 음주율은 16.3%, 평생 약물 경험률은 0.5%로 최근 5년간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 현재 음주율, 평생 약물 경험률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음주 등 약물예방교육 경험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4명 정도가 흡연예방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6명 정도가 음주예방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에서 흡연, 음주 등 청소년의 약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향후 중·고등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의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84.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약 20% 가까이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약 27%는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고등학생은 학교에 일찍 등교하는 것이었다.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8분이었고, 수면부족 이유는 학원·과외, 야간학습 때문이었다. 미만율은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경우 일찍 등교해야 하고 또 학업 때문에 아침결식과 운동 및 수면부족의 경우가 많고 학업부담으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생활패턴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발달을 위한 건강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신체적 건강지표에서 취약하게 나타난 한부모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방안마련도 요구된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 우울감, 스트레스, 행복도, 죽고 싶다는 생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보인 반면, 3명 중 1명은 우울감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의 83.8%는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학업문제로 응답자의 67.2%, 그리고 미래(진로)불안으로 응답자의 50.5%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고, 3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과반수 이상이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특히 학업과 미래 불안으로), 우울증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아동·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1/3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은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이었으며, 특성화고 학생은 자아존중감과 행복도에서,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우울감과 학업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가정형태 중에서는 특히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낮게, 그리고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정도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모든 정신건강관련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 정신건강지표들은 상호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결국 전반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제공이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그리고 우울감과 죽고 싶다는 대한 생각까지도 상호 연계되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방안을 더욱 모색하여, 이들이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낙인감 해소와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경변인별 특성에 따른 결과에 기초하여 특정집단의 아동·청소년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방안도 요구된다.

고민거리의 대화상대로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43.3%는 친구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은 어머니로 32.7%였다. 초등학생 때는 어머니를 대화상대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친구비중이 더 커지고 어머니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학교상담교사나 청소년상담관련 기관 종사자와 같은 전문인력에 대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1.0%, 0.4%로 매우 적게 낮게 나타나,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담없이 상담전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절대빈곤율이나 상대빈곤율 모두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2013년 경상소득 기준 양부모가구의 빈곤율이 3.9%인데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서는 46.6%로 과반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빈곤율을 OECD 국가들과 국제비교하면, 비교대상 국가 41개국 중 12번째로 낮은 빈곤율을 보였으나 아동가족복지예산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는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다양한 현금급여와 현물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아동가족복지예산 지출의 확대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취약계층 아동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급자 중 특히 15~19세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40%가 넘었으며, 10~14세 역시 24.1%로 나타나 아동·청소년기의 빈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더욱 증가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써,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발달계좌,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급식지원은 가정해체와 한부모 가정의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지난 10년간 개소수가 급증하여 4천여 개에 달했으며 관련예산도 증가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시설의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종사자 처우를 위한 지원액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빈곤아동과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개입을 위한 드림스타트도 전국 시·군·구에 2013년 기준으로 약 211개가 설치되어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업의 효과분석결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개입과, 부모의 참여도를 더욱 독려하고 또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요청이 있는 바(유해숙, 이현숙, 2014), 가족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족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의 이후 성인기 이행 시 경제적 자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해주기 위한 아동발달계좌사업에 현재 4만 3천명의 아동이 가입하여 정부와의 매칭펀드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아동 등 가입대상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인 적립금 증액과 더불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해 더욱 다각적인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2년 기준 전국의 143개 교육지원청의 초·중·고 1,801개교로 확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액도 2003년 238억 원에서 2012년 기준 1,42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특히 향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진로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sup>188)</sup>

### 1) 교육에의 권리

#### (1) 지표의 현황

##### ① 교육기회 보장 정도

##### 가. 학생 취학률

취학률은 보통 취학 적령 재적 학생 수를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sup>189)</sup>를 기준으로 한 취학 적령 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이다. 취학 적령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3~5세,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18~21세이다. 아래의 <표 IV-5-1>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를 볼 때에 유치원은 2000년에 26.2%였던 것이 2013년에는 47.4%로 증가되었고,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97.2%와 96.2%가 취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취학률이 2000년에 97.2%였다가 2010년에 99.2%로 정점을 찍고 이후 하향세를 보여 2013년에 다시 97.2%가 된 것은 부정적 지수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생 취학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업중단이나 해외유학으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낮아지고, 아직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로의 취학률에서는 2000년에는 89.4%로 90%를 넘지 못했으나 꾸준히 증가 일로의 추세로 2013년에는 최고치인 93.6%로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인 9~24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다양한 전체 고등교육기관에<sup>190)</sup> 취학하고 있는 비율은 2000년에 52.5%였으나 2013년에는 69.0%에 달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치로 대한민국의 교육열과 학력의 인플레이션, 학벌사회 등을 시사하고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취학률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우수한 상황이다. 2010년의 OECD

188) 이 절은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가 집필하였다.

189) 확정 인구 년도 이후의 인구는 잠정 추계이므로 다음 추계 시에 변경될 수 있다.

190) 전체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간 취학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3~5세의 취학연령에서는 OECD 평균 취학률이 95.9%이고, 한국은 99.7%로 한국이 오히려 취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14세 취학연령을 대상으로 중학교까지 교육과정의 취학률을 들여다보면 OECD 평균은 82.9%인데 비해 한국은 85.9%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OECD의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4).

표 IV-5-1      **각급 학교의 연도별 취학률<sup>191)</sup>**

(단위 : %)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유치원	26.2	39.5	40.2	40.9	44.9	47.4
초등학교	97.2	98.5	99.2	99.1	98.6	97.2
중학교	95.0	95.9	97.0	96.7	96.1	96.2
고등학교	89.4	91.4	91.5	91.9	92.6	93.6
전체 고등교육기관	52.5	70.4	70.1	71.0	68.4	69.0

\* 출처: 교육부·KEDI: 2013 간추린 교육통계 (2013. 6.1 기준) p. 19.

#### 나. 학생 진학률

진학률은 해당하는 연도의 졸업자 중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같은 해 졸업자로 나눈 비율의 수치이다. 아래의 <표 IV-5-2>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2000년에서 2013년까지 99.9%로 거의 모두가 진학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의무 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비 의무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2000년에 99.6%였고,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99.7%를 유지하면서 거의 모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의 경우에는 2000년에는 전체 62%이었으나 2013년에는 70.7%로 나타났고, 2009년에 77.8%를 정점을 찍은 후에는 이후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학력 미취업자가 늘면서 대학을 점차 기피하는 현상으로 읽혀질 수 있다. 특히,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학생들의 고등교육 과정으로의 진학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계고는 2009년 84.9%로 높은 비율의 진학률 수치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76.8%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1)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포함되었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에는 연도 및 기관에 따라 17세 이하의 학생이 포함되었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문계고 학생들은 2000년에 고등교육 과정으로의 진학률이 42%를 낮은 편이었으나, 2009년에는 73.5%로 크게 증가했는데, 2013년에는 다시 54.9%로 낮아져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2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2000, 2009~2013)<sup>192)</sup> (단위 : %)

구 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교→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99.9	99.9
중학교→고등학교과정		99.6	99.6	99.7	99.7	99.7	99.7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전체	62.0	77.8	75.4	72.5	71.3	70.7
	일반계고	83.9	84.9	81.5	75.2	76.2	76.8
	전문계고	42.0	73.5	71.1	63.7	54.9	
	일반고	—	—	—	(75.8)	(76.6)	(77.7)
	특수목적고	—	—	—	(67.4)	(64.2)	(60.0)
	특성화고	—	—	—	(61.0)	(50.0)	(41.7)
	자율고	—	—	—	(69.3)	(72.6)	(74.7)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간추린 교육통계(2013.6.1. 기준), p.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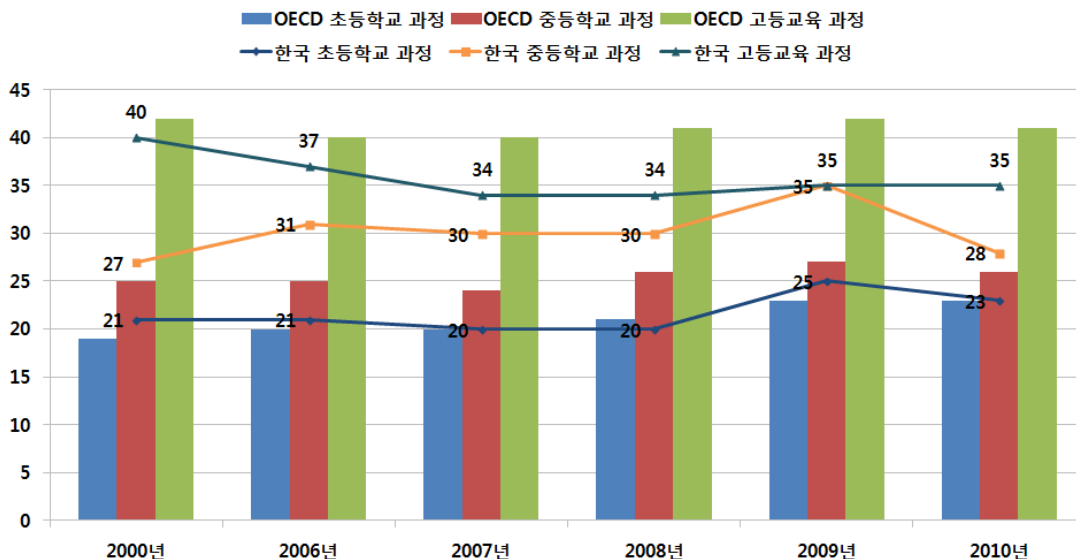
1) ( )는 참고 수치로 2014년 8월 현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률임.

2) 일반계·전문계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 다.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및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개념은 학생 1인당 학교교육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임희진, 김현신, 2012: 198).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GDP 대비 공교육비의 개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GDP 대비 공교육비가 한 국가에서 지출되는 교육비 전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거시적 지표라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각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지출 규모를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로서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미시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보통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에 활용되는 항목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인건비와 인건비 외에 지출된 경상비와 자본비로 구성된다.

192)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하였다. 일반계·전문계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 출처: 교육부·KEDI: 2013 간추린 교육통계 (2013. 6.1 기준) P. 53

【그림 IV-5-1】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추이

OECD에서는 각 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국제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사용한다. 구매력지수는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서 OECD 및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3년마다 공통으로 지정된 몇 가지 물품에 대한 가격들을 비교함으로써 산출된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산출은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상비와 자본비를 합계한 총액을 학생 수와 구매력지수를 곱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의 【그림 IV-5-1】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의 산출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국민 1인당 GDP로 나누어 100을 곱한 수치가 된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은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에 있어서 초등 교과과정에서는 OECD 초등과정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중등 교과과정에서는 OECD 평균 비율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 교과과정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2013년 기간 구매력지수에 따른 국민 1인당 GDP는 US \$ 33,140으로 세계 30위이다.<sup>193)</sup>

193) Wikipedia, 웹 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

표 IV-5-3 OECD와 한국의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 환산액)

구 분		초등학교과정	중등학교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0 (2003)	한국	3,155	4,069	6,118
	OECD 평균	4,381	5,957	9,571
2006 (2009)	한국	4,935	7,261	8,564
	OECD 평균	6,437	8,006	12,336
2007 (2010)	한국	5,420	7,931	9,081
	OECD 평균	6,741	9,312	13,728
2008 (2011)	한국	5,420	7,931	9,081
	OECD 평균	7,153	8,972	13,717
2009 (2012)	한국	6,658	9,399	9,513
	OECD 평균	7,719	9,312	13,728
2010 (2013)	한국	6,601	8,060	9,972
	OECD 평균	7,974	9,014	13,528

\* 출처: 교육부·KEDI: 2013 간추린 교육통계 (2013. 6.1 기준) p. 53.

1) 구분된 연도는 회계연도이며, 괄호 안의 연도는 자료 발표년도임.

2) 출처\_OECD(해당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위의 【그림 IV-5-1】에서는 OECD 국가들의 평균과 한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을 잘 비교할 수 있다. 2013년에 발표된 국제비교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국은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비율이 비슷하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초등교육과정 단계에서의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평균과 거의 같거나 약간 많았고, 중등교육과정은 OECD에 비해 오히려 높았으나 고등교육과정 단계에서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여 공교육비 지출이 낮게 나타난 큰 이유는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차이로 낮은 공교육비 지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 IV-5-3>에서 보면 한국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2009년 보다 2010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나타내는 구매력지수 추이는 2000년 746.21에서 2004년 796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2007년까지 768.65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는 804.11 달러로 가장 높은 공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66).

#### 라.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지표는 쉽게 말하자면 한사람의 교원에게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이 배정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이 있는 지표로 즉, 교원 1명이 지도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가르치는 데나 배우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동등한 가르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효과가 높아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혹 교육의 수준이 낮은 학생이 있으면 그에게 시간을 더 할애하여 지도할 수 있어 그 학생을 최소한 평균적 교육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IV-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교원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더욱 시간과 노력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를 살펴보면 2000년 초등학교에서는 교원 1인당 28.7명이 배정되었으나, 2013년에는 15.3명으로 평균 12명 이상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2012년에 비해서도 1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중학교에서도 2000년에 교원 1인당 20.1명의 학생 수가 2013년에는 16명으로 감소되었고, 고등학교에서도 2000년 19.9명에서 2013년에는 14.2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출생율의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향후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어 교육의 아동들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는 더욱 많이 주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V-5-4 교원 1인당 학생 수(2000, 2009~2013)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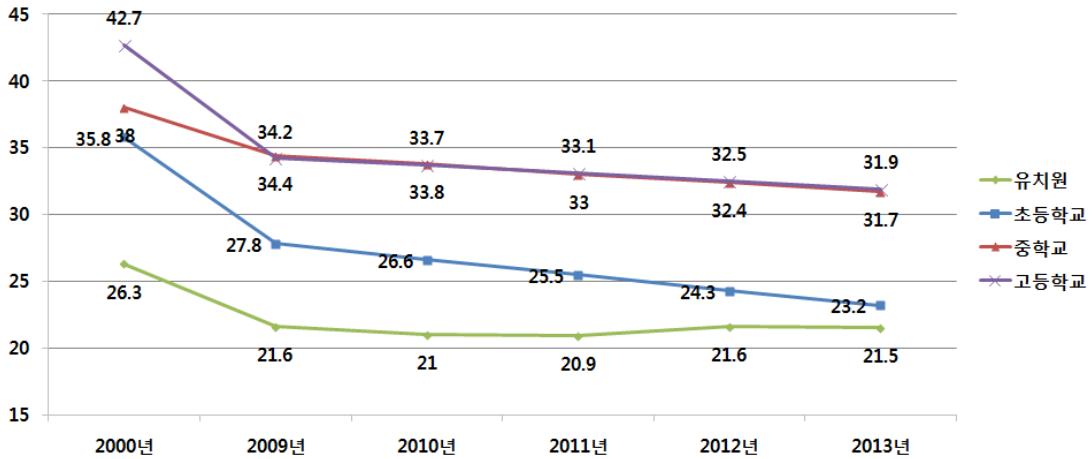
구 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유치원		19.5	15.2	14.8	14.6	14.5	14.3
초등학교		28.7	19.8	18.7	17.3	16.3	15.3
중학교		20.1	18.4	18.2	17.3	16.7	16.0
고등학교	전체	19.9	15.7	15.5	14.8	14.4	14.2
	일반계고	20.9	16.7	16.5	-	-	-
	전문계고	18.2	13.3	13.1	-	-	-
	일반고	-	-	-	15.8	15.4	15.2
	특수목적고	-	-	-	11.0	10.3	10.0
	특성화고	-	-	-	12.5	12.1	12.0
	자율고	-	-	-	15.2	14.6	14.3
고등교육 기관	전체	58.4	47.6	46.9	45.5	43.9	42.8
		(39.9)	(33.0)	(32.7)	(31.9)	(30.9)	(30.3)
	일반대학	44.4	38.6	38.1	37.1	35.4	34.8
		(31.8)	(27.3)	(27.0)	(26.7)	(25.7)	(25.4)
	전문대학	78.0	61.1	61.2	60.3	58.9	58.2
		(51.2)	(39.3)	(39.4)	(39.1)	(37.7)	(37.2)

\* 출처: 교육부·KEDI: 2013 간추린 교육통계 (2013. 6.1 기준) P.24

1) 유·초·중등학교 교원에는 시간강사가 불포함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는 조교 및 비전임교원이 불포함됨.

2) 고등교육기관 1인당 학생수의 ( )안의 값은 재적학생수 중 재학생수에 대하여 산출하였으며, 일반대학은 대학부설대학원의 교원 및 학생 수를 포함하여 산출함.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이다. 이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대체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지표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IV-5-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2000년도 이후 학급당 학생 수의 평균 추이는 유치원의 경우 2000년 26.3명에서 2013년에는 21.5명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등학교를 보면 특히 2000년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35.8명이었던 수치가 2013년에는 가장 큰 폭으로 낮아져 23.2명으로 12명이 넘게 감소되었다. 중학교에서는 38명에서 31.7명으로, 고등학교에서는 42.7명에서 31.9명으로 각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꼽을 수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출처: 교육부·KEDI: 2013 간추린 교육통계 (2013. 6.1 기준) p. 11.

【그림 IV-5-2】 한국의 연도별(2000, 2009~2013) 학급당 학생 수 추이

한편 아래의 <표 IV-5-5>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먼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00년 초등학교과정에서 한국과 OECD 평균을 비교하면 각각 32.1명과 17.7명으로 14명의 차이가 났었는데 2011년에는 각각 19.6명과 15.4명으로 그 차이가 4명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000년에 각각 20.9명과 13.9명에서 2011년에 15.8명과 13.9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2000년도 초등학교과정에서는 한국과 OECD 평균이 각각 36.5명과 23.6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각각 26.3명과 21.2명으로 그 차이가 많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과정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 한국과 OECD 평균 수치가 2000년도에 38.5명과 23.6명에서 2011년 34명과 23.3명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에 비해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IV-5-5 연도별(2000, 2006~2011)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 (단위: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2000	한국	32.1	21.5	20.9	36.5	38.5
(2002)	OECD 평균	17.7	15.0	13.9	21.9	23.6
2006	한국	26.7	20.8	15.9	31.6	35.8
(2008)	OECD 평균	16.2	13.3	12.6	21.5	24.0
2007	한국	25.6	20.5	16.2	31.0	35.6
(2009)	OECD 평균	16.0	13.2	12.5	21.4	23.9
2008	한국	24.1	20.2	16.5	30.0	35.3
(2010)	OECD 평균	16.4	13.7	13.5	21.6	23.9
2009	한국	22.5	19.9	16.7	28.6	35.1
(2011)	OECD 평균	16.0	13.5	13.5	21.4	23.7
2010	한국	21.1	19.7	16.5	27.5	34.7
(2012)	OECD 평균	15.9	13.7	13.8	21.2	23.4
2011	한국	19.6	18.8	15.8	26.3	34.0
(2013)	OECD 평균	15.4	13.3	13.9	21.2	23.3

\* 출처: 교육부·KEDI: 2013 간추린 교육통계 (2013, 6.1 기준) p. 50.

1) 구분된 연도는 회계연도이며, 괄호 안의 연도는 자료 발표년도임.

2) 출처\_OECD(해당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② 학교 부적응률

### 가.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이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난 학생의 수를 전년도 학교에 있었던 재적 학생의 수로 나눈 비율이다. 학업성장의 과정에서 배우는 나이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배우는 과정을 중단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가정에 이혼과 같은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거나, 개인이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발생했거나, 학교의 교육과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떠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지식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이고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학벌사회로 고등교육과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사회에 진입하여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 속에서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의 의미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독립할 수 없는 연령인 아동 및 청소년의 나이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은 그 주변의 부모나 국가가 이들에 대한 학습의 권리와 발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이들의 인권에 대한 가정, 사회,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IV-5-6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2000, 2009~2013)<sup>194)</sup>** (단위: %)

구 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초등학교	0.4	0.5	0.3	0.6 (0.3)	0.6 (0.3)	0.6 (0.3)
중학교	0.7	1.0	0.8	1.0 (0.8)	0.9 (0.8)	0.9 (0.8)
고등학교	2.3	1.8	1.8	2.0 (1.7)	1.9 (1.7)	1.8 (1.6)
전체 고등교육기관	6.1	6.8	6.5	6.7	6.4	6.7
일반대학	3.9	4.1	4.0	4.0	4.0	4.0
전문대학	5.5	7.8	7.3	7.4	7.1	7.7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간추린 교육통계(2013.6.1. 기준), p. 22.

1)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임.

학업중단율은 보통 학업중단자 수를 전년도 재적 학생 수로 나눈 수에다 100을 곱한 수치인데 위의 <표 IV-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에서 2000년에 0.4%의 학업중단율이 2011년에 0.6%로 증가된 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도 2000년에 0.7%였던 학업중단율이 2013년에는 0.9%로 증가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중단율이 더 높아서 2000년도에 2.3%였는데 이후 차츰 줄어드는 추세라 2013년에는 1.8%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부터는 해외유학생을 학업중단자에 포함시켰는데도 전년도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고 전체 학생 수 중 매년 7만 명이 넘는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큰 사회문제이고 차후에 한국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불씨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서 일으키게 될 각종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에 현재의

194)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률(제적률)=(제적 학생수/전년도 재적 학생수)×100. 중학교는 2003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 중단자를 유예 및 면제자로 보았고,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가 포함되었다.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되었고, 2011~2013년의 (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제적학생은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 기타사유에 의해 학적에서 제외된 학생이다.

학업중단율은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한국사회가 심한 학벌사회임을 고려할 때에 학업을 중단한 해당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이들의 발달권, 학습권 등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학교포기 결심여부

학교부적응률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위에서 서술한 학업중단율과 함께 학생이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는 마음을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생 2,975명, 중학생 3,662명, 고등학생 3,847명에게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에 아래의 <표 IV-5-7>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응답의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퇴 충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7%로 나타나 근 10명 중 3명 가까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남녀의 성별 차이는 여자가 28.6%이고, 남자가 26.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퇴 충동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학생들이 41.5%로 자퇴 충동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34.9%로, 중학생 25.2%, 초등학생 14.4%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퇴 충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훨씬 높은 것과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의 규모에 따른 자퇴 충동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학업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며 학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충동이 상대적으로 15~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을 통하여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 경제적 수준이 낮아서 전체적인 자존감과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어 학교에 다니기가 싫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V-5-7 자퇴 충동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전체		27.7	72.3	100.0(10,484)	-
성별	남자	26.8	73.2	100.0(5,477)	4.661*
	여자	28.7	71.3	100.0(5,007)	
학교 유형	초등학교	14.4	85.6	100.0(2,975)	596.169***
	중학교	25.2	74.8	100.0(3,662)	
	일반/특목/자율고	41.5	58.5	100.0(3,166)	
	특성화고	34.9	65.1	100.0(681)	
지역 규모	대도시	27.3	72.7	100.0(4,443)	0.664
	중소도시	27.9	72.1	100.0(4,724)	
	읍면지역	28.3	71.7	100.0(1,31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2	72.8	100.0(9,771)	19.104***
	한부모가정	35.1	64.9	100.0(563)	
	조손가정	37.4	62.6	100.0(41)	
	기타	30.7	69.3	100.0(109)	
학업 성적	상	17.9	82.1	100.0(3,232)	514.232***
	중	24.9	75.1	100.0(4,417)	
	하	43.5	56.5	100.0(2,751)	
경제적 수준	상	23.1	76.9	100.0(4,702)	199.167***
	중	27.4	72.6	100.0(4,053)	
	하	41.1	58.9	100.0(1,655)	

\* p&lt;0.1 \*\* p&lt;0.01 \*\*\* p&lt;0.001

아래의 <표 IV-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자퇴 충동의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에 전체 1순위의 응답은 공부하기 싫어서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35%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으로 높은 기타 10.8%,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의 7.9%보다 월등히 큰 폭의 비율로 학생들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교 자퇴 충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조사결과는 일반/특목/자율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응답결과에서 볼 수 있는 데, 이들은 자퇴 충동 이유의 1순위로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42.3%로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의 32.5%로 보다 높게 응답하여 그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업과 성적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학업수준이 낮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경제적 수준과 학업 성적이 비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5-8 자퇴 충동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괴롭 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 으로 어려워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기타	모름	전체(N)
전체		2.7	35.0	3.7	1.2	38.6	7.9	10.8	0.0	100.0(2,899)
성별	남자	2.8	33.8	4.1	1.4	39.6	8.5	9.7	0.1	100.0(1,465)
	여자	2.7	36.3	3.2	1.0	37.6	7.3	11.9	0.0	100.0(1,434)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5	22.8	6.8	0.9	42.3	4.9	10.8	0.0	100.0(425)
	중학교	1.9	34.5	3.8	0.6	45.0	6.0	8.2	0.0	100.0(922)
	일반/특목/자율고	0.8	42.3	2.6	1.1	32.5	8.6	11.9	0.1	100.0(1,314)
	특성화고	1.2	18.6	3.7	4.0	41.3	16.5	14.7	0.0	100.0(238)
지역 규모	대도시	3.1	35.5	3.6	1.6	38.4	7.3	10.3	0.1	100.0(1,212)
	중소도시	2.6	34.8	4.0	0.8	39.5	8.4	9.8	0.0	100.0(1,314)
	읍면지역	1.7	34.1	2.9	1.0	36.2	8.2	16.0	0.0	100.0(37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	35.3	3.7	1.0	39.0	7.6	10.8	0.0	100.0(2,653)
	한부모가정	4.3	31.6	3.9	3.1	36.1	9.1	11.9	0.0	100.0(198)
	조손가정	0.0	25.4	0.0	5.0	33.4	31.4	4.8	0.0	100.0(15)
	기타	4.9	36.9	2.2	3.1	27.0	16.4	9.6	0.0	100.0(33)
학업 성적	상	4.0	20.0	5.5	1.5	44.1	10.1	14.8	0.0	100.0(579)
	중	2.7	33.4	3.8	1.2	40.8	7.3	10.7	0.0	100.0(1,097)
	하	2.2	43.9	2.7	0.9	34.1	7.1	9.1	0.1	100.0(1,196)
경제적 수준	상	3.3	31.9	4.8	0.3	41.9	6.4	11.4	0.0	100.0(1,085)
	중	2.3	34.8	3.3	0.2	41.0	9.3	9.0	0.1	100.0(1,110)
	하	2.7	40.4	2.6	4.0	29.7	7.7	13.0	0.0	100.0(681)

\* p&lt;0.1 \*\* p&lt;0.01 \*\*\* p&lt;0.001

한편, 자퇴 충동의 1순위 응답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 기타의 이유를 자세히 물었을 때에 아래의 <표 IV-5-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일이 하고 싶어서 32.1%,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17.9% 다음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17.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포기 결심의 이유는 학업과 성적에 관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IV-5-9 자퇴 총동이유(1순위)\_기타

(단위 : %(명))

구분	N	비율(%)
전체	234	100.0
다른 일이 하고싶어서	75	32.1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42	17.9
학업 스트레스	40	17.1
귀찮아서	17	7.3
공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17	7.3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15	6.4
잠이 부족해서(일어나기 힘들어서)	14	6.0
한국식 교육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14	6.0

### ③ 대안교육 참여율

#### 가. 대안학교 수와 종류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국가가 교육을 공적으로 제도화하여 학교라는 제도를 19세기부터 도입한 이후 기존의 학교 제도에 문제제기를 하며 대안적으로 마련된 학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세기에 미국의 자유학교운동(free school movement), 자유학교운동(free-school movement), 영국의 서머힐학교(Summerhill School), 독일의 발도르프학교(Waldorfschule) 등으로 잘 알려진 대안학교 운동은 한국에서도 1997년 간디청소년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인권지표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2013년도에 교육영역에서 새로운 인권지표로 채택이 되었다. 마련된 대안학교 수와 종류의 지표는 2012년도에 없었던 지표이다. 이 지표의 채택은 한국의 공교육 과정과 사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대안적 교육을 바라는 수요자 아동, 청소년들이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획일적이나 교육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V-5-10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경기	두 레 자 연 중 학 교	사립	'03	화성시
	이 우 중 학 교	사립	'03	성남시
	헌 산 중 학 교	사립	'03	용인시
	중 앙 기 독 중 학 교	사립	'06	수원시
	한 겨 레 중 학 교	사립	'06	안성시
강원	팔 렬 중 학 교	사립	'11	홍천군
광주	평 동 중 학 교	공립	'14	광주시
전북	전 북 동 화 중 학 교	공립	'09	정읍시
	지 평 선 중 학 교	사립	'02	김제시
전남	용 정 중 학 교	사립	'03	보성군
	성 지 송 학 중 학 교	사립	'02	영광군
	청 람 중 학 교	공립	'13	강진군

중학교 : 12교(공립3, 사립9)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부산	지 구 촌 고	사립	'02	연제구
대구	달 구 벌 고	사립	'03	동구
인천	산 마 을 고	사립	'00	강화군
광주	동 명 고	사립	'99	광산구
경기	두 레 자 연 고	사립	'99	화성시
	경 기 대 명 고	공립	'02	수원시
	이 우 고	사립	'03	성남시
	한 겨 레 고	사립	'06	안성시
강원	전 인 고	사립	'05	춘천시
	팔 렬 고	사립	'06	홍천군
충남	한 마 음 고	사립	'03	천안시
	공 동 체 비 전 고	사립	'03	서천군
충북	양 업 고	사립	'98	청원군
전북	세 인 고	사립	'99	완주군
	푸 른 꿈 고	사립	'99	무주군
	지 평 선 고	사립	'09	김제시
전남	영 산 성 지 고	사립	'98	영광군
	한 빛 고	사립	'98	담양군
	한 울 고	공립	'12	곡성군
경북	경 주 화 랑 고	사립	'98	경주시
경남	간 디 고	사립	'98	산청군
	원 경 고	사립	'98	합천군
	지 리 산 고	사립	'04	산청군
	태 봉 고	공립	'10	창원시

고등학교 : 24교(공립3, 사립21)

\* 출처: 교육부(2014), 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4년 3월 기준)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대안학교의 종류는 크게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비(미)인가 대안학교로 분류된다. 먼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도입 첫해인 1998년에 기존의 미인가 대안학교 중 6개교를 대안학교 형태의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이를 기점으로, 위의 <표 IV-5-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4년 3월 기준 현재 고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2개교가 각각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표 IV-5-11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 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고)	사립	'09	중구 신당동
	여명학교(고)	사립	'10	중구 남산동
	지구촌학교(초)	사립	'12	구로 오류동
	서울다솜학교(고)	공립	'12	중구 흥인동
인천	인천청담학교(고)	사립	'11	연수 동춘동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공립	'12	남구 구월동
	인천한누리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13	남동 논현동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고)	사립	'12	서구 도마동
경기	새나래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용인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경기 연천군
	쉐마기독교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양주시
	TLBU글로벌학교(초·중 통합)	사립	'08	경기 고양시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경기 이천시
	광성드림학교(초·중 통합)	사립	'14	경기 고양시
충북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충북 음성군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	사립	'12	충북 제천시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13	충남 아산시
경북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북 포항시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중·고 통합)	사립	'13	경북 문경시
	산자연학교(중)	사립	'14	경북 영천시
	나무와학교(중)	사립	'14	경북 영천시
경남	꿈키움학교(중)	공립	'14	경남 진주시
	어울림학교(중)	사립	'14	경남 하동군
8개 시·도, 24개교(공립6, 사립18)				

\* 출처: 교육부(2014), 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4년 3월 기준)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는 2013년에 11개였던 것에 비해 2014년에 광주시에 평동중학교가 공립으로 새로이 설립되어 12개교가 되었으며 이 중 공립이 3개교, 사립이 9개교이다.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24개교이고 이 중 공립은 3개교에 불과하고 21개교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 60조의 3에 근거한 각종학교로서 특성화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는 2008년과 2009년에 각 1개교가 경기도와 서울에 개교하여 2개교에 불과하던 것이 위의 <표 IV-5-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4년에는 8개 시와 도에서 공립 6개교와 사립 18개교로 총 2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13년에 비하여 공립학교 1개교와 사립학교 4개교가 늘어난 결과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 초등학교 대상 1개교가 줄어들고, 경기의 은혜학교가 새나래학교로 개명하였으며, 광성드림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새로이 고양시에 설립되었고, 경북의 영천시에 새롭게 2개 사립 대안학교가 세워졌으며, 경남 진주시와 하동군에 공립과 사립 대안학교 1개교가 각각 새로이 설립된 결과이다. 이들 학교들은 각각 실용음악, 북한이탈청소년, 음악전문, 예술, 셰마(Shema), 국제화 교육, 자연 및 환경 교육, 폴리텍(Polytech), 기독교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대체로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수는 최근 조사된 것이 없는데, 2009년 기준으로 위탁형 대안학교는 13개 시·도에 46개 기관이 운영 중이었으며, 해당 교원은 675명, 학생은 1,28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상 학생 별로 보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15개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19개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곳이 12개교 이다. 그리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 10개교, 선택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 3개교가 있으며 나머지는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혜영·강대중·하태욱, 2009: 68~74).

미인가 대안학교는 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교육당국의 관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데 2006년에 55개교가 선정된 이후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는 240개가량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중 학교급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가 모두 197개교로 통합한 형태가 단일한 형태보다 더 많으며 통합의 형태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학년을 모두 통합한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 초기에는 주로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통합형이 많았지만 초등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초·중, 초·중·고 통합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로 단독 운영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4).

#### 나. 대안학교 학생 비율

현재 대한민국의 다양한 종류의 대안학교 형태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의 수는 통계로 잡힌 숫자로 대략 14,935명으로(교육부, 2014) 전체 초·중·고 학생 6,496,178명(교육부, 2013: 16)의 약 0.23% 가까이 해당하고 있다. 이 숫자는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의미로는 공교육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학교의 유형별로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V-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개의 대안학교 각종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수는 2,485명으로서 전체 대안학교 학생수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공립학교는 5개교이며,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초등학교 2개교이고 나머지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개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4개교, 경북이 4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형태로는 통학형은 6개교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숙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숙과 통학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표 IV-5-12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학생 현황

시도	학교명	설립구분	학교급	운영형태	고등학교과정	소계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151	151
서울	여명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68	68
서울	지구촌학교	사립	초	통학형 (그룹홈)		0
서울	서울다솜학교	공립	고	통학형	98	98
인천	인천청담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44	44
인천	인천해밀학교	공립	중-고 통합	통학형	55	77
인천	인천한누리학교	공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	87
					22	22
광주	월광기독교학교	사립	초	통학형	0	214
대전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62	62
경기	새나래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	11	11
경기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사립	고	기숙형	6	6
경기	쉐마기독교학교	사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78	78
경기	티엘비유글로벌학교	사립	초-중 통합	기숙형	0	90
경기	경기새울학교	공립	중	기숙형		38
경기	광성드림학교	사립	초-중 통합	통학형		241

시도	학교명	설립구분	학교급	운영형태	고등학교과정	소계
충북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사립	고	기숙형	132	132
충북	음성글로벌선진학교	사립	중-고 통합	기숙형	236	403
충남	여해학교	공립	중	기숙형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사립	초-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146	146
경북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	사립	중-고 통합	기숙-통학 혼합형	257	475
경북	산자연중학교	사립	중	기숙-통학 혼합형		28
경북	나무와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14
경남	경남꿈키움학교	공립	중	기숙형		0
경남	어울림학교	사립	중	기숙형		0
계					1,366	2,485

\* 출처: 교육부(2014), 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4년 3월 기준)

또 다른 대안학교의 유형인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V-5-13>과 같다. 전체 36개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총 3,622명이고 그 중 12개 중학교 학생 수는 1,089명으로 약 30%에 해당한다.

표 IV-5-13 각종학교로서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	설립구분	학교급	운영형태	고등학교과정	소계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중	통합형	0	47
경기	두레자연중	사립	중	기숙형	0	59
경기	이우중학교	사립	중	통학형		164
경기	현산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경기	중앙기독교중학교	사립	중	통학형		251
경기	한겨레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51	
강원	팔월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0	49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중	기숙형		78
전북	지평선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120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132
전남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중	기숙형		115
전남	청람중학교	공립	중	기숙형		74
부산	지구촌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72	72
대구	달구벌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통학 혼합형	121	121

시도	학교명	설립구분	학교급	운영형태	고등학교과정	소계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62	62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통합 혼합형	216	216
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7	117
경기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립	고	통학형	110	110
경기	이우고등학교	사립	고	통학형	242	242
경기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03	
강원	전인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83	83
강원	팔월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55	55
충북	양업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20	120
충남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0	110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72	72
전북	세인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82	182
전북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4	114
전북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0	110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02	102
전남	한빛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218	
전남	한울고등학교	공립	고	기숙형	119	119
경북	경주화랑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24	124
경남	간디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116	116
경남	원경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97	97
경남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고	기숙형	47	47
경남	태봉고등학교	공립	고	기숙형	142	142
계					193	3,622

\* 출처: 교육부(2014), 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4년 3월 기준).

## 2) 교육의 목표

### (1) 지표의 현황

#### ①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 가.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의 <표 IV-5-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을 때에 먼저 학교가 자신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 16.3%, 그런 편이다가 55.7%로 약 70%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 전혀 그렇지 않다 7%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도 10명 중 3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정인 응답은 초등학교에서 상급 학교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14 학교에 대한 생각\_1)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7.0	21.0	55.7	16.3	100.0(10,386)	—
성별	남자	8.6	19.7	53.9	17.9	100.0(5,411)	71.144***
	여자	5.3	22.3	57.8	14.5	100.0(4,97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	8.9	53.0	34.9	100.0(2,955)	1469.004***
	중학교	6.0	21.2	60.4	12.4	100.0(3,629)	
	일반/특목/자율고	10.9	29.7	53.5	5.8	100.0(3,129)	
	특성화고	11.1	32.2	52.9	3.9	100.0(673)	
지역 규모	대도시	7.6	20.9	53.7	17.8	100.0(4,387)	34.921***
	중소도시	6.4	20.6	57.0	16.0	100.0(4,694)	
	읍면지역	7.3	22.6	58.1	12.0	100.0(1,3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8	21.0	55.7	16.5	100.0(9,687)	19.160*
	한부모가정	9.8	21.6	55.8	12.8	100.0(556)	
	조손가정	13.5	20.4	46.1	20.0	100.0(41)	
	기타	9.2	17.4	62.7	10.7	100.0(103)	
학업 성적	상	5.5	16.3	54.1	24.1	100.0(3,213)	446.949***
	중	5.8	19.4	59.2	15.6	100.0(4,380)	
	하	10.7	29.1	52.0	8.1	100.0(2,716)	
경제적 수준	상	6.3	17.4	54.6	21.6	100.0(4,666)	279.964***
	중	6.6	21.7	58.4	13.3	100.0(4,010)	
	하	10.2	29.0	52.2	8.6	100.0(1,642)	

\* p<0.1 \*\* p<0.01 \*\*\* p<0.001

다음으로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가의 여부를 물었을 때에 응답은 결과는 아래의 <표 IV-5-15>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편이다 54.4%, 매우 그렇다 16.6%로 긍정적인 응답이 70%를 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초등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88.6%로 매우 높지만, 중학교는 69%, 고등학교는 일반/특목/자율고가 58%, 특성화고가 63.1%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학을 위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일반/특목/자율고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5-15 학교에 대한 생각\_2)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6.5	22.6	54.3	16.6	100.0(10,383)	—
성별	남자	7.8	21.8	52.4	18.0	100.0(5,411)	55.406***
	여자	5.1	23.5	56.4	15.0	100.0(4,972)	
학교 유형	초등학교	2.0	9.4	51.5	37.1	100.0(2,954)	1627.893***
	중학교	6.7	24.3	57.4	11.6	100.0(3,627)	
	일반/특목/자율고	9.8	32.2	52.7	5.3	100.0(3,129)	
	특성화고	9.9	27.0	57.5	5.6	100.0(673)	
지역 규모	대도시	7.0	22.9	51.6	18.5	100.0(4,386)	37.795***
	중소도시	6.1	22.1	56.0	15.8	100.0(4,692)	
	읍면지역	6.0	23.4	57.7	12.9	100.0(1,3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4	22.4	54.4	16.9	100.0(9,683)	23.792**
	한부모가정	7.8	25.0	55.6	11.6	100.0(556)	
	조손가정	11.8	31.2	34.4	22.6	100.0(41)	
	기타	7.7	29.0	52.0	11.3	100.0(103)	
학업 성적	상	5.6	19.5	50.9	24.0	100.0(3,213)	377.840***
	중	4.9	20.9	58.0	16.3	100.0(4,379)	
	하	10.1	28.9	52.5	8.4	100.0(2,713)	
경제적 수준	상	5.9	18.7	53.0	22.4	100.0(4,666)	350.433***
	중	5.6	23.1	58.1	13.2	100.0(4,009)	
	하	10.3	32.3	48.9	8.5	100.0(1,640)	

\* p<0.1 \*\* p<0.01 \*\*\* p<0.001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학교가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에는 아래의 <표 IV-5-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편이다 57.7%, 매우 그렇다 18%로 4명 중 3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들의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7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느라 상대적으로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이나 타인에 대한 이타적 심성, 공동체 의식 등의 전인적 교육에 대하여 상급학교로 갈수록 소홀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16 학교에 대한 생각\_3)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5.9	18.4	57.7	18.0	100.0(10,379)	—
성별	남자	7.3	18.6	55.1	19.0	100.0(5,409)	59.614***
	여자	4.3	18.3	60.5	16.9	100.0(4,970)	
학교 유형	초등학교	2.6	10.5	51.4	35.5	100.0(2,951)	1026.047***
	중학교	6.1	19.8	59.4	14.7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8.2	23.2	60.8	7.8	100.0(3,128)	
	특성화고	8.7	24.0	60.8	6.5	100.0(672)	
지역 규모	대도시	6.5	17.7	55.7	20.1	100.0(4,385)	37.710***
	중소도시	5.3	18.4	59.4	16.8	100.0(4,690)	
	읍면지역	5.7	21.0	58.2	15.1	100.0(1,3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8	18.4	57.6	18.3	100.0(9,680)	9.266
	한부모가정	6.6	19.6	59.4	14.4	100.0(555)	
	조손가정	8.1	14.8	54.7	22.4	100.0(41)	
	기타	7.9	21.2	58.2	12.7	100.0(103)	
학업 성적	상	4.9	15.8	53.0	26.3	100.0(3,213)	386.568***
	중	5.0	16.2	61.6	17.2	100.0(4,377)	
	하	8.4	25.0	57.0	9.5	100.0(2,713)	
경제적 수준	상	5.0	15.4	55.5	24.1	100.0(4,661)	323.037***
	중	5.2	19.0	61.2	14.5	100.0(4,009)	
	하	9.9	25.3	55.5	9.4	100.0(1,641)	

\* p<0.1 \*\* p<0.01 \*\*\* p<0.001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그런 편이다 55.4%, 매우 그렇다 23.1%로 전체 학생의 78.5%가 아래의 <표 IV-5-17>에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서 위에서 나타난 인성교육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식적 측면에서 학교의 목표는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와 긍정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식적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의 긍정적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64.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 전수되는 지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 보다는 대학입학 시험인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지식이라는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은 한 자리 수치인 8.8%에 불과하여 초등학교들의 45.9%인 것에 비하여 학교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생각이 팽배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17 학교에 대한 생각\_4)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6.0	15.5	55.4	23.1	100.0(10,375)	—
성별	남자	7.1	15.2	52.4	25.2	100.0(5,407)	63.674***
	여자	4.8	15.8	58.6	20.7	100.0(4,969)	
학교 유형	초등학교	2.1	6.6	45.4	45.9	100.0(2,950)	1600.555***
	중학교	5.2	14.9	61.3	18.6	100.0(3,628)	
	일반/특목/자율고	10.5	24.8	55.9	8.8	100.0(3,126)	
	특성화고	6.9	14.6	65.4	13.1	100.0(672)	
지역 규모	대도시	6.8	15.6	53.2	24.4	100.0(4,382)	36.646***
	중소도시	5.3	15.5	56.0	23.2	100.0(4,689)	
	읍면지역	6.3	15.5	60.2	18.0	100.0(1,3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9	15.6	55.2	23.3	100.0(9,676)	22.161**
	한부모가정	6.9	15.8	57.3	20.0	100.0(556)	
	조손가정	14.0	8.8	48.7	28.5	100.0(41)	
	기타	7.2	8.1	69.8	14.9	100.0(103)	
학업 성적	상	5.7	12.5	50.3	31.5	100.0(3,212)	342.101***
	중	4.7	14.7	57.8	22.8	100.0(4,376)	
	하	8.5	20.7	57.5	13.3	100.0(2,710)	
경제적 수준	상	5.4	13.2	51.6	29.8	100.0(4,661)	289.229***
	중	5.3	16.4	59.3	19.1	100.0(4,005)	
	하	9.5	20.5	56.3	13.7	100.0(1,641)	

\* p<0.1 \*\* p<0.01 \*\*\* p<0.001

## ②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 가.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 수

인성이 바람직한 개인 또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품성과 역량이라 할 수 있고, 인성교육은 이러한 품성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면(현주 외, 2013: 20), 이와 같이 인성교육은 교육의 본연이자 이념이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부는 이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심각한 학교폭력의 상황에 직면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함양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학교폭력은 성인들에 의해서 어린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반인륜적인 인권침해가 다양한 폭력의 가해 형태들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심한 경쟁 교육의 스트레스 속에서 공격성향이 심해지는 학생들의 심리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비록 때 늦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IV-5-18>에서는 각 학교급 별 교육목표에 포함된 인성교육의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다.

**표 IV-5-18      각 학교급 별 교육목표에 포함된 인성교육 내용**

구분	교육목표
초등학교	<p>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습관 형성, 바른 인성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p> <p>(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p> <p>(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p> <p>(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p> <p>(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p>
중학교	<p>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p> <p>(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p> <p>(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p> <p>(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p> <p>(4)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p>
고등학교	<p>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p> <p>(1) 성숙한 자아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p> <p>(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p> <p>(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p> <p>(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p>

\* 출처: 현주 외(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p. 40~41.

이미 정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서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각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보다 지속적이고도 융통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를 수정·보완하여 향후 모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현주 외, 2013: 39~40).

아래의 <표 IV-5-19>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성교육 실천 시범학교 운영은 2013년부터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정·운영되었다. 2013년부터 처음 시작된 인성교육 우수학교도 당해 년도 인성교육 실적과 차기년도 운영 계획을 심사하여 1년간 전문가 컨설팅으로 최종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모델로 지정되는 사업에 따라 지정되었다. 기존의 16개 광역시·도에서 지정되어 인성교육을 실천한 시범학교와 우수학교는 2013년에는 각 30개교와 40개교였으며, 2014년도에는(8월 현재) 약간 증가되어 시범학교가 34개로 늘어났으며, 반면에 우수학교는 30개 정도로 감소될 예정으로 있다.

표 IV-5-19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수

구분	2013		2014	
	시범학교	우수학교	시범학교	우수학교
서울	3	4	5	—
부산	0	3	2	—
대구	2	4	2	—
인천	0	3	2	—
광주	3	2	3	—
대전	3	4	2	—
울산	3	4	1	—
경기	0	4	1	—
강원	2	1	2	—
충북	2	1	1	—
충남	3	3	3	—
전북	3	1	2	—
전남	2	3	2	—
경북	2	1	3	—
경남	1	1	2	—
제주	1	1	1	—
총계	30	40	34	30(예정)

\* 출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요청자료(2014.08.04).

### 나. 인성교육 연수 참여 교원 수

교사들이 인성교육 연수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연수 현장에서 인성교육이라는 영역으로 연수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범주를 학교폭력예방 교육이나 진로교육, 예체능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인성교육 연수 실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얻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IV-5-20 인성교육 관련 연수 경험 및 도움 정도(담임교사)**

구 분		빈도(%)
인성교육 관련 연수 경험	직무연수	1,651(61.8)
	자격연수	67(2.5)
	둘 다	139(5.2)
	받은 적 없다.	816(30.5)
	<b>전체</b>	<b>2,673(100)</b>
연수방법	현장연수	241(13.4)
	온라인연수	1,168(65.0)
	둘 다	387(21.5)
	<b>전체</b>	<b>1,796(100)</b>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6)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1(5.7)
	보통이다.	502(28.3)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234(13.2)
	<b>전체</b>	<b>1,775(100)</b>

\*출처: 현주 외(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 p. 103.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표본으로 선정된 630개교의 인성담당 부장교사 1명과 담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정해 응답한 총 2,673명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연수에서 어떠한 인성교육을 받았는지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인성교육의 연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아래의 <표 IV-5-20>에서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직무연수로 받았다고 응답한 담임교사는 1,651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으며, 자격연수로 인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담임교사는 67명, 둘 다 다 해당되는 담임교사는 139명으로 나타났으며, 인성교육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담임교사는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816명으로 나타났다. 연수를 받은 방법으로는 현장 연수(13.4%)보다는 주로 온라인 연수(65%)를 많이 받았으며, 둘 다 받은 담임교사는 21.5%였다. 인성교육 연수의 효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교사는 13.2%에 불과했으며, 보통(28.3%),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담임교사는 6.3%로 나타났다(현주 외, 2013: 103).

###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1) 지표의 현황

##### ①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기반 시설 수

##### 가.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할 시 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표이다. 이는 UN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 2항의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라는 협약을 실천하는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을 발간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 IV-5-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2년 현재 한국의 문화시설기반은 전국적으로 총 2,182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10개가 증가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828개, 등록된 박물관 수가 740개, 등록미술관은 171개, 문예회관은 214개, 지방문화원은 229개에 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은 지속적인 증가 일로에 있으며 7년 전인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문화시설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아래의 <표 IV-5-22>에서와 같이 경기도가 406개로 문화시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총 299개, 경북이 180개 순으로 많았다. 가장 문화시설이 적은 광역시는 울산으로 29개에 불과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임에 비해 다른 도시에 비교하여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광주도 46개에 불과하고, 대전은 51개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지방이 64.1%로 차지했고, 수도권은 35.9%으로 전년 대비 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2012	2182	828	740	171	214	229
2011	2072	786	694	154	209	229
2010	1979	759	655	145	192	228
2009	1883	703	630	141	182	227
2008	1741	644	579	128	167	223
2007	1612	600	511	115	161	225
2006	1261	572	431	103	155	-
2005	1133	526	364	93	150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 2.

표 IV-5-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 %)

구분	시·도별	총 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지역1	서울	299	116	110	32	16	25
	부산	76	31	16	5	10	14
	대구	61	27	14	3	9	8
	인천	78	36	22	4	8	8
	광주	46	17	10	7	7	5
	대전	51	22	16	5	3	5
	울산	29	12	8	-	4	1
	경기	406	184	127	36	28	31
	강원	167	47	74	10	18	18
	충북	111	36	43	7	13	12
	충남	132	50	43	8	15	16
	전북	117	49	34	3	17	14
	전남	162	59	44	18	19	22
	경북	180	62	63	7	25	23
	경남	160	58	55	8	19	20
	제주	101	21	58	18	2	2
	총계	2,072	828	740	172	214	229
지역2	수도권	783(35.9)	336	259	72	52	64
	지방	1339(64.1)	492	481	99	162	165
	계	2,182(100%)	828	740	171	214	229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 10.

## 나.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에 관한 지표는 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권리를 향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 기반을 국가가 얼마나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UN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항에는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청소년이용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체험적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한국의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의 종류 및 수련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주로 도시나 도시 근린지역에서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수련관보다 작은 규모로 간단한 정보·문화·예술 활동 중심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청소년문화의집, 산·들·바다 등 자연에 있어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인 청소년야영장, 주로 여행청소년들을 위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유스호스텔, 그리고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청소년특화시설과 같은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2월에는 아래의 <표 IV-5-23>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753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숫자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1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이 181개, 청소년수련원이 173개, 유스호스텔이 127개, 청소년야영장 45개, 청소년특화시설 8개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 주로 숙박이 가능한 자연권 시설인 수련원, 유스호스텔은 민간이 경영하는 시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여성가족부, 2013: 403).

표 IV-5-23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53	181	219	173	45	127	8
공 공	485	177	215	42	27	16	8
민 간	268	4	4	131	18	111	0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p. 403.

표 IV-5-24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2.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53	181	219	173	45	127	8
서울	61	33	17	2	0	4	5
부산	24	8	9	4	2	1	0
대구	13	5	6	1	0	1	0
인천	26	8	6	5	4	3	0
광주	11	5	4	1	0	1	0
대전	13	4	7	1	0	1	0
울산	9	1	6	2	0	0	0
경기	144	28	41	47	4	23	1
강원	81	14	27	16	6	17	1
충북	46	9	9	15	2	11	0
충남	49	9	10	14	3	13	0
전북	54	11	20	13	3	6	1
전남	44	13	11	8	7	5	0
경북	63	16	11	14	7	15	0
경남	71	14	15	25	4	13	0
제주	43	3	19	5	3	13	0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p. 404.

시·도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에 아래의 <표 IV-5-24>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총 144개의 수련시설이 있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도가 81개, 경남이 71개, 경북이 63개, 서울이 61개의 순으로 많았다. 강원도에는 청소년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자연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이 다른 시·도보다 많고, 도시 근린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도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아 청소년수련시설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많은 것은 청소년인구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도 이유가 되지만 수도권이라 서울의 청소년이용자들이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청소년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청소년이용시설이다. 이는 청소년활동 등 정형화된 수련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고 청소년활동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속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설치 목적이 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이용시설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문화시설,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이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과 같은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과 같은 전시시설, 도서관, 문고 등의 도서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과 같은 문화보급전수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고, 이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 한국의 체육시설은 그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와 양적이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정부의 체육정책 패러다임이 선진국처럼 전문 엘리트체육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어서 지역사회 단위의 근린체육시설로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 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3: 407~408).

청소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의 이용률을 살펴보자면 먼저 아래의 <표 IV-5-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경우 1년에 1~2회 정도와 1달에 1~2회 정도 이용 비율이 각각 34%, 31.5%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1주일에 1~2회 정도 이용하는 학생은 13.3%로 나타났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21.2%로 나타났는데 이는 1년에 1~2회 이용하는 비율과 함께 생각하면 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성별이나 지역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에 따른 편차도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5-25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1) 공공도서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chi^2$
전체		21.2	34.0	31.5	13.3	100.0(10,455)	-
성별	남자	25.3	32.8	29.5	12.4	100.0(5,458)	116.554***
	여자	16.7	35.2	33.7	14.3	100.0(4,99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3.0	28.2	35.2	23.6	100.0(2,966)	607.462***
	중학교	21.8	36.6	31.6	9.9	100.0(3,651)	
	일반/특목/자율고	25.3	34.7	30.7	9.3	100.0(3,160)	
	특성화고	34.1	41.7	18.8	5.5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24.8	34.4	28.1	12.7	100.0(4,427)	85.030***
	중소도시	18.3	33.2	34.2	14.3	100.0(4,717)	
	읍면지역	19.2	35.3	33.7	11.8	100.0(1,3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8	33.8	31.9	13.6	100.0(9,752)	28.707**
	한부모가정	26.5	36.5	27.6	9.4	100.0(557)	
	조손가정	25.8	42.8	12.7	18.7	100.0(41)	
	기타	26.1	32.5	29.9	11.4	100.0(105)	
학업 성적	상	16.8	31.2	33.8	18.2	100.0(3,225)	269.065***
	중	19.3	34.8	33.2	12.8	100.0(4,405)	
	하	29.2	35.7	26.5	8.6	100.0(2,745)	
경제적 수준	상	19.4	31.0	34.0	15.6	100.0(4,691)	99.055***
	중	21.4	37.1	29.4	12.0	100.0(4,043)	
	하	25.7	34.3	30.0	10.1	100.0(1,650)	

\* p&lt;0.1 \*\* p&lt;0.01 \*\*\* p&lt;0.001

아래의 <표 IV-5-26>에서는 응답 학생들의 청소년시설 이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청소년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 근 60%에 가깝게 나타났고, 1년에 1~2회 정도 이용하는 학생도 33%에 달해 10명 중 9명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 학교 유형별, 지역규모, 학업성적 및 경제 수준에 따른 편차도 눈에 띄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시설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 청소년시설들이 대부분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보았을 때에 청소년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chi^2$
전체		58.2	33.0	6.0	2.7	100.0(10,442)	—
성별	남자	58.3	32.5	6.5	2.8	100.0(5,448)	5.347
	여자	58.2	33.6	5.5	2.6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52.4	32.6	9.8	5.1	100.0(2,957)	245.401***
	중학교	57.3	35.8	4.8	2.1	100.0(3,646)	
	일반/특목/자율고	63.5	30.4	4.7	1.4	100.0(3,160)	
	특성화고	64.1	31.7	2.5	1.7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57.5	34.6	5.5	2.4	100.0(4,421)	19.178**
	중소도시	58.0	32.5	6.5	3.0	100.0(4,712)	
	읍면지역	61.8	29.5	6.2	2.5	100.0(1,3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8.1	33.0	6.2	2.7	100.0(9,738)	18.519*
	한부모가정	61.2	30.5	4.6	3.7	100.0(557)	
	조손가정	60.4	29.3	5.9	4.4	100.0(41)	
	기타	53.3	44.7	1.9	0.0	100.0(105)	
학업 성적	상	53.6	36.4	6.8	3.2	100.0(3,218)	75.060***
	중	58.1	32.7	6.5	2.7	100.0(4,398)	
	하	64.3	29.2	4.5	2.1	100.0(2,746)	
경제적 수준	상	55.2	34.6	6.8	3.4	100.0(4,683)	56.627***
	중	59.6	32.3	5.8	2.3	100.0(4,038)	
	하	64.2	29.6	4.6	1.6	100.0(1,649)	

\* p&lt;0.1 \*\* p&lt;0.01 \*\*\* p&lt;0.001

체육시설의 경우는 아래의 <표 IV-5-2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는 학생이 31.8%이고, 1년에 1~2회 정도 이용한 학생이 31.6%인 것을 보았을 때에 응답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체육시설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한 번도 체육시설을 이용해 본적이 없는 초등학생이 12.8%, 중학생이 29.9%인데 반하여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과 특목고 학생들은 각각 48.2%, 48%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느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적으로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 이는 학업성과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 추측할 수 있다.

표 IV-5-2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3) 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chi^2$
전체		31.8	31.6	21.4	15.2	100.0(10438)	-
성별	남자	25.8	27.7	24.8	21.7	100.0(5445)	554.436***
	여자	38.3	35.9	17.7	8.2	100.0(4993)	
학교 유형	초등학교	12.8	29.5	30.9	26.8	100.0(2954)	1298.156***
	중학교	29.9	36.5	21.1	12.6	100.0(3644)	
	일반/특목/자율고	48.2	28.3	14.9	8.6	100.0(3161)	
	특성화고	48.0	29.7	12.3	10.0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31.7	31.9	21.1	15.3	100.0(4418)	31.173***
	중소도시	30.4	31.5	21.9	16.2	100.0(4712)	
	읍면지역	37.1	31.0	20.5	11.4	100.0(13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2	31.7	21.6	15.5	100.0(9736)	31.442***
	한부모가정	41.6	28.8	17.5	12.1	100.0(557)	
	조손가정	30.8	39.1	20.9	9.2	100.0(41)	
	기타	32.8	36.2	19.3	11.7	100.0(105)	
학업 성적	상	26.1	30.5	25.2	18.3	100.0(3220)	171.888***
	중	31.3	32.4	21.8	14.5	100.0(4395)	
	하	39.4	31.4	16.4	12.7	100.0(2745)	
경제적 수준	상	24.7	30.3	25.4	19.7	100.0(4679)	386.251***
	중	34.5	33.1	19.5	12.9	100.0(4039)	
	하	45.4	31.2	15.0	8.4	100.0(1649)	

\* p<0.1 \*\* p<0.01 \*\*\* p<0.001

한편 학생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 비율은 아래의 <표 IV-5-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번도 이용해 본적이 없는 학생이 거의 3명 중 1명꼴인 31.9%, 1년에 1~2회 정도 이용한 학생의 비율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 달에 1~2회 정도 이용한 비율과, 1주일에 1~2회 이용한 경우가 각각 17.3%, 2.1%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80% 이상이 한 번도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해 보지 않았거나, 1년에 1~2회 정도 이용해 본 것이 전부일 정도로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한류’의 주역이라고 보았을 때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부여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 비율이 낮아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에 관한 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IV-5-28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4) 문화 예술 공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chi^2$
전체		31.9	48.7	17.3	2.1	100.0(10,430)	—
성별	남자	36.6	46.0	15.4	2.0	100.0(5,441)	122.177***
	여자	26.7	51.6	19.3	2.3	100.0(4,98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4	50.2	27.3	5.1	100.0(2,950)	750.703***
	중학교	33.9	50.2	14.8	1.1	100.0(3,640)	
	일반/특목/자율고	39.6	47.6	12.1	0.7	100.0(3,160)	
	특성화고	48.1	39.8	11.0	1.1	100.0(679)	
지역 규모	대도시	30.0	48.7	18.9	2.5	100.0(4,414)	29.959***
	중소도시	32.6	49.1	16.2	2.1	100.0(4,706)	
	읍면지역	35.5	47.5	15.6	1.3	100.0(1,3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3	49.1	17.5	2.1	100.0(9,728)	40.496***
	한부모가정	42.5	40.9	14.6	2.0	100.0(555)	
	조손가정	26.7	58.5	8.7	6.1	100.0(41)	
	기타	35.9	49.5	13.6	1.0	100.0(105)	
학업 성적	상	24.2	49.6	23.3	2.9	100.0(3,222)	316.414***
	중	30.8	50.2	17.0	2.0	100.0(4,386)	
	하	42.5	45.1	10.9	1.5	100.0(2,742)	
경제적 수준	상	25.8	49.3	21.5	3.4	100.0(4,682)	286.715***
	중	34.4	49.8	14.7	1.1	100.0(4,029)	
	하	42.9	44.1	11.6	1.4	100.0(1,649)	

\* p<0.1 \*\* p<0.01 \*\*\* p<0.001

## ②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 가.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청소년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 문화, 예술에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아래의 <표 IV-5-29>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TV 및 DVD 시청이 압도적으로 많아 2013년 기준으로 다른 여타 활동에 비해 57.7%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29 청소년의 주말이나 휴일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단위 : %)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등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일
2009	57.3	6.7	16.5	10.2	47.7	5.6	18.5	7.8	5.6	33.2	33.5
2011	61.6	5.1	15.9	11.4	49.6	8.0	15.5	8.4	5.4	28.7	30.1
2013	57.7	5.9	17.9	14.5	41.9	7.7	15.5	8.5	5.7	32.5	32.4
남 자	52.0	5.8	13.2	24.8	55.0	5.9	14.3	7.4	2.6	28.0	26.0
여 자	63.6	6.0	22.7	4.0	28.6	9.4	16.7	9.6	8.8	37.0	38.8
중학생	68.3	5.0	12.4	17.6	58.0	9.2	11.3	9.2	2.4	23.8	29.4
고등학생	58.9	2.3	13.0	15.0	47.6	7.7	21.4	8.4	2.3	33.6	26.3
대학생	48.4	8.1	24.6	14.4	34.4	7.2	18.5	9.4	5.1	34.1	39.0

\*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2012.5.2.), 2012 청소년통계. p. 17.

통계청·여성가족부(2014.7.10.), 2014 청소년통계. p. 27, 66.

\* 원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주: 중복응답

이중 여자는 63.6%로 남자의 52.0%보다 많고, 중학생이 68.3%로 고등학생의 58.9%보다 10% 가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활동들, 예를 들면 문화예술 관람 17.9%, 스포츠활동 14.5%, 창작적 취미 활동 7.7%, 여행 5.9%에 비해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휴식의 비율이 32.5%로 많은 것도 청소년들이 특별히 여가·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않고 수동적이며, 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교와 관련된 일도 32.4%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개별적인 여가·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것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만나는 것으로 활동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성장하는 청소년시기에 활발한 여가·문화·예술 활동이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것을 감안했을 때에 한국의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이 심신의 균형이 잡히지 않은 채로 구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아동·청소년 단체 활동 참가율

아래의 <표 IV-5-30>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입한 청소년단체의 성격과 참가율을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의하면 앞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2013년 13~19세 청소년의 청소년단체 참가율은 35.1%로 나타났다. 참가하는 청소년단체의 성격은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가 51.0%로 가장 많았고, 친목 및 사교단체가 41.3%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시민사회 단체 30.4%, 종교단체 30.1%, 학술단체 8.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앞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참여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5-30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단위 : %)

	참여자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기 타
2011	26.4	53.8	28.7	46.6	22.1	10.7	4.9
2013	39.7	56.8	25.6	45.2	22.3	10.5	3.5
13~19세	35.1	41.3	30.1	51.0	30.4	8.8	2.8
20~24세	46.3	73.9	20.7	38.7	13.4	12.4	4.3
중학생	32.0	29.4	31.7	58.0	33.0	7.3	4.3
고등학생	32.7	34.4	32.9	51.9	34.2	8.3	3.2
대학생	53.9	68.2	20.6	41.8	20.0	17.5	2.8

\*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p. 29.

\*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아래의 <표 IV-5-31>에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단체 가입의 여부를 잘 알 수 있다. 현재 전체 10,449명의 응답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은 84.1%이고,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초등학생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비율은 18.9%로 중학교 4.7%, 고등학교 4.8%에 비하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지역규모 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1 청소년 단체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체(N)	$\chi^2$
전체		84.1	7.1	8.8	100.0(10,449)	-
성별	남자	85.1	6.6	8.3	100.0(5,454)	8.761*
	여자	83.0	7.7	9.3	100.0(4,996)	
학교 유형	초등학교	72.0	9.1	18.9	100.0(2,965)	576.458***
	중학교	89.0	6.3	4.7	100.0(3,647)	
	일반/특목/자율고	88.7	6.4	4.9	100.0(3,161)	
	특성화고	88.9	6.3	4.7	100.0(676)	
지역 규모	대도시	83.3	6.6	10.1	100.0(4,428)	22.119***
	중소도시	85.0	7.2	7.7	100.0(4,713)	
	읍면지역	83.3	8.5	8.2	100.0(1,308)	
학업 성적	상	80.2	8.4	11.4	100.0(3,220)	89.601***
	중	84.0	6.9	9.1	100.0(4,405)	
	하	88.8	5.8	5.4	100.0(2,745)	
경제적 수준	상	81.0	7.5	11.5	100.0(4,692)	94.232***
	중	85.8	6.9	7.3	100.0(4,038)	
	하	89.1	6.1	4.8	100.0(1,649)	

\* p&lt;0.1 \*\* p&lt;0.01 \*\*\* p&lt;0.001

## 다. 동아리활동 참가율

응답청소년들에게 동아리 활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아래의 <표 IV-5-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명 중 3명꼴로 약 75% 가까운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학업성적과 경제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비율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고 향후 동아리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중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들이 80%가까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10%정도 낮은 70%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V-5-32 동아리 활동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전체		74.6	25.4	100.0(10,434)	-
성별	남자	74.4	25.6	100.0(5,441)	0.357
	여자	74.9	25.1	100.0(4,993)	
학교 유형	초등학교	74.6	25.4	100.0(2,945)	2.974
	중학교	75.5	24.5	100.0(3,648)	
	일반/특목/자율고	73.7	26.3	100.0(3,162)	
	특성화고	74.3	25.7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76.8	23.2	100.0(4,415)	24.883***
	중소도시	72.3	27.7	100.0(4,708)	
	읍면지역	75.7	24.3	100.0(1,310)	
학업 성적	상	79.7	20.3	100.0(3,221)	83.398***
	중	74.3	25.7	100.0(4,392)	
	하	69.5	30.5	100.0(2,744)	
경제적 수준	상	76.9	23.1	100.0(4,677)	22.793***
	중	73.1	26.9	100.0(4,038)	
	하	72.3	27.7	100.0(1,651)	

\* p&lt;0.1 \*\* p&lt;0.01 \*\*\* p&lt;0.001

아래의 <표 IV-5-33>에서 동아리활동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초·중·고 전체 학교급별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한 초·중·고 학생들이 각각 74.6%, 75.5%, 73.8%를 보이고 있고, 이는 평균 74.6%의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수치이다. 이는 불과 2년 전인 2012년의 53%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여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초·중·고 전체 학교급별에서 동아리활동의 참가율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의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V-5-33 동아리활동 여부 : 연도별 추이

(단위 : %)

학교유형		연도	있다	없다
초등학교		2012	47.6	52.4
		2013	67.4	32.6
		2014	74.6	25.4
중학교		2012	58.0	42.0
		2013	73.1	26.9
		2014	75.5	24.5
고등학교	전체	2012	53.5	46.5
		2013	71.5	28.5
		2014	73.8	26.2
	일반/특목/ 자율고	2012	55.3	44.7
		2013	73.1	26.9
		2014	73.7	26.3
	특성화고	2012	47.3	52.7
		2013	64.4	35.6
		2014	74.3	25.7

## 라.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평일 여가활동 시간에 관하여 청소년들에게 물었을 때에 아래의 <표 IV-5-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시간미만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전체 10,456명 중 24.1%로 나타났고, 1시간이상~2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아 28.0%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17.6%, 중학교 14.8%, 특성화고 13.9%에 비하여 1시간 미만에 43.1%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역시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느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지역규모나, 학업성적 및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또한 특색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에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은 대학입학 준비를 위해 학업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형태일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34 평일 여가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전체(N)	$\chi^2$
전체		24.1	28.0	17.1	13.7	7.9	9.2	100.0(10,456)	—
성별	남자	22.9	28.6	18.0	13.8	7.6	9.1	100.0(5,458)	15.015*
	여자	25.4	27.3	16.2	13.6	8.1	9.4	100.0(4,99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6	25.4	19.2	15.3	10.3	12.2	100.0(2,968)	1285.316***
	중학교	14.8	27.9	20.7	16.9	9.1	10.5	100.0(3,647)	
	일반/특목/자율고	43.1	31.9	11.2	6.9	3.0	3.9	100.0(3,163)	
	특성화고	13.9	21.2	16.5	21.1	13.5	13.8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23.3	28.8	17.4	13.0	8.4	9.2	100.0(4,429)	11.462
	중소도시	24.4	27.3	17.0	14.4	7.6	9.3	100.0(4,718)	
	읍면지역	25.7	27.7	16.6	13.6	7.0	9.4	100.0(1,310)	
학업 성적	상	25.2	30.6	17.3	12.3	6.3	8.4	100.0(3,223)	65.989***
	중	22.8	27.7	18.0	14.3	8.6	8.7	100.0(4,407)	
	하	25.0	25.2	15.4	14.7	8.6	11.1	100.0(2,746)	
경제적 수준	상	23.8	28.9	18.1	13.2	7.8	8.1	100.0(4,691)	29.604**
	중	23.7	27.5	16.9	14.2	8.0	9.8	100.0(4,042)	
	하	26.2	26.1	14.9	14.1	7.8	10.9	100.0(1,652)	

\* p&lt;0.1 \*\* p&lt;0.01 \*\*\* p&lt;0.001

#### 마. 하루 평균 학습시간

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과 관련된 질문으로서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시간을 물어보았을 때에 아래의 <표 IV-5-35>는 같이 1시간미만인 응답학생은 15%에 불과하였고, 1시간이상~2시간미만이 18.2%, 2시간이상~3시간미만이 가장 많아 20.4%, 3시간이상~4시간미만이 16.4% 그리고 4시간이상 공부하는 학생도 20%에 달해 위의 <표 IV-5-35>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시간 때문에 얼마나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대체로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부시간이 약간 많게 나타났고, 학교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직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공부로부터 자유로워 3시간이상 공부하는 학생은 평균 4.3%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및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공부하는 하루 평균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5 정규 수업시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chi^2$
전체		15.0	18.2	20.4	16.4	13.2	9.6	7.2	100.0(10,433)	-
성별	남자	16.6	18.9	20.4	15.8	12.1	8.6	7.6	100.0(5,439)	50.706***
	여자	13.3	17.5	20.3	17.0	14.5	10.7	6.7	100.0(4,99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4	21.9	22.2	18.5	13.1	8.1	6.8	100.0(2,952)	1135.575***
	중학교	16.2	18.5	23.6	18.2	11.7	7.7	4.0	100.0(3,647)	
	일반/특목/자율고	12.0	13.1	17.0	15.2	16.9	13.9	11.9	100.0(3,156)	
	특성화고	47.8	24.0	10.9	3.4	4.7	5.6	3.6	100.0(678)	
지역 규모	대도시	14.5	17.4	20.9	16.0	13.1	10.3	7.8	100.0(4,418)	39.232***
	중소도시	14.5	18.6	19.7	17.4	13.7	9.2	6.9	100.0(4,705)	
	읍면지역	18.7	19.5	21.1	14.1	12.3	8.3	6.0	100.0(1,309)	
학업 성적	상	6.4	14.0	19.7	19.3	16.4	13.8	10.2	100.0(3,224)	873.688***
	중	12.4	20.4	22.0	16.8	13.1	8.8	6.5	100.0(4,396)	
	하	29.4	19.5	18.4	12.4	9.7	6.0	4.7	100.0(2,732)	
경제적 수준	상	9.4	17.1	20.8	18.5	14.4	11.3	8.5	100.0(4,684)	304.546***
	중	17.7	18.9	20.5	15.5	12.7	8.2	6.5	100.0(4,035)	
	하	24.2	19.6	18.9	12.7	11.2	8.4	5.0	100.0(1,643)	

\* p&lt;0.1 \*\* p&lt;0.01 \*\*\* p&lt;0.001

## ③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 가. 여가활동 만족도 및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제시되고 있는 아래의 <표 IV-5-36>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나타나 있다. 2012년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연령인 13~19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에 만족이 40%, 보통이 43.2%, 불만족이 16.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11년도의 같은 연령에서 나타난 만족도와 비교해서 10% 이상의 청소년들이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고무적이다. 불만족의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시간부족이 4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하여 1.4% 낮아진 수치이다.

표 IV-5-36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

	만 족	보 통	불 만 족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취미 없음	건강 체력 부족	함께할 사람 없음
2009	21.8	46.1	32.1	54.3	28.4	1.9	1.8	0.8	2.4	7.7	1.8
남자	23.3	45.9	30.8	54.0	30.5	1.8	1.6	0.7	2.6	6.3	2.0
여자	20.4	46.3	33.3	54.6	26.6	2.0	1.9	0.9	2.3	8.9	1.7
15~19세	25.2	44.3	30.5	25.9	57.9	2.2	4.2	2.2	4.4	0.6	1.5
20~29세	26.1	48.0	25.9	53.5	32.1	2.3	3.0	1.4	3.3	1.2	2.0
2011	19.3	48.6	32.1	60.9	23.2	1.0	1.8	1.1	3.4	6.8	1.6
남자	20.6	49.4	30.0	61.0	24.4	1.1	1.8	1.0	3.6	5.5	1.3
여자	17.9	47.9	34.1	60.9	22.1	1.0	1.7	1.1	3.3	7.9	1.8
13~19세	29.8	45.5	24.7	34.2	45.1	1.2	7.0	2.3	7.1	0.7	1.6
20~29세	23.1	51.4	25.5	58.2	27.5	1.8	2.7	1.2	5.4	1.0	2.0
2013	27.1	47.8	25.1	57.7	21.1	1.6	1.8	1.2	4.7	9.3	2.3
남자	28.4	47.9	23.8	59.3	21.5	1.6	1.6	1.1	5.3	6.9	2.4
여자	25.8	47.8	26.4	56.4	20.8	1.7	1.9	1.3	4.2	11.4	2.2
13~19세	40.0	43.2	16.8	33.4	43.7	1.5	4.4	2.4	10.5	0.7	2.0
20~29세	33.9	47.5	18.6	55.9	23.4	1.5	3.7	1.3	7.2	1.9	4.6

\* 출처: 통계청(2013), 2013 한국의 사회지표.

여가활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 다음으로 많은 비율은 '취미 없음'에 10.5%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취미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여가활동에 불만족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의 거의 반수에 가까운 수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하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향수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 학생들의 여가 및 문화예술 향수 권리 침해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이 다른 교육관련 지표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의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에 몰입한 교육상황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학입학 관련 교육제도에 대한 혁신적 개선을 통해 대학교평준화와 같은 경쟁이 완화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래의 <표 IV-5-37>에서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응답학생들의 이용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 9,216명 중 72%가 만족하는 편으로 응답하였고,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 15.7%를 합하면 87.7%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로 12.3%에 해당되므로 더욱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높이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성별이나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학생들 간에 청소년시설 이용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불만의 정도가 가장 높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5-37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않 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chi^2$
전체		2.1	10.2	72.0	15.7	100.0(9,216)	—
성별	남자	3.0	10.8	68.6	17.6	100.0(4,710)	75.328***
	여자	1.2	9.4	75.6	13.7	100.0(4,506)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	4.9	62.3	31.3	100.0(2,721)	855.662***
	중학교	1.9	9.5	76.6	12.1	100.0(3,200)	
	일반/특목/자율고	2.6	14.9	76.0	6.5	100.0(2,750)	
	특성화고	3.7	16.4	74.3	5.6	100.0(545)	
지역 규모	대도시	2.2	9.5	71.5	16.9	100.0(3,848)	13.245*
	중소도시	2.0	10.9	71.9	15.3	100.0(4,218)	
	읍면지역	2.2	9.8	74.5	13.5	100.0(1,150)	
학업 성적	상	1.4	8.3	69.0	21.3	100.0(2,951)	201.0740***
	중	2.0	8.8	74.1	15.0	100.0(3,895)	
	하	3.3	14.7	72.3	9.8	100.0(2,303)	
경제적 수준	상	1.9	8.4	69.6	20.1	100.0(4,193)	168.586***
	중	2.0	10.1	74.6	13.3	100.0(3,522)	
	하	3.0	15.1	73.0	8.8	100.0(1,439)	

\* p(0.1) \*\* p(0.01) \*\*\* p(0.001)

#### 나.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

응답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지 정도를 물어보았을 때에 아래의 <표 IV-5-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에서는 지지하는 편이 64.2%, 지지하지 않는 편이 35.7%로 나타났다. 이중 매우 지지하는 가정은 19%에 달했고, 전혀 지지하지 않는 가정의 비율은 16.6%로 응답되었다. 학교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가장 지지도가 높은 가정은 83.6%로 나타난 초등학교 학생의 가정이었으며, 지지도가 제일 낮은 가정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가정으로 57.2%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가정의 부모들이 청소년단체에의

가입 대한 이미지를 불량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가정의 부모들에게 건전한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은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매우 유익한 것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규모별로는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 지지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대체로 학업성적 및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3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가정 (단위 : %(명))

구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chi^2$
전체		16.6	19.1	45.2	19.0	100.0(10,407)	-
성별	남자	19.5	19.2	42.8	18.5	100.0(5,430)	72.269***
	여자	13.5	19.0	47.9	19.5	100.0(4,977)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	9.4	39.0	44.6	100.0(2,939)	1937.833***
	중학교	21.6	23.2	45.4	9.8	100.0(3,633)	
	일반/특목/자율고	17.6	22.0	51.4	9.0	100.0(3,159)	
	특성화고	27.2	25.5	42.6	4.7	100.0(677)	
지역 규모	대도시	16.3	18.4	44.3	21.0	100.0(4,415)	52.187***
	중소도시	16.6	19.7	44.7	19.0	100.0(4,688)	
	읍면지역	17.9	19.4	50.4	12.3	100.0(1,304)	
학업 성적	상	11.2	14.3	46.2	28.3	100.0(3,212)	584.192***
	중	14.6	19.5	47.8	18.1	100.0(4,384)	
	하	26.1	24.0	40.3	9.7	100.0(2,733)	
경제적 수준	상	12.7	16.1	44.8	26.4	100.0(4,660)	395.888***
	중	18.6	20.0	46.9	14.4	100.0(4,033)	
	하	22.4	24.9	43.0	9.7	100.0(1,645)	

\* p<0.1 \*\* p<0.01 \*\*\* p<0.001

한편,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지지 정도를 물어본 조사결과는 아래의 <표 IV-5-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하는 편이 72.8%이고, 지지하지 않는 편이 27.2%로 나타났다. 가정에 비해서 학교의 지지도가 높은 편이기는 하나 교육의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조차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3학교 중 1학교 비율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IV-5-39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학교

(단위 : %(명))

구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chi^2$
전체		11.8	15.4	51.8	21.0	100.0(10,411)	—
성별	남자	14.3	15.8	48.9	20.9	100.0(5,433)	77.323***
	여자	9.1	15.0	54.9	21.0	100.0(4,978)	
학교 유형	초등학교	5.0	7.9	45.8	41.2	100.0(2,937)	1187.823***
	중학교	14.6	16.0	54.6	14.8	100.0(3,636)	
	일반/특목/자율고	14.0	20.7	53.4	12.0	100.0(3,162)	
	특성화고	16.5	20.3	54.9	8.2	100.0(676)	
지역 규모	대도시	11.4	14.1	51.2	23.3	100.0(4,416)	36.337***
	중소도시	12.1	16.4	51.5	20.0	100.0(4,689)	
	읍면지역	12.3	16.3	54.6	16.8	100.0(1,306)	
학업 성적	상	8.0	10.9	51.1	30.0	100.0(3,210)	499.256***
	중	10.2	15.2	55.0	19.6	100.0(4,385)	
	하	18.9	20.9	47.7	12.6	100.0(2,737)	
경제적 수준	상	10.0	13.5	49.6	26.8	100.0(4,662)	213.482***
	중	12.6	15.5	54.5	17.4	100.0(4,033)	
	하	14.7	20.2	51.4	13.6	100.0(1,646)	

\* p&lt;0.1 \*\* p&lt;0.01 \*\*\* p&lt;0.001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단체에 일찍부터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 한국의 한교는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교육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역시 한국의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청소년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나마 초등학교에서는 청소년의 단체활동에 대하여 87%가 지지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단체활동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단체 활동 지지 수준은 지역규모나 학업성적 및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읍면지역과 학업성적 및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의 지지도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 4) 소결

2014년도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영역에서는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3개 지표의 내용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총 20개의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가 조사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실태는 현 한국의 교육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따라서 한국의 교육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영역에 대한 총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13년도의 이 영역 지표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올해의 지표들로 조사된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는 사실이다.

먼저 교육에의 권리 관련 지표들에서는 교육기회 보장 정도와 학교 부적응률, 대안교육 참여율에 관한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교육의 기회보장 정도에 있어서는 국내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장은 잘 되어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고등교육에의 진학률이 70%를 넘고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이 84.9%에 달해 주목할 만한 수치이고 이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참여권 등에 제한이 따라 시정되어야 할 실태이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실태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율으로 매년 초·중·고 전체 학생 수 중 매년 7만 명이 넘게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중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응답자 전체의 27.7%가 학교 자퇴의 충동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학입학 시험의 스트레스가 많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학생들에 있어서는 41.5%의 자퇴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는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심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대학입학 제도로 인해 그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대학입학 제도의 혁신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서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가 자신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3명 중 1명에 가까우며,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29.1%로 조사되었고,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의 42%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을 볼 때에 현행의 대학입학 제도 아래에서 학교가 본연적 교육목표에 따른 기능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행 교육영역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실태조사의 결과는 여가 및 문화 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실태조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 활동 향수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인프라들은 매년 확충되고 있으나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전체적으로 이들의 여가 및 문화 향수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실태조사 결과로는 청소년 시설 이용여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에 약 10,000명의 응답자 중 58.2%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학생 3명 중 2명 가까이는 청소년시설이 확대되어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학생은 84.1%이고,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관한 응답에서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4.1%이며, 하루 평균 학습시간에서 가장 많은 응답으로 2~3시간이 20.4%이고 6시간 이상도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들의 여가 및 문화 향수권을 제대로 향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긍정적인 조사결과도 보였는데,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모두가 비슷한 비율로 평균 74.6%에 달하고 있어 동아리활동은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13~19세 학생청소년은 40%였고, 불만족은 16.8%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9년에 비해 10% 가깝게 만족도가 높아진 수치여서 고무적인 결과이며, 청소년시설 이용 만족도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87.7%로 비교적 높게 나와 인프라에 대한 여건은 긍정적으로 조사되어서 그나마 다행인 조사결과이다.

결국,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여가, 문화에 대한 권리의 보장은 다시 말하지만 현행 교육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한 결과로 학생들이 정규 학교과정을 떠나 다른 길을 찾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가와 문화에 대한 향수 권리도 현행 교육제도에 의해 침해받고 있어 시급히 한국의 교육제도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서 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준수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하겠다.

## 6. 특별보호조치<sup>195)</sup>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 가.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아동·청소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아동·청소년,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아동·청소년, 불인정 및 철회된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말한다(김영지 외, 2013: 36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7,681명이고, 이 중 난민 지위 인정자 408명, 인도적 체류자 472명, 불인정자 3,713명, 철회자 1,461명으로 난민 지위 인정자 비율이 5.3%이고,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면 11.5%에 이른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가 282명이고, 이 중 난민 지위 인정자 77명, 인도적 체류자 58명, 불인정자 67명, 철회자 19명으로 난민 지위 인정자 비율이 27.3%이며,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면 47.9%에 이른다. 전체 난민신청자에 비해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난민 지위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비율이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난민 신청자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철회된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30.5%(86명)로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는 2007년까지 10명 내외에 머무르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20명 이상으로, 그리고 2012년까지는 30명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69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난민인정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2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인도적 체류자의 수도 2013년도에 31명으로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 이 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표 IV-6-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구분 연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연 령 (세)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4	0	0.0	148	2	11.1	18	0	0.0	1	0	0.0	12	0	0.0	10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06	7	2.5	278	0	0.0	11	0	0.0	13	2	1.9	108	0	0.0	46
2007	11	1.5	717	5	38.5	13	2	22.2	9	2	2.4	84	1	1.5	67
2008	20	5.5	364	8	22.2	36	0	0.0	14	1	1.3	75	0	0.0	117
2009	20	6.2	324	6	8.6	70	4	18.2	22	15	1.9	804	3	1.5	206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1	29	2.9	1,011	7	16.7	42	4	20.0	20	8	4.0	202	3	3.2	95
2012	38	3.3	1,143	14	23.3	60	7	22.6	31	9	2.0	454	3	1.4	211
2013	69	4.4	1,574	23	40.4	57	2	33.3	6	12	2.3	523	1	0.3	331
2014. 6.	40	3.9	1,038	6	19.4	31	31	10.5	295	14	1.4	1,024	2	0.9	235
총합	282	3.7	7,681	77	18.9	408	58	12.3	472	67	1.8	3713	19	1.3	1461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요청자료(2014.7.15.)를 토대로 재구성.

#### 나. 탈북난민 아동 수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불안한 신분 등의 이유로 그 수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탈북자의 규모를 미 국무부에서는 2000년경에 7만 5천~12만 5천명으로, 사단법인 좋은벗들에서는 2006년에 탈북자 10만 명, 탈북 아동 5만 명으로, 그리고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에서는 탈북자의 규모를 10만 명 등으로 추정하 바 있다(한동호, 김수암, 이규창, 이금순, 조정아, 2014).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는 세계난민동향보고서를 통해서 2013년 탈북 난민의 규모를 발표하였다. 2013년말 기준으로 탈북 난민자는 1,166명이고, 난민지위 신청자는 952명으로 2,118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난민지위 신청 후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지위 신청자는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528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중국내 탈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 정착했거나 타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발급받은 탈북자는 제외되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96)</sup><sup>197)</sup>.

196) 데일리 NK 2014.6 21일자, “탈북난민 1160여명, 중 내 탈북자 통계조차 없어” 웹 사이트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2604&num=103942>

한편, 2013년 초에 실시한 통일연구원과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중국 동북 3성 내 체류 탈북자 수는 8,708명(최소 4,402~최대 13,706명), 탈북여성 출산 자녀는 15,675명(최소 11,028명~최대 21,21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한동호 외, 2014: 488). 또한 2014년 7월 21일 통일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2014년 7월 현재 총 26,471명이며, 이중 남자가 8,006명, 여자가 18,465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2.3배나 되었다. 전체 입국자 중에서 아동·청소년 입국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입국자 26,471명 중에서 0~9세가 4.3%(1,151명), 10~19세가 12.2%(3,231명), 20~29세가 27.8%(7,361명)로 44.3%에 이르렀다.

표 IV-6-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75	1,480	2,180	1,906	1,137	421	307	8,006
여	576	1,751	5,181	6,003	3,154	945	855	18,465
누계	1,151	3,231	7,361	7,909	4,291	1,366	1,162	26,471

\*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요청자료(2014.7.21.)

표 IV-6-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대상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입국자수)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2,706	1,502
6~20세 (입국자수)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656	306	501	253

\* 출처: 여성가족부(2012b), 2013 청소년백서, p. 313.

\* 원자료: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한편, 2,000년부터 6~20세 탈북청소년의 연도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에 60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09년에는 최대 입국자인 65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여 2012년에는 253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197) 뉴스1코리아 2014. 6. 21일자, “유엔난민기구 전세계 탈북난민 1166명” 웹 사이트 <http://news1.kr/articles/?1733955>

#### 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도에 9~24세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청소년은 13.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5.3%로 여자 청소년(12.2%)보다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15.6%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9~10세(14.8%), 12~14세(12.7%), 15~17세(9.5%)로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연령대의 청소년들 중 외국 성장자녀가 많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외국 성장여부별로는 외국에서 성장한 자녀(21.4%)가 국내 성장 자녀(11.0%)보다도 약 2배가량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4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 (단위 : %,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성별	여성	12.2	87.8	100.0
	남성	15.3	84.7	100.0
연령	9 ~ 10세	14.8	85.2	100.0
	12 ~ 14세	12.7	87.3	100.0
	15 ~ 17세	9.5	90.5	100.0
	18세 이상	15.6	84.4	100.0
외국 성장여부	국내 성장	11.0	89.0	100.0
	외국 성장	21.4	78.6	100.0
전체		13.8 (9,167)	86.2 (57,369)	100.0 (66,536)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 629.

이밖에 외국계부모 출신국적에 따라서 그 경험을 살펴보면, 파키스탄 가족 자녀(29.4%)가 가장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높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17.1%), 태국(15.9%)과 일본(15.9%), 동남아 기타(15.7%), 우즈베키스탄(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친구들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친구들로부터 차별하거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3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20.8%), 이웃(11.7%), 교사(9.5%), 친척(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5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단위: %, 명)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친구	29.2 (2,676)	34.3 (3,147)	27.7 (2,543)	8.7 (801)	100.0 (9,167)
교사	71.6 (5,388)	18.9 (1,419)	8.2 (614)	1.3 (100)	100.0 (7,521)
친척	76.4 (6,804)	18.0 (1,607)	4.2 (378)	1.3 (116)	100.0 (8,905)
이웃	63.6 (5,830)	24.7 (2,267)	9.8 (899)	1.9 (172)	100.0 (9,167)
모르는 사람	58.5 (5,367)	20.7 (1,898)	15.1 (1,381)	5.7 (522)	100.0 (9,167)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 630-638에서 수정.

또한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경험했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는 경우(49.6%)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나 교사에게 말한 경우가 27.6%,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간 경우가 19.7% 등으로 대부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 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참가율

다문화가정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는 2013년도에 총 55,780명으로 초등학교 70.7%, 중학생 20.3%, 고등학생 9.0%로 나타났다. 2012년의 학생수에 비해서 2013년에 18.8%(8,826명)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16.7%(5,638명), 중학생은 17.0%(1,647명), 고등학생은 43.8%(1,541명)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한국출생자가 45,814명으로 가장 많고, 중도입국자는 4,922명, 외국인자녀는 5,044명으로 나타났다.

표 IV-6-6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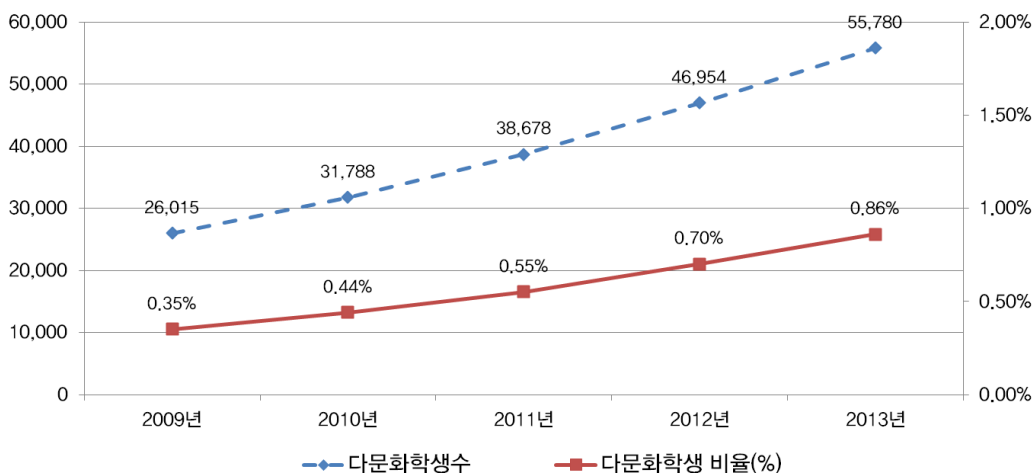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중도입국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외국인자녀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비율)	(74.1%)	(19.7%)	(6.2%)		(70.7%)	(20.3%)	(9.0%)	

\* 출처: 교육부(2013. 10), 교육부 보도자료("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amp;pageSize=10&amp;currentPage=0&amp;encodeYn=Y&amp;boardSeq=51029&amp;mode=view

\* 원자료: 2013년 통계는 교육부 교육통계, 2012년 이후 통계는 시·도 교육청 통계자료 취합.

지난 5년간 전체 학생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에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6,015명으로 전체 학생수 7,447,159명의 0.35%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0.44%, 2011년에는 0.55%, 2012년에는 0.7%, 그리고 2013년에는 0.8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학생은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였으나, 다문화학생은 6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출처: 교육부(2013. 10), 교육부 보도자료("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amp;pageSize=10&amp;currentPage=0&amp;encodeYn=Y&amp;boardSeq=51029&amp;mode=view

\* 원자료: 2013년 통계는 교육부 교육통계, 2012년 이후 통계는 시·도 교육청 통계자료 취합

【그림 IV-6-1】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이(2009~2013)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도에 9~24세의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여성가족부, 2013), 2012년 현재 78.7%의 자녀들이 재학 중이고, 21.3%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9~10세 자녀의 경우에는 99.9%가 재학 중이고, 12~14세 자녀의 경우에는 99.3%, 그리고 15~17세 자녀의 경우에는 93.7%가 재학 중이었으나,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41.3%만이 재학 중이고 58.7%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 77.2%, 남자 청소년 79.1%가 재학 중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재학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	학교를 다니지 않음 (중퇴, 미취학, 졸업 등)	합계
성별	여성	67.0	11.2	21.8	100.0
	남성	67.3	11.8	20.9	100.0
연령	9~10세	99.9	0.0	0.1	100.0
	12~14세	99.3	0.0	0.7	100.0
	15~17세	93.7	0.0	6.3	100.0
	18세 이상	8.0	33.3	58.7	100.0
전체		67.2 (44,693)	11.5 (7,638)	21.3 (14,205)	100.0 (66,536)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 564.

표 IV-6-8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13.4)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13. 4)	600	559	231	247	192	193	232	2,254
	1,159		478		385			
	2,022							

\* 출처: 교육부(2013. 4). 교육부 보도자료(“2014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917>

탈북 학생들의 경우에는 2013년 4월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2,022명(초등학생 1,159명, 중학생 478명, 고등학생 385명),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이 232명으로 총 2,254명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학생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도에 재학생 수가 1,143명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2,022명으로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아도 2009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수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9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13.4) (단위: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2009.4	562(49.2%)	305(26.7%)	276(24.1%)	1,143
2010.4	773(54.5%)	297(21.0%)	347(24.5%)	1,417
2011.4	1,020(60.7%)	288(17.1%)	373(22.2%)	1,681
2012.4	1,204(60.4%)	351(17.6%)	437(21.9%)	1,992
2013.4	1,159(57.3%)	478(23.6%)	385(19.0%)	2,022

\* 출처: 교육부(2013. 4). 교육부 보도자료(“2014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917>

#### 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201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여성가족부, 2013),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는 2012년 현재 1,029명으로 9~11세 자녀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자가 없었으나, 12~14세 자녀는 0.5%, 15~17세 자녀는 2.5%, 그리고 18세 이상의 자녀는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18세 이상의 경우에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단위: %)

구분	9~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학업중단자 비율	0.0%	0.5%	2.5%	6.9%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 565에서 재구성

\* 학업중단자 비율=학업중단 자녀/(현재 재학자녀+현재 학업중단 자녀) × 100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유는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가 2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18.6%), 어려운 학교 공부(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2~14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나이 어린 아이들과 다니기 싫어서(37.4%)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15~17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25.9%)와 함께 어려운 학교 공부(19.9%)가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26.4%)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가 보다 중요한 학업 중단 사유가 되고 있으며, 고등학생 연령대의 경우에는 친구관계와 함께 학업 문제가 학업중단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다. 또한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가 주요한 사유가 되고 있었다.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도에 3.5%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2년에 비해서 중도탈락률이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중도탈락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2012년도에 3.8%에서 2013년도에는 7.4%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II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3. 4)

구 분		초	중	고	계
'08년도	'07. 4. 재학생 수(명)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명)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1년도	'10. 4. 재학생 수(명)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명)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12년도	'11. 4. 재학생 수(명)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생 수(명)	27	11	18	56
	중도탈락률(%)	2.6	3.8	4.7	3.3
'13년도	'12. 4. 재학생 수(명)	1,204	351	437	1,992
	중도탈락생 수(명)	37	26	7	70
	중도탈락률(%)	3.1	7.4	1.6	3.5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http://www.hub4u.or.kr>.

2013년도 자료는 교육부 요청자료(2014.7.22.)를 토대로 재구성

\* 주: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 연도별 재학생 총수) × 100

2013학년도 탈북학생들이 중도 탈락한 사유를 살펴보면,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결석(31.4%), 가정사정(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중도 탈락과 장기결석으로 인한 중도탈락은 2011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중도탈락은 2011년에 12명에서 2012년에는 24명 2013년에는 3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으로의 진로변경은 2012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4).

### ③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

가.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및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중도입국 및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들의 경우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정규 학교 진학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이들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2011년에 서울, 부산, 광주의 3개 지역에서 2012년에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15개 지역 26개교), 2013년에는 52개교, 그리고 2014년에는 80개교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sup>198)</sup>. 2014년 7월에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3월 현재 운영 중인 예비학급은 총 104개이며, 예비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수는 628명으로 다문화학생 대비 예비학급 참여 다문화학생 비율은 25.5%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예비학급 참여 다문화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1.0%(400명), 중학생은 28.4%(57명), 고등학생은 15.1%이며, 기타 학교에서는 64.1%(152명)로 나타났다. 예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보급, 예비학교의 접근성 문제, 직영 교사의 업무과중 및 인센티브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박형민, 오성배, 임영희, 황석규, 손소연, 정석구, 김재구, 박새봄, 2012).

198) 교육부(2012. 3. 13). 교육부 보도자료.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자료.  
교육부(2014. 3. 17). 교육부 보도자료. 2014년 다문화 교육 215억 원 지원

표 IV-6-12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참가 인원수(2014. 3월 기준)

(단위: 명(%))

학교급	학교 현황		운영중인 예비학급수	예비학급참여 다문화학생수
	전체학생수	다문화학생수		
초등학교	24,116	1,904	55	400(21.0)
중 학교	10,358	201	15	57(28.4)
고등학교	2,666	124	3	19(15.1)
기타학교	349	237	31	152(64.1)
계	37,489	2,466	104	628(25.5)

\* 출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요청자료(2014.7.30.)를 토대로 재구성.

\* 기타학교는 초·중·고 학교, 중·고 학교, 각종학교 등을 말함.

\* 주: 예비학급 참여 다문화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인 경우만 포함하고 유동적인 인원은 제외하였음.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레인보우스쿨’ 사업을 시작하여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정서적 지원, 정규교육과정의 편입학, 진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일제, 여름학교, 방과후 학교, 주말·야간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국 10개 지역의 17개 기관에서 839명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에는 레인보우 겨울학교를 시범 운영하였고 11개 기관에서 837명이 참가하였다(무지개 청소년센터, 2013).

표 IV-6-13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단위: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전일제	521	512
여름학교	286	190
방과후학교	14	—
주말·야간학교	18	65
겨울학교	—	70
계	839	837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p. 86-88에서 재구성.

레인보우스쿨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기관 및 참가자, 프로그램 내용 등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청소년들의 접근의 어려움과 참여율 저조, 프로그램 대상 연령, 교육과정의 체계성 부족, 학급구성의 문제, 진행자와 참가자 간 언어 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김이선, 2013).

#### 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경제적 문제, 학교 및 가족 내 갈등, 학업 및 진로 고민, 언어장벽,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어서 2012년 9월부터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으로 온라인상담,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 집단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온라인상담 2,195건, 내방 상담 340건, 찾아가는 상담 97건 등 총 2,632건을 실시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온라인 상담 2,311건, 내방 상담 500건, 찾아가는 상담 218건, 집단상담 248건 등 3,27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표 IV-6-14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 수 (단위 : 건수)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온라인상담	2,195	2,311
내방상담	340	500
찾아가는 상담	97	218
집단상담	—	248
계	2,632	3,277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 99에서 재구성.

#### 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의 멘토링은 다문화가정 학생 및 탈북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정서적인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과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전국 초·중·고 다문화·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 멘토들에게는 근로장학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sup>199)</sup>. 한국장학재단 요청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3,457명의 멘토로 처음 시작하여 2013년에는 52개 대학 4,888명의 멘토가 참여하고 있으며, 멘티는 2013년에 4,784명이 참여하여 2012년 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2년에 4,626명에서 2013년에 4,56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탈북학생은 2012년에 107명에서 2013년에 223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 IV-6-15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단위: 명)

배움지기(멘티)	2012년	2013년
다문화가정 학생	4,626	4,561
탈북 학생	107	223
합계	4,733	4,784

\* 출처: 한국장학재단 요청자료(2014.7.29.)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단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심리·정서적인 안정 및 자존감 향상 등을 목적으로 1:1 매칭을 통한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대상으로 총 123쌍의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2013년도에는 서울, 경기지역 이외에 인천, 안산, 원주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였으며 학습 지원 이외에 예체능 및 특기적성, 정서지원분야로 활동분야를 확대해서 운영하였다. 즉,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멘토와 멘티 51쌍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인천, 안산, 원주 등 52쌍은 지역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 ①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 가.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소년법」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호소년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판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199)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결정한다(김영지 외, 2013).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등에 감호위탁 하는 1호 처분에서부터 소년원에 장기 위탁하는 10호 처분까지를 결정하는데, 7호 처분부터 소년원 수용이 이루어진다. 즉,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전담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위탁기간은 6개월이나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말한다(소년법 제32조).

**표 IV-6-1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연도 \ 기간	7호(의료) (명(%))	8호(1개월) (명(%))	9호(단기) (명(%))	10호(장기) (명(%))	계(명(%))	평균수용기간 (개월)
2008(08.6.22~)	66(2.6)	895(35.6)	783(30.9)	782(30.9)	2,526(100)	6.9
2009	52(2.0)	1,218(45.6)	684(25.6)	718(26.8)	2,672(100)	4.93
2010	56(2.0)	1,339(48.6)	771(28.0)	589(21.4)	2,755(100)	5.1
2011	69(2.7)	1,329(51.9)	644(25.2)	517(20.2)	2,559(100)	5.1
2012	103(3.2)	1,660(51.7)	792(24.7)	656(20.4)	3,211(100)	4.6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p. 385.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3)

\* 주 :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 과정을 10호 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입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 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2012년 현재, 보호시설에 수용된 인원 3,211명 중에서 7호 처분을 받아 의료보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3.2%(103명)이고, 8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1개월 이내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51.7%(1,660명), 9호 처분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단기적으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4.7%(792명), 10호 처분을 받아 2년 이내에 장기적으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0.4%(656명)로 1개월 이내의 수용 청소년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년원에 단기 및 장기적으로 수용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1개월 미만 수용된 소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보호소년의 소년원 수용인원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25.5% 증가하였으나 평균수용기간은 2011년에 5.1개월에서 2012년에는 4.6개월로 0.5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내 처우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경계가 분리된 장소에서 수용한다. 또한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2012년 현재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170명으로, 2011년(114명) 대비 49.1% 증가하였다.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은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17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56(100)	169(100)	146(100)	114(100)	170(100)
절도	73(46.8)	62(36.7)	45(30.8)	26(22.8)	42(24.7)
사기·횡령	1(0.6)	3(1.8)	3(2.1)	0(0.0)	2(1.2)
폭력·상해	9(5.8)	8(4.7)	1(0.7)	5(4.4)	17(10.0)
강간 등	24(15.4)	44(26.0)	32(21.9)	33(28.9)	54(31.7)
강도 등	24(15.4)	32(18.9)	33(22.6)	18(15.8)	24(14.1)
살인	9(5.8)	6(3.6)	11(7.5)	10(8.8)	11(6.5)
과실범	5(3.2)	2(1.2)	3(2.1)	1(0.9)	2(1.2)
기타	11(7.0)	12(7.1)	18(12.3)	21(18.4)	18(10.6)

\*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백서. p. 391.

\* 원자료: 법무부(2013). 교정본부 통계자료.

범죄 유형별로 최근 청소년범죄자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절도 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폭력·상해, 강간, 살인 등의 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절도 범죄는 2008년에 46.8%이던 것이 2012년에는 24.7%로 감소하였으나, 폭력·상해 범죄는 2008년에 5.8%에서 2012년에 10.0%로 4.2%p 증가하였으며, 강간 등의 범죄는 2008년에 15.4%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31.7%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살인 범죄는 2008년에 5.8%에서 2012년에 6.2%로 0.4%p 증가하였다.



## ②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

### 가.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피의자 및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만이 있어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2).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법률조력인 제도가 처음 운영된 2012년도에는 2,908명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8,084명으로 약 3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신청은 경찰·원스톱센터·상담소 신청과 감사 지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원스톱신청에 의한 지정이 4,41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찰신청(3,127명), 감사지정(448명), 상담소 신청(9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국선변호사 현황을 지방검찰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10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천(1,027명), 경기(688명), 대구(569명), 부산(526명), 광주(500명) 등의 순으로 수도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18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국청 운영 누적 현황(2013.1.1.~12.15.기준) (단위: 명)

지방검찰청	경찰신청			원스톱센터신청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			상담소신청			감사지정		누적 합계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접수	지정
서울	1,643	1,417	226	693	560	133	20	20	0	117	112	2,473	2,109
의정부, 고양	78	78	0	191	191	0	4	4	0	27	27	300	300
인천, 부천	106	105	1	865	844	21	4	4	0	74	74	1,049	1,027
경기도	408	388	20	215	213	2	28	28	0	52	52	710	688
강원도	74	74	0	85	85	0	5	5	0	17	17	181	181
대전	75	75	0	194	190	4	3	3	0	27	27	299	295
충청남도	154	150	4	28	26	0	0	0	0	15	15	197	195
충청북도	13	11	2	156	152	4	1	1	0	32	32	202	196
대구, 서부지청	244	188	56	439	370	69	4	4	0	7	7	694	569
경상북도	64	63	1	168	166	2	0	0	0	22	22	254	251
부산, 동부지청	57	57	0	456	456	0	4	4	0	9	9	526	526
울산	13	13	0	193	193	0	6	6	0	11	11	223	223

지방검찰청	경찰신청			원스톱센터신청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누적 합계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접수	지정
경상남도	192	182	10	228	165	63	2	2	0	8	8	429	356
광주	93	84	9	489	407	82	1	1	0	8	8	591	500
전라남도	12	11	1	327	313	14	4	4	0	5	5	348	333
전라북도	229	229	0	1	1	0	5	5	0	9	9	244	244
제주도	0	0	0	85	84	1	0	0	0	7	7	92	91
총계	3,455	3,127	328	4,813	4,418	395	91	91	0	453	448	8,812	8,084

\* 출처: 강동욱(2014).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방안,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pp. 63-98.

\* 주: 중복삭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되거나, 2개 이상의 검찰청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나.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의 처우는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에서의 교육도 인권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부적응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흥미·적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특성화·보통)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응 능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 교육과정은 입원에서 출원에 이르기까지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 등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3).

표 IV-6-19 소년원의 교육체계

교육단계	기간	내용
제1단계 (신입자교육)	10일 이내	생활안내, 적응지도 및 상담활동, 체육활동, 분류조사 등
제2단계 (기본교육)	각 처분기간 이내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검정고시,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
제3단계 (사회복귀교육)	10일 이내	진로상담, 취업교육, 현장학습, 봉사활동 등

\* 출처: 법무연수원(2013). 2013 범죄백서. p. 444.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자료.

소년원 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년원 교육의 제1단계는 신입자 교육으로 10일 이내로 이루어지며,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등을 통하여 소년원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게 하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단계는 기본교육으로 처분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신입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 인문, 실업, 특성화, 인성교육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3단계는 사회복귀교육으로 1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기본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요건을 갖춘 보호소년에 대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상담, 장래 생활설계에 대한 지도, 퇴원후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 다.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소년교도소에서 보호소년이 처우에 불복할 때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하거나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처우불복제도를 두고 있다(법무연수원, 2013). 2012년도 수용자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청원이 1,09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소·고발(681건), 행정심판(253건), 행정소송(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5년간 처우불복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행정심판과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2011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0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단위 : 건)

연도 \ 내용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2008년	2,330	309	110	1,205
2009년	2,205	360	91	1,185
2010년	1,573	245	75	801
2011년	1,313	235	75	646
2012년	1,094	253	49	681

\* 출처: 법무연수원(2013). 2013 범죄백서, p. 325.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자료.

### ③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의 참가

#### 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200). 보호관찰은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법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되었고, 그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 성인형사범, 가정폭력사범, 성매매사범,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로 점차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여성가족부, 2013).

2012년도 소년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47,621명으로 전체보호관찰인원 108,495명의 43.9%에 해당한다. 지난 5년간 소년보호관찰인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소년보호관찰인원은 36,099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46,686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45,990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46,336명, 그리고 2012년에는 47,621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IV-6-21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연도 \ 구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08	95,137	36,099	37.9
2009	115,191	46,686	40.5
2010	86,435	45,990	53.2
2011	121,188	46,336	38.2
2012	108,495	47,621	43.9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395.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3).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소년의 경우에 소년법에 의해서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2012년 현재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8,175명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청소년이 18.5%(1,510명)이고,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청소년은 81.5%(6,66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기관에서 진행한 활동은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자연보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복지분야가 93.9%(6,259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cppb.go.kr/HP/TSPB13/tspb13\\_02/sub\\_02\\_03.jsp](http://www.cppb.go.kr/HP/TSPB13/tspb13_02/sub_02_03.jsp)

표 IV-6-22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398.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3).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3: 398). 2012년도에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10,612명으로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청소년은 94.5%(10,026명)이고,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청소년은 5.4%(586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수강명령 대상 인원은 2008년의 인원 5,847명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나 2009년의 인원 10,397명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심리치료가 152명으로 가장 많고, 성폭력(63명), 준법운전(8명), 약물(4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6-23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398.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3).

#### 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여성가족부, 2013: 367).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범죄 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상담, 서신, 전화 등을 통한 접촉선도와 범죄예방위원의 주거지나 복지시설에서 의, 식, 주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원호선도를 행하고 있다. 1978년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시행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김영지 외, 2013; 여성가족부, 201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소년범죄자 107,490명 중에서 5.4%인 5,812명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01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는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2011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년범죄자들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 선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표 IV-6-2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연도	구분	소년범죄(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원(명)	비율(%)
2008		134,992	5,886	4.4
2009		113,022	7,104	6.3
2010		89,776	2,967	3.3
2011		89,068	1,363	1.5
2012		107,490	5,812	5.4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367.

\* 원자료: 대검찰청(2013). 검찰연감.

#### 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달리 소년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적인 선도가 필요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며, 보호관찰관은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우 등과 접촉하고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법무부 훈령 제731호; 김영지 외, 2013).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전체 기소유예자 348,146명의 1.4%인 4,976명이며, 2009년의 0.8%(3,807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표 IV-6-2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7		262,823	5,258(2.0)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0.9)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0.8)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1.2)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1.4)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1.4)	7,423	2,912	408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369.

\* 원자료: 대검찰청(2013), 마약류 범죄백서

### 3) 경제적 착취

#### ① 인권침해적인 청소년근로시간 수준

##### 가. 청소년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이 지표에서는 청소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월평균 근로시간과 하루 평균 근로시간<sup>201)</sup>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2년 현재 청소년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9세 이하가 170.5시간, 20-24세가 181.6시간으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인 182.3시간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20-24세가 8.53시간, 19세 이하가 8.48시간으로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8.52시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먼저 월평균 근로시간의 경우에 남자 청소년근로자는 19세 이하가 166.9시간이고, 20-24세가 194.3시간으로,

201)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수를 월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였다.

20-24세 남자 근로청소년이 전체 남자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185.8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근로청소년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20-24세가 8.95시간이고, 19세 이하가 8.47시간으로, 20-24세 남자 근로청소년이 전체 남자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8.68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19세 이하가 172.7시간이고, 20-24세가 174.9시간으로, 전체 여자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175.7시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9세 이하 여자근로자가 8.47시간, 20-24세 여자근로자가 8.29시간으로, 전체 여자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8.23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6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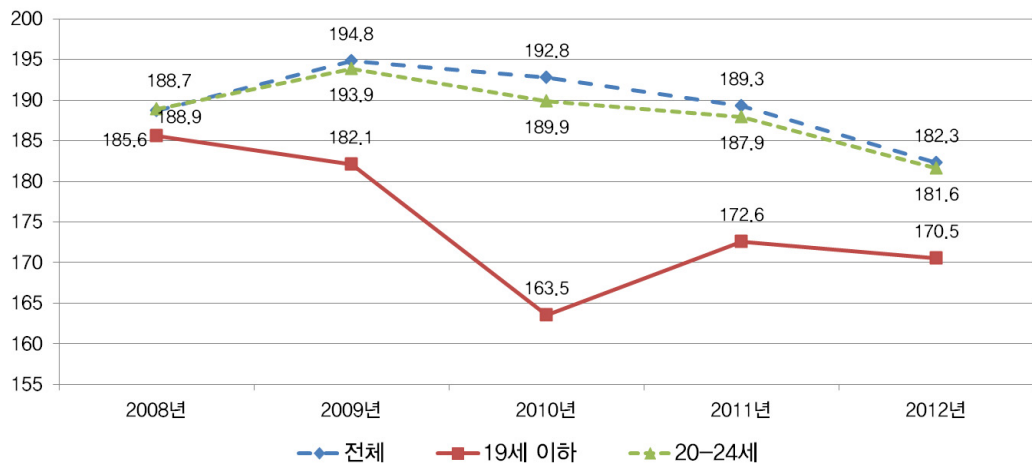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2008	전 체	21.9	191.6	21.8	182.6	21.8	188.7
	19세 이하	21.0	176.8	22.2	192.0	21.7	185.6
	20-24세	22.3	204.6	21.7	181.3	21.9	188.9
2009	전 체	22.7	197.2	22.8	189.6	22.8	194.8
	19세 이하	21.2	186.9	21.2	179.9	21.2	182.1
	20-24세	22.7	205.9	22.6	188.5	22.6	193.9
2010	전 체	22.5	195.7	22.5	186.9	22.5	192.8
	19세 이하	19.7	165.4	19.9	162.2	19.8	163.5
	20-24세	22.6	200.3	22.4	184.9	22.5	189.9
2011	전 체	22.2	192.7	22.2	182.4	22.2	189.3
	19세 이하	20.3	172.6	20.9	172.6	20.7	172.6
	20-24세	22.4	200.0	22.0	181.5	22.1	187.9
2012	전 체	21.4	185.8	21.3	175.7	21.4	182.3
	19세 이하	19.7	166.9	20.4	172.7	20.1	170.5
	20-24세	21.7	194.3	21.1	174.9	21.3	181.6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334.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한편, 지난 5년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과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도에 19세 이하가 185.6시간, 20-24세가 188.9시간 이었으나 감소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19세 이하가 170.5시간, 20-24세가 181.6시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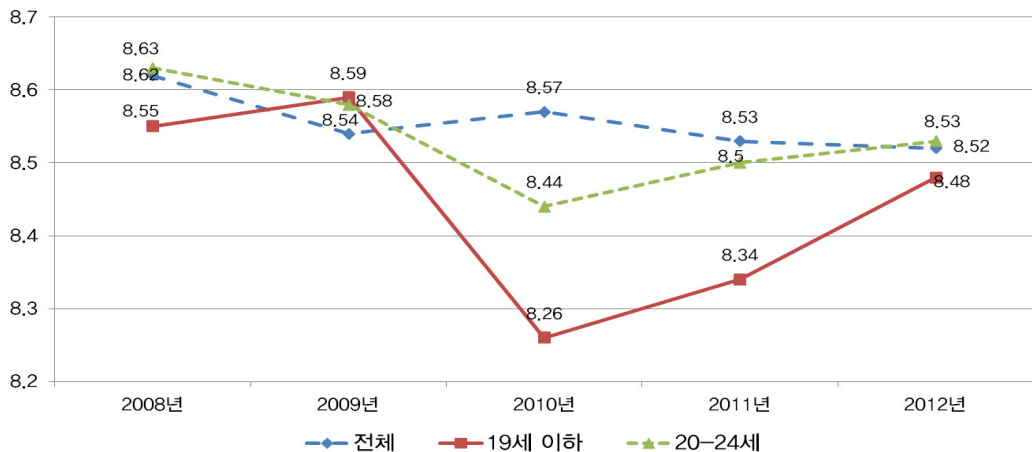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334.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그림 IV-6-2】 월평균 근로시간(2008~2012)

그러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에 19세 이하가 8.55시간, 20-24세가 8.63시간이었으나 2010년에 19세 이하가 8.26시간, 20-24세가 8.44시간으로 감소하다가 증가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19세 이하가 8.48시간, 20-24세가 8.53시간으로까지 증가하였다. 전체근로자가 2010년 이후 8.57시간에서 2012년에 8.52시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것과는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334에서 월평균근로시간수를 월평균근로시간수로 나누어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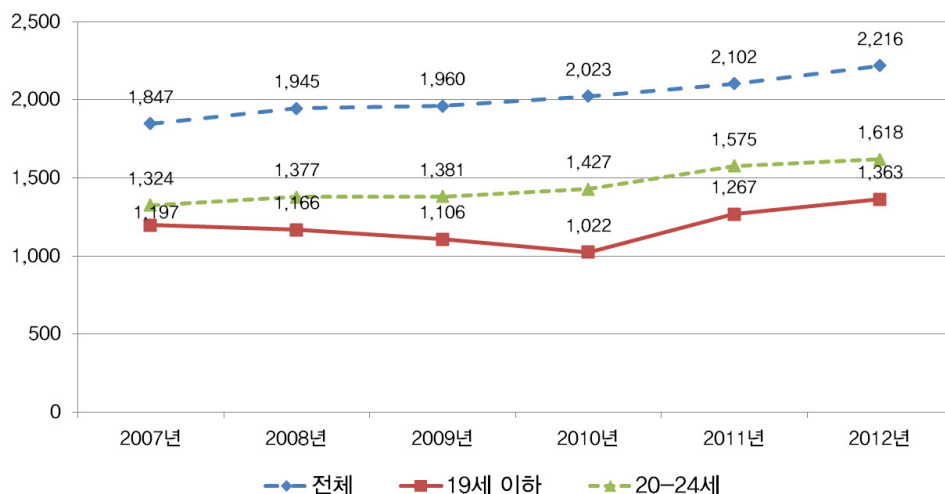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그림 IV-6-3】 하루 평균 근로시간

최근 청소년근로자들은 전체근로자와 같이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와는 상반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서 전체근로자들과 거의 비슷한 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1일 1시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이상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나.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이 지표는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시간당 임금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근로자 대비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였다. 월평균 임금은 청소년을 포함하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근로자와 청소년근로자와의 임금 차이도 감소하고 있다. 2012년 현재 20-24세 청소년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73.0%, 그리고 19세 이하 청소년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61.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청소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50%에 못 미치고 있고, 20-29세 청소년은 약 7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33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그림 IV-6-4】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2007~2012)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책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2012년 현재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 136만 3천 원이고 20-24세 청소년은 161만 8천 원으로, 2011년 대비 19세 이하 청소년은 7.6%p, 20-24세 청소년은 27% 증가하였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세 청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청소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은 7,006원이고, 20-29세 청소년은 10,455원으로 2011년에 비해 19세 이하 청소년은 17.9%, 20-29세 청소년은 3.8% 증가하였으나,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에 비하면 19세 이하 청소년은 49.8%(2011년에는 43.1% 수준), 20-29세 청소년은 74.3%(2011년에는 73.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19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정규직은 8,358원, 비정규직은 6,612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79.1%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20-29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11,142원, 비정규직이 8,854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79.5%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60%대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70%대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7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전체	15,289	15,001	9,372(61.3)	11,019(73.5)	13,769	14,075
19세 이하	8,232	8,358	5,292(64.3)	6,612(79.1)	5,942	7,006
20~29세	11,097	11,142	7,691(69.3)	8,854(79.5)	10,070	10,455
30~39세	15,521	14,903	11,014(71.0)	13,049(87.6)	14,807	14,659
40~49세	17,865	16,866	10,415(58.3)	12,632(74.9)	16,171	16,088
50~59세	16,672	16,445	10,014(60.1)	12,143(73.8)	14,638	15,332
60세이상	11,292	13,100	8,464(75.0)	9,777(74.6)	9,978	11,518

\* 출처: 고용노동부(2012. 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 2.  
고용노동부(2013. 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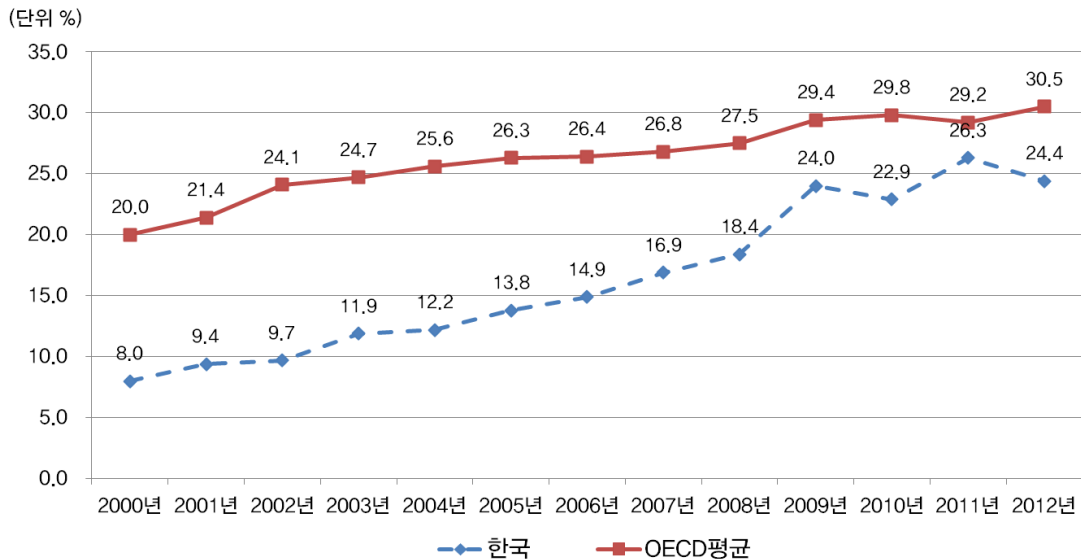
\* 주 :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② 근로시 청소년 부담처우 경험률

### 가.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고용에 있어서 파트타임 노동 비중의 증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임금과 기타 노동조건 등에서 풀타임 근로자와의 차별 및 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15~24세 청소년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2년 현재 24.4%로 OECD 국가 평균인 30.5%보다 6.1%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은 200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에 OECD 국가 평균이 20.8%, 한국이 8.0%로 12.8%의 차이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이 29.2%, 한국이 26.3%로 불과 2.8% 차이로 좁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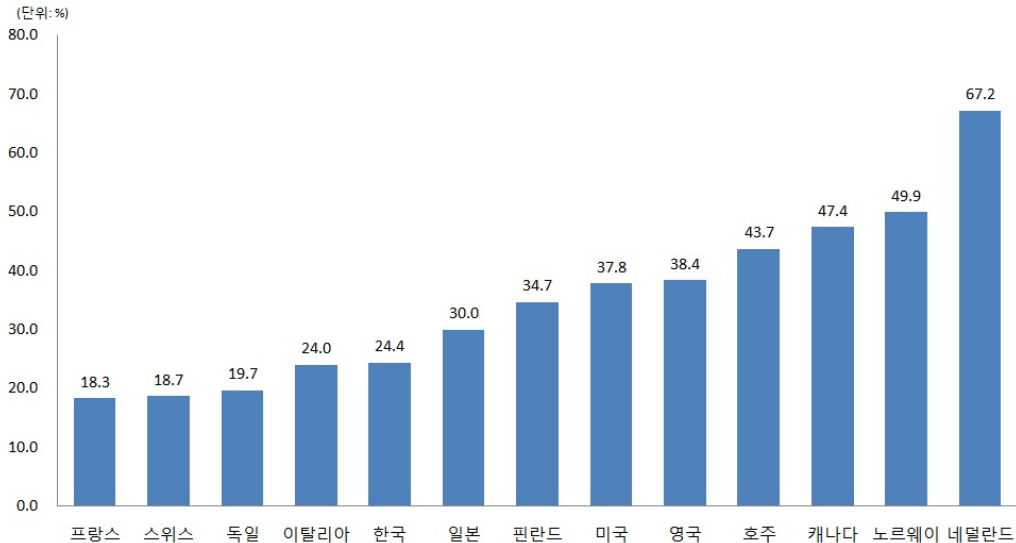


\* 자료 : OECD(2013), Scoreboard on youth aged 15~24,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TPTC\\_#](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TPTC_#).

【그림 IV-6-5】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1~2012)

또한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비율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네덜란드가 67.2%로 가장 높고, 그리고 노르웨이(49.9%), 캐나다(47.4%), 호주(43.7%), 영국(38.4%), 미국(37.8%), 핀란드(34.

7%), 일본(30.0%)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며, 이탈리아(24.0%), 독일(19.7%), 스위스(18.7%), 프랑스(18.3%)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료 : OECD(2013), Scoreboard on youth aged 15~24,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TPTC\\_1#](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TPTC_1#).

【그림 IV-6-6】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01 / 2012)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970년대의 높은 물가, 높은 실업률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노사간의 대타협과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파트타임 고용 확대에 성공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자와 풀타임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적고 기타 제도적인 차별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병유, 2010; Yerkes, 201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고용이 초단시간 위주로 되어 있고, 임금 수준이 낮으며,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풀타임 근로자와의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한동균, 2010).

#### 나. 아르바이트 부담처우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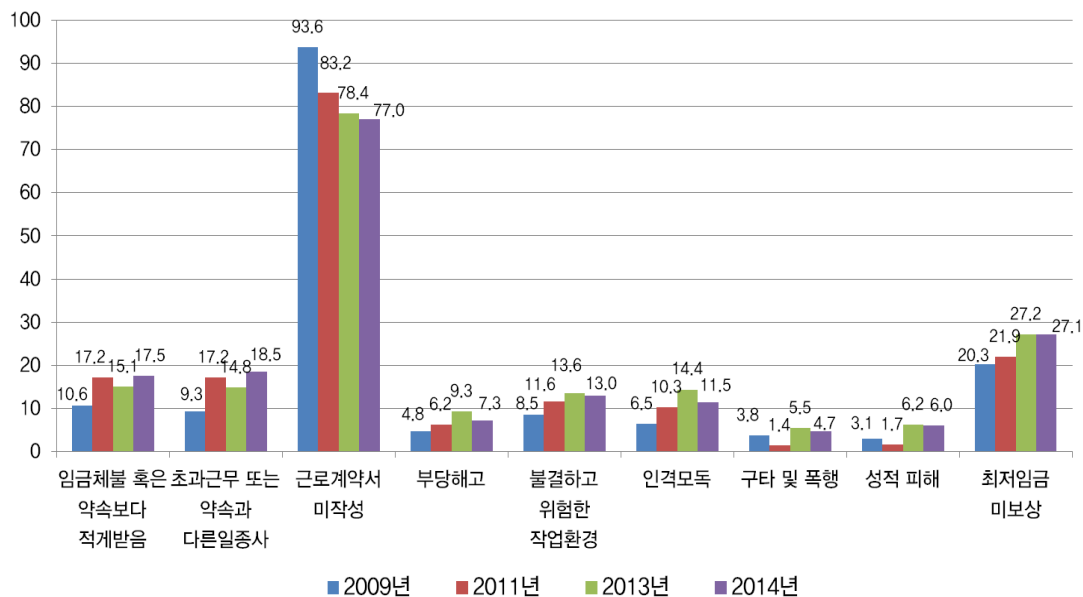
2014년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3.5%로 2013년도(13.3%)에 비해서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6-28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전체		13.5	86.5	100.0(7,435)	
성별	남자	15.2	84.8	100.0(3,885)	21.647***
	여자	11.6	88.4	100.0(3,550)	
학교 유형	중학교	6.7	93.3	100.0(3,611)	625.461***
	일반/특목/자율고	15.1	84.9	100.0(3,151)	
	특성화고	42.2	57.8	100.0(673)	
지역 규모	대도시	12.5	87.5	100.0(3,102)	34.624***
	중소도시	12.6	87.4	100.0(3,243)	
	읍면지역	19.1	80.9	100.0(1,08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7	87.3	100.0(6,874)	50.993***
	한부모가정	23.6	76.4	100.0(446)	
	조손가정	19.6	80.4	100.0(25)	
	기타	23.3	76.7	100.0(90)	
학업 성적	상	7.3	92.7	100.0(1,964)	174.138***
	중	11.8	88.2	100.0(3,010)	
	하	20.6	79.4	100.0(2,393)	
경제적 수준	상	10.4	89.6	100.0(2,841)	83.911***
	중	12.9	87.1	100.0(3,057)	
	하	20.4	79.6	100.0(1,476)	

\* p&lt;0.5 \*\* p&lt;0.1 \*\*\* p&lt;0.01



【그림 IV-6-7】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경험이 많았으며, 특성화 고등학생이 일반고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학생이 양부모학생보다, 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성별로 남학생이 15.2%, 여학생이 11.6%였으며, 학교급별로는 특성화 고등학생 42.2%, 일반/특목/자율고 고등학생 15.1%, 중학생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 학생 23.6%, 조손가정 학생 19.6%, 양부모가정 학생 12.7%의 순으로, 양부모 가정 학생보다 한부모가정 학생이나 조손가정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로는 하 20.6%, 중 11.8%, 상 7.3%의 순으로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 20.4%, 중 12.9%, 상 10.4%의 순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임금체불, 최저임금지급 불이행, 부당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 발생하는 부당처우 경험률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보장(27.1%), 초과 근무 또는 약속과 다른 일 종사(18.5%),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7.5%), 불결하고 위한한 작업환경에서 일한 경험(13.0%), 인격모독(11.5%), 부당해고(7.3%), 성적 피해(6.0%), 구타 및 폭행(4.7%)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의 4개년의 청소년 부당 처우 경험을 비교해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77%대 이상으로 가장 경험이 많으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도 2013년 이후에 27%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초과근무 또는 약속과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례와 임금체불 혹은 약속보다 적게 받은 사례도 최근 들어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구타 및 폭행, 성적 피해 등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

#### 가.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 수

연소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도에는 1,9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는데, 1,780개소에서 7,589건의 범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에서 1,776개소의 7,581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3개소의 7건은 사법처리, 1개소 1건은 과태료를 처분하였다(고용노동부, 2013).

표 IV-6-29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건))

연도	점검실시	법위반	조 치				
			시정완료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시정중
2008	1,318	1,031 (2,567)	1,017 (2,545)	7 (7)	-	-	-
2009	1,621	1,389 (4,704)	1,389 (4,701)	1 (1)	1 (2)	-	-
2010	1,545	1,300 (4,979)	1,298 (4,977)	2 (2)	-	-	-
2011	2,711	2,384 (9,681)	2,381 (9,676)	3 (5)	-	-	-
2012	1,940	1,780 (7,589)	1,776 (7,581)	3 (7)	1 (1)	-	-

\* 출처: 고용노동부(2009). 노동백서, p. 186.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p. 23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 p. 252.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 p. 210. 고용노동부(2013). 고용노동백서, p. 234.

지난 5년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1,318개소를 점검하였으나 2009년에는 1,621개소를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에는 2,711개소로 가장 많은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에는 1,940개소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은 지난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 2,567건 이던 것이 증가하여 2012년에는 7,589건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청소년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1,25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연소증명서 미비치 431건, 야간·휴일근로 인가 262건, 최저임금 미달 206건, 근로시간 미준수 117건, 취직인허증 미발급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법 위반 내용을 분석해 보면, 2009년까지는 연소자증명서 미비치가 가장 많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연소증명서 미비치도 여전히 많았지만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30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단위 : 건)

연도	최저임금 주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미달
		연소자증명서 비치	야간·휴일 근로 인가	근로시간 준수	취직인허증	
2008	314	469	41	86	6	314
2009	76	496	188	63	3	76
2010	885	432	209	61	2	86
2011	1,605	847	401	217	7	296
2012	1,253	431	262	117	4	206

\* 출처: 고용노동부(2009). 노동백서. p. 186.      고용노동부(2010). 고용노동백서. p. 233.  
 고용노동부(2011). 고용노동백서. p. 253.      고용노동부(2012). 고용노동백서. p. 210.  
 고용노동부(2013). 고용노동백서. p. 235.

## 나.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요청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청소년고용 점검사업장 중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24.8%(75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1.1%, 2012년 37.0%, 2013년 24.8%로 20~30%의 청소년 고용사업장들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31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청소년 고용 점검사업장(건)	2,711	1,940	3,057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건)	896	718	758
미실시 사업장 비율(%)	33.1	37.0	24.8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요청자료(2014. 09. 17).

#### 4) 성적 착취

##### ①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 가.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제2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전국민의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하여 조기개입에 대한 전문지식, 현장 적용력을 갖춘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sup>202)</sup>. 2014년 7월 현재 양성된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는 726명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32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 수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7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문강사	55	198	334	412	457	726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요청자료(2014. 08. 07).

\* 주: 2013년 이후는 성인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로 통합됨.

###### 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신상공개 정보는 최초에 경찰서에서만 열람하던 것을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으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20년간 등록·관리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 공개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의 세대주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는 2013년 11월 현재 3,786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상공개자의 수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신상공개자 수는 96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51명, 2011년에는 1,261명, 그리고 2013년에는 3,78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gangs.kigepe.or.kr/front/user/front\\_html\\_page/html\\_page.act?pageCode=P010211](http://gangs.kigepe.or.kr/front/user/front_html_page/html_page.act?pageCode=P010211)(검색일: 2014년 8월 12일)

표 IV-6-33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자
274	96	2,167	151	3,818	1,261	12,652	3,786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청소년백서, p. 256, 여성가족부(2012a), 청소년백서, p. 248,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백서, p. 246,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백서, p. 262,

\* 주: 2011년까지의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이나 2013년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성인 대상임.

2008년, 2010년, 2011년은 12월 31일 기준이며, 2013년도는 11월 30일 기준임.

표 IV-6-34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특별시 * 광역시/도	성범죄자 수
서울특별시	657
부산광역시	309
대구광역시	138
인천광역시	226
광주광역시	153
대전광역시	99
울산광역시	89
경기도	954
강원도	139
충청북도	108
충청남도	224
전라북도	150
전라남도	245
경상북도	249
경상남도	255
제주특별자치도	54
세종특별자치시	10
총 계	4,059

\*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

\* 주: 본 통계자료는 행정동 기준(주민자치센터 관리기준)으로 집계하여 공개한 자료입니다.

신상공개 성범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4,059명 중 경기도가 95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657명), 부산(309명), 경남(255명), 경북(249명), 전남(245명), 인천(226명), 충남(2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 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2013년 현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10,651명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 31,323명 중 34.0%에 해당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9세가 23.4%(7,329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7~13세(8.7%), 7세 미만(1.9%)이다. 성폭력 피해 장애 아동·청소년은 총 1,047명으로 전체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3,225명의 32.5%에 해당하며, 연령별로는 13~19세가 2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7~13세(7.7%), 7세 미만(1.8%)이었다. 지난 5년간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15,606명, 2010년에는 18,384명, 2011년에는 14,513명, 2012년에는 13,024명, 2013년에는 10,651명으로 2010년에 잠시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IV-6-35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단위 : 명, %)

연도	계(명)		피 해 자 연 령					
			7세미만	7-13세미만	13-19세미만	19-60세미만	60세이상	미상
2009년	전체	33,659	944	4,375	10,287	15,115	546	2,392
		100%	2.8	13.0	30.6	44.9	1.6	7.1
	장애인	4,603	6	228	1,312	2,828	122	107
		100%	0.1	5.0	28.5	61.4	2.7	2.3
2010년	전체	39,299	1,042	5,581	11,761	18,225	381	2,309
		100%	2.7	14.2	29.9	46.4	1.0	5.9
	장애인	1,722	36	189	574	879	9	35
		100%	2.1	11	33.3	51	0.5	2.0
2011년	전체	33,749	786	3,813	9,914	15,927	401	2,908
		100%	2.3	11.3	29.4	47.2	1.2	8.6
	장애인	2,431	7	234	983	1,137	25	45
		100%	0.3	9.6	40.4	46.8	1.0	1.9
2012년	전체	30,642	565	3,088	9,371	15,325	405	1,888
		100%	1.9	10.1	30.6	50.0	1.3	6.2
	장애인	3,449	10	166	1,251	1,681	109	232
		100%	0.3	4.8	36.3	48.7	3.2	6.7
2013년	전체	31,323	600	2,722	7,329	16,664	350	3,660
		100%	1.9	8.7	23.4	53.2	1.1	11.7
	장애인	3,225	57	247	743	1,894	49	233
		100%	1.8	7.7	23.0	58.7	1.5	7.3

\* 출처: 여성가족부(2013).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 4.

#### 나.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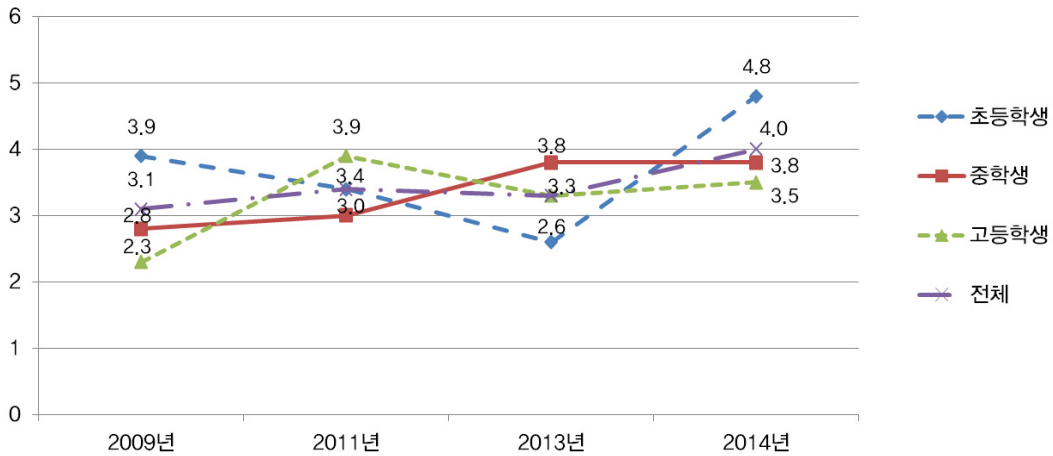
성적 피해 경험률은 최근 1년간 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을 말한다. 2014년 현재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4.0%이었으며, 성별, 학교급별, 경제적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4.4%, 여학생 3.5%로 남학생들의 피해 경험률이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8%, 중학생 3.8%, 일반/특목/자율고 고등학교 3.4%, 특성화 고등학교 3.8%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 95.7%, 중 96.8%, 하 95.4%로 경제적 수준이 중인 경우에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36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전체		4.0	96.0	100.0(10,446)	—
성별	남자	4.4	95.6	100.0(5,456)	6.183*
	여자	3.5	96.5	100.0(4,990)	
학교 유형	초등학교	4.8	95.2	100.0(2,964)	9.084*
	중학교	3.8	96.2	100.0(3,647)	
	일반/특목/자율고	3.4	96.6	100.0(3,156)	
	특성화고	3.8	96.2	100.0(679)	
경제적 수준	상	4.3	95.7	100.0(4,686)	9.225*
	중	3.2	96.8	100.0(4,042)	
	하	4.6	95.4	100.0(1,649)	

\* p<0.5 \*\* p<0.1 \*\*\* p<0.01

한편,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에 각각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적 피해 경험률은 2009년에 3.1%에서 2014년에 4.0%로 0.9%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성적 피해 경험률이 2009년에 3.9%에서 2013년에 2.6%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에는 4.8%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2.8%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2013년에 3.8%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도 3.8%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09년에 3.1%에서 2011년에 3.9%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3.3%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3.5%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8】 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4개년 추이 :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조사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최근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초등학생의 성적 피해가 다른 교급에 비해서 현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다.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

청소년들이 성적인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최근 1년간 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 피해를 당한 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61.3%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대상으로는 친구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보호자)(14.1%), 교사(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29.0%로 가장 많은데 비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과반수 가까이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 피해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표 IV-6-37 성적인 피해 시 도움요청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배	부모님 (보호자)	형제 · 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 (상담 전화)	경찰	인터넷	기타	전체(N)	$\chi^2$
전체	38.7	28.8	1.4	14.1	1.3	11.2	1.1	0.5	2.2	0.7	100.0(412)	-
학교 유형	초등학교	28.2	18.5	0.9	29.0	2.9	14.9	2.3	0.0	1.8	100.0(143)	100.416***
	중학교	39.8	36.9	0.0	7.1	0.8	11.3	0.0	1.0	3.2	100.0(136)	
	일반/특목/ 자율고	49.5	31.3	4.0	6.6	0.0	6.1	1.1	0.0	1.4	100.0(106)	
	특성화고	47.6	32.3	0.0	0.0	0.0	11.6	0.0	2.9	2.9	100.0(26)	
학업 성적	상	46.1	25.1	0.5	7.2	0.7	15.2	1.2	0.0	2.9	100.0(132)	38.299*
	중	28.7	30.8	3.2	21.9	1.5	10.2	0.5	0.8	1.8	100.0(156)	
	하	43.0	30.8	0.0	12.0	1.6	7.7	1.6	0.6	2.0	100.0(121)	
경제적 수준	상	40.3	25.1	0.4	18.8	0.8	11.9	0.4	0.0	1.5	100.0(203)	40.939*
	중	33.4	38.4	1.9	11.4	1.8	8.9	2.2	0.0	1.5	100.0(131)	
	하	43.3	23.0	3.1	7.2	1.5	11.7	0.9	2.7	5.5	100.0(75)	

\* p&lt;0.5 \*\* p&lt;0.1 \*\*\* p&lt;0.01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상인 학생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경우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에게 요청한 경우도 15.2%로 중이나 하인 경우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중이나 하인 학생들은 친구에 요청한 경우가 똑같이 30.8%였으며, 중인 학생들은 부모에 알린 경우가 21.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에 가장 많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중인 경우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 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성폭력사범 접수 인원은 4,215명 중 4,147명이 처분되었는데, 이중에서 1,870명이 기소되었으며, 불기소는 1,220명, 기타 1,05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처분 대비 기소율을 살펴보면, 2008년 44.3%, 2009년 40.3%, 2010년 46.7%, 2011년 43.6%, 2012년 45.0%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없이 40%대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IV-6-38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08	2,587	2,593	951	198	1,095	349
2009	2,699	2,696	920	167	1,197	412
2010	3,722	3,661	1,312	399	1,253	958
2011	3,978	3,922	1,312	399	1,253	958
2012	4,215	4,147	1,482	388	1,220	1,057

\* 출처: 대검찰청(2013), 2013년 검찰연감, p. 539.

\* 주 (1) 산출죄명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

(2)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내용

한편,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실제 처벌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07년~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7,013건에 대한 조사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강간범죄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하였고, 강제 추행은 2007년 44.0%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역형은 강제추행이 2007년 31.1%에서 2012년 33.2%로 높아졌으나, 강간은 2007년 67.8%에서 2012년 58.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4. 3. 13).

####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2013년에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을 신설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하여 형량을 확대하였으며,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의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럽 각국의 형량 및 형 집행실태 보고서에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성 범죄 형량에 대해 90.2%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헤럴드, 2014년 5월 12일자).



표 IV-6-39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개정 전	개정 후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 의제유사강간	-	징역 2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목적판매·배포·전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상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알선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4&nwYn=&query=>  
(검색일: 2014. 08. 18)

#### ④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 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2013년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3개소로 입소정원은 264명이며, 124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시설은 2009년에 20개소에서 2013년 23개소로 3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입소정원은 2009년에 214명에서 2013년에 264명으로 23.4% 증가하였다. 또한 종사자수는 2009년에 116명에서 2013년에 124명으로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입소인원

238명 중에서 74.4%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19~24세 18.5%, 13~18세 47.5%, 5~12세 6.3%, 5세 미만 2.1%로, 중·고등학생 연령대인 13~18세가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체 입소인원 103명 중에서 63.1%가 아동·청소년이었는데, 13~18세가 3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9~24세(25.2%), 5~12세(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4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 사 자 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09년	20	214	116	69	47
2010년	19	209	100	72	28
2011년	19	209	90	64	26
2012년	22	249	104	96	8
2013년	23	264	124	104	20

\* 출처: 여성가족부(2013).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 7.

지난 5년간 입소인원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입소정원에 비해서 입소인원이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입소정원보다 입소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입소인원은 2009년 54.8%, 2010년 56.7%, 2011년 51.8%, 2012년 55.1%로 5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입소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4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이상
2009년	전체	312	13	33	125	141
		100%	4.2	10.6	40.1	45.2
	장애인	90	0	3	33	54
		100%	0	3.3	36.7	60.0
2010년	전체	282	10	30	120	122
		100%	3.5	10.6	42.6	43.3
	장애인	90	0	5	29	56
		100%	0	5.6	32.2	62.2
2011년	전체	226	14	15	88	109
		100%	6.2	6.6	38.9	48.2

연도	구분	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이상
2012년	장애인	64	-	-	22	42
		100%	-	-	34.4	65.6
	전체	236	10	12	108	106
		100%	4.2	5.1	45.8	44.9
	장애인	78	1	1	25	51
		100%	1.3	1.3	32.1	65.4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년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	-	2.9	35.0	25.2	35.9	1.0

\* 출처: 여성가족부(2013).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 8.

#### 나.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성폭력 피해자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 현황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를 파악해 보면, 2012년 현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14~19세 청소년이 223명, 8~13세 어린이가 122명, 7세 이하 유아가 48명으로 총 393명이었으며, 전체 성폭력 피해자 1,418명의 2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아동·청소년은 361명, 남자 아동·청소년은 32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 아동·청소년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42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43 (66.5)	204 (14.4)	114 (8.0)	43 (3.0)	34 (2.3)	1,338 (94.4)
남	47 (3.3)	19 (1.3)	8 (0.6)	5 (0.4)	1 (0.1)	80 (5.6)
총계	990 (69.8)	223 (15.7)	122 (8.6)	48 (3.4)	35 (2.4)	1,418 (100.0)

\* 출처: (사)한국성폭력상담소(2013).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p. 2.

성매매 대상 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위기청소년센터를 지정하여 검찰에서 교육상담 수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경찰에서 발견 통보된 청소년, 성매매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 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매 대상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사후복귀를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중앙센터와 4개 센터에서 94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았으나, 2007년에는 중앙센터와 5개 센터에서 305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7개 센터에서 255명, 2010년에는 9개 센터에서 372명, 2011년에는 9개 센터에서 372명, 2011년에는 10개 센터에서 355명, 2012년에는 10개 센터에서 364명으로 점차적으로 참가 센터와 인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IV-6-43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 실시 인원 (단위 : 명)

연도별	중앙센터	40시간 교육									지적 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06	24	-	20	10	26	-	-	-	-	-	14	94
2007	108	5	58	62	47	-	-	-	-	-	25	305
2008	-	45	47	45	43	-	-	-	-	-	25	205
2009	-	44	43	36	39	34	42	-	-	-	17	255
2010	-	52	60	40	48	29	46	50	18	-	29	372
2011	-	51	46	33	33	31	43	50	22	24	22	355
2012	-	34	45	43	42	31	41	48	24	31	25	364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3 청소년백서, p. 252.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3), 내부통계자료.

#### 다.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리·정서적 지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 지원이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는 42,678명으로 이중 54.5%가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비교해 보면,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원 중에서 심리·정서적 지원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2009년에 14,570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42,678명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전체 지원 중 심리·정서적 지원 비중은 가장 높을 때는 60%나 70%를 넘기도 하였으나 보통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4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단위 : 건, %)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 타
2009년	14,570	8,165	417	2,626	789	401	2,172
	100%	56.0	2.9	18.0	5.4	2.8	14.9
2010년	18,218	12,666	311	2,276	688	868	1,409
	100%	69.5	1.7	12.5	3.8	4.8	7.7
2011년	21,274	15,843	268	2,824	528	453	1,358
	100%	74.5	1.3	13.3	2.5	2.1	6.4
2012년	28,581	15,395	453	3,894	2,096	791	5,952
	100%	53.9	1.6	13.6	7.3	2.8	20.8
2013년	42,678	23,246	1,126	6,021	2,749	2,595	6,941
	100%	54.5	2.6	14.1	6.4	6.1	16.3

\* 출처: 여성가족부(2013).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 9.

## 5) 소결

특별보호조치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사각 지대에 위치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사범 운영,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서는 난민 아동·청소년,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와 교육기회,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을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소년사범 운영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 위탁·수용됨으로써 자유가 박탈된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현황, 그리고 범죄청소년들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의 참가를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경제적 착취에서는 청소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위반과 저임금의 문제, 부당처우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고용사업장의 법 위반 실태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인권침해적인 청소년근로시간 수준,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를 주요 지표로 다루었다.

성적 착취에서는 성폭력 예방 강사의 양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운영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추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를 다루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난민신청자 수와 더불어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현재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는 282명이며, 이 중에서 난민 지위 인정자 77명, 인도적 체류자 58명, 불인정자 67명, 철회자 19명으로 10명 중 3명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철회된 것으로 이들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탈북난민의 경우에는 그 수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2013년 초에 실시한 통일연구원과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동북 3성 내 체류 탈북자 수는 최소 8,708명(최소 4,402~최대 13,706명), 탈북여성 출산 자녀는 15,675명(최소 11,028명~최대 21,214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분상의 불안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양육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청소년들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7월 현재 0~9세가 1,151명, 10~19세가 3,231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16.5%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13.8%로 10명 중 1명 이상이 주로 친구들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출신보다 파키스탄, 필리핀, 동남아 등의 저개발 국가의 자녀의 경우에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자녀들은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대부분 참거나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국가나 문화적 편견 없이 좋은 친구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수의 비율은 2009년에 0.35%에서 2010년 0.44%, 2011년 0.55%, 2012년 0.7%, 2013년 0.8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24세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비율은 21.3%이고, 특히 18세 이상은 10명 중 6명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6.9%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4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향후 이들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고, 비행 행동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하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학업 지속과 직업훈련 연계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도 재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중도탈락률은 2008년에 10.8%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에 3.3%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에 3.5%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초·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최근 중도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다. 초·중학생들의 중도탈락은 이민 등 우리나라를 떠나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탈북청소년들의 정착지가 우리나라가 되지 못하고 타국으로 이전되고 있음은 우리 사회에의 정착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들 청소년들의 교육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북한이탈청소년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원만한 학교 적응을 위하여 정규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다문화학생 예비학교와 레인보우스쿨이 점차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학교 접근성의 문제, 대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대학생 멘토와의 1:1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의료보호시설, 소년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3,211명,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에 수용된 3,211명 중 51.7%가 1개월 이내에 수용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소년원에 단기(6개월 이내) 및 장기적(2년 이내)으로 수용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1개월 미만 수용된 소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교도소에서의 수용은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별로 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절도 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폭력·상해, 강간, 살인 등의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에의 수용은 1개월 미만이 주를 이루고 단기간 수용 추세에 있으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최근 생활상의 범죄보다 상대방의 신체 및 정신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흉포한 청소년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소년범죄자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흉포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조력인 제도, 인권중심의 소년원 교육 체계, 소년교도소 처우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2년도에는 2,908명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8,084명으로 약 3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검찰청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2,109명, 인천 1,027명, 경기688명, 대구 569명, 부산 526명, 광주 5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짧은 기간 동안에 국선변호사가 크게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수도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지방으로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의 처우는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소년원에서의 교육도 인권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흥미·적성 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년교도소의 처우에 보호소년이 불복할 때 청원,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처우불복제도를 두고 있다. 지난 5년간 처우불복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처우불복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2012년도에 청원 1,094건, 고소·고발 681건, 행정심판 253건, 행정소송 49건 등 총 2,077건에 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과 고소·고발은 2011년에 비해 오히려 각각 18건, 35건씩 증가하여 교도소의 처우에 여전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범죄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여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 수용·위탁하는 대신에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운영하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이 있다. 2012년도 현재 소년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47,621명으로 전체보호관찰인원 108,495명의 43.9%에 해당하며, 지난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소년범죄자 107,490명의 5.4%인 5,812명으로 201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청소년은 전체 기소유예자 348,146명의 1.4%인 4,976명으로 2009년의 0.8%(3,807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대안적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것은 소년범죄자들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다양한 선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권 중심의 소년사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월평균근로시간의 경우에 전체근로자와 같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전체근로자와는 상반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2010년에 8.26시간에서 2012년에 8.48시간으로 증가하였는데,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서 전체근로자들과 거의 비슷한 시간을 근로하고 있었다. 임금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근로자와 청소년근로자와의 임금차이도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은 7,006원으로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49.8%에 불과하며,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에 정규직의 79.1%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법정 근로시간 초과하는 청소년 근로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임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적과 법 위반 실태를 살펴보면, 그동안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점검 사업장의 수가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이 오히려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추세여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방법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 고용사업장들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양성된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는 726명으로 2009년에 55명의 강사를 양성한 이후에 매년 양성 인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성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확대됨에 따라 신상공개자의 수도 확대하고 있으며, 공개 방법도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 공개,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다양화하고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2013년 현재 10,651명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31,323명)의 34.0%이며, 2010년 18,384명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 성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최근 그 피해 경험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2013년에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서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강간범죄나 강제 추행의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징역형은 강제추행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강간의 경우에는 약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량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법 집행상에서 이를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리·정서적 지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 지원이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는 42,678명으로 이중 54.5%가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성매매 대상 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위기청소년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사후복귀를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 중앙센터와 4개 센터에서 94명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았으나,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 10개 센터에서 364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비해서 지원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제 V 장

#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 제 V 장

#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영역에서는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등 2개 중분류에 각 5개의 소분류, 총 13개의 지표항목을 살펴보았다.

국제적 권고와 아동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14년 2월 다시 개최되었으나 그 이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법적 근거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류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인 청소년희망센터는 한국상담복지개발원 내 설치되어 그 행정력과 운영의 확대가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GDP 대비 0.2~0.3%수준으로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과 자료조차도 통일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예산’의 정의와 산출내역을 통일하여 변화추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각각 40.1%, 43.0%, 27.7%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르는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생인권조례를 모르는 비율은 2013년 39.5%에서 2014년 43.0%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16.5%에서 2014년 13.0%로 감소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13년 45.6%, 2014년 35.6%로 2013년에 비해

2014년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인권교육 경험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1회의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013년에는 전체의 18.6%였지만 2014년에는 15.4%로 감소하였고, 5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2013년 7.4%에서 2014년 13.0%로 증가하여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장소로는 59.7%가 학교 정규교과시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35.6%,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17.3%, 기타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 경험 장소로 기타 항목 중 가정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수업시간 21.2%, 방송 프로그램 6.9%, 인터넷 사이트 4.3%로 나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차별 가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은 성적에 대한 차별로 28.5%의 가해 경험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연령에 대한 차별(27.7%), 성차별(26.9%),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25.1%)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차별 피해 경험의 경우에도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률이 3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연령에 대한 차별(25.5%), 성차별(24.3%), 외모 및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23.2%)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에서는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차별·고민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 6개 하위영역의 30개 지표를 살펴보았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과 관련해서 ‘교사나 교장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4%,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0.8%,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는 응답은 30.7%,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는 응답은 34.4%로, 2013년에 비해서 자율권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회의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56.1%가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가 약간 넘는 학교에서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회의가 운영되지 않는 학교유형은 일반/특목/자율고가 55.8%로 가장 높았다.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를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4개년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중학생(11.1% → 13.4% → 16.2% → 17.7%)과 고등학생(13.0% → 16.6% → 19.9% → 일반/특목 자율고 21.9%, 단, 특성화고는 19.4%)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참여할 수 없거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경우와 잘 모르겠다는 경우를 합한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는 다른 학교급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38.5%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을 2012년, 2013년, 2014년의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혀 모른다’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에 잘 알고 있으며 참여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012년 2%, 2013년과 2014년은 1.8%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모르거나 참여한 경험이 없는 비율은 2012년 98%, 2013년과 2014년이 98.2%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12년 2.3%, 2013년 2.4%, 2014년 일반/특목/자율고 2.3%와 특성화고 1.1%로 2012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지만, 2014년은 약간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2014년 1.1%로 중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떤 기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9.3%로 나타난 반면,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62.4%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해본 경험에 대해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2.0% → 1.8% → 1.6%), 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2.3% → 2.4% → 2.3%)을 볼 수 있다.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1.3%로 보장 정도가 높지 않았으며, 참여에 장애가 되는 이유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 34.2%로 가장 높아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응답이 40.6%(그런 편이다 27.4%, 매우 그렇다 13.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9.4%(그렇지 않은 편이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39.6%)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종교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사·집회 경험률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정도는 ‘전혀 없다’ 65.4%, ‘거의 없다’ 18.2%로 나타났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경험률은 ‘전혀 없다’ 73.6%, ‘거의 없다’ 19.2%로 나타났으며 2013년도에 비해서도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이 다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57.9%의 학생들이 일 년에 한번 이상 용모 검사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53.3%의 학생들이 복장검사를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하였으며, 소지품검사는 23.1%의 학생들이 일 년에 한번 이상 경험하였으며,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은 2013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정보보호와 관련해서 30.2%(그런 편이다 22.9%, 매우 그렇다 7.3%)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28.1%(그런 편이다 20.0%, 매우 그렇다 8.1%)의 청소년들이 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부모님(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 벌을 당한 경험은 25.7%,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신체적 벌을 받은 경험은 23.7%,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경험은 30.4%,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어본 경험은 22%로 나타났다.

2011년, 2013년, 2014년의 3개년 동안 인터넷에서의 초·중·고등학생 전체의 피해경험의 비교를 통해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피해는 2011년에 36.4%에서 2013년 22.1%, 2014년 17.7%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협박 피해 경험도 2011년에 6.5%에서 2013년 3.4%, 2014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성희롱 경험도 2011년에는 4.9%에서 2013년 4.5%, 2014년 2.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유포 경험은 2011년에 8.2%에서 2013년에 4.2%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등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검토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입양률, 대안양육 비율,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과 같은 각각의 소분류 범주에 속하는 22개 세부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의 주요 성장환경인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1일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은 32.2%였으나,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83.5%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와의 대화는 충분하다는 응답과 부모의 이해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점점 낮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13,076건이었으며(10,857건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정서학대 37.6%, 신체학대 30.9%, 방임 27.8%, 성학대 3.7%로 나타났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으며, 만성적인 학대와 중복학대, 재학대 경험률도 높았다. 1년간 1회이상의 유형별 방임경험에 대해서는 야간시간 방임이 67.4%로 가장 높았고, 비위생적인 의복과 침구 사용(16.9%), 결식에 대한 무관심(9.3%), 질병 시 방치(8.1%), 결식에 무관심(2.0%)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방임에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대와 방임이 아동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과 또 관련 사례에 대한 신고가 더욱 급증하는 최근 경향을 볼 때,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대와 부모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공립시설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특히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급식과 같은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모든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고 지원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과후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방과후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입양의 경우 국내입양을 강조하는 국가시책에 따라 국내입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해외입양은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과 제도(입양특례법 개정, 입양숙려제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으며, 특히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양사후조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국내입양과 마찬가지로 국외입양의 경우도 사후조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요보호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대안양육형태인 시설보호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이 대부분으로 일반가정위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혈연관계에 따른 위탁이 불가능 한 경우 시설보호

대신 일반가정위탁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및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가출청소년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특히 여자청소년의 가출 신고건이 남자청소년보다 두배 이상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 예방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의 일차적인 보호시설인 쉼터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일시쉼터나 단기쉼터여서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쉼터의 확충과 진로지원과 같은 콘텐츠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무엇보다 가출 시 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시설확충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서비스의 아웃리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영역과 관련해서는,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전문적인 사례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종사자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의무자의 확대와, 미신고시 벌금부과와 같은 제도변화에 따라 신고건수가 급증하였고, 후속조치로써 사례조사 및 판정, 서비스 제공과 예방사업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종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상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소진은 결국 아동학대사태에 적절히 개입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하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복귀에 있어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와, 사업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결과보고의 경우 서비스 현황 및 절차,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 경우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평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및 보고 절차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아동복지시설 평가 결과, 90점이 넘는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시설평가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방향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 빈곤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5개 영역의 34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2013년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86,63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청소년의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무직률의 경우에도 최근 40~5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장애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들 청소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2년에 인구 10만 명 당 20대 사고사망률(31.6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세(16.8명), 10대(11.0명), 1~9세(5.4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에 대한 원인으로 10대와 20대의 경우에는 자살(각각 5.1명, 19.5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4명 정도가 범죄로부터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10명 중 5명 정도가 교통사고로부터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율을 살펴보면, 2003년의 청소년 범죄 피해율은 1,000명 당 5.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9.0명으로 약 3.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평소 지역사회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현재 학교보건교사 배치율은 64.9%로 1개 학교에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학교 보건교사 배치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의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9.7%, 현재 음주율은 16.3%, 평생 약물 경험률은 0.5%로 최근 5년간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 현재 음주율, 평생 약물 경험률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4명 정도가 흡연예방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10명 중 6명 정도가 음주예방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 음주 등 청소년의 약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84.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전체 응답자의 약 20% 가까이가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7%의 응답자는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8분이었고, 수면부족의 주요 이유는 학원·과외, 야간학습 때문이었다. 비만율은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특히 높았다. 조사대상자 중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경우 일찍 등교하는 문제와 학업 때문에 아침결식 및 운동, 수면부족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건강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신체적 건강지표에서 취약하게

나타난 한부모 및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방안마련도 요구된다.

정신적 건강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3명 중 2명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보인 반면, 3명 중 1명은 우울감을 나타냈다. 또 학업문제로 응답자의 67.2%가, 미래(진로)불안으로 과반수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고, 3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우울감과 학업문제·미래에 대한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 문제가 심각했고, 한부모가정 및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은 대부분의 정신건강관련 지표에서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낙인감 해소와 더불어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민거리의 대화상대로 응답자의 43.3%는 친구를, 32.7%는 어머니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상담교사나 청소년상담관련 기관 종사자와 같은 전문인과의 대화 및 상담을 위한 접근성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복지예산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율을 조사한 결과, 절대빈곤율이나 상대빈곤율 모두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부모가구에 비해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서의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요구된다. 아동의 빈곤율을 OECD국가와 비교하면, 비교대상 국가 41개국 중 12번째로 낮은 빈곤율을 보였으나 아동가족복지예산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다양한 현금급여와 현물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아동가족복지예산 지출의 확대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취약계층 아동으로써 수급자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급자 중 특히 10~19세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이 높았고,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증가를 고려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더욱 증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써,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발달계좌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확충과 예산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드림스타트의 경우 부모를 위한 개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아동발달계좌사업의 경우 가입대상의 조건을 좀 더 완화하여 가입대상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며, 적립금 증액을 통해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이 더욱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도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향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진로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 5)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영역의 지표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분류로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3개 지표와 교육에의 권리에 다시 3개의 소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에 2개의 소분류 지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소분류 3개의 지표로 분류되었다. 8개의 소분류 지표들에는 다시 세부지표들이 각각 따라붙어 전체의 세부지표들은 총 20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지표들을 가지고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인권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에의 권리에 있어서는 교육기회 보장 정도와 학교 부적응률, 대안교육 참여율에 관하여 세부지표들이 구성되었다. 한국의 취학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우수한 상황으로 조사되었고, 진학률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고등교육 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은 2009년 이래 점차 줄어들고 있어 2013년에는 70.7%(일반계고 84.9%)로 나타났다.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서 한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비슷하거나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저출산과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원인인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초·중등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단율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에서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로 2013년에 1.8%를 보이고 있지만, 초·중·고 전체 학생 수 중 매년 7만 명이 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여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과 상관이 있는 학생들의 학교포기 결심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전체의 27.7%가 학교 자퇴의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학입학 시험의 스트레스가 많은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은 41.5%가 자퇴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에 총 300개 가까운 다양한 대안학교 종류에 대략 14,935명이 다니고 있어 전체 학생 수의 약 0.23%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에서 학교가 자신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72%정도이고, 약 3명 중 1명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냐고 물었을 때에 역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9.1%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의 42%가 부정적으로 답변하여 대학입학 시험 준비로 정상적인 교육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성교육이 제대로 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가를 지표로 해서 살펴본 결과 2014년 8월 현재 43개의 시범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정도이고 2013년에 40개의 우수학교가 오히려 30개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성교육에 참여한 교원수의 비율은 거의 70% 가까이에 해당하나 그 중 65%는 온라인 연수에 참여했고, 연수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원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는 2005년에 비해 2012년에 2배 가까이 문화시설이 확대되었고, 그 중 경기도와 서울이 각 406개와 29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1992년 이전에는 150여개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75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시설 이용여부에 대해서 58.2%의 청소년이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학생 약 3명 중 2명은 청소년시설이 확대되어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대해서 57.3%가 TV 및 DVD 시청에 응답하였고, 컴퓨터 게임 등 47.7%, 휴식 33.2%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소년의 2013년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에서는 2011년보다 13.3%가 증가한 39.7%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학생은 84.1%이고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수가 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74.6%에 달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 모두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동아리활동은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에 관한 응답에서는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4.1%로 조사되었고, 반면에 하루 평균 학습시간에서는 2~3시간이 20.4%로 가장 많았고 6시간 이상도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가와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를 알아보는 지표에서는 먼저 여가활동 만족도와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에서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는 13~19세 청소년은 40%였고, 불만족한다는 청소년은 16.8%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10% 가깝게 만족도가 높아진 수치이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 시간부족이 43.7%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이 33.4%로, 그 다음으로 많게 조사되어 청소년들이 공부시간에 몰두해 있는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청소년시설 이용 만족도는 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87.7%로 비교적 높게 나왔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3%에 달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정도를 물었을 때에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에 있어 가정에서의 지지는 64.2%로 나타났고, 학교에서의 지지는 72.8%로 나타났다.

## 6)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사각 지대에 위치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사범 운영,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을 주요 지표로 하였고,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의 참가를 주요 지표로 하였으며, 경제적 착취에서는 인권침해적인 청소년근로시간 수준, 근로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를 주요 지표로 하였다. 또한 성적 착취에서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를 지표로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난민신청자 수와 더불어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 현재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는 282명이며, 이 중에서 난민 지위 인정자 77명, 인도적 체류자 58명, 불인정자 67명, 철회자 19명으로 10명 중 3명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철회된 것으로 이들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 중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은 13.8%로 10명 중 1명 이상이 주로 친구들로부터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출신보다 파키스탄, 필리핀, 동남아 등의 저개발 국가의 자녀의 경우에 차별이나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자녀들은 차별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대부분 참거나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의료보호시설, 소년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3,211명,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은 170명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에 수용된 3,211명 중 51.7%가 1개월 이내에 수용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소년원에 단기(6개월 이내) 및 장기적(2년 이내)으로 수용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1개월 미만 수용된 소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호시설에의 수용은 1개월 미만이 주를 이루고 단기간 수용 추세에 있으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최근 생활상의 범죄보다 상대방의 신체 및 정신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흉포한 청소년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조력인 제도, 인권중심의 소년원 교육 체계,

소년교도소 처우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12년도에는 2,908명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8,084명으로 약 3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기간 동안에 국선변호사가 크게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수도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소년교도소의 처우에 보호소년이 불복할 때 청원,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처우불복제도를 두고 있다. 지난 5년간 처우불복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처우불복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2012년도에 청원 1,094건, 고소·고발 681건, 행정심판 253건, 행정소송 49건 등 총 2,077건에 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과 고소·고발은 2011년에 비해 오히려 각각 18건, 35건씩 증가하여 교도소의 처우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범죄청소년의 자유를 박탈하여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 수용·위탁하는 대신에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운영하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이 있다. 2012년도 현재 소년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은 47,621명으로 전체보호관찰 인원 108,495명의 43.9%에 해당하며, 지난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소년범죄자 107,490명의 5.4%인 5,812명으로 2011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청소년은 전체 기소유예자 348,146명의 1.4%인 4,976명으로 2009년의 0.8%(3,807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월평균근로시간의 경우에 전체근로자와 같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전체근로자와는 상반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2010년에 8.26시간에서 2012년에 8.48시간으로 증가하였는데,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서 전체근로자들과 거의 비슷한 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임금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근로자와 청소년근로자와의 임금차이도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은 7,006원으로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49.8%에 불과하며,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에 정규직의 79.1%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점 실적과 법 위반 실태를 살펴보면, 점점 사업장의 수가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 위반이 오히려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추세여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방법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 고용사업장들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2013년 현재 10,651명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31,323명)의 34.0%이며, 2010년 18,384명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 성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최근 그 피해 경험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2013년에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된 이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서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강간범죄나 강제 추행의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징역형은 강제추행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강간의 경우에는 약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국가보고서 권고 이행사항 분석 등을 통하여 제안된 정책과제 중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인권영역별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과제를 3~4개씩, 총 20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각 과제별로 정책 제안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절차, 관련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등을 제시하여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학자 및 인권단체 전문가의 자문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표 V-2-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I.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에 관한 법 제·개정	사회적 합의 도출	법 제도화	법·제도 시행	법·제도 시행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과제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 및 조직 강화	기반 조성	법 제·개정	법·제도 시행	확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제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인권조례 표준안개발	인권친화 도시모니터링	모델보급	확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II.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자치권활동 및 종교의 자유 보장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보급	우수사례 발굴·보급	교육부 시·도교육청 여성가족부
과제2. 학교 밖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현황조사	법제도 개선	확대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제3.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홍보 강화	참여기구 홍보방안 연구	홍보자료 제작·보급	효과성 연구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III.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과제1.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 인력 확충	역할 및 기능점검	기관 확대 및 처우개선	학대예방 사업실시	확대	보건복지부
과제2.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및 사후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입양활성화	홍보사업 다각화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 강화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	보건복지부
과제3. 요보호아동의 가정환경 양육을 위한 일반가정위탁제도 확대	홍보강화·지원현실화	위탁부모 모집확대 및 훈련강화	위탁가정 모니터링 강화	확대	보건복지부
과제4. 가출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시설환경 서비스개선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계속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Ⅳ.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발달 지원 확대	심리정서적 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원	경제적 지원 확대	확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제2. 청소년자살 예방 국가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체계 구축	기반조성	조기진단 치료 강화	지원체계 구축·운영	확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제3. 장애청소년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학교인턴제 운영 및 학교배치 의무화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개발	시범운영	학교배치 의무화	확대	교육부 교육청 고용노동부

#### Ⅴ.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중학생 직업준비 학교체제 도입	타당성검토	직업학교 연수	법제화	시범운영	교육부
과제2.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유 권리 회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연구실시	제도 시행	제도 시행	제도 시행	교육부
과제3.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수 권리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바우처제도 연계시설 지정	바우처제도 실시	바우처제도 실시	바우처제도 실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Ⅵ. 특별보호조치

과제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법·제도 검토	법·제도 개선	법·제도 시행	확산	안전행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제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부당처우 대응 프로그램 개발	기반 조성	시범운영	제도화	확산	고용노동부
과제3. 성매수·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시범운영	프로그램 시행	프로그램 확산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과제4. 소년사법 아동·청소년의 인권친화적 절차 도입 및 소년전문법원 설립	사례 및 타당성조사	실행방안 마련	인권교육 제도 시행	인권교육 제도 시행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인권일반의 주요 지표 중의 하나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의 발전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에 관한 법조항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제5조의 2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청소년 참여 및 권리 활동에 관한 내용은 법률적 개념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엔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교육훈련선언(2011.12)’을 선포하였으며 유엔 제1, 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05년, 2010년)’에서 초·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공무원 및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유엔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14년 10월 10일 인권교육지원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법은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합의이자,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하는 기본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 조항(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 2) 주요 내용

### ①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기구·조직, 홍보에 관한 법 신설

청소년기본법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권리조항을 추가하고 학생인권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포함 등 권리조항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자치권 확대에 관한 내용만 법조항으로 존재한다. 제3조(정의)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에 있어서도 권리 및 참여 관련 내용들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75.8%,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중 82.9%가 '아니다'로 응답하였으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홍보와 관련해서도 모바일, 앱 개발 등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하며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권리 및 참여 증진에 관한 법 신설

현행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을 살펴보면,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조항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으나, 차별, 안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이념에 관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 보다 적극적 차원의 아동권리 및 참여활동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아동·청소년 인권기구 및 조직, 옴부즈맨, 전문적인 권리 모니터링 주체에 관한 법 추가

아동청소년인권팀장 업무분장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한시적 조직을 상시적으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직제령 개정이 필요하다. 즉 대통령령 제25575호(2014.8.2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아동청소년

인권팀에 관한 사항은 2017년 7월 31까지 유효한 실정이다. 이러한 규정을 2017년 8월 이후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 내용이 언제든 구제가 가능하도록 옴부즈맨 제도에 관한 내용, 전문적인 권리 모니터링 주체에 관한 조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권리 침해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구제역할을 담당하도록 그 역량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 조사 대상에 각급 학원,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 : 사회적 합의 도출

현 실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면 기존 성인 인권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인권의 올바른 인식과 아동·청소년 권리 및 참여확산을 위한 관계자들의 이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 ② 제 2단계(2016~2017년) : 법·제도화 실시

국민적 합의 또는 법률,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주도로 법안을 제·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 ③ 제 3단계(2018년~) : 법·제도 시행

아동·청소년 권리 및 참여확산을 위한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대대적인 인식을 확산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년)	제2단계 (2016~2017년)	제3단계 (2018년~)
주요내용	사회적 합의 도출	법·제도화 실시	법·제도 시행

#### 4) 관련법 개정 사항

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교육지원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3단계 (2018년~)	법·제도 시행	추후 예산 반영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체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미흡,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불안정성, 청소년권리전담기구의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정부부처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청소년권리 모니터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청소년권리전담기구도 역할 및 조직이 강화되어 '청소년인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2) 주요 내용

### ①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설화 및 정상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관련 정책과 사업 사업을 총괄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일시 정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까지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이 수립되어 범부처간 협의·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② 여성가족부 정부부처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 변경<sup>203)</sup>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3) 여성신문(2014.7.9.), 김희정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 적극 추진” 여성신문 웹 사이트  
<http://www.womennews.co.kr/news/73541>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특히, 최근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안전의 문제가 대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의 명칭 변경을 통해 청소년 인권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권리참여과 신설

현재 청소년권리참여와 관련된 담당부서는 여성가족부내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이 외에도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권익증진국의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등이 있다.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제5차청소년기본계획에서도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는데 비해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과’형태의 담당부서는 부재한 실정이다. 향후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라도 ‘청소년권리참여과’가 반드시 신설되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④ 청소년권리전담기구의 역할 기능 및 조직 강화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가 실시된 이래로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부설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 및 복지를 지원하는 상담복지센터가 17개 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동·청소년 인권의 문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는 현재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권리전담기구의 역할 및 조직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하여 전국 시도센터에 ‘청소년인권센터’의 명칭으로 설치·운영되어 아동·청소년 인권 기반을 확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2016년) :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청소년기관·시설·단체를 비롯한 범국민적 여론 형성을 통한 정부부처 청소년정책 명칭 변경

업무 부서 및 지자체 관련 기관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화 및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도록 한다.

#### ② 제 2단계(2017~2018년) : 관련 법 제·개정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안을 제·개정하도록 한다.

#### ③ 제 3단계(2019년~) : 법·제도 시행 및 청소년권리전담기구 전국 확산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시행하고 청소년권리전담기구의 명칭을 ‘청소년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설치, 확대 운영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2016년)	제2단계 (2017~2018년)	제3단계 (2019년~)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법 제·개정	법·제도 시행 및 청소년권리전담기구 전국 확산

### 4) 관련법 개정 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도록 하며,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 사무기구의 설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청소년가족부로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청소년권리참여과 신설 및 청소년권리전담기구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3단계 (2019년~ )	법·제도 시행 및 청소년권리전담기구 전국 확산	추후 예산 반영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을 발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종합계획은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주도하고 참여 실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12개 추진과제, 31개 세부실행과제로 구성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정(市政)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권고하는 ‘어린이·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 중 1명이 이를 담당하며,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까지 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sup>204)</sup>.

성북구 역시 ‘아동친화도시’로 어린이의회 ‘아동권리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sup>205)</sup>. 2013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UNICEF)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정책 사업과 의회활동 등 구정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워크숍에서 4개 위원회(교육·문화·인권·복지)가 제안한 내용과 어린이들의 의견은 ‘2015년 학생참여예산사업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열린토론회’에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전주시 역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sup>206)</sup>. 1단계로 아동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발족함과 동시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시행을 위한 중기(3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조례 제정 등도 나서게 된다. 2단계에서는 시립 돌봄센터와 시립도서관 확충,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유아숲체험장, 어린이체험농장 설치 등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 및 구축에 나선다. 또한 어린이 친구 페스티벌과 어린이 참여 동요제, 청소년 영화제, 청소년 동아리 축제, 청소년

204) 무비조이(2013.9.1).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 발표 웹 사이트

[http://moviejoy.com/public/e\\_view.asp?db=pubic&num=5491](http://moviejoy.com/public/e_view.asp?db=pubic&num=5491)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205) 뉴스1(2014.8.14.). ‘아동친화도시’ 성북구, 어린이의회 ‘아동권리워크숍’ 개최 웹 사이트

<http://news1.kr/articles/?1815443>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206) 뉴시스(2014.9.1.). 전주시 민선6기 4대 핵심과제 91개 사업 내용.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31\\_0013141484&clD=10808&plD=108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31_0013141484&clD=10808&plD=10800)

합주단, 어린이 축구교실 등 아동친화사업 발굴 및 시행, 활성화에 들어간 뒤, 최종 3단계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시 역시 2016년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sup>20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서울, 광주, 전라북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인권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 2) 주요 내용

### ①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표준안 및 학생 인권 조례 제공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중앙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인권조례 표준안’ 및 ‘학생인권조례 표준안’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널리 알리도록 한다.

### ②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델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적 효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 :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표준안 및 학생인권조례 표준안 제공

각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표준안 및 학생인권조례 표준안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전문가 연계·협의, 절차과정상의 지원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207) 전북일보(2014.9.22.), 군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http://www.i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24853>

② 제 2단계(2016~2017년) :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기초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8년~) :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델 보급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년)	제2단계 (2016~2017년)	제3단계 (2018년~)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및 학생 인권 조례 표준안 제공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델 보급

#### 4) 관련법 개정 사항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표준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개정한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에는 표준안 개발비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에서는 조사연구비로 50백만 원이 소요되며, 3단계에는 인권친화도시 모델 보급비로 80백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제1단계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및 학생 인권 조례 표준안 제공	• 표준안 개발 및 보급, 확산 10,000,000 × 10지역	100
제2단계 (2016~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니터링	• 조사연구 50,000,000원	50
제3단계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 모델 보급	• 우수사례 포상 30,000,000원 • 사례집 발간 및 보급 50,000,000원	80
		총계	230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인권실태조사결과에서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학급회의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5.8%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38.5%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응답(학교가 종교재단 소속인지에 대한 질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9%)으로만 분석한 결과,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40.6%(그런 편이다 27.4%, 매우 ‘그렇다’ 13.2%), ‘그렇지 않다’는 59.4%(그렇지 않은 편이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39.6%)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도 학교의 졸업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내용

### ①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회 운영에서 자율권 보장, 학생회 독립성, 임원후보의 자격 제한, 학생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급회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정상화 되도록 한다. 또한 교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허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 지원 정책 제도화

학생자치활동 지원 정책 제도화를 위해 매년 학생자치활동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자치회를 제한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모니터링하여 개정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매년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 공모 및 수상,

우수사례집 보급 활동을 전개하며 단위학교 학생조직 뿐만 아니라, 시·군 지역학생회조직, 시·도 광역수준 학생회조직, 전국단위 학생회조직 구성 운영 뿐 아니라 비학생 청소년도 지역단위에서 모임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③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종교교육 대체과목의 필수화와 종교의식 등에 대한 참석 강요 및 입학 후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하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성적에 반영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해당 법령에 이를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및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가칭)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지원을 통해 학급회의, 학생회, 교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등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종교학교의 경우,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발굴, 보급하도록 한다.

### ② 제 2단계(2017~지속)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운영 확대

학생 자치활동 및 종교교육의 대체과목의 필수화, 종교의식 등에 대한 참석 강요, 그리고 입학 후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성공적으로 학생 자치활동을 운영한 학교의 경우, 그 성공요인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2016년)	제2단계 (2017년~지속)
주요내용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및 종교적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운영 확대

#### 4) 관련법 개정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고 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가 국공립학교에서는 차단되어 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칙결정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의 학생회가 학칙 등의 재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회의 법제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학생자치활동 지원 의무 규정을 구체화 하도록 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자치권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체제의 구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5조 2의 자치권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하도록 한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에서는 연구학교 운영 지원비로 1,5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에서는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비용으로 1,1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제1단계 (2015~2016년)	연구학교 운영	• 연구학교 운영 • 종교학교 지원	10,000,000원 × 100개교 5,000,000원 × 100개교	1,500
제2단계 (2017년~지속)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연구조사비 • 연구학교 확대 지원	100,000,000원 × 1종 10,000,000원 × 100개교	1,100
		총계		2,600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실태조사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장소로는 전체의 59.7%가 학교 정규교과시간으로 응답했으며,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35.6%,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17.3%, 기타 4.6%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장소는 가정이 67.5%로 가장 높아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학원 수업시간 21.2%, 방송 프로그램 6.9%, 인터넷 사이트 4.3%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하여 사회에서의 인권교육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별 경험 25.7%,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별 경험 23.7%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30.4%,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2.0% 등으로 나타나 부모 및 학교교사의 체벌 및 욕설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각 현장별, 직무별 인권교육 내용을 심화하여 인권에 기반한 실천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재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홍보를 다각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주요 내용

#### ①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나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관계자 대상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공공성을 대표로 담보하는 국회나 정부관계자 대상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법안 및 행정에 있어 아동·청소년 친인권적 문화를 형성하도록 한다.

#### ②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연차별, 직급별 인권교육 필수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포함한 연간 기본 인권교육을 연차적, 직급에 따라 필요한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연간 10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신입직원일 경우에는 60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년차에 따라 적절한 교육시간이 편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필수화하여 실무현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해준다.

### ③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학업을 중단하거나 교정시설, 자립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밖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 ④ 학대 내용을 포함한 부모 및 교사, 일반인 대상의 대국민 홍보 강화

인권교육에 아동 학대 내용을 포함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권에 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및 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체벌 등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더불어서 비폭력적 훈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각각의 직무에 맞는 인권교육 및 홍보자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 관계자의 각각의 직무에 맞는 다양한 인권교육 및 홍보자료와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 ② 제 2단계(2017~2018년) : 학교밖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인권실천 현장의 교육적 효과성을 평가하고 각 해당 담당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제 3단계(2019년~)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홍보 다각화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포상하고 그 효과성을 전국 시·도에 널리 보급하여 확산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 앱(App), 모바일 버전 개발 등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인권교육의 접근용이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년~2016년)	제2단계 (2017~2018년)	제3단계 (2019년~)
주요내용	각각의 직무에 맞는 인권교육 및 홍보자료, 체험 프로그램 개발	학교밖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홍보 다각화

#### 4) 관련법 개정 사항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권리 및 참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법조항과 인권교육지원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신설하도록 한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에서는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비로 176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10백만 원이 소요되며, 3단계에서는 사례집 및 앱 보급비로 230백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제1단계 (2015~2016년)	직무중심의 인권교육 및 홍보자료, 체험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 및 매뉴얼 개발비 30,000,000원 × 4종</li> <li>인쇄보급비 10,000원 × 1,200개교 × 3종</li> <li>체험프로그램 개발비 50,000,000원 × 4종</li> </ul>	176
제2단계 (2017~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5,000,000원 × 100개교</li> <li>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000,000원 × 100개교</li> <li>인권담당자 연수비 100,000원 × 2,000명</li> </ul>	210
제3단계 (2019년~)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홍보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사례 포상 30,000,000원</li> <li>사례집 발간 및 보급 50,000,000원</li> <li>앱 개발 운영, 보급 150,000,000원</li> </ul>	230
		총계	616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을 2012년, 2013년, 2014년의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혀 모름’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통틀어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으며 참여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012년 2%, 2013년과 2014년은 1.8%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혀 모르거나 참여한 경험이 없는 비율은 2012년 98%, 2013년과 2014년이 98.2%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12년 2.3%, 2013년 2.4%, 2014년 일반/특목/자율고 2.3%와 특성화고 1.1%로 2012년까지는 증가추세였지만 2014년은 약간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성화고의 경우 2014년 1.1%로 중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4년 조사에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 여부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의 비율이 전체 중 55%로 과반수 이상이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34.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는 8.8%로 전체의 98.2%가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봤어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에 장애가 되는 이유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을 내기 어렵다’의 경우 32%,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이 15.2%,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는 경우’ 13.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2) 주요 내용

## ①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강화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앱(App)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청소년이 의견을 진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랩시몹, 홍보 동영상 등을 개발하거나 경진대회를 열어 청소년

권리 및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아동·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사이트 및 메신저, 모바일 등 온라인상에서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다.

## ②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포스터 및 스티커 홍보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와 관련된 포스터 및 홍보 스티커 제작 또는 공모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이를 홍보하고 보급하도록 한다.

## ③ 전국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시설에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포스터, 리플렛, 스티커 홍보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와 관련된 간단 포스터 및 홍보 스티커, 리플렛 제작 또는 공모를 통해 전국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시설에 이를 홍보하고 보급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방, 학원 등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홍보하도록 하며, 각 지역의 철도, 버스 등 공공 교통시설을 적극 활용한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 :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방안 조사 및 연구 실시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는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방안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② 제 2단계(2016~지속) :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다양한 아동·청소년 실천현장에서의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한다.

### ③ 제 3단계(2017년~2018년) :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홍보 사업의 효과성 연구

다양한 아동·청소년 실천현장에서의 교육적 효과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1단계 (2015년)	제2단계 (2016~지속)	제3단계 (2017년~2018년)
주요내용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방안 조사 및 연구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홍보 사업의 효과성 연구

#### 4) 관련법 개정 사항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권리 및 참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지원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신설하도록 한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에서는 연구조사비로 6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에서는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비로 250백만 원이 소요되며, 3단계에서는 효과성 연구비로 60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제1단계 (2015년)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방안 조사 및 연구	• 연구·조사비 30,000,000원 × 2종	60
제2단계 (2016~지속)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관련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제작비 100,000,000원 × 2종 • 보급비 50,000,000원	250
제3단계 (2017년~2018년)	청소년권리 및 참여기구 홍보 사업의 효과성 연구	• 연구·조사비 30,000,000원 × 2종	60
		총계	370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그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37개소에서 2013년 51개소로 지난 10여 년 동안 14개소만 증가하였다. 현재 이 51개소의 기관이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정, 개입 및 서비스 제공, 더 나아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요구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더욱 필요하며, 특히 만성적인 학대, 중복학대, 재학대 등의 발생이 높아 사례종결이 쉽지 않고 지속적인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전문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도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77). 또한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재 인권지표 영역 중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중에서 ‘학대받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미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또 신고의무자의 확대와 민신고시 과태료 등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를 위한 제도화 이후 신고건수가 급증하면서 상담원들의 업무폭증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sup>208)</sup> 또한 폭력에 대한 신변안전, 당직과 24시간 학대신고 대기 등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바<sup>209)</sup>, 이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문직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8) 관련 뉴스 기사 링크: 특별법 시행 한달...아동학대 신고 전년비 52%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6440>).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 한 달...인력 태부족

([http://news.newsway.co.kr/view.php?p=1&ud=2014110715304822724&md=20141107153659\\_A0](http://news.newsway.co.kr/view.php?p=1&ud=2014110715304822724&md=20141107153659_A0)).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한 달...보호기관 인프라 확충 과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029010018268> 등

209) 관련 뉴스 기사 링크: 폭언·폭행에도 참기만... 인권 없는 사회복지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72412>).

정부, 아동법 부러졌더니...전문 인력·예산엔 ‘인색’(<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688>) 등

## 2) 주요 내용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기능점검 및 종사자 직무분석, 긴급 상담원충원 및 기관 확대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건수와 서비스 내용들, 그리고 각 지역별 아동수와 발생건수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특히 종사자의 직무분석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및 친권과 같은 법적문제의 효과적인 해결과 민간인 신분에서 아동학대 사례 판정 조사 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상담원의 신분전환 또는 공무원 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담원 충원을 통해 업무부담 감소 및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순차적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각 지역별 적정 개소수가 파악되었다면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순차적 설치·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담원들의 직무분석에 따른 지역별, 그리고 시설별 적정 인원수 산정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상담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잦은 이직, 전직을 예방하도록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 ③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 사업 실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사례 판정 및 서비스 개입만으로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나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가정의 기능 강화사업 등에 집중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전문기관의 확대 및 종사자 충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예,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예방사업과 관련한 협업을 고려할 수 있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기능점검 및 종사자 직무분석, 종사자 긴급 충원 및 기관 설치 확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적정 수, 종사자의 직무분석과 더불어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관(예,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의 업무분담 가능성(예,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에 대해서도 타진해 본다. 더불어 신고접수 폭주로 인한 상담원을 긴급히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미설치 지역을 위주로 긴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 ② 제 2단계(2016년~2017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순차적인 본격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현재 시군구에 설치된 231개의 드림스타트가 전국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전국의 아동학대피해를 조사하고 사례관정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적극적인 예방사업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개소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 매년 5~10%정도씩의 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에 종사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신변안전 보장, 교대근무 등과 관련한 처우개선과 같은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 사업 실시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제한적이었던 현재의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회복 및 강화서비스를 확대시킨다. 전국의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학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또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하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담서비스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기능점검 및 종사자들의 직무분석, 종사자 긴급 충원 및 기관설치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차적인 본격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 사업 본격 실시

#### 4) 관련 법 개정 사항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령(제 4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과 제 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의 해당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종사자의 직무분석, 그리고 긴급 종사자 충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에 3,100백만 원이 소요된다. 2단계(2015~2016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순차적 확대·설치를 위해 매년 3,000백만 원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종사자의 역할/직무분석, 긴급 종사자 충원 및 기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기능점검, 종사자들의 직무분석: 100,000,000</li> <li>종사자 충원: 30,000,000×50명</li> <li>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300,000,000×5개소</li> </ul>	100 1,500 1,500
2단계 (2016~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차적 확대와 종사자 충원 및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300,000,000×10개소</li> <li>종사자 충원 및 처우개선: 200,000,000</li> </ul>	3,000 2,000
3단계 (2018년~계속)	아동학대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500,000,000</li> <li>가정기능 강화 프로그램 500,000,000</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300,000,000×10개소</li> </ul>	500 500 3,000
		총계	12,100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입양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와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 입양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여전히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절차개선과 입양숙려제 등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사후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입양심사 및 과정 뿐 아니라 사후관리서비스의 중요성을 볼 때(예, 울산 입양아 사망사건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가 매우 시급하다. 특히 사후관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써 해외 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도 매우 중요하자. 해외입양에 대한 문제 역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sup>210)</sup> 해외입양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주요 내용

### ①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 및 기업체 직원 등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대상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 함께,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의 입양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입양의 중요성과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송 등의 언론매체나 인터넷 및 SNS와 같은 매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10) MBCNEWS(2014.02.19.), 美 한국인 입양아 양아버지 학대로 사망...NSA 한국책임자, 웹 사이트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19147\\_13490.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19147_13490.html)에서 2014년 11월 13일 인출.

## ② 국내·외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강화

국내 입양 사후관리서비스를 위해 중앙입양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사업기관을 위탁 공모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다. 효과적인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및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기관의 역량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입양특례법 제25조에서의 1년으로 한정된 단기적인 사후관리가 아닌, 최소 3년이상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외입양에 대해서도 국내 입양 사후서비스 기준에 준하도록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 및 기록 보관 등에 대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내입양의 사후관리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기간과 내용들을 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3) 추진 절차

### ①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입양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양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시설에서의 양육이 아닌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입양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방식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인터넷 및 SNS 등을 활용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② 국내·외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강화

- 국내입양 사후관리 : 국내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시범 실시 및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서비스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등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사후관리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관찰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지속되도록 한다.
- 해외입양 사후관리 : 국외입양서비스의 경우에도 사후관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외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시도한다. 더불어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사후관리 기간과 내용들을 관련 법에 포함시킨다.

추진단계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2015~ )	국내외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강화(2015~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콘텐츠 제작 및 확산</li> <li>•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캠페인</li> </ul>	국내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강화	국외 입양 시 파트너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후관리서비스 기반 마련

#### 4) 관련 법 개정 사항

현 입양특례법 제 35조에서는 국내입양의 사후서비스를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년으로 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법에는 국내입양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고 있고, 국외입양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향후 국외입양의 사후관리서비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의 경우는 1차년도에는 150백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후관리서비스의 경우 국내·외로 나누어 1단계(2015~2016년)에는 150백만 원이, 그리고 해외입양 사후관리서비스를 시도하게 되는 2단계(2016~2017년)에는 5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 방송콘텐츠 제작 100,000,000	100
	• 인터넷 및 SNS를 통한 캠페인 50,000,000	50
국내외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체계 강화	• 국내 입양 사후관리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 50,000,000	50
	• 사후관리서비스 모델 구축 및 홍보 100,000,000	100
	• 해외 입양 파트너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서비스 실시 50,000,000	50
	총계	350

## 1) 제언배경 및 필요성

아동의 성장환경으로 시설보다 가정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적으로 가정위탁제도 실시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가정위탁의 대리양육가정(조부모 양육)이나 친인척 위탁가정이 대부분으로 결국은 요보호 아동의 원가족 및 친족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위탁보호보다 혈연관계에 있는 조부모나 친족에게서 위탁보호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지만, 이러한 여건이 안 될 경우 결국 시설보호형태의 양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이라는 성장·발달 환경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위탁제도가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위탁은 혈연관계가 아닌 위탁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형태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혈연관계가 아니면서 입양의 형태도 아닌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며, 현재의 일반가정위탁의 경우도 해외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반가정위탁사업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시설보호를 줄이고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써의 가정위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자격 있는 위탁부모의 모집과 훈련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현재 위탁보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리 및 친인척 위탁보호에 대한 보조금 및 관련 지원도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잘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모니터링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 2) 주요 내용

### ①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혈연위주의 우리사회에서 조부모 및 친족에 의한 가정위탁이 아닌 비혈연관계의 일반가정위탁

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환경으로써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가정이 필요한 아동을 국가·사회에서 공동 양육할 수 있다는 연대의식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이 요구된다.

## ②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

현재 가정위탁 시 정부의 양육보조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현재 아동 1인당 월 120,000원, 생계비지급 별도). 물론 조부모 및 친족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액도 증액될 필요가 있으나,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며,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③ 일반가정위탁제도 확대를 위한 유자격 위탁부모 모집 확대 및 훈련 강화

가정위탁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 현실화를 기초로 하여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위탁부모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통해 더욱 많은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탁가정에서의 학대나 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훈련과 위탁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④ 위탁가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현재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적으며, 또 위탁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위탁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뿐 아니라(위탁부모역할 교육, 관련 상담지원서비스 등) 적절한 양육환경 제공과 관련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위탁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와 가정위탁제도의 보편화를 전제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구분 없이 아동이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학대 및 방임 여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및 지원 현실화

가정위탁제도, 특히 일반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TV와 같은 방송매체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및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부모 및 친인척 가정위탁과 더불어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위탁가정의 경우 비혈연관계에서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현재의 보조금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월 지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관심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아동위탁을 주저하는 잠재적인 일반위탁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제 2단계(2016년~2017년) : 가정위탁확대를 위한 유자격 위탁부모 모집 확대 및 훈련 강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 현실화를 기반으로 일반위탁가정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위탁부모를 발굴하고 모집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양육과 건강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일반가정위탁사업의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③ 제 3단계(2017년~2018년) : 위탁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위탁가정 구분 없이 위탁가정 선정을 포함한 아동위탁보호과정에서 실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가정방문조사와 강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7~2018년)
주요내용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 현실화	가정위탁확대를 위한 유자격 위탁부모 모집 확대 및 훈련 강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다각화 및 모니터링 강화



#### 4) 관련 법 개정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수준이 아닌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보조금 현실화와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59조의 비용보조와 관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에 대한 부분과 지원 금액 현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서는 홍보비용으로 15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2017년)에서는 지원금액 현실화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월 300,000만 원 증액을 통해 3,600백만 원이 소요된다. 3단계(2017년)에서는 양육보조금을 좀 더 인상하고 일반위탁가정의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을 위해 6,16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월 보조금의 예산은 정부에서 국고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 등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및 위탁보호 지원 현실화	• 방송콘텐츠 제작	100,000,000
		• 인터넷 및 SNS 통한 캠페인	50,000,000
		•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보조금 인상	
		1,000명×월300,000×12개월	3,600
2단계 (2016~2017년)	가정위탁확대를 위한 유자격 위탁부모 모집 확대 및 훈련 강화	• 위탁부모 모집광고 및 홍보사업	10,000,000
		• 위탁부모 교육훈련비	100,000,000
3단계 (2018년~계속)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다각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위탁가정대상의 교육훈련 및 상담·치료서비스	500,000,000
		•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50,000,000
		• 모니터링 사업	300,000,000
		총계	5,710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2013년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다 일시쉼터 21개, 단기쉼터 50개인데 비해, 중장기쉼터는 32개소 수준으로(여성가족부, 2013), 대부분의 쉼터의 거주기간이 짧아 가정폭력 및 학대 등으로 빠른 시간 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가출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생존과 발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쉼터의 대부분이 일시 및 단기쉼터여서 전국 쉼터를 떠돌아다니는 가출청소년(예, 쉼돌이, 쉼순이), 가출청소년가족(예, 가출팸)이 증가하고 있는데(김희진, 2014),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경우 결국 홈리스청소년이 될 수 있다.

대부분 10명 내외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규모의 쉼터 특성상 개소 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성별 균형(현재는 남자청소년쉼터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도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가출경험 청소년들이 가출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쉼터 확대 뿐 아니라 홍보를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설 수 확대 뿐 아니라 청소년 친화적 쉼터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며, 쉼터의 서비스 역시 좀 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예, 여성청소년의 경우 성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음). 이를 위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인권보호와 이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 교육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출청소년의 권리보호와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인 가출청소년보호 및 가족에 개입함으로써 가정복귀를 도울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가정복귀가 어려울 경우 장기적인 보호와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출청소년을 지원하여야 한다.

## 2) 주요 내용

### ① 청소년쉼터의 인프라 확충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일시 및 단기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쉼터 개소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일은 쉼터의 중요 역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중장기쉼터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

## ②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

쉼터의 환경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쉼터에서의 생활보다는 가출팸이나 노숙을 더 선호하지 않도록 쉼터에서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개선이 필요하다. 단체생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공간과, 더불어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제공이 필요한데, 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범죄 피해나 임신과 같은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련기관(CYS-net, 경찰서, 병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청소년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청소년쉼터 종사자대상 인권교육 강화

많은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이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권에 기반하여 쉼터에서의 청소년들의 생존과 발달, 참여권을 보장하는 실천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2~3시간에 그치는 단편적인 인권교육이 아닌 숙박형태의 집중적인 워크숍이나 분기별 인권교육 등을 통해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청소년쉼터의 인프라 확충

전국의 청소년 수와 가출청소년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및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를 확대한다. 현재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중장기쉼터에 초점을 둔다.

## ② 제 2단계(2016년~2017년) :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

기존 청소년쉼터가 청소년 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무엇보다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안을 더욱 고려하며, 청소년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실시한다.

##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종사자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 그리고 쉼터 생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가정에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청소년쉼터의 인프라 확충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	종사자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 4) 관련 법 개정 사항

미국의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과 같은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서는 일시 및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3,000백만 원, 2단계(2016~2017년)에는 기존 쉼터의 시설환경 개선과 청소년욕구에 맞는 서비스 기획 및 제공을 위해 1,500백만 원, 3단계(2018년)에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2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청소년쉼터의 인프라 확충	• 일시·단기쉼터 설립·운영비 300,000,000×5개소	1,500
		• 중장기쉼터 설립·운영비 300,000,000×5개소	1,500
2단계 (2016~2017년)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	• 시설 개·보수 10,000,000 × 100개소	1,000
		• 청소년육구맞춤형 서비스 기획·제공 500,000,000	500
3단계 (2018년~계속)	종사자대상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실시 200,000,000	200
총계			4,700

## 과제 IV-1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발달 지원·확대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정의 세대 및 세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모자가족뿐 아니라 부자가족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은 발달상에 있어서나 주변 환경적인 측면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가정유형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가장 낮고, 우울감은 가장 높았으며, 또 행복도는 가장 낮았고, 자살에 대한 생각은 조손가정과 함께 가장 높았다. 또한 학업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심리·정서적인 면에 있어 취약함을 보였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특성상 야간 방임 비율도 가장 높았으며, 질병 및 결석, 결석 시 부모의 무관심 비율이 양부모 가정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증가와 또 이러한 취약한 측면에 대한 조사결과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조사 결과, 가족형태별 상대적 빈곤율에서 양부모가구는 3.9%이나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서는 46.6%로 과반에 가깝게 나타나,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2) 주요 내용

### ①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 우선 제공

본 연구의 인권실태조사에서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민거리 대화 상대의 경우 부모에 대한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학교상담교사나 청소년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전문가들과의 고민상담비율도 낮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학교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를 포함한 지역사회기관에서 1차적인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으며 좋은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멘토링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② 역량강화위한 학업지원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은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실제로도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학업성적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방임비율과 질병 및 결석, 결석 시 부모의 무관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고려할 때,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지원과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지원할 필요가 있다.

### ③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본 인권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정이면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심리정서적 측면이나 방임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이 더욱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특히 발달 및 교육과 관련하여)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2016년) :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 우선 제공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학교나,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등에서는 이들을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상담서비스에 의뢰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멘토를 선정·매칭하여 이들에게 심리·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진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 2단계(2016년~2017) : 역량 강화 위한 학업지원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학교, 또는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들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이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③ 제 3단계(2018년~계속) :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저소득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존 및 발달을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정수준의 가구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아동·청소년의 부모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 우선 제공	역량강화위한 학업지원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는 전문적인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100백만 원이 소요되며, 2단계(2016~2017년)에는 학업지원서비스를 위해 3,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되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지원한다. 3단계(2017년)부터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한하여 생계비지급에 추가지원을 고려하며, 이들 부모의 취업기회 제공 등 소득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서비스 우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 200,000×20,000명</li> <li>•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100,000,000</li> </ul>	4,000 100
2단계 (2016~2017년)	역량강화위한 학업지원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지원서비스 300,000×10,000명</li> </ul>	3,000
3단계 (2018년~)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추가지원</li> <li>•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li> </ul>	-
		총계	7,100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우리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의 설립 등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10~24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00년 6.4명에서 2010년 9.4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증가속도는 칠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sup>211)</sup>. 그러나 청소년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 증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자살 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의 조사,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활동 등을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청소년자살 예방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청소년자살 예방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청소년자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주요 내용

### ① 청소년 자살예방 국가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청소년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청소년자살의 원인 규명과 프로그램 개발을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자살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11) 연합뉴스(2013.9.10.), 청소년 자살 10년간 57.2% ↑ ...증가율 OECD 2위, 웹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9/0200000000AKR20130909175800017.HTML?input=1179m>에서  
 2014년 10월 29일 인출.

## ② 청소년자살 진단검사 확대 및 고위험자 집중치료 실시

청소년들의 자살위험 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확대·실시한다. 학교 내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항목에 정신보건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학교전문상담교사로 하여금 학기 초에 학교폭력 피해나 자살, 학업진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청소년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자로 판명된 청소년의 경우에 상담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③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자살 예방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살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지원, 사례관리, 실무자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김영지 외, 2013).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2016년) : 청소년자살 예방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

청소년자살의 원인 규명에서부터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청소년자살 조기 진단 및 고위험자 치료 등 청소년자살 예방 정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청소년자살 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부처의 청소년자살 관련 업무부서 및 지자체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 내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항목에 정신보건 항목을 포함시키고 학교전문상담교사의 위기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위험요인 조사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 ② 제 2단계(2017년) :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조기진단 및 치료 강화

청소년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기반해서 청소년 유형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유형별로 현장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자살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 및 고위험자 집중치료를 강화한다.

### ③ 제 3단계(2018년~) : 청소년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운영

중앙 정부부처에 청소년자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내 청소년자살 예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 청소년자살 예방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	•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조기진단 및 치료 강화	• 청소년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운영

## 4) 관련법 개정사항

정신건강 관련법에 자살 관련 예방 및 사후관리 지원 조항을 추가하고, 청소년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자살의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또한 정부부처의 청소년자살 업무조정을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추진기구로 지자체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6년)에는 청소년자살 예방 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로 1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진단검사 및 치료 지원비로 2,000백만 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진단검사 및 치료 지원비, 지원체계 구축 운영비 등으로 3,06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는 전액 국고로 운영하고, 2단계와 3단계는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청소년자살 예방정책을 위한 기반 조성	• 연구비 50,000,000원 × 2건	100
2단계 (2017년)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비 100,000,000원 × 3종	300
	청소년자살 진단 검사 확대 및 고위험자 집중치료	• 운영비 100,000,000원 × 17개 지역	1,700
3단계 (2018년~)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 50,000,000원 × 17개 지역	850
	청소년자살 진단 검사 확대 및 고위험자 집중치료	• 운영비 100,000,000원 × 17개 지역	1,700
	청소년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	• 운영비 30,000,000원 × 17개 지역	510
		총계	5,160

## 과제 IV-3 장애청소년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학교인턴제 운영 및 학교배치 의무화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장애청소년들은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무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르바이트나 취업의 과정에서도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현재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청소년들의 진학률이 43.5%이고, 취업률이 13.5%, 무직률이 42.9%이며, 장애청소년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3). 또한 문화원장이 타이핑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거나<sup>212)</sup> 집안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하던 여고생과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전단 제작업체의 사례<sup>213)</sup> 등도 나타나고 있다.

장애청소년들의 취업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및 교육청과의

212) 한라일보(2014. 5. 7.). 사회 지도층까지... 장애인 성폭행 심각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99388400462465044>

213) 뉴스1(2014.5.19.). 여고생·지적장애 ‘알바’ 성폭행·해고 사장, 구속기소 <http://news1.kr/articles/?1681314201>.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많은 인력이 부족하며, 장애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일거리가 확보되어 있다. 또한 학교는 다른 일터에 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장애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많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학교와 연계된 장애청소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 2) 주요 내용

### ① 장애청소년 학교 인턴제도 운영

장애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학교 인턴제도를 개발해서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에 6개월이나 1년 동안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턴 과정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장애 유형 및 정도별 일자리 형태와 일자리 참여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함께 개발한다.

### ② 장애청소년 학교 배치 의무화

장애청소년들의 장애 정도에 맞춰서 초·중·고의 도서관, 의무실, 행정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1개 학교에 1명 이상의 장애청소년 배치를 의무화 한다. 학교 인턴제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 :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개발

장애청소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로청소년으로 일정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학교 인턴 매뉴얼 개발과 함께 학교 장애청소년 인턴제도를 개발한다.

### ② 제 2단계(2016년) : 시범운영

서울, 경기 등의 초·중·고등학교 각각 5개교, 총 15개교를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인턴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③ 제 3단계(2017년~) : 장애청소년 학교 배치 의무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최소 1인 이상의 장애청소년 배치를 의무화 한다. 단, 교육청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년)	제 2단계 (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개발	• 시범운영	• 장애청소년 학교 배치 의무화

## 4) 관련법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운영 및 의무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년)에는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5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시범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72백만 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확산되는 비용으로 운영비에 132,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고, 3단계는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년)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개발	• 연구비 50,000,000원 × 1종	50
2단계 (2016)	시범운영	• 시범운영비 800,000원 × 6개월 × 15개교	72
3단계 (2017년~ )	장애청소년 학교배치 의무화	• 운영비 1,000,000원 × 12개월 × 11,000개교	132,000
		총계	132,122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에 있어 큰 사회문제이고, 향후 이들을 학교와 사회에 다시 진입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에게는 인권적 측면에서 학습권과 발달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에 줄어들고 있지 않은 초등과 중등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2014년에 전국의 초등학교 2,975명, 중학생 3,662명, 고등학교 3,847명에게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자퇴 충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7%로 나타나 10명 중 3명 가까이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학교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는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학생들이 41.5%로 자퇴 충동이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34.9%, 중학생 25.2%, 초등학교 14.4%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가 많은 학교유형이 상대적으로 자퇴 충동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학생들에게 자퇴 충동의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에 전체 1순위의 응답은 공부하기 싫어서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3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교 자퇴 충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특히, 중학생들은 자퇴 충동의 이유로 45%가 ‘공부하기가 싫어서’라고 응답하여 학교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을 위한 다른 교육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 주요 내용

### ① 중학교에 새로운 학교형태의 직업준비 학교체제 도입

현행 대한민국의 중등교육 과정에는 고등학교에만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와 같은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유형이 존재하고 있어 중학교의 인문 교과과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위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들이 많으므로 중학교에도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와 연계될 수 있는 직업준비 학교 제도를 도입한다.

### ②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 이중체제(dual system)의 중장기적 도입

독일은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인문계, 전문계, 직업계 학교로 학생들을 진학시키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찍부터 수준별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진보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는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의거해 이러한 조기 선별이 학생들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하여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세 종류 학교로의 조기 선별 진학체제는 장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한국의 극심한 경쟁 교육체제에서의 학업중단과 학교부적응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는 독일과 같이 중학교부터 전문계나 직업계 중학교 체제로의 진학제도의 필요성이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직업교육 체제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직장에서의 실무교육을 교육과정에서 병행하는 이중체제(dual system)의 직업교육 체제를 중학교에서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직업교육에서 실시하고 있어 한국도 이러한 체제를 시범기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 :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학계에 직중학교 체제에서의 직업교육 도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 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9월에 연구결과에 따라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학교를 지정하거나



신청 받는다. 연구 용역 내용에는 현행 특성화중학교가 제대로 직업준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등기술학교와 같이 중등기술학교를 신설하고 현재 중학교들 중에서 중등기술학교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중등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정규학교로 전환시켜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직업학교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 ② 제 2단계(2016년 상반기) : 직업학교로의 전환 시범 중학교 교장들의 독일 직업학교 연수

교육부 직업교육 담당 공무원과 직업학교로 전환을 지정받거나 신청한 중학교 교장들의 독일 직업학교 연수를 통해 향후 직업교육의 중학교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 3단계(2016년 하반기) : 직업교육의 중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 실시

교육부 관계자와 직업교육 전환 지정 및 신청 중학교 교장, 법학자, 교육학자 등이 모여서 직업교육의 중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정 작업을 실시하고 연말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 ④ 제 4단계(2017년~2018년) : 직업교육의 중학교 체제 전면 도입 전 직업교육 학급의 시범 운영

본격적인 직업교육의 중학교 체제의 전면 도입 이전에 직업교육 학교로 지정받거나 신청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욕구조사와 학부모 상담을 통해 직업교육 학급을 중학교 2학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9년부터 직업교육 중학교로 전환하고 졸업생들을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정규학교로 전환된 고등기술학교에 진학시킨다.

### 4) 관련 법 개정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개정과 제44조(고등공민학교) 폐기와 대체조항으로 제44조(중등기술학교) 조항을 신설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의(학교의 종류) 2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중학교·중등기술학교”로 개정하고, 제44조(고등공민학교) 조항을 폐기하는 대신 대체조항으로 제44조(중등기술학교) 조항을 제54조(고등기술학교) 조항의 내용에 준하여 신설하며, 기존의 고등기술학교와 신설된 중등기술학교를 정규학교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제·개정한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차년도에는 타당성 연구 및 공청회 개최비로 90백만 원이 소요되고, 2차 년도에는 독일직업학교 연수비로 600백만 원이 소요되며, 3차년도에는 직업교육의 중학교 체제 법제화 비용으로 20백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4차년도에는 직업교육 학급의 시범운영비로 20,0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이 매칭펀드 형태로 각 70%, 30%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한다.

(단위: 백만 원)

항목	산 출 내 역			금액
타당성 연구 및 공청회 개최	(2015년)	연구용역 비용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주 및 조사결과에 따른 공청회 개최	90
소계	전국 초등 6학년과 중등 2학년 학생 대상 실태조사 실시 포함			
독일 직업학교 교장 연수	(2015년 상반기)	독일 연수 비용	직업교육 중학교 지정 및 신청 학교 교장들의 독일 직업교육 연수	600
소계	향후 제도로입 초기에 매년 연수 실시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법제화	(2015년 하반기)	법제화 비용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20
소계	법제화 이후 초기 2년 간 공청회 개최			
직업교육 학급의 시범운영	(2017년~2018년)	시범운영 비용	직업교육 중학교 체제 전환 중학교의 학급단위 시범운영	20,000
소계	2년 간 시범운영			
합 계				20,710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적 심리 및 정서 불안의 원인은 교육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자퇴 충동이 있었던 학생이 27.7%로 10명 중 3명이나 되었는데 자퇴 충동의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에 전체 1순위의 응답이 공부하기 싫어서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35%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교 자퇴 충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들은 자퇴 충동의 이유로 45%가 공부하기가 싫은 것을 이유로 응답하여 학교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과다한 학업시간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평일의 여가활동 시간에 관하여 1시간미만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24.1%로 나타났고, 1시간이상~2시간미만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아 28.0%로 나타났다. 이는 평일에 2시간의 여가시간도 가지지 못하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52.1%에 해당되고 있다는 수치여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발달권과 여가 및 문화 향유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육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의 부족 이유를 말해주는 실태조사 결과로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17.6%, 중학교 14.8%, 특성화고 13.9%에 비하여 1시간미만이 43.1%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역시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가장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입학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국가로서 당연히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고, 유엔으로부터 한국의 아동들이 과다한 학업시간으로 인한 여가 및 문화 향수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을 권고 받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심한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 주요 내용

### ① 단기적으로 대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교육제도 개선

한국에서 교육의 가장 큰 고질적 문제는 대학교가 서열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이는 다시 학벌사회를 조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특정집단의 소수가 사회를 지배하고 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이러한 서열화를 완화하는 교육제도로 먼저 국·공립대학부터 평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의 국·공립 대학들의 교과과정을 통합하고 입학 기준과 모든 지원을 평준화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개혁 법안을 제정한다.

### ②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대학교 평준화 교육제도의 도입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국가의 재정이 열악하여 국민의 수요에 따라 국공립 대학을 설립할 수 없을 때에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대학을 유치한 결과이며, 현재는 한국이 교육의 공공성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에 고등교육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피하여야할 시점이다. 현재 한국은 출산율의 저조로 인해 대학입학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사립대학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대학의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경영이 어려운 대학들을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인수한 후 국·공립대학으로 통폐합해서 국·공립대학교 평준화 네트워크 안에 진입하도록 유도한다.

국공립대학은 대학교평준화의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프랑스가 1968년에 교육개혁을 통해 파리1대학, 파리2대학, 파리3대학 등으로 평준화 이념을 담아 대학의 이름을 개칭한 것과 같이 향후 평준화된 한국의 국·공립대학교의 명칭도 개명하는 시도가 바람직하고, 사립대학들은 완전히 자율적 경영을 허용하되 국·공립대학교의 평준화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평준화체제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서열화된 대학입학을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평생 겪고 있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고통과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볼 때, 그리고 학벌로 인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과 권력의 지배구조를 볼 때에 이러한 대학교평준화 방향으로 교육제도의 개혁은 한국사회 전반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야할 국민적 과제이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2017년) : 대학교평준화를 지향하는 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대학교평준화의 문제해결은 귀납적 문제해결 접근방식보다는 연역적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국가적 도입을 위해 교육부가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 2단계(2018년~2022년) : 대통령특별기구 설치 및 대학교평준화제도 시행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교육제도 혁신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의 핵심인 대학교 서열화 타파를 위하여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교육제도를 혁신하는 대통령특별정부기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및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도입을 대국민 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그 동안 연구·검토되었던 제도의 법제화와 새로운 고등교육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관련 법 개정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한다.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도입은 먼저 대학교평준화 제도 도입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된 후에 대학진학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에 따른 초·중등교육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에는 연구비로 60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에서는 교육혁신정부기구 설치 운영비로 2,5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비로 재원을 마련한다.

(단위: 백만 원)

항목	산 출 내 역			금액
교육제도 혁신 연구	(2015년~2017년)	연구용역 비용	프랑스 및 독일의 대학교평준화 제도의 연구와 관련법 제정을 위한 선행연구 실시	600
소계	매년 용역비 2억으로 연구 및 교육부관계자 연구진과 동반 출장			
교육혁신 정부기구 설치 및 운영	(2018년~2022년)	정부기구 설치 및 운영 비용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학평준화 제도가 안착할 수 있기 위한 대통령특별정부기구 설치 및 운영	2,500
소계	매년 대통령특별정부기구 운영 경비로 50억 소요			
합 계				3,100

## 과제 V-3

##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유 권리 지원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한부모가정 학생의 557명이 응답하였는데, 이들에게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문화예술 공간의 시설 이용률은 양부모가정 낮게 조사되었다. 특히, 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한 한부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학생을 각각 비교해 보았을 때에 학생공공도서관의 경우 26.5%와 20.8%, 청소년시설의 경우 61.2%와 58.1%, 체육시설의 경우 41.6%와 31.2%, 문화예술 공간의 경우 42.5%와 31.3%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 및 문화예술 향수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조사결과이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은 조손가정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닿지 않는 대상이므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교육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주요 내용

### ①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voucher)제도의 도입

바우처제도는 사회보장이나 직업훈련지원 등에 있어서 수요자의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정부가 수요자에게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바우처)을 부여하고, 수요자가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제도의 일환이다. 바우처제도는 공공 서비스 전달에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되 서비스는 가장 효율적인 민간 기관에 의해 공급되도록 유도하여 공공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에게 복지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다.

### ② 한부모가정과 지역사회 의 여가 및 문화예술 시설과의 바우처 연계 지정

한부모가정 세대의 전국적 분포도를 조사한 후 한부모가정 다세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여가 및 문화예술 시설들을 지정한 후 바우처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에 대하여 여가 및 문화예술 시설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 향유의 권리를 지원하는 책임을 준수하는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 : 한부모가정 세대 전국분포 조사와 바우처제도 연계 시설 지정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세대와 해당 지역의 여가 및 문화예술 시설들을 조사한 후 이들을 바우처제도로 서로 연계하도록 제도를 구축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차기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편성한다.

### ② 제 2단계(2016년) :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위한 여가 및 문화예술 시설 이용 바우처제도 실시

한부모가정 세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바우처를 분배하고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여가 및 문화예술 시설들을 바우처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한다.

#### 4) 관련 법 개정 사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6조(시설 우선이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을 따로 개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 조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에서는 조사 및 홍보비로 2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에서는 바우처제도 도입 비용으로 매년 200백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국비로 재원을 마련한다.

(단위: 백만 원)

항목	산 출 내 역			금액
한부모가정 세대와 해당지역 연계 시설 조사 및 제도도입 홍보	(2015년)	조사 및 홍보 비용	한부모가정 세대와 해당지역 연계 시설 조사 및 제도 홍보	20
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전국 조사와 제도 도입 관련 기관 대상 홍보			
한부모가정 청소년 대상 바우처 제도 도입	(2016년~)	바우처제도 도입 비용	한부모가정 세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지속적인 바우처제도 지원	200 (매년)
소계	매년 2억 정도 추산 예산 소요			
합 계				220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으로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8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들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한 부모,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무국적자 등 출신국과 문제가 있는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들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아동의 체류, 교육, 보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 2) 주요 내용

### ①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

이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지역, 장소 등과 관계없이 국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로 처리하여 접수장에 기록하고 특정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관만 할뿐 출생사실 증명이나 신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식문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김철호 외 4인, 2013). 이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종신고편철’ 제도를 보완하여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에 기반해서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를 발급한다. 해당 증명서에는 최소한 출생등록 및 증명사항으로 출생자의 이름, 출생연월일, 출생지, 주소 및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출신국가 등이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출생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문구도 출생신고를 ‘수리’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야 한다.

##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초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요청되는 교육권, 건강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서비스 관련법 등의 개별 법률을 개정한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2016년) : 법·제도 검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출생등록, 교육, 보건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 법률을 조사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 ② 제 2단계(2016~2017년) : 법·제도 개선

개별 법률의 개정 타당성 조사 후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 ③ 제 3단계(2018년~) : 법·제도의 시행 및 지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이행을 위해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 법·제도 검토	• 법·제도 개선	• 법·제도의 시행 및 관련 지원

#### 4) 관련법 개정사항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의 국내출생에 관한 등록과 신고'와 같은 별도 조항과 관련 시행규칙과 서식의 개편이 필요하며, 초·중등교육법 등에서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건의료 보장에 관한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는 관련 법제도 검토비로 10백만 원이 소요되고, 3단계에서는 추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1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2016년)	관련 법·제도 검토	• 조사비 10,000,000원 × 1종	10
3단계 (2018년~)	법·제도의 시행 및 관련지원	• 추후 예산반영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그동안 많은 조사 연구에서 청소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오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 주지위반, 연소자증명서 비치 위반 등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법위반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보장, 초과근무, 임금체불 등의 부당처우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근로시 부당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연소근로자 사업장뿐만 아니라 근로에 참여하는 청소년, 정부의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연소근로자 사업주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근로청소년의 법 지식과 신고의식,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 2) 주요 내용

### 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발 교육 및 사례 배포

청소년들이 근로 과정에서 부당처우를 받게 될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며, 노동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부당 처우 및 대응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근로수첩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 ②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앱(App) 개발·운영

청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방고용사무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앱(App)을 개발하여 연소근로자 사업장 고용주와 청소년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임금, 근로시간 등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법위반 사항을 지방고용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법위반시 처벌 강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등 연소근로자에 대한 부당처우가 해소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이 법 위반을 반복할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한다.

### ④ 청소년노동옴부즈맨 운영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일자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어 있는 청년유니온(youth community union)으로 하여금 청소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 청소년노동 옴부즈맨으로 활용한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 : 기반 조성

청소년근로수첩을 제작하고,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앱(App)을 개발하며, 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노동옴부즈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반 조건을 준비한다.

### ② 제 2단계(2016년) : 시범운영

서울, 경기 등의 지방고용사무소와 함께 개발된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앱(App)을 활용하여 시범 운영하며, 청소년노동옴부즈맨의 경우에도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1~2개 지역에 청소년근로수첩을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효과를 확인한다.

### ③ 제 3단계(2017년~) : 제도화 및 확산

시범운영을 통하여 확인된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앱(App)과 청소년노동옴부즈맨제도를 전국지역으로 확산시킨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시범지역에서의 효과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적으로 청소년근로수첩의 제작 및 보급을 확대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년)	제 2단계 (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기반조성	• 시범운영	• 제도화 및 확산

#### 4) 관련법 개정사항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 상에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 등을 제출 의무화 하고, 동일 법 위반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년)	청소년 근로수첩 제작·보급	• 개발비 30,000,000원 × 1종	30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앱(App) 개발·운영	• 어플(App)개발비 50,000,000원 × 1종 • 시스템 구축비 100,000,000원 × 1건	150
2단계 (2016)	청소년 근로수첩 제작·보급	• 제작·보급비 5,000원 × 10,000부	50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앱(App) 개발·운영	• 관리비 50,000,000원 × 2개 지역	100
	청소년노동옴부즈맨 운영	• 운영비 10,000,000원 × 2개 지역	10
3단계 (2017년~)	청소년 근로수첩 제작·보급	• 제작·보급비 5,000원 × 100,000부	500
	청소년근로자 근로조건 확인 앱(App) 개발·운영	• 관리비 50,000,000원 × 17개 지역	850
	청소년노동옴부즈맨 운영	• 운영비 10,000,000원 × 17개 지역	170
		총계	1,860

1단계(2015년)에는 청소년근로수첩 제작, 앱(App) 및 시스템 개발비로 18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시범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160백만 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확산되는 비용으로 관리비 및 운영비에 1,52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고, 3단계는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한다.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한 번의 성폭력 피해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삶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 후 수사,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 피해 시 2차 피해를 두려워하여 수사기관 등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성폭력 피해 시 이들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고, 수사, 재판단계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 주요 내용

### ① 성폭력 피해 취약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초등학생, 지적장애 청소년 등 성폭력 피해에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이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 개발·운영

성폭력 피해 시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을 개발하여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운영한다. 현재 마이피플이라는 앱을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 상담창구 ‘상다미 쌤’을 운영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앱을 개발하여 상담전문가와 친구를 맺고, 익명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자료의 전송 및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 ③ 성폭력피해 청소년의 2차 피해 방지제도 개발·확산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에 수사,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단계에서 반복된 진술을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재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sup>214)</sup>, 수사의 전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년) : 성폭력 예방 관련 제도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을 검토한다. 또한 취약 대상의 성폭력 프로그램 및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을 개발한다.

### ② 제 2단계(2016년) : 성폭력 예방 관련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3~4개 초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생, 지적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시범·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점검한다.

### ③ 제 3단계(2017년~) : 성폭력 예방 관련 제도 시행 및 프로그램 확산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시행하며, 시범·운영을 통하여 점검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214) 미디어다음(2014.5.26.).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 시범 운영.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526114814173>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년)	제 2단계 (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 관련 제도 검토 및 프로그램 개발	•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제도 시행 및 프로그램 확산

####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11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6년)에는 시범운영비로 120백만 원이 소요되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3단계(2017~)에는 580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년)	성폭력 피해 취약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연구개발비 30,000,000원 × 2종	60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 개발·운영	• 개발비 50,000,000원 × 1종	50
2단계 (2016년)	성폭력 피해 취약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범운영비 10,000,000원 × 6개 지역	60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 개발·운영	• 시범운영비 2,000,000원 × 6개월 × 5명	60
3단계 (2017년~)	성폭력 피해 취약 대상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 운영비 10,000,000원 × 17개시·도 × 2개지역	340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앱(App) 개발·운영	• 운영비 2,000,000원 × 12개월 × 10명	240
		총계	810

##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소년사법에서 아동 인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007년에 개정한 형사소송법, 소년법, 행형법, 소년원법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최병각, 2007). 하지만 대한민국 제 3,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심사한 후 채택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운영은 청소년범죄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그 원인에 대해서 아동 범죄자를 사회에 효과적으로 복귀하기보다는 징계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 등이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즉, 소년사법에 아동 친화적 절차와 공정한 심판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해 청소년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촉구하고 있는 사법 절차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2) 주요 내용

### ① 소년사법에 아동 친화적 절차 도입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소년사법에서의 아동 친화적 절차를 소년사법에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소년사법에서 아동 친화적 절차가 도입되고 있는 해외 우수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국내 소년사법 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법률 보조인제도의 확충

소년사건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법률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선임할 수 있도록 소년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인제도를 활성화 한다. 구속되어 자유가 박탈된 소년이나 무겁게 채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의 소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조인이 될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하는 등 소년사건 전체에 걸쳐 법률적인 도움과 더불어 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갱생에 도움을 주는 보조인 제도를 활성화 한다.

### ③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소년의 비행행위를 일반 성인 범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한다. 소년전문법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추도록 한다. 소년전문법원 설립을 통해서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관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꾀하고, 소년의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년사건을 통일적·유기적으로 관리한다.

### ④ 소년사법기관 종사자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경찰, 검찰, 교정직 공무원, 법원 종사자 등 소년사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여건을 조성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5~2016년) : 사례조사 및 타당성조사

외국에서 소년사법 절차에 아동 친화적 절차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다. 또한 법률보조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견을 통해서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타당성을 조사·분석한다. 소년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인권교육과정 개발 및 매뉴얼을 개발한다.

### ② 제 2단계(2017) :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인권교육 실시

사례조사,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서 분석한 소년사법에의 아동 친화적 절차 도입, 법률보조인제도

확충 및 소년전문법원의 설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 인적·물적 자원 확보,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소년사법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 ③ 제 3단계(2018년~) : 인권교육 및 제도 시행

소년사법의 전 과정에 아동 친화적 절차를 도입하고, 비행소년의 수요에 따른 법률전문가 및 비법률가 보조인을 확충하며, 범죄소년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년전문법원을 설립·운영한다. 또한 소년사법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5~2016년)	제 2단계 (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조사 및 타당성조사</li> <li>• 교육과정 및 매뉴얼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li> <li>• 인권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 시행</li> <li>• 인권교육 실시</li> </ul>

## 4) 관련법 개정사항

외국의 사례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년법 등에 아동 친화적 절차 마련을 위한 법을 제·개정한다. 또한 소년법에 범죄소년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소년전문법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는 교육과정 및 매뉴얼 개발, 조사비 등으로 210백만 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7년)에는 연구비, 교육비로 270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3단계(2017년~)에서는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이 산출될 것이다. 법률보조인 제도의 확충과 소년전문법원의 설립에 따른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나누어 지원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5년~ 2016년)	소년사법에 아동 친화적 절차 도입	• 사례조사비	50,000,000원 × 1건	50
	법률 보조인제도의 확충	• 조사비	50,000,000원 × 1건	50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 조사비	50,000,000원 × 1건	50
	소년사법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 교육과정 및 매뉴얼 개발	30,000,000원 × 2건	60
2단계 (2017년)	소년사법에 아동 친화적 절차 도입	• 연구비	50,000,000원 × 1건	50
	법률 보조인제도의 확충	• 연구비	50,000,000원 × 1건	50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 연구비	50,000,000원 × 1건	50
	소년사법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 교육지원비	30,000,000원 × 4회	120
3단계 (2018년~)	법률 보조인제도의 확충	• 연구결과에 따라 산출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 연구결과에 따라 산출		
	소년사법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 교육지원비	30,000,000원 × 4회	120
		총계		600



---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강동욱 (2014).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방안,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 강민희, 김지혜, 박지혜 (2011).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강원학교인권조례. 웹 사이트 <http://human.gwe.go.kr/>에서 2014년 6월 23일 인출.
- 경기도학생인권의광장. 웹 사이트 <http://shr.goe.go.kr/>에서 2014년 6월 23일 인출.
- 경기일보 (2014.4.9.). '학생자치활동 학교 320개교 확대, 웹 사이트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590>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경인일보 (2014.4.11.). '아동학대 잇따르는데... 지자체, 관련조례 '무관심' 보호위한 '아동복지심의위' 설치 정부지침 불구, 도내 31곳 중 5곳만 제정.... 1년 넘게 미온적 태도, 웹 사이트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45346>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 경찰청 (2013). **2013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고용노동부 (2009). **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0).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2a).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2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2013.4.)**.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3a). **고용노동백서**.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3b).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2014.4.)**.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4.9.1).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요청자료.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 곽예림, 권경미, 김유리, 신지연, 엄영아, 오가영 외 4인 (2010). 중학교 성교육 지침과 실태비교. **이화간호학회지**.
-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인권교육센터. 웹 사이트 <http://human.gen.go.kr/main/main.php>에서 2014년 6월 23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2a). 2012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보도자료.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10501/ko/board/view.do?bbsId=348&boardSeq=51593>에서 2014년 8월 1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2b).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웹 사이트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2.3.28).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2012. 3. 28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68/ko/board/view.do?bbsId=343&boardSeq=28307>에서 2014년 7월 30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2009~2013).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4년 8월 21일 인출.
- 교육부 (2013a).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3.9.)**.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3). 2013년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64/ko/board/view.do?bbsId=317&boardSeq=51379>에서 2014년 9월 3일 인출.
- 교육부 (2014a).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2014.1.)**.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7.22). 탈북학생 주요 통계자료. 교육부 요청자료.
- 교육부 (2014.7.30).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참가 인원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요청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2012.3.13.).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발표자료,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boardSeq=30328>

- &mode=view에서 2014년 7월 30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3.10.22.). 다문화학생교육지원강화.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1029&mode=view>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3.4.). “2014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917>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4.3.17). 2014년 다문화 교육 215억 원 지원.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944>에서 2014년 7월 30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3.11.29),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1534&mode=view>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4. 1. 13). ‘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 원 확정’ 별첨자료(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260>에서 2014년 5월 21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4.02.28), 2013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 발표,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715>에서 2014년 2월 28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4.03.10),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2885>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4.7.25.). 2014년 탈북학생 통계 조사 결과 발표, 웹 사이트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5691>에서 2014년 7월 22일 인출.
- 교육부 (2014.8.4.). 인성교육 실천학교 운영 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요청자료.
- 교육부 (2013b). **2013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3. 6.1 기준)**.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4b). **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4. 3월 기준)**.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4.10.23). 미인가 대안학교 및 학생 수 현황.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요청자료.
- 교육부 (2014.10.23). 인가 대안학교 및 학생 수 현황.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요청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오송: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stat.mw.go.kr/front/statDB/statDBView.jsp?menuId=11&nPage=1&sttsDataSeq=35&subjCd=&mmrldDate=&schSttsNm=%E3%85%8A>에서 2014년 10월 20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구글 검색트렌드 (2014.6.11.). 웹 사이트 <http://www.google.co.kr/trends/>에서 2014년 6월 11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14).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0.02.08.). “미등록 아동 구금은 최후 조치, 최소화해야” 웹 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08). 제58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회기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1.06.27.).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수용 방침 환영. 국가인권위원회, 웹 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서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지식정보 개방과 협력으로 스마트 정부 구현. 서울: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2014.4.10.). ODA정책간담회자료, 웹 사이트 [www.odakorea.go.kr](http://www.odakorea.go.kr)에서 2014년 6월 18일 인출.
- 국무조정실 아동보호정책과 보도자료 (2014.2.28). 아동학대 발생 시‘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한다, 웹 사이트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BwQFjAA&url=http%3A%2F%2Feng.pmo.go.kr%2F\\_custom%2Fpmo%2F\\_common%2Fboard%2Fdownload.jsp%3Fattach\\_no%3D68102&ei=dEBTVIzcDMv58QXLr4KwBQ&usg=AFQjCNHcbmBFbhNh2x1U9RLBxwFufb8jjA&sig2=\\_YF3qHK2VCft4DVyfJbUBg&bvm=v.78677474,d.dGc&cad=rjt](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CBwQFjAA&url=http%3A%2F%2Feng.pmo.go.kr%2F_custom%2Fpmo%2F_common%2Fboard%2Fdownload.jsp%3Fattach_no%3D68102&ei=dEBTVIzcDMv58QXLr4KwBQ&usg=AFQjCNHcbmBFbhNh2x1U9RLBxwFufb8jjA&sig2=_YF3qHK2VCft4DVyfJbUBg&bvm=v.78677474,d.dGc&cad=rjt)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 국민일보(2013.12.27.). '[사설] 정부가 외면할 때 300명 아기 받아준 베이비박스', 웹 사이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84080&cp=nv>에서 2014년 7월 28일 인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10.25.).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웹 사이트 [www.odakorea.go.kr](http://www.odakorea.go.kr)에서 2014년 6월 18일 인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서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제아동인권네트워크(CRIN). 웹 사이트 <http://www.crin.org/en/home/about>에서 2014년 4월 30일 인출.
- 국제아동인권네트워크(CRINb) (2014.4.1. ~ 2014.4.30.). 웹 사이트 <http://www.crin.org/>에서 2014년 4월 30일 인출.
- 국회예산정책처 (2013). **자살예방정책 토론회: 적극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결과보고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 (20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계획 (2012).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제3차 자문회의 자료**, 부록 I. 서울: 대한민국 국회.
- 국회의장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2013).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여성·아동 미래비전**, 서울: 대한민국국회.
- 국회인권포럼, 국회다정다감포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2014).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서울: 국회인권포럼, 국회다정다감포럼, 이주아동권리 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1.26.).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지원, 웹 사이트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sub\\_category=127&hdnFlag=1&hdnDiv=182&&actionType=view&runno=4012234](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sub_category=127&hdnFlag=1&hdnDiv=182&&actionType=view&runno=4012234)에서 2014년 6월 18일 인출.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4.9.). 2013년 한국원조, 1.5억 불 증가한 17.4억 불, 웹 사이트 [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에서 2014년 6월 18일 인출.
- 기획재정부 (2011). **나라살림 예산**. 서울: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12). **나라살림 예산**. 서울: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13). **나라살림 예산**. 서울: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14). **나라살림 예산**. 서울: 기획재정부.
- 김광혁, 배경내 (2013). 학생인권 옹호자.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보고대회 자료집**.
- 김기현 (2013).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대현 (2014).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서울: 보건복지위원회.
-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정책보고서 2012)**. 서울: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 (2014), **2013 아동종합실태 조사(정책보고서 2013-92)**, 서울: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옥 (2011),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3).
- 김상용 (2013). 베이비박스과 익명의 출산-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법학 연구**, (제54권 제4호).
- 김연우 (2011).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 김영지, 김정준, 김지혜, 이민희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연구 III(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유경, 변미희, 임성은 (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10-30-1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 (2013).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및 관련정책에 관한 토론회**.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자료집.
- 김지연, 황여정, 이준일, 방은령, 강현철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철홍 (2013). **교사·아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2013년 아동권리주간 기념포럼 자료집: **아동권리 인식증진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방안모색**, 서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김철효,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2013).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김태경, 이영호 (2010). 「아동 진술조사 지침서」 두감람나무.
- 김희진 (2014).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의식 함양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이해연, 이용교, 황옥경 (2011).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남인순, 박완주, 김성곤, 유기홍, 김재운, 박남춘, 이목희, 정진후, 송호창, 박홍근, 윤후덕 (2014.3.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694.
- 네이버 검색트랜드 (2014.6.11.). 웹 사이트 <http://trend.naver.com>에서 2014년 6월 11일 인출.
- 뉴스 Y (2014.5.14.). 임금체불에 폭력...무법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웹 사이트 <http://www.news-y.co.kr/MYH20140514017200038/>에서 2014년 11월 13일 인출.
- 뉴스1 (2012.8.3.). 현재, 의사 등 업무상 동의낙태죄 합헌. 웹 사이트 <http://news1.kr/articles/787072> 에서 2014년 6월 27일 인출.
- 뉴스1 (2014.4.3.). 우울한 인권 자화상...‘미등록 이주아동’, 웹 사이트 <http://news1.kr/articles/?1616801>에서 2014년 11월 5일 인출.
- 뉴스1 (2014.5.19.). 여고생·지적장애·알바·성폭행·해고사장 구속기소, 웹 사이트 <http://news1.kr/articles/?1681314>에서 2014년 11월 3일 인출.
- 뉴스1 (2014.8.14.). ‘아동친화도시’ 성북구, 어린이의회 ‘아동권리워크숍’ 개최, 웹 사이트 <http://news1.kr/articles/?1815443>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 뉴스1코리아 (2014.6.21.). 유엔난민기구 전세계 탈북난민 1166명. 뉴스1코리아, 웹사이트 <http://news1.kr/articles/?1733955>에서 2014년 7월 18일 인출.
- 뉴스와이어 (2013.8.26.). 통계청, 2012년 출생통계 발표, 웹 사이트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10727&ected=>에서 2014년 7월 26일 인출.
- 뉴스와이어 (2014.5.11.).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웹 사이트 <http://anews.icross.co.kr/anews/popread.php?idx=847148&cateid=>에서 2014년. 7월. 25일 인출.
- 뉴스시스 (2013.5.2.). 인권위, ‘독방 감금·학대’한 ‘막장’ 아동양육시설 원장 고발, 웹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23424>에서 2014년 9월 23일 인출.
- 뉴스시스 (2014.9.1.). 전주시 민선6기 4대 핵심과제 91개 사업내용, 웹 사이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31\\_0013141484&cID=10808&pID=108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31_0013141484&cID=10808&pID=10800)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 大家菜々子. “少年事件における付添人の必要性と役割についての考察”, 明治学院大学 紀要.

- 대검찰청 (2013). **2013년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대한민국 정부 (201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지역: 발행처.
- 대한변호사협회 (2013). **“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3년도 인권보고서 제 28집.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1, 2012, 2013). 출판통계. 대한출판문화협회 웹사이트 <http://www.kpa21.or.kr>에서 2014년 8월 25일 인출.
- 데일리NK (2014.6.21.). 탈북난민 1160여명, 중 내 탈북자 통계조차 없어. 데일리NK 웹사이트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2604&num=103942>에서 2014년 7월 18일 인출.
- 류방관, 김경애, 김성식, 이윤미, 정연순 (2013).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 (CR2013-0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메디컬투데이 (2014.11.7). 특별법 시행 한달...아동학대 신고 전년比 52%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6440>에서 2014년 11월 8일 인출.
- 메디컬투데이 (2013.6.19.). ‘늘어나는 아동성범죄, 예방·사후 관리위한 아동위원은 무용지물?’, 웹 사이트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5636>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 무비조이 (2013.9.1).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 발표, 웹 사이트 [http://moviejoy.com/public/e\\_view.asp?db=pubic&num=5491](http://moviejoy.com/public/e_view.asp?db=pubic&num=5491)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 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문화일보 (2014.7.7.).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서울가정법원에 신설’, 웹 사이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701071027031002>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11). **국민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3a). **국민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3b).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미디어다음 (2014.5.26.). 성폭력피해자진술조사화상협력시스템시범운영, 웹 사이트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526114814173>에서 2014년 10월 24일 인출.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박정환, 김도형, 김소윤, 김윤년, 김종연, 박순우, 서경, 손명세, 신손문, 조시현 (2008). **신생아 출생정보 제공 전산체계 구축 연구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대구가톨릭대학교.
- 박종선 (2010). 범죄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고려한 효과적인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5권 3호.
- 박형민, 오성배, 임영희, 황석규, 손소연, 정석구, 김재구, 박세봄 (2012).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운영방안 연구(TR2012-19)**. 서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법률신문 (2010.4.15).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웹 사이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AcCs/ArticlePrint.aspx?serial=52052>에서  
 2014년 4월 30일 인출.
- 법무부 (2012).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 정례검토 이해관계자 보고서 종합**,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3).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14.7.15).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요청자료.
- 법무부 (2014.8.6.). (훈령 제875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39&strWrtNo=734&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2000&strOrgGbnCd=100000](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39&strWrtNo=734&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2000&strOrgGbnCd=100000)에서 2014년 8월 6일 인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8.1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웹사이트  
[http://www.cppb.go.kr/HP/TSPB13/tspb13\\_02/sub\\_02\\_03.jsp](http://www.cppb.go.kr/HP/TSPB13/tspb13_02/sub_02_03.jsp)에서 2014년 8월 14일 인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4.8.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웹사이트  
[http://www.cppb.go.kr/HP/TSPB/spb\\_50/spb\\_50202010.jsp](http://www.cppb.go.kr/HP/TSPB/spb_50/spb_50202010.jsp)에서 2014년 8월 6일 인출.
- 법무부 보도자료 (2013.6.18.).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 시행. 웹 사이트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2987&strAnsNo=A&strNbodCd=noti0005&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NbodCdGbn=](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2987&strAnsNo=A&strNbodCd=noti0005&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NbodCdGbn=)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법무연수원 (2013). **2013 범죄백서**. 경기: 법무연수원.
- 법제처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4&nwYn=&query=>에서

2014년 8월 18일 인출.

법제처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웹 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14년 7월 21일 인출.  
변미희, 정혜선 (2011). 저출산시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3호.

병무청 (2014.8.7.). 양심적 병역 거부자 비율, 병무청 요청자료.

보건복지부 (2011a).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1b).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2a).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2b).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2. 8. 9). ‘꿈, 행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아동총회 개최, 웹 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ls.jsp](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ls.jsp)에서 2014년 6월 1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3a). **2012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b).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c). **2013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d). **2013 입양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e).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3f). 넘쳐서 슬픈 베이비박스(2013.8.20일자 동아일보 기사관련 보도해명자료),

웹 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에서 2014년 10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4a). 201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웹 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에서 2014년 10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4b). **2014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4c).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4d). 보도참고자료: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3년 주기 평가결과),

웹 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에서 2014년 10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웹 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80101&page=1](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80101&page=1)에서 2014년 9월 2일 인출.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중장기아동정책과 국가행동계획**, 서울: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12.).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a). **2010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b). **2009 국민건강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1). **2010 국민건강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a). **2013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b).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09).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서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3). **2013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 서울: (재)한국보육진흥원.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2013).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 시설 평가지표, 웹 사이트  
[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po\\_item\\_cd=&po\\_no=2390](https://www.cswe.co.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2&bd_item=0&po_item_gb=data2&po_item_cd=&po_no=2390)에서 2014년 10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2012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0).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서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 **2013년 아동권리주간 기념포럼 자료집,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방안모색**. 서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비마이너 (2013.2.1.). ‘인권위, 장애학생 체벌한 특수학교에 엄중 주의 권고’, 웹 사이트

-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846>에서 2014년 8월 5일 인출.
- 서울시 인권교육센터. 웹 사이트 <http://www.st-rights.or.kr/>에서 2014년 6월 23일 인출.
- 서울신문 (2014.4.15.). ‘아동학대’ 뒷집 진 지자체... 관련 범죄 더 키운다 - 아동복지법상 심의위 설치해야 대부분 조례·심의위 구성 안 해... 지자체 “역할이 너무 포괄적”, 웹 사이트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5029008>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 서울신문 (2014.7.8.). [사설] 청소년 근로자, 최저임금 사각지대 방치 안 돼, 웹 사이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40708031013&keyword=부당고용을하는사업장에서> 2014년 11월 13일 인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방과후 학교 길라잡이.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石井小夜子 (2003). “付添人活動のあり方”, 新版 付添人活動のマニュアル. 日本辯護士連合会.
- 성범죄자 알림e (2014.8.6). 웹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에서 2014년 8월 6일 인출.
- 성재민 (2014).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2007, 2014년의 비교, 월간 노동리뷰 2014년 7월호.
-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 (2013). **2013 아동친화경영 국제콘퍼런스 자료집**.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
- 송기춘, 오동석, 허진민, 배병태, 김남수 (2012).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송태민 (2013a). 우리나라 보건복지 빅데이터 동향 및 활용 방안. **과학기술정책**. 제23권 3호. 서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송태민 (2013b).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살 검색 예측모형 개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2호.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시민정치포럼, 진보정의당 박원석의원,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2012). **아동노동에 눈감은 MB의 자원외교 -우즈벡 목화농장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간담회 자료집**. 서울: 시민정치포럼, 진보정의당 박원석의원,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 시사 인천 (2013.12.24.). ‘안녕들하십니까’와의 전쟁, 학교 밖 대자보까지 강제철거 -교육부, 대자보 확산 막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침 내려, 웹 사이트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6304>에서 2014년 6월 22일 인출.
- 시사인 (2013.4.5.). “엄마는?” 미혼모보다 외로운 미혼부, 웹 사이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04>에서 2014년 10월 21일 인출.

- 아시아경제 (2012.1.3.). 성북구, 제1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안부장관상 수상, 웹 사이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0310043741080>에서 2014년 6월 23일 인출.
- 아시아경제 (2014.5.1.). 성북구, 전국최초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웹 사이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0114264285305>에서 2014년 6월 27일 인출.
- 아시아경제 (2014.7.20.).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유해업소는 금지, 웹 사이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1814235931353>에서 2014년 11월 13일 인출.
- 아시아뉴스통신 (2014.7.14.). ‘호식이 두마리 치킨’ 안전매뉴얼 없는 ‘빨리빨리’ 오토바이 배달 결국…, 웹 사이트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684372&thread=09r03>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 안재진, 최운선, 김세원 (2013). **국내입양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중앙입양원.
- 양계민 (2012). **2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2013).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김승경 (2011).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 (2010).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09). **200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0a). **201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0b).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a).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c).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d).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a).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3b).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2013c).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웹 사이트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592](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592)에서 2014년 8월 20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b).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요약)**.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c). 201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웹 사이트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에서 2014년 5월 21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4d).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안내. 여성가족부 웹 사이트

[https://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5\\_02b.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1&viewfnc6=0](https://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5_02b.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1&viewfnc6=0)에서 2014년 5월 2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4.7.30.).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 집행유예 비율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2014. 3. 13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eNEWS 웹 사이트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에서 2014년 7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 웹 사이트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에서 2014년 6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2012년 청소년 희망센터 사업결과 보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신문 (2013.8.16.). ‘포괄적 차별금지법’, 9월 재입법 추진, 웹 사이트

<http://womennews.co.kr/news/59907>에서 2014년 5월 9일 인출.

여성신문 (2014.7.9.). 김희정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 적극 추진”, 여성신문, 웹 사이트 <http://www.womennews.co.kr/news/73541>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연합뉴스 (2011.4.22.). ‘집회자유, 학생인권조례 초안서 쟁점되나’, 웹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027068>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연합뉴스 (2013.9.10.). 청소년자살 10년간 57.2% ↑ … 증가율 OECD 2위, 웹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9/0200000000AKR20130909175800017.HTML?input=1179m>에서 2014년 10월 29일 인출.
- 연합뉴스 (2014.4.29.). “소득기준 아동 빈곤율, 실제 빈곤정도 반영 못해”, 웹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28/0200000000AKR20140428166300017.HTML?input=1179m>에서 2014년 6월 27일 인출.
- 연합뉴스 (2014.4.8).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중심학교 320개교로 확대, 웹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50493>에서 2014년 6월 28일 인출.
- 연합뉴스 (2014.4.9.). ‘지자체들, 아동학대 관련 조례에 무관심’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을 내린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한 곳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53892>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웹 사이트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5029008>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 연합뉴스 (2014.5.14.). 임금 체불에 폭력… 무법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웹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62615>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 오마이뉴스 (2014.3.5.). 청소년 절반 아리바이트 경험…‘부당대우’도 많아, 웹 사이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457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4576)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 오영근 (2008). “개정 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p. 22.
- 외교통상부보도자료 (2009.10.26.). “OECD,한국DAC가입결정환영” (파이낸셜뉴스 ‘09.10.26, 한국경제 ‘09.10.26, 중앙일보 ‘09.10.26언론보도내용종합), 웹 사이트 [www.agendaret.co.kr](http://www.agendaret.co.kr)에서 2014년 6월 18일 인출.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웹 사이트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우지연 (2011). 시도별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배치와 특수교육 예산 및 특수학급 설치율 조사. **재활복지**, 17(2).

원혜옥 (2007). “국선보조인제도의 개선방안: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월드비전, 한국NPO공동회의 (2012). **2011 한국 개발복지 NPO 총람**. 서울: 국 NPO공동회의.  
 위키백과. 웹 사이트

[http://ko.wikipedia.org/wiki/%EC%95%88%EB%85%95%EB%93%A4\\_%ED%95%98%EC%8B%AD%EB%8B%88%EA%B9%8C](http://ko.wikipedia.org/wiki/%EC%95%88%EB%85%95%EB%93%A4_%ED%95%98%EC%8B%AD%EB%8B%88%EA%B9%8C)에서 2014년 6월 22일 인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웹 사이트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에서 2014년 6월 19일 인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2010). **제 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유해숙, 이현숙 (2014). 드림스타트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 방안. **벤처창업연구**, 9(2).

윤덕경, 이미정, 장미혜, 주재선, 송호진, 김민정, 임연규 (201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7~2012)**, 연구보고 2013-37. 서울: 여성가족부.

윤철경, 김윤나 (2014).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규호 (2012). “소년형사범 처리의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12권 2호.

이동명, 박현정 (2011).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2집(201.5).

이봉철 (1992).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기획연구논문집** 2.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승현 (2008). “한국 개정소년법상 소년의 권리보장”, **소년보호연구** 제11호.

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2009). **청소년 인권과 참여**. 서울: 양서원.

이은주 (2014).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진상조사위원회 최종제도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토론회 토론문**.

이주연, 김미숙 (2013).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1: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건복지포럼**(2013.9).

이철수 (2013). **사회복지학사전**. 경기: 해민북스.



이투데이 (2013.5.1.). 청년유니온 ‘전국단위 노동조합’ 인정, 웹 사이트

<http://m.etoday.co.kr/view.php?idno=726187>에서 2014년 11월 4일 인출.

이혜영, 강대중, 하태욱 (2009). **대안학교 운영실태 분석 연구**(연구보고 2009-0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정 (2013). 초중등학생들의 학교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분석. **교육종합연구** 제11권 제4호.

이희경 (2012). 화학적 거세에 대한 쟁점과 논의, **보호관찰** 제12권 1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2013). 변화를 거부하는 학교, 내몰리는 학생들! 2013, 학생인권은 여전히 목마르다 -**전국 학생인권 생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日本東洋大學校 社會開發研究センター地域で暮らす子ともとその家族への人權侵害を方ぐための取り組み-國・自治体・市民社會による子ともの人權救済システムの研究 심포지움 자료집.  
日本東京: 東洋大學校.

일요신문 (2014.7.7.). ‘60만원에 아기 매매한 20대 아버지; 출생신고도 안 된 아기를 물건처럼...’, 웹 사이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4005](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4005)에서 2014년 7월 25일 인출.

임영식, 남기성, 조금주, 정경은, 김윤나 (2011). 2011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서울: 고용노동부.

임완섭, 노대명 (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연구보고서 2013-17).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정선 (2011). “아동 성폭력범죄자에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법정**(2011년 2호).

임희진, 김현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연구보고 12-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희진, 김현신, 강현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Ⅱ 조사데이터, 웹 사이트 <http://archive.nypi.re.kr/sub.asp?mcode=B050010&BID=B80>에서 2014년 9월 2일 인출.  
임희진, 김현철, 백혜정, 이계오 (2012).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子どもの権利条約NGOレポート連絡会議 (2011). ‘子どもの権利条約からみた日本の子ども’. 現代人文社.

子どもの権利条約総合研究所 (2011). ‘子どもの権利条約ガイドブック’. 日本評論社.

장화정 (2014). 특례법 및 개정아동복지법 시행을 앞둔 준비사항과 개선점. **정부의 아동학대예방**

- 대책 이대로 좋은가 -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제도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자료집.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 전라북도교육청. 웹 사이트 [www.jbe.go.kr/program/publicboard](http://www.jbe.go.kr/program/publicboard).에서 2014년 7월 30일 인출.
- 전병유 (2010). 네덜란드에서의 파트타임 근로의 현황과 정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0(12).
- 전북일보 (2014.9.22.). 군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웹 사이트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24853>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 전북중앙신문 (2014.4.15.). ‘도내 ‘아동위원’ 없어.... 아동학대 무방비 - 올해 1분기만 318건 신고 도내 시군 아동위원없어’ 웹 사이트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141>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 정병호 (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익중 (2011).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육·교육 보장의 전략. 고용·복지 연계형 사회정책 개혁전략**. 서울: 고용노동부.
- 정익중 (2014).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안과 그에 근거한 정부 종합대책 평가.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제도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자료집**.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 정익중, 김미숙, 이주연, 하태정 (2012).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규모 추계 (연구보고서 2012-39)**.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14.7.1.).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웹 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589>에서 2014년 7월 25일 인출.
- 조선닷컴 (2014.1.17.). 입법조사처 한국ODA규모 늘리고 무상원조 비율 확대 해야. 웹 사이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1388.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1388.html)에서 2014년 6월 18일 인출.
- 조인섭 (2013). “사법분야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 및 개선방안”, **2013년 아동권리주간 기념포럼-아동권리인식 증진을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모색(2013. 11. 20)**. 서울: 한국아동 권리모니터링센터.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통계자료 (2012). 2012년 가정위탁 현황.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웹사이트 <http://www.fostercare.or.kr/>에서 2014년 월 일 인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일보 (2013. 8. 22). ‘따로따로 사회공헌기준, ISO26000’, 웹 사이트 [artcl.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01764](http://artcl.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01764)에서 2014년 6월 27일 인출.
- 중앙일보 (2014. 4. 17.). 아이들 폭행·학대 당하는데... , 웹 사이트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469858&clck=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469858&clck=olink|article|default)에서 2014년 9월 23일 인출.
- 중앙일보 (2014. 7. 8.). 보호관찰관 1인당 124명 담당, 호주 7배 ... “밤 늦게 나가 놀지 말라” 5분 면담하고 끝, 웹 사이트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15189238](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15189238)에서 2014년 11월 13일 인출.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4).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웹 사이트 [https://www.icareinfo.info/NEW\\_USR\\_main.asp??=ABOUTUS02/MANAGEINFO/DOCUMENT/view&bbs\\_no=78&page=1&bbs\\_option\\_cd=MA05&search\\_option=&search\\_value=](https://www.icareinfo.info/NEW_USR_main.asp??=ABOUTUS02/MANAGEINFO/DOCUMENT/view&bbs_no=78&page=1&bbs_option_cd=MA05&search_option=&search_value=)에서 2014년 10월 18일 인출.
- 청소년참여포탈, 웹 사이트 with youth. <http://www.youth.go.kr/ywith/activity/commission/operation.do>에서 2014년 6월 3일 인출.
- 청소년참여포탈, 웹 사이트. <http://www.withyouth.go.kr/>에서 2014년 9월 20일 인출
- 청소년희망센터, 웹 사이트 [http://hope.kyci.or.kr/sub01\\_1.asp?menuCategory=1](http://hope.kyci.or.kr/sub01_1.asp?menuCategory=1)에서 2014년 7월 30일 인출.
- 최병각 (2007).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내 새소식 게시판, 웹 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0&strWrtNo=2716&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0&strWrtNo=2716&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301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에서 2014년 11월 13일 인출.

통계청 (2012.8.28.). 영아사망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에서  
2014년 8월 28일 인출.

통계청 (2013). **2013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J03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J03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4년 9월 2일 인출.

통계청 (2014.9.2). 2012 사회조사 보고서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19세 이상).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에서 2014년 9월 2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vw_cd=MT_ZTITLE&list_id=135_13501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에서 2014년 8월 29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KOSIS 웹 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OTITLE&list\\_id=MT\\_CTITLE\\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OTITLE&list_id=MT_CTITLE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에서 2014년 8월 27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생명표.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에서 2014년 8월 25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2008~2012). 영아사망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quick_02);에서  
2014년8월28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4년 10월 18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50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505)에서 2014년 10월 18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14년 11월 5일 인출.

통계청 (2013). **2013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통계청 (각년도). **사교육비 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2.5.2). 2012 청소년 통계, 웹 사이트

<http://kostat.go.kr/wntsearch/search.jsp>에서 2014년 7월 10일 인출.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통계**. 서울: 통계청, 여성가족부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7.10.). 2014 청소년 통계, 웹 사이트

<http://kostat.go.kr/wntsearch/search.jsp>에서 2014년 7월 10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서울: 통계청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웹 사이트

<http://kostat.go.kr>/<http://mogef.go.kr>에서 2014년 7월 10일 인출.

통계청e-나라지표. 청소년인구및구성비, 웹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7)에서 2014년 6월 27일 인출.

통일부 (2014.7.21).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통일부 정착지원과 요청자료.

하인호 (2012). **무권리 상태의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회관 130호 토론.

한겨레뉴스 (2013.12.2.). ‘아빠도 할머니도 양육포기... 홀로 우는 장애아기’, 웹 사이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696.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696.html)에서 2014년 8월 5일 인출.

한겨레뉴스 (2014.6.16.). EU, 기업 사회책임 이행공시 의무화했는데...대응책 없는 대기업...유럽 진출‘빨간불’, 웹 사이트 <http://www.hani.co.kr/arti/economy>에서 2014년 6월 19일 인출.

한겨레뉴스 (2014.6.26.). 지원법률제정으로 물고 트고 지원센터 닷 올려, 웹 사이트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44257.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44257.html)에서 2014년 6월 27일 인출.

한국경제 (2013.12.27.).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철거에 항의... 학교 측“교칙 위반”, 웹 사이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270092g>에서 2014년 6월 22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3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 음주, 흡연예방 중장기계획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4.8.20.).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웹 사이트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에서 2014년 8월 20일 인출.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아동의 놀 권리-옴부즈키즈 모니터링활동 결과보고서**. 서울: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2 ~ 2014). 대한민국 아동총회(제 1회 ~ 제 10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2014년 9월 27일 인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8.12.). 웹 사이트: [http://gangs.kigepe.or.kr/front/user/front\\_html\\_page/html\\_page.act?pageCode=P010211](http://gangs.kigepe.or.kr/front/user/front_html_page/html_page.act?pageCode=P010211)에서 2014년 8월 12일 인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8.7).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 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요청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3년 모바일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일보 (2014.2.27). 폭언·폭행해도 참기만…인권 없는 사회복지사, 웹 사이트 <http://m.hankooki.com/app/paper/pdfView.php?pdfKey=hk20140228A12&num=3>에서 2014년 7월 10일 인출.
- 한국일보 (2013.9.26). ‘이틀에 한명꼴 버려지는 아기…입양특례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웹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421717>에서 2014년 7월 28일 인출.
- 한국일보 (2014.1.24.). “교육법이 상위…체벌 받겠다는 각서 써라” 인권조례 무시 일쑤, 8면, 웹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60732>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 한국일보 (2014.4.10.).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공무원 1만6천명 증원 필요’, 웹 사이트 <http://biz.hankooki.com/lpage/economy/201404/d20140410102547135860.htm>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 한국일보 (2014.6.30.). 아동학대 신고 출동… 수퍼주인 “집 못 알려준다”, 웹 사이트 <http://www.hankookilbo.com/v/ee99b8b068bb487da1cb5f8e2bd2c755>에서 2014년 7월 25일 인출.

- 한국장학재단 (2014.7.29).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한국장학재단 요청자료.
- 한국장학재단 (2014.7.31). 웹 사이트 <http://www.kosaf.go.kr/>에서 2014년 7월 31일 인출.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화관광부 (2002).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 연구(2003-2007)**,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14).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수, 웹 사이트 [http://www.ncyok.or.kr/bbs/board.php?bo\\_table=03\\_1&sst=wr\\_subject&sod=asc](http://www.ncyok.or.kr/bbs/board.php?bo_table=03_1&sst=wr_subject&sod=asc)에서 2014년 9월 2일 인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실 청소년희망센터 (2014.8.21). 청소년희망센터 사업개요 및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요청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4). **지역사회 청소년정책모니터링 사업 현황 사업담당자 질의응답**.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동균 (2010). 주요국 파트타임 실태와 관련 보호법제의 개괄 및 시사점. **노동저널 : 새로운 지평을 여는**.
- 한동호, 김수암, 이규창, 이금순, 조정아 (2014). **2014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한라일보 (2014. 5. 7.). 사회 지도층까지... 장애인 성폭행 심각, 웹 사이트 <http://www.ihalla.com/read.php3?aid=1399388400462465044>에서 2014년 11월 3일 인출.
- 헤럴드 (2014.5.12.). 국민 90% 성폭행 범죄 형량 부적절, 헤럴드 웹 사이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512000188&md=20140515010439\\_BK](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512000188&md=20140515010439_BK)에서 2014년 8월 14일 인출.
- 헤럴드경제 (2014.5.13). 성북구, 지자체 최초 ‘아동영향평가’ 조례제정, 웹 사이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513000921&md=20140516005816\\_BK](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513000921&md=20140516005816_BK)에서 2014년 6월 23일 인출.
- 현주, 이해영, 한미영, 서덕희, 류덕엽 (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Wikipedia (2014.7.31.). 웹 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에서 2014년 07년 31일 인출.
- 형혁규, 김성봉 (20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 荒牧重人, 喜多明人, 半田勝久 (2012). **解説 子ども条例**. 三省堂.
- 荒牧重人, 喜多明人, 森田明美 (2013). **子どもの権利アジアと日本**. 三省堂.

- 황석연의 미래교육연구소, 웹 사이트 <http://blog.naver.com/skyn11?Redirect=Log&logNo=80155304867>에서 2014년 6월 28일 인출.
- 喜多明人, 森田明美, 広沢明, 荒牧重人 (2009). 『逐条解説 子どもの権利条約』. 日本評論社.
- Boesen, J. K., & Martin, T.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An inspirational guide for civil society*.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Bundeszentrale füenschenrechte.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210. Mü
- 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CRIN) (2014a). Access to justice for children: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from [https://www.crin.org/sites/default/files/republicofkorea\\_access\\_to\\_justice.pdf](https://www.crin.org/sites/default/files/republicofkorea_access_to_justice.pdf) 에서 2014년 6월 5일 인출.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2).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s Delivery: Factsheet. from [www.childwelfare.gov/pubs/impacts/step3.cfm](http://www.childwelfare.gov/pubs/impacts/step3.cfm)에서 2014년 7월 10일 인출.
-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2013). *State of Children's Rights in England: Review of Government action on 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children's rights in the UK*. London: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 Children's Rights in Wales (2014). from <http://www.childrensrightswales.org.uk/policy-law-reform.aspx>.
- DBpia (2014.7.1 ~ 2014.7.14.). 웹 사이트 <http://www.dbpia.co.kr/>에서 2014년 7월 14일 인출.
-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Ireland (2005).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 Ireland, from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IRL%2f2&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IRL%2f2&Lang=en)에서 2014년 8월 5일 인출.
- DfES (2003). *Every Child Matters*. London : The Stationary Office.
- DfES (2013). National Curriculum Review : New Programmes of Study and Attainment Targets from September 2014.
- DfES (2013). *Statutory Guidanc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Citizenship Programmes of Study for Key stages 3 and 4*. Department for Education.
- EBSCO HOST (2014.6.1 ~ 2014.7.8.). 웹 사이트 <http://www.ebscohost.com/>에서 2014년 7월 8일 인출.
- EU, FRA (2009).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2014). States with Full Abolition.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웹 사이트 <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frame.html>에서 2014년 10월 21일 인출.
-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웹 사이트 [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progress/prohib\\_states.html](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pages/progress/prohib_states.html)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 HM Government (2013). Draft Periodic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Kingdom.
- Human Early Learning Partnership (2012).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 Research Brief/, from [http://earlylearning.ubc.ca/media/documents/international\\_research\\_brief\\_14nov2012.pdf](http://earlylearning.ubc.ca/media/documents/international_research_brief_14nov2012.pdf).
-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JCHR) (2009).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ow legislation underpins implementation in England.
- KBS 뉴스 (2013.5.11.). ‘입양특례법이 입양 걸림돌?...논란’, 웹 사이트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57256&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입양특례법 베이비박스&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0&office\\_input=0&start=11&refresh\\_start=0](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57256&source=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입양특례법%20베이비박스&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er_article=&pd=0&ds=&de=&sim=0&docid=&mynews=0&office_input=0&start=11&refresh_start=0)에서 2014년 7월 28일 인출.
- KBS 뉴스 (2014.4.11.). ‘당정, 복지사각-아동학대 논의...“복지 전담 공무원 늘려”’, 웹 사이트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3771&ref=A](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43771&ref=A)에서 2014년 7월 27일 인출.
- KBS9시뉴스 (2012.7.10.). 웹 사이트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01133](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01133)에서 2014년 11월 13일 인출.
- Kilkelly, U., & O'Mahony, C. (2007). The proposed children's rights amendment: running to stand still? *Irish Journal of Family Law*.
- KISS (2014.7.1 ~ 2014.7.14.). 웹 사이트 <http://search.koreanstudies.net/>에서 2014 7월 14일 인출.
- Lundy, L., Kilkelly, U. & Byrne, B.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21(3).
- Lundy, L., Kilkelly, U., Byrne, B., & Kang, J. (2012).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a study of legal implementation in 12 countries*. UK unicef.

- MBCNEWS (2014.02.19). 美 한국인 입양아 양아버지 학대로 사망...NSA 한국책임자, 웹 사이트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19147\\_13490.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19147_13490.html)에서 2014년 11월 13일 인출.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Norway (2009a). Fou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 Norway, from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NOR%2f4&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C%2fNOR%2f4&Lang=en) 에서 2014년 10월 10일 인출.
- Norway (2009b). Fourth State Party report, CRC/C/NOR/4, 2009.
- OECD (2014.9.1.). Scoreboard on youth aged 15~24. OECD StatExtracts 웹사이트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TPTC\\_I#](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TPTC_I#)에서 2014년 9월 1일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from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dPoverty\\_Jan2014.pdf](http://www.oecd.org/els/soc/CO2_2_ChidPoverty_Jan2014.pdf)에서 2014년 10월 31일 인출.
- OECD. StatExtracts. Social Expenditure. from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14년 11월 5일 인출.
- OECD. Website [www.oecd.org/dac/stats/data.htm](http://www.oecd.org/dac/stats/data.htm).에서 2014년 6월 18일 인출.
- Sandbaek, M., & Einarsson, J. H. (2008). Children and young people report to the UN on their rights, annexe to Norway's fourth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orwegian Social Research NOVA report, 2b/2008.
- Save the Children UK (2011). Governance fit for children: To what extent have the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RC been realised in the UK.
- SkjØrten, K., & Barlinghaug, R. (2007). The involvement of children on decisions about shared res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 Stationery Office (2008). UK Children's Commissioners' Report to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Stationery Office (2011).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Wales) Measure 2011.
- Stationery Office (2012). Children's Right Scheme. Welsh Assembly Government p.9, from <http://wales.gov.uk/docs/phhs/publications/120418rightsofchildrenen.pdf>에서 2014년 8월 3일 인출.

- Theis, J. (2003). *Promoting rights-based approaches: Experience and ideas from Asia and the Pacific. A discussion paper*. Stockholm: Save the Children Sweden.
- Tobin, J. (2005). Increasingly seen and heard: the constitutional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South African Journal on Human Rights*.
- UN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2). General comment No. 2: The Role of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from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GC%2f2002%2f2&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RC%2fGC%2f2002%2f2&Lang=en)에서 2014년 8월 10일 인출.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 General Comment No. 5,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GC/2003/5. paragraph 41, from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3/455/14/PDF/G0345514.pdf?OpenElement>에서 2014년 9월 15일 인출.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0). Considerations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Japan, from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RC%2fC%2fJP%2fCO%2f3&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RC%2fC%2fJP%2fCO%2f3&Lang=en)에서 2014년 8월 10일 인출.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12). Report Card 10: Measuring child poverty, from [http://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rc10\\_eng.pdf](http://www.unicef-irc.org/publications/pdf/rc10_eng.pdf)에서 2014년 9월 5일 인출.
- UNICEF (2007). *Law reform and implementation of the CRC*.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역 (1991). 유엔아동권리협약 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 Universal Periodic Review Second Cycle - Republic of Korea. from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KRSession14.aspx>에서 2014년 6월 28일 인출.
- Vaghri, Z., Arkadas, A., Hertzman, C., Krappmann, L., Gertsch L., Cabral., M., Ulkuer, N., & Kikuchi-White, A (2010). Manual for early childhood rights indicators(Manual of the indicators of General Comment 7), from <http://resourcecentre.savethechildren.se/sites/default/files/documents/6717.pdf>에서 2014년 11월 2일 인출.

Welsh Assembly Government (2009). *Getting it right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elsh Assembly Government.

Yerkes, M. A. (2010). 유럽의 파트타임근로: 네덜란드와 영국 비교. 국제노동브리프.

YTN 뉴스 (2014.7.16.).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 과잉체벌 논란', 웹 사이트

[http://www.ytn.co.kr/\\_ln/0115\\_201407162331291677](http://www.ytn.co.kr/_ln/0115_201407162331291677)에서 2014년 8월 5일 인출.

---

# 부 록

1.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  
아동청소년의 주요 인권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 지표
2. 설문지



# 부 록

## 부록 1.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 아동청소년의 주요 인권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 지표

- 인권지표의 중요도와 국제비교 가능 정도에 대해 의 각각 평균치보다 높게 나온 지표항목만 제시함.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지표 중요도 (평균)	국제비교 가능여부 비율 평균 %(명)
전체 평균			4.11	44.3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인권일반 (제4조, 42조)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4.61	82%(23)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4.36	89%(25)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4.71	96%(27)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기관 인지도*	3.71	46%(13)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4.29	21%(6)
		인권교육 경험	4.57	57%(16)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차별 피해 경험*	4.18	50%(14)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	4.29	28%(8)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4.39	46%(13)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4.46	46%(13)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4.04	46%(13)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3.86	46%(1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4.00	57%(16)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4.25	42%(12)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5조)	결사·집회 경험률*	3.64	46%(13)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4.36	17%(5)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체벌 경험률*	4.57	78%(22)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4.5	50%(14)
		폭력피해 경험*	4.71	78%(2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4.54	57%(16)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지표 중요도 (평균)	국제비교 가능여부 비율 평균 %(명)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부모와의 대화시간	3.79	50%(14)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4.79	78%(22)
		중복학대 및 재학대 경험률	4.54	60%(17)
		방임유형 및 정도*	4.46	57%(16)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국내외 입양현황 및 추이, 입양기피이유	3.89	53%(15)
		요보호아동 현황	4.04	53%(15)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04	53%(15)
		가출청소년 수와 보호시설 수	4.39	64%(18)
		가출 경험 여부*, 가출 이유*	4.36	64%(18)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만족도*	3.93	50%(1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아동학대 신고건수	4.50	85%(24)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4.43	67%(19)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4.36	57%(16)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18	17%(5)
		보호·양육시설 예산	4.29	64%(18)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장애(제23조)	장애아동·청소년 사망률(유기율 포함)	4.25	50%(14)
		장애아동·청소년 사고율	4.14	32%(9)
		통합교육비율	4.29	53%(15)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수	4.25	64%(18)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취업을 추이	4.46	53%(15)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0세의 기대여명	3.82	67%(19)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4.32	89%(25)
		사고 사망률	4.46	71%(20)
		범죄 피해건수	4.14	67%(19)
	보건서비스 (제24조)	보건교사 배치 현황	3.82	50%(14)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및 대처방안	4.14	50%(14)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4.50	46%(13)
		흡연율	4.11	75%(21)
		음주율	4.04	75%(21)
		기타 약물 사용률	3.82	64%(18)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4.00	50%(1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운동 실천율*	4.04	50%(14)
		식사 결식률*, 결식이유*	4.14	53%(15)
		시간*, 수면부족여부*, 수면부족 이유*	4.46	75%(21)
		비만율	4.29	75%(21)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 생각 이유*	4.79	78%(22)
		우울증 지수*	4.54	64%(18)
		스트레스 인지율*	4.54	57%(16)
		행복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4.57	67%(19)
		자아존중감*	4.54	50%(14)



대분류	중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지표 중요도 (평균)	국제비교 가능여부 비율 평균 %(명)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4.71	92%(26)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4.61	89%(25)
		취약계층아동현황 및 지원수준	4.57	60%(17)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4.46	32%(9)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학생 취학률	3.79	85%(24)
		학생 진학률	3.79	82%(2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4.50	89%(25)
		교원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4.32	85%(24)
		학업중단율	4.61	82%(23)
		학업포기 생각여부*, 이유*	4.18	25%(7)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3.79	46%(13)
		동아리활동 참가율*	4.21	28%(8)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4.54	75%(21)
		하루평균학습시간*	4.46	78%(22)
특별 보호 조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4.39	32%(9)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4.36	35%(1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4.43	32%(9)
	소년사범아동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4.18	46%(13)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4.18	57%(16)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3.89	39%(1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4.14	53%(15)
	경제적 착취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4.43	78%(2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4.50	75%(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4.14	53%(15)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4.61	39%(1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4.18	10%(3)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4.25	21%(6)
	성적 착취	성폭력 피해아동 인구 비율	4.61	71%(20)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4.57	64%(18)
		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4.36	64%(18)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3.93	46%(13)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	4.25	28%(8)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4.14	21%(6)

## 부록 2. 설문지

## 1) 초등학생용 설문지

ID	과제	교급	-	학교	-	학급	-	설문지연번



승인(협의)번호  
제 40201 호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김희진 연구위원	(02)2188-8832/8830
수행기관	(주)입소스코리아	담당자	신성혜 차장	(02)6464-5135

※ 지금부터 설문지를 받은 학생이 각 내용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del>②</del>	③	④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문 1.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인가요?

-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문 2.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예 → 「문 2-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3순위	<input type="text"/>
-----	----------------------	-----	----------------------	-----	----------------------

-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3. 학교에 가기 전 아침밥을 먹나요?

- ①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 「문 3-1」로 가세요  
 ②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 하는 편이다 → 「문 4」로 가세요  
 ④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문 3-1. 아침밥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⑥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⑦ 다이어트를 위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4.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문 6.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문 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공부하는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1	2	3	4
2)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문제	1	2	3	4
3) 친구와의 관계	1	2	3	4
4) 경제적인 어려움	1	2	3	4
5) 외모·신체조건	1	2	3	4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1	2	3	4

문 8.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없다
- ② 아버지
- ③ 어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담임선생님
- ⑥ 학교 상담선생님
- ⑦ 친구
-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1	2	3	4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1	2	3	4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1	2	3	4
4) 다른 사람처럼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문 10.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 10-1」로 가세요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 「문 11」로 가세요  
 ④ 매우 행복하다

문 10-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⑤ 외도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⑦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1.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하나요?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① 1 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② 1 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문 12.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문 12-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13」으로 가세요

문 12-1.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피로함을 당해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 13.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1	2	3	4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1	2	3	4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1	2	3	4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1	2	3	4

문 14.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인권전반에 대한 교육으로써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문 15」로 가세요

문 14-1. (문 14의 '① 1회' 부터 '⑤ 5회 이상' 에 응답한 경우만)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
-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문 14-2. (문 14의 '① 1회' 부터 '⑤ 5회 이상' 에 응답한 경우만)**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④ 도움이 된다

**문 15.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1	2	3	4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4) 부모님은 학원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문 16.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5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5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1	2	3	4	5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1	2	3	4	5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1	2	3	4	5

**문 17.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가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

-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문 17-1」로 가세요**
-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문 18」로 가세요**



**문 17-1.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다툼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8.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 깠보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1	2	3	4	5
	2) 깠보거나 욕하는 말	1	2	3	4	5
학교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1	2	3	4	5
	4) 깠보거나 욕하는 말	1	2	3	4	5

**문 19.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1	2	3	4	5
2) 맞아 본 경험	1	2	3	4	5
3) 따돌림을 당함	1	2	3	4	5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1	2	3	4	5
5) 협박을 당함	1	2	3	4	5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1	2	3	4	5
7) 강제적인 심부름	1	2	3	4	5

문 20.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페이스북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깔보거나 욕하는 말을 들음	1	2	3	4	5
2) 협박을 당함	1	2	3	4	5
3) 성희롱(농담)을 당함	1	2	3	4	5
4)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널리 알려짐	1	2	3	4	5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1	2	3	4	5

문 21. 다음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시설공간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 시설을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 라고도 합니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 공공도서관	1	2	3	4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1	2	3	4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1	2	3	4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	1	2	3	4

문 21-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이용해본 아동·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문 22.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 ① 1 시간 미만
- ② 1 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문 23. **최근 1년 동안** 어린이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나요?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 24.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문 25.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린이단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 편이다	도와주는 편이다	잘 도와준다
1) 가정	1	2	3	4
2) 학교	1	2	3	4

문 26.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급의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1	2	3	4
2) 학교는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한다	1	2	3	4
3)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1	2	3	4
4)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급 규칙을 알려주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1	2	3	4

문 27.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나요?

- ① 운영되고 있다 → **「문 27-1」로 가세요**
- ② 운영되지 않는다 → **「문 28」로 가세요**

문 27-1. **(학급회의가 운영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28. 우리 사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어린이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29.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 ②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 ⑤ 어린이를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 ⑥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문 30.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나라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합니다.

내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1	2	3
2) 학생인권조례	1	2	3
3) 국가인권위원회	1	2	3

문 31. 다음은 어린이에게 인권 관련한 정보를 알리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아니다	그렇다
1)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을 쉽게 풀이한 어린이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1	2
2)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1	2
3) 내가 학대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1	2



문 32.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1	2	3	4
2) 어린이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1	2	3	4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	2	3	4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1	2	3	4

문 33.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경험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문 34.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2) 공부를 못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8) 얼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문 35.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2) <u>가정에서</u>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1	2	3	4
3) <u>학교에서</u>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1	2	3	4
4) <u>사회에서</u>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1	2	3	4

문 36.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문 36-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37」로 가세요

문 36-1.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⑥ 선생님

② 친구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③ 선배

⑧ 경찰

④ 부모님(보호자)


⑨ 인터넷

⑤ 형제·자매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3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1	2	3	4

문 38.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1	2	3	4
2) 학교	1	2	3	4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1	2	3	4
4) 우리나라 전체	1	2	3	4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	1	2	3	4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외)할아버지      ⑤ 새아버지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② (외)할머니      ⑥ 새어머니      ⑩ 없음  
③ 아버지      ⑦ 형제 또는 자매  
④ 어머니      ⑧ 친척

배경문항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예 :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0	1	2	3	4	5	6	7	8
2. 어머니	0	1	2	3	4	5	6	7	8

배경문항 3.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0	1	2
2. 어머니	0	1	2

배경문항 4. 학생의 학업 성적(2014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2	3	4	5

배경문항 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 중·고등학생용 설문지

ID	과제	교급	-	학교	-	학급	-	설문지연번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김희진 연구위원	(02)2188-8832/8830
수행기관	(주)입소스코리아	담당자	신성혜 차장	(02)6464-5135

※ 지금부터 설문지를 받은 학생이 각 내용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성별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del>②</del>	③	④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을 모두 표시하여 응답합니다.

문 1.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문 2.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 「문 2-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3순위	<input type="text"/>
-----	----------------------	-----	----------------------	-----	----------------------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3.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 「문 3-1」로 가세요  
 ②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 하는 편이다      → 「문 4」로 가세요  
 ④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문 3-1.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⑥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⑦ 다이어트를 위해서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4.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문 6.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문 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1	2	3	4
2) 가정 불화	1	2	3	4
3) 또래와의 관계	1	2	3	4
4) 경제적인 어려움	1	2	3	4
5) 외모·신체조건	1	2	3	4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1	2	3	4

문 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문 9」로 가세요
- ② 가끔 생각한다 ➡ 「문 8-1」로 가세요
- ③ 자주 생각한다

**문 8-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성적
- ② 가족 간의 갈등
-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 ④ 경제적인 어려움
-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없다
- ② 아버지
- ③ 어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담임선생님
- ⑥ 학교 상담선생님
- ⑦ 친구
-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1	2	3	4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1	2	3	4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1	2	3	4
4)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문 1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 11-1」로 가세요**
-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행복한 편이다        ➔ **「문 12」로 가세요**
- ④ 매우 행복하다



문 1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업 부담 때문에
-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 ⑦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2.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① 1 시간 미만
- ② 1 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⑦ 6시간 이상

문 13.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3-1」로 가세요**
- ② 없다 → **「문 14」로 가세요**

문 13-1.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괴롭힘을 당해서
-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4.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1	2	3	4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1	2	3	4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1	2	3	4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1	2	3	4

문 15.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인권전반에 대한 교육으로써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문 16' 으로 가세요

문 15-1. (위 문항 15번의 '① 1회' 부터 '⑤ 5회 이상' 에 응답한 경우만)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
-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5-2. (위 문항 15번의 '① 1회' 부터 '⑤ 5회 이상' 에 응답한 경우만)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16.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1	2	3	4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1	2	3	4

문 17.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5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5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1	2	3	4	5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1	2	3	4	5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1	2	3	4	5

문 18.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가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

-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문 18-1」로 가세요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문 19」로 가세요

문 18-1.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업 부담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8-2.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문 19」로 가세요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 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8-3. (가출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우만 응답하세요)**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 19.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1	2	3	4	5
	2) 모욕적인 말(욕설)	1	2	3	4	5
학교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1	2	3	4	5
	4) 모욕적인 말(욕설)	1	2	3	4	5

**문 20.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1	2	3	4	5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1	2	3	4	5
3) 따돌림을 당함	1	2	3	4	5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1	2	3	4	5
5) 협박을 당함	1	2	3	4	5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1	2	3	4	5
7) 강제적인 심부름	1	2	3	4	5

문 21.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1	2	3	4	5
2) 협박을 당함	1	2	3	4	5
3) 성희롱(놀림)을 당함	1	2	3	4	5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1	2	3	4	5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1	2	3	4	5

문 22.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 라고도 합니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 공공도서관	1	2	3	4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1	2	3	4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1	2	3	4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	1	2	3	4

문 22-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문 23.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1 시간 미만
- ② 1 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문 24.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 25.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 26.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1	2	3	4
2) 학교	1	2	3	4

문 27.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문 28.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1	2	3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2	3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1	2	3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1	2	3

문 29.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30.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① 운영되고 있다 → 「문 30-1」로 가세요  
 ② 운영되지 않는다 → 「문 31」로 가세요

**문 30-1. (학급회의가 운영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 31.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1	2	3	4
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1	2	3	4
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1	2	3	4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1	2	3	4
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1	2	3	4

**문 32.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 ① 예 → 「문 32-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33」으로 가세요

**문 32-1. (위 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한 학생만 답하세요)**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 33.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 참여기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문 34.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1	2	3	4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1	2	3	4

문 34-1. (위 문항에서 3번과 4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세요)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 ② 경고 및 훈계
-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문 35.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36.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37.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 ②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문 38.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1	2	3	4
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1	2	3	4
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1	2	3	4

문 39.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

내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1	2	3
2) 학생인권조례	1	2	3
3) 국가인권위원회	1	2	3

문 40.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아니다	그렇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1	2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1	2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1	2

문 41.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1	2	3	4
2) 학교	1	2	3	4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1	2	3	4
4) 우리나라 전체	1	2	3	4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1	2	3	4

## 문 42.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1	2	3	4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1	2	3	4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2	3	4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1	2	3	4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1	2	3	4

## 문 43. 다음은 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1	2	3	4	5

문 44. 다음은 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당한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8) 얼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1	2	3	4	5

문 45.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5-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46」으로 가세요

**문 45-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3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1	2	3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2	3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1	2	3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1	2	3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1	2	3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1	2	3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1	2	3
9)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간 당 4,860원, 2014년 기준 시간 당 5,21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1	2	3



문 46.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적인 놀림이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6-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47」로 가세요


문 46-1.(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⑥ 선생님  
② 친구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③ 선배      ⑧ 경찰  
④ 부모님(보호자)      ⑨ 인터넷  
⑤ 형제·자매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47.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1	2	3	4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 ① (외)할아버지      ⑤ 새아버지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② (외)할머니      ⑥ 새어머니      ⑩ 없음  
③ 아버지      ⑦ 형제 또는 자매  
④ 어머니      ⑧ 친척

배경문항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예 :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0	1	2	3	4	5	6	7	8
2. 어머니	0	1	2	3	4	5	6	7	8

배경문항 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0	1	2
2. 어머니	0	1	2

배경문항 4. 학생의 학업 성적(2014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2	3	4	5

배경문항 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1	2	3	4	5	6	7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duce relevant data for preparing the next periodic rep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in Korea. By conducting repeated cross sectional survey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based on child and youth right indicators, this study builds up time-series data, and publishes every year as National Statistics No. 40201.

The child and youth right indicators of this study were originated from the 2013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II, which developed the indicators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the periodic reports submitted to the UN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ere revised to respond the current issues of child and youth rights. This study utilizes 148 indicators in six categories: Overall Human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12); Civil Rights and Freedom (29);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22);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33);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20); and Special Protection Measures (32).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10,484 children and youths from the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the 3rd grade in high school. To have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this study analyzes and uses administrative statistics from government agencies and relevant statistics from different fields to complement the result of the survey.

This study consists of four reports: (1) a main report, (2) data analysis report, (3) a statistics, and (4) a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main report,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V, ha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indicator system. The data analysis report analyzes the structural relations of the related variables o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tatistics, the 2014 Statistics of the Survey o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contains the statistic tables to be registe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for the users of national statistics. Finally, the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s to examine the ext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y duty-bearers including governments, and further contribute to preparing the next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that should be submitted to the UN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17.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in each of the six catego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selected twenty(20) priority areas for policy improvement for child and youth rights, and presented detailed action plans.

Key words: child's rights, youth's rights, human right indicators, status of human right, repeated cross sectional survey.

##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 · 황여정 · 이수정 · 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 · 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 · 박선영 · 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정주 · 김정숙
- 14-R05 아동 · 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 · 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 · 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 · 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 · 이창훈 · 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 · 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 · 조혜영 · 이태주 · 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 · 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 · 김희진 · 이민희 · 김윤나
- 14-R14-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 · 이호균 · 서여정 · 김광혁 · 김형욱 · 윤상석 · 박병식 · 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 · 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 · 분석 / 김지경 · 하현주 · 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 · 임영식 · 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신현옥 · 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 · 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 · 맹영임 · 문호영
- 14-R18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황진구 · 모상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허효주 · 문은옥 · 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 · 허효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해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해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해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 14-R49 2014년 도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5. 08. 31 제 301-2012-019호

**인쇄처** 동진문화사 전화 02)2269-4783 대표 이병무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23-6 94330

979-11-5654-022-9(세트)

